

남북대화 제21호

(1979. 6 ~ 1979. 8)

남북공동성명발표 7주년 학술세미나 논문집

< 목 차 >

1. 「1·19제의」와 남북대화의 좌표(김학준) 3
2. 주변정세의 변화와 남북대화의 새 국면(안병준) 17
3. 공산주의자와의 협상과 남북대화(한배호) 34
4. 남북대화와 한반도의 평화통일(박봉식) 47

1. 「1·19제의」와 남북대화의 좌표

1

민족의 통일을 향한 역사적 이정표인 1972년 7월 4일의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그날부터 일곱 해가 지났다. 자주와 평화 및 민족단결의 3대 원칙아래 민족의 통일을 추구하기로 남북한이 민족사 앞에 엄숙히 서약한 그날로부터 벌써 「강산이 한번쯤은 바뀔」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대처로 특징 지어온 남북관계에는 본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바뀔」이 없어 왔다. 물론 그사이 여러 차례의 남북대화 와 접촉은 있었다. 남북적십자회담이 본회담과 실무회담을 합쳐서 쓴 두 차례 열렸으며, 남북조절위원회가 본회의와 부위원장회의를 합쳐 열세 차례 열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 많았던 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관계는 약간의 개선도 보지 못하고 말았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나마 실낱 같이 유지돼 오던 남북한의 접촉은 1977년 12월 9일의 제25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마지막으로 끊어져 버렸다. 1978년 3월 20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되어 있었던 제26차 실무회의에 불참함으로써 북한은 남북대화의 마지막 창구를 닫아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구상이 1979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제시되었다. 연두기자회견에서 당사자간의 무조건 대화재개를 제의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룩하자고 했던 것이다.

북한은 이 제의를 거부할 수 없었다.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국내외적인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환경속에서 『무조건 대화를 재개하자』는 파격적인 제의를 북한은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2월 17일 판문점에서 남북접촉이 이뤄졌다. 그것은 실로 1년 2개월만에 다시 이어진 남북접촉이었다. 물론 그것은 변칙적인 것이었다. 남쪽에서는 7·4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의 서울측 대표들이 참가했음에 반해 북쪽에서는 이른바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조선)의 대표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의 대표들이 다시 한자리에 만났다는 것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우리 속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가 비록 변칙적인 것이거나 남북대화를 계속하려고 했던 의도는 거기에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몇 차례의 남북대화를 통해 드러난 북한측의 입장 가운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것은 북한측이 7·4공동성명을 사실상 부인하려는 점이였다. 북한측은 7·4공동성명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 7·4공동성명 그 자체를 「죽은 문서」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이 그 준수와 실천을 민족사앞에 엄숙히 서약한 민족통일의 청사진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족통일의 그날까

지 결코 폐기될 수 없는 것이며, 더 더구나 북한의 일방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폐기될 수 없는 합의문서인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에서 다음의 몇 가지 물음에 대해 해답을 찾으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첫째, 남북공동성명의 참 뜻은 무엇인가?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남북공동성명은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죽은 문서」인가?

둘째, 남북대화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자 제의된 박대통령의 「무조건 남북대화」안은 어떤 뜻을 갖는 것인가? 그것은 남북공동성명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셋째, 남북대화의 좌표는 무엇인가? 1980년대에 있어서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며 또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

서론에서 제기한 여러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남북공동성명 그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다시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북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직접적 협상에 의해 민족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노력은 이미 1948년에 시도된 바 있다. 김구와 김규식의 제의에 따른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 협의회」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 남북회담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북)과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지 못한 세력(남)간의 회담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¹⁾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이에 따른 남북한간의 증대된 상호불신감은 남북한의 직접적인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

한국전쟁의 가장 심각한 후유증의 하나는 남북한간의 상호 불신감과 상호적대감을 증대화시킴으로써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가 남북한의 직접적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상황과 짝지어진 것이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냉전체제였다. 미·소의 양극적 냉전체제 또는 미·중공의 군사적 대결체제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던 남북한은 미·소관계의 변화와 미·중공관계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적 대화와 협상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로써 남북한관계는 군사적 대결관계로 동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관계가 대화관계로 바뀔 것이라는 예고가 1970년 8월 15일 박대통령의 광복절 경

1) 물론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 회담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 남북협상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Chong-sik Lee, "Negotiations among Private Groups,"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XIII, No.4(December, 1970), pp. 379~392.

축사에서 나타났다.

박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남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북한에게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²⁾

박대통령의 이 제의는 이듬해 8월 12일 『1천만 남북이산가족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의 소식을 알려주며 재회를 앞선하는 「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대한적십자사의 제의로 연결되었다.³⁾ 북한적십자사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1971년 9월 20일 마침내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의 형태로 남북대화가 열렸던 것이다.

남북대화가 성립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미·중공간의 긴장완화였다. 당시 20여 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두 나라는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닉슨」(Richard M. Nixon)미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미·중공의 접근, 즉 미·중공 대결구조의 와해는 미·중공 대결구조의 부산물의 하나인 남북한 대결구조의 외피를 벗겨 버렸고 나아가 남북대화의 성립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1972년 2월 미·중공의 상해공동성명은 남북한 모두에게 남북간의 직접적 협상이 피할 수 없는 길임을 말해 주었다.⁴⁾ 그 역사적 문서는 「한국문제의 한국화」에 대한 미·중공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한국문제의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남북한의 적응을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2년 5월 남북간의 고위 비밀정치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열렸다. 이 회담에서 남북한은 뒷날 남북공동성명의 형태로 발표될 합의사항의 골격에 대해 이미 양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남북한 상호간의 중상과 비방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⁵⁾

결론컨대 7·4남북공동성명은 국제환경의 변화를 맞아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남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특히 1948년 남북정권의 수립이후 남북한의 집권자에 의해 최초로 합의된 문서라는 점에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공동성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북한이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내용을 다시 음미하기로 한다.

2) 국토통일원(편), 『평화통일의 의지: 통일정책과 관련된 연설문을 중심으로(1970년 8월~1975년)』(서울: 국토통일원, 1975), p.10

3) Ibid. p.135

4) Hak-Joon Kim, The Unification Policy of South and North Korea, 1948-1976: A Comparative Stud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7) pp. 246~247.

5) 「평양회의 쌍방발언 비교」(1972년 5월 2일~5월 5일), 공판인쇄물 및 「서울회담 쌍방발언 비교」(1972년 5월 29일~6월 1일), 공판인쇄물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곱 개 항목에 대해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첫째, 통일의 원칙에 대한 합의이다.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자주적 원칙,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평화의 원칙 그리고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⁶⁾ 이 3대 원칙은 민족의 통일을 달성하는 기본원칙으로서 더 할 나위 없이 완벽한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긴장의 완화와 신뢰의 회복에 관한 합의이다.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무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합의가 바로 그것이다.

셋째, 남북교류에 관한 합의이다. 쌍방은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넷째,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한 합의이다. 쌍방은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다섯째, 상설 직통전화의 개설에 관한 합의이다. 쌍방은 돌발적인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간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 전화를 놓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섯째,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합의이다. 쌍방은 위에 열거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간의 제반문제를 개선·해결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일곱째,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의 약속이다.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 것이다.

위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듯, 이 성명은 남북한간의 제반문제를 개선해결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거의 모두 담고 있다.

남북한이 진정으로 이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따르고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민족의 통일은 쉽게 이뤄질 것임에 틀림없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남북의 5천만 민족이 모두 이를 열렬히 지지했던 것은 그 까닭이다.

6) 이 3대 원칙의 의의에 대한 해석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구범모, “남북공동성명의 의의” 남북조절위원회(편), 『남북공동성명발표 5주년 학술세미나 주제논문 및 토의록』(서울: 남북조절위원회, 1977), pp.20~24

확실히 남북공동성명의 출현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최소한 1년 6개월 동안 남북한간의 무장충돌의 건수는 크게 줄었으며,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립이 퇴조의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전쟁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었다.

남북한간의 상호비방도 크게 줄었다. 남북한의 정치지도자와 정치체제에 관한 상호비방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간의 상호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공동성명의 출현은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자극하고 국민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사실 남북한의 분단이 20여년을 경과하면서 남북한간에는 일종의 「분리적 민족주의」(separate nationalism)가 싹트고 있었다. 통일에 대한 전망이 어둡게 느껴지면서 분단의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고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남북공동성명은 새로운 이정표로 등장한 것이었다. 남북한의 노력에 따라서 민족의 통일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불러일으켜 주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큰 뜻을 지니는 남북공동성명이 UN에 의해서도 그 권위가 사실상 인정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예컨대 제28차 UN총회는 1973년 11월 28일 동서 양진영에 의해 채택된 「합의성명」(consensus statement)에서 「통일 3대 원칙을 규정한 7·4남북공동성명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고 남북한이 이 공동성명의 바탕 위에서 대화를 계속하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게 될 것을 희망했던 것이다.⁷⁾ 한국문제에 관해 친서울과 친평양의 대립되는 두 개의 결의안이 동시에 채택된 1975년의 제30차 UN총회에서도 남북공동성명은 각각의 결의안의 전제로 확인되고 있었다. 친서울 결의안은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 대한 만족을 상기하면서…」라는 서두로 시작되었고, 친평양 결의안은 「1972년 7월 4일의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라는 전제를 붙였던 것이다.⁸⁾ 이러한 사례들은 남북공동성명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남북한간의 합의문서일 뿐만 아니라 UN에 의해 그 권위가 인정된 UN의 합의문서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⁹⁾

3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그것이 남북한의 협상에 따른 합의문서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남북공동성명의 전문에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별로 길지 않은 이 성명에는 「쌍방」이란 단어가 아홉 차례나 나오고 있으며 「합의하였다」 또는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라는 단어가 일곱 차례나 나오고 있다. 그것은 확실히 「쌍방」이 「합의」한 공동의 문서인 것이다.

7) The Korea Times, November 30, 1973.

8) 외무부 외교연구원(편),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토의록』(서울: 외무부 외교연구원, 1975) pp.953~955

9) 양호민, “남북한관계에서의 남북공동성명의 위치,” 남북조절위원회(편), 『남북공동성명발표 6주년 학술「세미나」주제논문 및 토의록』(서울: 남북조절위원회 1978), p. 18

물론,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한 「쌍방」의 인사가 과연 그 성명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¹⁰⁾ 왜냐하면 남북공동성명은 한국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한의 집권노동당 조합지도부장 김영주가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상부」는 대통령임이 대한민국의 헌법구조로 보아 명백하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의한 선언을 포함한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의 「상부」는 김일성임이 북한의 권력구조로 보아 명백하며, 김일성은 북한의 「국가주석」으로서 북한 헌법 제49조에 의해 선언을 포함한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의 조약체결권자들이 자신들의 하급기관에게 각각 그 권한을 위임하여 서명케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¹¹⁾

그렇다고 해서 남북공동성명을 조약으로 볼 수는 없다.¹²⁾ 그것이 남북 당사자간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확실하나,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창정하려는 의사(Animus Contrahendi)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약으로 보기는 무리스러울 것이다. 남북공동성명은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조약이나 또는 행정협정의 법적 성격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공동성명은, 「윌슨」(G.G. Wilson)의 정의에 비취 볼 때, 하나의 선언인 것이다. 즉 「윌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원칙의 선포를 선언이라고 불렀는데,¹³⁾ 남북공동성명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록 당사자 사이의 법적 의무를 창설하지는 못하나 도의적·정치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겠다. 이 점에서 남북공동성명은 1941년의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처칠」(Winston Churchill)공동선언과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및 1954년의 「워싱턴」선언과 같이, 정치적·도의적 원칙의 선언이라고 할 것이다.¹⁴⁾ 적어도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남북공동성명에 의거하여 마련된 2개의 합의서, 즉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양자 역시 남북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조약으로 보고 있다.¹⁵⁾ 『남북직통전화 가설 합의서』의 법적 지위를 구명한 김명기 교수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동 합의서는 (i) 당사자의 공동선언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합의서」라는 형식으로 체결되었으며, (ii) 그 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 또는 보충」, 「유효기간」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iii) 동 공동성명의 구체화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법적 구속을 받으려는 당사자의 의사(Animus Contrahendi)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iv) 그리고 합의서상의 서명권자의 표시가 당사자의 기관, 즉 「중앙정보부부장 이후락」 「조직지도부장 김영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조약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부처간협정」(Inter-departmental

10) Young Whan Kihl, "Korean Response to Major Power Rapprochement," in Young C. Kim Ced), Major Powers and Korea (Silver Springs Ind: Research Institute on Korean affairs, 1973), p. 153

11) 김명기, 『남북공동성명과 국제법』(서울: 법문사, 1975), P.21

12) 이하의 논리에 대해서는 Ibid, pp.15~16을 참조하라.

13) Ibid, p.13의 각주 37번

14) Ibid, p.16

15) Ibid, pp.16~20

Agreement)의 한 예로서 이른바 「간이조약」에 속한다.¹⁶⁾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는 남북공동성명과 그리고 남북공동성명에 바탕을 둔 2개의 합의서를 모두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남북한이 모두 준수해야 할 공동의 문서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공동성명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합의를 가질 수도 있다. 즉, 한반도의 2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개재되는 것이다. 특히 남북조절위원회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실제로 구성되고 기능하는 경우, 남북한관계는 사실상 평화공존의 초기 단계에 들어서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가 통일과 평화공존의 양면성을 갖는 「야누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과 평화공존을 상호 배타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사고의 단순화일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과 혁명의 방법에 의한 통일이 아닌 -그것은 남북공동성명에 어긋나는 것이다.- 평화통일은 잠정적인 평화공존의 단계를 밟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평화공존의 시기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해석은 우리의 해석과 거리가 있다. 우선 북한은 그것이 남북한의 합의의 소산이 아니라 김일성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굴복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김일성의 기치아래 남북한의 「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쟁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점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북한의 당 기관지 「근로자」에 게재된 한 논설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공동성명을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조국통일 방침의 빛나는 승리」라고 선언한 이 논설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 민족적 대단결, 평화통일의 기치 밑에 남북조선 전체인민들이 힘을 합쳐 싸워 나간다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역사적 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¹⁷⁾

그 뿐 아니다.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1차 회담(1972년 10월 12일)도 열리기 이전인 1972년 9월 27일 김일성은 일본 「매일신문」과의 회견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압력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여론에 못이겨」 적십자회담과는 별도로 남북 고위비밀회담을 하자고 했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고 말한 것이다.¹⁸⁾ 북한은 여전히 남북공동성명을 김일성 통일노선의 일방적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대남정치정세의 새로운 무기로 사용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공동성명이 결국, 남북한의 평화공존의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자 북한은 남북공동성명을 경시하거나 그 틀을 벗어나려는 자세를 보여 주기 시작했다. 특히 남북공동성명에 바탕을 둔 남북조절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게 되는 경우, 남북한관계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상 평화공존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중지시키거나 마비시키려는 경향을 나타

16) Ibid, p.17

17) 『근로자』, 1972년 7호, p.2 양호민, “남북한관계에서의 남북공동성명의 위치” p.18에서 재인용

18) Ibid, p.19에서 재인용

내기 시작했다. 예컨대 1973년 4월 16일 시아누크(Norodom Sihanouk)환영대회장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만일 현재의 남북대화가 잘 진척되지 않는다면 북과 남의 당국자들 사이에서만 시야 비야하는 것보다 남북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재 남북조절위원회의 사업에 남북의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을 참가시켜 그 폭을 넓히든지 또는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은 남북조절위원회 사업대로 진행하고 남북의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자는 것을 주장한다.»¹⁹⁾

이 인용에서 보여지듯, 김일성은 이때 이미 남북조절위원회와는 별개의 정당·사회전체 연석 회의를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속셈은 1973년 6월 23일 「체코슬로바키아」공산당 서기장 「후사크」(Gustav Husak)환영대회장에서의 그의 연설에도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그는 「남북대화는 잘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통일의 앞길에 큰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고 전제하고, 「남북대화가 남북 당국자들 사이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 민족적 범위에서 벌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사회단체들이 참가하는 대민족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²⁰⁾

그러면 북한은 왜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조절위원회가 평화공존의 논리로 연결되는 것을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1·19제의」 이후 북한이 남북공동성명을 부분적으로 부인하고 남북조절위원회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다루 보고자 한다.

공식적으로 또는 명분론적으로 북한은 평화공존의 논리는 「2개의 조선」론이며 그것은 「조국의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반대의 실질적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평화공존론 또는 남북한관계의 평화공존관계로의 발전은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노선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남북대화를 깨뜨리기는 어려웠다. 「대화를 통한 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해 준 것이 김대중 사건이었다. 북한은 이 사건을 구실삼아 1973년 8월 28일 이른바 「김영주 성명」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남북대화를 단절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는 대화의 상대를 미국으로 설정한 미·북한 평화협정의 체결안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4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19) 대한적십자사(편), 『이산가족백서』 (서울: 대한적십자사, 1976), p.355

20) Ibid, p. 356

대화를 통한 전쟁재발 방지에의 노력과 통일에의 접근 노력은 인내심 속에서 계속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1·19제의」가 나왔다고 할 것이다.

우선 「1·19제의」의 내용을 보기로 하자. 박대통령은 「국토의 재통합과 민족의 재결합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민족적 소명」이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어떠한 시기나, 어떠한 장소에서나, 또는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한 당국이 서로 만나서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의 동족상잔을 막고 5천만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제반문제, 다시 말해서 그 동안 남북한이 제시해 온 모든 분야의 문제들을 직접 논의하기 위해서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²¹⁾

이 제의에서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가 전쟁재발의 방지에 대한 재확인이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의 뿌리의 하나이다. 민족통일이 아무리 절실한 민족의 지상과제라고 해도 동족의 유혈을 강요하는 전쟁만은 피해야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평범해 보이면서도 한반도의 군사상황을 고려할 때 대단히 중요한 명제라고 하겠다. 오늘날 남북한관계는 이른바 「리차드슨」의 상호적대감의 증가과정(The Richardson Process of mutually Increasing Hostility)²²⁾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있다.

즉, 북한이 군비를 강화하고 동원체제를 갖추면 갇출수록 한국도 이에 대응해서 군비와 동원체제를 상대적으로 강화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호간의 자극이 상승되어 궁극적으로는 폭력에 의한 충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재발의 방지를 위한 남북한의 공동노력은 긴요한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둘째, 평화통일에의 강조이다. 분단국의 평화적 통일이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달성, 즉 분단된 쌍방사이에 어느 일방이 폭력이나 무력에 의해 흡수·병합하려는 방식이 철저히 배제되고 쌍방사이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단문제를 해소하고 통일을 이룩함을 말하는 것이다.²³⁾

이 원칙이 남북한 쌍방에 의해 수락되고 준수될 때, 소극적으로는 첫 번째 목적인 전쟁재발의 방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통일에의 굳건한 바탕이 형성되는 것이다.

세째, 남북한 5천만 민족의 공영이 다짐되고 있다. 우리가 분단되어 있으면 있는 만큼 민족의 발전과 번영은 저해되고 있는 셈이다. 민족과 국가로서 각각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적대함으로써 값비싼 개별적인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 민족의 비운인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이른바 「민족건설」과 「국가건설」을 완성함으로써, 5천만 민족이 하나의 통일된 정치단위로 생기찬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자는 것은 아마도 1980년대 한국민족주의 최대의 과제일 것이다.

21) 국토통일원(편), 『남북관계자료』(서울: 국토통일원, 1979) pp.2~3

22) L.F. Richardson, Arms and Insecurity(Chicago Quardramgle Books, 1960)

23) 구범모, “남북공동성명의 의의”, p.34

이러한 세 가지 뜻의 구현을 위해 남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재론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1·19제의」는 이러한 요구의 충족을 위해 무조건적인 협상을 촉구했던 것이다.

북한은 마침내 「1·19제의」에 반응을 보여 왔다. 1979년 1월 23일 발표된 이른바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성명이 그것이다. 여기서 북한은 ① 7·4남북공동성명의 재확인 ② 쌍방간의 모든 비방과 중상의 중지 ③ 상대방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군사행동의 중지 ④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각계각층의 애국적 인사와 해외동포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전민족대회의 개최 ⑤ 전민족대회의 개최에 앞선 각 정당·사회단체 실무자들의 예비회담 개최 등을 제의한 것이다.²⁴⁾

우리는 이같은 형식과 내용의 평양측 반응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첫째, 평양측은 책임있는 당국자가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서 회답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대표권도 없고 실권조차 모호한 「조건」의 성명이란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평양측의 그 반응은 공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평양측은 이 단체가 노동당을 비롯한 북한의 정당·사회단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당의 우위를 표방하고 있는 공산국가들에 있어서도 대외적 대표권을 행사할 때는 그 주체가 당이 아니라 정부인 것이다. 평양측은 이 같은 국내외의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1월 25일 밤에는 부주석 박성철로 하여금 담화를 발표하게 하고 「조건」의 제의가 실현될 것을 바란다는 태도를 보였다.²⁵⁾ 그러나 그것은 그들 내부에서의 의사교환일 뿐 우리측 당국에 대한 직접적인 통고가 아닌 만큼 공식적인 회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1·19제의」에서는 남북당국간의 대화를 전제조건 없이 열자고 했는데 평양측은 이른바 「전민족대회」를 소집하기 위한 정당·사회단체 실무대표의 예비회담을 6월 초순에 열자고 시한을 붙여 제의했다. 즉 그들은 남북당국간의 대화를 사실상 부정했으며 동시에 대화의 재개에 조건을 붙였던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 대변인은 1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대화는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이루어질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한국의 「1·19제의」에 대해 책임있는 북한 당국의 회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²⁶⁾

북한의 회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1973년 「대민족회의」를 방패삼아 남북조절위원회를 깨뜨리려고 하였듯, 이번에는 「전민족대회」를 내걸어 남북조절위원회를 깨뜨리려고 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완전히 북한은 「1·19제의」를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남북대화를 이용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없애고 더 나아가 남북

24) 국토통일원, 『남북관계자료』, pp.13~16

25) Ibid, pp. 27~29

26) Ibid, pp. 35~36

공동성명을 변질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은 북한측이 「조전」의 성명을 통해서 7·4남북공동성명을 재확인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위한 남북공동성명 각 조항의 총체적인 이행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서울측은 1월 31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의 성명을 통해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평양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바 있는 서울~평양사이의 직통전화를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²⁷⁾

남북이 민족과 역사앞에 엄숙히 선언한 남북공동성명의 준수와 이행이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결정적인 첫 걸음임은 남북대화의 향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외의 모든 인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확실히 남북공동성명이야말로 5천만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자주적 및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구체적 설계와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모두 서로간의 대화를 향한 일체의 구상과 제의의 바탕을 그 역사적 문서에 두어야 함은 바로 그 까닭이다.

사리가 이러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북한은 남북공동성명의 바탕 위에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재개하자는 서울측의 1월 31일자 제의를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러한 합리적인 길을 택하지 않았다. 북한은 남북공동성명의 핵심적인 부분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태에서의 대남제의를 거듭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재개에 중대한 장애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남북공동성명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문서에는 일언반구의 표시도 없는 이른바 「민족통일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주장한 2월 5일자 「조전」의 성명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의 이 성명은 남북조절위원회가 「그 존속의 의의를 상실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그것이 또한 「극히 제한된 기구」라고 주장한 것이다.²⁸⁾

남북공동성명을 한번만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그들의 주장이 남북공동성명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이미 소개했듯이 공동성명은 제6항에서 남북 쌍방이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간의 제반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이 6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1972년 11월 4일 남북쌍방이 합의·서명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대단히 폭넓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①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 ② 남북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 문제 ③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문제 ④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문제 등을 「협의·해결하며 그 실행을 보장」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27) Ibid, pp. 83~84

28) Ibid, pp. 122~123

이처럼 남북간에 합의된 폭넓은 대화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를 부인하고 나서는 것은 북한이 남북조절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는 남북공동성명을 준수·이행할 뜻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북한이 남북대화를 하루빨리 재개시켜 민족의 숙원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간의 입장과 주장이 상치되는 상황속에서 1979년 2월 17일 판문점에서 남북한의 변칙대좌가 이루어졌다. 서울측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위원들이 참가했음에 반해, 평양측에서는 「조전」의 대표들이 나온 것이다.

역사적인 이 모임에서 서울측은 평양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 ①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1979년 4월 3일 평양에서 개최 할 것.
- ② 남북 쌍방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1972년 2월 20일 오전 9시를 기해 남북조절위원회의 남북직통전화를 개통시킬 것.
- ③ 남북조절위원회 재개에 관한 협의를 위해 남북조절위원회 관계자의 접촉을 1979년 3월 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가질 것.²⁹⁾

평양측은 이 제의를 거부했다. 평양측은 「남북조절위원회가 평양에는 없다」고 공언하면서,³⁰⁾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를 거부한 것이다. 평양측이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남북공동성명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양국간 또는 양 당사자간의 조약과 선언은 그 전체로서 포괄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어느 한 조항은 인정하고 다른 조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일방적이며 자의적인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조약이나 선언의 어느 한 부분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자 할 때는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인 것이다. 우리가 평양측이 남북조절위원회를 부인하겠다는 것은 남북공동성명 전체를 부인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려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서 북한의 남북대화에 임하는 자세와 저의에 대해 새삼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에의 이정표로 북한이 함께 서명한 남북공동성명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그들이 굳이 부인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모든 문제를 무조건 협의하자는데 이를 외면하고 엉뚱한 대화통로의 신설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측은 확실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첫째, 남북접촉을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촉진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남북간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

29) Ibid, pp. 122~123

30) Ibid, p. 188

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 잡은 것 같은 이른바 「가짜 환경」을 국제적으로 부각시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접촉을 미국과의 직접 협상의 길을 트고 일본의 남북 등거리외교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남북접촉이 선행되지 않고는 도저히 미국과의 대화가 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북한은 그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판문점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양측은 「워싱턴」을 바라보면서 판문점에 나올 뿐이다. 『「런던」과 「파리」는 상해와 「봄베이」를 돌아서』라는 「레닌」(Vladimir I. Lenin)의 전략을 오늘날에 그대로 모사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의 실질적인 진전은 막으면서 알맹이 없는 접촉만 계속함으로써 남북한관계와 북한의 본질에 어두운 미국내의 유화주의자들에게 「워싱턴」과 평양의 대화를 옹호하고 나서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째, 남북접촉 그리고 나아가 남북대화의 연장 위에서 「워싱턴」과 평양의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모른다. 북한 경제가 과도한 군사비의 부담과 기술의 낙후 및 자본부족, 그리고 상환불능한 대외부채의 누적 등 침체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서방의 경제전문가들이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 사실 북한이 1978년부터 7개년 계획안을 밀어나가고 있는 것은 그 침체의 늪으로부터 헤어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북한이 자본과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조심스럽게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째, 남북간의 변칙대화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내부 교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측이 「책임있는 당국간의 회담」을 기피하고 조건을 앞세우거나 「정당·사회단체간의 접촉」이나 「전민족대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속셈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 자신의 힘의 강화와 한국의 안보체제약화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남조선의 공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을 변칙적 남북대화를 통해 서서히 조성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저의에 대해 황성모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왜 아직까지도 북한은 대화를 거부해야만 하는가... 북로당이 아직도 대남혁명노선을 근본정책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지마는, 더 근본적으로는 북한 사회자체가 민족적 일체감을 발생케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사회주의건설」만 하더라도, 남조선해방을 위한 「기지」라는 의미부여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해방(통일)될 「그 순간」까지는 북한 주민들의 남한 주민들에 대한 감정은 대 적국 감정과 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집단」과 「타 집단」의 구별이 당교양 사업에서 조직적으로 촉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은 민족의 정권을 만들어 낸다기 보다는 당을 위한 정권을 만들어 낸 것이다. 정당이 「특수의지」만을 대표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 상황이 지양되지 않고서는 접근은 보장될 수 없다.』³¹⁾

31) 황성모, “남북대화의 민족적 기여” 남북조절위원회(편), 『남북공동성명발표 6주년 학술「세미나」 제논문 및 토의록』(서울 : 남북조절위원회, 1978), p.40

바로 이 점이 남북접근을 막고 있는 것이다.

7월 1일자 한·미공동성명은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으로서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당국 회의」 안을 한·미 두 나라가 공동제의한다고 밝혔다.

이것을 다음의 몇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① 「1·19제의」의 연장선상에서 일단 풀이될 수 있다. 「1·19제의」는 남북한의 당국회담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1·19제의」를 풀이하면서 정부는 그것이 남북조절위원회에 의한 남북대화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채널」에 의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남북대화가 열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책임있는 당국간에 이뤄질 수 있다면 정부는 굳이 남북조절위원회라는 단일창구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② 「3당국회의」에서 미국이 취할 역할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역할은 남북대화를 성립시키는 중계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역할은 남북대화의 협조자의 역할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의 노력에 의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다행한 일이다.
- ③ 「3당국회의」의 전망은 속단을 불허한다. 비관론을 전개하는 것도 외교적으로 현명한 일이 못된다.
- ④ 한반도 현상조절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대한 한국정부의 능동적인 적응이란 측면도 있다.

5

현 시점에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 교착상태가 이대로 지속될 수는 없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한 걸음이라도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남북대화는 신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어렵지 않다.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에 규정된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요청에 응하면 된다. 만일 현행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에 불만이 있다면, 남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 기구를 확대·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제외하고 있는 정당·사회단체의 남북대화 참여안도 이 남북조절위원회의 확대·개편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남북공동성명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본문서로서 남북은 그 어느 쪽도 이 기본문서의 바깥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이 기본문서의 기초 위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주변정세의 변화와 남북대화의 새 국면

안병준(연세대 교수)

1. 서론

1970년대에 와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해 왔다.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주변정세는 남북한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된다. 본문에서는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남북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동북아세아에 있어서 역학관계는 미·소대립이 조성한 양극체제에서 미·일·중·소간의 사강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사강은 상호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며 그 중 어느 일강도 기타강을 패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균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미·소대립 대신에 중·소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사강균형을 더욱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세변화를 따라서 사강은 각자 한반도에 존재하는 「한 민족중의 두 국가」란 현상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안보적인 측면을 떠나서 경제적인 면에서 동북아의 강대국들은 점차 상호의존하며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개되는 변화로 인하여 사강은 한반도, 대만 및 일본 북해도 근방의 사개도서를 제외한 기타 모든 현안문제,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유산은 모두 타결된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문제의 한국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것이 남북대화의 신국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주변정세는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결국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한 남북한당국간의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끔 전개되고 있다고 하겠다. 사강중 한반도에 관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이것은 미국이 군대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강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심판자(referee) 또는 균형자(balancer)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 역할을 계속 이행한다면 북한당국은 결국 한국당국과 협상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다룰 몇 가지 주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주변에는 일종의 사강균형이 형성되고 있으나 중·소분쟁은 4강관계를 유동적으로 만들며 변경지(periphery)에서 대리전 또는 갈등관계를 조장하고 있다.

둘째, 미·중공수교, 일·중공평화조약의 성립으로 인하여 4강은 상호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 결과 이들은 한반도에 대하여도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세째, 1973년의 석유파동 이후 국제경제관계가 더욱 상호의존(interdependent)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도 최근에 중공이 친서방 개방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일본을 중심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증대되고 있다.

네째, 이상과 같은 정세는 한반도문제가 4강간의 간접적인 관계를 탈피하여 독자적으로 해결되게끔 전개되고 있다. 즉 「한반도문제의 한국화」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처럼 주변정세는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대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가 중요시 되면 될수록 대화의 전망은 밝아진다. 여기서 지적해 둘 점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동북아에서 4강간의 균형에 대하여 하나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경제적으로 북한을 능가하고 있으며 4강관계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로지 북한만이 아직도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변정세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북한정권도 개인승배와 혁명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정통화의 길을 찾을 때 현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당연시할 수는 없다. 이상에서 제시한 동향도 어떤 가정적인 조건하에서만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중·소 분쟁이 계속되며 화해가 가능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것일 것, 중공이 계속해서 개방외교를 추구할 것, 미·일·중공 협력관계가 현 상태로 진행될 것, 일본 및 기타 변경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 한반도 및 대만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 일본 및 대만에 대한 안보공약을 준수할 것 등이다.

만약 이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면 4강균형과 한반도의 안정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예컨대 중·소 관계가 다시 동맹관계로 회복된다든지 혹은 극심한 적대관계로 전환되면 한반도에서 긴장은 악화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유의할 점은 1950년의 한국전은 미·소간의 대리전과 같은 성격을 가졌는데 1979년의 「베트남」 사태는 중·소간의 대리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의 가능성은 중공에서 정치변화가 생겨서 현재 진행중인 미·중 및 일·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동북아의 국제관계는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공산국 상호간의 갈등과 각 국내에서 일어나는 정치변화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위에서 제시한 주변정세의 동향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남북대화는 북한지도자들의 인식 여하에 따라 재개될 것이다. 즉 주변정세와 미국의 대한정책, 그리고 한국내의 정치상황을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남북대화의 장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주변정세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및 정치적 안정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문제가 한국화하면 할수록 한국은 북한과의 정통성 투쟁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2. 중·소분쟁과 4강균형

한반도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분쟁의 격화와 이 분쟁의 결과 공산국은 양분되었고 미국이 중·소양국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탄생한 4강균형이라 하겠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중·소관계는 점차 악화되었다. 미국은 이 분쟁을 이용하여 「데탕트」 체제를 구축하였고 또 월남전도 종결시켰다. 미·소간의 냉전이 서서히 완화되자 동북아에는 새로운 형태의 냉전이 구냉전을 대치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중·소분쟁이다. 이것이 동남아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 대리전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4강균형은 미·중 및 미·소관계가 개선되자 이룩된 것이나 근래에 와서 미·중 수교와 일·중평화조약이 체결된 후 더욱 공식화되고 있다. 월남전이 종결된 뒤 미국이 점차로 중공의 변경지에서 군대를 철수하자 소련은 미국이 남긴 세력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이 지역 침투를 강화하였다. 이 결과 중소분쟁은 변경국을 둘러싸고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4강은 세력균형정책을 상호간에 적용하여 어느 일각에 의한 패권행사를 방지하려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4강간에는 하나의 균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³²⁾

그러나 이 균형은 그 구조에 있어서 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 내부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그 이유는 4강 각자의 국력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질체제간에 이룩되고 있는 균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세기 구라파의 5강 균형에서 볼 수 있는 문화의 동질성이나 집단적인 협약은 현재 동북아의 4강간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도리어 각자가 다소 상이한 목적과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 생기는 삭제 및 균형에 의하여 4강관계는 특징 지워지고 있다. 4강 상호간에 전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균형의 안정을 찾을 수 있지만 중·소분쟁은 이 균형을 동적으로 변경시키고 있다. 최근 중공과 소련은 양국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국가수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제한된 화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4강균형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대만 및 일본북방도서는 현상유지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에게 맡겨질 것이다.

한국의 주변정세에서 파생하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동북아에서 국제질서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해 왔는가를 잠깐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동북아에서 나타났던 국제관계를 거시적으로 관찰할 때 다음과 같이 4분할 수 있다.

첫째, 고대중국의 주 시대부터 1840년대까지 「아시아」 대륙에는 중화질서가 지배했었다. 중국은 천하의 중심인 중주국으로서 행세했고 그 변경에 있는 조선과 안남(현 「베트남」) 등은 중국왕을 천자로 모시고 조공을 바치며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중국의 천자는 변경국의 왕에게 책봉을 내리고 불평등관계를 합리화하며 중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이제이」란 세력균형 전략을 적용했었다. 한편 변경국들은 비록 종속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중국세력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민족주의 노선을 모색했던 것이다.

둘째, 1840년대에서 1945년까지 서양에서 먼저 근대화한 영·불 세력이 동북아로 진출하여 중화질서에 도전한 결과 제국주의전쟁이 이 지역에까지 파급되었다. 이때 「아시아」에서 먼저 근대

32) Doak Barnett,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pp.288-305 참조

화한 일본도 제국의 꿈을 갖고 중국대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핵심세력으로 행세하였고 양국간의 균형에 의하여 동북아의 질서가 결정되었다. 이 균형이 파괴되었을 때 측면세력이었던 영·로 및 미국이 개입하였다. 중국과 일본에 도전하는 신흥제국들과의 갈등에서 변경국은 희생을 감수했던 것이다. 일본제국은 조선과 만주로 그 세력을 확장하자 중국과 충돌하여 1894년에 청·일전이 일어났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청의 세력을 격퇴하고 대만과 평호도를 식민화했었다. 또 1905년에 일본은 노국과도 충돌하여 승리를 거두고 만주와 조선에서 노국세력을 내쫓았다. 미국은 이 노·일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한편 중국에 대하여 영·불·독 등 서양세력과 일본이 다투어 자국의 이익을 확장하는 데 안간힘을 다했다. 이때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문호개방정책」을 천명하고 중국 영토의 보전을 보장하려 노력했으니 열강간의 투쟁에서 하나의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했고 그 변경의 국가들은 열강의 식민지로 변하고 말았다. 1883~85년의 청·불전에서 승리한 불국은 인도지나에 있었던 「베트남」·「라오스」 및 「캄보디아」를 식민화했다. 한편 일본은 1905년에 조선을 보호령으로 만들고 1910년에 식민지로 합병했다. 1931년에 일본은 만주국이란 위성국을 창설했으며 1937년에는 중국본토를 침공했고 그 뒤 「베트남」도 점령했으니 동북아의 패권국으로 등장했다. 사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이란 명분하에 중국을 그 통치하에 얻으려고 기도했는데 미국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과 싸웠던 것이다.

세째, 제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이전까지 동북아에는 미·소간에 양극화된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1949년에 탄생한 중공정권은 그후 4개월도 안되었을 때 「스탈린」을 설득하여 중·소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으니 이 조약은 일본과 그 동맹국(미국)을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은 중·소양국을 더욱 일원적인 공산권으로 인식케 만들었고 그 결과 미·소간의 냉전을 더욱 조장하였다. 1952년에 미국은 중·소동맹조약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우방국으로 등장한 일본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중국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하여 미국은 1954년에 한국 및 대만과 방위조약을 체결했고 동남아 제국과도 SEATO를 결성했던 것이다. 1954년에 조인된 「제네바」협정에 의하여 「베트남」은 17도선에서 양단되자 월남에는 공산 「게릴라」전이 파생했다. 미국은 이 「게릴라」활동 배후에는 중·소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프랑스」대신에 직접 군대를 투입했던 것이다. 한편 1960년대에 와서 중·소양국은 「스탈린」사후 시작했던 이념분쟁을 점차 국가이익의 충돌로 전환했고 심지어 국경에서 무력충돌까지 가졌다.

네째, 미국은 이처럼 악화되었던 중·소관계를 이용하여 양국과 각기 협상함으로써 「데탕트」체제가 이루어지고 1970년에 와서 동북아에는 4강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특히 월남전이후 미국의 「데탕트」정책, 중공내의 정치변화 및 중·소분쟁의 심화로 인하여 동북아에서 4강간의 역학관계는 재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가. 중소분쟁과 4강관계

중·소관계가 동맹으로부터 적대로 전환된 현상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소양국과 관계를 개선

할 기회를 마련케 했다. 미국이 이와 같이 세력균형정책을 채택케 한 데는 월남전에서 얻은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물론 「닉슨—키신저」 외교가 공산세력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함으로써 냉전을 종식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키신저」 외교가 주효하는 데는 중·소분쟁이 크게 기여했다. 이 분쟁때문에 중공과 소련은 각기 미국의 외교주도에 긍정적으로 응했던 것이다. 따라서 미·중 및 미·소관계가 대립에서 협상으로 전환되자 일·중관계도 정상화되어 4강은 쌍무관계를 재구성했고 이 결과 새로운 4강관계가 서서히 등장하였다.

4강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있어서 전초적 역할을 한 것이 1972년에 체결된 미·중공간의 「상해공동성명」이다. 이 성명에서 양국은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반패권주의」의 원칙에 동의했고 국교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중공은 소련에 의한 중공지배를 삭제하는데 이용했던 것이다. 중공은 이 새로운 대미관계로 말미암아 중공의 동남부 국경으로부터 군대를 중·소국경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닉슨·닥트린」을 표명하고 동남아로부터 군대를 철수하자 중공 지도자들은 미국을 소련의 침략에 대하여 억지력(deterrent)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닉슨」 행정부가 미·소·중·일 및 서구 등 5강간에 새로운 세력균형을 모색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공도 소련에 의한 「패권주의」 또는 중공봉쇄노력을 삭제하기 위하여 미국과 제휴하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소련이 이른바 「아시아 집단안보」를 내세워 반중공전선을 구축하려 할 때 중공은 「앞문으로 이리 (미국)를 쫓는 동안 뒷문으로 호랑이(소련)를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반소통일전선을 추구했다. 이 때문에 중공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강력한 해공군을 유지하며 특히 일본과 기타 태평양지역에서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것을 원했다. 이처럼 중공은 소련과의 분쟁을 하나의 Zero sum game으로 보고 세계각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 9월에 일본과 중공이 국교를 맺은 것은 4강체제를 더욱 보강했다. 미국이 극비밀리에 중공과 접촉했을 때 우방국인 일본과도 협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충격을 받은 일본정부는 중공정부와 협상하여 미국보다 앞질러 수교를 완성했던 것이다. 이때 진중수상은 주은래 수상과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일본과 중공은 어느 쪽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동시에 이 성명은 중공이 대만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을 일본은 존중하며, 양국간의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방식」에 의한 일·중수교는 일본이 중공과 외교관계를 개설하고 대만과 단교한 뒤에도 후자와는 경제 및 문화관계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전중·주성명은 미·일안보조약이나 중·소동맹조약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중관계가 정상화된 이상 양국에 관한 한 이 두 조약의 효력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동북아의 4강균형은 서서히 그 윤곽을 나타냈다. 미국과 중공은 아직 정식국교를 완성하지 않았지만 1973년부터 양국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각각 설립하고 사실상의 대사관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일본은 1955년에 소련과 이미 외교관계를 부활한 바 있다. 다만 북방도서 문제로 인하여 일·소평화조약이 지연되어 왔을 뿐이다. 세계제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4강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상호간의 국가관계의 정상화를 실질적으로(defacto)완성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패권주의」란 표현을 통하여 미·일·중은 세력균형정책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4강중 어느 일강에 의한 기타강의 지배를 반대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련의 팽창주의를 막는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소분쟁은 4강균형을 가능케한 요인이 되었지만 4강체제가 시작된 뒤에도 이 분쟁은 그것을 양분화시킬 소지

를 내포하고 있었다.

나. 미·일·중공 삼각관계의 등장

중공이 반소 친서방 개방외교를 추구한 결과 동북아에서는 미·일·중 3각관계가 대두되었다. 이것은 1978년에 체결된 일·중공 평화조약 및 미·중공수교이후 3국이 더욱 밀착한 데서 생긴 것이다. 3국은 또다시 「반패권주의」에 동의했고 동시에 모든 쌍무적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니 이 점에서 3국관계는 하나의 「안보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소련이 이 관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4강체제의 양분화를 의미한다.

미·일·중 3각은 중공내에서 모택동이 죽고 화국붕 및 등소평 체제가 등장하여 안으로는 「4개근대화」와 밖으로는 친서방 개방외교를 추구함에 따라 급히 결속된 것이다. 1973~76년에 있어서 중공에는 이른바 「비림비공」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 동안 「4인방」과 주은래 및 등소평간에 권력투쟁이 계속되었다. 이 동안 중공은 대 미·일관계에 대하여 다소 냉각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 한뒤 미국이 급속히 후퇴했을 때 중공은 미국세력의 약화를 두려워했다. 이에 중공은 스스로 일본 및 ASEAN제국과 제휴하면서 소련세력의 확대를 삭제하려 노력했던 것이다. 결국 중공은 소련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인 억지세력으로서의 미국과도 국교를 원했다.

1974년부터 일본과 중공도 평화조약을 위한 협상을 개설했다가 이것이 1975년 9월에 결렬되었으나 1978년에 재개되어 동년 8월에 협상을 성공시켰다.

중공은 1974년부터 「일본군국주의」라는 비난을 중단하고 미·일안보조약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양국의 국내정치 사정으로 인하여 결단적인 외교정책을 집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중공이 내세운 「반패권」조향을 일본이 거부했기 때문에 평화조약 체결이 지연되었다. 일본은 중·소간에 가능한 한 「등거리외교」를 취하려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1977년 3월, 문제의 4개도서를 포함시켜 200 「마일」의 어로수역을 선포했고 상기 도서문제에 대한 협상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1978년 초에 소련은 일본 북해도 근처에서 대규모의 해군 기동연습까지 자행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본의 여론, 특히 재계의 반응은 일본군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북전수상은 중공이 만약 「반패권」조향이 어느 일정한 제3국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제3국」조향을 받아들인다면 일본이 중공측의 요구를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중공은 이를 수락하여 드디어 일·중평화우호조약은 8월에 조인되었고 그 문서는 10월에 북전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경에서 교환되었다.

이 조약은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반패권」조향 뿐 아니라 양국은 이 조약에서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제 및 문화적인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 것을 합의했다. 이로서 동북아의 두 핵심세력은 19세기말 이후 다시 「아시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미·중수교를 저해해 온 것은 대만문제였다.³³⁾ 이 문제의 타결에 있어서 소련세력의 확대는 미·중양국으로 하여금 전략적인 의견일치를 조장시켜 결국 대만문제를 현상유지의 상태로 방치하는

데 동의하게 만들었다. 원래 중공은 1973년 주은래가 대만문제에 관하여 제시한 3개조항을 미국이 수락할 것을 요구해 왔다. 즉, 미국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할 것, 1954년에 체결한 방위조약을 폐기할 것,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할 것이 그것이다. 만약 미국이 이것을 수락한다면 중공은 미국과 「일본방식」에 의하여 수교할 것을 누차 천명했다. 미국은 이 3개조항 가운데 방위조약을 폐기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다. 왜냐하면 한 나라와 국민에게 표시한 공약을 내던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마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만인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공에게 요구하기를 중공이 대만문제를 점진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면 미국은 중공측이 내세운 3개조항을 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공은 대만문제를 국내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소련의 위협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중공은 대만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누차 미국에게 전했다. 미국은 이것을 이해하고 드디어 1978년 12월에 중공과 수교를 1979년 1월 1일을 기하여 시작할 것을 선언했다. 동년 3월 1일에 미국과 중공은 대사를 교환했고 4월 30일까지 대만에 잔재하는 약 700여명의 군사고문단을 모두 철수했다. 방위조약은 규정에 따라 1980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이 계속하며 그 후에 가서 폐기된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의 안보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대만에게 방어적 무기를 판매하며 경제 및 문화관계는 지속하기로 계속했다. 「카터」 행정부가 미·중수교를 성취하는데 직접 참가하지 못한 미국의회는 「대만의 안보를 보장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중공 수교 공동성명도 반패권주의를 선언했다. 중공은 특히 소련이 「베트남」과 결탁하여 동남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비난했다. 중공은 미국을 「북극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인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도 동북아에서 소련세력이 확대되어 세력균형을 파괴하려 할 때 그것을 삭제하는데 있어서 중공을 전략적인 동반자로 보며 이 점에 대하여는 일본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미·일·중 삼각은 미·중수교로서 완성되었는데 이로서 소련이 4강균형을 교란시키는 것을 삭제하는데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일·중평화조약과 미·중수교는 중·소동맹조약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중·소동맹의 적국으로 규정되었던 일본 및 미국과 중공은 평화 및 수교조약을 각각 체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공은 1979년 4월 상기 30년 중·소동맹조약을 1980년 4월에 폐기할 것을 소련에 통고했다. 이처럼 4강은 어느 일정국을 상대로 한 군사동맹보다도 쌍무적인 정치 및 경제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 「베트남」 사태와 중·소대리전 및 화해의 가능성

동북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미·일·중 3각관계에서 소외된 소련은 동남아로 진출하여 「베트남」과 동맹관계를 맺고 중공 봉쇄에 착수했다. 「베트남」은 소련의 힘에 의존하면서 「감보

33) Ralph N. Clough, *Island Chin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참조

디아」를 침공했다.

이러한 행동을 응징하기 위하여 중공은 「베트남」을 침범했으니 동남아에서 중·소분쟁은 대리전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에는 미국 대 중, 소 충돌이 「베트남」에서 전개되었는데 1970년 후반에 와서 중·소대립이 이 지역에서 파생하였다. 1970년 6월부터 중공과 소련은 양국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려고 새로운 차원의 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월남전 이후 미국은 중공의 변경으로부터 철수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경찰의 위치를 포기하는데 반하여 소련은 중공변경과 「아프리카」 및 「아시아」로 그 세력을 급속히 확대해 왔다. 1975년 4월에 「베트남」이 공산화한 것을 비롯하여 7개국을 친소권으로 넘어갔다. 즉, 「베트남」, 「라오스」, 「앙골라」, 「에디오피아」 남 「예멘」, 「아프가니스탄」 및 「캄보디아」에서 친소정권이 수립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약 4만명 정도의 「쿠바」군이 소련을 대신하여 「앙골라」와 「에디오피아」에 주둔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소련은 서태평양에 극동함대를 증강했고 「베트남」에게 군사 및 경제원조를 확대해 왔다. 1978년 6월 소련은 「베트남」을 Comecon에 가입시켰고 동년 11월에는 「베트남」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의하면 양국중 어느 한쪽이 제3국에 의하여 공격을 받았을 때 기타 당사국은 즉각 협의하고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보장을 얻은 「베트남」은 1979년 1월에 친중공 정권인 「폴포트」통치하의 「캄보디아」를 점령하고 친 「베트남」정권을 수립하였다.

중공은 이것을 「소패권」 또는 「동양의 쿠바」로 규정하고 그러한 침략자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하여 2월에 「베트남」을 습격했다. 약 3주간에 걸친 군사행동을 실시한 뒤 중공은 「베트남」에서 철군하고 「베트남」과 평화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분명히 「베트남」사태는 중·소대리전의 색채가 농후하다. 동맹국이 침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구두의 위협 이외에 중공을 제재할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중·소동맹조약의 폐기를 통고한 후 중공이 제안한 협상안에 대하여 소련은 응하고 있다. 중공은 소련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함으로써 중·소국경에 군대를 증강한다든지 「4개근대화」에 차질을 가져온다든지 할 가능성을 피하고 동시에 SALT-II의 조인과 함께 소련이 미국과 밀착하는 것을 삭제하기 위해서도 소련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소련도 중·소국경에서 안정을 기하고 미·중 밀착을 삭제하기 위하여 중공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중·소협상은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중·소화해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국가수준의 것으로서 무역 및 문화협력 등 극히 기능면에 국한될 것이다. 중공은 이념논쟁을 계속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자기편의 정통성을 고수하기로 다짐하고 있다. 또 양국간의 현안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현재 중·소국경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이 후방으로 철수할 것을 중공은 계속 촉구해오고 있다. 이것을 소련이 거부하고 있고 또 양정권은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자국민의 지지를 증대해 오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화해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양국은 여태까지의 Zero Sum game을 다수 수정하여 이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대결하면서 기타 기능면에서는 다소 협력하는 길을 모

색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중·소분쟁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시아」에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미 소련은 「베트남」의 「캄란」 해군기지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한다. 이것은 중공의 해상통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중공은 미·일과도 군사협력까지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중공과 소련은 상호간의 열전은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개될 중·소경쟁은 동북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4강관계를 매우 유통적인 상태로 만들겠지만 완전한 양극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 변경지역에 있어서의 현상유지

4강체제가 공식화됨에 따라 동북아에서는 세계제2차대전의 유산중, 변경지역에 있는 한반도, 대만과 일본북방 4개도시만이 미해결지로 남아 있다. 긴 안목에서 볼 때 4강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이 지역의 현상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은 4강균형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해도 근해의 4개도서를 위요한 일·소관계를 제외하고 한반도와 대만문제는 더 이상 4강 상호간의 직접적 관계의 정상화를 저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남북한이 궁극적으로 통일할 때까지, 또 중공과 대만도 궁극적인 정치협상에 의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한민족 중의 두 국가」란 현상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한반도에 관한 한 위에서 내린 전망이 실현될 것인가는 4강간의 역학관계에도 달려 있지만 4강 각자가 한반도에 대하여 취하는 정책에도 의존한다. 4강이 상호간에 쌍무관계를 정상화 또는 개선할 때, 한반도문제는 그 쌍무관계에서 분리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결국 남북당사자에게 맡겨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4강각자가 한반도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3. 주변열강의 대한반도 정책

4강체제하에서 열강들은 한반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정책을 취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4강도 그들 상호간에 현재 형성되고 있는 전략적 이익을 교란시킬 어떠한 사태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재편성되고 있는 역학관계를 4강은 그 국내 및 국제사정이 다르므로 자못 다르게 인식하고 있지만 어느 일강도 현상을 타파할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중공과 소련은 북한과 1961년에 체결한 군사조약에 의하여 북한이 제3자에 의하여 공격되었을 때 즉각 군사지원을 북한에게 제공할 임무를 갖고 있다. 동시에 중공과 소련은 북한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자기편 또는 적어도 중립위치로 끌어 들이려 노력한다. 이 때문에 양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외교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4강은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어떤 합의를 얻기는 어렵지만 현상이 파괴되는 것은 각자의 이익에 위배되며, 나아가서 4강 상호관계도 악화될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4강각자는 각기 처해 있는 전략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하여 취하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다소 다르다. 중공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외교정책을 지지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입

장을 이해한다.

소련도 북한을 공식적으로 두둔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중공보다 더욱 현실적으로 한국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국교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북한과는 비정치적인 관계를 증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지원하면서 남북대화를 권장하고 있다. 4강중 미국만이 정치 및 군사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하여 결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해 있다.

가. 중 공

중공은 최근에 혁명과 폭력 대신에 재래식 외교전술을 사용하면서 미국, 일본 및 서구제국과 정치, 경제, 심지어 군사협력까지 모색해 왔다. 이 결과 중공은 그의 대 미·일관계를 해칠 어떤 사태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1975년 4월에 김일성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도 대 미·일관계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공은 북한을 지원할 것을 표시했던 것이다.

북한은 중공의 안보에 있어서 완충지로 작용해 왔으므로 중공은 북한을 매우 중시한다. 더욱이 「베트남」이 친소권에 들어간 뒤 중공은 북한에 대하여 소련과 더욱 심한 경쟁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1972년경부터 중공은 북한에 대하여 소련보다 더 많은 양의 경제지원을 제공해 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공은 현재 안보와 「4개근대화」를 위하여 친서방 개방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1974년에 등소평이 내세운 「3세계론」의 골자와는 대조적으로 중공은 제1세계의 미국과 제2세계의 일본 및 서구와 제휴하여 반소통일전선을 펴고 있으니 혁명의 본산지라고 하는 제3세계는 사실상 경시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 추진중인 「4개근대화」계획은 국외에서 추구하고 있는 친서방 외교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미·중수교와 일·중평화조약은 중공의 대한반도정책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1978년에 중공은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개선하는 한편 미군의 철수문제에 관하여는 김일성의 입장과 다소 다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중공은 1977년에 미군철수문제에 대하여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지지하다가 1978년부터 완화된 태도를 보였다. 1977년에 중공은 미군과 장비는 한국으로부터 「즉각 및 완전」철수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했다.³⁴⁾ 1978년 5월 화국봉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즉각 및 완전」이란 단어를 빼고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동년 10월에 등소평은 일본에서 말하기를 한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북한은 긴장상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³⁵⁾ 이와 동시에 중공은 북경을 방문한 미국의 상원의원, 실업가 및 학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 즉 한국은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34) 인민일보, 1977. 6. 24 사설

35) Peking Review No.44(November 3, 1978). p.16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⁶⁾

이러한 비공식적인 견해에서 우리는 중공이 소련에 의한 「패권주의」를 삭제하는데 있어서 미군의 한국주둔과 한국군의 역할을 인정함을 추리할 수 있다.

다만 중공은 북한이 소련쪽으로 급선회할 것을 두려워 김일성에게 폭력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은 오히려 미국이 북한과 접촉하든지 혹은 한국과 협의하여 남북대화를 장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중공지도자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소련이 한국과 경제 및 기능적인 접촉을 하는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제3국 또는 「홍콩」을 통한 비공식적인 접촉을 한국과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한가지 더 부연해 둘 것은 중공은 현재 대만과 당국자간의 회담을 요청하며 민족자결원칙에 따라 경제 및 기능적인 접촉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북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일치된다.

나. 소 련

동북아에서 소련은 중공세력을 봉쇄하며, 북한을 친소권에 묶어 두려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련은 「아세아 집단안보체제」를 제안하고 「베트남」등 동남아 국가들과 제휴하고 있다.

소련은 중·소국경에 전 병력의 25%인 43개사단과 최신형 전략무기 및 항공기를 배치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하여 소련은 현상유지를 원하므로 중공보다 더욱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존재를 인정한다. 1971년경부터 중공과는 달리 소련은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종래의 입장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는 냉각되기 시작했다. 원래 소련이 미국과 「데탕트」를 추구한 것이 북한의 원성을 샀지만, 북한내의 정치과정, 특히 김일성 우상숭배 등에 대하여 소련지도자들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더구나 북한은 소련에 지고 있는 약 10억 「달러」 정도의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련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감소해 오고 있다.

소련도 미군철수를 지지하지만 한반도에서 현상을 타파할 어떤 사태도 소련은 원치 않는다.³⁷⁾ 만약 어떤 갈등사태가 생기던가 나아가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그것은 중공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록 통일된 한반도도 여전히 중공쪽에 밀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은 1973년 이후 비정치적인 경우 한국국민을 입국시켜오고 있다. 1978년에는 한국의 각료까지 입국시켰고 국제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신문에서까지 「대한민국」이란 칭호가 사용되었다. 이처럼 소련은 비공식적인 부문에서 한국과 가능한 한 접촉을 확대하려고 애쓰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위해서 소련은 남북한 대화를 은근히 지원해 오고 있다.

36) Koren Herald. 1976. 5. 30일자 Kissinger의 배경보도 참조.

37) Ralph N. Clough. Deterrence and Defense in Korea: The Role of U. S. Forces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6), p40

다. 일 본

일본은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북한과는 소규모의 경제 및 문화관계만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정경분리정책」은 최근에 야당과 여당내의 일부 인사들에 의하여 도전되고 있으며 이들은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65년에 한국과 정식국교를 개설한 뒤 한국의 안보는 일본안보 자체를 위해서도 긴요하다는 견해를 파악해 왔다. 「카터」 행정부가 미군철수를 시작한 뒤 일본정부는 이것을 반대하며 한반도에서 군사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것을 강조해 왔다.

이와 동시에 일본정부는 한반도문제는 남북대화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국내정치에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등거리외교」의 움직임을 이따금 보이기도 했던 것은 사실이다.

1969년에 조인된 「닉슨」—좌등성명에서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발표한 후 역대 내각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원칙을 재확인해 왔다. 자민당내의 일부인사, 특히 구야총치의원이 중심이 되어 1971년부터 「일조우호축진의원연맹」을 결성하였으며 1972년부터 「일조무역협정」을 민간수준에서 체결하여 북한과의 무역을 촉진해 왔다. 자민당에서 탈퇴한 우도공덕마의원은 1973년부터 「일조국교정상화국민회」를 조직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했다. 1975년 월남이 공산화한 뒤에는 자민당의 일부 인사들이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하여 일한의원협의회, 일한협력위원회를 조직하고 「닉슨」—좌등 성명중 「한국조항」의 중요성을 재 역설해 왔다. 1977년 3월에 「카터」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미군철수를 발표했을 때 복진 수상은 「카터」대통령과 회담하고 미군철수가 한반도에서 군사균형을 파괴하지 않으며, 남북한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게끔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79년 5월에 대평수상은 「카터」대통령과 회담했을 때도 그는 한국의 안보가 일본안보를 위하여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원해 오면서, 한국과 관계를 해치지 않은 「테두리」에서 북한과의 경제 및 문화관계를 확대해 왔다. 이것은 현재 북한이 일본에 지고 있는 약 3억 「달러」의 부채를 지불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 일본 수출입은행은 수개의 일본상사에게 보험금을 지불했으므로 채무자로서의 북한의 신용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현안문제를 타결하고 나아가서 북한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본은 점차 북한과의 관계를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의견일치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본 정치행태가 계속되는 한 한반도에 대하여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일본이 채택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라. 미 국

한반도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4강 중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한

국전에 개입한 이래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1969년에 「닉슨독트린」에 의한 「월남화」정책이 선언된 뒤 미국은 한반도로부터도 군대를 점차 감소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1971년에 미국은 제7사단을 한국에서 철수했고 1977년에는 제2사단까지 철수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장비와 기술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카터」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꼭 준수할 것이라고 누차 밝혀 왔다. 그러나 이 공약을 이행하는 전략은 다소 바뀌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상군을 1982년을 전후해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그대신 해공군을 증강하려는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사실, 「카터」의 철군정책은 제2의 월남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하여 철군결정을 성급히 발표했던 것이다. 그러나 군부와 의회는 한반도에서 군사균형을 깨뜨릴 것을 염려하고 「카터」의 철군정책에 비판적이었다. 물론 일본도 이에 동조했다. 최근에 미국의 정보기관 자신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병력은 종래 추정했던 28개사단이 아니라 41개사단으로 증대되었다고 한다.

동시에 소련세력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계속 확장되고 「이란」에서 발생한 혁명은 미국의 지도력과 영향력에 큰 도전이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카터」 행정부는 현재 잠정적으로 철군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데탕트」 체제하에서 반공이란 의견일치가 해소되자 한·미관계는 1977~79년에 다소 긴장되었다. 이것은 「카터」가 미국내에서 새로운 외교정책을 모색하고, 또 미국의 정치과정이 더욱 개방적이며 경쟁적으로 전개되자 생긴 현상이다. 즉 미국내 정치가 한국으로 파급되어 박동선사건과 인권정책은 전통적인 우방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 사건들은 그 결말을 거두었고 1979년 6월 「카터」의 한국방문은 새로운 한미관계를 정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종래에 이념 및 감정적으로 결속되었던 한·미관계는 이제부터는 전략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재정립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는 4강세력이 교차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안보는 동북아의 안보와 일치되고 있는 사실을 미국은 재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남북한 당국자간의 대화를 권장해 오고 있다.

북한에 대하여 미국은 판문점에서 군사정권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접촉을 피해 왔다. 1974년부터 북한이 미국과 직접 협상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미국은 한국의 참여 없는 북한과의 어떤 협상도 거부해 왔다. 다만 미국의 민간단체, 즉 탁구대표단이나 기자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을 원하나 최근에 와서 이 정책을 약간 수정하여 중·소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때 미국은 그것에 상응되는 조치를 북한에 대하여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980년의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카터」는 한국의 박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하여 남북한 및 미국 「3당국회의」를 공동으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동북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4강관계와 남북한관계의 균형자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미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정치적 해결을 추구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북한을 서방세계로 유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이제 남북대화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으며, 대화의 협력자 또는 촉진자로서 남북 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한반도에서 군사균형을 유지하고 남북한 대화를 촉진할 수 있게끔 미국은 철군정책을 재조정하게 되었다. 동시에 미국은 중·소를 통하여 또는 UN을 통하여 북한이 대화에 응하게끔 외교 활동도 전개할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강은 한반도에 대하여 비록 다른 정책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상의 파괴를 원하지 않는 점에서 공통이익을 갖고 있다. 이들이 한반도에 대하여 공식적인 합의를 성취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남북한과 갖고 있는 특수관계 때문이다.

그들 중 오직 미국만이 혁신적인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4.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과 한반도

가. 제3세계와 한반도

1973년의 석유파동 이래 세계의 경제는 더욱 상호 의존되어 왔는데 한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제3세계와 중·소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를 높여 주고 있다. 사실 1973년 석유파동 직후 이른바 「77국집단」이 「신국제경제질서」를 요구해 왔을 때 한국은 이러한 비동맹운동에서 소외되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중동진출과 소련 및 「쿠바」세력의 「아프리카」진출로 인하여 반식민지주의 운동의 성격은 악화되고 따라서 북한이 제3세계에 가졌던 인기도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다. 1975년에 UN총회가 한국의 입장과 북한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결의를 낸 뒤 한반도문제는 탈UN화했고 제3세계의 많은 국가를, 특히 중동의 국가들은 한국과 경제관계를 증대해 왔던 것이다. 이것은 급진적인 제3세계 국가들이 자원과 부의 재분배를 요구했으나 1974년 UN특별총회 이후 「신국제경제질서」는 아직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반응이다. 이 결과 대다수의 제3국들은 실리를 획득하기 위한 경제관계를 정치선전보다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사실 OPEC가 유가를 1년 이내에 4배로 올렸을 때 가장 피해를 받은 국가들은 자원이 없고 빈곤한 국가들이었다. 「이란」혁명 이후 다시 치솟는 석유가격과 각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석유비축 및 공급경쟁은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을 더욱 심화할 것이다. 한편 반식민지 운동의 상징인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강점했으나 「쿠바」와 「베트남」이 주도한 비동맹운동은 점차 분열되고 있다. 이때 한국경제는 제3세계의 국가들과도 관련되고 있다. 1979년 5월의 「콜롬보」비동맹국 외상회담이 한반도문제 토의를 배제한 것도 이런데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나. 미·일·중공 경제협력과 한반도

시야를 동북아로 돌리면 미·일·중 3각관계의 진전은 태평양지역에 하나의 무역권 또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며 한국은 여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지만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동력적인 곳이다. 일·중 및 미·중 교역은 이 경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공과 가장 부한 미국과 가장 생산력이 높은 일본간에 무역, 자본 및 기술이 급속도로 교류될 때 실질적인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세계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한국, 대만, 홍콩 및 「싱가폴」 등 「신공업국」의 경제력이 상기 3대국의 것과 연결될 때 경제협력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협력은 이질체제간에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국가간에 실시되며, 일본이 「경제패권」으로 군림하고 있으므로 EEC처럼 공식조약이나 기구에 의해서 성취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공의 「4개 근대화」가 미·일에 의존하고, 또 상기 「신공업국」들도 미·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 경제협력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촉진하는 것이 중공의 개방정책이다. 중공은 1978년 2월에 일본과 무역협정을 맺고 동년 9월에 이것을 수정하여 1990년까지 일본과 약 1,000억 「달러」의 교역을 약속하였다. 1979년 4월에 중공은 미국과도 무역협정을 조인하고 1985년까지 약 500억 「달러」의 교역을 규정하였다. 1978년 이후 너무 급하게 외자도입을 서두른 나머지 중공은 지불방법의 난관과 부문간의 불균형에 직면하여 현재 「4개근대화」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공의 미·일 및 서구와 경제협력에 크게 의존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중공경제는 서방국의 경제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미·일 중공간의 경제협력이 진전될 때 한국경제도 그 영향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 결과 동북의 각국들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경제적 및 기타 직능면의 협력이 정치적인 협력으로 파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4강은 이 지역의 경제적인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전쟁이나 무력충돌은 피하려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중공과 소련이 한국과 비공식적이며 단편적이거나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은 이 점에서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다만 북한만이 현재 이러한 새 동향에서 소외되고 있지만, 그들의 당면한 경제과탄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결국 북한도 이러한 상호의존의 세계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 남북대화의 새 국면과 그 전망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동북아에서 4강관계가 정상화되고 상호간에 균형이 형성되자 한반도문제는 점차 한국화 되고 있는 것이 남북대화의 신국면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남북대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화여부와 장래는 북한정권이 이러한 주변정세와 한국내정을 여하히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주변정세에서 나타난 남북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이 상호간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일종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한반도 문제의 한국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4강이 한반도에 대하여 현상유지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보강하고 있다.
- ② 4강 균형은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그 내부관계는 중·소 분쟁으로 인하여 매우 유동적이다. 동북아에서 미·일·중공 삼각관계의 등장과 동남아에서 소·[베트남]동맹은 중·소 대리전까지 야기시켜 냉전시대의 미·소 대결을 대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래에 중·소는 국가 수준에서 제한된 협상 및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 ③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고양되고 있는데 동북아에서도 미·일·중공간에 경제협력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외향적 경제발전을 추진한 결과 제3세계 및 중·소와 경제적인 관계를 확대하여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 ④ 미국대통령[카터]가 한국을 방문하고 한·미 공동으로 [3당국회의]를 제의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천명하고 철군문제는 한반도의 군사균형과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앞으로 신중히 처리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 그 동안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양국은 새로운 차원에서 상호이익에 근거한 한·미 관계를 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에 있을 미국대통령선거의 진행과 그 결과는 한·미 관계의 진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민간인에 의한 비공식적인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
- ⑤ UN사무총장 [발트하임]은 북경과 서울 및 평양을 방문한 뒤 주UN 한국 및 북한대사와 접촉하면서 남북통신 및 대화를 위하여 [알선](good office)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면은 남북한 대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욱 많다고 보겠다. 한반도 문제가 더 이상 4강간에 쌍무적인 쟁점이 되고 있지 않으며 4강이 한반도에 대하여 현상유지정책을 택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다. 반대로 중·소 대리전이 미·소 대리전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중·소 분쟁이 한반도에서 격화될 때 북한이 그것을 이용하여 어떤 사태를 야기할 소지를 마련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소 중 어느 한편의 지원을 약속받지 않고 김일성이 단독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가 합리적 사고를 한다면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극히 제한된 중·소 화해 또는 평화공존은 한국과 중·소와의 접촉과 북한과 미국과의 접촉을 개설하는데 촉매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고조되고 UN사무총장이 남북한간의 통신을 알선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이다. 미국이 대한반도정책을 더욱 분명하고 신빙성 있게 재정의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시할 때 그것은 남북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은 현존하는 정세와 각국의 국내정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만 가능하다. 만약 미·중공 관계가 악화된다든지 중·소 동맹이 부활한다든지, 중공 내에 정치변화가 생겨 친소정권이 집권한다든지,³⁸⁾ 일본 및 기타 변경국이 핵무기를 발전시킨다든지, 미국이 대한반도정책을 바꾼다든지 한국에서 정치 및 경제불안이 생긴다든지 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한반도 및 4강

38) 모사후의 중공 국내정치동향에 대해서는 Byung joon Ahn, Chinese Politics and the Cultural Revolution Dynamics of Policy Processes(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pp. 260~269 참조

의 안정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따라서 1979년 현재, 동북아의 정세가 큰 변화없이 계속되고, 한국의 국내안정이 지속된다면 결국 북한은 대화에 응하고 말 것이다. 북한이 무력행사나 혁명에 의존하지 않고 내적으로는 경제개발과 주민복지에, 외적으로는 상호의존의 서방세계에 참여함으로써 그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할 수 있을 때 한반도의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남북한 당국자간의 대화에 응할 것이다.

과거 30년 동안 남북한은 각기 상치된 통일정책을 추구해 왔다.³⁹⁾ 이동안 양쪽은 상대방의 의도와 전략을 잘 파악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와 전략을 변경하지 않는 한 생산적인 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오로지 북한만이 한반도의 현실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그것을 그대로 인식할 때 비로소 남북대화는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39) Hak joon Kim, The Unification Policy of South and North Korea(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7), 참조

3. 공산주의자와의 협상과 남북대화

한배호(고대 교수)

1. 협상의 의미와 유형

넓은 의미에서 쓴다면 협상은 개인·집단·국가(정부)가 서로 상충하는 이익이나 공통된 이익을 절충·타협하는 상호작용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협상은 당사자나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 어떤 공통이익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 이해를 가질 때 가능하다. 협상을 거부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유익하다는 판단이 서야 당사국이 서로 접촉을 갖게 된다.

협상행위를 분석한 [아이클](Ikle)에 의하면 대체로 네 가지 목표나 목적을 중심으로 협상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⁴⁰⁾

첫째로 현존하는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협상이 있다. 가령 관세협정의 연장이나 해외군사기지의 사용권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하는 경우이다.

둘째, 어떤 상황이나 국가간의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협상이다.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휴전회담이나 국교관계가 없는 국가들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한국전쟁 후 UN군 대표와 중공·북한측이 가졌던 협상, 10여년을 끌었던 한일회담이 대표적인 예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재분배를 위한 협상이다. 이것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가 수세에 있는 국가에 대해 새로운 분배관계를 요구하려는 목적에서 협상을 갖는 경우이다. 이때 공세적인 당사국의 요구는 수세적인 당사국 이익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을 지닌다. 영토의 분열, 배상금의 부담, 또는 정치적 영향력의 재분배, 제조정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흔히 전쟁 후에 전승국이 패전국에 대해 강요하는 내용의 요구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재분배 협상에는 공통적인 이익보다 상충적 이익의 조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세적인 당사국의 요구가 거부될 때 최악의 경우 당사국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넷째, 새로운 제도나 기구를 창설하려는 목적에서 벌이는 협상이 있다. 그것은 쇄신 또는 창조를 위한 협상이라 부른다. 이 경우 당사국간의 새로운 관계나 임무, 책임의 설정을 둘러싼 협상이 전개되고 이 때 이익의 균형있는 분배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어도 협상당사국들 사이에 공동이익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조성될 수도 있다.

국제정치에서 전개된 협상은 이 네 가지의 어느 하나나 여러개의 목표가 중첩된 형태를 취해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화된 목표이외에 당사국들은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도 얻어내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 경우에는 표면적인 목적보다 숨은 목표를 성

40) Fred Charles Ikle, How Nations Negotiate.(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74), pp. 26-28

취하려는 의도에서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든지 선진효과를 노려서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 유지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다. [히틀러]와 [첸버린]이 맺었던 [뮌헨]협정은 속임수의 수단으로 이용한 고전적인 예에 속한다.

[협상과정]은 당사국의 목표에서 협상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전단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협상과정은 다음의 다섯가지 요소가 서로 얽혀져서 진행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즉 (1) 행위자(당사국)를 협상에 임하게 하고 머물게 하는 목표, (2) 의사소통과 행위를 포함하는 과정 자체, (3) 협상과정에서 파생되며 당사국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 (4) 협상당사국의 상호관계와 문화전통의 배경, (5) 협상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황적 여건 등이 협상과정에 작용한다.

이러한 복잡한 협상과정에 있어서 협상을 이끌어 가는 것은 [협상자]이지만 협상과정은 협상자의 성격이나 자질, 능력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협상자는 여러 가지 제약속에서 움직여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협상과정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첫째로 당사국의 내정이 협상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비밀외교의 경우처럼 협상내용을 일절 비밀에 부치고 국민이 모르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며 당사국의 정치체제 성격에 따라 정도의 차는 있어도 협상과정에는 국내정치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둘째로 국제적인 협상과정에는 당사국의 행위를 규제하는 효력을 지닌 [규칙]이 없다는 점이다. 노사분규처럼 경영측과 노조대표가 협상할 경우 정부라는 권위성이 개재될 수 있고 일정한 [룰]속에서 진행될 수 있으나 국가간의 협상에는 어떤 구속력을 지닌 규칙이 부재함으로 협상과정이 복잡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오히려 국제적인 협상에는 규제보다 규범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가마다 문화전통이 다르고 더구나 [이데올로기] 면에서 분산되어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모든 국가가 존중할 수 있는 동일한 규범은 존재할 수 없다. 서방국의 외교관이 협상할 때 저들사이에서 통하는 규범은 공산국의 대표와의 협상에 통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2. 공산주의자의 협상관과 협상[스타일]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다. 2차대전후 세계가 동서 양진영으로 쪼개지면서 서방측은 공산권과 냉전체제하에서도 협상을 거듭해 왔고 한국전쟁 종식후 [제네바]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폴란드]수도 [바르샤바]에서 중공과 대사급회담을 근 20년간 계속했다. 월남종전말기에 미국은 [파리]에서 월맹 및 [베트남]측과 평화회담을 가진바 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공산주의자와의 협상경험을 분석, 출판한 서적도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다.

공산주의자의 외교행위는 소위[혁명적 외교유형]이라 부르는 것으로 이것은 전체주의 국가의 정치적 가치체계와 윤리의 소산이기도 하다. 즉 국제정치질서의 파괴와 공산주의에 의한 새로운 세

계질서의 창조라는 집념에 바탕을 둔 외교[스타일]이요 협상형태이다. 세계의 현상유지를 타파하는 것이 그들의 일차적, 궁극적 목표인 만큼 공산주의자들은 비정상적인 외교나 협상행위만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케 하는 방법임을 굳게 믿고 있다. 난폭한 언사,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 악의에 찬 선전등이 외교공세의 무기로 사용되기 일쑤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선전적인 효과를 노리기보다 이러한 변태적 외교행위를 취하면서 협상상대로 하여금 당황하여 협상자세의 균형을 잃게 하며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려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공산주의자의 협상행위는 그 나름의 독특한 협상관을 토대로 하고 있다.

첫째로, 공산주의자에게 있어서 협상은 비공산세력과의 혁명투쟁의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당과 외부세력(비공산세력)사이에서 맺어지는 협정이나 합의는 장차 그 세력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역으로 저들에 의한 당의 파멸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공산주의자가 외부세력과 맺은 합의·협상은 특정의 구체적인 합의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 연정에 참여하는 공산측의 합의는 이러한 확신에 바탕을 둔 것이다. 비공산 세력과의 근본적인 합의를 부정하는 만큼 표면적으로 외부집단과 우호적인 합의를 갖는 것과 그 집단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 사이에 아무 모순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양자가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속의 상이한 전술일 따름이다.

둘째로, 공산당과 그의 적 어느쪽도 폭력에 의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때 적과 합의협정을 맺을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이 갖추어 진다는 인식이다. 즉 합의협정은 싸움이나 폭력행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다른 형태로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협상관에 의거해서 월맹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그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폭력에 의한 월남점령에 성공했다.

셋째로, 공산주의자는 상대방이 반드시 합의협정을 위반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상대방이 약속대로 합의, 협정내용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외부집단과 협상을 통해 합의나 협정에 도달했다고 해서 공산당의 전멸위협이 감소된 것은 아니다. 상대방 역시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합의협정은 양자간의 잠정적인 힘의 교착상태를 성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산주의자의 협상관은 공산당의 집권투쟁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비공산세력과의 권력투쟁속에서 얻은 체험을 반영한 것이다. 그 원형은 [소련]의 [볼셰비키]의 혁명투쟁에서 찾을 수 있고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다른 공산국의 협상관에서도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는 특유의 인식이 다. 모든 공산당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한가지 사실은 공산당은 집권전부터 모든 것을 당과 그 밖의 세계라는 이원적인 사고로 구별하는 습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집권이전에 있어서는 외적세계는 적대적인 세계이요, 정복되어야 할 세계이다. 그리고 집권후에도 외부세계에는 반혁명적 세력이 침투하거나 잠재해 있는 세계로 인식된다.

이러한 이원적인 인식으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저들의 정치 행동전략전술을 실천하는데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규칙을 찾아낸 것이다. 그것은 공산당의 혁명투쟁과정 속에서 얻은 체험을 반영하는 동시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속에 제시된 행동원리를 집약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기도 하다 [레이츠](Nathan Leites)는 그것을 작전약호(Operational Code)라고 호칭한 바 있다.⁴¹⁾

김권전과 후에 걸쳐서 소련공산당의 혁명전략과 전술을 향도해 온 작전약호는 [스탈린]의 대서방외교전략에도 적용되었고 냉전체제하에서의 소련의 협상행위에도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후르시초프]체제에서 양대진영론이 [평화공존론]으로 전환을 보게 되면서 소련의 대서방외교가 신축성을 보여주기 시작했지만 소련의 외교[스타일]이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레닌·스탈린]의 교리적 신념을 구체화시킨 [볼셰비키]작전약호가 아직도 소련의 교는 물론 다른 공산당, 특히 후진지역의 공산당의 전략전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공산주의자의 협상[스타일]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작전약호를 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결 정 론>

모든 미래 사태는 불가피한 것 뿐이다. 그 중간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연 또는 우발적인 사건사태란 있을 수 없다. 그 법칙을 가장 잘 알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당]이며 당의 지도하에서만 올바른 행동노선이 제시될 수 있고 역사가 제기한 문제를 당만이 적절히 대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것은 언제 세계적 규모의 공산혁명이 성공하느냐 하는 문제이나 그렇다고 당은 실망할 것이 없이 오직 [승리의 길]을 단축시키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면 된다.⁴²⁾

협상에 임하는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법칙]의 정확성을 굳게 확신하면서 그것이 저들에게 올바른 노선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믿는다. 다만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 나타나느냐에 대한 예측은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하며 그것이 조성해 주는 기회를 포착, 선용할 줄 알아야 한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정향>

공산주의자가 중시하는 과거는 [당사]에 기록된 과거뿐이다. 그 이외의 과거란 [노쇠와 죽음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당사]는 과거만 아니라 미래를 투시하고 점치는데 불가결한 조명등이기도 하다.⁴³⁾ [바르샤바]의 미·중공대사급 회담에서도 중공의 협상자는 중국의 전통사상인 중화사상에 젖어 있을 뿐 아니라 서구의 불평등조건에 대한 뿌리깊은 원한이 [마르크스]주의-모택동사상과 결합되어 격렬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다. 공산주의자의 협상[스타일]을 이해하는데는 저들이 가장 증오하는 과거 또는 가장 애착심을 가지고 보는 과거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탈린]의 대서방 감정을 [볼셰비키]혁명 후 서방세계가 소련을 포위했던 때에 형성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41) Nathan Leites, The Operational Code of the Politburo(New York : Mcgraw-Hill, 1951)

42) Leites, 전계서 P.4.

43) 전계서 P.6.

<사생결단의 장으로서의 협상과정>

공산주의자는 자신과 적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멸]이나 [정복]이나 하는 극한상황으로 인식한다. [스탈린]은 양대진영론에서 세계는 두 개의 진영으로 분열된 것으로 보고 세계경제 지배를 위한 싸움이 전세계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았다.⁴⁴⁾

적에 의한 공산권의 전멸위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소련공산당은 자본주의 진영을 내부적으로 붕괴시키는데 대외정책의 기본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공산당의 공통과제는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대립, 갈등을 예리화시키는 일이며 당의 파괴와 전멸을 기도하는 모든 외부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적보다 월등히 우세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공산세계와 비공산세계 사이에는 오직 긴장만이 있을 뿐이며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과격주의적인 [볼셰비키]의 작전약호라 하겠다.

이처럼 과격한 태도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때 공산주의자는 상대방을 대결의 상대자로 보고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게 마련이다. 협상을 사생 결단하는 전투장처럼 인식하고 완전한 승리에 의한 상대방의 굴복, 전멸을 협상의 목표로 삼게된다. 그래서 협상과정은 일종의 외교적 [게릴라]전으로 화하고 온갖 술수와 모사가 동원된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와의 협상을 사회주의와의 이론적 대결의 장으로 보고 혁명투쟁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목적과 수단>

공산주의자는 이중적인 도덕기준을 쓰고 있는 존재이다. 무엇이든 공산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옳고 필요하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증진시키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는 명확한 이중적 도덕성이다. 어떤 정책이든 그것이 당의 권력을 강화해 주는 것이라면 정당하고 옳은 것이다.⁴⁵⁾ 당의 정책은 윤리적 고려나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며, 오직 이득에 대한 냉철한 계산 위에서 행동해야 한다. 당내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 당지도층은 [진실]여하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오직 그 입장이나 성명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만을 생각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가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즉 당지도층은 자기의 공적 발언이나 성명의 일관성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오직 효과성만 중요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도덕성을 반영하여 공산주의자는 협상을 장기적 목표와 목전의 이점을 구분하면서 진행시킨다.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와 국가이익을 융합시키지만 항상 제국주의의 완전한 제거 숙청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장기적인 목표아래서 외교정책을 수립한다. 협상과정에서 잠재적인 장기적 상황의 진전을 중요시하는 목전의 이점을 포기하면서도 장기적인 이득의 극대화를 위한 행동노선을 택한다. 따라서 전술적이고 즉각적인 이점은 극소화시키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양보를 얻어내는데 주력한다.

44) Leites, 전게서 P.53

45) Leites, 전게서 P7.

<치밀한 계산>

공산주의자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자유롭고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과 목표에 비추어 자기의 협상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사전에 치밀한 계산에 의해 충분하고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입장(역시 치밀하게 검토된 것이지만)으로 대처시키는 경우는 있으나 언제나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을 강조한다.⁴⁶⁾

또한 언제나 전체의 입장 안목에서 특정사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적을 능가하는 전략을 세울수도 있다. 공산주의자의 정책은 항상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어떤 정책목표를 세울 때 주요인이나 세력의 현존 관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강자가 내일의 약자가 되고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될 수 있는 미래의 변화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즉 미래의 세력을 이용하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책목표를 세워야 한다.

<감내와 융통성>

<바르샤바>회담의 미·중공 대표 사이의 한가지 대조적인 것으로 양자의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다르다는 점을 Kenneth Young 은 지적하고 있다.⁴⁷⁾ 미국측은 조급해 하는 반면에 중공측은 무한정 기다린다. 미국측의 협상자는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이고 중공측은 시간을 [활용]하는 격이다. 미국측의 사고가 [년]이라는 기한이나 시간관념에 매여 있는 반면, 중공측은 [시대]라는 장기적이거나 무기한적인 시기관념을 갖고 있다. 중공측은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장기간이 요하는 역사적 투쟁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중국인 특유의 사고에서 올 수도 있으나 공산주의가 강조하는 감내와 지구력의 표현일 수도 있다. 공산주의자는 시간과 승리가 자기편에 있음을 확신한다. 물론 역사과정에는 후퇴도 있으나 초조해 할 필요는 없다. 협상에서 초조감이나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다. 오직 인내, 지구력 그리고 침착성이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러한 지구력도 중요하지만 공산주의자는 주위환경에서 생기는 변화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볼셰비키]의 작전약호이다. 융통성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이나 전술적인 변화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다. 정치적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자승자박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융통성을 가지려면 모든 결정을 일원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위환경의 변화에 시시각각으로 대처해서 융통성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감내를 강조하는 동시에 융통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협상[스타일]은 경직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탄력성을 지니기도 하는 것이다.

46) Leites, 전게서 P.14.

47) K. Young, Negotiating With the Chinese Communists(N. Y. McGraw-Hill, 1968) pp. 350-352.

3. 북한의 혁명외교와 대화자세의 특징

2차대전 이후 분단을 겪은 나라로서 동서독, 오스트리아, 중국, 한국, 월남을 들 수 있으나 그중 오스트리아와 동서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분단국은 골육상쟁의 비극을 겪었고 공산세력과 비공산세력 사이에 장기적인 전쟁을 경험했던 국가들이다. [아시아]의 3개국이 골육상쟁의 비극을 겪었다는 사실은 3개국의 공산주의자들의 협상행태를 논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분단국의 공산당의 협상태도가 유달리 전투적이고 철저하게 [볼셰비키]적인 행동강령을 준수하려는 정향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저들의 협상관이 보다 경직성을 지닐 수 있다는 이유도 납득할 수 있다.

분단국의 공산측이 직접 참여했던 [판문점회담], [바르샤바]미·중공회담 그리고 [파리]평화회담을 통해서 나타난 공산주의자의 협상행태는 몇 가지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로, 이 세 개의 협상을 일관해서 공산측은 분단국내의 [적대세력]의 붕괴 아니면 약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판문점회담]의 경우, 북한측은 외국군대의 철수를 주장했으며 이것을 협의대상에 포함할 것을 고집한 바 있다.

[파리]회담에서도 미국측은 군사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다음에 정치문제를 월남국민 스스로가 다루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데 반해, [베트콩]측은 군사, 정치문제의 동시해결을 고집하면서 평화기의 10개 항목 중 첫 항목으로 [사이공]반공정권의 붕괴를 노리는 과도연정 수립을 제의한 바 있다.⁴⁸⁾

[바르샤바]회담에 있어서도 중공측은 [대만해협지역에 있어서의 긴장완화]를 의제로 고집했으나 이것은 대만으로부터의 미국의 전면철수를 요구하는데 진의를 둔 주장이었다.

둘째로, 공산측은 협상과정에 있어서 폭력을 포함한 모든 압력을 동원했다. [판문점회담]당시 공산측은 갑자기 무장한 중공군을 회담장소 부근에 투입했으며 심리적으로 UN군측을 위협하려 했다. UNC의 강력한 항의로 공산측이 사과문을 내고 사태는 수습되었으나 한 때 회담을 중단하는 사태를 가져오기도 했다. [바르샤바]회담의 경우에도 중공은 금문도에 대한 포격을 시작하여 미국과의 긴장을 강화하는 고압적인 압력행사를 시도한 바 있다. 월맹도 미국이 북쪽중지로 협상 가능성이 높아가던 1968년 1월에 구정공세를 취하여 막대한 희생을 치루면서 그것을 협상에 있어서 미국을 수세에 몰아넣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활용한 바 있다.

셋째로, 공산측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약화되어 양보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술을 사용했다. [파리]회담에 있어서도 [베트콩]측의 조건은 미국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것은 [티우]정권의 붕괴→월남에 용공연정수립→[하노이]와의 통일을 노리는 시간표였다. 이에 반해 미국측의 제의는 선휴전→[티우]정권유지→DMZ 복원→월남분단의 고정→반공친서적인 월남의 영구적 확보를 노린 것이었다. [베트콩]의 평화 10

48) 김철수, 김지운저 분단국의 문제, 삼성문화문고, 20. 1972. pp. 345~350

개안은 저들이 추구하는 혁명전쟁의 정치적 목표에 대한 미국의 위장투항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두 개의 완전히 상반된 요구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미국 국내에서는 반전[무드]가 상승일로를 걷게 되고 그것이 미국협상자에게 계속 압력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위치는 더욱 약화되었던 것이다. [파리]회담은 4년간을 끌어오다가 미국의 월남화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중국에는 [베트콩]측의 요구에 미국이 굴복, 대폭 양보하는 결과로 끝을 맺은 것이다.

이 점은 [바르샤바]회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1953년부터 시작해서 중단과 재개를 거듭했던 이 회담에서 중공측은 시종일관해서 미국의 대만포기를 요구했다. 그것도 미국측에 대한 어떠한 반대급부도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인 요구였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를 중공에게 요구한데 대해 중공은 미국의 대만으로부터의 철수요구로 맞섰으며, 미국이 요구한 중공내에 억류된 미국민간인의 석방요구에 대해 미국내에서 북역중인 중국인이나 중국계 시민의 석방과 중공 귀환을 요구했다.

이러한 공산측의 외교[스타일]을 영(Kenneth Young)은 [적대적 협상] (Adversary Negotiation)⁴⁹⁾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한 바 있으나, 요는 아세아의 분단국의 공산측이 전혁명외교 [스타일]을 고수해 왔다고 보겠으며, 중공의 경우 혁명외교와 현실외교라는 이원적 요소가 혼합되어 융통성을 보인데 비해 북한의 외교는 철저한 혁명외교 [스타일]로 일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북한의 대미접근 시도는 국제적 고립을 면하고 새로운 국제조류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으나 내용 면에서 북한외교의 기초에는 큰 변질이 나타난 바 없다.

북한의 남북대화 자세도 혁명외교 [스타일]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남북대화에 임해 온 북한의 의도와 북한이 추구해 온 통일의 전략·전술이 기본적으로 [불체비키]적인 작전약호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략은 미군의 철수와 인민에 의한 혁명투쟁을 뜻하고 전술은 전략을 실현화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표면적 긴장완화와 잠정적 현상유지 및 국제적 고립 극복을 의미한다. 1971년 [최고인민회의]제4기 제5차 회의에서 발생한 소위 [평화통일방안의 8개 항목]은 북한의 전략과 결합한 것으로 미군철수라는 전략적 목적을 위하여 남북간의 통상과 경제적 협조 등의 교류, 연방제 그리고 정치협상회의(최근에는 전민족대회로 개칭) 등을 내놓고 있다.

1972년 7·4공동성명 후 약 1년간 계속됐던 남북대화과 금년의 [1·19]제의 후에 있었던 남북 접촉을 통해서 나타난 북한측의 자세와 의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을 역시 [불체비키]의 행동강령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것으로부터 북한의 외교행위를 추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불체비키]행동강령 가운데 특히 오늘의 북한의 대화자세의 성격을 조명해 주는 것은 (1) 이용당하는 위험 (2) 전진과 후퇴 (3) 고립과 접촉, 그리고 (4) 기만이라는 행동규칙이다.⁵⁰⁾

49) Young, 전게서 p.

50) Leites, 전게서, pp. 41~49 pp. 66~72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거부한 이유로서 남북대화의 진척이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침식(erosion)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북한측의 우려를 들 수 있다. 철저한 폐쇄체제인 북한으로서는 남북간의 대표왕래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각히 검토했을 것이다. 즉 남북대화가 북한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남한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며 자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당의 과제]라는 논지의 연설에서 [더러운 일을 남에게 시키는데 익숙해 있는 전쟁광에 의해 우리들이 분쟁에 말려들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영국[부르조아지]는 자신의 손을 전쟁으로 더럽히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당이 외부집단에 의해 이용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당의 전멸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⁵¹⁾ 당이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때 당의 권력은 상실되고 당의 지위도 하락된다는 것이다.

전진을 위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혁명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공산당이지만 너무 실현성이 없는 장대한 전진보다 조그마한 전진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또한 전진과 또 다른 전진 사이에 휴식도 필요하다. 특히 당은 전진을 기도할 때 모험주의에 빠져서는 안되며 불확실한 장래목표를 위해서 이미 확보한 것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행동지침이다.

공산당은 이처럼 전진을 강조하면서도 한편 후퇴의 필요성도 인정한다. 전진계획 속에는 언제나 후퇴를 위한 준비도 포함해야 하며 만일 전의 경험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위태롭고 낭비적임이 드러나면 직관적으로 전진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의 경험을 살려서 또 다른 전진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북한은 7·4공동성명을 계기로 종래의 통일전략·전술을 실천화하는 호기로 보고 전진을 기대했으나 남북대화에서 예기했던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후 북한은 한국의 국제고립화를 위한 외교공세로 전진의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전진의 조건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볼셰비키]행동강령에서는 당과 대중의 관계에 있어서 양자간의 고립과 접촉을 동시에 강조한다. 즉 당은 대중과 떨어져서 분명한 경계선을 유지해야 하는 한편 당이 정확한 노선을 추구하려면 대중과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차원에서 공산국은 비공산국과의 접촉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다. 대서방 세계와의 접촉을 주도한 것도 서방측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것이었다.

북한은 다른 어느 공산국보다 고립을 중요시한 체제이다. 체제에 대한 외부집단이나 세력의 침투를 철저히 봉쇄하려는 데서 온 결과였다고 하겠다. [볼셰비키]적 사고에서 본다면 공산당은 항상 국내나 국외의 불순분자에 의한 침투위험을 지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침투할 틈바구니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51) J. Stalin, *Lenism Selected Writings*, p.444

국제적으로 동구권과의 접촉마저 제한하는 고립주의를 추구했던 북한이 1970년대의 격동기에 들어서면서 극히 제한된 것이나 접촉을 시도한 것은 고립에서 오는 행동제약이나 손실을 극복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접촉의 목적은 분명히 제한된 것이었다. 즉 적대국의 태도와 의도를 알아내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적의식 뿐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1970년대 이후 고립과 접촉사이를 왕래하는 외교행태를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고립쪽에 중심을 둔 불안정한 [바란스]의 곡예였다고 보겠다.

공산주의자는 적이 항상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적의 말을 언제나 일단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외부집단의 공적 성명은 기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이 [볼셰비키]의 신념이다. 또한 대중은 쉽사리 기만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적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이 항시 기만하고 있다고 보는 만큼 적을 기만하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한 일로 간주된다. 또한 대중이 쉽사리 적에 의해 기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은 대중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솔직히 말할 수 없다. 당도 대중을 기만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이 자국의 대중을 기만하는 일과 적을 기만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1·19]제의를 많은 함축성을 담은 것이었다. 북한측이 그것을 순수히 응낙했다면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내포한 제의였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북한이 접촉을 원치 않고 회피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1·19]제의에 대해 북한은 남북조절위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조국전선을 내세워 이에 대응해 왔으며 [전민족대회]개최를 요구해 왔다. 미군철수라는 일관된 북한 전략과 결합해서 제의를 단기적 목적을 위한 전술로 이용하려 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장기적으로 보아 미군철수가 역행할 수 없는 대세로 간주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한국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시간을 끄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남북대화의 성격과 장래의 전망

1970년대 초에 있었던 남북조절위 중심의 남북대화는 남북한 쌍방이 서로의 의도, 상대방에 대한 전략조정 그리고 상대방의 능력(capability)을 탐지 확인하기 위한 접촉이었다. 구체적인 의제, 협상항목을 놓고 가진 협상은 아니었다.

남북대화에 임한 양측의 기본입장이나 접근방식은 대조, 대립적이었다. 북한은 군사적 대치상태를 우선 해소하고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의 연석회의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정치적 타개를 요구하는 [정치협상 우선주의]를 들고 나온 데 반해 한국은 국제통합이론에서 말하는 [기능주의]적인 접근방식으로 대응한 셈이다. 즉 정치·군사적 문제는 차후에 미루고 용이한 문제인 경제적 교류, 인도적 교류부터 시작해서 침투확산효과(spill-over effect)를 얻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정치적 차원의 쟁점도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다.

양자의 대립적인 입장은 평행선을 이루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가까운 장래

에 [기능주의적]인 접근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전망도 없다. 마찬가지로 남한이 정치협상주의로 전환할 것을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한 양측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이란 ① 서로 상대방이 자기의 접근방식을 따를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거나 ② 자기의 접근방식을 견지하되, 상대방의 것을 일부 받아들여 혼합시키는 길이 있을 뿐이다.

남북대화는 다른 협상사례와 비교하기 어려운 독특성을 지닌다. 월남에서는 유례 조차 찾을 수 없는 접촉형식이다. 동서독간의 접촉과도 성질이 다르다. 동서독의 외교관계정상화에는 서독의 전략적 위치, 경제 및 군사력 그리고 동구권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구심적 역할을 중요시한 소련과 동구권의 강압적 작용이 결정적 요인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에게 그와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는 외적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북대화가 독특한 접촉형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앞날의 전망이나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대화가 어떤 계기로든 재개된다해도 그때의 실질적 쟁점이 1970년대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 될지도 의문이다. 단지 확실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북한은 남북접촉이나 대화 또는 한걸음 나아가서 협상을 혁명외교, 혁명투쟁의 같은 선상에서의 연장으로 보는 자세를 고수할 것이며 그 기본입장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국내체제가 공고하고 국제환경도 자기편에 유리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1970년대 초의 남북대화에 응해온 것이라 본다. 그러나 대화진행과정에서 국내체제에 대한 자신에도 회의를 갖게 되고 유리하게 전개되리라던 국제환경도 오히려 남북한의 동시 UN가입 등 자기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면하면서 대화를 단절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후 북한은 경제체제의 낙후성, 군수공업과 직결된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른 산업간의 불균형 심화, 그리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지니는 경직성, 창의성의 결여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전환을 시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갈수록 벌어질 수 있는 경제적 격차를 의식하여 경제체제와 국내정치질서의 공고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제환경에 있어서도 미·중공관계정상화, 일·중 우호조약 체결 등이 북한측에게 어느 정도 압박감을 줄 것으로 보며 외교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북한은 계속해서 중·소간에 등거리 외교, 대미접근 외교를 시도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비한다면 북한이 국제환경을 위협적인 것으로 감지할 이유는 없다.

남북한관계에 관한 한, 북한은 고립이나 접촉이냐의 양자택일에 있어서 고립쪽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자신과 그 환경 사이에 충분하고 강력한 경계선을 아직 구축하지 못했다는 인식 즉 남한과의 접촉으로 내적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본다. 더구나 중공이 서방세계에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죽의 장막]이 걷혀진 상황에서 북한은 외부세력의 침투위험에 더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의 고립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북한을 고립에서 접촉으로 유도하기에 적절한 북한의 내외조건은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19]제의는 북한을 다시 접촉으로 유도하려는 남한의 [이니셔티브]였으며,

비록 유산은 되었지만 그것이 실현되었더라면 남북간의 제2의 접촉은 탐지·확인을 위한 접촉이 아니라 [통일]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협상으로 성격이 전환되었을 것이다. 북한이 [1·19]제의를 외면했다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 협상을 전개할 처지에도 놓여 있지 않다는 추론이 나온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1·19]제의를 어느 면 [정상회담]으로 발전한 소지도 지닌 것이었다. 그것을 북한은 거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7·4공동성명은 [자주적]이고 외세의존 간섭 없이 통일을 실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남북한관계는 국제적, 지역적 맥락과 한반도내의 맥락이라는 이중적 맥락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다. 이 점은 동서독 관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동서독 관계는 소련-서독의 관계, 서독-동구관계가 풀리게 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유럽]에 있어서 1960년대가 냉전체제가 해소되는 시기였다면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동북아의 정세는 1960년대의 [유럽]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운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에 들어서면 아세아의 국제질서는 미·중공·일본간의 긴밀한 협조아래-일층[태평양]이 성숙되어 갈 것이다.

[한반도내의 맥락]에서 보아도 북한이 노골적이고 조잡한 혁명외교방식을 추종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북한도 전략, 전술, 조직을 바꾸어 나가는 융통성을 지녀야 할 상황으로 바뀌지고 있다. [레닌]의 말대로 [적이 갈지자 걸음을 할 때는 적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나도 갈지자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적응과 정치적 수단의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물론 국제적 지역적 맥락이나 한반도내의 맥락에 있어서의 변화를 남북한이 동질적이고 같은 시각에서 감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인식의 각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이데올로기]가 계속해서 하나의 현실을 보는 [눈]이 되고 있는 한 남북한의 현실인식에는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1970년대초의 일차적인 접촉을 통해서 쌍방의 현실인식은 1950년대나 1960년대에 비한다면 훨씬 좁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추세가 유지되도록 쌍방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자의 생리가 외부세력의 침투에 과민하고 고립성을 지닌 만큼 남북간의 접촉은 남한측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며 항상 북한의 문을 두드리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과 객관적 여건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자신 속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대기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 협상은 처음부터 정치적 협상임을 인식해야 하며 접촉과 교류가 오직 협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7월 1일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에서 제의된 [3당국회의]는 남북대화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토의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3당국의 각자 목표가 상반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회의가 성립되더라도 회의과정이 순탄치는 못할 것이다.

[3당국회의]제안과 더불어 우리는 월남전을 위요한 [파리평화회담]의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3당국회의]의 추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간의 협조와 공동보조가 필요하다.

4. 남북대화와 한반도의 평화통일

1. 평화정착과 남북대화

가. 평화정착의 의미

남북한간 평화정착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하는 중요한 점은 이 평화정착이 민족의 분단을 고정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민족적인 공존의 원칙에 입각하는 평화정착의 정책노선은 내적인 인식부족과 외적인 고통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이 점은 북한측에서 이미 선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측은 평화공존은 민족을 달리하는 국가간의 존재양식의 하나이지 같은 민족간에 공존하자는 것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근거가 없는 것임은 물론이나 이러한 악의적인 해석을 하려는 측은 그만두고라도 이 점에 관하여 공존이 결코 민족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의 재결합이나 동질화의 폭을 넓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데 대해 일반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정치선전의 용어가 되고 있는 평화공존이란 말 대신 남북한관계에서는 평화정착이란 말을 쓸 것을 제의했다.

왜냐하면 같은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쓰는 나라의 입장에 따라 그때 그때의 [뉴앙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소련의 경우에도 [레닌](Lenin)이 쓴 평화공존과 [후르시초프](Khrushchev)가 쓴 것 사이에 의미가 다르다.

전자는 [볼셰비키]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고 후자는 미국과 경쟁적인 공존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중공의 경우는 정치적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나라간에 5원칙에 따라 국가관계를 정상화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평화공존이 북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민족 국가간의 관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로써 처리할 수 있기에는 이 말이 쓰이는 역사적 시기와 상황이 다르며, 그리고 쓰는 주체의 목적에 따라 내용을 달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평화공존이란 용어가 남북한간이라고 해서 쓰여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이 정치선전의 세계에서 소문난 어구가 되고 있는 평화공존이란 용어대신 우리의 실정이나 정책에 실감을 주는 평화정착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평화정착이 어떠한 뜻을 가진 말인가를 생각해 보자.

첫째, 평화정착은 남북한간의 안정된 관계의 정립을 말하며,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의 실체가 손상됨이 없이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는 평화정착은 민족차원에서 남북한간의 활발한 접촉을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족분단의 고정화 일 수 없다. 평화정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민족의 실체를 보전하고 민족적 차원의 통합과 통일을 가져올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기초이자 수단이라 하겠다.

평화정착의 정도와 민족적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정도는 정비례한다고 보아야 한다. 평화정착 없이는 민족적 화합은 불가능하며, 민족내부에서 오로지 정복욕만이 싹트고 커갈 뿐이다.

셋째로 평화정착은 민족적 통일여지의 정체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평화정착의 [테두리]내에서의 남북한관계란 관계의 차단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교류와 협력을 통한 경쟁적 공존과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민족적 협동을 지향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남북한간에 불가침협정이나 관계정상화조약 같은 것이 체결되고 쌍방이 여기에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면 남과 북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가능한 한 동결시키고 그 외의 모든 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족적 분단의 고정화나 남북한 관계의 정체화가 아니라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교류와 협력은 공존적인 경쟁의 가열화를 가져올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정착에 반대하는 측은 이러한 공존적 경쟁을 통해 약점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평화정착을 기초로 하는 교류와 협력은 민족통일을 향한 민족의지의 구현을 의미하며 남북한간의 차단이 아니라 분단의 실질적인 종식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나. 평화정착과 전쟁방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화정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평화정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쟁재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민족간의 전쟁은 그 민족의 실체를 파괴하게 되고 민족적 동일체 의식의 형성을 불가능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겪은 1950년의 6·25전쟁에서 경험한 바다. 만일 그 당시 북괴의 남침에 의한 동족상잔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평화정착을 운운하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북괴가 그 동안 민족반역적 전쟁도발의 전죄를 누우치고 민족적 화합과 번영의 방향으로 노력해 왔더라

도 평화정착의 중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괴는 1970년 이래 우리가 제의해 온 각종의 평화지향적 방안에 대해 성실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쟁준비에만 광분해 왔으며, 우리가 남북대화를 위해 38선의 지상을 오가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지하에서 [터널]을 파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상원 외교분과위원회의 한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최근 군사력 증강은 그들이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전제하고 각종 공격용 무기가 생산 또는 도입되고 있으며, 중공이나 소련으로부터 재보급을 받지 않고도 전투의 강도에 따라서는 30~90일간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대부분의 전투사단들이 군사분계선에서 100[마일]이 내에 공격태세로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병력의 수와 화력 등 그들이 가진 전력도 문제이지만 그들 전력이 모두 대남 공격태세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욱 중요하며, 시간당 3,000~5,000명이 통과할 수 있는 두 개의 [터널]이 발견되었는데 더 발견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제 폭발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⁵²⁾

평화정착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인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800만의 인구와 전국 대학졸업자의 40~50%가 살고 있는 서울이 3분 이내의 비행거리와 「프로그 미사일」의 사정거리내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할 것이기 때문에⁵³⁾ 전쟁을 막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남북한간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불리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쟁의 발발자체를 막을 수 있는가에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전쟁은 그 승패간에 우리 민족의 실체를 파괴하고 급기야 민족적 화합의 가능성을 앗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첫째가 남북한간에 합의에 의해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가 우리 자체의 국방력을 길러 북괴공격의 실질적 가능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국방력의 증강문제는 본 주제의 성격상 이곳에서는 더 논급하지 않는다.

남북한간 합의에 의한 평화정착의 길은 남북한간에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는 일이다. 1974년 1월 18일 박대통령이 제의한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제의」는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을 하고, 상호 내정간섭을 하지말며, 여하한 경우에도 현행 휴전협

52)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S. Troop Withdraw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A Report by Senators Hubert H. Humphrey and John Glenn, January 9, 1978(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pp. 31~33

53) Evelyn Colbert, Special Assistant for Planning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Department of State, The Military Bala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ead at the Session of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pril 1, 1978.

정은 그 효력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자고 하고 있다.

이와 못지 않게 이 제의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평화협정보다 평화의사라는 점이다. 즉 「평화라는 것은 무슨 협정이다, 조약이다 하여 종이 한장에 서명했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사만 분명히 있다면 협정이 없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⁵⁴⁾ 라고 한 점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은 그들의 전 전력을 공격태세로 배치시켜 놓고 있으며, 미지상군의 철수가 완료되는 것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허점과 혼란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간에 평화가 정착되려면 가장 초보적인 것이지만 우선 상호불가침협정은 체결되어야 하며, 이것이 성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평화정착의 제도화의 시작인 것이다. 그 위에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 열강제국은 동서독간의 정상화 과정에서 보듯이 남북한의 대립을 자국의 이기적 정책목적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날 중공이나 소련은 남북한간의 긴장과 북괴의 호전적 자세가 이 지역전체의 평화구조에 가장 중요한 위협요소임을 알면서도 북괴에 대해 평화를 위해 유익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본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이 지역의 일반적 평화에 기여하려면,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평화지향적인 노력과 열강간의 평화유지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주에서의 안정이 「브란트」의 「동방정책」, 미·소의 「테탕뜨」, 그리고 1975년의 「전구안보회의」 등의 일련의 정책과 노력이 무리없이 진행되었고 각 유관국이 모든 조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해석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보면 중·소대립은 이 지역에서 서방측을 위해 노력균형의 유리한 전개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궁극적인 평화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을 본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한의 평화정착은 남북한 스스로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노력과 의사로서 이룩되어야 한다. 동맹국은 전쟁의 경우 협력자이고 평화의 경우 호의적 참관자이면 족한 것이다. 평화가 자주적으로 당사자의 충분한 의사표시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은 때로는 이름만의 평화인 것이다.

우리가 전쟁을 막아야 하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 전쟁의 경우 불의의 관여자가 있을 수 있고 기대했던 동맹국의 협력이 미흡하거나 과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 어떤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행을 초래하며 결국 민족의 독자적 발전을 저해하고 말 것이다.

54)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 제의」 1974. 1. 18 연두기자회견, 평화통일의 대도,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선집, 1976. pp. 152~153

평화가 정착되고 안정된 상태에서만이 민족적 불행의 가능성을 막고 자주적인 발전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다면 남북한간의 차원에서는 불가침협정의 체결로서 평화정착의 자주적 기초를 마련하고 휴전협정의 당사자 변경⁵⁵⁾으로서 한반도전체의 안정을 기하며, 나아가서 한반도 안정의 토대위에 동북아판 「전구안보회의」⁵⁶⁾와 같은 국제적인 조치가 있게 되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2. 교류, 협력과 남북대화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은 평화정착의 테두리 안에서 민족적 동일체의식과 동질성을 회복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남북대화는 교류와 협력을 유발시키고 발전시키며, 이를 관리하고 남북한간 의견을 조정하는 기능이라 하겠다. 이 기능은 전쟁상태가 종식되고 재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발휘되기 시작되며, 안정이 계속되는 한도내에서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대화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은 당사자가 전쟁의사를 포기하고 민족적 화합에 적극적인 의사가 없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리고 당사자가 여기에 실질적 의의를 느껴야 한다.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민족적 대동단결의 정신에 따라 인내와 성실로써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류와 협력은 우선 간단하고 초보적인 사항 그리고 인도적으로나 민족의 차원에서 기본적인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의 불가피성은 남북한이 과거 30여년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상태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이해를 위한 준비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한 허울좋은 제의 등은 그 자체가 허위임을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통의 영역이 형성되어 이것이 발전되는 경우 영토적 정치적 단일체제화는 민족의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단계에 가서는 영토적 통합과 정치적 단일체제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간에 민족공통의 영역이 생기고 커지는 경우 교류와 협력의 지속이 자기편에 다소 불리하다고 해서 이를 단절하고 다시 무력에 호소하는 편은 민족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지워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류와 협력이 남북한간에 생활화하고 제도화되는 경우 이것은 실질적인 민족통일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55) 29차 「UN」 총회에서 아츨 초안 또는 「키신저」의 4자회담안과 같은 종류의 것임.

56) "Final Act of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New Times 32/75 August, 1975. pp. 26~48

이와 같이 대화를 통해 교류와 협력이 제도화되는 경우 평화는 정착되고 거기서 교류와 협력이란 이름의 공존적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교류와 협력의 추진은 분단의 고정화와 민족통일의 발전에 정체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서 교류와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 노선의 추구가 민족적 자율성을 넓혀 주게 되는 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은 열강의 현상유지정책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평화정착은 열강정치의 한반도내에서의 존재이유를 희박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열강정치의 후퇴를 가져오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교류와 협력의 제도화를 통한 평화정착은 결과적으로 민족통일의 내실을 기하고 민족적 자주와 자율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민족적 자주와 자율의 확대는 동시에 국제적 협력과 국제평화에의 기여로 귀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주변열강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의 민족적 자주와 자율의 확대가 이해와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의 1973년 「6·23외교정책선언」의 중요성이 있다.

이 선언은 「조국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⁵⁷⁾」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다같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국제기관에 참여하여 국제적 협력과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경우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정착될 것이며, 이것은 또 이 지역안정의 관건이 되고 나아가서 국제적 관심은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은 민족분단의 영속화를 가져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UN헌장의 규정이나 실제에 비추어 근거없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UN헌장의 어떤 조항도 이미 가입한 회원국들이 한 나라로 통합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또 실제로 1956년에 「에집트」와 「시리아」가 통일 「아랍」 공화국으로 합쳤던 예가 있다.

UN헌장은 회원국이 평화적으로 합하거나 분리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UN헌장이 금지하는 것은 무력의 사용이나 위협이며, 회원국은 무력사용의 위협을 받거나 침략을 받을 경우 UN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은 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UN에 동시가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헌장의 조항이 그들의 대남전략을 실시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의 통일정책을 비판 공격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 「6·23선언」을 가장 격렬히 비판하는 이유는 상기와 같은데 이유가 있는 것을 보았다.⁵⁸⁾

그리고 우리가 공산제국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자세는 북한이 망상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고립화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겠다. 아직 공산제국은 우리의 문호개방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의 단계에서 각종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

57) 「6·23선언」문의 서두

58) 1973. 8. 28 김영주 성명의 태반이 「6·23선언」에 대한 공격임을 참조

는 것이 사실이다. 소련의 경우 한국인들의 회의참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단지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고 있기는 하다.⁵⁹⁾

1978년 6월 23일 박대통령에 의한 「남북간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⁶⁰⁾ 제의는 「남북동포의 복지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하나하나 착실히 다져나가자는 것」으로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이어서 동제외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도 국가간에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정치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하여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넓혀 나가는 것이 일반적 추세로 되어 있다」고 하고 『동쪽으로서…… 민족사의 장래를 내다 볼때 우선 남북간의 교역, 기술협력, 자본협력의 길을 트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쌍방의 민간경제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의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관계 각료회의를 가질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보면 경제교류를 위해 남북한간에 민간차원의 기구와 정부차원의 기구를 동시에 설치해서 교류와 협력을 확실하게 할 용의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것은 실질적인 민족적 재접합의 계기를 마련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성의있는 제의는 북측으로부터 상응하는 반응을 받지 못하였다. 북한측은 그들의 경제적 곤란⁶¹⁾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화해에 바탕을 둔 남북한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남쪽과 대등한 입장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한반도문제를 남북대화해 해결하는 것을 그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과도 합치할 것」이라는 민족애의 입장에서 박대통령은 1979년 1월 19일 대화의 문호를 열기 위해 국토를 평화적으로 재통일하기 위한 많은 합리적인 제안들이 북측에 의해 거부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제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어떠한 시기나 어떠한 장소에서나 또 어떠한 수준에서든지 남북한 당국이 서로 만나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을 막고 5천만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며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제반문제, 즉 그동안 남북한이 제시해 온 모든 분야의 문제들을 직접 논의하기 위해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⁶²⁾

이러한 포괄적인 제의에는 북측으로서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기적으로 1978년 후반에 일·중공간 우호·평화조약이 체결되었고 1979년 1월 1일을 기해 미·중공이 국교를 정상화하였으며, 1월말에는 등소평이 미국을 방문하게 된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59) 남북대화백서(서울 남북조절위원회, 1978), pp. 235~236

60) 상동서 pp. 305~308.

61) “북괴의 1979년도 예산내역과 경제계획의 수행실태” 시사정보자료(국토통일원 1979)제12집 pp. 8~16.

62) 1979년 1월 19일 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무반응 상태를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측에서는 1월 23일 소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전민족대회」를 제의하고 나섰다. 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란 단체는 북한 노동당의 통일전선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로서 남한에서 소위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존재이유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민족대회」라는 것이 바로 한국의 정당정부의 존재를 거부하는 이론에 입각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제의한 「당국자간의 회담」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1·19제의」를 사실상 거부하는 자세였다. 따라서 얼마동안의 소위 「변칙대좌」로서 다시 대화의 길이 막히게 된 것은 예측하지 못한 바 아니었다.

북한의 지배자들은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과정과 그 결과 및 대미접촉노력의 성과를 기다려 본 후에 달리 방도가 없다고 판단하기 이전에는 성실하게 남북대화에 응해 나올 것 같지 않다. 대미접촉의 가능성은 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며, 이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성숙해 갈 것인가를 당분간 기다리며 지켜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불확실한 단계에서는 대화에 응해 나오므로써 대가없이 우리의 평화정착 정책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사태는 끝까지 피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측이 우리의 대화요구에 언제 어떻게 응해 나올 것인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의 대북한태도가 점차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본다.

3.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

어느덧 남북한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평화통일」이라는 같은 낱말을 쓰고 있다. 그리고 「대화」나 「민족통일」이니 하는 경우도 같은 사정이지만 같은 낱말을 쓰고 있으나 그 의미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사정은 주지되고 있다.

특히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남북한간에 아직도 기본적으로 상이한 입장에서 쓰여지고 있으며, 오늘날 남북대화가 진행되지 못하는 기본적인 이유도 이 「평화통일」에 대한 개념의 대립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평화통일」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가. 북한의 소위 자주적 평화통일의 의미

자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북한측의 최근의 발설은 1978년 9월 9일 북한의 공산정권수립 30주년 경축대회에서의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연설을 들 수 있겠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에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공산주의 사상을 강요하지 않는다.……우리는 또 남조선의 어떤 정당이 공화국 북반부에 와서 협상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하여 환영할 것이다.……」라고 하여 통일전선전략의 마각을 가능한 한 숨기고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김일성은 이어서 같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와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진심으로 합작을 하려고 한다면 민족 분열정책을 통일정책으로 바꾸고 반공정책을 연공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여기서 명백한 것처럼 그들은 공산주의를 버릴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남쪽을 향해 공산주의에의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 북측은 이렇게 「대화」를 분명히 공산주의에 굴복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도 「대화」란 의미에 있어서 우리와 정면으로 대립되고 있음을 본다. 반공을 연공으로 바꾸라고 하고 있는 것은 반공이란 용어에 저항을 느끼는 일부 인사의 구미를 자극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어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담보는 민족의 대단결이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남조선 사회를 「민주화」하지 않고서는……민족의 단합을 이룩할 수 없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방도를 모색할 수 없다. 남조선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반공법·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과쑈」악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하기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북측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남한에서 북한의 공산주의체제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해 주기를 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등장하여 이 정권과 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어서 그는 『「통일혁명당」을 비롯하여 지하에 있는 정당들도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해외에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 단체들과 애국인사들도 자기의 의사대로 남조선에 들어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남조선인민들은 사상과 신앙,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불문하고 해내외의 민주주의 역량과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단합되고 조직된 힘으로 「과쑈」독재세력과 투쟁함으로써 반드시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설명할 여지도 없이 남한에서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특히 유명단체인 「통일혁명당」을 비롯한 내외 각종 친공단체들을 합법적으로 활동케 하라는 것이다. 설혹 우리가 북한의 침략적 태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미식 자유에 부분적인 유보를 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들을 최대한으로 악용하려는 기도이며 이로서 남한에서 소위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달성을 꾀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미국은 두 개 조선을 조작하여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를 계속하며, 나아가서 전조

선을 먹어보려는 침략적 야망을 버려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하루빨리 완전히 철거시켜야 한다.……우리는 이미 미국과의 협상을 제의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우리는 미국이 우리 나라를 두 개의 조선으로 갈라 놓으려는 그릇된 입장을 버리고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올바른 자세로 나온다면 어느 때든지 미국과 회담을 열 것이다」⁶³⁾ 고 하여 소위 자주적 통일이 남북한의 민족적인 차원의 자주가 아니라 미국이 북측에서 원하는 통일을 묵인 또는 지지해 주기 바라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미군철수란 이름으로 한미안보유대를 단절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과도 관계를 열어 일방적인 한국지시 정책을 수정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대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체제가 북한의 체제에 굴복할 것을 꺼리지 않는 체제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이란 이름으로 남한을 합병한다는 뜻임이 명백하다.

다음에는 1949년 6월 28일 북한이 이른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전」)을 결성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때 편리한 대로 통일문제를 전략적으로 평화통일이란 이름으로 제시해 온 제 방안들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1946년부터 1947년까지 한반도의 남과 북에 진주한 미·소 양군의 대표로 구성된 바 있던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제기되고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세력만이 찬성했던 신탁통치가 그들의 최초의 「평화통일」안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그들이 정권을 수립한 이후의 것을 보기로 한다.

상기 「조전」을 결성하면서 그들은 8개 항목의 이른바 「평화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① 스스로의 힘에 의한 평화적 통일 ② 1차적으로 미군과 UN한위의 즉각철수 ③ 1949년 9월 15일 남북조선 지역에서 동시선거로 「조선공화국」수립 ④ 선거목적 보장을 위해 남조선에서 「민주적」정당·사회단체 탄압중지 ⑤ 남북조선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주적 정당·사회단체」들간의 연석회의를 열어 이들 대표로 구성되는 선거위원회를 구성, 남북조선의 기존정부들에 대해 선거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한다. ⑥ 남북조선 군대의 통합⁶⁴⁾ 등으로 되어 있다.

이 항목내에서도 「남조선에서 민주적 정당들에 대한 탄압중지」는 북쪽에서는 탄압이 없는데 남쪽에서만 탄압이 있다는 허구 위에서 출발하고 있고 또 ⑤항에서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주적 정당·사회단체」가 선거에 관해 남북의 기존정부에 필요한 지시를 한다고 함으로써 선거도 실시하기 전에 「평화통일」을 바란다는 이들의 정당, 즉 공산당과 거기에 동조하는 정당과 단체가 사실상 남북조선을 관리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실시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항목에서도 전제조건들이 붙어있다. 즉 『남조선의 경우 「반인민적」 정당·단체 인사들과 1948년 남조선에 있었던 「인민선거」를 탄압한 자들은 새 정부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빨치산」운동을 탄압하는데 참가한 남조선의 국방군은 해산되어야 한다』⁶⁵⁾ 는 등이다.

63) 김일성의 1979년 9월 9일자 연설문 참조

64) 「북한전서」(극동문제연구소, 1974), 하권, p. 43

이렇게 보면 이 「조전」의 소위 「평화통일」방안은 1948년 5월 30일 총선거를 통해 수립되어 UN으로부터 「유일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대한민국 정부에 참가했거나 또는 이를 지지하는 정당·단체인사들은 그들이 실현하려는 통일정부수립에서는 배제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그후 거듭되는 여러 가지 제안의 기본이 되고 있다. 가령 1950년 6·25남침을 18일 앞둔 6월 7일, 그들은 같은 「조전」명의로 「호소문」을 통해 「평화통일」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통일된 최고입법기관의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8월 5일~8일 사이에 조선 전역에서 실시하고 여기서 구성된 입법기관은 8월 15일 서울에서 첫회의를 소집한다.
- ② 6월 15~17일 사이에 개성 또는 해주에서 남북조선의 전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협의회를 소집, 여기서 평화통일에 필요한 수속과 절차를 협의한다.
- ③ 단, 남조선의 이승만, 이범석, 김성수, 신성모, 조병옥, 채병덕, 백성욱, 윤치영, 신흥우 등 「민족반역자」와 남조선의 정당·사회단체중에서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은 협의 참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UN한위의 간여는 배제되어야 한다.⁶⁵⁾

이 제안은 6·25남침을 18일 앞두고 퍼낸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주요정치지도자들을 지적해서 배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들을 일반국민으로부터 소외시키려는 전술을 쓰고 있고 소위 협상이라고 하면서 주된 상대자는 합법적 정권당국과 실력자를 배제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북측의 보다 폭넓은, 그리고 보다 정략적인 「평화통일」 제안은 한국에 4·19학생의거가 나자 이를 계기로 남한을 내부로부터 와해해 보려는 기도로 제시된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8·15경축사였다.

여기서 북측은 오늘날까지 기회있을 때마다 제기되는 소위 연방제를 제외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남조선의 현 사태를 바로 잡고 조선문제를 중국적으로 풀기 위한 오직 하나의 길은 미국군대를 내쫓고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데 있다. 우리 조국의 평화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반」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만일 남조선측이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과도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대책으로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외한다.

우리가 말하는 연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

65) New Times No. 29(July 13/1949) p. 18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9. 1949 본 논문에서는 상계 「남북대화백서」 p. 179의 중인

66) 상계 「북한전서」 하권 p. 44

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김일성의 연방제란 다른 아닌 두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이며 이것은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고 있다. 흥미있는 현상은 바로 이 연방제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설치키로 합의한 「남북조절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어서 김일성은 경제교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조선의 수백만 실업자들과 빌어먹는 어린이들의 비참한 처지를 우려하며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남조선동포들의 내일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근심한다면 그 누구도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와 경제적 협조를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남조선 당국이 우리가 내놓은 연방제까지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남북조선의 실업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순전한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하여 남북사이에 물자를 교역하며 「경제건설」에서 서로 협조하고 원조하도록 할 것을 제의한다.……같은 조선사람끼리 모여 앉아 협의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무엇때문에 우리나라 땅인 판문점에서 우리나라 문제를 가지고 북반부 사람들이 미국놈들과 계속 담판해야 하는가……미국놈들은 물러가야 하며, 조선문제는 조선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협의해야 한다……』

여기서 보면 설혹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남조선 동포들」을 위한다는 구실은 있으나 경제교류와 경제협조를 위해 실업계대표로 구성되는 「경제위원회」를 제의한 것은 1978년 6월 23일 우리가 제의한 「남북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제의와 비슷한 어구가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당시 그들이 정략적으로 서슴치 않고 써온 어구들이 2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게 되니 그들은 이들 어구들을 철회하고 말았으며, 오늘날 오히려 우리쪽에서 쓰게되는 어구로 변하고 말았으니 이것은 사태의 역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독이 19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동서독이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 국가연방안을 제시하고 재통일과 민주적인 민족회의를 위한 선거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고 또 1957년 2월 3일 「울브리히트」(Ulbricht)는 독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동서독 동수의 대표로 구성되는 전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한 적이 있다.⁶⁷⁾

이러한 동독이 오늘날에 와서는 예컨대 1974년 동독은 헌법을 개정하고 지금까지의 독일민족(Deutsche Nation)이란 용어도 쓰지 않으며 사회주의민족(Socialistische Nation)이라 불려 서독의 자본주의 민족과 구별하는 데까지 변하고 말았다. 서독은 아직 「일민족 이국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동독은 서로 다른 「두 민족 두 국가」의 입장으로 오무라들고 말았다.

67) "동·서독관계의 현황과 전망" 윤근식 「군민회의보」, 1979. 제25호 pp. 42~47

이러한 예에서 본다면 북측에서 연방제 운운의 말조차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북측은 지금 1973년 6월 23일 발표한 소위 「평화통일 5대강령」을 토대로 해서 여전히 통일전선 전략을 펴고 있다.

이 주요 내용은 첫째로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란 이름으로 미 제7사단이 1971년 철수하고 1973년 1월 하순 월남평화협정이 체결되고 6개월내 미국군이 인지로부터 전면철수하게 된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미군의 완전철수를 가져오고 그 뒤 남북한간에서 그들의 우세한 군사력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기도였다.

한편 그들은 대화진행과 더불어 파놓은 땅굴이 발견되자 「남조선에서 인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박해받는 애국시민을 북으로 피난시키기 위한 통로로 판 것」⁶⁸⁾이라느니 「우리와 상관없고 남조선지역에서 발견되었으니 남조선측이 판 것」⁶⁹⁾이라느니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면 「군사적 대치상태와 긴장완화」란 미군철수후의 아측의 군사적 약세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둘째로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북과 남 사이의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치·군사·외교의 합작이란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일으로 진전이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으며, 경제·문화의 교류와 합작은 초보단계로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각 방면은 「동시일괄」의 「합작」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점진적 교류와 협력방법을 반대하여 대화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한편 그동안 서울서 있었던 각종 문화 체육행사에 북을 초청해도 오지 않았으며, 1973년 8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 대표가 참가하자 그들은 불참하고 말았다.⁷⁰⁾

그리고 1971년 4월 12일 북한외상 허담이 소위 「8개항목 평화통일방안」을 보고하면서 먼저 연방제를 제의하고 「남조선당국이 이러한 과도적 조치(즉 연방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조치로 오랫동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부모, 처자, 친척, 친우들간에 서로 안부라도 전하고 면회라도 하게해야 한다……」고 해 놓고 막상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려 아측이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게 되자 「우리 나라의 인도주의 문제는 조국의 분단에서 결과된 것이므로 조국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적십자는 이를 위해 노력을 다 바쳐야 한다」⁷¹⁾고 본말이 도착된 입장을 취함으로써 인도주의 사업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말았다.

68) 「북괴 제3땅굴 호도에 급급」 한국일보, 1978년 11월 11일자

69) 조선일보, 1978년 10월 28일

70) 상기 「남북대화백서」, p. 190.

71) 「이산가족백서」(대한적십자사, 1976), pp. 351~352

세째로 「대민족회의 소집」 주장이다. 『북반부의 노동자, 근로농민, 근로 [인테리], 청년학생, 병사들과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을 대표하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로 대민족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명백한 것은 한국측 대표단의 구성원칙과 방법을 김일성이 규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계급관에 따라 선발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북측의 요구에 따라서 국민의 일부는 이 회의에 대표를 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1946~47년 당시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은 건국협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했던 미·소공동위에서의 소련측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1974년 1월 30일 남북조절위 제3차 부위원장회의에서 북한측 부위원장 유장식이 남북조절위를 실질적으로 소위 대민족회의로 변질시킬 것을 기도한 이른바 「남북조절위원회 확대 개편에 관한 제안」을 한바 있다. 그는 「대민족회의」 또는 「남북정치협상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5명이상의 당국대표를 비롯하여 각기 60~70개의 동수의 정당·사회단체에서 그 규모에 따라 5~20명씩의 대표, 그리고 각기 동수의 각 계층 인민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 회의의 구성원은 최소 350명 최대 1,500명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온다.⁷²⁾

이러한 수의 회의에서 남북한의 까다로운 통일문제를 협의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리고 네째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자고 하고 있으나 이 연방제의 실시는 상기한 「대민족회의」의 소집을 통해서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불가능한 것이다. 설혹 연방제가 대민족회의와 관계없이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기된 1960년에서 1973년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된 안이 없으며,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연방제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도 일관성있는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고려연방공화국이란 단일국호로 UN에 가입하자고 했는데 첫째로 국호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은 성실치 못한 태도이며, UN에 동시가입하면 민족분단이 영구화한다는 허위에 입각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보면 북괴의 이른바 「평화통일」은 먼저 남한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공산화혁명이 일어나서 이 「혁명」정권과 북한이 이른바 「평화통일」방안을 토대로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참된 평화통일의 길

이상에서 북측은 소위 「평화통일」이 남조선혁명 노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노선을 수정 포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남북대화에 의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72) 「남북대화」(서울, 한국홍보협회, 1974년 2월), 제4호 pp. 23~24

다. 이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한 평화통일의 길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리의 평화통일 원칙은 1974년 8월 15일 박대통령의 「평화통일 3대원칙」에서 명백히 되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의 통일의 길은 첫째로 평화통일이요, 둘째로는 자주통일이며, 세째는 민주통일이다.⁷³⁾ 이를 차례로 보기로 한다.

먼저 평화통일이다. 1970년의 「8·15선언」에서 박대통령은 「국토통일이 아무리 절실한 민족의 지상명령이라 하더라도 동족의 유혈을 강요하는 전쟁만은 피해야 하겠고 통일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꾸준한 인내와 최대한의 양식을 발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지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동족의 유혈을 통한 통일은 아무리 훌륭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다. 항상 북한공산집단이 그들의 적화야욕을 채우기 위해 「민족통일」 「민족해방」의 미명아래 저질러 질 동족의 상잔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지되어야 한다.

둘째로 자주통일이다. 자주통일은 평화통일의 경우 가장 안전하게 달성된다는 것은 전장에서 지적인 바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위로 보아 무력통일이나 무력분쟁은 필시 주변열강의 개입이나 간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오늘날 중·소와 동맹을 맺고 있다. 물론 우방의 선의의 조언이나 중재를 거부할 필요는 없으나 가능한 한 제삼자의 간여없는 상태에서 자주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민족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 민주통일이다. 주어진 현실에서 솔직히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통일의 길은 남한주도하의 통일이나 북한주도하의 통일이나의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어느쪽이 민족의 행복을 위해 보다 나은 체제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보다 나은 체제하에 통일이 될 때 민족의 발전과 행복은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현재의 상황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꾸준히 변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입각한 정치·사회·경제체제를 통한 민족의 통일만이 우리의 장래의 발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며, 이것이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북한의 김일성일가의 전체적 전체주의에 의한 전 한반도의 정복은 민족의 앞날에 암흑을 가져오며 급기야는 민족의 실체를 말살하게 될 것이다.

19세기 중엽 전체주의적인 「프러시아」에 의한 독일통일이 1,2차 세계대전을 유발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예는 우리 민족에게 남북한 어느 체제에 의해 통일이 되어야 민족의 발전과 행복증진에 기여할 것인가를 스스로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73) 박정희대통령 「민족중흥의 길」 (서울 : 광명출판사, 1978년 9월), pp. 161~177

이상에서 보면 남북한간에 평화가 정착되고 대화를 통해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 발전되는 단계를 지나 전민족의 성원이 자유로이 선거를 통해 남북한의 체제를 평화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족의 진정한 평화통일이 달성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쟁의 재발이 방지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단계 남북한관계의 현실이라 하겠다.

아울러 이번에 제의된 「3당국회의」는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소견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3당국회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되어야 될 것이다.

첫째로는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종래 주장해 온 남북당국간회의의 연장으로서 평화, 자주, 민주통일정책의 연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해석이다.

그 다음에 미국측으로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는가?

첫째로, 미국측이 금번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공동제안국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미국은 대한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원한다, 안보를 보장한다, 하는 것이 정책의 일률적인 원칙이었다.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하나의 남북한관계 문제에서 제3자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이번의 우리 성명에 미국이 제3자로 등장한 것은 우리와 같이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통일문제에 간여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하튼간에 그동안에 남북한간의 문제였던 것이 이번에 남북한이 아닌 미국이 끼어든 것은 남북한관계하에서 새로운 차원의 등장이라 하겠다.

그러면 왜 미국이 이 시기에 여기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시기적인 면을 본다면 우리에게 「발트하임」 UN사무총장의 역할내지는 개입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주지된 바와 같이 한국은 2차대전 이후에 미국의 독점적인 영향권하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설혹 한국전쟁에 의해서 UN군이 창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UN이 창설된 이후에 최초로 국제연합군이 한국에서 전쟁을 치루었으나 UN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토록 UN군이 1950년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근 30년동안 한반도 UN사무총장이 UN기가 휘날리는 한국에 한반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UN의 이름으로 한국의 문제는 미국에 맡겨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UN사무총장이 여기에 뛰어든 사실은, 미국의 이러한 한반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하나의 이단적인 사태의 진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시기와 관련해서 미국이 여기에 공동제안국으로 등장한 시기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국내적인 이유와 대외정책면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국내적인 이유로서 본다면 첫째로 지금 미국정부의 한국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철수문제이다. 이 철군문제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미행정부는 이 철군문제로 국내외에 찬반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 「카터」 행정부로서는 철군문제가 이 이상 더 국내외 정치 「이슈」로 남아 있는 것이 자기들에게 대단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군 「이슈」를 이 「3당국회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물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국의 통일을 돕기 위해서 「3당국회의」를 제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년의 선거를 앞둔 「카터」의 입장에서 본다면 「카터」가 하는 일에 찬성도 있고 반대도 대단히 많은 철군 「이슈」를 끊어 버리고, 이것을 물어버릴 수 있는 당국회의안이 여기서 상당히 묘약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이 「3당국회의」가 한국과 공동으로 제안되었다는 사실에서 거의 모든 목적은 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3당국회의」가 실제로 열리느냐 안열리느냐,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그리 급한 문제도 아니고 그리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3당국회의」가 열려가지고 잘 되면 남북한끼리 맡아서 하는 일이고 잘 안되면 안된 책임은 북한이 첫째로 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게 그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3당국회의」를 제안했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을 이미 2/3이상 달성한 셈이다.

또한 「3당국회의」의 제안은 다분히 「캠프 데이비드」 회담때 미국내에서 떠돌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이미지」를 미국 사람들에게 다시 연상시킴으로써 평화수립의 명수로서 명성을 확립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3당국회의」가 성공되는 경우 작년 가을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상황이 미국의 전체 「텔레비존」에서 방송이 되고, 미국 상하 양원에서 연설을 하고 호응을 하는 광경이 미국 전역에 방영되어 미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인상은 대단히 컸다.

이렇게 본다면 「카터」 행정부로서는 「3당국회의」를 제안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철군문제가 미국내 정치 「이슈」화 되어 있는 것을 말소시킬 수 있다면 이 제안자체로서 미국으로서는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대외정책적인 면에서 이것은 국내정치 「이슈」로서 철군문제를 물어버리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첫째로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중공과 화해, 다시 말하면 중공과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사실의 연장으로서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한을 미국의 손이 닿지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반드시 미국에 이익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중공과 연결되어 있는 다리를 평양으로 연장시키는 것이 미국에게 손해될 것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에는 이 「3당국회의」안이 성립되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군은 1982년에 가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며, 만일 「3당국회의」가 성공하는 경우에는 미군철수를 예정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철군을 반대하는 사람

들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편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북한은 여기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이것을 짐친다는 것은 대단히 우스운 이야기지만 「3당국회의」 제안을 받은 북한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종래 소위 3자회담, 그 들나름 대로의 3자회담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고 있다.

3자회담이라는 것은 북괴가 미국과 단독 평화조약을 하자는 데 대한 미국측 대안으로서의 3자회담이 아니었던가, 그것이 「티토」나 「초우세스쿠」에 의해서 수정된지는 모르겠으나 이 3자회담의 기본은 북괴가 미국과 단독회담하자는 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3자회담이었다.

이 3자회담에 대해서는 북괴는 북괴 나름대로, 북괴관 3자회담이 있다.

그것은 허담이 1977년 「뉴욕」에서 열렸던 비동맹외상회담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과 북한이 먼저 회의를 열고 적당한 시점에 한국의 참여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북괴관 3자회담인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서방측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얻어야 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미국이 여기에 한국문제를 둘러싼 대화의 상대자로서 명백히 등장했다. 어쨌든 미국이 한국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대화의 상대자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북한에게 중대한 고민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전면적으로 거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 이 제의에 응할 경우, 북한관 3자회담의 방법이 미국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구실하에 응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 3당국 대표회의가 북한의 전략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당국회의에 대한 의제제안의 방법으로 이 「3당국회의」를 자기들 목적으로 끌고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회의에 대한 의제제안은 한국도 할 수 있고 미국도 할 수 있으며 북한도 독자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로 「3당국회의」가 그 「시밀러」가 북괴에게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의제를 제안함으로써 이것을 자기들 몸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

의제제안의 경우에는 역시 미군철수문제를 포함한 휴전협정문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의제이고, 여타 나머지 통일문제는 「남북한간의 의제이다」 하는 식으로 제안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서로 이 휴전문제를 가지고 모이는 회의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분과위원회를 두 개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휴전문제를 다루는 회의에 우리측에 동일한 자격으로 참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회의초기에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전략상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러한 변을 앞으로 한 두번쯤 당하더라도 장기적인 면에서 평화정착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초보적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북대화 제22호

(1979. 8 ~ 1979. 10)

< 목 차 >

제1부 평화통일의 진로	3
1. 박대통령, 광복절 제34주년 경축사	3
2. 외무부, 「6·23선언」 6주년 성명	6
제2부 「3당국회의」의 제의와 내용	9
1. 「3당국회의」 제의의 배경	9
2. 「3당국회의」 제의의 내용과 의의	11
3. 북한측의 거부반응과 저의	14
4. 「3당국회의」와 「3자회담」의 차이	18
가. 「4자회담」과 「6자회담」	18
나. 「3자회담」의 대두	19
다. 「3당국회의」와 「3자회담」	21
제3부 남북대화소식	31
〈남북조절위원회〉	31
1. 서울측, 7·4성명 7주년 성명	31
〈남북적십자회담〉	33
2. 한적, 「8·12 제의」 8주년 맞아 총재성명	33
3. 한적, 적십자회담 대표·자문위원 개편	39
4. 북적, 한적의 대화재개 촉구를 또다시 외면	40
제4부 자료편	44

제1부 평화통일의 진로

1. 박대통령, 광복절 제34주년 경축사

박 대통령, 남북한당국 대화를 재촉구

1979년 8월 15일 광복 34돌을 맞이한 경축사를 통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아무리 통일이 절실한 겨레의 소원이라 해도 우리는 전쟁이나 무력에 의한 통일은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이 기회에 북한측이 남북적십자회담에 되돌아오고 남북한 당국회담이든 3당국회의든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응해 올 것을 다시금 촉구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돌이켜 볼 때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여 함께 기쁨을 나눌 사이도 없이 국토가 양단 되는 비운을 겪으며 미증유의 동족상잔을 치루었던 한 민족은 오늘도 조국의 분단과 남북한의 긴장 고조를 가슴 아파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 분단이라는 민족적 비극으로 이산의 고통을 되씹으며 재결합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1천만이 넘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려는 우리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무성의로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적십자회담은 한치의 진전도 보지 못한 채 오랫동안 중단되고 있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남북대화를 향한 온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은 무산되고 말았으며 그것도 어언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북한측은 한편으로 남침 땅굴 굴착을 비롯한 각종 대남도발을 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가 하면 「고려 연방제」나 「대민족회의」나 하며 남북간당국 회담을 거부, 일체의 대화의 통로를 끊어 놓고도 오히려 제3자인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등 직접협상을 주장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을 외면하며 갖가지 왜곡선전술책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대내적으로는 30여년이라는 국토분단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민족사를 고의적으로 날조하여 사상과 정치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언어, 종교, 예술,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이질화를 심화시켜 오고 있는 것이다. 즉 모든 관습과 제도, 생활양식은 오직 김일성 유일사상에 맞도록 개조함으로써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이 하나하나씩 말살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들은 민족사를 이른바 유물사관에 맞추어 뜯어 고치고 폐쇄적인 교조주의에 모든 사물을 억지로 부합시켜 남북간의 민족적 전통의식을 완전히 왜곡 말살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이같은 오늘의 남북 관계의 서글픈 현실을 직시할 때, 금번 박대통령이 책임있는 남북당국간의 대화를 북한측에 거듭 촉구한 것은 우리가 걸어온 평화 통일의 대도를 재천명한 것이며 이 또한 통일 문제를 『한반도 문제는 한민족 스스로의 노력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

해 자주적이며 민족적 화합의 원칙에서 해결』하려는 한결같은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깊은 의의가 있다 하겠다.

박 대통령의 광복절 제34주년 경축사 중 남북 대화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개탄스러운 일은 민족과 국토가 갈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문화의 전통을 거역하고 거래의 번영과 행복을 방해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은 대남 무력적화의 허욕을 버리지 못하고 군비증강에 혈안이 되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 일대에서 남침용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들은 어선으로 위장한 무장간첩선을 남해안 깊숙히 침투시켜 도발해 온 것을 우리 군경이 추격 격침한 바 있습니다.

6·25때 저지른 엄청난 민족적 죄과의 재범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남북대화제개를 촉구해 온 우리는 금년초에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간 대화를 제의했고 최근에는 3당국 회의를 미국과 공동 제의한 바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대미 평화협정 운운하면서 만전만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25 남침전쟁을 도발했을 때 북한공산집단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합중국을 공격했단 말인가? 나는 준엄히 그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명백히 우리 대한민국에 가해진 그들의 기습적 무력공격으로서 처절한 6·25동란은 일어났고, 그 후 벌써 한 세대에 가까운 불안정한 휴전상태가 남북간에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평화 정착 체제로 전환시키고 더 나아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할 이 마당에 북한측이 우리와 대화하고 협상하지 않겠다면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를 과연 그 밖의 어느 누구와 이야기하고 해결하자는 것인지 그 음흉한 저의를 다시 한번 캐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산 가족의 재회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인도적 제의에도, 남북한 동포의 민생과 번영을 위한 경제교류제의에도 거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 대화는 않겠다면 결국은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그들의 저의를 스스로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아무리 통일이 절실한 거래의 소원이라 해도 우리는 전쟁이나 무력에 의한 통일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간에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를 통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며칠전 우리가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8주년에 즈음하여 오랫동안 중단된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회담재개를 북한측에 거듭 촉구한 것도 대화를 위한 우리의 충정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북한측이 남북적십자회담에 되돌아오고 남북한 당국회담이든 3당국회의든 우리의 대화제의에 응해 올 것을 다시금 촉구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있는 당국간의 책임있는 대화가 성립되어 먼저 이 땅에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국제조류의 대세도 평화를 원하는 편에 있을 뿐 아니라 막강한 우리의 국력이 전쟁모험주의를 분쇄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 통일의 길을 열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국론을 하나로 집약하고 유비무환의 자주국방태세를 견지하면서 끈질긴 인내로서 자주, 자립, 자위의 국력 배양에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2. 외무부, 「6·23선언」 6주년 성명

외무부 성명, 「남북 당국 대표간 대화를 인내로 모색 노력」

외무부는 1979년 6월 23일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6주년을 맞아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이 아직도 남북 대화에 부정적 자세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남북한 당국 대표간의 대화 개최를 위해 인내와 창의력을 가지고 여러가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발표 6주년에 즈음한 외무부 대변인 성명 >

오늘은 6·23 평화외교정책을 발표한지 6년이 되는 날이다.

6·23 선언의 주 목적은 우리의 평화외교의 기본정신을 재천명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평화통일축진을 위한 남북 대화의 재개와 공산권에 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호개방에 있었다.

1973년 6월 23일 이와같은 새로운 외교정책을 발표한 이래, 우리의 외교는 이 정책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많은 진보를 기록하였다.

첫째, 우리 나라와 우방들 간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간 현저히 심화되었다.

둘째, 비동맹권에 속하는 다수국가가 우리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게 되어 경제, 외교, 문화면에서 한국과 비동맹국과의 관계는 현저히 개선 강화되었으며

셋째, 동구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래의 절연 상태에서 서서히나마 접촉이 싹터서 간접 교역, 스포츠 문화행사 및 국제회의참가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실리 위주의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필요한 남북대화의 재개 및 남북교류 분야에 있어서는 북한측의 비합리적인 태도로 인하여 별로 진전이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금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각하의 새로운 제의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가장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당국대표간의 대화를 기피하는 북한의 구태의연한 자세 때문에 남북대화의 문은 그대로 닫혀 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판문점에서 삼차에 걸친 남북간 접촉을 가진 후 3월 28일 우리측 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1.19제의에 따른 남북한 당국대표간 회담의 문호는 항상 열려 있다고 우리의 입장을 명

시한 바 있다.

평화를 애호하는 여러 우방들 뿐만 아니라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아직도 북한의 부정적인 자세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으나 우리는 남북한 당국대표간의 대화개최를 인내와 창의를 가지고 여러가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발표의 제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동 선언에 포함된 모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평화외교와 평화 통일에 대한 꾸준하고 진지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지난 1973년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공산권 국가들에게까지 문호개방을 천명했던 「6·23선언」은

- ① 민족의 지상 과업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 ② 상호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하지 않는다.
- ③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 성실과 인내로서 계속 노력한다.
- ④ 긴장완화와 국제 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국제기구에 북한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
- ⑤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유엔」에 북한과 함께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 ⑥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모든 국가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 ⑦ 대외정책은 평화 선린에 기반을 두고 우방과의 기존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신축성 있고 유연한 외교자세로서 그 보편성을 인정받아온 우리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인 것이다.

「6·23선언」은 일반적인 국제 정세가 봉쇄와 대결에서 긴장 완화와 「데탕트」를 추구하고 양극화 시대에서 다변화 시대가 되어 버린 오늘날의 국제적 조류에 가장 부합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는 북한측에 대화의 광장의 문을 활짝 열고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제시해 왔던 것이다.

즉 우리는 「1·19 남북당국간대화제의」를 비롯하여 「남북한 경제협력촉진민간기구구성 제의」, 「대북식량원조제의」, 「남북고미술품 및 고고학자료의 교환전시회 제의」등 평화 통일을 겨냥한 실현성 있고 구체적인 남북 교류 방안들을 제시하여 우리의 성실성에 대하여 국제 여론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의 평화통일 제의를 거부하고 남북대화마저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대미협상같은 정치선전 목적에만 치우친 제의를 되풀이하는 등 비합리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며, 남북당국 대표간의 대화개최를 위해 인내와 창의로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시 다짐한 것이다.

제2부 「3당국회의」의 제의와 내용

1. 「3당국회의」 제의의 배경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측이 1973년 8월 28일 일방적으로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도 그들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여 온 노력은 평화적인 조국 통일을 갈망하는 남북의 5천만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한 의지이며, 또한 한반도의 주변열강과 국제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북 쌍방은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약 1년간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의 두갈래 대화를 진행시킴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남북대화에 대한 열망을 불러 일으켰으나, 1973년 8월 28일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측의 대화거부로 남북 대화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또다시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화의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1979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은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장소 그리고 수준에 구애됨이 없이 남북의 당국이 서로 무조건 만나 대화를 갖자고 북한측에 제의하였던 것이며, 이는 오늘의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다시한번 과시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책임있는 당국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북한 노동당의 일개 전위 조직에 불과한 소위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이라는 사회단체를 내세워 「전민족대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대화가 아닌 군중대회식의 「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인사들의 협상」을 개최하자는 책략으로 대응해 나옴으로써, 오늘날까지 우리의 책임 있는 당국간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 결과 1979년초 판문점에서 북한측의 소위 「조국전선」대표들과 대한민국의 남북조절 위원회 서울측 대표들 사이에 세차례의 대좌가 이루어졌으나, 북한 측의 무성의로 끝내 이른바 변칙 대좌로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접촉 과정에서 북한 측이 보여준 자세는 역시 변함없이 남북대화를 종래 그들이 고수해 온 혁명주의 노선에 이용하겠다는 저의를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던 것이다.

즉 그들의 기본자세는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향한 현안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촉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조성하려는 북한측의 상투적인 통일전선전술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이었다.

더구나 북한측은 남한혁명의 방편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노리며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과정에서도 북한측은 ① 한반도의 적화 통일에 기본 장애물로 보고 있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제외시키고 직접 미국과 소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② 통일문제는 어느 「정권」이나 「당국」이 독점할 수 없다는 구실을 내세워 남북의 이른바 정당, 사회단체들 사이에 협상론을 내세워 이의 관철을 고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외면한 허구이며 더 나아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북한측의 남북적화혁명노선과 대화 부정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대화재개 노력은 아직까지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에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이 대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측이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혁명주의 노선을 하루 빨리 포기하여야 하며, 또한 서로 합의한 사항을 책임 있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책임 있는 남북의 당국대표」들이 회담장에 마주 대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가 지녀 온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대외적으로는 대미 평화 협정 체결을 내세워, 통일 문제의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 해결을 거부하고, 또한 대내적으로는 정당, 사회단체의 접촉과 「전민족대회」를 고집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회담을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에 따른 공동성명에서,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대화의 촉진을 위해 새로이 「남북한·미 고위당국대표 회의」를 제의하였던 것이다.

2. 「3당국회의」 제의의 내용과 의의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 미국 대통령은 1979년 7월 1일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당국대표회의의 개최를 공동제의함으로써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는 바, 동 제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중 관련 조항>

<제10항>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박대통령은 북한 당국과의 생산적인 대화 재개를 위하여 1979년 1월 19일자 제의를 비롯한 한국정부의 최근 노력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카터」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박대통령에게 확약하고,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간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제11항>

한반도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회담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대화의 촉진과 긴장완화를 위한 명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결의의 증거로서 박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은 대화의 촉진과 이 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당국대표회의 개최를 제의하기로 공동 결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고 또한 개최되기를 희망하는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양국 대통령은 한국 외무부장관 및 미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방식으로 북한 외상에게 이 뜻을 공동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제12항>

양국 대통령은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박 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에 직접 발표한 정책에서 친명한 바와 같이 한국이 대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성있게 추구하고 있음에 유의하였다.

<제13항>

「카터」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동맹국들이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확대시킬 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언명하였다. 카터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주요 동맹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지도 않고 평화를 증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유념하였다.

<제14항>

양국 대통령은 궁극적인 통일에 앞선 잠정조치로서, 남·북한이 공히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남·북한 양당국에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많은 대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과 같이 한·미 양국의 두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게 되었고, 그러한 결의의 증거로서 남북대화의 촉진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3당국회의」의 개최를 공동 제의한 것이다.

그러면 「3당국회의」는 어떠한 의의와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첫째, 「3당국회의」 제의는 북한측에 의해서 중단상태에 빠진 남북대화의 재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제의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3당국회의」 제의는 남북간에 진행되어오던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의 대화 「채널」을 북한측이 돌연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최근 남북당국간의 무조건 대화를 제의한 획기적인 「1·19제의」마저 북한측이 기피함으로써 남북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남북당국간 대화를 이룩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3당국 회의」에는 비록 미국의 대표도 참여하지만, 미국정부는 어디까지나 남북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우리의 협력자의 역할을 다하는데 있으므로 일단 「3당국 회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남북한의 당국대화가 이루어지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데에 현실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3당국 회의」 제의는, 과거 15년간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 하에 크게 신장된 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생산적이라면 어떠한 가능한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는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굳은 의지와 자신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3당국 회의」 제의는 남북 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고 한반도의 통일과 민족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와 그것도 책임 있는 당국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지지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3당국 회의」 제의는 평화통일의 대경 대도는 남북 대화에 있으며 남북 대화는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기본입장을 구현하고 뒷받침하는 전진적 제의라고 하겠다. 그러기에 한·미양국은 동 제의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직접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라는 대한민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지지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미국이 북한측과 일방적인 관계증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3당국회의」는 비록 한·미 공동제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남북대화의 성립이래 우리 정부가 제시해 온 통일접근방안 속에 맥맥히 흐르는 자주·평화통일노선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것이며 미국은 우리의 맹방으로서 이에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즉 「3당국회의」에서의 주역은 남북한 당국이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협력자」적인 입장에서 남북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그 기본 골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3당국회의」는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의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즉 남북한 당국이 주역이 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협력자」 또는 「보조자」로서 참여케 된다는 점에서 「3당국회의」는 미국과 공산월맹이 사실상의 주역이 되고 월남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던 과거 1968년 이래 월남 평화 협상이나, 최근의 「에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미국이 등거리로 중재자가 되었던 중동평화협상회의와는 그 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작년 3월이래 일부에서 거론된 바 있던 소위 「3자회담」과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또한 「3당국회의」는 남북한간의 대화촉진과 긴장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1970년 8월 15일 박대통령의 「평화통일구상선언」 이후 「7·4남북공동성명」, 「6·23평화 통일 외교정책 선언」,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및 「1·19 남북당국회담제」로 이어지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과 그 기본정신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세계, 한·미 양국의 전통적인 맹방으로서의 결속과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과 의지를 과시한 점이다.

「3당국회의」 제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노력과 변함없는 동맹관계를 재확인한 기초 위에서,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비롯하여 세계정세 전반에 관해 완전히 의견을 같이하고 전통적인 맹방으로서 양국간에 존재하는 정치, 안보,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강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키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양국이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3당국회의」는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인내와 창의로 극복, 타개하려는 대한민국의 다각적인 평화통일노력의 축적으로 평가되며 이와 같은 진지하고 현실적인 제의를 외면해온 북한과 그 동맹국들의 상응하는 노력을 기대하는 한·미 양국의 결속의 상징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3당국회의」가 실현된다면 이는 중·소 등 공산국가들이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외교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그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할 수 있는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한민족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주변 열강에 의해서 강요된 결과라는 역사적 사실을 돌이켜 보면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모색하려는 세계 평화애호국들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편 이 같은 「3당국회의」 제의는 국내적으로 초당적 단결과 범국민적 총화로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물론 아세아 제국 등 주요 국가들도 남북 대화의 재개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북한측의 거부반응과 저의

한·미양국은 공동성명의 발표와 동시에 남북한이 같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통해 「3당국회의」 제의를 북한측에 공식으로 전달하였으며, 적절한 외교 경로와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측의 수락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은 처음 「3당국회의」 제의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의 개최와 공동성명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는 비공식 반응을 보이다가 1979년 7월 10일 소위 북한 외교부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즉 「3당국회의」 제의가 발표된지 10일이 지난 7월 10일 오전 10시 「평양 방송」으로 발표된 이른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은 「카터」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 회담의 공동성명을 터무니없이 왜곡 비방하는 한편 「3당국회의」 제의는 한반도 문제를 진실로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난과 함께 남북 대화에 관해 그들이 고수해 온 과거의 기본 입장을 되풀이 강조하고 나섰다. 동 성명에서 「3당국회의」 제의에 관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문제의 해결에 제기되는 남북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인 문제는 외세의 간섭 없이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로서 미국이 여기에 끼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둘째, 남한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정전협정의 실제적인 당사자들인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셋째, 북한과 미국의 단독회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 회담을 진행하면서 한국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때에만 미국이 요청하면 남한당국을 「옵서버」로 참가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넷째, 통일문제와 같은 중대한 민족내부문제를 미국이 간섭할 수 없으며, 남북의 당국자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및 해외동포조직의 대표들 사이에 아무때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용의를 갖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북한측 공식 반응에서 주목되는 것은 ① 「3당국회의」 제의를 전면 묵살할 수 없는 입장에서 동 제의의 정치적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북한측의 공식반응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라는 형식으로 그 격을 낮추었고 ② 통일 문제와 군사 문제를 분리하는 그들의 일관된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③ 한국의 참가 문제에 대해서는 미·북한 회담의 선행을 전제로 회담과정에서 한국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때에만, 그리고 미국이 요청을 한다면 한국을 「옵서버」로서 참가시키는 것을 허용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종래 보다 오히려 경직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북한측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측은 동 성명에서 『남한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들인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

다.

이와 같이 북한측은 한반도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통일문제와 휴전협정의 대체문제를 구분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국전쟁 때 북한의 남침에 피를 흘리며 대처했던 교전 대상자의 주축을 이룬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군이었으며, 또한 현재 155마일의 휴전선을 수호하며 휴전상태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당사자도 바로 우리 국군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북한 측은 도외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이 휴전협정의 서명당사자가 아니라는 형식논리만을 앞세워 휴전선을 가운데 놓고 마주 서있는 한국과의 평화정착문제를 협의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측은 미국이 협상당사자라고 강변함으로써 UN의 결의에 의해 평화의 사도로서 침략을 응징키 위해 참전했던 미국을 위시한 참전 16개국의 「UN군」이 교전당사자라는 사실을 묵살시키는 동시에 미국을 전면으로 부상시켜 한반도의 통일이 마치 미국의 무력 간섭때문에 방해되고 있다는 왜곡된 인상을 확산시키기 위해 그들의 종래의 일관된 선전 효과만을 철저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주한미군철수만을 노리며 그들이 평화를 추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반증하는 것이다.

즉 북한측이 주장하고 있는 대미평화협정체결은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가져오겠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한반도내의 힘의 불균형을 조래하여 전쟁재발의 길을 트고 무력적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야욕에서 발상된 것이다.

이와 같은 대미평화협정체결을 북한측이 처음 들고나온 것은 지난 1974년 1월 18일 박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측에게 남북한 불가침협정체결을 제의한데 대해 동년 3월 2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행한 보고에서 북한외상 허담이 이를 거부하고 휴전협상의 조인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미·북한간의 평화협정체결을 제의했던 것이다.

당시 북한측의 제의내용을 요약하면, ① 미국과 북한은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며 무력충돌 요인을 제거하고 ② 한반도내에 일체의 무기와 작전장비, 군사물자의 반입금지 ③ UN군사령부의 해체와 동시에 주한미군의 즉각 철수 ④ 외군철수후의 한반도의 외군기지나 작전기지화의 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 이후 북한측은 한국문제가 상정되었던 1974년, 1975년의 UN총회와 1976년 8월 「콜롬보」에서 열렸던 비동맹 제5차 정상회의, 1978년 7월의 「베오그라드」 비동맹 외상회의등에서 소위 휴전협정의 실제당사자는 미·북한이라는 궤변을 기회있을 때마다 떠들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당사자이며 주역인 한국을 외면한 채 휴전협정의 조인당사자가 미국이라는 표면적 구실만을 내세워 대미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는 근거로 그들은 ① 『오늘날 「조선」에 조성되고 있는 긴장된 정세와 전쟁위험에 대한 주된 책임이 미국정부당국에 있다.』 ②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지고 자주적 통일의 장애가 되는 외부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조선사람끼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려면 남조선에서 군대를 주둔시

키고 있으며 정전협정에 조인한 당사자인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의 허담보고: 74. 3. 25)

이처럼 북한이 대미평화협정체결을 끈질기게 고집하고 있는 저의는 휴전문제는 미·북한간의 평화협정을 통해 해결하고 통일문제는 남북의 각정당, 사회단체가 참가하는 군중대회식의 「대민족회의」에서 취급한다는 이원적 논리를 내세워 진정한 대화를 통한 평화달성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서 한·미간의 군사협력체제를 파괴하고 UN군과 주한미군 철수의 조기실현으로 남북한간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여 무력적화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보겠다는 전술의 일환인 것이다.

그리하여 ① 한·미양국간의 이간을 획책하여 한국을 고립시키고 ② 한국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국제적 지위의 실타를 기도하며 ③ 미국을 직접 당사자로 부각시켜 6·25남침으로 인한 자신들의 전쟁도발의 책임을 호도하는 한편 ④ 미국을 협상상대로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북한의 국제적 위신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김일성의 1인독재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저의로서 북한측의 대미평화협정 주장은 대외선전만을 노린 것으로서 시종일관 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측은 동 성명에서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남북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인 문제는 외세의 간섭없이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은 민족내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남북조절위원회나 남북적십자회담의 대화기구를 이미 일방적으로 파괴시키고 그동안 진행되던 대화를 중단시켜 놓았으면서도 허울 좋게 또다시 통일문제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로 그 실효성을 보장해야 할 통일문제를 남북한 「당국」이 아니라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는 모순되는 억지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측은 「3당국회의」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까지 그들이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인하고 적화혁명을 추구해 오던 논리가 흔들리게 되고 한편으로는 서방측과의 실질적 접촉이 시작될 경우 북한의 폐쇄사회가 내부로부터 안정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들로 하여금 거부케 하는데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북한측은 체제상의 경직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안으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미·일·중공의 교류확대를 비롯한 한반도주변의 변화와 평화조류를 억지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포함한 모든 한반도문제의 해결의 주체는 남북한이며 또 이의 실천이행이 가능한 합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남북당국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1·19 남북당국자 대화제의」나 「3당국회의」 제의 등에서 남북한 당국간의 직접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바로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인공은 남북한 당사자라는 정

신에서 한 것이며 이번의 「3당국회의」 제의가 남북한당국을 주역으로 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협조자로서 참여케 구상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합리적인 제의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한편 북한측의 「3당국회의」 제의에 대한 거부성명이 발표되자, 우리 정부의 외무부대변인은 7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에게 민족의 염원을 직시하고 「3당국회의」 제의를 수락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동 성명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외무부 대변인 성명>

『한·미 양국 정부는 7월 1일 남북한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 당국 대표 회의를 북한측에 공동 제의하였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제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결의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0일 북한측이 소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한·미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제의한 건설적인 3당국회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다.

7월 1일 한·미 공동제안은 우리의 「1·19 제의」와 같이 앞으로도 북한당국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당국이 종래의 상투적인 분열주의 운운의 선전 구호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갈망하는 민족적 염원을 받들어 금번의 공동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 「3당국회의」와 「3자회담」의 차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모색은 1970년 8월 15일 박대통령의 「평화통일구상선언」 이후 우리 정부의 주도로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한 모색이 진척되었고, 뒤이어 남북 쌍방은 1972년 7월 4일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합의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는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를 진행시킴으로써 평화적 통일접근 노력에 진일보하였었다.

그러나 북한측이 1973년 8월 28일 일방적으로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한반도문제의 당사자간 타결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좌초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1974년 3월 25일 대미직접협상을 제의하고 나섬으로써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른바 「4자회담」, 「6자회담」, 「3자회담」 등이 새롭게 거론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거론 또는 제기된 이들 회담방안들의 경위와 내용들을 비교, 고찰하므로써 그 성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가. 「4자회담」과 「6자회담」

「4자회담」과 「6자회담」은 1975년 9월 22일 당시 「키신저」 미국무장관이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연설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휴전협정을 보존하면서 「유엔」 군사령부를 종식시키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상대방 대표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른 회원국들과 만날 일반적인 용의를 표명한 바 있다. 오늘 나는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려한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한반도문제의 지속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를 고대하면서 이제 휴전당사국들에 휴전협정의 보존을 위한 방안을 토의할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이러한 회의에서 우리는 또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협상하기 위한 보다 대규모의 회의개최 가능성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긴장감소를 위한 다른 대책들을 가질 것이다.』(1975년 9월 22일 유엔: 합동)

여기에서 한국과 미국이 제기한 「휴전당사국」은 한국·미국·중공·북한의 4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보다 대규모의 회의 개최』는 일본과 소련을 포함한 「6자회담」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제의이후 「키신저」 전 미국무장관은 1976년 7월 22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의 「다운타운·로터리클럽」 및 상공회의소에서 행한 주요 「아세아정책연설」에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년 가을 UN총회에서 미국·중공 및 남북한의 대표들이 회동하여 4개국 당사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동 제의에서 「키신저」 장관은 특히 북한측이 북한·중공과 함께 휴전협정에 서명한 「유엔」 군사령부의 무조건 해체를 주장하고 심지어는 UN군사가 해체되면 휴전협정 자체도 폐기되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철수를 요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문제까지도 한반도인구의 3분의 2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제외시킨 가운데 미국과의 쌍무회담을 통해서 논의하자고 주장해 온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측의 제안은 평화를 증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고립시키고 주한미군의 일방적 철수를 촉진하며 기존의 법적 협정 등을 폐기함으로써 무정형의 일반적 협상대상으로 만들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미국은 북한의 그러한 제안들을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으로서 ① 미국은 남북한 간의 진지한 대화의 재개를 촉구한다. ② 만약 북한의 동맹국들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준비한다면 미국은 그러한 북한동맹국의 준비태세를 확인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할 것이다. ③ 미국은 한반도의 실질적인 통일에 편견을 가짐없이 남북한이 모두 정회원국으로 UN에 가입할 수 있도록 UN의 문호를 열어 두자는 제안을 계속 지지한다. ④ 미국은 어떤 형태이든 모든 관계당사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행 휴전협정의 새로운 기반 또는 휴전협정에 대체되는 보다 항구적인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천명하고 동년 가을 제31차 UN총회기간중 미국·중공·남북한 4자가 「뉴욕」에서 회담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4자회담」에 관해 1976년 7월 23일 박동진 외무장관은 담화에서 「키신저」 장관의 제의는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국의 평화통일 추진을 위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공과 북한당국이 이 제의를 수락하여 조속히 「4자회담」이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뒤이어 1976년 9월 30일 제31차 유엔총회에서 당시 「키신저」 미국무장관은 정책연설을 통해 제30차 총회에서 제의했던 종전의 「4자회담」안을 일부 수정하여 단계적 접근방안으로써 새로이 필요한 절차를 보다 구체화한 「4자회담」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 내용은 ① 남북한이 먼저 예비회담을 갖고 미국과 중공은 그 예비회담에 「옵서버」나 자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4자회담」의 개최장소와 규모 및 의제를 토의한다. ② 예비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면 미국·중공·한국·북한이 참가하여 정식으로 「4자회담」을 연다. ③ 이 두회담의 결과와 합의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소련과 일본도 참여하는 확대국제회의를 여는 등 한반도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3단계 평화안이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외무부도 이 제의는 한·미양국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히고 북한측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촉구했던 것이다.

나. 「3자회담」의 대두

「3자회담」은 1978년 3월 30일 일본의 「매일신문」이 동구의 외교소식통을 인용보도한데서부터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동 보도에 의하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은 한국문제를 독일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을 제의했으며 이를 위해 「티토」 자신이 「워싱턴」과 평양간의 교

광역할을 떠맡을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년 3월 7일 「티토」는 「카터」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에 대한 단독 접촉을 바라는 김일성의 의도를 전했으나 한국을 제외한 「워싱턴」과 평양의 접촉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카터」대통령이 밝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한 「티토」는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의 가능성을 「카터」대통령에게 타진하여 그의 이해를 얻자 한반도문제의 회담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김일성을 「티토」 자신이 설득하겠다고 약속한 후 「유고슬라비아」를 방문 중인 북한측의 외교사절단에게 이같은 뜻을 설명했다는 것이 동 보도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티토」의 방미에 이어 「루마니아」대통령 「초우세스쿠」의 미국방문과 다른 한편으로는 화국봉의 평양방문이 예정되는 등 한반도주변의 국제정세가 바빠 돌아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관여치도 않은 소위 「3자회담」안이 알맹이는 알려지지 않은 채 갖가지 추측만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에 외무부는 1978년 4월 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통일 문제에 관한 우리정부의 기본정책과 입장은 1974년 8월 15일에 발표된 평화통일 3대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 하등의 변동이 없는만큼 이와 상반되는 방안은 고려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고 말하고 한반도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대화과 그에 따른 남북한·미국·중공의 「4자회담」 등의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한국의 참여와 동의 없는 한반도문제 처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 이후 1978년 4월 13일에는 「카터」 미국대통령과 「루마니아」의 「초우세스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회담에서도 공식으로 발표된 것은 없지만 『두 수뇌는 「3자회담」을 통한 한반도문제의 해결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이 틀림없다』고 알려짐으로써 「3자회담」안은 더욱 무르익어 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거론되어온 「3자회담」방안은 의제, 개최시기, 성격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초보적 상태임을 지적하고 북한측의 반응과 미국측의 자세등 제요소가 밝혀지는 대로 신중히 대처하며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남북한, 미국등 「3자회담」이 우리의 평화통일 3대원칙과 부합되는 내용일 경우 이에 전진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미국의 「카터」 행정부가 등장한 이래 「부토」 「파키스탄」 대통령,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초우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등을 통해 대미교섭을 벌여오던 북한은 1978년 5월 7일 중공의 화국봉의 평양방문을 맞아서는 그 동안의 유연자세를 돌변시켜 김일성은 「중대뉴스」란 이름으로 ①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공약에서 후퇴하고 있다. ② 미제국주의는 2개의 한국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 ③ 미국이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 ④ 미국은 현 한국정부를 지원하지 말라는 등 대미단독협상을 주장하며 중공의 비위를 맞추는 강경노선을 취함으로써 북한과 중공이 보조를 맞추어 간접적으로 「3자회담」을 거부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박동진 외무부장관이 1978년 5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3자회담」 문제에 대해 북한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구상이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정 생산적이고 전진적 조건을 갖고 있다고 믿어진다면 이런 조건을 참작하면서 신축성있게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3자회담」 문제에 대해 융통성있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던 것이다.

금년들어 1979년 2월 20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벤스」 미국무장관의 회담에서 주한미군철수 문제, 남북대화진전 등 한반도를 비롯한 아세아 정세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이 거론되었고 그 결과 7월 1일에는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1979년 5월 2일부터 6일사이에 「발트하임」 UN사무총장이 자신과 남북한 대표의 3자회담 안을 구상하여 남북관계를 중재하고자 서울과 평양을 교차방문 하는 등 다른 측면에서의 한반도문제의 해결 노력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카터」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6월 27일 KBS-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추구하는 당국대표간의 대화유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추가적으로 모색해도 좋으며 우리가 판단해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때 이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도 쓸 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3자회담」에 대해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는데 있어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북당사자가 돼야한다』고 전제하고 『이런 기본입장이 보장된다면 3자회담이 되든 4자회담이 되든 또는 6자회담이 되든 그 방법은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융통성 있는 입장을 또다시 강조했다.

그후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7월 1일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 당국대표회의」 개최제에는 이같은 한국측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래의 소위 「3자회담」과 「3당국회의」는 그 명칭도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또한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할 것이다.

다. 「3당국회의」와 「3자회담」

이상과 같은 「3자회담」의 거론은 한국이 전혀 직접 관여치 않았으며, 미국과 「유고슬라비아」, 또는 「루마니아」와의 정상회담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그 구체적인 협상대상, 목적, 내용, 회담양식 등 세부적인 내용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거론의 주체가 남북한당사자의 공동의사가 아닌 동구권 제국 수뇌들의 「정치놀음」으로써 한국의 입장과 견해가 배제, 무시된 일방적인 구상에서 출발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3당국회의」는 한·미공동성명의 제조항(제10, 11, 12항)에서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써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① 한반도문제는 남북한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 ②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도모하고 「1·19 남북당국간 대화제의」를 지지, 추진한다. ③ 미국은 북한과 단독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④ 「3당국회의」가 이룩됨으로써 북한측이 집요하게 전개하고 있는 대미위장평화공세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점등이 종래의 이른바 「3자회담」과는 차이가 나는 점들이다.

이와 같은 「3당국회의」의 거론과 함께 대한민국은 「남북조절위원회」, 「남북당국간 대화」, 또는 「4자 또는 6자회담」등 그 어느 것이든 북한당국이 긍정적으로 선택하여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으나 북한측은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안으로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주한미군철수를 노리며 계속 대미직접협상을 고집, 우리에게 대한 왜곡, 비방선전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앞으로 북한측이 자세를 급변시켜 「3당국회의」에 응해오거나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건 지난날 대화를 진행시키는 다른 한편으로 남침용 땅굴을 파내려온 북한측의 불성실한 대화부정적 자세와 믿을 수 없는 그들의 행적을 목격해온 우리로서는 아직도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폭력혁명주의를 추구하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환상적인 기대는 삼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3당국회의」 제의와 북한측의 거부성명에 따른 국내 주요지의 사설에 비친 반응을 일부 선정 전재한 것이다. - 편집자 주>

3당국회의 거부의 속셈

- 북한은 남북긴장완화에 성의보이라 -

북한의 3당국회의 거부는 대남전략의 궁극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드러낸 셈이다. 북한의 외교부 성명은 거부이유로, 통일 문제는 민족내부 문제이므로 미국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평화협정은 미국과 직접 협상할 문제란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측이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후 수없이 되풀이 되었던 것이며, 박대통령의 1·19제의 후 선전기관을 통해 여러번 반복했던 내용이다.

요컨대 남한당국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고, 미국과 직접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북한측의 속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현존하는 7·4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위반이다. 7·4 성명은 통일의 3대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북한이 남북 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제3국과 협상하겠다는 것은 「자주」원칙에 대한 모순이요, 사리에도 맞지않는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겉핥하면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미국과 직접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우리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분열을 획책하려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임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한·미 공동성명은 미·북한의 일

방적인 접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명백히 하고 있는 만큼 3당국회의를 그러한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려는 북한측의 얄은 잔꾀는 용인될 수 없다.

북한은 월남휴전협상당시 공산측이 미국과 거래할때 이용한 이른바 「하노이」 식 전략을 원용해 보려고 하지만 오늘의 한반도실정은 월남전때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김일성은 알아야 한다.

우리를 제쳐놓고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것은 평화협정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마침내는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북한측이 우리와의 대화를 기피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책략에서 출발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가 제의한 책임있는 남북당국간의 대화를 기피하면서 한편으로 전민족대회나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고집하는 까닭도 그 목적은 혁명방식에 의한 통일에 있다. 그들의 속셈은 통일문제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문제는 따로 분리해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3당국회의에 대한 조건부 거부의를 나타낸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3당국회의를 정면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이처럼 조건을 달아 거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하려는 계략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3당국회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대화재개를 바라는 우리의 여망인 만큼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성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북한이 열흘만에야 그 반응을 보인 것은 이 회의에 대한 문제를 놓고 매우 고민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를 수락할 경우 그동안 그들이 내걸었던 대화거부의 명분과 논리를 뒤집는 것이 되고 거부하면 대화전략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대외에 드러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어떻든 이제 분명한 것은 통일문제는 폭력과 혁명방식에 의해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남북문제를 평화와 대화방식이 아닌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이다.

우리는 북한이 설령 3당국회의를 거부했다고 할지라도 꾸준히 대화의 광장으로 끌어내는데 인내와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끝내는 그들이 스스로의 내부모순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3당국회의에 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79. 7. 11 경향신문)

김일성의 책임

북한은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제의한 삼당국회의를 10일만에 거부하였다. 이 성명에 따르면 민족내부문제는 남북간의 각 정당 사회단체가 참가하는 「대민족회의」

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평화정착문제는 미국과 북한간의 주한미군철수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미·북한 양자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시킬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한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도 분단을 고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북한의 이와같은 거부반응은 종래의 기본노선을 되풀이한데 불과하다. 월남적화방식에 따른 한국의 월남화 획책 그것이다.

김일성집단은 금년들어 반년만에 남한의 대화제의를 두번이나 거부하고 나섰다. 1월의 책임있는 당국자회의제안과 6월의 삼당국회의제약이 그 둘이다. 물론 7·4공동성명에 의해 발족된 남북조절위도 폐기시켰고 혈육의 정을 나누자는 적십자사의 이산가족재회문제에도 등을 돌리고 있다. 심지어는 남북직통전화마저 끊은지 오래다.

북한 김일성은 이처럼 이미 설치된 남북대화의 창구들을 모두 봉쇄하고 새로 제의한 삼당국회의마저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두 개의 주어진 선택중 분명히 하나를 택하였다. 당국자 회의에 응함으로써 상호 평화공존의 길을 추구해 가느냐, 아니면 월남적화전략에 따라 실현불능한 대민족회의나 고집하면서 대남적화책동이나 일삼으며 남북한간에 긴장을 고조시키느냐는 두 개의 선택중 후자를 택한 것이다.

전자를 받아들일때 김일성은 북한의 내적체제의 긴장을 풀어야한다는 것을 예상치 않을 수 없다. 김일성 일인우상화로 다져진 체제가 풀린다는 것은 산 사람 우상화의 토대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일성에게 있어 평화공존체제 수락이라는 것은 자기자신 기반의 동요를 뜻한다. 그러므로 김은 월남적화방식에 따른 대남적화노선을 견지키로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을 안으로 걸어잠그고 계속 북한주민들을 「남조선해방」을 외치면서 쇄국으로 유지되는 일인체제를 지탱하려는 잔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김일성의 이같은 일인우상화 유지를 위한 평화공존거부와 의식적인 긴장조성은 김일성 이외의 5천 4백만 남북한동포들의 희생을 강요한다. 이렇게 김일성이가 만들어대는 긴장은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을 불가피하게 몰고올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남북한동포들을 군비부담으로 허덕이게 만들고 항시 전쟁의 공포속으로 몰아넣는 것 뿐이다. 더우기 경제적으로 한반도에 비해 크게 뒤져 있으며 인구로도 남한의 절반에도 크게 못미치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은 그 이상 더 참을 수 없는 막바지에 부닥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일성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대오일변의 용기를 발휘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왔다고 본다. 즉 삼당국회의를 수락하라는 것이다.

불행히도 북한측이 삼당국회의를 거부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소련과 중공을 통해 북한이 이를 수락하도록 끈질긴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러니와 만일을 생각해서 대한군원도 더욱 적극화하지 않으면 안될줄 안다.

(1979. 7. 11 동아일보)

북의 3당국회의거부

한·미가 공동으로 제의한 3당국회의를 북한이 과연 수락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평화와 침략의 길 가운데 어느쪽을 택하는가를 가름하는 시험대로 되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반응이 국내외적으로 주목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0일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3당국회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말았다. 북한이 3당국회의를 거부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 및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미·북한간 통일문제는 남북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침략노선을 합리화하기 위한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3당국회의의 제의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당국회의는 이를 제의한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대화를 촉진하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남북대화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다면 3당국회의를 한·미가 공동제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평양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의 하나로 3당국회의를 제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3당국회의를 거부하는 논거로 들고 있는 철군이니 평화협정이니하는 것은 이 회의의 정신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오직 반대를 위한 트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3당국회의의 토의과제와는 무관한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주장을 3당국회의를 거부하는 논거로 들고 있는 것도 엉뚱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앞서서도 말한바와 같이 3당국회의는 통일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를 남북한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일관된 원칙에 따라 제의한 것이며,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에서도 통일문제는 남북대화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만일 참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남북대화의 재개에 동의해 나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3당국회의에 우선 참가하고 이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문제해결의 실효적 방안을 찾는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은 3당국회의에 대한 거부반응에서 다시 입증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3당국회의를 거부한 것은 평화적 남북관계와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적화통일을 위한 침략노선을 끝내 추구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3당국회의의 제의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철수와 이를 위한 미·북한의 이른바 평화협정을 한반도문제의 선행결과제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적화환경을 마련하려는 술수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내부 붕괴를 기도하여 당국자대화를 거부하고 이른바 「진민족대회」를 들고 나와 통일전선전략의 축수를 뺏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버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대화 또는 3당국회의에 응해 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문호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1979. 7. 11 서울신문)

북한의 「3당국회의」 거부

북한은 소위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자의 입을 통해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제의한 「3당국회의」를 정식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이유는 「3당국회의」가 한반도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종래의 「대민족회의」를 고집하고 미국과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고, 이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다가 미국이 요청하면 그때 가서 「옵서버」로 한국을 참가시키겠다는 등 꾀변을 늘어 났다는 것이니, 다시금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것은 다시말해 이른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문제를 협의한답시고 미국과 단독회담을 갖자는 것이고 이 회담을 통해 북한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전략적 기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한국정부의 남·북한 불가침 협정제의를 외면하고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이 제의한 3당국회의는 거부하면서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저해하고 미군철수를 위한 협상통로를 마련하며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촉진시키려는 책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이 갖는 부당성은 우선 한반도 평화보장의 주체를 근본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있다. 따지고 보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장본인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도발한 것이지 미국을 직접 침략하거나 미국국민을 상대로 직접 전쟁을 도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평화협정이나 불가침협정의 체결도 침략을 직접 당한 당사자인 한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이론상 타당함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우리와는 대화도 하지않고 평화를 위한 논의마저 거부하면서 미국과는 직접 교섭을 하겠다는 얘기는 북한이 평화보장의 주체인 한국 정부를 따돌리고 북한의 당면목표인 한·미간의 이간을 획책하면서 주한미군을 조기철수시키는 한편 재침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미국이 한국의 참여없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까닭도 이러한 북한의 저의를 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북한의 진심은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구나 긴장완화나 전쟁재발의 방지에 관심이 없고 한·미간을 이간시켜 남침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저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3당국회의의 거부에서 다시금 노출시킨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한국이 「옵서버」로 참여 운운하면서 마치 「과리」협상의 전철을 답습케 하거나 한국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북한과 3당국회의를 가져 보았자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닐까. 북한의 대남적화전 전략을 다시금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979. 7. 11 신아일보)

북한의 반응

여러가지 국제적 억측이 구구한 가운데 3당국회의안에 대한 북한당국의 반응은 아직도 명백하지 않다.

10일 동경에서 청취된 평양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이 제의를 거부하는 듯한 내용의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나 그것 역시 그 진의는 확실치 않다.

그들은 이 성명에서 『3당국회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고 강변하면서, 휴전처리 문제는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일문제는 「대민족회의」를 통해 각각 해결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했다. 따라서 이 성명은 3당국회의를 비난하긴 했지만 명백히 거부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다만 3당국회의가 제의된 후 북한쪽에서 나온 일련의 발언들-부수상 정준기의 발언, 대외문화연락협회부위원장 현준극의 동경발언등이 다분히 비난조였고 이번 성명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내부의 의견이 아직도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나하는 추측은 가능하다.

북한측의 이같은 불명료한 태도에 대해 미국측은 『북한이 시간을 벌려는 것』 또는 『결국은 수락할 것』 등의 조심스런 공식·비공식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역시 이 문제에 관한 북한태도를 성급히 속단할 아무런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당초부터 우리는 북한이 순순히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받아들여더라도 조건을 달거나 수정제의를 해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했었다.

일부 일본언론은 벌써부터 북한이 부족원유에 대한 미국의 공급보장을 조건으로 이 제의를 수락할 것이라는 추측보도를 한 바도 있지만, 북한이 예상외의 원조제공등을 조건으로 수락할 가능성도 더러는 추측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측이 이 제의를 비난하는 몇가지 묵은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로서 간과하기 어렵다.

우선 그들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협상에는 미국과 그들만이 참가해야 하고 한국은 필요한 경우 「옵서버」로 참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휴전협정의 서명자가 미·북한·중공이라는 형식논리에 근거를 둔 것일 뿐 도저히 현실적인 문제접근이라고는 볼 수 없다.

도대체 한반도에서 대치하고 있는 쌍방이 누구이며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것의 실효를 보장할 주체가 누구인가를 그들이라고 모를리가 없지 않은가.

또 통일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이므로 제3자인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지

만, 3당국회의안이 바로 통일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 아님은 한·미공동성명에서도 명백하다.

즉 한·미공동성명은 대화촉진과 긴장완화 방안으로 3당국회의를 제의하고 통일성취를 위한 어떤 조치도 책임있는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못박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3당국회의안에 대한 북한측의 비난은 논리가 상충되거나 비현실적인 것이며, 긴장완화와 대화에 대한 무성의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설득력없는 이같은 주장의 반복을 중지하고 3당국회의안이 긴장완화와 대화를 위한 한·미양국의 성의와 신축성을 담은 제안임을 인식하여 하루 빨리 여기에 호응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1979. 7. 11 중앙일보)

「3당국회의」의 거부반응

지난 7월 1일 한·미공동성명에서 두나라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당국대표회의, 즉 세칭 「3당국회의」는 국제적 주목을 끌었고, 북한당국이 이에 대해 보일 반응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추측이 나돌았다. 「3당국회의」는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쌍방간에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준엄한 상황에서 대화를 촉진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안되었다. 그후 이 제안은 제3국을 통하여 평양외교부당국에 정식 전달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0일 평양의 외교부 대변인은 「3당국회의」 제안에 대해 거부하는 논평을 성명형식으로 발표했다. 이 성명을 요약하면 ① 「3당국회의」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거부한다는 것 ② 북한은 미국과의 단독회담을 바라지만 양자간에 토의를 하다가 한국이 참가할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옵서버」로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 ③ 미국·북한간의 회담은 주한미군철수와 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만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 ④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로서 미국이 간섭할 수 없으며, 남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가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북한측 주장의 대부분은 근년 수 없이 되풀이 되었고, 「카터」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해서는 군중대회의 결의문이나 당 기관지의 논평기사의 형식으로 더욱 강조되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에다가 「3당국회의」 제안의 거부를 하나 더 첨가한 것이 바로 그들 외교부대변인의 이번 성명이라는 것이다. 이 성명으로 북한측의 통일노선, 대미정책, 남북대화에 대한 종래의 관점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음을 그들은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3당국회의」의 개최가능성은 전무에 가까와지고 말았다.

「3당국회의」 제의를 북한이 수락하고 안하고는 그들의 자유요, 이것을 아무도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애걸할 자는 없다. 그러나 남북공동성명에서 약속하고 진행되던 남북조절위원회도 못하겠다, 남북간의 책임있는 당국회담도 안하겠다 하면서, 남북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다는 소

위 「대민족회의」나 「전민족대회」라는 것을 여전히 내세우고 있다.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 사이의 정치교류를 남북조절위원회가 그 실행을 보장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고도 그들은 조절위는 이미 없어졌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일차적 목표가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시켜 휴전선 이남을 군사적 취약지대로 만들어 놓고 「남조선해방」의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음을 김일성은 누차 밝혀 왔다. 그러나 역사는 그의 야심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중·소의 지원하에 「남조선혁명」이란 이름의 전쟁을 통해 남쪽을 삼켜보겠다는 환상은 영원히 실현될 길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중요시하는 미·소·중공의 국제정세도 그의 주관적 희망과는 반대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환상에 아직도 사로잡혀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분간치 못하고 있다.

평양의 전략가들이 그 어떤 선전을 하고 계약음모를 꾸며도 주한미군은 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결코 철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과 상의하지 않고 평양과 단독회담을 하지는 않는다. 또한 전민족 성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여없이 평화협정은 절대로 체결될 수 없다. 그리고 중·소는 김일성의 허황한 미몽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도 않으며 대한민국에 실질적 압력을 가할 수도 없다. 끝으로 비동맹세력에 대한 선전적 호소가 한반도 문제를 북한이 바라는대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허망한 것이다. 이러한 자체의 처지를 인식치 못하고 시대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닌 냉전적 전략에 매달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실로 한심한 일이다. (1979. 7. 11. 조선일보)

평양측의 거부반응

- 평화정착 원치 않는 저의 드러냈다 -

10일 북한측은 그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7·1한·미공동성명에서 제의된 「3당국회의」에 대한 거부반응을 내 놓았다. 상투적인 비난중상에 붙여 그들의 구태의연한 전략적 속셈을 다시 한번 측정케한 내용이였다.

즉 평양측은 종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①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협상은 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다루되 회담진행상황을 보아 한국을 「옵서버」자격으로만 참석시킬 수 있다든지 ② 한편 통일문제는 미국이 간섭할 바 아니고 남북의 각 정당·사회단체 및 당국을 주체로 한 이른바 「폭넓은 협상」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맞서 나온 꼴이다.

그러한 북한의 고집은 모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간의 대화촉진과 긴장완화를 위해 제의했던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당국대표회의가 적어도 당분간 개최될 수 없으리라고 전망케 한다. 그들은 우리측 「1·19제의」에 따른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 대화 뿐만 아니라 이번에 「3당국회의」마저 거부해 나섰는데, 이는 평양독재층이 우리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정착을 외면한 채 주한미군철수 공작 후에 야욕적인 적화통일을 추구하려는 소위 「남조선혁명」노선에 계속 집착해 있음을 말하여 준다. 또 그들은 최근의 미·중·일 접근기운에 뚜렷한 바와 같은 동북아시아의 새국제조류를 무시하려는 셈인데, 이러한 자세가 앞으로 북한의 대소의존증폭에 연결

될지는 두고 볼 관심사중의 하나이다.

다만 북한측은 약간의 시사적 여운 또는 그들 나름의 기동의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는데, 그곳 부총리겸 외교부장이라는 허담의 「6·27발언」에 보듯이 3당국대좌를 영원히 배제하지는 않으리라고 하는 일종의 포석이다. 본시 공산측은 객관적 여건 변화따라 수단방법을 불문하는 전술적 신축성을 감축케 한 바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언젠간 거시적으로 북괴의 야릇한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경각성을 높여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번에 북한은 또 한번 그 행동생리가 소위 「사상우선」의 명분과 정통성 경쟁에서의 「체면유지」에 얼마나 집착해 있는가를 스스로 드러내었다. 물론 그러한 고집스러운 태도는 처참하기 그지없는 북한의 주민생활 개선이나 경제난국 타개 등 실리의 고려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게다가 평화문제와 통일문제를 별도로 분리시켜 논의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비현실적일 뿐더러 비논리적이다. 한국의 소외를 노리는 모양이지만 우선 인구나 경제력만 보더라도 북녘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한국을 격하시켜 보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가소로운 허상에 불과하다. 나아가서 실속있는 평화정착의 선행없이 남북간의 상호신뢰 및 동질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접근에도 도움될 수 없다는 논리적 관련성은 만인앞에 뚜렷한 것이다.

북한의 10일자 거부반응에서 가장 문제될 것은 그들의 수사보다도 그 사상에 담겨진 고집불통의 전략적 속셈이다. 5천만 겨레의 절대다수가 한결같이 염원하는 평화정착과 민족적 대가정의 부활을 내다보는 통일접근을 위해 평양측이 타의없는 성의를 뒤늦지않게 표시하도록 강조하여 마지 않는다.

(1979. 7. 12 한국일보)

제3부 남북대화소식

<남북조절위원회>

1. 서울측, 7·4성명 7주년 성명

『 평화통일의 길은 남북대화 재개에 』
- 3당국회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 -

남북조절위원회 민관식 서울측 위원장 대리는 지난 7월 4일 남북공동성명발표 7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대경대도는 남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대화를 재개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3당국회의는 7·4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대화의 촉진과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의된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평화노력과 결의에서 나온 진지하고도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대리의 성명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편집자 주 -

「7.4남북공동성명」 발표 7주년에 즈음한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 성명

1. 7년전 오늘 남북쌍방은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 합의, 이를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동시에 발표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그 전문에서도 명백히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해야 한다}는 민족적 염원에 입각해서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남북쌍방은 남북공동성명에서 동 성명의 기본정신을 구현시키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자주적,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할 것과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할 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 등, 7개 항목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민족앞에 엄연히 약속하였다.
2. 남북쌍방은 남북공동성명 제6항의 명문조항에 근거하여 이같은 대화를 주관할 기구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발족시켰다. 남북간에 이루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문서인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분단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기능을 남북조절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3. 그러나 북한측은 1973년 8월 28일 이른바 「8. 28」 성명을 발표하여 이같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며,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한 남북간의 모든 합의사항을 공공연히 유린했다. 한때 남북간에는 남북조절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가 진행되었으나 북한측은 얼마 안가서 이 역시 중단시켰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1천만 이산가족들의 단장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최한 남북적십자회담

마저 중단시켰으며 심지어는 서울--평양간 직통전화도 일방적으로 단절해 버렸다.

4.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대경대도는 남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대화를 재개하는데 있다.

그동안 우리는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거부, 외면의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979년 1월 19일 우리는 어떤 시기, 어떤 장소,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든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남북간의 제반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남북당국간 대화를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책임있는 당국이야말로 남북쌍방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실천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1개 사회단체인 이른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내세워 「전민족대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나아가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사실상 7·4남북공동성명의 백지화를 획책하기에 이르고 있다.

5. 우리는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1979년 7월 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하여 남북한·미 고위당국대표회의를 제의하였다.

이 제의는 7·4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대화의 촉진과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어떻게 해서든 남북간의 동족상잔을 예방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이땅에 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우리의 진정한 평화노력과 결의에서 나온 진지하고 현실적인 제안인 것이다.

6. 본인은 오늘 7·4남북공동성명 발표 7주년에 즈음하여 우리측이 남북대화 재개의 문호를 항상 활짝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우리는 남북으로 흩어진 일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하루 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거듭하여 왔다.

우리는 남북조절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북한측의 주장도 고려하여 정당·사회단체를 포함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개편하자는 제의까지 내놓은 바 있다.

우리는 또한 남북당국간 회담의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이제 우리는 남북한·미 3당국회의의 문호를 북한측에게 또 열어놓고 그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7. 본인은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에게 1979년 7월 1일 한·미공동제의인 3당국회의를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북한측이 대화 부정적 태도를 버리고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이 대화의 광장으로 되돌아 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북한측의 긍정적 호응있기를 기대한다.

<남북적십자회담>

2. 한적, 「8·12 제의」 8주년 맞아 총재성명

『 남북적십자 실무회의의 9월 20일 재개를 촉구 』

대한적십자사 이호 총재는 지난 8월 11일 「8. 12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8주년에 즈음해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중단되어온 남북적십자회담의 정상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제26차 남북적십자실무회의를 오는 9월 20일 상오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적십자회측에 제의했다.

이호 총재는 9월 20일은 8년전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을 개최했던 뜻깊은 날임을 상기시키며, 지난 1976년 8월 30일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있는 서울·평양간의 적십자 직통전화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운영을 9월 1일 상오 9시를 기해 아울러 재개할 것도 북한적십자회측에 요구했다.

특히 이호 총재는 최근 소련 및 동구공산국가들과도 국제전화를 개통하고 중공의 교포들도 중공 당국의 인도적 배려로 고국에 돌아와 가족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흩어진 수 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자기 혈육을 지척에 두고도 상면조차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개탄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이산가족의 재회를 실현하려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대해 북한적십자회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동 성명문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8주년에 즈음한 대한적십자사 총재 성명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북한측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지도 어느덧 8주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의 제의로 시작된 남북간의 인도적 접촉은 그해 9월 20일 판문점에서의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을 출범시켰으며, 이것은 장기간의 분단과 긴장 그리고 적대적 관계속에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민족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며, 짝 막혔던 통일에의 기대를 다시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이루어진 남북간의 인도적 회담에서 우리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남북간의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고 오직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를 바탕으로 회담을 성취시킴으로써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에게 재회의 기쁨을 안겨주고, 나아가 이를 디딤돌로 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내와 성의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이와같은 인도주의적 노력과 동포애적 충정은 온겨레의 염원과 내외의 성원에 힘입어 마침내 1년간의 예비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분단의 장벽을 넘어 서울과 평양에서 본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973년 8월 28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대화중단 선언으로 말미암아 서울·평양 왕래의 길은 다시 폐쇄되었으며, 거래앞에 공약한 인도주의 사업은 오늘 이 시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측에 의해 서울·평양왕래의 길이 차단된 이 후에도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1천만 이산가족들의 인도적 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1974년 7월 10일부터 1977년 12월 9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된 25차례의 남북적십자 실무회담 과정에서 북한측에 대하여 중단된 본회담의 무조건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긴급한 문제와 실천가능한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토의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여러가지 합리적인 사업방안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측은 만일 북한측이 이산가족 재회문제를 당장 수락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우선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재회를 실현하는 문제,

이산가족 면회소 및 우편물 교환소를 판문점에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민족적 명절을 전후한 남북이산가족 성묘방문단 교류 문제 등을 제의했으며,

만일 북한측이 이것마저 수락할 수 없다면,

우선 가족사진 교환만이라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측은 판문점 실무회의 교착상태에 돌파구를 열고 중단된 본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하여 쌍방 수석대표간에 면담을 가질 것을 제의했으며, 또한 쌍방 적십자사 총재 회담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한적십자사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적십자회담을 외면하는 북한측의 태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아무것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측은 1976년 8월 30일 서울·평양간에 설치되어 있는 남북적십자간의 직통전화마저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쌍방간에 개최하기로 합의된 1978년 3월 20일의 제26차 실무회의마저 「무기연기 한다」는 일방적 통고 하나로 유산시킴으로써 남북적십자간의 접촉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남북관계는 다시 1970년 이전의 상태로 후퇴하고 말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남북간의 긴장상태와 불신관계는 의연히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우리측에 의해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 졌으나, 역시 북한측에 의해 거부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긴장상태가 계속 심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 민족이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상호 개방과 협력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조류에도 역행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원래 우리측이 남북적십자 회담을 제의한 기본취지와 목적은 남북이 서로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뛰어 넘어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호 접촉과 교류의 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통일의 바탕을 마련하자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의 인도적 적십자회담은 중단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이제라도 하루속히 우선적으로 재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측은 일찌기 남북간의 인도적 회담 추진과 병행하여 우리와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으며, 그 결과 우리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세계의 어느곳에 있든지 서로 자유로운 통신연락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해외여행과 모국방문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소련 및 동구 공산국가 사이에도 국제전화가 개통되었으며, 중공의 교포들도 모국에 있는 가족들과 활발하게 서신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공에 오랫동안 거주하던 우리동포 이용씨와 안학빈씨 가족이 얼마전에 중공당국의 인도적 배려로 고국에 돌아와 헤어졌던 가족들과 재회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서울의 언니 유미자씨와 「모스크바」의 동생 금자씨간에는 국제전화를 통하여 해후의 기쁨을 나누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국제사회의 발전적 추세와는 달리 남북간의 장벽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고, 남북으로 흩어진 수많은 가족들과 친척들이 자기 혈육을 지척에 두고도 상면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역사적인 「8.12제의」 8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측이 남북적십자회담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1천만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소망과 내외여론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루속히 우리와의 회담장에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북한측이 서울·평양간의 적십자 통로를 다시 열어 놓음으로써 남북적십자회담을 정상화하는데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북한측은 무엇보다도 먼저 3년동안 마비상태에 놓여있는 적십자간 서울·평양 직통전화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하루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남북적십자간에 적십자회담 정상화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북한 적십자회측에 대하여 제26차 적십자실무회의를 오는 9월 20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 오전 9시를 기해서 서울·평양간의 적십자 직통전화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재개할 것을 북한적십자회측에 요구합니다.

9월 20일은 8년전 제1차 남북적십자예비회담을 개최한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나는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대하여 북한적십자회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 남북간의 인도적 회담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할 것임을 거듭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제2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및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재개 제의는 1천만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기울이고 있는 일관된 성실한 노력의 표현이며 또한 교착된 남북대화의 정상화를 이룩하려는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제안인 것이다.

금번 대한적십자사의 성명은 모든 형태의 남북대화를 정치적 목적하에 연계운용함으로써 인도적 문제도 정치목적화하는 북한측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산가족문제의 인도적 해결은 법률이나 정치이전의 문제라는 점을 재차 명시하였다는 점과 한국과 소련, 동구간의 국제전화가 개통되고, 재중공 교포들의 고국과의 서신연락은 물론 귀국까지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유독 북한만이 동족의 상면은 커녕 이를 주선하기 위한 적십자 관계자의 상면마저 거부하고 있는 북한측의 극히 비인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고집을 타기할 것을 준엄하게 촉구한 점에 특징이 있다 하겠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는 1971년 8월 12일 북한측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남북 1천만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내와 성의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남북적십자회담의 전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측의 태도는 순수 적십자 인도주의회담의 진전에 난관만을 조성해 왔던 것이다. 그들은 남북적십자회담을 정치선전장으로 몰고 가려는 탈선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남북 1천만이산가족들을 찾아주기 위한 인도적 회담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즉 북한적십자회측은 적십자회담 의제 제1항 「이산가족·친척의 주소와 생사확인」 사업의 실질적 토의에 앞서 {남한에서의 법률적 조건개선과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선행조건」을 주장하면서 이산가족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보다는 대한민국의 반공법 철폐등 정치적 목적을 획득하기에 급급하였다.

더우기 북측측은 {우리나라에서 인도주의를 구현하는 길은 바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 {인도주의사업이라고 해서 조국통일문제와 분리하여 다룰 수 없으며 오로지 통일문제의 일부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남한의 반공관계 법률이 선행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리를 비약시키면서 이산가족, 친척문제를 정치문제와 결부짓고 순수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거부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인도적 적십자회담은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남북관계는 1970년 이전의 상태로 후퇴되었고 한반도의 긴장과 불신상태는 여전히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남북적십자회담의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산가족들의 단절의 고통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8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북한측에 대해 인도주의 회담의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도주의회담에 임했던 대한적십자사의 입장은 명백하다.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인도적 해결은 이념을 초월한 법률, 정치이전의 문제로서 순수한 적십자 인도주의정신과 원칙에 입각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숭고한 문제이다. 따라서 적십자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여하한 기존의 법률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도 저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법률적, 사회적 조건 환경개선」 문제를 내세워 순수 인도주의회담을 외면하고 있는 북한측의 태도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찌기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고 상호접촉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나아가 이를 디딤돌로 해서 민족적 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이바지하고자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던 것이다.

남북이산가족찾기 운동은 비단 1천만이산가족의 고통만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성공은 오랜 남북단절로 인해 발생한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모든 장벽을 허물고 민족대단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어 우리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우리 스스로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무한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산가족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때, 남북간에 끊어진 혈맥은 다시 이어질 수 있고 차츰 대화의 길도 트이게 되어 오랜 단절로 인해 빚어진 상호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남북간 적대감과 이질감이 용해됨에 따라 상호 신뢰의 바탕이 확대되어 비로소 민족적 동질성이 회복될 수 있는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버리고 순수 적십자인도주의 정신으로 되돌아와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기쁨을 마련해주기 위한 우리와의 인도주의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며 대한적십자사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평양간 적십자 통로를 다시 열어 놓음으로써 남북적십자회담의 정

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한적, 적십자회담 대표·자문위원 개편

대한적십자사는 8월 11일 「8. 12남북적십자회담 제의」 8주년을 맞아 성명발표와 함께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단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대한적십자사의 회담대표 및 자문위원 교체에 따른 적십자회담 대표단의 재정비는 적십자 인도주의사업의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보다 전진적인 자세의 표현인 것이다.

특히 종교계, 여성계의 인사들이 새로이 영입이 된 대한적십자사의 신임 회담자문위원들은 직능별로 사회각계의 지도급 인사들이 선임되어 구성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대화참여가 이루어졌다 는 점에서 더욱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조국분단의 비극을 민족적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로써 민족문제에 관한 한 보다 전진적인 자세를 취하겠다는 능동적 태도의 표현인 것이다.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및 자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명단

수석대표 : 소상영 (유임 : 한적 부총재)
교체수석대표 : 김련주 (위임 : 한적 총재보좌역)
대 표 : 이병호 (유임 : 한적 회담사무국장)
대 표 : 송한호 (신임 : 한적 공보자문위원)
대 표 : 정주년 (유임 : 한적 대변인)
대 표 : 최문현 (유임 : 한적 청소년자문위원)
대 표 : 조철화 (신임 : 한적 청소년부장)

자문위원 명단

조덕송 (유임 :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봉식 (유임 : 서울대 교수)
김동길 (신임 : 진 연세대 교수)
박조준 (신임 : 영락교회 목사)
이철향 (신임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용석 (신임 : 동아일보 논설위원)
한승조 (신임 : 고려대 교수)

4. 북적, 한적의 대화재개 촉구를 또다시 외면

북한측은 남북직통전화를 재개하고 중단되어 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조속히 열 것을 제의한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담 정상화 노력을 또다시 외면하고 말았다.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남북직통전화를 9월 1일을 기해 재개할 것과 8년전 6차례의 파견원 접촉에 이어 처음으로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시작됨으로써 역사적인 남북적십자회담을 성사시킨 기념일인 9월 20일을 기해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제2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담을 다시 열 것을 지난 8월 11일 「8.12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8주년을 맞이하여 이호 총재 성명으로 북한적십자회측에 촉구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측은 지난 9월 1일 상오 9시에 남북직통전화로 북한적십자회측을 호출하였으나 북한측은 끝내 아무런 응답을 해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9월 20일 오전 10시까지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실무회의 재개제의에도 역시 일언반구의 응답이 없이 사실상 이들 모든 제의를 거부함으로써 남북적십자회담의 성공을 애타게 갈망하며, 이와 같은 대한적십자사의 또 한번의 촉구에 귀추를 주시하던 남과 북의 1천만 이산가족들을 낙담시켰으며, 그들의 염원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돌이켜 보면 남북직통전화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 함께 공표되었던 「남북직통전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 설치되어 지난 1976년 8월 30일까지 5년 동안 남북관계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그러나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북한경비병에 의한 「도끼살인만행사건」을 저질르고 나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고, 뒤이어 8월 30일 동해에서 한국어선 제3신진호가 북한의 포함에 의해 납북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측이 이들 납북어부와 어선의 송환을 위한 북한적십자회의 협조를 요구하는 전화통화문을 발송하려는 과정에서, 북한적십자회측은 응답을 회피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직통전화를 단절시켰으며, 그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거듭된 재개제의에도 아랑곳없이 현재까지 불통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와 같은 북한적십자회측의 계속되는 대화부정적인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1972년 8월 25일 합의된 「남북적십자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1976년 8월 30일 단절된 이후에도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에 북한적십자회측을 호출하는 시험통화를 계속 시도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의 염원에 부응키 위한 성실한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이다.

이제는 서울과 「모스크바」 사이에도 전화통화가 실현되며, 중공에 사는 교포와도 서신교환을 자유롭게 하는 마당에 북한측은 같은 민족끼리 그것도 쌍방이 그 설치 및 운용에 합의를 보고 설치된 전화의 통화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이 비극을 직시하고 하루속히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를 개통하며 남과 북 사이에 대화를 연결함으로써 하루빨리 이산가족들의 비원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십자 실무회의의 재개문제만 하더라도 1971년 9월 20일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처음으로 시작되고 약 1년만에 본회담이 개최되어 그 이후 약 1년간 서울·평양을 오가며 7차례의 본회담이 열렸으나 1973년 8월 북한측의 이른바 김영주의 「8·28성명」으로 일방적으로 중단되자 판문점에서 간신히 대화의 명맥만을 유지해오던 유일한 통로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8년 3월 북한측이 이 실무회담마저 거부해 버림으로써 남북간의 일절의 접촉이 단절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일찌기 대한적십자사는 중단된 본회담을 재개하기 위하여 1973년 11월 15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8차 본회담을 연내에 개최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한 세부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락책임자회의」를 개최하자』고 북측측에 제의했으며 그에 따라 동년 11월21일 쌍방 연락책임자 사이에 회담재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이 이루어진 결과 남북간에는 본회담 중단후 4개월만에 비로소 판문점에서 「대표회의」가 약 6개월에 걸쳐 7차례 개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대표회의」에서 남북 쌍방은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개최에 합의를 봄으로써 1974년 7월 1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 교체수석대표를 책임자로 하는 제1차 실무회의가 열려 「본회담 의제의 예비적 토의」와 「본회담 재개문제」를 토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실무회의는 1977년 12월 9일까지 4년여에 걸쳐 25차례 진행되었으나 북측측의 무성의로 아무런 성과도 이룩하지 못한 가운데 회담의 성공을 비는 내외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형식적으로 참석해 오던 북한측은 마침내 1978년 3월 20일로 예정된 제26차 실무회의를 하루 앞둔 3월 19일 「평양방송」을 통해 영똥하게도 한·미 합동군사훈련(「탐·스피리트」78)을 구실로 제26차 실무회의를 「무기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그나마도 중단되고 만 것이다.

북한적십자회측은 금번 대한적십자사의 제의와 대화촉구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묵살시킴으로써 그들의 적화통일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도적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다시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정주년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은 북한측의 대화부정태도에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한적대표단은 인도적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가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하며, 또한 남북적십자회담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강조하며 적십자 실무회의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아무쪼록 북한측은 하루빨리 대화의 광장에 나와 적십자 인도주의사업에 성실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대변인의 성명문 전문이다.

대한적십자사 대변인성명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8월 11일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8주년을 맞이하여 이호 총재의 성명으로 북한적십자회측에 제2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9월 20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동 성명에서 지난 9월 1일 기하여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의 운영을 재개할 것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하고자 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이와 같은 제의와 요구는 전 민족의 염원인 남북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성실한 입장과 꾸준한 노력의 표시인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북한적십자회가 우리의 제의와 요구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가 재개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 직통전화도 재개통되지 못한데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적십자회측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1978년 3월 20일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제2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연기 시킴으로써 남북간 대화의 마지막 통로이었던 인도적 차원의 접촉마저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역사적인 「8. 12 제의」로 남북적십자회담이 성립된 이래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그간 판문점에서 1년간의 예비회담, 서울과 평양에서의 1년간의 본회담, 그리고 다시 판문점에서 4년 5개월간의 실무회의 등 전회담과정을 통하여 인내와 성실한 자세로 1천만 이산가족들의 인도적인 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왔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이와 같은 일관된 노력은 우리가 제의한 제안들속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우선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하여 수십년간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삼인의뢰서 교환, 민족의 고유한 명절에 부모님들의 산소를 찾아 제사 드리자는 남북 이산가족 성묘방문단의 상호교류, 우선적으로 60세 이상된 노부모님들과 그 가족들이 서로 오가고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노부모 상봉 및 서신교환, 판문점에 이산가족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 설치, 이산가족들의 사진교환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회담재개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측은 그동안 적십자 국제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였고, 또한 쌍방 적십자회담 수석대표간의 면담과 쌍방 적십자 총재회의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들 사이에는 대화와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존중하고 인도적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과 학술, 체육,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인적, 물적 교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련과의 국제전화를 개통하였고, 또한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과 소포우편물 교환을 개시하였으며, 한·소 학자간에 해한류에 관한 공동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중공이나 소련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상호 편지를 교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또한 수많은 재일 조총련계 동족들이 추석을 비롯한

명절에 모국을 다녀갔으며, 이번 추석에도 많은 해외동포들이 모국을 찾아 올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남북한간의 이산가족들은 편지 한 장 주고 받지 못하고 서로 오갈 수 없단 말입니까?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인도적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적 제반 장벽을 초월하여 남북간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인도적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가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어떠한 난관과 시련이 계속 되더라도 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게 될 그날이 오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북한적십자회측에 남북적십자회담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음을 재삼 강조하면서 북한적십자회측의 긍정적 반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4부 자료편

※ 남북적십자회담의 경과

<본 자료는 남북대화의 경과와 현황을 연구 및 참고함에 있어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적십자회담의 경과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가. 회담의 성립과정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는 1천만에 달하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전개할 것과 이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이 「8. 12」 제의는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구체화한 조치로서 장기간의 분단과 긴장된 적대관계속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민족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통일에의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 국토분단 이후 남과 북사이에 있는 가장 획기적 조치였다.

대한적십자사의 「8. 12」 제의에 대해 북한적십자회(북적)는 이를 후인 8월 14일 이의 수락을 통고해 왔다. 그 결과 1971년 8월 20일 분단이후 4반세기만에 남과 북사이에 인도주의의 가교를 놓기 위한 남북 적십자 파견원간의 역사적 공식 대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그후 9월 16일까지 도합 5차례의 접촉 끝에 1971년 9월 20일부터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적십자 예비회담이 시작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8·15선언」 및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성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정희 대통령의 8·15선언>

1970.8.15 (8.15 경축사)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고, 남북간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 용의표명과 선의의 경쟁 제의.
----------------------	--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 특별성명>

1971. 8. 12 (한적회의실)	○적십자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간의 순수한 인도적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남북이산가족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의 소식을 알려주며 재회를 알선하는 가족찾기 운동만이라도 우선 전개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간의 가족찾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적십자 대표가 한자리에 마주 앉아 회담할 것을 제의한다. —둘째, 본회담의 절차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늦어도 오는 10월안으로 「제네바」에서 예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	--

나. 예비회담 경과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은 1971년 9월 20일부터 1972년 8월 12일까지 도합 25회의 공개 전체회의와 16회의 비공개 실무회의 끝에 종결되고 1972년 8월부터 본회담으로 이어졌다.

예비회담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비회담 1차~25차 (공개전체회의)	1971.9.20~1972.8.11 (관문점중감위회의실)	○ 한적대표 수석대표 김연주 교체수석 박선규 대 표 정홍진 대 표 정희경 대 표 정주년 ○ 북적대표 단 장 김태희 부단장 김덕현 단 원 조명일 단 원 리종학 단 원 서성철
의제문안실무회의 1차~13차 (비공개)	1972.2.21~1972.6.5 (관문점중감위회의실)	○ 한적대표 정홍진 정주년 ○ 북적대표 조명일 리종학
기타진행절차실무회의 1차~3차 (비공개)	1972.7.27~1972.8.9 (관문점중감위회의실)	○ 한적대표 정주년 ○ 북적대표 리종학

예비회담에서 이루어진 주요 합의사항은

- 1) 관문점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 2) 남북직통전화 가설
- 3) 본회담 장소, 의제, 절차
- 4) 본회담 대표단 구성 등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합의사항>

구분	차별	내용
상설연락사무소 및 직통전화설	1차 (1971. 9. 20)	○관문점내 「자유의 집」 과 「관문각」 에 각각 사무소 설치 ○쌍방 사무소간 직통전화 가설 운용
본회담 장소	3차 (1971. 10. 6)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
본회담 의제	20차 (1972. 6. 16)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5)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본회담 대표단 구성	25차 (1972. 8. 11)	○쌍방 각기 54명 —대 표:7명 —자문위원:7명 —수행원:20명 —취재기자:20명 (※제3차 본회담에서 취재기자 5명 추구기로 쌍방합의)

<쌍방 본회담 대표단, 자문위원 구성 현황>

○ 대 표 단

한 적<1972. 8.~1973. 3.>

- 수 석 대 표 이 범 석 (한적 부총재)
- 교체수석대표 김 연 주 (한적 총재 보좌역)
- 대 표 김 달 술 (한적 회담사무국장)
- ” 박 선 규 (한적 충남 지사장)
- ” 정 회 경 (이화여고 교장·여)
- ” 정 주 년 (한적 대변인)
- ” 서 영 훈 (한적 청소년 부장)

북 적<1972. 8.~1973. 5.>

- 단 장 김 태 희 (북적 부위원장)
- 부 단 장 주 창 준 (북적 서기장)
- 대 표 조 명 일 (북적 상무위원)
- ” 궁 상 호 (북적 참사)
- ” 이 청 일 (북적 상무위원·여)
- ” 한 시 혁 (북적 문화선전부장)
- ” 김 수 철 (북적 계획부부부장)

한 적<1973. 3.~1979. 8.>

수 석 대 표 지 연 태 (한적 부총재)

※ 1976. 3. 9 교체

- 교체수석대표 김 연 주 (한적 총재 보좌역)
- 대 표 김 달 술 (한적 회담사무국장)
- " 정 주 년 (한적 대변인)
- " 김 유 갑 (한적 운영위원)
- " 이 병 호 (한적 운영위원)
- " 최 문 현 (한적 청소년 자문위원)

북 적<1973. 5.~1975. 1.>

- 단 장 김 태 희 (북적 부위원장)
- 부 단 장 주 창 준 (북적 서기장)
- 대 표 조 명 일 (북적 상무위원)
- " 김 련 주 (북적 참사)
- ※ 1973. 5. 9 교체
- " 이 청 일 (북적 상무위원)
- " 한 시 혁 (북적 문화선전부장)
- " 김 수 철 (북적 계획부 부부장)

한 적<1979. 8. 11 개편>

수 석 대 표 소 상 영 (한적 부총재)

※1979. 5. 1 교체

- 교체수석대표 김 연 주 (한적 총재 보좌역)
- 대 표 이 병 호 (한적 회담사무국장)
- " 송 한 호 (한적 홍보위원)
- " 정 주 년 (한적 대변인)
- " 최 문 현 (한적 청소년 자문위원)
- " 조 철 화 (한적 청소년부장)

북 적<1975. 1.~1979. 8.>

- 단 장 김 태 희 (북적 부위원장)
- 부 단 장 주 창 준 (북적 서기장)
- 대 표 서 성 철 (북적 지도원)
- ※1975. 1. 24 교체
- " 김 련 주 (북적 참사)
- " 이 청 일 (북적 상무위원)
- " 한 시 혁 (북적 문화선전 부장)
- " 김 수 철 (북적 계획부 부부장)

○ 자문위원

한 적<1972. 8.~1973. 3.>

김	준	엽 (고려대 교수)
양	홍	모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	준	규 (서울대 교수)
구	범	모 (서울대 교수)
조	덕	송 (조선일보 논설위원)
송	건	호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상	열 (남북적십자회담 후원회 간사)

북 적<1972. 8.~1973. 3.>

윤	기	복 (「노동당」 대외연락위 부위원장)
김	성	률 (「민주당」 부위원장)
강	장	수 (「천도교 청우당」 부위원장)
김	길	현 (「조국전선」 서기국 부국장)
백	남	준 (「직맹」 부위원장)
오	광	택 (「사노청」 부위원장)
김	병	식 (「조총련」 제1부의장)

한 적<1973. 3.~1979. 8.>

조	덕	송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	봉	식 (서울대 교수)
고	영	복 (서울대 교수)
김	진	복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	중	하 (연세대 교수)
손	제	석 (서울대 교수)
이	상	렬 (남북 적십자회담 후원회 간사)

북 적<1973. 3.~1979. 8.>

윤	기	복 (「노동당」 대외연락위 부위원장)
김	성	률 (「민주당」 부위원장)
강	장	수 (「천도교 청우당」 부위원장)
김	주	철 (「조국전선」 서기국 부국장)
		※1973. 3. 21 교체
백	남	준 (「직맹」 부위원장)
오	광	택 (「사노청」 부위원장)
박	재	로 (「조총련」 부의장)
		※1973. 3. 21교체

한 적<1979. 8. 11 개편>

조	덕	송 (조선일보 논설위원)
---	---	---------------

박 봉 식 (서울대 교수)
 김 동 길 (전 연세대 교수)
 박 조 준 (영락교회 목사)
 이 철 경 (한국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 용 석 (동아일보 논설위원)
 한 승 조 (고려대 교수)

북 적<1979. 8.~>

윤 기 복 (「노동당」 대외연락위 부위원장)
 김 성 룰 (「민주당」 부위원장)
 강 장 수 (「천도교 청우당」 부위원장)
 김 주 철 (「조국전선」 서기국 부국장)
 백 남 준 (「직맹」 부위원장)
 오 광 택 (「사노청」 부위원장)
 박 재 로 (「조총련」 부의장)

다. 본회담 경과

남북 적십자 본회담은 1972년 8월부터 1973년 7월까지 도합 7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일자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차 수	일시	장 소
제1차	1972. 8. 29~ 9. 2	평양
제2차	1972. 9. 12~16	서울
제3차	1972. 10. 23~26	평양
제4차	1972. 11. 22~24	서울
제5차	1973. 3. 20~23	평양
제6차	1973. 5. 8~11	서울
제7차	1973. 7. 10~13	평양

제 1, 2차 본회담은 국토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왕래라는 벽찬 감격으로 말미암아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행사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제3차 본회담에서부터 남북 적십자회담 쌍방대표들은 의제 제1항에 대한 토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회담에 임하는 자세에는 당초부터 커다란 차이가 있었고, 쌍방의 주장은 회담초기부터 대립되어 공진만 거듭했다.

회담에 임하는 쌍방의 자세 및 회담에서의 쌍방제안은 아래와 같다.

	한 적	북 적
쌍방자세	○순수 적십자, 인도주의에 입각한 이산가족 심인사업 방식을 제시하는 적극적 자세	○적십자회담을정치선전장으로물고 가려는 태도노정—김일성우상화와공산주의선전일관
쌍방제안	○ 남북한의 분단현실을 고려, 의제1항의 사업 실천방안은 적십자 국제위원회(ICRC)가 권장하는 국제적십자 심인사업 방식에 따라 쌍방 적십자가 각기 자기측 지역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가운데 「심인의뢰서」와 「심인회보서」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을 제의 ○ 의제1항의 사업은 적십자 인도주의와 중립주의에 입각해서 추진하며, 이산가족, 친척들을 위한 사업은 당사자분위여야 하고, 단절된 혈연적 유대를 회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혈연적 성격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사업추진 원칙으로 제시.	○의제1항의실질적토의를거부하고 이에앞서 「법률적조건과사회적 환경론」을내세워대한민국의법률, 정치제도및사회관습마저뜯어고치는문제를적십자회담에서논의해야한다고주장(대한민국의반공법 국가보안법철폐, 반공활동중지및 반공단체해체주장) ○의제1항의사업에는쌍방적십자기관이개입하지말고 『당사자들이직접자유롭게남북을오가면서찾아내고알아내게하자』고주장,리동단위에1명씩 「요해해설위원」을과건할것을제의(즉, 대한민국내에서공산주의선전을하겠다는의도)

이러한 남북 쌍방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말미암아 본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은 전혀 없었다. 매차 본회담에서 제기된 쌍방의 제의 및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 적	복 적
1차 (1972.8.30)	—의제 5개항 확인채택 (* 제20차 예비회담시 합의)	—의제 및 회담자세 ○의제 5개항을 채택(*한적안과 동일) ○ 7·4공동성명, 동포애, 호상협조 및 이해,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 통일에 이바지 하자.
2차 (1972.9.13)	—기구설치 ○ 회담운영 실무협의를 위해 「남북적십자실무소위원회」 설치제의(판문점) ○ 합의사항 수행위해 「남북적십자 공동사무국」 설치및 「연락사무소」 흡수제의	—5개 원칙, 기타 ○ 민주, 자유원칙, 동포애, 적십자 인도주의 구현과 각계의 지원 호소 ○ 이해조성, 대단결, 통일에 기여요구
3차 (1972.10.24)	—의제1항 사업방안 ○ 절차: 심인의뢰서, 심인회보서 교환(쌍방적십자 주관) ○ 서식: 동일서식(*양식 수교) ○ 기구: 남북적십자 판문점 사업소 ○ 개시: 의제1항 합의 1개월내착수	—의제1항 사업방안 ○ 법률적, 사회적조건 및 환경조성 ○ 요해해설인원 파견 ○ 범위:본인의 호소에 따름 ○ 방도:본인의 요구, 의사에 따름 ○ 기구: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 및 필요한 곳에 「적십자 대표부」
6차 (1973.5.9~10)	○ 회담사업 적극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방침임. ○ 정치문제, 적십자회담 토의사항 아님. ○ 쌍방대표단의 순조로운 서울, 평양왕래로 실증됨. ○ 적십자 자율성실명(자기 지역내 사항의 자율적 처리) ○ 사업상의 파생문제 처리는 이미 합의된 공동사업소에 위임하면 됨 ○ 당사자간 상호확인 ○ 제일동포 포함 원칙동의, 단 의제 제5항 사항임 ○ 당사자의 자유왕래는 사실상 실천가능성 없음. ○ 문서교환 방식에 의한 확인이 현실적임.	—의제1항 사업 구제안 1. 조건환경 개선 ○ 반공법, 보안법 등 법규철폐 ○ 전쟁, 공포분위기 조성, 민족대립 고취 금지 및 그러한 단체 해체 ○ 사업참가자간에 모든 활동의 자유 및 인신, 휴대품 불가침권 인정. ○ 정당, 사회단체 공공기관 개인들의 사업협조 조건 보장 2. 요해해설인원 파견 ○ 리(동)당 1명, 시, 군(구역)단위 활동 ○ 임무:이산가족, 친척의 실태 요해, 신뢰, 화목, 대단결, 분위기조성, 해설, 사업진행, 효과적 사업 방도연구 제기 ○ 모든 활동의 자유, 인신, 휴대품 불가침권 인정 3. 가족, 친척의 범위 ○ 본인의 호소에 따르며, 제일동포 포함 4. 사업 방도 ○ 당사자의 상대방지역 자유왕래를 기본 방도로 함 ○ 당사자가 요구하는 간접적 보충적 방도도 적용 가능
7차 (1973.7.11~12)	—추석성묘 방문단 교류 ○ 올해의 당면사업으로 「추석성묘방문단」 구성하여 상호방문 ○ 대표 2명, 수행원 3명으로 실무자회의 구성, 구체적 협의	—공동성명 채택안 제시 ○ 반공법, 보안법, 반공법규철폐 ○ 반공활동금지, 반공단체 해체 ○ 각계의 사업참여 보장, 사업참가자에 인신, 휴대품 불가침 및 모든 활동 자유와 편의 보장 ○ 현 군사적 대치 및 긴장상태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 당국으로 하여금 이상 조항의 실현을 법적, 행정적으로 조치, 담보 이를 내외에 선포

2. 회담의 교착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남북간의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고 오직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를 바탕으로 회담을 성취시킴으로써,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기쁨을 안겨주고, 나아가 이를 디딤돌로 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내와 성실로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 회담을 공산주의 정치선전과 공산당의 혁명논리에 이용하려는 북한적십자회측의 기도가 노골화됨에 따라 남북 적십자 본회담은 형식적인 회담만을 거듭했을 뿐 내용상으로는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1973년 8월 28일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대화중단을 선언한 소위 「김영주 성명」 이후로는 북한적십자회는 본회담 개최조차 불응함으로써, 서울·평양 왕래의 길은 다시 폐쇄되었으며, 겨레앞에 공약한 인도주의적 이산가족 찾기 사업은 오늘 이 시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3. 대한적십자사의 회담재개 노력

가. 대표접촉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측에 의해 서울—평양 왕래의 길이 차단된 이후에도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이러한 대한적십자사의 노력에 힘입어 남북적십자 쌍방간에는 1973년 11월 28일부터 1974년 5월 29일까지 사이에 도합 7회의 「대표접촉」이 한적대표 김달술, 북적대표 조명월 간에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대표접촉에서 쌍방은 「본회담 실무회의」 개최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1974년 7월부터 1977년 12월 까지 25회의 「본회담 실무회의」가 진행되었다.

대표접촉에서의 쌍방 주요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쌍방주요합의사항>

구분	차 별	내 용
실무회의 개최	6 차 (1974. 5. 22)	○교체수석대표를 책임자로 하는 실무회의 개최 (장소: 판문점) ○의제:본회담 의제(예비토의)및 본회담 재개 문제
실무회의 일자, 구성 운영절차	7 차 (1974. 5. 29)	○제1차 실무회의:1974. 7. 10 10:00 ○장 소:중감위회의실 ○구성: 교체수석대표(부단장)및 대표 2, 수행원 4명 ○회의형식: 비공개원칙, 필요시 합의로 공개 ○기 타:연락단장간 협의, 결정

나.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1) 진행과정

판문점에서 진행된 실무회의는 1974년 7월 10일부터 1977년 12월 9일 사이에 25회의 회의를 거듭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으며, 그나마 1978년 3월 20일로 예정되었던 제26차 실무회의에 북한측이 아무런 합당한 이유없이 불참하므로써, 남북간의 유일한 대화창구 역할을 하던 실무회의는 유산되었고 이로써 남북적십자간의 접촉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실무회의의 쌍방 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한적:김연주
김달술
정주년

북적:주창준

조명일(7차회의부터 서성철로 교체되었다가 17차부터 다시 정재일로 교체됨)

김련주

※ 남북직통전화의 단절

북한측은 남북간 합의에 의해 약 5년간 아무런 사고없이 운용되어오던 남북적십자간의 직통전화마저 1976년 8월 30일 단절시켜버렸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살인사건과 8월 30일 동해에서 한국어선 제3신진호가 북한 포함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납북어부와 어선의 송환을 위해 북한적십자회의 협조를 요구하는 한적의 전화통지문 전달을 위한 통신을 하던 중 북적측 연락관이 불응하므로써 그 이래 남북직통전화는 단절되고 있다.

(2) 쌍방 주요제의 및 요구사항

본회담 재개문제와 본회담의 예비적 토의를 위해 진행되었던 실무회의는 쌍방의 대립된 주장으로 인해 매회 차기회의 개최일자에 대한 합의를 하는 외에는 아무런 합의사항없이 남북대화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가) 대한적십자사의 제의

대한적십자사는 실무회의 기간동안 중단된 본회담의 무조건 재개와 본회담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본회담 의제 제1항에 대한 예비적 토의를 진행시킬 것을 북적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긴급하고 실천가능한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리적 사업방안을 제의했다.

(1) 우선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재회를 실현하는 문제

(2) 이산가족 면회소 및 우편물 교환소를 판문점에 설치하는 문제.

(3) 추석, 구정 등 우리 나라의 민족적 명절을 기해 남북 이산가족들의 성묘방문단 교환문제.

(4) 만약 노부모사업의 즉각적인 실현이 어렵다면 우선 가족들의 사진교환만이라도 실시할 것.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본회담 실무회의의 교착상태 타개와 중단된 본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1973년 1월 26일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쌍방 수석대표 간에 면담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

(나) 북적의 주장

그러나 북적측은 대한적십자사의 합리적이고 명분있는 제의를 무조건 거부하고 인도주의적적십자회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적 선전만을 되풀이했다.

북한적십자회측은 남북한간에는 정치문제의 해결이 선결문제로, 다루어져야 하고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통일문제해결에 수반하여 이루어져야 되며, 이산가족문제해결에 앞서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의 활동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의 엉뚱한 주장을 고집했다.

북적측은 이미 합의한 의제토의에 앞서서 주한미군 철수, 한국군 현대화 계획 중단, 대한민국의 반공정책 중지 등을 요구해옴으로써 적십자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끝내 거부했던 것이다.

다. 대한적십자사의 일관된 노력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실무회의마저 무기한 중단된 상황하에서도 1천만 이산가족들의 비원을 풀어주어야만 한다는 일념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직접, 간접으로 북한적십자회측에게 이성회복을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했다.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노력은 아래와 같다.

- (1)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6주년에 즈음한 대한적십자사 총재담화(1977년 8월 12일): 북한적십자회측이 동포애와 적십자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
- (2)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7주년에 즈음한 대한적십자사 총재담화(1978년 8월 12일):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의 정상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판문점, 서울, 평양, 혹은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쌍방 적십자총재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
- (3)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8주년에 즈음한 대한적십자사 총재성명(1979년 8월 11일): 남북적십자회담 정상화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79년 9월 20일을 기해 제26차 적십자 실무회의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과 9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해 중단상태에 있는 적십자 직통전화와 판문점 연락사무소 운영을 재개할 것을 제의.

그러나 북한적십자회는 이러한 대한적십자사의 제의에 무응답 또는 묵살로 일관하므로써 이산가족들의 재회의 소망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적십자회담에 임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입장은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동포에 대한 사랑과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의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간에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실되었던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민족의 재결합과 통일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자는 것이다.

남북간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기필코 성취하겠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노력은 그 결실을 맺을 때까지 꾸준히 계속 될 것이다.

남북대화 제23호

(1979. 10 ~ 1980. 6)

< 목 차 >

제1부 남북실무대표접촉의 성립	3
1. 실무대표접촉의 성립과정	3
가. 「모스크바 올림픽」 관계 서한 왕래	3
나. 북한측의 「변칙통화」 기도	4
다. 북한측의 대남 「편지」 접수	5
라. 실무대표접촉 성립과 대표단구성	9
2. 남북한 총리회담과 대한민국 입장	13
제2부 남북실무대표 접촉의 경과	15
1. 제1차 접촉	15
2. 제2차 접촉	19
3. 제3차 접촉	21
4. 제4차 접촉	22
5. 제5차 접촉	25
6. 제6차 접촉	26
7. 제7차 접촉	27
8. 제8차 접촉	36
제3부 남북실무대표 접촉의 쟁점	42
1. 총리회담의 장소문제	43
2. 총리회담의 의제문제	46
3. 총리회담의 호칭문제	53
제4부 자료편	55
1. 남북대화 주요 일지	55

제1부 남북실무대표접촉의 성립

1. 실무대표접촉의 성립과정

가. 「모스크바 올림픽」 관계 서한 왕래

1980년 7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제22차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앞두고 북한측은 작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평양방송」과 「중앙방송」을 통하여 『제22차 국제올림픽 경기대회에 남북 공동체육단을 구성하여 「민족유일팀」으로 출전할 것』을 제의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80년 1월 17일 평양이나 서울, 또는 판문점에서 남북의 체육인 대표들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겸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유순 명의의 「편지」를 보도했다.

이에 대하여 작년 12월 24일 박종규 대한체육회회장은 『아직까지 북한측 서신을 접수하지 못했으며, 서신이 접수되는 대로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한 후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북한측은 12월 26일 정오에 그들의 방송을 통해 돌연 북한올림픽위원회겸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남조선측은 이례적으로 우리의 편지를 접수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편지를 받은 후 자기측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를 들어 『1979년 12월 27일 낮 12시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파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해 왔다.

이에 접한 대한체육회의 위임에 의하여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북한측 「편지」를 접수, 전달했다.

이같은 북한측 「편지」를 접수한 대한체육회는 1980년 1월 11일 낮 12시에 판문점에서 남북조절위원회 연락관을 통해 북한측에 회답 서한을 전달했다.

대한체육회 박종규회장은 동 회관에서 『남북한간의 단일 올림픽선수단 구성은 그에 앞서 쌍방간의 상당한 신뢰의 축적과 체육교류의 실적이 없이는 그의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금년 여름으로 박두한 「모스크바」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남북한 단일선수단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 체육인간의 회담은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회장은 『지난해 5월 평양에서 열린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남북한 단일선수단 구성문제를 놓고 이루어진 남북한 체육인 간의 회담을 이용하여 우리측 선수들의 동 대회참가를 좌절시킴으로써 오히려 남북간의 불신감만을 조장시켰던 사실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북한측 제의를 일축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상호 신뢰의 조성을 위해 남북한간에 전반적인 체육교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입각하여 북한측이 동의한다면 금년 중 어느 때이든지 남북한 쌍방이 합의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서울과 평양에서 친선교환경기를 가질 것을 희망하는 한편 「모스크바」 올림픽대회 이후에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남북간의 전반적 체육교류문제를 다루기 위해 남북한 체육대표들이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

한편 이와같은 대한체육회의 회함에 접한 북한측은 지난 1월 21일 또다시 대한체육회의 회신내용을 왜곡·비방하면서 그들이 요구해 온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인 회담을 2월 1일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내용의 두번째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 제의에서 일자와 장소만 언급했을 뿐 회담개최시간, 참가범위, 회의절차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북한 올림픽위원장 김유순의 두번째 편지에 대하여 1월 29일 회함을 보내고 『「모스크바」 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문제는 올림픽을 불과 6개월 앞둔 현지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하면서 『북한측은 더이상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논란을 그만두고 먼저 남북간 체육교류에 동의함으로써 상호신뢰조성과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반구축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나. 북한측의 「변칙통화」 기도

대한체육회가 북한측의 체육대표회담 제의를 거부하는 첫번째 회함을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연락관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한 4시간 후인 1월 11일 오후 4시에 북한측은 「평양방송」을 통하여 「조선중앙통신사」명의로 『최근 평양과 서울 사이의 직통전화로 남조선측에 거둬 신호를 보냈으나 상대측에서 나오지 않은 관계로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사실과 다른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1980년 1월 11일 오후 6시를 기해 직통전화를 새롭게 개통하겠다』는 일방적인 통고를 해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측은 1976년 8월 18일 「관문점 도끼만행」 사건 직후인 1976년 8월 30일 남북직통전화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바 있다. 그 이후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과 대한적십자사는 여러차례에 걸쳐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직통전화의 재개통과 관문점 상설연락사무소의 기능 회복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에 불응해 왔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과 대한적십자사는 이같은 북한측의 방송보도에 따라 1월 11일 오후 6시부터 남북간의 기존 합의문서인 「남북직통전화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적십자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 합의서」에 의거하여 남북간에 상설되어 있는 4개의 직통전화회선(서울·평양간 남북조절위원회 1. 적십자사 2. 기계실 1회선)으로 북한측의 호출신호를 기다렸다.

그러나 북한측은 그들이 예고한 오후 6시를 훨씬 넘었을 뿐 아니라 남북간의 합의문서에 의한 전화운용종료시간인 오후 8시 마저 넘긴 오후 8시 7분에 남북조절위원회 회선으로 호출신호를 보냈으며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통화자가 신호에 응답하자 북한측 통화자는 자신을 「평화통일위원회」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서울측 통화자에게 통화내용을 필기할 것을 요구했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통화자는 통화가 이루어진 전화회선이 남북조절위원회 회선이며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 동 회선을 통한 통화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지정된 통화자만이 할 수 있다는 남북간의 합의사실을 지적, 북측의 합당한 통화자가 나올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 통화자는 이를 거부한 뒤 오후 8시 12분에 일방적으로 통화를 중단시켰다.

『최근 평양측의 직통전화 호출에 서울측이 응하지 않았다』는 지난 1월 11일자 북한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과 대한적십자사는 그동안 직통전화의 불통기간중 매일 아침 규정된 시험통화 시각에 북한측을 호출했으며 또 매일 24시간 북한측의 호출신호를 기다리면서 이에 관한 감청기록을 녹음 「테이프」로 유지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1월 11일 오후 8시 7분까지 최근 북한측이 직통전화의 호출신호를 보내 온 사실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간의 통화는 불통 3년 6개월여만에 이루어졌으나 북한측의 변칙통화기도로 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당시의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 : 서울입니까? 여기 평양입니다.
남 : 서울입니다. 평양 누구십니까?
북 : 평화통일위원회 직원입니다.
남 : 평화통일위원회 직원이 왜 남북조절위원회 전화에 나왔습니까?
북 : 위임을 받았어요, 받아 적으세요.
남 : 남북조절위원회 위임입니까?
북 : 받아 보면 압니다.
남 : 남북조절위원회로 보내주시면 받겠습니다.
북 : 읽을 테니 들으시오.
남 :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나왔다고 말하세요.
북 : (전화중단)

다. 북한측의 대남 「편지」 접수

북한측은 남북직통전화의 변칙개통을 시도한 지 3시간 후인 1980년 1월 11일 오후 11시 15분 「조선중앙통신사」 명의로 방송을 통해 『통일과 관련된 중대한 제안을 담은 편지를 남측에 전달하기 위하여 1980년 1월 12일 오후 2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내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하여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1월 12일 오전 11시에 그들의 방송통고가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점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먼저 이에 대한 명시를 요구했으며, 북한측이 동일 오후 1시경 방송을 통해 이를 해명해 음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오후 2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에 파견하여 북한측의 편지를 받아왔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이동복대변인은 1월 14일 오전 11시 이같은 북한측의 편지를 받은 사실과 함께 북한측의 편지는 신현확 국무총리(당시)앞으로 보내는 북한측 「정무원총리」이종욱의 편지와 북한측 「부주석」겸 「노동당 비서」이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인 김일이 우리측 정계등 11명의 인사앞으로 보내온 11통의 편지였음을 발표했다.

북한측은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호칭을 사용했으며 북한측이 편지를 보낸 11명의 국내인사는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 정일권 민주공화당 총재상임고문, 김영삼 신민당 총재, 양일동 민주통일당 총재, 김철 통일사회당 고문, 안필수 통일사회당 위원장, 윤보선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의장」, 함석헌(상동), 김대중(상동) 등 이었다.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보내온 북한 「정무원총리」이종욱의 편지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북과 남의 당국자들은 마땅히 민족적 자각을 높이고 우리 조선사람끼리 합작하고 단결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으로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북과 남 사이에는 제도 와 이념의 차이도 있고 오해와 불신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차이점과 과거를 논하지 말고 하루빨리 북과 남이 대화를 재개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대화가 다시 열린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폭넓은 정치협상회의와 함께 북과 남의 당국자 회담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고위당국자 회담도 성숙시켜 나갈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우리는 귀하와 직접 만나 격의없는 의견을 나누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의 접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장소는 판문점이나 평양 또는 서울도 좋으며 제3국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타 북한측의 편지내용은 『북과 남의 합작과 단결을 도모하며 통일위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남북정치협상회의와 함께 당국자회담도 할 수 있다.』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자.』 그리고 『장소는 판문점이나 평양 또는 서울도 좋으며 제3국도 무방하다』는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표명되었으며 수신자에 따라 「정치협상회의」와 「당국자회담」의 언급방법 등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는 바 「남북정치협상회의」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신현확총리와 김종필, 정일권, 안필수, 김수환,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 등에게는 「정치협상회의」, 김영삼에

게는 「폭넓은 대화, 나아가서는 정당, 단체, 당국자들간의 쌍무적, 다무적 접촉과 협상」, 양일동, 김철에게는 「전민족적 대화」 등으로 다소 상이하게 표현을 하였고 또한 지칭에 있어서도 여권인사에게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은 반면, 재야인사들에게는 각종 격려적인 지칭수사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표참조)

한편 북한측은 이와같은 편지들을 보내온 것과 관련하여 미국 등 해외에 있는 일련의 인사들에게도 1월 15일 개별적으로 편지를 발송했다고 1월 22일 방송들이 보도했다.

북한측 방송들은 북한 「부주석」이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의 명의로 된 이 편지는 장총명(재일 거류민단장)외 임창영, 김재준, 최덕신, 김재화, 윤이상, 최홍희, 김성락, 이상철, 이용재 등 미국, 일본, 서독 등에 거주하는 10명의 해외교포에게 발송됐다고 보도하고 이 편지에서 『대화과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제반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북한측의 편지공세는 작년 대한민국의 「1. 19」대북제외에 대응하여 소위 「조국전선」을 내세워 「전민족대회」의 소집을 요구했을 당시 북한측이 전개했던 편지공세와 같은 방법으로선전효과를 겨냥한 것이었다.

특히 이들 해외거주인사들의 대부분이 장총명 재일거류민단장을 제외하고는 이제까지 한결같이 반한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볼때 이번 남북한 총리급 접촉을 내세워 새로운 대화공세를 전개하는 북한측의 저의가 결코 생산적인 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처음부터 시사하고 있다.

표 <북한측의 편지내용 대비·분석>

대상 \ 구분	지칭수식어	당국자회담표현	기타
신 현 환 (대한민국 국무총리)	없음	이미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폭넓은 정치협상회의와 함께 당국자회담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고위 당국자회담도 성숙시켜 나갈 용의 있음.	북과 남의 당국자들은 마땅히 민족적 자각을 높이고 우리 조선사람끼리 합작하고 단결해서 통일을 실현하는 것으로 민족의 출로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임.
이 회 성 (육군 참모총장)	군의 요직에 있는 귀하		○ 동족간에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게 된다면…… ○ 남북사이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김 중 필 (민주공화당 총재)	없음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것이라면 이미 우리가 주장한 바 있는 폭넓은 남북 정치협상회의와 함께 당국자회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고위당국자회담도 성숙시켜 나갈 용의 있음.	
정 일 권 (민주공화당 총재 상임고문)	없음		○ 통일을 위한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있음. ○ 이미 우리가 내놓은 폭넓은 남북정치협상회의도 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당국자회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김영삼 (신민당 총재)	민주회복의 전례에 서있는 귀하	나라의 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구국대책으로서 북과 남의 정당단체들이 참가하는 폭넓은 대화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정당, 단체 당국자들간의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과 협상도 실현 할 수 있다고 간주함.	평화통일의 경륜을 마련할 유익한 상봉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
양 일 동 (민주통일당 총재)	남조선정계의 중진으로서 많은 체험을 쌓은 귀하	나라의 통일을 위한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번 제기했고 귀하도 명백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듯이 그것은 마땅히 당국들 뿐 아니라 북과 남의 모든 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폭넓은 전민족적 대화로 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와 동시에 당국자회담도 할 수 있을 것임.	민족의 중대문제를 상론할 뜻깊은 상담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대상 \ 구분	지칭수식어	당국자회담표현	기 타
김 철 (통일사회당 고문)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귀하	북과 남사이의 당국자들 뿐 아 니라 남북의 정당·단체들을 망라하는 전민족적인 대화로 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필요 하다면 당국자 회담도 할 수 있을 것임.	민족의 중대사를 상론할 귀하 와의 뜻깊은 상봉이 반드시 이 루어지기를 희망함.
안 필 수 (통일사회당 위원장)	남조선 정계에서 오래동안 활동하여 온 귀하	우리가 이미 제기한 바 있고 귀하도 주장한 바 있는 각당 각파와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폭넓은 정치협상회의도 할 수 있다고 보며 이와 동시에 필요 하다면 당국자회담도 할 용의 를 가지고 있음.	
김 수 환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회장)	민족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염려하여 마지 않을 귀하	북과 남의 정당·단체들을 포 함한 폭넓은 정치협상회의도 할 수 있고 동시에 당국자회담 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사랑이고 최고의 인도주의 임.
윤 보 선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의장)	노익장의 왕성한 기백으로 애국활동을 벌이고 있는 귀하	○ 북과 남이 합작하고 단결하 자면, 하루빨리 대화의 문을 열고 서로 격의없이 의사를 나 누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대화가 마련되면 북 과 남의 모든 정당·단체들과 각계인사들을 포함하는 폭넓 은 정치협상회의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당국자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봄.	
함 석 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의장)	재야의 중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귀하	폭넓은 남북정치협상회의도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당국 자회의도 할 수 있다고 봄.	
김 대 중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의장)	남조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여온 귀하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 함이라면 정당·단체들과 당 국을 포함한 폭넓은 남북정치 협상회의도 할 수 있고 동시에 당국자회담도 마련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	

라. 실무대표접촉 성립과 대표단구성

1) 남북한 총리간 서한 왕래

금년 1월 1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최규하대통령은 남북총리급 대화와 관련한 북한의 「이종욱 편지」를 긍정적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북한측은 남북한 총리끼리 서로 만나자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

본인은 이같은 북한측 태도는 그간 남북한간 책임있는 당국의 대화를 추진해 온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에 대해 북한 당국이 처음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온 것으로 우선 보고자 한다.

이미 관계당국에 남북총리간 대화를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을 밝혀두며 이에 따라 정부는 근일 중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북한당국에 통고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최대통령의 표명에 이어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국무총리실로부터 1980년 1월 12일 북한측 「정무원총리」 이종욱이 신현확 국무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내온데 대한 신총리의 회한을 북한측에 전달해 줄 것을 위임받고 이를 1980년 1월 24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절위원회 연락관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했다.

이종욱이 신총리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회한형식으로 전달된 이 서한에서 신현확 국무총리는 남북총리회담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차관급 수석대표를 포함한 3명의 실무대표와 약간명의 수행원으로 이루어지는 실무대표단을 구성하여 1980년 2월 6일 오전 10시 판문점내의 「자유 의 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첫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또한 이 서한에서 신총리는 북한당국의 정식 호칭을 사용했으며, 이에 대해 남북조절위원회 이동복 서울측 대변인은 『북한당국의 정식 호칭사용이 뜻하는 것은 북한측이 신총리에게 보낸 1월 11일자 「정무원총리」 편지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하는데 대한 오직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한 조치일 뿐 그 이상의 다른 법적·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현확 국무총리의 회한전문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1980년 1월 12일 귀하가 본인에게 보낸 서한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우리 겨레가 조국의 강토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지난날의 경험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평화통일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터전을 닦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실적을 착실하게 쌓아 올려 감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인도적 재회의 길을 열어 주며,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남북교류와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또한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회담을 가질 것을 거듭 제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서 본인은 남북의 총리가 조속히 직접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남북의 총리가 서로 만나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실무급 대표 접촉을

다음과 같이 가질 것을 귀하에게 제의합니다.

실무대표단의 구성 : 각각 차관급 수석대표를 포함하는 3명의 실무대표와 약간명의 수행원

접 촉 장 소 : 관문점내의 「자유의 집」 또는 쌍방의 합의하는 장소

첫 접 촉 일 시 : 1980년 2월 6일(수) 10:00

본인은 이상과 같은 본인의 제의에 대하여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측은 1980년 1월 2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로 신현확 국무총리의 남북총리회담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접촉제의에 대한 회신인 두번째 편지를 1월 30일 대한민국측에게 전달할 것을 발표했다.

1월 30일 접수된 동 「편지」에서 북한측 「정무원총리」 이종옥은 실무대표접촉을 2월 6일 오전 10시 관문점에서 갖자는 신총리의 1월 24일자 제의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 부부장겸 정무원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실무대표들과 2명의 기술인원을 2월 6일 오후 10시 관문점에 내보내겠다고 말하고 접촉장소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로 하자고 제의해 옴으로써 앞서의 신총리의 제의에 장소만을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로 바꾸었을 뿐 나머지 제의는 사실상 대한민국측의 원안대로 수락했다.

(2) 실무접촉 대표단구성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이동복 대변인은 2월 4일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북한측 「정무원총리」에게 보낸 1월 24일자 서신에서 남북의 총리가 만나는데 필요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80년 2월 6일 오전 10시 관문점에서 쌍방 실무대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한데 대하여 북한측이 이에 동의하는 서한을 보내 왔으므로 우리측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실무대표와 2명의 수행원을 1980년 2월 6일 오전 10시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로 내보낼 것』이라고 발표하고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신현확 국무총리가 서명한 신임장을 휴대할 것이며, 북한측 실무대표단도 북한측 이종옥 「정무원총리」가 서명한 신임장을 휴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같은 남북접촉을 위한 실무대표간의 신임장 교환은 3번째의 일로써 지난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의 합의를 위한 남북한 실무대표자 회담시 서울측은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신임장을, 평양측은 김영주 당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의 신임장을 각각 교환했으며,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서울측은 정홍진대표가 최두선 한적총재가 서명한 신임장을, 평양측은 김덕현이 손성필 북적중앙위원장이 서명한 신임장을 휴대, 교환한 바 있었다.

한편 남북쌍방은 2월 6일 개최케 되는 남북한 총리간 회담을 위한 첫 실무접촉에 참가할 실무대표단을 구성하고 2월 5일 발표했다.

1980년 2월 5일 오전 10시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대변인이 발표한 대한민국 실무대표단 명단

은 다음과 같다.

수석대표 : 김영주 (외무부 본부대사)

대 표 : 정종식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장)

대 표 : 이동복 (남북회담 사무국장)

한편 북한측은 1980년 2월 5일 오후 1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실무대표단을 발표했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석대표 : 현준극(「노동당중앙위원회」 부부장겸 「정무원」 참사)

대 표 : 백준혁(「정무원」 국장)

대 표 : 임춘길(「정무원」 국장)

또한 남북쌍방은 2명의 수행원을 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980년 2월 6일 오전 10시 남북한은 총리간 대화를 위한 제1차 실무접촉을 개최케 되었다.

2. 남북한 총리회담과 대한민국 입장

남북쌍방은 총리회담이라는 고위당국자회담을 갖기로 하고 그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간의 새로운 접촉은 표면상 지난 1월11일 북한 「정무원총리」 이종욱이 대한민국 국무총리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남북총리접촉을 제의하므로써 발단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대한민국은 1979년 1월19일 고 박정희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시기, 장소, 수준에 구애됨이 없이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회담을 가질것을 다음과 같이 북한측에 제의한 바 있다.

『……나는 어떠한 시기나 어떠한 장소에서나 또는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한 당국이 서로 만나서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을 막고 5천만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제반문제,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남북한이 제의해 온 모든 분야의 문제들을 직접 논의하기 위해서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같이 대한민국측이 오래전부터 대화재개를 촉구하며,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금반 북한측이 종래 「정치협상회의」나 「대민족회의」등을 내세워 대화를 거부해 오던 그들의 자세를 바꿔 남북쌍방의 총리간 대화를 희망한 것은 곧 대한민국의 「1·19」 대화제의를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측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의 재개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5천만민족의 번영을 추구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한다는 일관해온 기본정책에 입각하여 북한측이 희망한 수준에서 쌍방 당국간 고위회담을 성취시켰던 것이며, 이는 「1·19」 제의와 그 정신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월24일자 당시 신현확 국무총리의 대북서한에서 『우리 겨레가 조국의 강토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지난날의 경험이 말해주는 바와같이 평화통일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터전을 닦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실적을 착실하게 쌓아 올려 감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남북총리회담에 임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거의 대화경험이나 분단조국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할 때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남북대화 성립의 기본요건은 상호신뢰문제인 것이다.

오늘날 실효성 있는 남북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먼저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 진행과정에서 상호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참여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될 것이며, 따라서 장차 마련되는 남북 총리간 대화의 기회가 상호 선전목적에 이용됨이 없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결실을 이룩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대한민국은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 회담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북한측은 이번에는 지난날의 그릇된 자세를 버리고 성실하게 남북대화에 임함으로써 5천만 민족의 여망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제2부 남북실무대표 접촉의 경과

1. 제1차 접촉

남북한 총리회담의 구체적인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첫 실무접촉이 1980년 2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1시간 12분간 진행되었다.

이 실무대표 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김영주 외교부 본부대사를 비롯한 정종식 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장과 이동복 남북회담사무국장등 3명의 대표와 수행원 2명등 5명이, 북한측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겸 「정무원」 참사 현준국을 수석대표로 하고 「정무원」 국장 백준혁, 「정무원」 국장 임춘길로 구성된 3명의 대표 및 2명의 기술인원등 5명이 참석했다.

남북한 대표단은 서로 양측 총리가 서명한 신임장을 교환한 뒤 회의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실무대표단은 먼저 실무대표 접촉의 진행절차 문제를 거론하고 가장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 접촉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① 회의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② 다음 회의부터는 「자유의 집」과 「판문각」에서 윤번으로 개최하며 ③ 서로의 연락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남북직통전화선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양측이 지명하는 대표간에 상세한 실무적인 협의를 가질것을 제의하고 우리측의 실무대표로 이동복대표를 지명했다.

이에대해 북한측은 이날 회의를 공개로 하고 다음번 회의는 다시 협의하자고 하며 장소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직통전화문제의 협의를 위한 실무대표로 임춘길대표를 지명함으로써 남북직통전화의 효율적 이용문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가질것에 합의를 보았다.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첫 실무접촉에 임하는 기본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총리간의 대화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하는 이번 실무대표 접촉이 장기간의 대화단절상태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대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다지고 구체적 결실을 맺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우리측 대표단은 통일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실적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실무대표 접촉의 결실로 남북 총리간 대화가 진전되면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남북 총리가 만나는 데에 필요한 절차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남북총리간 대화절차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실무대표단의 제안

대한민국 실무대표단은 남북총리간의 대화가 조속한 시일내에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북총리간 대화의 절차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가. 대화의 일시

남북총리간의 대화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문제가 합의되는 대로 정한다.

나. 대화의 장소

남북총리간 대화의 장소는 「스위스」의 「제네바」로 한다.

다. 대화의 의제

남북총리간 대화의 의제는 실무접촉에서 합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희망한다.

라. 수행원 구성

쌍방총리가 각기 장관 또는 차관급 보좌관 2명, 차관보 또는 국장급 보좌관 2명과 기록, 통신, 연락, 공보에 필요한 실무요원 약간명을 대동한다.

마. 회의장 시설 및 표식

특별한 표식을 사용하지 않고 회의탁자 위에 쌍방 총리의 명패만 비치한다.

바. 남북총리간 대화의 기록

쌍방이 각각 편리한 방법으로 기록을 유지하며 속기사와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다.

사. 합의사항 처리

합의내용을 명기 2통씩의 문서로 작성하여 각기 서명한 문서를 1통씩 교환한다.

아. 대화의 공개여부

비공개로 하며 합의에 따라서는 쌍방총리간의 단독대화도 할 수 있다.

자. 보 도

각기 편의대로 행하며, 합의에 따라서는 공동보도도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측은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 나왔으면서도 『남북한 총리접촉은 정치인들과 정당인들의 다각적인 접촉의 일환으로써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북한측이 지난 1월 12일 이종욱의 편지에서 제시했던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 실현이 그들의 속셈임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첫 접촉부터 남북한간의 회담성격 규정을 둘러싼 견해차이를 드러내 주목되었다.

북한측은 이날 접촉에서 실무접촉의 절차문제와 관련하여 총리회담의 접촉장소문제등 다음과 같은 7개항을 제의했다.

- (1) 총리들의 접촉장소는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는 것이 좋다.
- (2) 수행인원과 구성은 보좌원, 전문인, 기술인원등 30명과 기자를 포함한 보도원 30명 등 60명으로
- (3) 회담대표들의 신변안전은 매회 접촉 때마다 각서를 교환하여 보장하고
- (4) 접촉형식은 공개, 비공개 등 필요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접촉하며
- (5) 보도는 과거의 대화경험을 살려 합의문이 작성되면 동시에 하고
- (6) 왕래절차와 체류일정은 4~55일 정도로 하고 상대측 인원에 대해서는 초청측이 책임을 지고
- (7) 총리들의 첫 접촉이 하루라도 일찍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실무대표접촉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다.

한편 실무대표의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측의 이동복대표와 북한측 임춘길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1시 55분까지 실무대표접촉이 있었던 같은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남북직통전화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들어가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남북직통전화를 재개기로 합의하고 실무접촉장소의 교환개최에 따른 「자유의 집」과 「판문각」간 왕래 등 절차문제를 토의했다.

이날 제1차 남북 실무접촉에서의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실무접촉 진행절차

○ 회의공개여부 :

제1차 접촉은 공개, 차후 접촉은 협의 후 결정한다.

○ 장 소 :

제1차 접촉은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차후 접촉은 「자유의 집」과 「판문각」에서 윤번으로 하되 제2차 접촉은 「판문각」에서 개최한다.

○ 직통전화 재개협의

대한민국측 이동복대표와 북한측 임춘길대표에게 실무협의를 위임한다.

(2) 제2차 실무대표 접촉일자

- 1980년 2월 19일 오전 10시 판문각에서 개최한다.

(3) 남북직통전화 운용(비공개접촉)

- 재개통일시:
1980년 2월 7일 오전 10시를 기해 11, 12번선을 개통한다.
- 운용시간 :
매일 오전 10시~오후 8시로 한다. (일요일, 토요일 오후, 쌍방 공휴일 제외)
- 통화자 :
쌍방 실무대표 및 수행원으로 한다.

(4) 접촉장소 교환개최에 따른 「자유의 집」 「판문각」 간 왕래등 절차문제(비공개접촉)

- 대표단 왕래방법 :
도보로 왕래한다.
- 기록 :
각기 주최측이 녹음선을 제공한다.
- 연락용 전화사용 :
접촉당일 오전 9시부터 귀환시까지 운용한다.
- 취재단 :
서로 제한하지 않는다.

2. 제2차 접촉

제2차 실무접촉은 1980년 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지난 제1차 접촉시 합의에 따라 판문점의 북한측 지역내에 있는 「판문각」 2층 회의실에서 2시간 30분동안 비공개회의로 개최되었다.

이날 남북한이 「판문각」에서 접촉한 것은 지난 1975년 3월 14일 남북조절위원회 제10차 부위원장회의 이후 만 4년 11개월만 이었다.

이날 실무대표 접촉에서 쌍방은 1차 접촉때 각각 내놓은 제안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여 남북한 총리회담의 공개여부, 합의서 작성 보도문제등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보았으나 가장 중요한 장소문제와 의제문제에 관해서는 현격한 이견을 보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협의키로 했다.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이날 접촉에서 장소문제에 관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몇 곳 중에서 어느 곳은 굳이 반대하고 어느 곳은 반드시 고집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북한측이 지난 1월 11일자 서한에서 장소는 「판문점이나 평양 또는 서울도 좋고 또 제3국도 무방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측이 북측의 여러 가지 택일적인 제안 중에서 제3국을 선택한 것이지 먼저 우리측이 제3국으로 하자는 제안을 낸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대화장소는 북한측의 제안 중에서 하나를 받아들인 것이므로 제3국으로 낙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제3국의 경우 「제네바」를 희망한 것은 꼭 「제네바」라야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국제회의를 위한 제반 여건면에서 「제네바」가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본 것이며 제3국 가운데 어느 곳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신축성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쌍방총리들이 보다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생산적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3국이 대화의 장소로 적합하고 합리적이라는 우리측 실무대표단의 입장에 반대하고 그들의 편지에서 제3국을 거론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치못할 경우에 하나의 가능한 장소로 제3국을 예견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장소문제에서 분명치 않은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의제문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실무대표단은 『남북총리가 만나게 된다면 총리간 대화가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가 실질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의 사전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측은 의제의 사전합의로 총리접촉에서의 협의절차와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고집함으로써 이날은 원칙문제 조차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접촉에서 북한측은 지난 1차 접촉시 총리회담 수행원으로 30명을 대동시키자던 제안을 총리회담에 배석할 인원으로 「정무원」 부장, 부부장 또는 국장급 보좌원 등으로 4~5명을 배석시키자는 부분적인 수정제의를 했으나 대한민국 실무대표단은 이같은 제의가 서울·평양을 회담장소로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장소문제가 합의된 이후에 확정짓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여 토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다.

이날 접촉이 끝난 뒤 이동복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회담 절차문제와 관련한 다음 6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1) 공개여부문제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되 매 대화시에 협의결정한다.

(2) 합의사항문제

합의문은 각기 2통씩 작성하여 서명 후 상호 1통씩 교환한다.

(3) 기록문제

기록은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4) 보도문제

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되 합의시에는 공동 보도한다.

(5) 일시문제

실무대표 접촉의 경과에 따라 협의 결정한다.

(6) 시설, 표지문제

특별한 표지를 사용치 않고 탁자위에 쌍방총리의 명패만 비치한다.

또한 이동복 대표는 남북한 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쌍방제외에 대한 보도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 언론이 북한측의 제의내용만 보도하지 말고 대한민국측의 제안에 대해서도 보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동복 대표는 남북대화는 한민족 전체의 문제로 남북한 주민들이 모두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지난 1차 접촉 때 우리측과 서방 세계는 쌍방의 제안을 모두 보도해서 그 내용을 알려준 바 있으나 북한측 지역에서는 북한측 제의내용만 보도했을 뿐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며 북한측의 이 같은 보도태도는 대화를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제3차 접촉은 3월 4일 오전 10시 「자유의 집」에서 개최기로 쌍방은 합의하고 두 번째 실무대표 접촉을 끝냈다.

3. 제3차 접촉

제3차 남북한 실무대표 접촉은 3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3시간 20분 동안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진행되어 지난 1·2차 접촉에 이어 남북총리회담의 장소와 의제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이날 접촉에서 총리회담의 의제를 사전에 확정짓도록 하자는 대한민국 실무대표단의 주장에 대하여 북한측은 사전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고 원칙적인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의제문제 토의에 다소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나 북한측은 회기가 끝날 무렵 총리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수정제의하고 우리측이 이를 검토하여 다음 4차 접촉에서 견해를 밝히기로 함으로써 장소 문제의 타결 가능성이 보였다.

이날 접촉이 끝난 뒤 이동북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이 『북한측이 총리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제시했으나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새로운 제안은 아니며 장소문제의 절충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밝히고 북한측은 ①남북총리가 만나는 장소는 우선 판문점으로 한다. ②남북총리는 판문점내의 「판문각」과 「자유의 집」을 왕래하면서 접촉한다. ③남북총리가 갖는 첫 접촉장소는 「판문각」으로 한다. ④쌍방 총리는 「판문각」에서 첫 접촉을 가진 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울·평양을 왕래하면서 번갈아 개최한다는 등 4개 항목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기가 시작 되기전 남북대표들이 환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측은 지난 3월 3일 대한적십자사가 서해 공해상에서 지난 1월 하순에 어로조업중 실종된 제6·7해왕호와 선원들에 관하여 북한적십자회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송통지문을 보낸 사실을 상기시키고 북한측 대표단의 협조로 동 선원들이 인도적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북쌍방은 다음 제4차 접촉은 3월 18일 오전10시에 판문점의 「판문각」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4. 제4차 접촉

남북한 총리회담의 실현을 위한 제4차 남북실무대표 접촉이 3월 18일 오전10시부터 오후1시 20분까지 3시간 20분 동안 판문점의 북한측 지역인 「관문각」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난 세 번째 접촉에 이어 총리간 대화마련을 위한 절차 사항 중 아직 타결되지 않은 장소 및 의제문제에 관한 토의를 계속했다.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의 실무대표단은 실무접촉이 총리간 대화의 장소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천연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입장에 입각하여 총리간 대화장소를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 (1) 총리간 대화의 장소는 판문점으로 하며 회담은 「자유의 집」과 「관문각」에서 번갈아가며 진행한다.
- (2) 총리간 대화의 장소를 판문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할 때는 쌍방총리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제의에 덧붙여 「자유의 집」과 「관문각」중 어느 곳을 첫번 대화장소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즉시 결정할 필요는 없고 실무접촉의 마지막에서 남북총리간 대화의 첫 번 날짜를 협의할 때 함께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대화의 장소가 판문점으로 결정될 경우 장소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총리 수행원문제와 대표단, 기타 인원의 신변보장 문제 그리고 편의제공 문제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 (1) 총리간 대화에 배석할 보좌인원은 각기 장·차관급 보좌관 2명과 차관보, 국장급 보좌관 2명 등 4명으로 하고 쌍방은 각기 3명 이내의 실무요원을 대동하고 대화에 임한다.
- (2) 대화장소 밖에서 활동할 쌍방의 지원인원과 취재기자에 대해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않고 상호 편의에 따르기로 한다.
- (3) 총리간 대화 참가 및 지원이나 취재를 위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의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쌍방 총리 이름으로 각기 작성, 서명 후 첫 총리간 대화직전에 상호 교환하기로 한다.
- (4) 총리간 대화참가 및 지원이나 취재를 위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지역에 들어가는 인원 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모든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날 장소문제는 지난 3차 접촉에 이어 쌍방의 제안을 놓고 토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합의를 보았다.

- (1) 총리간 대화장소는 판문점으로 하며 회담은 「자유의 집」과 「관문각」에서 번갈아가며 진행

한다.

(2) 총리간 대화의 장소를 판문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할 때는 쌍방총리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자유의 집」과 「판문각」 중 첫 총리간 대화장소를 어느 곳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측의 주장대로 뒤에 첫 총리간 대화일시와 함께 협의 결정기로 합의되었다.

또한 총리간 대화장소의 타결에 수반되는 기타 절차사항에 관하여는 우리측이 제의한 4개 항목 중 (1), (2)항 원안대로 합의를 보았고 (3), (4)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일부 문구와 표현에 관한 실무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북한측의 제의에 따라 쌍방 수석대표가 지명한 우리측의 이동복 대표와 북한측의 임춘길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따로 만나 문안조정을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또한 이날 남북쌍방은 각각 의제안을 제의했다.

대한민국 실무대표단은 첫번 실무접촉에서 『통일은 비현실적인 구호나 정치선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평화통일의 터전을 닦는 실질적이고도 현실적 조치를 취하고 그 실적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축적해 나감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의제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3개항의 의제를 제안했다.

의제1항 : 남북간의 상호신뢰 조성 문제

(1) 남북간 상호교류, 협력의 실시로 상호신뢰와 이해의 바탕을 마련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

(2)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경멸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

의제2항 :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

의제3항 : 조국의 평화통일문제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의제는 쌍방이 서로 폭넓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게 신축성 있고 쉽게 타결될 수 있도록 간편하며 포괄적 설정이 가능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며 「북과 남의 각 분야에 걸쳐 합작하고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라는 의제라기 보다는 총리회담의 목적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의제로서 제시했다.

또한 이날 접촉에서는 우리측은 실무대표 접촉에서 절차마련이 진행중인 남북총리간 대화와 관련하여 남북간에 정리해 둘 하나의 문제로서 그 호칭이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그 호칭을 통일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남북쌍방이 「상봉」, 「접촉」이나 또는 「총리간 대화」로 상이하게 부르고 있는 것은 첫째 부자연스럽고 둘째는 적어도 쌍방의 총리가 즉 고위 당국자가 만나는 모임의 성격을 확실하게 한다는 뜻에서도 그 호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 대화의 호칭을 「남북총리회담」으로 통일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상봉」또는 「접촉」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이 호칭도 역시 상호 편의주의에 따라서 각기 편리한대로 부르자는 의견을 고집함으로써 진지하고 실질적인 남북간의 대화를 위해서는 쌍방의 총리가 만나는 모임을 회담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해서 통일을 하자는 우리측의 의견을 외면했다.

다음 제5차 접촉은 4월 1일 오전 10시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갖기로 합의를 보고 제4차 접촉을 끝냈다.

5. 제5차 접촉

제5차 접촉은 4월 1일 오전 10시 「자유의 집」에서 개최되었으나 대화진행 중 북한측이 3월말에 자행한 잇단 무력도발사건으로 논란을 빚어 총리회담의 의제토의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다음 제6차 접촉을 4월 18일 「판문각」에서 갖기로 합의했을 뿐 시종 경색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의 접촉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인 1시간 48분만에 끝났다.

이날 접촉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지난 3월 23일 3명의 북측 무장간첩이 한강입구에 침투하다 사살된 사건, 3월 25일 북측 무장선박이 포항 앞 바다에 침투하여 어선을 공격하고 어부들을 살해한 사건, 3월 27일 3명의 무장인원이 군사분계선 남방 600미터 지점까지 침투 도발한 사건들을 지적하고 『남북실무대표 접촉을 진행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상대방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력도발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과연 대화에 임하고 있는 북한측의 진정한 자세가 무엇인가 의심치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무분별한 행동은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남북대화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며 이런 무모한 도발행위와 사실왜곡행위는 남북 총리간 대화의 절차를 마련하는 실무대표의 접촉 분위기에 먹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 같은 무장도발사건이 우리측에 의해서 날조된 자작극 이라고 생떼를 썼다.

이날 접촉이 끝난 후 이동복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총리회담의 추진목적이 무력도발과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고 남북간에 안정된 평화를 정착시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회복, 평화통일에 접근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측의 무력도발행위가 계속되어 남북실무대표 접촉의 분위기가 악화된다면 남북대화가 계속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북한측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6. 제6차 접촉

남북 쌍방은 1980년 4월 18일 오전 10시 판문점의 북한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약3시간에 걸쳐 제6차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남북한 총리회담의 의제 및 호칭문제의 토의에 들어갔으나 쌍방의 주장이 엇갈려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측은 남북총리간 대화의 호칭을 총리간 대화의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쌍방이 「남북총리회담」으로 통일해서 사용할 것을 거듭 주장했으나 북한측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계속 「접촉」이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남북총리접촉」으로 하든가 아니면 상호 편리한대로 부르자고 주장함으로써 의견의 접근을 회피했다.

또한 우리측의 김영주 수석대표는 의제의 부연설명을 통해 『남북총리간 대화는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중요한 회담인 만큼 여기에 상징할 의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측 의제안은 남북총리간 대화의 토의안건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인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단계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우선 순위에 따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어 『총리회담의 의제가 우리측 안대로 설정될 경우 남북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가 아무런 제한 없이 적절하게 토의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남북간 신뢰조성과 평화 정착은 평화통일로 가는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므로 우리는 먼저 남북 상호교역과 문화·체육 등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상호 서신교환과 전신·전화개통 이산가족의 재회 및 재결합 등 인도적인 조치들을 강구하는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 같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 신뢰가 조성되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접촉이 끝난 후 이동북 대표는 『지난 1월말 서해상에서 납북된 제6·7해왕호와 22명의 어부송환에 관해 북한측 현준극 대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들 어부문제에 관해서 호의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해 왔다』고 전하고 『호의적인 발표내용은 알 수 없으나 어부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음 제7차 접촉은 5월 6일 「자유의 집」에서 개최기로 합의했다.

7. 제7차 접촉

남북총리회담의 개최를 위한 제7차 남북실무대표접촉은 5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자유집」에서 개최되어 3시간 15분 동안 총리회담의 의제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접촉을 5월 22일 「판문각」에서 갖기로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의 김영주 수석대표는 지난 제6차 접촉에 이어 3개항의 우리측 의제안에 대한 부연설명을 통하여 『남북총리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적 방법에 의해 조국통일을 하루 속히 실현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통일문제는 분단의 경위로 보나 오늘의 남북관계로 보나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이 평화적 통일기반을 조성한 다음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공정한 관리와 감시하에 남북한 토착인구비례 원칙에 의거 자유로운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그들의 「포괄적 단일의제안」이 대한민국의 의제안보다 더 「통일지향적」이라느니 총리회담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 이라는 등 종래 주장을 반복하며 대한민국안은 「분열지향적」이라고 혈뜬으며 대한민국의 일관된 평화통일 3대 원칙과 「선 평화 후 통일」 원칙을 왜곡·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접촉 후에 이동복 대표는 『북한측은 우리측의 통일 3원칙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작금의 소위 민주화와 관련, 학원 및 노사분야에서 일부 문제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언급하려고 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북한측이 남북대화에 임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짐작케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접촉에서 김영주 수석대표의 의제부연설명을 위한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는 남북총리간 대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곱 번째의 실무대표 접촉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여섯 차례의 남북실무대표 접촉을 진행하면서, 남북총리들이 만나게 될 장소와 수행인원 구성등 대부분의 절차문제에서 합의를 보았으며 이제는 무엇보다도 남북총리회담의 의제문제가 우리들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만일 우리 쌍방간에 이 의제문제가 원만히 합의된다면 남북총리회담을 준비하는 우리 실무대표들의 과제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쌍방은 이미 각각 자기측 의제안을 내놓았으며 이에 관하여 협의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접촉에서는 그 동안의 쌍방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상호간에 보다 솔직하고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의제문제가 원만히 그리고 조속히 합의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접

측에 임하는 우리측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측은 남북총리간 대화의 의제로서

의제 제1항, 남북간에 상호 신뢰 조성문제

그 중에 첫째: 남북간에 상호교류와 협력의 실시로 상호 신뢰와 이해의 바탕을 마련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

그 중에 둘째: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인도적으로 경감하고 그 불편을 덜어주는 문제

의제 제2항,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

의제 제3항, 조국의 평화통일문제를 제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측 의제안에 대한 귀측의 이해를 돕고 아울러 오늘의 접촉에서 보다 원만한 토의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측 의제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더 보충설명 하려고 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지금 그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남북총리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민족지상의 명제인 조국의 통일을 하루속히 실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영원인 통일문제는 이미 지난 1월 24일 우리측의 신현확 국무총리의 서한에서 지적한 바 있고 또 이 접촉에서도 수차 우리측이 강조한 바와 같이 정치적 선전이나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남북한이 한 두 가지 추상적인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쉽사리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도 단순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나라는 이미 오래 전에 통일이 되었을 것이며 3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분단 상태하에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분단의 경위로 보나 오늘날 남북관계의 현실로 보나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토분단 이래 장구한 세월이 경과하도록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민족적 과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한반도 전역에서 공정한 관리와 감시하에 남북한 토착인구 비례원칙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자유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단된 남과 북에는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사회가 존재해 왔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두 사회는 비단 정치적 이념과 제도를 달리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의 두 사회간에는 상호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이념과 제도로 인하여 민족관과 역사관, 가치체계와 생활양식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으며 이 같은 상호 사회적 이질화는 가족생활과 신앙 및 문화생활은 물론 심지어 취미와 오락을 포함한 전 생활영역에서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 쌍방 사회간에는 5천년의 민족 역사를 통하여 같이 살아온 동일민족으로서의 민족적 동질성이 크게 손상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두 사회간의 단절상태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어느 외국의 경우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다 하겠습니다.

남북간에는 일절의 인적왕래는 물론 물자의 교류도, 서신의 소통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북에는 1천만이 넘는 이산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나깨나 고향의 산천과 흠어진 가족·친척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흠어진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과 한 장의 문안편지도 주고 받지 못하는 단장의 인도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1950년부터 3년간 우리 민족은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 국토가 잿더미로 화하고 수많은 동포들이 생명을 잃고 부모, 형제, 자매, 자녀가 서로 흠어지는 참극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5천만 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반드시 방식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해야하며 민족절대의 명제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남북간에 평화가 확립되고 유지됨으로써 전쟁의 불안이 이 땅에서 가시게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귀측은 1953년 휴전 이래 오늘까지 말로는 「자주평화통일」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세월의 역사적 사실과 귀측의 각종 문헌 기록 및 행적이 입증하는 귀측의 의도는 그와는 매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귀측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게 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귀측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내가 요약하여 설명한 것이 오늘날 분단상태 하에서 우리의 남북관계가 처해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분단의 현실이 이같이 엄중하고 불신이 이같이 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쌍방의 노력은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상과 같은 객관적인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우선 가장 절박하면서도 쌍방이 용이하게 합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남북의 5천만 동포들의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며 상호 혜택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함으로써 구체적 행동을 통해 상호 상대방의 성의를 확인하는 가운데 서로 신뢰를 조성하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시작이 절반이라는 우리 전래의 속담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쉬운 문제가 해결되면 이로 인하여 보다 어려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뢰의 바탕이 마련되어 점차 신뢰에 바탕을 둔 남북간의 평화가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며 이같이 하여 상호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점차 해소되는 가운데 평화가 확립되고 유지되면 이 바탕 위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분단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문제이며 이같이 조성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가 공고하게 뿌리를 내린 뒤에야 자주적 평화통일로의 문호는 비로소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측이 제안한 총리회담 의제는 바로 이 같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측의 의제안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치에 합당한 의제안입니다.

이와 같은 깊은 생각에서 우리측의 의제안은 의제 제1항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의 실시와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상호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제반문제가 토의되고 해결되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이 의제항목의 테두리안에서 쌍방총리들은 남북간 상호 교류와 자원의 공동개발 경제인과 상공인 및 사회각계인사간의 교류와 협력, 학술, 체육, 문화, 언론분야의 교류, 그리고 전신, 전화, 우편분야의 교류를 협의하여 해결하고 이와 아울러 이천만 이산가족의 재회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일들은 그 하나하나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했으면 했지 어찌하여 통일을 저해하고 분단을 고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같은 일들은 과거에 귀측에서도 하자고 하던 일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와서 귀측이 우리의 이같은 제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과거 귀측이 이러한 일들을 하자고 했던 것이 실제로는 할 생각이 없으면서 빈말로 했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측 의제안 제2항의 평화정착문제는 이상과 같은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상당한 신뢰가 조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에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고히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 속에는 비단 대규모의 전쟁재발방지뿐 아니라 무력과 폭력에 의해 상대방 체제를 비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전복하려는 일체의 기도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 역시 분단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통일을 가로막는 것이 아님이 자명합니다.

우리가 제의한 의제 제2항 「평화정착」에 대하여 귀측은 「분단고착」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완전히 이해부족 또는 곡해하거나 트집을 잡기 위한 말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평화정착」이라고 할 때 이말은 남북간에 평화통일을 논하기에 앞서서 다시는 상호간 무력행사가 없어야 한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 평화가 보장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평화정착」이 바로 「분단고착」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제로서 제의한 「신뢰조성」과 「평화정착」은 상호 밀접히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남북 상호간 어느 정도 신뢰가 조성된 후 즉 불신이 제거된 후 평화에 대한 보장을 논할 수 있고 평화가 보장되어야 상호간 신뢰도 두터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호간 신뢰가 조성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중대한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임은 아주 분명합니다.

평화통일문제에 관하여 상호간 협의하기도 훨씬 쉬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조국의 평화통일문제를 의제 제3항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의제안은 자주적 평화통일에 접근해 나가는 일련의 전체적 과정을 정연하게 담은 참으로 통일지향적인 의제안입니다. 우리측 의제안의 항목별 일정순서는 통일에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순리적인 순서를 표현한 것이나 각항목은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그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측 의제안 각 항목은 통일문제의 해결과정의 순차성을 고려하여 해결을 요하는 순서대로 설정된 것이며, 항목별 분리토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의제항목의 설정순서가 반드시 토의순서를 엄격히 제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의 토의는 원칙적으로 의제가 설정된 순서에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총리 회담에서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또는 편의에 따라 어느 정도 일괄토의 또는 대체토의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제가 설정된 순서에 따라 개별적 토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간 신뢰조성과 평화정착은 총리회담의 목표인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고 또 필수적 과정이기도 하므로 이 두가지 의제에 대한 토의진전이 있기 전에 당장 통일문제를 다룬다는 일이 현실적인 토의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조성과 평화정착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바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평화통일에 대한 토의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뢰조성과 평화정착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하나의 의제항목은 다른 의제항목과 관련시켜 토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통일문제란 현재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나라를 둘로 쪼개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둘로 나뉘어 오랜 세월을 분단상태로 지나온 나라를 다시 하나로 합치려하는 것이며 이같이 장기간의 분단상태가 지속되어온 원인이 바로 한꺼번에 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여건에 있다는 점을 귀측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귀측이 막연한 내용의 의제안을 고집하지 말고 하루빨리 실무대표 접촉을 끝내고

총리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측 의제안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의제토의를 진행시키도록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한편 우리측은 이날 접촉에서 『「시작」과 「단결」이라는 용어가 담긴 북한측의 의제는 총리회담의 성격과 목적,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총리회담의 의제에 그런 문제성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우리측의 기본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합작」, 「단결」에 반대하는 것은 곧 「분열」·「대결」을 지향한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북한측의 「합작」과 「단결」이 내포하는 불순한 정치적 의미를 파헤친 대한민국 김영주 수석대표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지난번 접촉에서 귀측이 내놓은 의제안은 그 개념이 분명치 않으며 너무 막연하여 의제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선전을 위한 정치적 구호라면 모르되 협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귀측 의제안에서 말하고 있는 「합작」과 「단결」이라는 용어는 그 해석에 있어서 여러모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의 의제안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검토해 보았으며, 「합작」과 「단결」이라는 용어가 담긴 귀측의 의제는 총리회담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총리회담의 의제에 그러한 문제성을 지닌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문제의 핵심을 보다 명백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의 의제토의를 촉진시키는 뜻에서 오늘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왜 총리회담의 의제에 「합작」과 「단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왜 동의할 수 없는가 하는 이유를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려 합니다.

우리가 분단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문제를 남북이 상호 협의하는 자리에서 「합작」과 「단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이들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반대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의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귀측이 이 두 단어에 국어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별개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입각하여 귀측의 일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수한 정치적 용어로 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 감추어진 정치적 기도는 평화통일의 명제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합작」과 「단결」이라는 단어에 귀측은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여 이들 단어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짐작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들 두 단어의 정치적 의미를 해설하는 귀측의 공식문헌자료들이 웅변으로 설명

해 주고 있습니다.

귀측의 공식 문헌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작」은

첫째로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깨닫게 할 것이고 그이께서 마련해 주신 공화국 북반부 사회주의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산물인 남조선 사회제도의 부패상과 반동 통치배들의 매국배족적 죄악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면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우리 민족이 어떤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옳게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며 세째로 「광범한 군중을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 귀측이 말하는 이른바 「합작」은 오직 귀측의 체제테두리 안에서 통일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기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가치를 인정한다는 귀측의 의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합작」이라는 용어사용에 합의할 때 귀측은 우리가 이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일방적인 정치적 개념까지 우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강변하려 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작」의 형태에 대해서도 정치적 「합작」이니 군사적 「합작」이니, 경제적 「합작」이니, 문화적 「합작」이니, 심지어는 외교적 「합작」이니 하는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분단조국의 냉엄한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비현실적이고 가공적·허구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각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합작」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합작」이 모든 「합작」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된다』고 말하여 정치적 「합작」의 우선을 주장하고, 그런가 하면 군사적 「합작」이 다른 「합작」에 우선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또 그런가하면 경제적 「합작」과 문화적 「합작」이 다른 「합작」에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 앞뒤를 가릴 수 없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귀측은 남북에 흩어져 살고 있는 1천만 이산가족들의 단장의 고통을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의거하여 우선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마저도 이른바 「정치적 합작의 한 형태」라고 공식으로 정의하고 이 같은 터무니없는 용어의 정의에 근거하여 적십자회담에서도 정치문제를 토의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귀측의 공식 문헌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때 귀측이 말하는 「단결」이라는 용어 역시 터무니없

는 정치적으로 변질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귀측은 분단조국의 역사적 현실은 남북간의 극단적으로 상이한 이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한 단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허구적 영상을 조작하여 이것을 근거로 오늘의 남북관계가 당장 「단결」을 이룩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측은 귀측이 말하는 「단결의 원칙은 표면상으로는 자기의 사상과 이념,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이와는 표리를 달리하여 「단결」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반공법규의 철폐, 심지어는 반공교육, 반공언론까지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들어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귀측의 말은 귀측이 총리회담의 의제에 「합작」과 「단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저의가 이상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이 단어에 귀측이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특이한 정치적 의미를 이용하여 과거의 남북대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른바 「조건·환경」론을 운운하면서 우리의 반공체제를 시비하고 이른바 「연공」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요구조건을 강요하는 근거와 구실을 마련하려 하는데 있음을 명백히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도 남북쌍방은 쌍방간에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문제는 잠시 옆으로 제쳐놓고 공동성명의 2항에서 6항까지의 합의사항의 실천 즉, 상호중상·비방중지, 대소간의 군사도발의 중지,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적십자회담의 적극 추진, 다양한 교류의 실천 및 남북직통전화의 운용과 이들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한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상호 신뢰를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우선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이들 합의사항의 실천을 외면하고 급기야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중단 시킴으로써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는 길을 막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생각할 때 귀측이 말하는 「합작」과 「단결」이라는 용어가 총리회담의 의제에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총리회담의 목적은 어느 한쪽이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총리회담의 목적은 분단조국의 엄연한 현실에 입각하여 상대방 내부분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함이 없이 서로 용이하게 합의할 수 있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남북의 같은 민족에게 혜택을 주고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며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문제를 가지고 토의·해결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상처를 점차 아물게 하고 서로 신뢰가 조성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민족의 슬기로 평화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는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조성, 평화정착,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3개 항목 의제는 이 같은 평화통일에 접근해

나가는 대로를 제시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제입니다.

귀측이 우리측 의제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이를 토대로 의제토의를 진행시켜 조속한 시일 안에 의제타결을 이룩함으로써 하루 빨리 총리회담을 실현시키는데 협조할 것을 재삼 당부하고자 합니다.』

8. 제8차 접촉

제8차 실무접촉은 1980년 5월 22일 오전10시부터 12시 24분까지 판문점의 북측지역인 「관문각」에서 종전의 비공개회의와는 달리 쌍방향의에 따라 공개회의로 개최되었다.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쌍방실무대표들은 의제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측이 최근의 학원소요 및 「5·17」 비상계엄확대문제 등 대한민국 국내문제를 들고 나와 우리측을 비난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날 우리측의 김영주 수석대표는 『북한은 남북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성실하게 협의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우리측 내부정세를 오관한 나머지 우리측 국내정세에 편승, 이를 이용하여 우리측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선동하려는 목적에서 이번 대화에 호응해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으며 오늘 북측의 발언내용은 이 의구심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화가 성공하려면 쌍방은 각기 상대방 체제의 고유한 질서를 존중하면서 당국대 당국의 차원에서 성실히 대화를 추진해야 할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북한측 수석대표인 현준극은 『의제문제만 타결되면 남북간 총리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에 북과 남의 관계를 격화시키고 실무대표접촉앞에 난관을 조성하여 이 접촉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남조선 당국은 최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북의 대남적화 책동이 격증했다. 남침의 결정적인 시기를 노린다는 등 우리를 걸고 들어가 북의 위협 때문에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화상대방인 우리에게 대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주 수석대표는 이어 의제토의에 임하는 북한측의 진정한 태도와 의도를 좀더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북한측에 다음의 4개항의 질문을 제기했다.

- (1) 우리측 의제보다 북측의 의제가 더 통일지향적 이라면 북측은 통일이 남북간의 상호신뢰회복과 실제적 평화의 보장과 같은 여건조성 없이도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2) 북측이 내세우는 이른바 「합작」, 「단결」이라는 용어를 서로 오해의 여지가 없는 순수한 의미로만 쓰겠다면 이 자리에서 그 용어에 내포된 일방적인 정치적 요구를 어떤 남북간의 대화석상에서라도 절대 재론치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가?
- (3) 북측은 『남북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는 오직 폭력적 방법밖에는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측이 말하는 자주, 평화통일은 곧 폭력에 의한 「남조선혁명」과 이를통해 북측 기치하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을 말하는 것인가?
- (4) 북측은 이른바 「단결」의 원칙의 하나로 어느 일방의 의사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 요구조건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호 모순이 아닌가?

고 물었다.

또한 이날 접촉에서 이동복 대표는 최근 국내 학생소요사태에 관련한 북한측 동향에 대하여 『북측이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우리측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 방송한 횟수가 총 2,136회에 이른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북측은 이 방송을 통해 한국내 57개 대학의 학생들의 움직임을 거론했으며 특히 어느 대학에 대해서는 224회나 방송했다』고 지적, 『우리측 학생들에 대해 정의로운 투쟁을 끝까지 계속 펼쳐 일어나 싸우라는 방송이 어떻게 선동이 아닌가』고 북한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제8차 접촉도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나고 말았으며 제9차 접촉은 북한측이 당초 7월 1일로 한달 이상 늦춰 제의한 것을 우리측이 앞당길 것을 요구하여 겨우 6월 24일 오전10시 「자유집」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제8차 접촉에서 북한측이 총리회담의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의 정도를 벗어나 최근 대한민국 국내정치정세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발언을 하며 의제토의를 회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측이 의제토의를 위한 성실한 자세를 북한측에 촉구하고 우리측 의제안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였던 발언문 전문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남북총리간 대화의 의제는 총리간 대화의 절차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제의 설정내용과 방법은 곧 총리간 대화의 성격을 결정하고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제가 적절한 내용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정되면 총리간 대화는 원만히 진행되어 구체적인 성과를 생산함으로써 분단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제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내용과 법적으로 설정되면 총리간 대화는 아무런 진전을 이룩함이 없이 서로 비생산적인 입씨름만 계속하다가 중단되고 말았던 과거의 대화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짙다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처럼 추진하고 있는 총리간 대화가 서로 만나서 막연한 이야기나 교환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성과를 생산하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남북의 거래들이 느끼게 될 실망의 정도를 생각할 때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간 대화의 의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의 의제에 관한 협의과정을 돌이켜 볼 때 비록 다같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남북 쌍방은 서로 본질적으로 상이한 통일접근 방법을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직껏 의제문제를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근본원인은 쌍방의 의제안에 담겨진 서로 상이한 통일접근방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제문제를 조속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의제안에 담겨진 통일접근 방법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에 기초하여 절충을 모색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관한 나의 의견을 좀 더 말해보려 합니다.

우리측 의제안을 다시 요약한다면 우리는 첫째로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인도적문제를 해결하여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문제, 둘째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 셋째로 분단조국의 평화통일문제 등 3개 항목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측은 의제문제와 관련이 깊은 총리간 대화의 호칭을 쌍방이 「남북 총리회담」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차에 걸쳐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이상과 같은 우리측의 3개 항목의 의제안은 우리 나라가 분단된 역사적 경위나 분단 35년을 경과한 오늘의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분단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대로를 가리키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분단조국이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남쪽의 3천7백만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쪽의 귀족 지역에 거주하는 1천7백만 동포가 염원해 마지않는 민족지상의 과제라 하는데 누구도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자주적 평화통일이 일조일석에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처해있는 엄연한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분단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자유 민주선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유민주선거를 통한 평화통일의 실현은 기왕에 귀족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좌절된 바 있습니다. 그 뒤에도 선거에 의한 통일을 귀족이 더러 거론하는 일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귀족은 그러한 선거실시의 선행조건으로 상대방의 특정정당이나 계층 또는 개인의 선거참가를 배제하라는 등 상대방이 들을 수 없는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먼저 이를 수락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실제로는 그러한 선거의 실시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그 동안 35년간에 걸친 분단상태하에서 불행하게도 남북간에는 상호 완전한 사회적 단절속에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휴전선의 두터운 장벽과 귀족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한 사회적 격리의 결과로 남북의 두 사회는 이념, 체제를 비롯한 심지어는 생활양식까지 달리하는 서로 엄청나게 다른 이질사회로 변모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천년 민족역사를 통해 가장 처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으로 남북간에는 비단 적대관계가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운 상호불신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3천7백만 대한민국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6·25전쟁의 교훈과 그 뒤에도 설사이 없이 계속되어온 휴전선 전후방에서의 무력 및 폭력도발로 인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구체적 행동이 실증되지 않는 한 귀족의 말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지 않는 뿌리깊은 불신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에서 내가 설명한 상황은 우리의 분단조국이 처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하에서 분단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필요한 여건의 조성 없이도 일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하나의 가공적 허구임이 명백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현실속에서 진정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려 한다면 남북쌍방은 반드시 먼저 상호신뢰를 조성하여 쌍방간에 존재하는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에 기초한 평화가 남북간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 문제해결의 옳은 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측의 3개 항목 의제안은 이같은 진정한 자주적 평화통일의 방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먼저 신뢰를 조성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통일에 도달한다는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체적 과정을 문제해결의 순서에 따라 정연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의 총리들이 우리측이 제안한 의제를 가지고 만나게되면 먼저 경제, 사회, 문화 및 인도적 문제 등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인한 장애요인이 비교적 적은 여러 분야에서 상호 합의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문제들을 골라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발전시켜 여기서 이루어지는 실적의 축적을 통해 생산되는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남북의 온 겨레가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재발의 위험을 느끼지 않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길을 달리게 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귀측은 「북과 남이 각 분야에서 합작하고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진시킬 데 대하여」라는 의제안의 채택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귀측의 의제안은 의제안에 담겨진 용어들을 단순히 국어사전적 의미에 의해서만 해석한다면 매우 그럴듯한 정치적 선전구호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의미가 너무 막연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제에 합의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귀측 의제안이 제기하는 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그 의제안에 사용된 용어들에 귀측이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국어사전적 의미와는 매우 다른 별개의 정치적 의미에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귀측 의제안은 표면상으로는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귀측의 전통적인 폭력정책에 의한 공산화 통일노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귀측의 의제안에 나타나고 있는 「합작」 「단결」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의 풀이에만 의한다면 좋은 뜻을 가진 훌륭한 우리의 말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귀측의 경우에는 이 훌륭한 단어들에 전혀 일방적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 단어들의 뜻을 엉뚱하게 변질시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앞서의 접촉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귀측 고위당국자의 발언과 공식문헌에 의하면 귀측이 말하는 남북간의 「합작」은 『남북의 광범한 균등을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하며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하는 것』이며 또한 『남북간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다 북반부의 사회주의역량에 의거하여 풀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측이 사용하는 「단결」이라는 단어의 정치적 의미는 『남조선당국으로 하여금 「반공」 소동을 그만두고 「연공」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측은 귀측이 말하는 「자주적 평화통일」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여 남조선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 서면 북반부의 사회주의역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합된 힘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귀측이 총리간 대화의 의제에 「합작」과 「단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는

고 고집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즉, 귀측은 총리간 대화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주적 평화통일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총리간 대화 의제에 이들 용어가 표현될 경우 우리가 이들 단어에 귀측이 일방적으로 부여한 정치적 의미까지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측에 대해 『합의된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는 구실 하에 주한 미군의 철수와 반공정책의 철폐 및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의 합법화 등을 요구하는 논거를 조작하려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귀측의 의제안에서 엿볼 수 있는 귀측의 의도를 짐작하건대 귀측은 대화에 의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해결 그리고 참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북 쌍방의 고위당국자인 총리간의 대화마저도 귀측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폭력에 의한 공산화 통일노선의 한 부분인 소위 「남조선혁명」의 조건을 성숙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귀측 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총리간대화 의제토의에 임하는 귀측의 진정한 태도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귀측의 성실한 답변을 요망하고자 합니다.

첫째, 귀측은 우리측 의제안이 통일문제 해결보다는 여건조성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귀측 의제안보다 덜 통일지향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귀측의 견해는 우리 나라의 통일이 남북간의 상호신뢰 회복과 실제적 평화의 보장과 같은 여건의 조성이 전혀 없이도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둘째, 귀측은 실무접촉에서는 이른바 「합작」과 「단결」에 별다른 뜻이 없으며 오해의 여지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의 공식문헌이나 귀측 고위당국자들의 말에 의하면 소위 「합작」과 「단결」에는 이른바 「외세의 간섭배제」나 소위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나 하는 일방적인 정치적 요구가 내포되어 있고 또 우리측 사회의 소위 「민주화」를 빙자하여 우리의 반공정책의 포기나 이른바 「연공」정책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측이 이 실무접촉 석상에서 말하는 대로 「합작」과 「단결」을 서로 오해의 여지가 없는 순수한 국어사전적 의미로만 쓰겠다는 것이 귀측의 진의라면 앞으로 어떠한 남북간의 대화석상에서라도 그 동안 귀측이 「합작」과 「단결」이라는 용어에 내포시키고 있던 일방적인 정치적 요구를 절대로 재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귀측의 공식문헌과 귀측 고위당국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통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기치 밑에 민족해방 혁명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수하는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남조선혁명이 수행되는 조건에서만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조선혁명은 조국통일의 선결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측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는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가 있지만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는 오직 유일하게 폭력적 방법밖에는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측이 말하는 자주 평화통일은 곧 폭력에 의한 남조선혁명과 이를 통하여 귀측 기치하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귀측의 그 같은 폭력통

일 방안에는 그 동안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는 말입니까?

네째, 귀측은 이른바 「단결」의 원칙의 하나로 어느 일방의 의사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 대해 이것저것 정치적 요구조건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귀측은 혁명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선전매체를 총동원하여 상대방 내부에서의 폭력사태를 선동하고 있고 심지어는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같은 민족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상호 모순되는 태도가 아닙니까?

어느 쪽이 귀측의 진의입니까?

나는 이상의 나의 질문에 대한 귀측의 답변을 통하여 귀측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데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적인 남북한 당국간 회담의 일환으로 남북총리회담을 실현시키겠다는 건설적인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나는 귀측도 생산적인 남북대화를 바라는 우리측의 염원을 받아들여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지향적이며 현실성과 합리성에 기초를 둔 우리측 의제안을 토대로 총리간 대화 의제를 타결하는데 건설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제3부 남북실무대표 접촉의 쟁점

1. 총리회담의 장소문제

남북총리간 대화의 장소문제는 처음 북한측이 제안한 여러 가지 장소 중에서 대한민국측이 「제3국」을 선택, 동의하고 이를 주장한 데 반해 북한측이 당초의 태도를 바꾸어 엉뚱하게도 「서울·평양」왕래만을 고집함으로써 이것이 실무대표 접촉의 진전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총리간 대화장소에 관해서는 당초 북한측이 1980년 1월 12일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보낸 「정무원총리」이종욱의 편지에서 남북총리간 대화를 제의하면서 쌍방 총리가 만날 장소에 대해서는 「관문점이나 평양 또는 서울도 좋으며 제3국도 무방하다」고 제의함으로써 사실상 그 가운데 선택을 우리측에 맡긴바 있었다.

이에 우리측이 그들이 제의한 3개의 장소 중에서 「제3국」을 선택,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총리간 대화장소문제는 처음부터 쌍방간에 의견대립이 일어날 수 없는 문제로써 첫날 접촉에서 합의가 되었어야 사리에 합당한 것이었다.

즉 북한측이 「제3국」을 하나의 제안으로 내놓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우리측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지 쌍방이 각각 다르게 제안하고 처음부터 두 개의 제안이 대립되어 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의의 일반적 관례와 상식으로 본다면 남북총리간 대화의 장소문제는 이미 「제3국」으로 낙착되어야 하며 다만 협의될 것이 있다면 제3국 중에서 어느 곳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첫 실무대표 접촉에 나온 북한측은 1월 12일 이종욱의 편지에서 제의했던 사실은 아랑곳함이 없이 「서울·평양」왕래만을 고집하면서 그들이 「제3국도 무방하다」고 했던 것은 「제3국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피치 못할 경우를 예견한데 불과하다」는 뜻이라며 전후가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림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

그러면 총리간 대화의 장소로 우리측이 「제3국」을 희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측은 남북총리간 대화장소에 있어 북한측이 제안한 관문점, 서울·평양왕래, 제3국의 3개의 대안 중 어느 특정장소를 거부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과거 남북대화의 경험이나 또는 모처럼 열리게 될 총리간 대화의 성격으로 볼 때 성과있는 총리간 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장소로서는 중립적인 「제3국」이 가장 좋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며 이러한 기본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과거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되었을 때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남북총리간의 대화가 이루어져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진행될 경우에 남북 쌍방중의 어느 일방이 회담석상에서의 토의에 의한 현안문제 해결과 이를 통한 상호관계의 개선보다는 서울·평양 왕래를 그릇되게 이용하여 회담외적 방법에 의한 일방적인 정치적 목적 달성을 기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화는 본래의 목적과는 반대로 도리어 남북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 장벽을 더욱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 실례로 과거 북한측은 적십자회담의 경우에 이른바 「자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정당·사회단체 인사」의 적십자회담 참가를 기도하고 회담의 공개화를 주장함으로써 소위 「자문위원 축하연설」 등의 명목으로 공개회담을 정략적으로 선전에 이용했던 것이다.

이처럼 북한측은 남북조절위원회나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공통적으로 회담보다는 일반에게 공개된 정치행사에 더욱 역점을 두어 이를 상대측 지역 국민들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선전, 선동의 기회로 삼는데 주력했는가 하면 북한측의 언동내용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세히 보도되는 반면에 북한측은 대한민국측의 발언내용을 그들의 주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담 분위기」를 구실로 반공법,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과 6·23선언 등 외교정책 및 주한미군 문제 등 대한민국의 안보정책 시비 같은 상대측 내정에 대한 일방적인 간섭과 시비 끝에 이를 이유로 끝내는 대화를 중단시켰던 것이다.

또한 총리간 대화의 성격이라는 관점에서 총리간 대화의 의의는 단순히 쌍방 총리가 만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얘기한 결과 무엇이 생산되는가 하는 회담성과에서 찾아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리간 대화장소의 결정에 있어서는 가장 실무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현안문제에 대한 기탄 없는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로는 어느 곳이 가장 좋은가 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런 뜻에서는 현실적으로 서울·평양보다는 중립적인 제3국이 유리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리인 것이다.

남북의 총리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만날 경우 그들이 만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일반국민들의 기대감을 들뜨게 할 것은 틀림없지만 만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국민감정을 들뜨게 만드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성실한 자세가 아니며 따라서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한 올바른 태도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진행시켜 거기에서 생산된 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입장에서 우리측은 총리간 대화장소의 선정에 임한 것이며 제3국 중에서 스위스의 「제네바」를 거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네바」 거론도 반드시 「제네바」라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었고 다만 「제3국」 중에서 총리간 대화를 갖게 될 경우에는 제반 국제회의의 여건으로 볼 때 「제네바」가 가장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예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총리간 대화의 장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제3차 접촉에서 그들이 제시했던 3개의 장소 중 다른 하나인 「판문점」에서 총리간 대화를 갖자는 의견을 내놓고 마치 「새로운 제안」인 것처럼 강변했다.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실무대표 접촉이 총리간 대화장소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입장에 입각하여 제4차 접촉에서 총리간 대화장소를 「판문점」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쌍방간에 다음과 같이 타결을 보게 되었다.

(1) 총리간 대화의 장소는 판문점으로 하고 「자유의 집」과 「판문각」에서 교대로 회의를 진행

하기로 한다.

- (2) 앞으로 총리간 대화장소를 관문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할 때는 쌍방총리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또한 「자유의 집」과 「관문각」중 첫 총리간 대화장소를 어느 곳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뒤에 첫 총리간 대화일시와 함께 협의, 결정기로 합의했다.

2. 총리회담의 의제문제

가. 쌍방 주장의 비교

남북 실무대표들은 총리회담이 다룰 의제에 관하여 벽두부터 실무접촉에서 사전에 합의,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다.

당초 우리측은 첫 접촉에서부터 총리회담의 의제를 미리 정하자고 제의했었으며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제2차 접촉에서 『의제를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측은 의제를 사전에 조정, 합의해야 남북총리회담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성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계속하여 의제의 사전조정을 촉구한 결과 북한측이 제3차 접촉에서 『의제에 사전 합의하는 것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다.

이에 따라 제4차 접촉에서 우리측은 3개항으로 된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의제항목을 제의했고 북한측은 포괄적인 단일항목의 의제를 제시함으로써 의제에 관한 쌍방간의 열띤 토의가 시작되었다.

남북 총리간 대화는 남북한의 고위 당국자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고위회담인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회담이든지 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담의 목적과 함께 회담에서 논의될 문제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회담의 의제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회의나 회담은 개최에 앞서 그 의제를 정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장기간의 분단의 역사와 민족적 비극을 안고 있는 남북한간의 고위당국자 회담은 그 회담에 걸고 있는 국민적 기대나 내외의 여망을 고려할 때 일단 성립이 된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회담성과가 생산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제가 사전에 준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즉 남북총리간 대화는 쌍방총리가 만나는 사실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지만 두 총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두 총리가 만나서 얘기할 의제를 마련하는 것은 실무대표 접촉에서 합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절차사항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실무대표접촉에서 총리간 대화의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마치 총리간 대화에 제약이나 제한을 가하는 것처럼 강변하며 부당하게도 의제의 사전합의에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차 남북총리회담이 열린 다음에 의제에 관한 논의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남북총리간 대화의 「협의범위와 내용」을 위한 의제의 사전합의는 무엇보다 필요하며, 의제의 사전합의는 남북총리가 장차 만나서 어떤 일들을 협의할 것인지, 무엇부터 얘기할 것인지를

정해 두자는 것이므로 의제의 사전설정은 실무대표들이 해야할 당연한 임무인 것이다. 결국 우리측의 정당한 주장과 거듭된 설득으로 사전합의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보았고 제4차 접촉에서 남북쌍방은 의제를 제안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첫 실무대표 접촉에서 『통일은 비현실적인 구호나 정치선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평화통일의 터전을 닦는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실적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축적해 나감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총리간 대화의 의제설정과 관련하여,

- ①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쌍방의 공동노력은 반드시 지난 35년간 계속되어온 분단의 역사적 현실위에서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를 통하여 전개되어야 하며,
- ②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쌍방의 공동노력은 조국의 분단상태를 실질적으로 해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련의 점진적인 조치를 통해 통일의 여건이 개선되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야 하고,
- ③ 남북총리간 대화의 의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상호 상대방의 내정사항에 간섭하는 제안이나 항목의 설정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상과 같은 입장과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총리간 대화의 의제를 설정할 것을 제의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실무대표단의 남북총리간 대화 의제 제안

1. 의제 제1항 : 남북간 상호 신뢰조성문제

가.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의 실시로 상호신뢰와 이해의 바탕을 마련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

나.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고통을 경감하고 불편을 덜어주는 문제

2. 의제 제2항 :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

3. 의제 제3항 : 조국의 평화통일문제

한편 북한측은 『쌍방이 서로 폭넓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게 신축성 있고 쉽게 타결될 수 있도록 간편하며 포괄적 설정이 가능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며 「북과 남이 각 분야에 걸쳐 합작하고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를 의제로서 제안하고 이를 고집함으로써 의제문제는 쌍방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의제문제는 남북총리간 대화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절차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 실무대표들은 남북총리간 대화가 막연한 「상봉」이나 「접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제반 현안문제를 진지하게 논의, 해결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의 터전을 닦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회담이 되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분단 35년의 쓰라린 역사를 지니고 있는 오늘의 남북관계를 들여다 볼 때 무엇보다도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기본적인 요인은 상호 불신과 오해이며 또한 서로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호 이질화현상이라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의 5천만 민족은 지난날의 처절했던 「6·25 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비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간에 서로 쉽사리 합의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점차 그 폭을 넓혀 나가고 또한 쌍방 사회를 점진적으로 서로 개방해 나감으로써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신뢰의 기초 위에서 남북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신뢰조성과 평화정착이야말로 평화통일로 나가는 필요불가결한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신뢰조성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상호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것이 실증될 때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한민국측은 신뢰조성을 위해 남북이 먼저 상호 교역과, 문화·체육교류 등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또한 상호 서신교환과 전신·전화개통, 이산가족의 재회 및 재결합 등 인도적인 조치들을 강구하는 문제들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합의할 수 있는 의제항목을 의제 제1항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 실적이 축적되고 더불어 점차 그 폭이 증대됨으로써 그 결과 남북간에 상당한 신뢰가 조성되면 이 바탕위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남북간에 신뢰가 조성되고 평화가 정착되어 남북의 5천만 민족이 평화에 대한 위협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때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이 가능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견지에서 의제항목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합작-단결-통일」의 소위 「합작통일」노선에 입각한 포괄적 단일의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제안의 수용을 거부하며 『의제는 세분화하여 설정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단일의제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총리접촉의 성격과 목적이나 능률면에서 더 합리적이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측이 제시한 의제를 검토하여 보면 그 개념이 분명치 않으며 너무 막연하여 의제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선전을 위한 정치적 구호라면 모르되 의제라고 한다면 무엇을 무엇부터 협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뚜렷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그들의 의제안이 『폭이 대단히 넓고 내용이 대단히 심오하게 고도로 집약화 되어 있다』, 그들의 의제에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가 함축된 형태로 밝혀져 있다』고 애매모호한 설명을 하고 있는바 이는 바로 북한측의 의제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함축」되어 있다면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지 명확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지 막연히 「함축」되어 있다고만 하는 것은 구차스러운 설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북한측은 의제는 『합의를 보기 쉽고 편리하고 간략하게 정해져야 한다』, 의제를 『포괄적으로 단일하게 설정하면 실무접촉을 빨리 끝내고 총리접촉을 앞당기는데 유리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매우 경솔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남북총리가 하루속히 만나서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여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총리들이 만나자마자 무엇을 그리고 무엇부터 논의할 것인가를 순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측은 그들의 제안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실무접촉에서 의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총리회담의 내용에까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그들의 의제안이 의제로서의 형태와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지난날 남북대화에서는 의제 없이도 대화에 지장을 준 일이 전혀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총리회담의 의제를 명확히 정한다는 것이 총리회담의 내용에까지 들어가는 것이며 제한을 가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과거 남북대화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공전을 해야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의제를 사전에 분명히 정하지 않았던 데에 있었다는 것은 좋은 교훈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측은 의제안에 「합작」과 「단결」이라는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그 해석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표현인 것이다.

이와 같이 만약 서로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어를 담은 의제안을 채택하게 되면 대화과정에서 용어의 해석을 놓고 논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회담의 진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측은 남북간에 제도와 이념상 차이가 있고 오해와 불신도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과 과거를 논하지 말고 「합작」하고 「단결」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측의 말대로 남북간에는 적지 않은 오해와 불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바로 이 상호불신이야말로 남북간의 교류와 나아가서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남북간 상호 불신을 제거하는 것처럼 더 시급한 문제가 없다.

그런데 불신의 제거는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며 점진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교류와 협력은 신뢰를 조성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은 더욱 확대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상호 신뢰를 한층 더 두텁게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간에 뿌리깊게 존재하는 상호 불신은 말만으로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측의 말처럼 덮어 놓고 이를 논하지 않는다고 자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다.

즉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렇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용이한 것부터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측이 제시한 의제는 남북총리가 만나서 무엇을 실제로 협의할 것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도 없고 그 뜻 또한 분명하지 않으므로 의제로서는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주장 또한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소위 북한측이 주장하고 있는 「합작·단결」이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합작」·「단결」의 허구성과 저의

북한측은 남북실무대표접촉에서 「북과 남이 각 분야에서 합작하고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라는 것을 총리회담의 의제으로써 제시하고 고집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의측은 그들의 의제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합작」과 「단결」이란 용어의 이면에 숨어있는 북한측의 저의와 비현실적인 의미를 통박하고 이 용어들을 의제 안에 포함시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같은 소위 「합작」과 「단결」이라는 용어는 이미 지난 1972년 11월 2일~3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공동위원장 회의시 북한측이 『남북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합작」과 협력의 실현』을 주장함으로써 남북간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북한측이 줄곧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합작」과 「단결」이라는 용어는 과연 어떤 뜻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측은 이 용어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측은 제4차 실무접촉에서 그들의 의제안을 제시하며 「합작」이라는 말은 협력, 협조로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측은 이 용어에는 국어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별개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입각하여 북한측이 그들의 일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수한 정치적 용어로 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감추어진 정치적 기도는 평화통일의 명제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1962년 북한 과학원출판사가 발행한 「조선말 사전」에서는 「합작」을 「힘을 합하여 공동으로

일을 진행함), 「단결」을 「(사상·의지·행동상으로) 한 덩어리로 뭉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는 어디까지나 국어사전적인 단어풀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노동당의 모든 간행물을 출간하고 있는 「사회과학출판사」가 1975년 「조선노동당」 창건 30돌 기념으로 출간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이라는 공식문헌책자를 보면 북한측이 사용하고 있는 「합작」과 「단결」이란 용어에는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동 자료에서 「합작」 문제를 언급하며(p.229) 『일반적으로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 등 넓은 범위에 걸친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란 국가 또는 정치 경제적 세력으로 이루어진 집단간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힘을 합쳐 공동보조를 취하며 유무상통과 호상협조의 원칙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남북간에 실현될 합작과 교류는 정치·경제·군사의 어느 부분의 합작과 교류이든 필연적으로 광범한 정치세력과 각이한 집단의 인사들 및 주민의 빈번한 접촉과 내왕에 의하여 실현되며 온 민족의 동원을 전제로 한다』, 『남북간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는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다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에 의거하여 풀게 함으로써 외세에 예속된 남조선을 범의 아가리에서 건져내게 하며 자주적인 민족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한다』(p.232)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합작」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살펴본다.

북한측이 『북과 남 사이에 실현하여야 할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정치적 합작』이라며 내세우는 「정치적 합작」은 『남북쌍방은 무엇보다도 먼저 외세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하는 것이며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평화적 원칙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는데서 협력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치적 합작의 높은 형태는 폭넓은 정치협상회의나 대민족회의를 열고 통일도상에서 나서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것이며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토의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군사적 합작」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북군사당국자들의 쌍무적 군사회담을 열고…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문제… 현존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할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할 데 대한 문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할 데 대한 문제 등을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외교분야에서의 합작」은 『하나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대표로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가입하며 대외분야에서 행동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며 「경제분야에서의 합작」은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침입으로 파괴된 남조선의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북한의 「단결」이라는 용어 역시 정치적으로 변질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민족분열정책과 민족이간정책을 파탄시키고 온 민족이 반미구국투쟁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굳게 뭉쳐야 할 혁명투쟁의 객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므로 온 민족은 민족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반미구국,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p.213)고 「단결」의 정치적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단결의 원칙」은 표면상으로는 『자기의 사상과 이념,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p.215)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일면 대한민국의 반공정책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의 공식문헌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측의 「합작」이 내포하는 정치적 저의는 소위 「정치적 합작」의 경우 「대민족회의」, 「남북연방제」 실시라는 종래의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는 것이며, 「군사적 합작」은 현존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교적 합작」은 소위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구호로 UN에 가입하자는 것이며 「경제적 합작」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식민지경제」로 매도하고 자유경제체제 속에서의 고도성장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측이 주장하는 「합작」·「단결」용어의 개념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와 체제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즉 분단조국의 냉엄한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비현실적이고 가공적이며 허구적인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측이 남북총리회담에서의 의제에 「합작」과 「단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저의는 분명하다.

만약 이들 용어를 의제의 내용으로 대한민국측이 수락을 할 경우는 이들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용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북한측은 총리회담에서 정작 대화의 본질은 외면한 채 「합작」과 「단결」을 저해한다는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철폐 및 「연공정책」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조건을 강요할 근거와 구실을 마련하는데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민국측이 그들의 「합작」·「단결」의 의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측의 허황되고 교조적인 의제의 주장보다는 「신뢰조성-평화정착-평화통일」이라는 대한민국측의 이념적으로 무색하고, 단계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실질적인 의제가 보다 타당하다 하겠다.

3. 총리회담의 호칭문제

남북실무접촉에서는 의제문제와 함께 총리회담의 호칭문제가 타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실무접촉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쌍방은 대한민국측은 총리간 「대화」로, 북한측은 총리 「접촉」 또는 「상봉」으로 각기 다른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측은 제3차 접촉에서, 같은 말을 쓰고 있는 동포끼리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4차 접촉에서는 고위당국인 총리들의 대화성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남북쌍방이 공통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총리간 대화의 호칭을 「남북총리회담」으로 통일할 것을 제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그들의 총리가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과 남의 대화, 또는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촉구하기 위한 「접촉」을 제기했고』 대한민국측에서 동의했으므로 총리사이의 편지에 지적된 내용대로 「접촉」으로 할 것을 고집하며 상호편의에 따라 부르자고 했다.

그러나 고위당국자들이 만나 잡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을 논의하는데 회담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상식적일뿐더러 이러한 총리간 대화의 호칭문제는 총리회담의 의제문제와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호칭문제는 총리간 대화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측이 남북쌍방이 「남북총리회담」이라는 공통된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더욱이 과거 남북대화 과정을 돌이켜 보아도 남북적십자회담이나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남북쌍방은 「회담」이란 용어를 공동으로 사용한 선례도 있는 것이다.

남북총리의 만남은 단순한 상봉이기 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만나는 대화이자 회담인 것이므로 이 회담의 명칭을 「남북총리회담」으로 호칭되어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회담」으로서 보다는 「상봉」 또는 「접촉」 등 모호하게 「만나다」는 정도로 총리간 대화를 격하시키며 불투명하게 희석시키려는 북한측의 태도는 총리회담을 「당국간 대화」가 아닌 「남북정치 협상회의」로 이끌어 가려는 저의를 숨기고 있는 듯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측은 하루빨리 애매한 태도를 버리고 「남북총리회담」을 통하여 민족중대사를 논의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제6차 접촉에서 총리간 대화의 호칭문제와 관련한 대한민국 수석대표의 발언요지이다.

『이미 제4차 실무접촉때에 우리측이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쌍방이 남북총리간 대화를 말

할 때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측은 남북의 고위당국자인 두 총리들간의 대화의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쌍방이 공통된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대화의 호칭을 「남북총리회담」으로 통일할 것을 이미 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이같은 우리측 제의에 반대하고 이 대화를 「남북총리접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담」이란 말은 누가 보아도 만나는데 있어서 목적 의식이 분명합니다. 총리와 같은 남북의 고위당국자들이 만나 민족의 중대사를 토의,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중요한 대화를 단순히 「접촉」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두 총리들이 만나 단순히 악수나 하고 환담이나 하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며 민족의 중대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인 만큼 이를 「회담」으로 하자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귀측도 여러 차례 남북의 총리들이 「격의없는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총리들이 만나서 중대한 회담을 하는 모임을 「회담」이라 하는데는 반대하고 굳이 「접촉」으로 하자고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 남북적십자회담 에서도 쌍방이 「회담」이란 말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서로 「회담」이란 말을 같이 썼는데 지금에 와서 「회담」이란 좋은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측은 남북총리간 대화의 호칭을 서로 편리한대로 각각 사용하자고 했는데 같은 언어를 쓰는 동족간에 나라의 「통일」과 같은 중대사를 논의하는 회담의 명칭조차 통일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으며, 또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측은 쌍방이 「남북총리회담」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누가 보아도 자연스럽고 또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4부 자료편

1. 남북대화 주요 일지

1979. 12. 20 북한올림픽위, 대한체육회장에게 모스크바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해 80. 1. 17 회답을 가질 것을 방송으로 제의

12. 24 박종규 대한체육회장, 12. 20일자 북측 제의에 대해 동제의를 공식 접수한 바 없다고 논평

12. 26 북한올림픽위, 남북한 「유일팀」 구성 제의에 관한 서한전달을 위해 12. 27. 12:00 판문점에 2명의 연락관을 파견한다고 방송으로 통고

12. 27 조절위 서울측,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북측의 서한 접수

1980. 1. 9 조절위 서울측 대변인 발표

○ 대한체육회장은 1. 11. 12:00 판문점에서 북한 올림픽 위원장에게 서한을 전달할 것임.

1. 11 조절위 서울측, 대한체육회장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

○ 북측의 제의는 성과 기대가 어려우며 남북 친선 교환경기를 제의함.

○ 금년 서울개최 국제경기에 북측의 참가를 환영함.

○ 모스크바 올림픽후 전반적 체육교류 문제를 위한 회담을 제의

1. 11 북한측, 남북직통전화 재개를 요구(16:00)

○ 직통전화 개통을 위해 신호를 보냈으나 통화를 못했음.

○ 1. 11. 18:00 서울측이 직통전화를 받기 바람.

1980. 1. 11. 북한측, 모종의 편지전달 예고 발표

○ 통일과 관련된 제안을 담은 편지를 1. 12. 12:00 판문점에서 남측에 전달할 것임.

1. 11 북한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발표

- 1. 11 오후 6시부터 직통 전화 재개를 위해 신호를 보냈으나 남측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음.

1. 12. 조절위 서울측 대변인 성명(11:00)

- 1. 11. 20:07에 직통전화 신호가 와서 지정통화자가 나올 것을 북측에 요구하자 일방적으로 중단했음.

- 북측의 모종의 편지전달 통고가 있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기를 요구함.

1. 12 북한측, 서신명의 보도(13:00)

- 이종욱 및 김일 명의의 서신을 남조선 당국자,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에게 보내는 것임.

1. 12 조절위 서울측, 북측 이종욱 및 김일의 서한을 접수

1. 18 최규하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총리회담 적극 추진의사를 표명

1. 19 북한올림픽위, 1. 21. 12:00, 2번째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방송통고

1. 21 조절위 서울측, 북한올림픽위의 2번째 서한을 접수

1. 22 북한측, 방송을 통해 윤보선, 함석헌등 국내인사의 재판을 거론, 남북대화의 방해 책동이라고 비난(노동신문 논평보도)

1980. 1. 22 북측, 반한 해외교포 인사들에게 김일 명의로 통일을 위한 모임을 제의하는 편지 발송(12:00보도)

1. 23 조절위 서울측 대변인, 신현확총리의 이종욱에게 보내는 서한을 1. 24. 10:00 북측에 전달할 것임을 발표

1. 24 조절위 서울측, 북측에 서한전달 및 내용 발표

- 남북간 총리회담을 제의함

- 총리회담 절차마련을 위해 실무대표 접촉을 제의함

-대표 : 차관급 수석대표 포함 3명의 대표와 약간명의 수행원

-일시 : 80. 2. 6. 10:00

-장소 : 판문점 「자유의 집」 또는 쌍방 합의장소

1. 28 북측, 방송을 통해 「민주인사 탄압은 대화독점을 위한 탄압」이라고 비난(노동신문 논평보도)

1. 29 북측, 신현확 총리에게 보내는 이종욱의 회답편지를 1. 30. 10:00 판문점을 통해 전달 하겠다고 발표

1. 30 조절위 서울측, 이종욱의 회한 접수(10:00 판문점)

1. 30 조절위 서울측, 이종욱 회한내용 발표(11:00)

○ 신현확 총리의 남북총리회담 제의 및 그 절차 준비를 위한 실무 대표 접촉을 수락

2. 1 조절위 서울측, 이종욱의 회한 내용을 발표(11:00)

○ 신현확 총리의 남북 총리간 대화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 제의에 동의함 .

○ 북측은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겸 정무원참사를 수석 대표로 하는 3명의 실무대표 와 2명의 기술 인원을 2. 6.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로 파견할 것임.

2. 4 조절위 서울측, 대한민국 실무 대표의 판문점 파견을 발표

○ 차관급 수석대표 포함 3명의 실무 대표와 2명의 수행원을 2. 6. 10:00 판문점에 보 낼것임.

○ 우리는 신현확 총리의 신임장을 휴대할 것이며 북측도 이종욱 정무원총리의 신 임장을 휴대하기 바람.

2. 5 조절위 서울측, 대한민국 실무대표 명단발표(10:00)

○ 수석대표 : 김영주(외무부 본부 대사)
대표 : 정종식(통일원 정책 기획실장)
대표 : 이동복(남북 회담 사무국장)

○ 실무 대표단은 2명의 수행원을 대동함.

2. 5 북측 실무 대표단 명단발표(13:00)

○ 수석대표 : 현준극(노동당중앙위 부부장겸 정무원참사)

대표 : 임춘길(정무원 국장)

대표 : 백준혁(정무원 국장)

2. 6 남북총리간 대화를 위한 제1차 남북실무 대표 접촉(10:00 관문점 중감위회의실)

○ 쌍방주장

-아측 : 대화의 장소로 「제네바」
의제 사전협의 필요

-북측 : 서울·평양 운변개최
의제 사전협의 불필요

○ 합의 사항

-1980. 2. 7. 10:00를 기해 남북직통전화 재개

-차후 실무대표접촉 장소는 「자유의 집」 과 「관문각」 교대 개최

2. 7 남북직통전화 재개통(10:08)

2. 19 제2차 남북실무대표 접촉(10:00 「관문각」)

○ 합의 사항

- 총리간대화 절차문제(회의공개여부, 합의사항 작성, 기록, 보도, 일시, 시설, 표지
문제 등)

- 제3차 접촉 : 1980. 3. 4 10:00 「자유의 집」

2. 20 북측, 한미합동 군사훈련 「탐스피리트 80」 을 비난

3. 3 한적총재, 북적 손성필 위원장에게 보내는 방송 통지문 발표

○ 지난 1. 22이후 실종된 제6, 7 해왕호 선원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협조해 주기
바람.

3. 4 제3차 남북실무대표 접촉(10:00 「자유의 집」)

○ 북측, 장소문제 수정제의

- 1) 남북총리접촉 장소를 판문점으로 한다.
- 2) 판문점 「판문각」 과 「자유의 집」 에서 운번개최
- 3) 첫접촉은 「판문각」 에서 갖는다.
- 4) 첫접촉후 쌍방합의에 따라 서울·평양 운번개최

1980. 3. 18 제4차 남북실무 대표 접촉(10:00 「판문각」)

○ 합의 사항

- 1) 총리간 대화 장소는 판문점 「자유의 집」 과 「판문각」 에서 운번 개최
- 2) 대화장소를 옮길때는 상호 협의한다.

※ 첫 총리간 대화 장소는 첫 총리간 대화 일시와 함께 협의 결정함.

3. 23 북측 무장간첩 3명 한강입구 침투중 사살됨.
3. 25 북측 무장선박 1척 포항앞바다 침투중 격침.
3. 27 북측 무장공비 3명 강원도 금화지역 군사분계선 남방 600미터 침투
4. 1 제5차 남북실무대표 접촉(10:00 「자유의 집」)
4. 16 한적대변인, 북적 손성필 위원장에게 서한전달 예고 발표
4. 17 한적 이호 총재의 서한, 북적 손성필위원장에게 전달(12:00 판문점)
 - 북측에 억류된 제6, 7 해왕호 선원을 조속히 송환바람.
4. 18 제6차 남북실무 대표 접촉(10:00 「판문각」)
4. 22 북적, 한적 이호 총재에게 방송통지문(중앙방송 보도)
 - 한적의 남북 어부 송환요청에 협조할 용의가 있음.
4. 22 한적총재, 북적 방송 통지문에 관한 「논평」 발표

1980. 5. 6 제7차 남북실무대표 접촉(10:00 「자유의 집」)

- 5. 6 북적, 한적에 어부송환에 필요한 자료제시 요구 방송
- 5. 9 한적, 북적에 서한전달 예고 방송통지문 보도
- 5. 10 한적, 남북어부 명단 북적에 전달(12:00 「관문점」)
- 5. 22 제8차 남북실무대표 접촉(10:00 「관문각」)

남북대화 제24호

(1980. 6 ~ 1980. 11)

< 목 차 >

제1부 제5공화국 평화통일의지	4
1. 새 헌법의 평화통일 관련 조항	4
2. 전대통령, 평화통일 의지 피력	5
제2부 남북 실무대표 접촉의 경과	6
1. 제9차 접촉	6
2. 제10차 접촉	11
3. 제11차 접촉의 유산	13
제3부 북한측의 남북실무대표 접촉중단과 국내반응	15
1. 북한측의 실무대표접촉 거부와 우리측의 접촉재개 촉구	16
2. 북한측의 접촉기피와 실무대표 접촉의 난항	18
3. 북한측의 일방적 대화중단과 국내반응	20
제4부 남북대화 소식	28
「남북조절위원회」	28
1. 서울측 7·4성명 8주년에 즈음하여 성명발표	28
2. 북한측 대남 비방방송 재개에 서울측 성명 발표	30
3.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운운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성명	32
<남북적십자회담>	36
4. 한적총재 「8·12 제의」 9주년 맞아 성명발표	36
5. 한적총재, 북적에 서한 전달	38
6. 북적, 한적의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추구를 또다시 외면	45
제5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비판	47
1. 북한이 제의한 「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	47
2.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허구성	49
3. 북한이 「연방제」를 주장하는 의도	53
4. 결 론	55
제6부 자 료 편	56
1. 북한의 「남북연방제」 주장의 연혁	56
2. 남북대화 주요일지	58



남북총리회담장 건물

총리회담 실현을 위한 우리의 성의와 노력이 담긴 남북총리회담장 건물의 모습.

관문점 우리측 예비구역에 세워진 이 건물은 남북총리회담이 관문점에서 개최될 경우를 대비해 서 지난 5월 7일 총 1억6천128만원의 예산으로 착공되어 제9차 남북실무대표접촉 5일전인 6월 19일 준공되었다.

철판 조립식 단층인 연 140평의 이 건물은 회담장, 기자실, 수행원대기실, 기타 부대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제1부 제5공화국 평화통일의지

1. 새 헌법의 평화통일 관련 조항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새시대의 장전이 될 제5공화국헌법은 민주 복지국가 건설을 이념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우리 겨레의 역사적 사명을 전문과 조항에 담고 있다.

이는 민족적 지상과업인 통일문제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의견을 집약하고, 남북대화를 국민적 합의기반 위에 놓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전향적 의지의 천명인 것이다.

새 헌법중 관계조항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제 68조 (1)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전대통령, 평화통일 의지 피력

1980년 9월 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대통령은 『민족과 국토의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고』,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성의있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조국통일에 대한 그의 확고한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전대통령이 통일문제에 언급한 내용들이다.

-편집자 주

『……국민 여러분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궁극적으로 조국의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민족적 지상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남북대화를 끈기있게 추진할 것이며 쉬운 문제부터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방지되어야 하고 민족과 국토의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1980. 9. 1 제1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주복지국가건설의 마지막 과제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정책은 선의의 경쟁을 통한 평화적 통일이어야 합니다.

평화통일은 어디까지나 쉬운것부터 어려운문제로, 작은것부터 큰것으로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은 전국민의 자유의사를 집약하여 범국민적 합의하에 인내와 끈기로서 주도적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과 진의를 북한이 외면하고 무력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재기불능의 응징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980. 8. 22 전역사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하여는 남북한당국간의 직접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공산집단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남북간의 대화재개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성의있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건설적인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 및 해외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1980. 10. 31 1981년도 예산안 입법회의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문에서>

제2부 남북 실무대표 접촉의 경과

1. 제9차 접촉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제9차 남북실무대표 접촉이 1개월만인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 05분까지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접촉은 북측의 수석대표인 현준극이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불참하고 임춘길, 백준혁 대표만 참석한 가운데 공개회의로 개최되었으나 북한측이 실무접촉과는 상관없는 우리 국내문제에 관한 정치선전만을 늘어놓고 총리회담 실현을 위한 토의에는 불응함으로써 다음 접촉을 8월 20일 오전 10시 「판문각」에서 갖기로 한 것이 외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의 김영주 수석대표는 분단조국의 남북간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쌍방의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자는데 원칙적 합의를 보고 그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시작한지 벌써 넉달만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또 아홉번째의 접촉을 가지게 되었음을 상기시킨 다음 5천만민족의 염원과 세계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착된 실무대표 접촉의 조기 타결을 북한측에 촉구하였다. 그리고 앞서 우리측이 제의한 3개항의 남북총리회담 의제안을

첫째,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의 실시로 상호 신뢰를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둘째, 조국의 평화통일문제의 2개항으로 새로히 제의하고,

- 첫 총리회담을 금년 8월중이나 늦어도 9월중에 개최하며,
- 첫 회담장소는 판문점의 「자유의 집」과 「판문각」중에서 북측의 희망을 고려하여 결정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다음은 김영주수석대표의 발언중 새로운 제안 부분을 전재한 것이다.>

『그동안 귀측은 우리측 의제안이 3개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가르켜 「세분화되어 있어 합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가 하면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먼저 상호 신뢰를 조성하고 평화를 다져서 진정한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우리측의 입장을 가르켜 「통일지향성이 없다」고 하는 등 어느 제3자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비판을 위한 억지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런가하면 더욱 놀라운게도 귀측은 최근 언필칭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운위하면서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화 상대방이며, 같은 겨레인 우리측에 대한 공공연한 간섭과 왜곡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서한을 제3국 여러나라에 보내면서 분단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보아도 외세임이 명백한 비동맹 제국을 끌어 들이려 기도해 왔습니다. 이같이 외세의 간섭을 자초하는 귀측의 태도는 통일문제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바란다면

서 남북대화에 임하는 귀측의 태도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운위하는 귀측의 언행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응변해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8일 「유엔」 본부에서 있었던 비동맹 대사급회의에서 귀측은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을 내세워 비동맹회의로 하여금 한반도문제에 간섭하게 하려했던 귀측의 기도가 비동맹 여러 나라들의 반대로 좌절된 것은 그러한 귀측의 이중적이고 기만적이며 위선적인 기도로 밝은 태양을 가릴 수는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측은 귀측의 이같은 성실치 못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총리회담이 더 이상 지연됨이 없이 조속히, 그리고 기필코 실현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쌍방이 상호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발휘하여 실무대표 접촉에서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는 몇가지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하는데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우리측 대표단은 이상과 같은 충정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접촉을 통해 드러난 귀측의 입장과 의견까지도 최대한 참작하여 총리회담 의제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측은 의제문제를 포함하여, 아직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몇가지 총리회담 절차 문제를 일괄하여 타결할 것을 귀측에 새로이 제의하러 합니다.

우리측의 새로운 제안은 서로 상대방이 있는 이 대화에 있어서 호양의 정신을 발휘하여 쌍방의 엇갈린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획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측의 새로운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리회담 의제문제

총리회담의 의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의제 제1항 :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의 실시로 상호신뢰를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의제 제2항 : 조국의 평화통일문제

둘째, 총리회담 첫 회담일시 문제

첫 총리회담을 오는 8월중이나 늦어도 9월중에 개최하며 총리회담을 판문점의 양측 지역을 왕래하며 열기로 한 합의에 따라 두 번째 총리회담은 첫 총리 회담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셋째, 총리회담 첫 회담장소문제

첫 총리회담장소는 「자유의 집」과 「판문각」중 귀측의 희망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귀측은 우리측에 상응하는 호양의 정신을 발휘하여 내가 오늘 내놓은 우리측의 획기적인 제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우리 실무

대표집측은 늦어도 7월까지의 맡겨진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가능한 한 8월이나 늦어도 9월중에는 총리회담이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우리의 통일과업해결에 하나의 찬연한 금자탑을 이룩하는데 서로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듭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획기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실무대표집측과는 상관없는 광주사태 등 우리의 국내문제를 과장 거론하면서 우리의 전국비상계엄확대가 「북을 걸고 감행 되었다」는 등 우리측을 악랄하게 비방하는 장광설을 늘어놓고 계엄령해제 등 우리의 내부문제를 간섭하는 내용의 상투적인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그들은 우리측 개각을 들어 『첫 실무접촉때 교환했던 신임장에 서명한 남쪽 총리가 사임했고 현실적으로 총리도 없으므로 토의는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의제토의 자체를 외면했다.

북측의 이와 같은 국내사태와 관련한 비방발언에 대하여 우리측 이동복대표는 북측의 「6·25」남침을 간접적으로 상기시키면서 북한사회야 말로 인간이 자연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원천적인 계엄선포지역임을 지적하면서 북측은 민주주의를 거론할 자격조차 없음을 통렬히 논박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우리측 고위 당국자들이 국내정세와 관련, 북측에 관하여 언급된 대목들은 행어나 북측이 과거 1950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국내사태를 오판하여 또다시 남북의 5천만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측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여주는 한편 북측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뜻이지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다른 뜻이 없다.

우리측 안전을 해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북측으로부터의 위협이 실재하고 있는 실증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허다하다.

최근의 사건으로는 바로 사흘 전인 6월21일 충남 보령군에 상륙, 침투를 기도하려다 우리 해군에 발견되어 검문코자 했으나 검문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간첩선을 불가피하게 격침시켜 생포된 간첩 「김광현」사건과, 전라남도 광주시에 침투해서 광주사태를 이용, 대중선동과 파괴, 전복활동 등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고 지난 5월 20일 남해안에 몰래 상륙해서 광주침투를 기도하다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서울역 앞에서 5월 23일 체포된 간첩 「이창용」사건 등이 있다.

생포된 「김광현」은 북측 노동당 조사부가 운영하는 황해도 옹진에 위치한 소위 「301연락소」소속이며, 72세의 노모와 42세의 처, 그리고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한다.

또 「이창용」역시 북측 노동당 중앙당 연락부 소속이며, 평양의 주소지에 43세의 처와 21세의 딸이 있고, 19세의 장남이 있어 여기에도 새로운 이산가족을 낳게 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과 이를 시키는 북측 의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지만 북측 행동을 탓하기에 앞서서 옹진 「301연락소」사택에 살고 있다는 「김광현」의 노모와 처자녀에게, 그리고 평양시

중구역 경림동 36반에 살고 있다는 「이창용」의 가족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측 관헌에게 잡혀 생명만은 건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라도 취하기를 한번 정중하게 권고하겠다.

또 우리측 관계당국의 통보에 의하면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기간중 북측이 한때는 정규방송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까지 전 방송수단을 통하여 우리측 내부분제를 거론하며 사회소요와 대중봉기를 선동한 회수는 무려 3,081회로써 하루 97회에 달하고 있다 한다.

북측의 이같은 무모한 행동 때문에 우리측 국민들은 실무대표 접촉에 임하는 북측 의도의 순수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북측이 진정 남북쌍방사회의 민주주의문제를 논하려면 먼저 북측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만약 북측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북측지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치제도를 뜻하는 것이라면 북측은 원천적으로 민주주의를 운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북측의 정치사회제도는 이미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한사람만이 존재할 뿐 1천7백만 동포들은 스스로 사물을 분간하는 자유는 물론 능력마저 박탈당한 기계인간으로서 구차한 생존을 영위해야 하는 억압체제이다.

북측지역에서는 어느 한 개인이 마음내키는 대로 여행할 자유도, 집을 옮길 자유도, 스스로 택한 학문을 하는 자유도, 마음대로 집회를 가질 자유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락과 여가의 문제까지도, 당의 지시에 따라서 당이 정하는 것을 해야 되는 원천적인 계엄사태가 지난 35년간 계속돼 왔다.

북측에 묻건대 북측사회에 과연 사상의 자유가 있는가? 출판의 자유가 있는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문자 그대로 북측지역이야말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하에 전인민은 비인간적인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북측지역의 우리 동포들이 겪어야 하는 삶의 참경을 생각하면 우리는 단장의 고통을 느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산적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어느 대화석상에서 북한지역의 과거 35년 동안에 빚어졌던 일에 대해 능동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그것은 오히려 남북간에 긴장을 격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북의 거래들이 겪고 있는 인간적인 고통을 가중시켜 주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최대한 스스로 자제하고 어떻게든지 남북대화를 성사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통일의 길을 일보 일보 걸어감으로써 언젠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노력해 왔다.

남북이 서로 상대방 체제내부분제를 거론하는 것은 옳고 그른 차원을 떠나, 남북간의 긴장을 고

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무리하고 부당하게 상대방 체제 내부 문제를 거론하여 일방적이고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남북대화를 이용하겠다는 망상을 버리고 대화 본연의 자세와 이성으로 돌아와 오늘 우리측이 내놓은 새 제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실무대표 접촉을 타결로 이끄는 데 협조하기 바란다.』

이날 제9차 접촉도 아무런 진전없이 격렬한 논란으로 끝나고 말았다.

다음 접촉은 우리측이 7월 8일을 제의한데 대하여 북측은 두달 간격인 8월 26일로 늦춰 제의했고 우리측이 7월 하순으로 앞당길 것을 절충 제의하자, 북측은 8월 20일로 수정제의를, 이를 고집함으로써 제10차 접촉은 8월 20일 오전 10시 「관문각」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제9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나타난 북측의 태도 중 주목되는 것은 북측의 현준극수석대표가 신병을 이유로 불참한 점과 우리의 국내사태를 들어 비상계엄철폐, 구속자석방 등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실질토의를 기피한 점, 접촉의 시기를 2주간격의 관례를 깨고 제10차 접촉을 2개월로 늦추자고 우긴 점이다.

북측이 9차접촉 하루 전인 6월 23일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현준극수석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실무접촉에 불참함을 통보해온 것은 지난 1975년 1월 8일 「관문각」에서 개최된 「남북조절위원회 제9차 부위원장 회의」를 불과 사흘 앞둔 1월 6일 북측의 부위원장 류장식이 신병을 이유로 남북적십자예비회담 북측 대표 조명일로 교체한다고 직통전화로 알려진 사실과 그후 4개월 여만인 그해 5월 29일 제11차 부위원장 회의마저 일방적으로 무기연기함으로써 대화를 완전 중단시켰던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날 접촉이 끝난 후 북측의 태도에 대해 우리측 이동북대표는 『우리측은 이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개탄해마지 않으나 남북대화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감정을 자제하고 성의와 인내로서 실무접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이날 접촉 서두에 우리측이 북에 피랍된 우리측 어선 「제6, 7 해왕호」 문제를 거론,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답변을 회피하면서 『어부들이 자신들의 신변안전을 염려해 남쪽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등 해피한 주장을 늘어놓음으로써 제 6, 7 해왕호의 어부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는지 의구심과 불안을 갖게 하는 발언을 되풀이하었다고 말했다.

2. 제10차 접촉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제10차 남북실무대표 접촉이 1980년 8월 20일 오전 10시 판문점내 북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근 2개월 여 만에 개최되었으나 의제 의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북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엉뚱한 궤변으로 상호 입씨름만 계속하다 제11차 접촉을 1980년 9월 26일 [자유의 집]에서 갖기로 합의하고 1시간 30분만인 오전 11시 30분에 끝났다.

이날 접촉에서도 지난모처럼 북측의 현준극 수석대표를 대리한 임춘길대표는 회담벽두 난데없이 [오늘 우리는 회의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측 정무원총리의 위임에 의하여 한가지 통고를 하러 나왔다]면서 [남쪽에서는 지금 우리를 반대하는 반공소동이 극에 달하고 있고 또 우리와 대등한 입장에서 총리접촉을 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총리접촉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제10차 접촉을 9월 30일로 연기하여 판문각에서 다시 갖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의 김영주 수석대표는 총리회담은 특정 자연인간의 회담이 아니라 쌍방의 총리라는 당국기관간의 회담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측에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총리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총리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트집잡는 북측의 언동은 우리에게 대한 용납될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총리회담을 어떻게 해서든지 갖지 않겠다는 저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통박하고 이날 접촉의 정상적인 진행을 촉구했다.

김영주 수석대표는 또한 남북대화에 관한한 우리측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장애를 있다고 강변하는 북측의 태도야말로 대화의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날 접촉을 정상적으로 진?시키자는 우리측의 종용을 끝내 거부하고 오늘 접촉은 실무접촉이 아니며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온 것은 오늘 접촉을 연기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강변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귀측의 일방적 발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북측의 태도는 대화상대방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접촉은 예정대로 계속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측은 연기이유는 연기를 주장하는 측의 사정에 의해야지 상대방을 거는 것은 부당하며 만약 북측에 사정이 있어 의제 토의에 대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 있어 연기하자고 한다면 오늘 10차 접촉은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하고 다음 11차접촉을 새로 합의하는 날짜에 우리측 자유의 집에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은 결국 이날 접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채 차기접촉을 9월 26일에 우리측 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갖자는 문제에만 합의했다. 그런데 차기 접촉이 차순에 따라 11차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에 대하여 이를 10차로 해야 한다고 주장, 8월 20일 접촉을 10차 실무대표접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북측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우리측은 과거 남북대화과정에서 쌍방간에 표현의 차이 때문에 논란이 생길 경우 각기 편의주의에 따른 전례가 있음을 들어 차순문제로 더 이상 알가알부하지 말 것을 제의, 9월 26일 자유의 집에서 다음 접촉을 갖기로 합의하고 산회했다.

접촉이 끝난 후 이동북대표는 북측은 오늘 접촉을 유산시킴으로써 대남비방선전효과를 노린 듯 하나 다음 접촉일자와 장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측 제안을 수정, 합의하는 등 회의의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접촉은 유산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음 9월 26일의 접촉은 제11차 접촉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 김영주 수석대표는 공식접촉에 들어가기에 앞서 환담하는 가운데 8.12 한적총재 성명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는데 북측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주 수석대표는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견지에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총리회담이 열리기전이라도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십자회담을 즉시 재개, 금년 추석전에 상호간 이산가족 성묘단을 교환하는 것도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측의 임춘길 대표는 총리회담이 이루어지면 이산가족문제도 포괄적으로 토의할 수 있다면서 『실무접촉은 총리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있는 것이니만큼 실무대표들은 그 본분을 지키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한 우리측은 지난 1월 서해에서 납북된 해왕호 선원들이 늦어도 추석이전에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북한측이 인도적 차원에서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측의 임춘길 대표는 『이번 접촉에 나오기전 관계기관에 전화를 걸어 선원들의 송환여부를 문의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선원들이 남한에 돌아가면 취조를 받거나 감옥으로 갈 것을 두려워해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관계기관의 대답을 들었다』는 종전과 같은 궤변을 늘어냈다.

그러면서 『만약 남한측이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할 경우 선원들로 하여금 남한에 돌아가도록 설복할 용의가 있다』고 억지를 부리자 이동북 대표가 『관문점에서 선원들이 가족들과 면회하도록 주선, 그들의 의견을 알아보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박함으로써 그들의 상투적인 선전공세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3. 제11차 접촉의 유산

남북한 총리회담 절차 마련을 위한 제11차 남북실무대표 접촉을 이틀 앞둔 9월 24일 북한측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방송을 통해 실무대표접촉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남북직통전화마저 받지 않음으로써 5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을 또다시 저버렸다.

이로서 모처럼 마련되었던 실무대표 접촉은 지난 2월 6일 이래 불과 7개월만에 완전결렬되고 남북대화의 통로는 또 한번 막혀버리고 만셈이다.

북한측의 이같은 일방적 대화중단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9월 26일 성명을 통해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6개 항목의 새 안을 북측에 공개 제의했다.

이같은 제의는 이날로 예정된 제11차 실무대표접촉에서 우리측이 내놓으려던 것으로써 다음은 공개제의한 우리측 실무대표단의 성명문 전문이다.

남북한총리회담을 위한 대한민국실무 대표단 성명

1980. 9. 26

북한측은 9. 26로 예정된 남북총리회담 절차 마련을 위한 제11차 남북실무대표 접촉을 이틀 앞둔 9. 24 19:00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북한측 방송으로 보도된 「북측 실무대표단 성명」을 통해 남북대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측을 시비하면서 『당분간 접촉의 마당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열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온 실무대표 접촉의 일방적인 중단을 기도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같은 북측의 소행은 과거의 남북대화때의 그들의 행적을 또 한번 되풀이 한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북한측은 1973. 8. 28 일방적인 성명으로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 등 「7·4남북공동성명」에 근거한 두 갈래 남북대화를 중단시킨 바 있고 1975. 5. 29에는 다음날로 예정되어 있던 남북조절위원회 제11차 부위원장회의의 일방적인 무기연기 통고로 동 부위원장회의를 중단시킨 바 있으며 1978. 3. 19에는 역시 하루 뒤로 예정되어 있던 남북적십자 제26차 실무회의의 일방적인 무기연기를 통고함으로써 동 실무회의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1976. 8. 30에는 남북직통전화로 상호 통화를 하는 도중에 일방적으로 슬그머니 통화를 중단하므로써 남북직통전화의 운용을 단절시킨 바 있습니다. 북한측은 남북대화의 계속을 바라는 내외의 여망을 저버리고 이번에도 이같은 과거의 비열한 수법을 또다시 되풀이하여 모처럼의 남북실무대표 접촉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반의 북한측의 처사는 곧 당초부터 그들에게는 남북총리회담을 실현시킬 의도가 없었음을 웅변해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들은 우리가 「5·17」 조치로 작년 「10·26사태」 이후의 일시적인 정치불안 및 사회혼란현상을 극복하게 되자 남북대화를 구실로 우리의 국내사태에 편승하여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저들의 기도가 빛나가게 되었음을 자인한 나머지 남북총리회담의 실현은 고사하고 실무대표 접촉의 계속에도 흥미를 잃은 끝에 결국 실무대표 접촉의 중단을 획책하기에 이르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5·17」 조치 이후 북측은

종래 2주간격을 유지했던 때 접촉간의 간격을 제8차와 제9차 사이는 40일간으로, 제9차와 제10차 사이는 2개월간으로 계속 넓히고 다시 제10차 접촉은 연기를 기도한 끝에 이것이 여의치 않자 이번 제11차 접촉부터는 아예 접촉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박충훈 전국무총리 「서리」의 총리자격을 부당하게 시비하여 이를 실무대표 접촉을 형식적으로 갖기는 하되 의제토의는 거부하는 구실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9. 22 국회본회의에서 남덕우 신임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더 이상 이 문제를 의제토의 거부구실로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계기로 9. 24에는 실무대표접촉을 중단시키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같은 북한측의 일방적인 처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임있는 남북한당국간의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남북총리회담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처럼 마련된 남북대화가 또 다시 지난날처럼 어느 일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는 원래 9. 26의 제11차 접촉에서 제의하려고 준비했던 남북총리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을 공개제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려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남북총리회담 의제는 실무대표 접촉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총리회담 성립후 쌍방 총리들이 직접 협의 결정기로 한다.
- ② 첫 남북총리회담을 11월 둘째주(11. 3~11. 8)중에 개최하고, 두번째 회담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③ 첫 남북총리회담 장소는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관문점의 「자유의 집」과 「관문각」이나 또는 서울·평양 중에서 북측이 희망하는 장소로 하고 두 번째 회담장소는 첫 회담장소에 상응하는 상대측장소로 하며, 그 이후의 회담은 순서에 따라 쌍방지역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 ④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하여 기타 합의를 요하는 절차사항은 쌍방이 지정하는 대표 각1명이 전문요원을 대동하고 별도의 접촉을 통하여 협의 해결한 후 쌍방 수석대표의 공동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 ⑤ 이상과 같은 우리측의 새 제안을 토의하기 위해 제11차 실무대표 접촉을 1980년 10월 7일 「자유의 집」에서 갖는다.
- ⑥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 그리고 이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구하는 내외의 염원을 고려하여 남북실무접촉 대표단간에 운용되고 있는 남북직통전화 2개 회선은 앞으로 중단없이 계속 운용한다.

우리는 만약 북한측이 진정 대화에 의한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면 이상과 같은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하면서 조속한 시일안에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회답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3부 북한측의 남북실무대표 접촉중단과 국내반응

1. 북한측의 실무대표접촉 거부와 우리측의 접촉재개 촉구

지난 9월 26일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회구하는 내외의 염원을 고려하여 남북총리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6개 항목의 획기적인 타협안을 공개제의하고 10월 7일 「자유의 집」에서 제11차 실무접촉을 속개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끝내 접촉의 장소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우리측 제의를 거부했다.

이와 같은 북측의 태도에 우리측 실무대표단 이동복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북측은 민족적 양심과 대의의 차원에서 이성을 되찾아 그들이 중단시킨 실무접촉을 하루 속히 속개하자는 우리의 거듭된 제의에 호응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동 성명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총리회담 실무대표단 대변인 성명

1980. 10. 7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측은 지난 9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당분간 남북접촉의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9월 26일로 예정되었던 남북총리회담 절차 마련을 위한 제11차 실무대표접촉을 유산시켰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9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측의 되풀이 되는 일방적인 대화중단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남북총리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획기적인 6개 항목의 타협안을 새로이 공개제안한 바 있다. 우리는 여기서 남북총리회담 의제는 더 이상 실무접촉에서 논의하지 말고 쌍방총리들이 직접 만나서 협의·결정하며 첫 총리회담장소도 비단 이미 쌍방간에 합의된 관문점뿐 아니라 서울·평양 중에서 북측이 선택하는 장소로 하자고 제의했다. 우리는 또 제11차 실무접촉을 오늘 속개하여 우리의 새로운 타협안을 바탕으로 남은 절차문제를 매듭짓고 첫 총리회담을 11월 3일부터 8일 사이에 개최하며 또한 만약의 경우 비록 실무접촉이 잠시 열리지 못하더라도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직통전화는 중단없이 계속 운용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같은 우리의 획기적인 타협안을 외면했으며 그 결과 우리가 오늘 속개하자고 제의했던 제11차 실무접촉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곧 북한측이 과거 여러차례 되풀이했던 상투적 방식에 따라 금반의 실무접촉도 완전히 중단시키려 기도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움직임을 보면 북한측은 우리의 건설적인 9. 26 제의는 묵살한채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이고 기만적인 위장평화선전으로 내외의 일부 세론의 오도를 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악랄하고 무분별한 대남비방선전과 국제적 반한모략책동을 나날이 격화시키면서 폭력에 의한 우리 정부의 타도를 선동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결국 북한측은 이번의 대화중단 선언으로 그들이 그 동안의 남북접촉에 응해 온 저의는 오직 10. 26사태 이후의 우리측의 일시적 내부 혼란기를 틈타 우리 사회내에서의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대화를 이용해 보겠다는데 있음을 입증해 준 것이다. 북한측은 심지어 9월 25일 10시 30분에 있었던 연락전화를 마지막으로 남북직통전화의 운용마저 중단시킴으로써 그들은 남북간의 긴장완화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는

당초부터 아예 관심조차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측의 또 한번 되풀이 되는 이같은 배신적이고 민족의 양심에 역행하는 대화중단 처사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가지려는 우리의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측이 민족양심과 대의의 차원에서 이성을 되찾아 그들이 중단시킨 실무접촉을 하루 속히 속개하자는 우리의 거듭된 제의에 호응해 나오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2. 북한측의 접촉기피와 실무대표 접촉의 난항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대화중단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중단·계속의 악순환을 거듭해온 남북대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대화과정에서와 같이 그들의 대화부정적 자세를 또다시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대화에 응해 오고 불리할 때는 일방적인 통고로 불참 선언을 하는 상투적 수법의 재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화는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라 대남적화를 위한 혁명전략, 전술로서의 가치판단에 따라 이용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한번 입증해 준 셈이다. 북측의 대화기피 태도는 제9차 남북실무대표 접촉이 열린 지난 6월 24일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났지만 그외에도 대화기간 동안에 대화에 장애를 조성하거나 기피함으로써 그들의 대화중단 저의를 짐작케 한 사례는 많았다.

다음은 그러한 사건과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북한측의 무장도발

- 1980. 3. 23 한강하구에 3명의 무장공비 침투
- 3. 25 경북 포항 앞 바다에 무장간첩선 1척 침투
- 3. 27 강원도 금화 동북방 5km 지점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남방 600m 지점에 3명의 무장간첩 침투
- 9. 9 동해상에서 어로중이던 「제2 남진호」 나포

(2) 실무접촉 개최 간격 연장 기도

- 8차 접촉에서 북측은 차기 회담일자를 40일 후인 7월 1일로 제의
- 9차 접촉에서는 두달 간격인 8월 26일로 제의함으로써 종래 14~16일 간격으로 열리던 실무접촉 개최기간을 연장코자 기도.
- 10차 접촉에서는 한달후인 9월 30일로 10차 접촉 자체를 연기코자 기도.

(3) 북측 수석대표 불참

- 1980. 6. 23 북측 수석대표 현준극이 건강상 이유로 제9차 실무대표접촉에 불참한다고 직통전화로 통고
- 이후 10차 접촉에도 같은 이유로 불참

(4) 실무접촉의 대남선전장화 기도

제 8 차: 비상계엄해제, 군정철폐, 구속인사석방 등 한국내부문제를 거론하며 총리회담 의제문제
토의 거부

제 9 차: 아측 총리자격을 놓고 의제문제 토의 거부

제 10 차: 아측 총리자격 및 아측 내부문제를 들어 실무접촉 개최를 거부

(5) 실무대표접촉 중단 기도

1980. 9. 24. 19:00 북한은 중앙방송, 평양방송을 통해 「북측실무대표단 성명」을 발표, 아측
내부문제를 거론하며 『당분간 접촉의 마당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실무대표접촉 중단기도.

3. 북한측의 일방적 대화중단과 국내반응

<다음은 북측의 남북실무대표접촉 일방적 중단에 따른 국내 주요지의 사설에 비친 반응을 일부 선정 전재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북한측의 일방적인 남북접촉 중단선언을 규탄한다.

북한측은 남북총리회담을 열기 위한 예비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그들의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우리는 그들의 무성의와 상투적인 기만성을 수없이 겪어온 만큼 이번의 대화거부를 짐작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필요할 때는 협상을 제의하고 불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을 불변의 전술로 삼아 왔다. 이와 같은 그들의 전술은 북한이 해방직후 민족적 염원을 등지고 반탁에서 찬탁으로 변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 35년 동안 일관되게 구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도 북측은 8개월간의 남북실무접촉이 전술목표에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게 되자 엉뚱한 구실을 붙여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북측 주장의 기만성이다. 북측은 대화중단의 이유로서 한국측의 내부사정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그들의 자세는 일련의 대남전략과 대외위장평화공세를 위해 꾸며낸 관계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남북조절위를 거부했을 때도 우리의 내부문제를 이유로 삼았었고 적십자회담을 교착상태에 빠뜨린 때에도 법률적 환경적 조건을 구실로 내세웠다. 또 남북직통전화를 끊을 때도 우리측이 성의가 없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북측은 처음부터 남북간의 진정한 대화나 평화모색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남북접촉을 오직 대남적화혁명 전략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었다.

대화중에도 남침용 땅굴을 파내려 왔는가 하면 해상과 육상으로 무력도발을 자행해 온 것은 그들의 저의를 여지없이 드러낸 실증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북측은 남한내의 혁명을 유도하기 위해 협상과 군사도발의 양면전략을 간단없이 구사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북측은 10·26이후 한국의 정치정세가 그들의 적화통일 여건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대화의 접촉을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국내안정을 회복하고 보다 강력한 안보태세로 새 질서의 기반을 다지자 그들은 마침내 대화를 중단하는 일조차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북의 이러한 전술은 7·4공동성명에 의해 출발한 남북조절위원회가 북의 의도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자 거부해 버린 이른바 8·28성명 때의 수법과 똑같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북측이 남북적십자회담 그리고 남북조절위 등 대화에 응한 이유는 이른바 상층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하여 그들의 침략기도를 은폐하고 한국내의 대공경계심을 약화시키려는데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회담을 통해 우리 내부의 혼란과 국론분열을 유도케 하여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다고 풀이된다. 총리회담을 위한 남북실무 접촉이 이루어지자마자 북측이 계속 「합작」과 「단결」이라는 용어를 구사해온 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저의는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들은 「합작」이란 말을 공산주의체제 안에서의 통일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단결」은 한국의 반공법폐기와 반공교육의 중단을 전제로 하는 전술적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의 흉계와 책략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화중단의 구실을 한국측의 사정 때문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한 그들의 주장이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국제여론을 기만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최근의 대미접근 공세와 가공적인 연방제주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북측은 미국과 일본 등 한국우방의 일부 의원들과 언론인들을 차례로 평양에 맞아들여 대남비방 선전에 전례없는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은 나아가 한반도의 긴장완화 조건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 현재의 휴전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예의 상투적 평화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남북한의 현상을 파괴하고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그들의 음흉한 책략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모색과 긴장완화 방안의 추구는 어디까지나 남북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북측이 제3자인 미국과 협상하려 드는 것은 대남혁명통일 전략의 이중구조를 폭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우리는 북측이 민족자주와 평화통일 및 민족단결원칙을 확인한 7·4공동성명정신으로 돌아가 우리측이 26일 제의한 총리회담개최를 즉각 수락할 것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우선 남북이 성실한 대화로써 전쟁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평화공존을 모색하는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안문제의 해결에 서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북측은 부질없는 적화통일의 미몽을 버리고 진정한 민족적 양심에 돌아가 우리가 제의한 남북총리회담을 성실한 자세로 받아 들이기를 거듭 촉구해둔다.

- 경향신문(1980. 9. 26) -

남북실무접촉 일방적 중단

- 북측은 총리회담의 11월 개최안에 성의있는 반응을 보이라 -

남북총리회담 실현을 위한 실무접촉이 끝내 중단될 국면에 이르렀다. 북한측은 9월 26일로 합의된 제11차 실무대표 접촉을 이틀 앞둔 24일 그들의 방송을 통해 「북측 실무대표단 성명」을 발표, 한국의 내부분제를 거론하며 『당분간 접촉의 마당에 나가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실무접촉을 사실상 중단시켜 버렸다.

북한측이 실무접촉의 일방적 중단으로 나오리라는 것은 이미 지난 5월께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난 그들의 대화기피 태도에서 충분히 예측돼온 바이지만 그 중단의 이유로 우리의 내부문제를 쳐들었다는 것은 애당초 이 접촉에 응해온 그들의 저의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들의 의도는 그동안의 실무대표 접촉 경과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바 있다.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은 지난 1월 북한측이 그들의 정무원총리 명의로 우리 국무총리에게 보내온 서한을 우리측이 지난 1979년의 「1·19당국자회담 제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그후 10차에 걸친 접촉을 갖는 동안 북측 대표들은 총리회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정치선전과 대남비방만을 일삼으면서 한번도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핵심문제인 총리회담의 의제토의에 있어서는 우리측의 실질적 의제안에 맞서 소위 「합작·단결」이란 대남적화의 뜻이 담긴 용어의 포괄적 의제안을 내놓음으로써 시종 비생산적인 논의만 거듭했다.

뿐만 아니라 이 접촉이 진행되는 기간중 그들은 한강하구, 포항근해, 금화전방, 서산 앞바다 등에서 잇달아 무장간첩의 침투를 시도했으며 또 최근에는 동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불법납치해 갔는가 하면 휴전선 전역에 걸쳐 한동안 중지됐던 대남비방 확성기 방송을 일제히 재개했다. 이같은 일면 남북접촉, 일면 대남도발의 양면공세에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 복합적 흥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 하나는 10·26사태 이후의 우리 내부정세에 편승, 그들이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인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하려는 것이었다. 그러한 속셈은 총리회담을 정당·사회단체간 다면접촉의 일부로 추진해야 한다고 고집해온 그들의 주장에서 역력히 드러났다. 다른 하나는 유엔총회와 미국의 대통령선거등을 겨냥하여 그들이 대남적화의 최대장애로 보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것은 실질적 의제의 토의를 고의적으로 회피해가며 실무접촉만 끊으로써 남북한간에 마치 해빙기라도 다가온양 국제여론을 기만하려는 그간의 그들 작태에서 또한 명백히 읽을 수 있다.

그러나 5·17조치와 국보위의 설치, 그리고 새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의 정국과 사회가 안정을 되찾자 그들은 대남혁명이 무망함을 깨닫게 되었다. 한편 국제사회를 향한 위장평화선전도 그들이 유엔총회에서의 표발으로 믿고 있는 비동맹 국가들에 의해 외면당했고 또 철군문제도 미국내에서 전혀 선거이슈로 거론될 기미가 없음을 알아차리자 남북접촉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날 북한측은 남북조절위원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두 갈래의 대화에도 이와 똑같은 목적에서 응해 왔다가 그 목적달성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자 모두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버렸다. 조절위원회담은 주한미군철수 등 「군사5개 항목」의 우선 해결을 조건으로, 적십자회담은 우리의 반공정책 철폐를 선행조건으로 내걸어 중단시켰던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북한측의 거듭되는 독거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그들은 남북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남북대화에 의한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있을 따름임을 허심탄회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우기 남북한은 지난 1972년 「7·4공동성명」에서 통일은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이뤄야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하고 있다. 북은 이 원칙에 따라 그 불순한 조건들을 즉각 철회하고 총리회담의 실현, 남북조절위 및 적십자회담의 재개에 성의있는 태도로 나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측은 우리측이 26일 공개제의한 첫 남북총리회담의 11월 둘째주 개최안에 성의있는 반응을 보일 것을 인내를 가지고 기대하는 바이다.

- 서울신문(1980. 9. 26) -

남북접촉 거부와 새 제의

- 대화는 민족적 소명이요 현실적 명제이다 -

그동안 일말의 기대를 걸게했던 남북한 총리회담이 북한의 일방적인 실무접촉거부 통고로 8개월만에 유산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26일 열릴 예정이던 제11차 실무접촉을 이틀 앞두고 북한은 그들의 「실무대표단 성명」이라는 것을 통해 남북한 총리회담 준비접촉에 『당분간 나가지 않겠다』고 통고했던 것이다.

여기에 맞서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26일 대북성명을 통해 실무대표접촉은 생략하고 직접 남북총리회담을 11월중에 개최해야 하며 장소로는 서울이나 평양 관문점 어느곳도 무방하다고 제안했다. 적어도 남북직통전화 2개회선만은 앞으로도 중단없이 운용할 것도 북측에 아울러 요구했다.

서울측의 이와같은 새로운 제안을 그들이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또다시 그들에게 농락당했다는 분노가 그들의 어떤 호응에 대한 기대를 앞지른다.

돌이켜 보건대 김일성집단은 1972년 7·4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남북조절위간의 대화를 시작한지 1년 1개월만인 1973년 8월 이른바 김영주성명이란 것을 통해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시켰고 이산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열렸던 남북적십자회담도 그들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유산된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남북대화를 제멋대로 중단해 버렸던 북한이 작년초 서울측이 제안한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회담에 변칙적으로 응하는체 하더니 금년초에는 갑자기 남북총리회담을 들고 나왔었다. 5천만 겨레는 얼마간 어리둥절했다. 그런데 그 제안이 있는지 8개월만에 김일성은 또다시 제멋대로 총리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조차 거부해 버린 것이다.

7·4공동성명후 김일성과의 남북대화과정에서 우리는 한가지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남한적화기반조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제멋대로 남북대화 창구를 열고 집적대다가 판단이 달라지면 제멋대로 일방적인 통고하나로 간단히 폐쇄해 버리는 작태 그것이다. 7·4공동성명때는 남북대화를

열어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것으로 착각되었던 남한동포들에게 용공사상을 선동하려 기도했다가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자 1년만에 대화 창구를 모두 닫아버리고 돌아섰으며 작년에 한국에서 10·26사태가 돌발하고 그 여파로 정치적 공백이 보이자 김일성집단은 다시 대남적화 기반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또다시 착각하고 서둘러 남북총리회담이란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총리회담 창구를 통한 대남적화 선동이 먹혀들지 않게 되자 김일성은 또다시 총리회담 실무접촉마저 중단을 선언하고 돌아섰다.

남북대화를 분단민족의 화해 창구로서가 아니라 또다시 피를 뿌릴 대남적화통일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김의 망상과 6·25남침을 자행하여 수십만 동족의 피를 먹은 김의 민족자해 습성을 상기할 때 그를 상대로 남북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굶주린 늑대의 대화에 기대를 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일성의 본질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측도 그에 따라 남북대화를 불가능한 것으로 아예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는데 민족적인 고민이 있다.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실현키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민족적 소명이요 전쟁의 위험수위를 높여가는 남북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 명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김일성 자신도 5천만 이 겨레가 남북대화를 한결같이 민족적 소명이요 현실적 명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내심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른다.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김이 중단시킬 때 마다 그 책임을 서울측에 전가시키려 급급하고 대화 그 자체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못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서울측이 촉구할 때마다 반대도 하지 못한채 응답만 기피하고 마는 북한측의 작태에서 충분히 실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총리회담도 완전한 폐기 아닌 당분간 중지로 말꼬리를 돌린데서 드러나고 있다.

남북대화는 북한사회 개방으로 김일성 우상화에 바람이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는 김일성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6·25남침이후 대남적화가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오만에 오만을 거듭하고 있는 김일성과 그의 측근들의 우매함과 망상때문에 농락만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두가지 밖에 없다. 서울측이 강자의 입장에서 인내를 갖고 김일성집단이 그들의 우매함과 망상에서 대화의 필요성을 감지할 수 있도록 여러면으로 유도해내는 것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측이 남북 대화에 임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도록 외적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번째의 외적 환경조정과 관련해서 최근 우방 일각에서 야릇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 양국의 공직자들이 「개인자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큰 주저없이 평양방문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폐쇄 속에 국제적 이단자로 움츠리고 있는 김일성 집단을 국제사회로 끌어내 화해 물결에 동화시킨다는 것이 평양노크의 저변같으나 드디어 평양은 총리회담조차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말았다는데서 우방인사들의 평양방문은 재고를 요한다.

어쨌든 남북대화없이 분단조국의 통일도 남북적대관계의 해소도 평화공존의 기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김일성집단은 서울측의 「9·26 총리회담」 제의를 받아들이고 아직 회담도 않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측의 「9·12 남북적 본회담」 제안을 즉각 수락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동시에 『당분간 나가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여운에 즉각 나올 것을 강조해 두는 바이다.

11월 총리회담에 나오라

- 북측의 실무접촉 중단 반민족적이다 -

5천만 거래의 염원을 또다시 저버리면서 북한측은 24일 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한실무대표 접촉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 어제 있으려던 제11차 모임이 유산되고 말았다.

이로써 모처럼 마련되었던 그 실무대표 접촉은 지난 2월 6일 이래 불과 7개월여만에 완전결렬되고 8년째 이어져온 남북대화 관계마저 한고비 또 어두운 파멸의 고비를 맞게 되었다. 북측의 표면상 중단 선언 이유는 『한국내부에 참을 수 없는 중대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풀이하면 속셈이 너무나 뻔한 트집임에 틀림없다. 원리대로 생각할 때 1대 1의 남북대화를 하고 있는터에 상대방의 내부사정을 시비한다는 것부터 범절에 어긋나는 작태이다.

그래서 1972년 대화 시작당시 피차간 내정에는 간섭·개의치 않고 상호의 입장을 똑같이 존중키로 선을 그었으며 근래 북측 고위당국자도 이런 원칙을 대외적으로 재차 확인한바 있었다.

한데 새삼 한국의 내부분제를 시비하며 「접촉중단」을 하고만 근원은 10·26사태후 남한의 정세변화를 틈타 그 접촉통로를 대남혁명공작에 악용하고 위장 평화공세로 남쪽내부 교란을 시도하려던 그들의 저의가 우리의 새 정부 출범과 안정 회복으로 완전히 좌절된데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실의에서온 반발이며 폭거요, 대화의 계속이 그들에게 무익하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른 대응임에 틀림없다.

중단확책의 마수와 징조는 벌써부터 역력했었다. 2월 접촉 불과 한달후부터 평양측은 무장공비·간첩남파(5회)를 비롯하여 반한 비방선동·선전, 어선남북, 휴전선지대서의 대남 비난확성기 방송 재개, 실무접촉 간격의 연장기도, 북측 수석대표의 불참, 실무접촉장서의 정치선전시도, 김일성의 접촉무용론 발설 등 - 굳이 아주 오랜 옛 중단사례를 쳐들지 않더라도 줄줄이 잇닿아져 왔다.

그러므로 이런 행적과 이번 접촉중단 처사를 대하면서 대화에서 몇가지 꼭 「노트」하고 대비해야 할 경계점과 비망사항을 절로 챙겨두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첫째, 북한집단에 관한한 처음부터 순수한 대화나 접촉은 할 의사가 없었고 기대하기 또한 어렵다는 점이다. 그들의 대화호응은 오직 적화혁명통일을 위한 화·전 양면술책의 일환일 뿐임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둘째, 요즘 걸핏하면 그들이 쳐든 전제조건 없는 남한과의 교역·교류·이산가족사업 희망 및 접촉용의 표명이 모두 「거짓」임을 잊지 못하게 한다. 그들의 위장대화 평화공세가 얼마나 믿을성 없는 것인지를 일부 우방당로자와 인사들은 다시한번 새겨주었으면 한다.

세째, 평화적인 접촉·대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그들이고 보면 필경은 이제부터 무장도발·도전을 격화시키려들게 틀림없다. 경각심과 대응결의를 한층 드높여야 하겠다.

네째, 그렇다고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과 성실하고 인내성있는 추진노력을 둔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제 발표된 대한민국실무대표단 성명은 총리회담개최를 위한 6개항의 새 제안을 하고 오는 11월 둘째주에 첫 회담을 열도록 북측에 채근해 두었다.

상대방의 중단 폭거와는 매우 대조적이며 적정한 주도성의 발휘라고 보겠다. 북한집단의 군말 없는 호응이 있도록 거래의 이름을 걸고 충고·경고해 둔다.

- 한국일보(1980. 9. 27) -

거듭되는 북의 대화파괴

I

북한측의 대화파괴 기도는 결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7일에 남북 총리회담 실현을 위한 11차 실무접촉을 갖자고 지난 9월 26일 우리측 실무대표단이 촉구한 제의에 그동안 북측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이날 그들의 실무대표가 판문점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로써 총리회담 실현을 위한 남북간 접촉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그 재개는 당분간 무망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

우리측은 「9·26」 제의에서 ① 총리회담 의제는 총리회담 성립후 쌍방총리들이 직접 협의 결정한다. ② 첫 총리회담은 11월 둘째주(11월 3~8일)에 개최하고 두 번째 회담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첫 총리회담 장소는 자유의 집과 판문각 또는 서울~평양 중에서 북측이 희망하는 장소로 하고 두 번째 부터는 쌍방지역에서 번갈아 개최한다는 획기적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10월 7일에 11차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대표단간에 운용되고 있는 직통전화 2개 회선도 계속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우리측 제의는 그날(9. 26) 열릴 예정이던 11차 실무접촉이 북측의 일방적 불참으로 유산됨으로써 부득이 실무대표단의 성명을 통해 이를 공개했던 것이며 그 이틀전인 9월 24일 북측은 평양방송을 통해 우리의 내부사정을 헐뜯고 이와 관련하여 당분간 접촉자리에 나가지 않겠다는 일방적이고도 강변적 선언을 한바 있으며, 직통전화 또한 그들에 의한 일방적 불응으로 두 절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II

이와 같은 북의 일련의 작태에 직면해서 우리 실무대표단은 7일 거듭 성명을 발표하고 그들의 『민족양심에 역행하는 대화중단 처사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가지려는 우리의 노력을 중단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측은 우리의 건설적인 9·26제의를 묵살한채,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이고 기만적인 위장평화선전으로 내외 일부 세론의 오도를 꺾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악랄하고 무분별한 대남 비방선전

과 국제적 반한 모략책동을 나날이 격화시키면서 폭력에 의한 우리정부의 타도를 선동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고 그들을 신랄히 비난했다.

1971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북의 집단은 변함없는 상투적 수법으로 대화를 파괴해 왔다. ① 1973년 8월 28일 김영주성명으로 조절위를 멋대로 끊어버렸다. 반공법 등을 없애고 구속자를 석방하면 다시 하겠다는 것이었다. ② 이어 적십자회담도 명백한 이유제시 없이 불응해 버렸고 뒤에 서울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 열 수 없다고 했다. ③ 1975년 5월 조절위 부위원장 회의는 개최 하루전 전화통고 하나로 일방적으로 무기연기시켜 버렸고 ④ 1978년 3월 적십자실무회의 또한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핑계로 그들 자의로 끊어 버렸고 ⑤ 1979년 3월 우리의 「1·19」 제의에 의한 변칙대좌도 그들의 일방적 불참으로 유산됐다.

그들은 아직 대화가 목적이 아니며 대화를 빙자한 남한의 혼란과 혁명여건 조성이 목적인 것이며, 그 목적달성이 여의치 않아졌을 때 그것을 끊어 버리는 마구잡이 수법에 우리도 이젠 익숙해질대로 익숙해 졌다. 그러나 그와같은 그들의 일방적인 「놀이」가 언제까지나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내다보고 있다.

- 조선일보(1980. 10. 8) -

제4부 남북대화 소식

「남북조절위원회」

1. 서울측 7·4성명 8주년에 즈음하여 성명발표

서울측 『남북공동성명의 전폭적이고도 완전한 이행을 촉구』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이동복 대변인은 지난 7월 4일 남북공동성명발표 8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공동성명의 전폭적이고도 완전한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남북조절위원회의 합의된 기능이 조속히 회복되고 운영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남북조절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측이 하루 속히 민족 본래의 양심과 양식으로 돌아와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에 호응함으로써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합의사항이 구현되도록 하는데 우리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대변인의 성명문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편집자 주 -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성명

1980. 7. 4 10:00

우리는 오늘 역사적 남북공동성명 발표 8주년을 맞이한다. 8년전 오늘 남북한 쌍방은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공동성명을 동시 발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분단조국의 화해와 통일을 희구하는 남북의 5천만 민족에게 커다란 기대를 안겨준 바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와같은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남북공동성명 발표후 남북간에는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본회담 등 두갈래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으나 북한측은 부당하고도 일방적인 요구 조건을 내세워 대화를 교착시킨 끝에 불과 1년후에는 두갈래 대화 모두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북한측은 그 뒤에도 남북공동성명에 의거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우리의 다각적인 노력을 일절 외면하고 남북공동성명의 일부 특정 구절만을 가지고 이를 일방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정략적으로 악용함으로써 남북공동성명마저도 대남비방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전자료로 이용하는데만 급급하여 왔다.

그동안 북한측은 남북공동성명에 의거한 대화를 완강하게 거부해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남북공동성명의 명문조항에 근거를 두고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발족된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는 비단 성과있는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상호 신의에 어긋나는 것일뿐 아니라 남북조절위원회에 남북공동성명의 제반합의 사항의 실천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남북공동성명의 명문규정에 비추어 볼 때 남북공동성명 그 자체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한 당사일방인 우리

로서는 이같은 북한측의 일방적인 처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측에 대해 남북간에 모처럼 합의된 남북공동성명의 전폭적이고도 완전한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조절위원회의 합의된 기능이 조속히 회복되고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된 합의사항의 실천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남북공동성명이 사문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남북조절위원회의 확대·개편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그동안 거듭 천명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북한측이 하루속히 민족 본래의 양심과 양식으로 돌아와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에 호응함으로써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합의사항이 구현되도록 하는데 우리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 북한측 대남 비방방송 재개에 서울측 성명 발표

- 7·4성명정신 입각, 즉각 중지하라 -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월 5일 『북괴는 지난 4일 하오 5시를 기해 휴전선전상에서 확성기를 통한 대남비방방송을 재개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북한측은 금년 9월 2일 하오 5시부터 휴전선전역에 설치된 11개지역 북측 G.P에서 총 14회에 걸쳐 『남북대화하자는데 남한이 회피하고 있다』 『남한에서 방송하니깐 우리도 방송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상잔의 길로 가고있다』 『국군장병은 현정권을 타도하라』는 등의 내용과 광주사태, 특정인에 대한 비난등 허무맹랑하고 날조된 대남비방방송을 재개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정신에 따라 지난 1972년 11월 11일을 기해 상호비난방송을 중지하기로한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1973년 6월 10일 중·서부전선에서 대남 확성기 비방방송을 실시하여 1979년 10월 21일까지 매년 대남비방방송을 해왔으며 0·26이후 한때 잠잠 하다가 이번에 또다시 비방방송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북한측의 대남비방방송 재개에 대하여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이동복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휴전선 대남비방방송은 「7·4남북공동성명」 정신과 72년 11월 4일자 「휴전선에서의 확성기에 의한 방송중지에 관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상호 불신을 심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7·4남북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하여 생산적인 대화에 호응해 나오라』고 촉구했다.

성명문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성명

1980. 9. 5 17:00

북한측은 1980. 9. 4 오후 5시부터 휴전선 11개 지역에서 대형확성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터무니 없는 비난을 퍼붓는 대남 비방방송을 실시하였다.

북한측의 이와 같은 휴전선 대남 비방방송은 「7·4 남북공동성명」 정신과 1972년 11월 4일자 「휴전선에서의 확성기에 의한 방송중지에 관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남북간의 긴장상태와 민족적 대립을 한층 고조시키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북한측이 이번에 휴전선 여러 지역에서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외면하고 대형 확성기를 동원하여 악랄한 대남비방방송을 재개한 사실에 대하여 최근 우리의 새 정부가 광범위한 내외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토착화, 사회정의의 구현 그리고 복지국가의 건설을 다짐하면서 힘찬

출범을 함에 따라 대화를 이용하여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그들의 기도가 빛나가게 되는데 초조한 나머지 계획적으로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서 대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구실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북한측이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상호불신을 심화시키는 이같은 합의사항 위반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7·4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상호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

3.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운운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성명

『북한측 「고려민주연방제」 제의는 계략』

북한측은 최근 근 10년만에 열린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그들의 최고당국자가 당 대회 보고를 통해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운운하며 그것이 마치 새로운 평화통일방안인 것처럼 선전했다.

이에 대하여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미 실체도 없고 현실성도 없음이 널리 입증된 이른바 「연방제」로서 종래의 소위 『고려연방공화국』 운운의 주장을 개명, 분식하여 선전에만 목적을 둔 가공적 허구』임을 지적하고 『북측은 이번 발언에서도 여전히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풀이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곧 「연방제」를 빙자하여 그들의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려는 반평화적 계략』이라고 반박했다.

이동북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우리는 분단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제기하는 어떠한 문제든지 제한없이 직접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석상에서 거론하여 난상토의를 거쳐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내외에 명백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북측이 소위 「연방제」든지 혹은 어떠한 다른 것이든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통일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부당한 태도를 지금부터라도 지양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대화석상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논박했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성명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성명

1980. 10. 15 서울

북한 공산집단은 금반 10년만에 열린 노동당대회에서 이미 예상했던 대로 자유세계는 물론 다른 공산주의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부자지간의 세습후계에 의한 특정 자연인 일가의 봉건왕조 체제를 북한 땅에 구축하는 전 근대적인 작태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세인의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공산집단은 그동안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을 중단시키고 남북직통전화를 단절시키는 등 7·4 남북공동성명을 헌신짝처럼 차버렸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남북실무대표 접촉과 이를 위해 한때 재개되었던 남북직통전화의 운용을 다시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장본인이 다름아닌 그들 스스로 이면서도 이는 아랑곳함이 없이 이번 당 대회에서 뻔뻔스럽게도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을 운운하면서 기만적인 궤변으로 내외여론의 오도를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에 의거하여 발족된 남북공동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의 일방의 입장에서 북한공산집단의 이같은 파렴치한 행동을 보고 실로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우

리의 입장과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혀두지 않을 수 없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측의 최고당국자는 이번 당대회 보고를 통해 이미 실제도 없고 현실성이 없음이 널리 입증된 가공적인 한낱 선전제안인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안을 가지고 또다시 앞뒤와 표리가 맞지 않는 장광설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는 종래의 소위 「고려연방공화국」 운운의 주장을 이번에는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운운의 주장으로 개명·분식하여 내놓고 이것이 마치 새로운 평화통일방안인 것처럼 선전했다. 그러나 그의 이같은 행동은 오직 늑대의 몸에 양의 가죽을 입혀 세상의 이목을 속여 보려는 흉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안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규명함으로써 그들의 불순한 계략에 대한 내외의 경각심이 제고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로, 북측이 거론하고 있는 소위 「연방제」 통일방안은 2개의 본질적으로 상이한 정치체도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뒤섞고 있는 원천적으로 비현실적이고 가공적인 발상이다. 왜냐하면 북측은 우리 말로는 「연방」을 운위하면서 동시에 외국어로는 「국가연합」이라는 근본적으로 뜻이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어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혼동은 분명히 고의적인 것이다. 즉 북측은 국내적으로는 일견 통일지향적인 「연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민족적인 통일염원에 편승하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남북간 「평화공존」의 개념이 함축된 「국가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합리성과 현실성을 추구하는 국제여론에 영합하는 상이한 선전목적을 함께 추구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북측이 말하는 소위 「연방제」란 「연방」과 「국가연합」이라는 상이한 2개의 정치제도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가 애매한,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하나의 선전제안에 불과하다.

둘째로, 북측의 최고당국자는 이번의 당대회 보고발언에서도 여전히 소위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1)현 대한민국정부가 폭력으로 타도되고 용공정권이 수립되며, 2) 대한민국의 반공법·국가보안법 등 국가안보 관계법령이 폐지되고, 3) 대한민국내에서의 이른바 「통일혁명당」을 비롯한 공산·용공정당 및 정치세력들의 활동이 합법화되며, 4)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 투옥된 자들을 석방하고, 5)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평화협정」이 대한민국은 제외된 가운데 미국과 북한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곧 북측이 소위 「연방제」를 거론하는 목적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우리와 「연방제」를 가지고 협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연방제」를 빙자하여 그 「전제조건」으로 대한민국이 스스로 공산화의 길을 택하고 또 스스로 6·25 남침 이전의 무방비상태로 되돌아 갈 것을 강요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그들의 「연방제」 주장에는 실제로는 성립될 수 없는 이같이 강탈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안이 풍기는 외견상의 선전효과를 가지고 우리 국민과 해외동포들의 순수한 통일염원을 농락하여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반민족적인 계략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그들은 심지어 1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가리켜 소위 「정치적 합작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면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라는 구실아래 우리의 반공국시의 변

경을 요구함으로써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한 적십자회담마저 대남적화 여건조성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연방제」 주장도 그와 똑같은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하나의 미끼에 불과함이 명백하다. 결국 북한 공산집단이 거론하는 「연방제」 주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통일과는 무관한 새로운 동족상잔의 전화와 폭력혁명의 불씨를 내포하고 있는 반평화적인 계략인 것이다.

세째로, 북측의 최고당국자가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10대 시정방침」이라고 중언복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비현실적인 「전제조건」들로 인하여 소위 「연방제」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하나의 가공적 허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같이 가공적인 허구에 입각하여 황실수설한 문제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발언 가운데 그 동안 남북대화의 진행과정에서 북괴의 실제로 취한 행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의 진의를 추궁함으로써 금반 북측 최고당국자의 발언이 과연 얼마나 성실한 것인가를 규명하여 내외의 여론이 오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북측의 최고당국자는 소위 「연방제」 하에서의 남북공동기구로 이른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를 운위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남북 쌍방이 1972년 역사적 남북공동성명 제6항의 명문조항에 의거하여 설치된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이의 재개를 거부하고 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역시 남북간의 합의문서인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 (1) 자주적 평화통일문제 해결, (2) 남북간의 정치적 교류, (3) 남북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와 협력, (4) 남북간의 긴장상태 완화 및 군사적 충돌방지, (5) 해외활동에 있어서의 남북간의 공동보조문제 등 광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이는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이 정상화될 때 북측이 「연방제」 하에서 남북간에 협의하자고 하는 일체의 사항이 원만하게 논의될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또한 필요에 따라 바람직하다면 남북조절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도 밝혀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해 놓은 남북관계의 협의조정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는 팽개쳐 버리고 정체불명의 새로운 기구문제를 거론하는 북측의 행동에는 비단 논리적인 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신뢰조성의 관점에서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의 최고당국자는 남북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 과학, 문화,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 남북간 교통·체신의 연결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문제들이야말로 진정한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의 문제로 우리가 남북간에 구체적 협의·해결과 추진을 희망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러한 희망에 입각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남북간의 사회적 개방과 경제, 문화, 사회분야에서의 구체적 교류와 협력을 제의한 바 있다. 우리는 이산가족문제의 전면적 해결이 당장 어려울 때는 우선 매일처럼 세상을 뜨고 있는 노부모와 자녀들 간의 이산가족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구정과 추석 등 민족전래의 명절을 이용한 성묘방문단의 교환도 제의한 바 있다. 또 우리는 남북간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위한 남북 민간 경제협력 기구와

필요하다면 쌍방간의 관계각료회의를 상설화할 것도 제의한 바 있다. 만약 북측이 이번의 그들의 최고 당국자의 말대로 진정 이같은 교류와 협력을 희망한다면 우리는 그같은 교류와 협력이 더 이상 지연됨이 없이 즉각 실천에 옮겨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북측이 한쪽에서 말로는 이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쪽에서 행동으로는 상반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남북쌍방은 먼저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모색하고 이루어진 합의는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이미 이루어진 합의는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화 상대방을 거부, 기피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대화의 길을 봉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같은 교류와 협력을 운위하는 이율배반의 자가당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북측 언동의 이율배반성은 한편으로는 남북이 서로 자기의 의사와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인 우리의 내부분제와 내외정책을 시비하고 이를 구실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측은 남북간 교통·체신의 연결을 운운하면서도 지난 9월 24일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남북실무대표 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면서 그 동안 다시 연결되었던 남북직통전화도 또다시 단절시키려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우리는 이번 당대회에서 북측 최고당국자가 거론한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운운의 발상은 오직 선전에만 목적을 둔 가공적 허구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분단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제기하는 어떠한 문제이든지 제한없이 직접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석상에서 거론하여 난상토의를 거쳐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내외에 명백히 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측이 소위 「연방제」 이든지 혹은 어떠한 다른 것이든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통일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북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선진하는 부당한 태도를 지금부터라도 지양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대화 석상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북측이 이같은 당연한 사리를 외면하고 대화의 재개는 계속 거부하면서 대화의 테두리 밖에서 일방적인 소위 「평화통일방안」을 운위한다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진정한 「평화통일방안」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북측은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만약 이번의 당대회에서 있었던 북측 최고당국자의 발언에 일말의 진실성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그들이 단절시킨 남북직통전화를 재개통시키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는데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남북조절위원회를 재개하여 이를 통한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고 또한 지금 당장이라도 남북총리회담을 열어 남북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성실하게 논의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만약 북측이 이같은 우리측 입장에 호응해 오지 않는다면 이번 당대회에서의 북측 최고 당국자의 발언은 오직 하나의 협잡위장발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입증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남북적십자회담>

4. 한적총재 「8·12 제의」 9주년 맞아 성명발표

『남북적십자회담 무조건 재개 촉구』

대한적십자사 이호 총재는 지난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9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고 1972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1천만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창한 기본취지를 상기시키면서 이와 같은 이산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측이 이제라도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을 무조건 재개하는데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호 총재는 만약 북한측이 이산가족들의 전반적인 실태 확인사업에 착수하기 어렵다면 우선 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 및 우편물 교환소의 설치,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우선적 상봉 주선, 그리고 남북간의 성묘방문단 상호교환 등을 시범적 사업으로 실시하자고 종전 주장을 강조했다.

이호 총재는 금년 1월말 서해안에서 북한당국에 의해 억류된 우리측 어선 제6, 제7 해왕호의 선원들이 반년이 지나도록 송환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측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리측 선원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품으로 무조건 즉각 돌려보낼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특히 지난 5월 10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회측의 요구에 따라 송환에 필요한 자료를 북한측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호 총재는 말했다.

<이호총재의 성명문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북한 적십자회측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지 아홉돌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고 「1천만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창한 기본취지는 남북간의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순수한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 과정에서 상호 접촉과 교류의 문을 넓히고 민족적 신뢰의 분위기를 두터이 해나가므로써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1년여의 예비회담 끝에 열리게 된 본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반공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등의 정치적 문제들을 선결조건으로 고집하다가 마침내 내외의 한결같은 염원과 성원을 외면한 채 1973년 8월 일방적으로 회담을 중단시켰으며 그 이후 우리의 끈질긴 노력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던 판문점 실무회담마저도 1978년 3월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적십자 쌍방은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개항의 의제를 합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둘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세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네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문제, 다섯째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남북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기본입장은 남북 이산가족들이 상호간에 주소는 고사하고 생사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애절한 상황을 고려하여 쌍방적십자사의 주관하에 이산가족들의 생사여부와 주소를 확인하는 심인의뢰서와 회보서를 교환함으로써 하루속히 서로의 소식을 알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산가족 상호간의 서신교환과 상호방문을 실현시키고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만약 북한측이 이산가족들의 전반적인 실태 확인사업에 착수하기 어렵다면 우선 관문점 이산가족 면회소 및 우편물 교환소의 설치,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우선적 상봉 주선, 그리고 남북간의 성묘방문단 상호교환 등을 시범적 사업으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상봉문제는 연로하신 부모들의 여생이 이제 거의 다하여 살아 생전에 풀어진 천륜의 정을 나누어 보려는 소박한 소망마저 버려야 되는 실로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고 있어 가장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9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이산가족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측이 이제라도 동포애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해서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을 무조건 재개하는 데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나는 금년 1월말 서해안에서 북한당국에 의해 억류된 우리측 어선 제6, 제7 해왕호의 선원들이 반년이 지나도록 송환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5월 10일 북한적십자회측의 요구에 따라 송환에 필요한 자료를 북한측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북한측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리측 선원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품으로 무조건 즉각 돌려보낼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5. 한적총재, 북적에 서한 전달

『남북적십자본회담 10월 28일 서울에서 무조건 속개하자.』

-억류어부 추석전 송환도 촉구-

대한적십자사 이호 총재는 지난 9월 12일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손성필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지난 1973년 7월 평양에서 있었던 제7차 본 회담 이후 중단돼온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오는 10월 28일에서 31일까지 서울에서 무조건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이호 총재의 서한은 이날 낮 12시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우리 측이 파견한 2명의 연락관에 의해 북한적십자회 연락원에게 전달됐는데 이날 우리측 연락관은 납북된 해왕호 선원가족들이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손성필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호소문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11일 상오 10시 방송통지문을 통해 이호 총재의 서한 등을 12일 낮 12시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달하겠다고 제의했고 이에 따라 북한적십자회측은 12일 상오 11시 27분 서한 등을 받아가기 위해 연락원 2명을 파견하겠다는 사실을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해 왔었다.

이 서한에서 이호 총재는 쌍방간에 회담속개를 위해 실무적으로 의견을 조정할 일이 있다면 지정되는 한 두 명의 실무대표들로 하여금 관문점에서 필요한 합의를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1월 서해상에서 어로작업중 납북되어 억류된 채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측 어선 제6, 제7 해왕호 어부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북한적십자회의 각별한 협력이 있기를 요망했으며 이 서한에 동봉하는 해왕호 어부 가족대표들이 북한적십자회에 보내는 애끓는 호소문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9월 8일 새벽 6시경 동해의 대화퇴어장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다가 긴급환자가 발생하여 급거 속초로 귀환중 공해상에서 북측에 단속 예인된 남진호의 선체 및 어부들도 역시 적십자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조속히 송환되도록 북한적십자회가 협조해 줄 것도 아울러 요망했다.

한편 해왕호 선원가족대표들은 이날 동봉하여 보낸 호소문에서 북한적십자회 손성필위원장도 같은 동포인 이상 해왕호 어부들이 부모와 처자,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즐지에 생이별하게 되는 비극이 생기는 것을 모른체 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지난 1978년 8월 제3신진호 선원이 송환되었을 때도 그들이 신변의 불편을 받은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어부 가족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6, 제7 해왕호의 경우에도 어선과 어부가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으며 북한적십자회가 적십자 인도주의정신과 동포애의 마음으로 이 문제가 가족들 간의 비극적인 생이별로 귀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왕이면 추석명절 이전에 어부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망했다.

<이호 총재 서한내용 전문과 어부가족대표 호소문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적총재서한>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년은 천수백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하나의 단일민족국가로 살아온 우리의 조국강토가 둘로 양단된 후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같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토분단으로 인하여 가장 애절한 고통을 맛보고 있는 동포들을 사랑하는 부모 형제 및 자매 자녀들과 인위적으로 헤어져 남북에 흩어져 살고 있는 1천만 이산가족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말에 의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 10년이 세 번하고 반이 지나는 동안 많은 노부모들이 이승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재회하지 못하는 한을 가슴에 품은 채 세상을 하직했으며 그때는 검은 머리였던 다른 많은 동포들이 이제는 흰머리가 되어 목숨이 다하기 전에 헤어져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자녀와 형제 자매들과 재회를 해야 하겠다는 인간본연의 비원으로 가슴 태우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며칠 후면 국토분단 후 서른다섯번째로 맞이하는 추석이 됩니다. 귀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수 천년 계속된 우리 민족 전래의 명절인 추석은 모든 가족이 단란하게 한 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추석을 맞이하는 이산가족들의 슬픔은 측은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는 기나긴 세월의 경과로 인하여 노경의 헤어진 부모들은 앞을 다투어 유명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산가족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심경은 절박하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적십자 인도주의는 포화가 작열하는 전쟁에서도 피아를 가리지 않고 부상자를 보살피 주는 것을 그 숭고한 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는 남북의 적십자인들이 순수한 적십자 인도주의의 정신으로 남북간의 정치적 견해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우선 같은 동포들인 이산가족들의 단장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귀측이 호응·동조할 것을 간곡히 요망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여 남북에 흩어져 사는 1천만 이산가족들의 헤어졌던 가족과의 재회의 기쁨이 3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질 때 5천만 겨레의 비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도 결정적으로 앞당겨지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나는 지난 1973년 7월 평양에서 있었던 제7차 본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남북 적십자 본 회담을 조속히 무조건 속개할 것을 귀하에게 제의하고자 합니다.

쌍방간에 합의된 순서에 따라 이번에 열릴 제8차 본 회담 장소는 서울입니다. 따라서 나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오는 10월 28일에서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 동안 장기간에 걸친 회담의 중단때문에 쌍방 대표단의 구성면에서는 얼마간 변동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대표단구성, 왕래절차, 상대방지역체류일정, 통신, 교통신변 안전보장 및 기타 편의 문제 등 제반 절차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성공적으로 이행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다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간에 회담속개를 위해 실무적으로 의견을 조정할 일이 있다면 나와 귀하가 지정하는 한 두 명의 실무대표들로 하여금 관문점에서 만나 필요한 합의를 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지난 1월 서해상에서 어로작업중에 귀측 당국에 의해 억류된 채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측 어선 「해왕 제6, 제7호의 어부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하여 귀하와 귀적십자회의 각별한 협력을 다시 한번 요망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동안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남북실무대표 접촉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측 대표들로부터 동접촉석상에서 동 「해왕호」 어부 송환문제에 관하여 쌍방간에 오간 대화의 내용을 상세히 연락 받았습시다.

그러나 나는 그 동안 1976년에 있었던 「신진호」의 경우를 비롯하여 귀측 지역으로 연행되어 억류되었다가 송환된 3천여명의 어부들이 귀환 후에는 아무런 처벌도 받음이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천하공지의 사실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해왕호」 어부들의 귀환 후 안전을 운운하는 귀측의 이른바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명백히 해두려 합니다.

나는 앞으로 몇일 후에는 집을 떠나 있던 가족들도 돌아와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민족 전래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안에 반드시 이들 「해왕호」 어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줌으로써 귀측도 「이데올로기」를 떠나 같은 동포로서 동포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나는 그러한 뜻에서 귀하가 이 서한에 동봉하는 「해왕호」 어부 가족대표들이 연명하여 귀하에게 보내는 애끓는 호소문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나는 9월 8일 새벽 6시경 동해의 대화퇴어장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다가 선상에서 긴급환자가 발생하여 급거 속초로 귀환중이던 우리측 어선 「남진호」가 승선어부 19명과 함께 거진 동북방 40 「마일」 밖 공해상에서 귀측 무장선박에 의해 단속·예인되었다는 것을 관계당국으로부터 통고 받았습시다.

나는 귀 적십자회가 이 「남진호」의 선체 및 어부들도 역시 적십자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조속히 송환되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나는 이상에서 귀하에게 제의하고 촉구한 사항들에 대하여 귀하가 지체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어부가족대표 호소문>

『우리는 오늘 귀측 당국에 의하여 나포되어 있는 제6, 제7해왕호 어부들의 가족을 대표하여 우리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의 애절한 마음을 한데 모아 이를 호소하고자 귀하에게 이 글을 드립니다.

우리들 가족들은 지난 1월 26일 귀측 당국이 서해상에서 2척의 어선을 나포, 조사중이라고 발표한 이래 남북적십자사 사이와 남북실무대표 접촉에서 오가는 남북간 대화의 진행상황을 가슴 조이며 지켜보던 중, 지난 5월 6일 귀측이 송환에 필요한 「관계자료」들을 요구하고 곧이어 5월 9일 대한적십자사가 귀측이 요구한 「관계자료」들을 귀측에 보내는데 이르러서는 『이제는 곧 돌아오게 되겠구나』 하는 재회의 기대에 들뜨는 마음으로 서로 기쁨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손성필 위원장님

우리들 가족들은 1978년 8월에 역시 귀측 당국에 의하여 나포되었다가 남북적십자사 사이의 인도적 협조로 무사히 송환된 어선 제3신진호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6, 제7해왕호의 경우에도 어선과 함께 승선어부 24명 전원이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족들은 지난 5월 9일 이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귀측이 송환날짜를 발표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게도 지난 6월 2일의 제9차 남북실무대표 접촉에서 귀측대표가 『어부들이 송환된 후의 신변을 염려하여 북쪽에 더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선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들 가족들은 실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성필 위원장님.

귀하도 잘 아시다시피 제6, 제7 해왕호 선원들은 모두 순박하고 단순한 어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귀측에 의하여 단속을 받게 되었는데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송환된 후 신변을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978년 8월 제3신진호 선원이 송환되었을 때도 그들이 신변의 불편을 받은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 어부 가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측 대한적십자사에서 인도적인 견지에서 제6, 제7 해왕호 어부 송환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한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마당에 송환 후의 신변염려란 전혀 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족들은 귀측 관계당국에서 우리의 가족인 「해왕호」 어부들의 송환 후 신변을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측 사정을 잘못 이해한 데서 연유된 것으로 밖에는 달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손성필 위원장님

우리들 가족들은 귀하가 우리와 같은 동포인 이상 「해왕호」 어부들이 부모와 처자,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줄지에 생이별하게 되는 비극이 생기는 것을 모른채 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족들은 귀하께서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의 마음으로 이 문제가 가족들 간의 비극적인 생이별로 귀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 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노력으로 기왕이면 돌아오는 추석명절 이전에 어부들이 우리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0년 9월 12일

제6해왕호 선 원 지 용 의 형 지세용
제7해왕호 선 원 정동수 의 부친 정덕삼
제7해왕호 선 원 김중오 의 형 김봉오
제6해왕호 선 원 조규호 의 형 조규형
제7해왕호 기관장 박충용 의 형 박금용

※ 「제6, 7 해왕호」, 「제2남진호」 납북경위 및 송환교섭 경과

가. 사건개요

<해왕호>

○ 납북경위 : 1980. 1. 22 「제6, 7 해왕호」 경기도 지도항 출항. 서해상에서 조업중 행방불명, 80. 1. 26 13:00 북한측은 평양방송을 통해 「정체불명의 선박 2척을 단속, 조사중」이라고 보도.

○ 납북인원 : 24명(추정)

<제2남진호>

○ 납북경위 : 1980. 9. 8 속초어선 소속 「제2남진호」가 울릉도 북방 16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선원 1명의 발병으로 선단을 이탈, 단독 남진중 9. 8 06:20경 북한 군함의 접근을 알리는 무전 타전후 통신 두절. 거진 동북방 40마일 공해상에서 납북된 것으로 추정.

○ 승선인원 : 19명.

○ 북한측은 11. 15 현재 무반응.

나. 송환교섭 경과

1980. 3. 3 10:00 한적총재, 방송통지문으로 북한적십자회칙에 북측이 단속, 조사중인 2척의 어선이 우리측 「해왕호」일 것임을 통보, 어선, 어부송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
4. 17 한적총재, 북적위원장 앞 서한을 통해(판문점) 북측에 억류중인 「제6, 7해왕호」 어선 어부 조속송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
4. 22 북적위원장, 한적 앞 방송통지문을 통해 「제6, 7해왕호」 어선, 어부 송환에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5. 6 북적위원장, 한적 앞 방송통지문을 통해 「제6, 7해왕호」 어부명단과 송환에 필요한 자료 송부 요청.
5. 10 한적, 북적에 어부명단 및 송환에 필요한 관계자료 송부(판문점).
8. 12 한적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9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북한측은 억류어부를 무조건 송환하라고 재촉구.
9. 8 「제2남진호」 납북.
9. 12 한적총재, 북적위원장 앞 서한을 통해(판문점)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와 억류중인 「제6, 7해왕호」, 「제2남진호」 어선, 어부의 조속한 송환에 각별한 협조를 재촉구, 「제6, 7해왕호」 어부가족대표들이 북적위원장에게 어부송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망하는 호소문동봉.
9. 15 한적, 적십자국제위원회(ICRC) 및 적십자사연맹(LRCS)에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북측에 피납 억류된 어부의 송환문제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정주년 제네바공사 전달).
11. 5 북측은 방송을 통해 억류중인 제6, 7해왕호 선원을 송환하겠다고 보도.
11. 12 제6, 7해왕호 선체 및 선원 23명 귀환(사망선원 유해 1구 미인도).
11. 13 한적총재, 담화문을 통해 선원 1명이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은 유감이며 판문점으로 사망선원유해가 가족에게 인도되도록 할 것과 남북억류중인 남진호 선원 19명의 조속한 송환도 재촉구, 또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를 제의한 9. 12자 한적총재서한에 긍정적인 호응있기를 촉구했음.

다. 남북실무대표 접촉에서 7차례의 송환 촉구

○ 제3차 접촉(1980. 3. 6)

남 : 귀측 관계당국이 1. 26 「평양방송」으로 보도한 소속불명선박이 아측 어선이면 인도적 입장에서 선처하여 주기 바람.

북 : 관계당국에서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

○ 제4차 접촉(1980. 3. 18)

남 : 어부송환문제에 관한 우리측 연락사항을 필히 관계당국에 전달해 주기 바람.

북 : 어부송환문제는 우리 실무대표 접촉과는 무관하나, 3차 접촉 후 귀측 요망사항을 관계당국에 전했다.

○ 제5차 접촉(1980. 4. 1)

남 : 억류어부문제와 관련한 북측 관계당국의 성의있는 조치를 요망함.

북 : 귀측 요구사항은 쌍방 적십자사간의 소관업무로서 우리 실무접촉에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제6차 접촉(1980. 4. 18)

남 : 억류어부 조속송환 재촉구

북 : 관계당국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호의적 발표가 있을 것」임.

○ 제8차 접촉(1980. 5. 22)

남 : 억류어부들의 조속 송환을 위해 북측 관계기관에서 선처하여 줄 것을 요망.

북 : 무반응.

○ 제9차 접촉(1980. 6. 24)

남 : 어부가족들의 애절한 심정을 우선 고려, 인도적 차원에서의 신속한 문제처리 요구.

북 : 아측 내부의 불안한 사정으로 어부들이 귀환하는 문제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구실로 아측이 어부들에 대한 신변담보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제10차 접촉(1980. 8. 20)

남 : 억류어부 추석 전 송환 촉구.

북 : 아측에서 어부들을 처벌치 않겠다는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공식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

6. 북적, 한적의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촉구를 또다시 외면

북한측은 최근 이산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재회문제 등 4개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할 것과 중단돼온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금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속개할 것을 제의한 대한적십자사의 성의있는 노력을 또다시 외면하고 말았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측이 이제라도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을 무조건 재개하는 데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판문점에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및 우편물교환소 설치,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우선적 상봉, 남북한 성묘방문단 상호교환 등을 실시할 것을 지난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9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적십자회측에 촉구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9월 12일 추석을 맞이하는 이산가족들이 서로를 그리워 하는 애절한 심경을 상기시키고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오는 10월 28일에서 10월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거듭 제의하고, 필요하다면 쌍방이 지정하는 실무대표들로 하여금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속개를 위한 실무적 의견조정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이호 총재서한을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손성필위원장에게 전달했었다.

북한적십자회측은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이같은 제의와 대화촉구는 물론,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호소한 억류어부 송환에 대하여도 이제까지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므로써 그들이 인도적 문제의 해결보다는 대남적화의 정치적 목적에만 관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남북적십자회담의 속개는 국토분단 이후 35년 동안이나 계속돼 오고 있는 1천만 남북이산가족의 고통과 불행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시급한 인도주의적 문제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인 동서독은 이미 지난 71년에 「양독간 통행협정」을 체결, 이산가족 상호방문의 길을 연 바 있다.

또 지난 76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도법회의는 「이산가족 재회에 관한 권리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이산가족의 재회문제는 국제법상의 인간기본권임을 온 세계에 선포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체제나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정당한 인간적 권리가 무시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측의 이런 태도는 5천만 겨레의 분노를 샀음은 물론, 세계의 여론도 북한측의 이론에 닿지 않는 궤변과 억지에 조소와 지탄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같은 과오를 뒤늦게 깨달은 양 김일성은 지난 7월 평양을 방문한 「솔라즈」 미하원의원과의 대답에서 앞으로 남북이산가족 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치적 전제조건을 내세웠던 중

래의 입장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는 것으로 전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8일 평양방송은 소위 「김일성의 교시」를 방송하면서 여전히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고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통일 대화와 접촉도 실속있게 진행될 수 없다고 자신의 기만성을 스스로 폭로함으로써 한때 김일성의 그같은 발언이 바로 그런 국제적 비판과 비난에 대한 하나의 편의적인 임기응변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어쨌든 그것은 북한측의 논리빈곤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므로 더 이상 불성실한 자세를 고집하지 말고 대한적십자사가 5천만 민족의 비원을 대변하여 제의한 인도적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측은 주저하지 말고 대화의 광장에 나와야 한다.

제5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비판

1. 북한이 제의한 「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

북한의 김일성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6차 당대회에서 행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안을 또다시 들고 나와 다시 한번 기만적인 위장평화 통일공세를 전개하였다.

즉 김일성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자』고 주장하면서 국호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고 남북이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주연방회의」를 구성, 남북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비동맹, 중립적」 연방국가가 『남북간의 문제를 민족적 이익에 맞도록 통일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에 김일성이 내놓은 소위 「연방제」 통일방안은 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해묵은 지난날의 비현실적인 「연방제」 주장을 개칭, 분식한 것에 불과하다.

김일성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주장은 그 발상이 본질적으로 종래의 「고려연방공화국」 주장과 동일하나 다만 여기에 「민주」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소위 「남조선 민주화」라는 그들의 투쟁논리와 일맥상통하게 하는 한편 종래는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제』를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통일된 연방국가』를 주장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통일방안처럼 위장하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1960년 8월 14일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김일성의 연설을 통하여 최초로 「남북연방제」를 제의한 후 현재까지 기회가 있을때 마다 「남북연방제」를 선전해 오고 있다.

북한이 1960. 4. 19직후 처음 「남북연방제」를 주장한 것은 당시 이승만대통령 하야 후 남한사회가 극도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와같은 남한의 사태를 최대한 이용하여 우리의 반공역량을 약화시키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 후 1961. 5. 16 이후 남한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지게 되자 북한은 「남북연방제」 선전을 한동안 중단하였다.

북한은 월남전의 악화와 미·중공 화해등 주변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0년대 초부터 다시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1973년 6월 23일 오전 10시 우리 정부는 7개 항목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선언했다.

그러자 그로부터 10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8시 북한은 부랴부랴 「평화통일 5대방침」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그 네째항에서 이른바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로 소위 「고려연방공화국」의

구성을 주장한 것이다.

비록 명칭에 「민주」라는 용어를 첨가하고 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이른바 「10대 시정방침」이라는 것을 늘어놓기는 했지만 이번에 김일성이 개명분식하여 이제는 『과도적 조치』가 아닌 『통일국가형태』라고 해서 내놓은 「연방제」 통일방안도 원칙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이 오직 내외여론을 기만, 현혹시키기 위한 선전제안에 불과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종래의 「연방제」 주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전의 것이나 이번의 것이나 북한의 「연방제」 주장은 「연방제」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대한민국의 합법정부의 타도와 「용공」 또는 「연공」 정부로의 대치, 대한민국의 반공정책의 철폐(일절의 반공관계법규 폐지를 포함하여) 및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북한간의 소위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의한 주한미군의 철수등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인 요구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측이 소위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저의는 오직 남북대화 중단에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또 평화통일을 운운하면서 늑대의 몸에 양의 가죽을 입혀 놓은 것 같은 기만적인 방안으로 내외여론을 오도하려 하는데 있으므로 우리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불순한 계략을 폭로하여 내외의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허구성

우리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이론적으로나 현실면에서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구이며 다만 선전목적에서 나온 것임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명백히 알 수가 있다.

첫째, 북한은 「고려연방공화국」 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등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통일지향적 방안의 인상을 과시해 보려고 애쓰고 있으나 그것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연방」(Federation)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연합」(Confederation)을 말하는 것인지 그 개념과 내용에 관해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말로는 「연방」을 운위하지만 영어로는 「국가연합」이라는 근본적으로 뜻이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우리 말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영어로는 CON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KOREA로 표기) 이와같은 용어사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동은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다.

즉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일견 통일지향적인 연방이란 용어를 사용하므로써 민족적인 통일염원에 편승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남북간 평화공존의 개념이 함축된 「국가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합리성과 현실성을 추구하는 국제여론에 영합하는 두가지 선전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측이 말하는 「연방제」란 일반적인 「연방」과 「국가연합」이라는 상이한 두개의 정치체도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애매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가 없는 하나의 선전적 제안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북한은 이번에도 남북연방제의 실현조건으로 ① 현 대한민국 정부의 타도 및 용공정권 수립 ② 남한에서의 이른바 통일혁명당을 비롯한 공산당의 합법화 ③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북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등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곧 북측이 소위 「연방제」를 거론하는 목적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우리와 「연방제」를 가지고 협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연방제」를 빙자하여 그 「전제조건」으로 대한민국이 스스로 공산화의 길을 택하고 또 스스로 6·25남침 이전의 무방비상태로 되돌아갈 것을 강요하고 있음을 뜻한다.

더구나 김일성이 『남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남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통일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면서 동시에 『남조선의 폭압통치 기구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과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여 상대방인 대한민국의 제도와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연방제 주장이 그 얼마나 표리부동하고 또 기만적인 것인가를 웅변해 주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이란 본질적으로 그들이 처음부터 실현성을 내다보고 들고 나온 것도 아니며 또 실제로 성립될 수도 없는 강탈적인 논리로 가득찬 것으로서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안이 풍기는 외견상의 선진효과를 가지고 우리 국민과 해외동포들의 순수한 통일개념을 농락하며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을 획책하려는 반민족적 계략임이 분명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그동안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를 중단시키고 남북직통전화로 단절시키는 등 쌍방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 정신을 헌신짝처럼 차버렸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쌍방 실무대표 접촉과 이를 위해 금년초에 재개되었던 남북직통전화의 운용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장본인이다.

그들은 지난날 1천만 이산가족들의 인도적인 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순수한 남북적십자회담마저도 소위 남북간의 『정치적 합작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면서 이산가족 재회문제의 해결조건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적 사회적 조건환경』을 시비하여 인도적 적십자회담을 대남 적화전략에 이용하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서울·평양 왕래회담을 중단시킨후 지금까지 회담재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금번 북한의 「연방제」 주장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자는 미명하에 우리의 군사역량과 반공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주한미군철수 및 반공정책의 붕괴 및 우리의 국론분열에 목표를 두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결국 북한이 거론하는 연방제 주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국의 평화통일과는 무관한 천편일률적인 적화통일 계략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다.

세째, 김일성은 금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10대 시정방침」이란 것을 제시하고 연방제 통일후의 남북교류와 협력문제에 관해서 황설수설하였다.

앞에서 이미 고찰한 바와같이 그들이 말하는 「연방제」는 그 정체가 애매할 뿐 아니라 실현불가능한 전제조건 때문에 원천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이므로 그들이 말하는 소위 『10대 시정방침』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들이 노리는 바가 이같은 허황한 선진으로 우리의 국론분열을 획책하는데 있으므로 우리는 그 기만성과 허구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자주성」과 「비동맹」 그리고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연방통일국가가 집행하게 될 시책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남북간의 각분야에 걸친 「합작과 교류」, 남북의 「단일한 민족연합군조직」, 남북한 두 정부의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절」 등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남북의 거래들과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어리광대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교류와 협력을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내세운 전제조건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정부가 타도되고 이른바 「연방제」 통일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집행할 시정방침에 관해서 증언복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공적이며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우리는 1970년대 초기의 남북대화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남북간의 제반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통일에 이르는 필수적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우리는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1천만 이산가족들의 인도적인 재회문제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회의 상호 개방과 경제, 문화, 체육등 제반교류와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의하였다.

우리는 만일 북한의 대내사정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이 당분간 곤란하다면 우선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재회문제를 해결하며, 해마다 찾아오는 추석과 설날등 민족적인 명절을 기해서 이산가족들로 구성되는 남북성묘방문단의 상호교환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것도 제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찌기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자본 및 기술협력을 통한 국민의 생활향상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것을 제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남북 민간경제 협력기구와 쌍방의 관계각료회의를 상설화할 것도 제의하고 있다.

만약 북측이 그들의 최고당국자의 말대로 진정 이같은 교류와 협력을 희망한다면 우리는 그같은 교류와 협력이 더이상 지연됨이 없이 즉각 실천에 옮겨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북측이 한쪽에서 말로는 이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쪽에서 행동으로는 상반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남북쌍방은 먼저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모색하고 이루어진 합의는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이미 이루어진 합의는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화 상대방을 거부, 기피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대화의 길을 봉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같은 교류와 협력을 운위하는 이울배반의 자가당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북측 언동의 이울배반성은 한편으로는 남북이 서로 자기의 의사와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인 우리의 내부분제와 내외정책을 시비하고 이를 구실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측은 남북간 교류, 체신의 연결을 운운하면서도 지난 9월 24일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남북실무대표 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면서 그동안 다시 연결되었던 남북직통전화도 또다시 단절시킨바 있다.

북한이 진실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이 아니라 대립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네째, 김일성은 소위 연방국가의 통일정부 기구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를 운위하고 이것이 『남북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72년 7월 4일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 제6항의 명문조항에 의거하여 설치된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이의 재개를 거부하고 있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남북조절위원회는 『남북조절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 (1) 자주적 평화통일문제의 해결 (2) 남북간의 민족적 신뢰회복 (3) 남북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와 협력 (4) 남북간의 긴장상태완화 및 군사적 충돌방지 (5) 대외활동에 있어서의 남북간의 공동보조문제등 광범위한 남북간의 문제를 토의 해결하고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이 정상화될 때 북한의 「연방제」 하에서 남북간의 문제를 협의 조절하자고 주장하는 모든 사항이 원만히 협의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우리는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남북조절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동 위원회에 당국자에 추가하여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도 밝혀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이미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해 놓은 남북관계의 협의, 조정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를 중도에서 팽개쳐 버리고 일방적으로 정체불명의 새로운 기구문제를 거론하는 데에는 비단 논리적인 모순이 있을 뿐아니라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필수적 요소인 신뢰조성의 관점에서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이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쌍방이 그 준수를 약속한 제반 합의사항들을 북한측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리는 처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따라서 김일성이 들추어낸 「최고민족연방회의」니, 「연방상설위원회」같은 것은 북한측이 소위 남북합작 운운하면서 마치도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의사가 있는 양 선전하는데 급급한 빈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3. 북한이 「연방제」를 주장하는 의도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금번 북한의 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거론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운운의 발상이 오직 선전에만 목적을 둔 가공적 허구임을 재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이 현시점에서 그와 같은 해묵은 「연방제」 방안을 다시 들고 나온 데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도가 있는 것이다.

첫째, 북한의 김일성은 무엇보다도 내외의 관심과 주목을 통일문제에 돌림으로써 금번의 노동당 6차 대회가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을 그 아버지의 세습 후계자로 지명하여 김일성일가의 전근대적 봉건왕조를 구축하는 무대가 된대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완화시키려 기도한 것이다.

북한공산집단은 10년만에 노동당대회를 열어 놓고 이미 예상했던 대로 자유세계는 물론 다른 공산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부자지간의 세습통치를 감행하려는 전근대적인 작태를 벌림으로써 세인의 조소를 받고 있다.

그들이 10년동안 쌓아올린 치적이란 무리한 군사비탕진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생활고가중, 김정일의 3대혁명소조가 일으킨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부작용, 국제사회에서의 호전성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외교적 망신, 그리고 남북대화과정에서의 그들의 전략적 허점 노출등 실책투성이로서 이와 같은 것이 모두 하나같이 그들의 6차 당대회에 흠이 되는 것들이다.

이런 형편에서 그들이 김정일에 의한 권력세습체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당대회를 무난히 치루어 나가자면 가장 선전가치가 높은 통일문제를 내세워 한바탕 잔치를 벌릴 수 밖에 없고 그러자니 결국 그들의 유일한 밑천이라 할 수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최근의 정세변화에 편승할 수 있도록 재탕하게 된 것이다.

둘째, 북한은 그들 스스로가 연방제 통일방안의 타당성과 실현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란 말자체가 통일지향적이며 민족주의적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들이 대화와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대화중단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한편 우리의 국론분열과 반공안보태세의 약화를 기도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과거와는 달리 단순한 연방제를 주창하는데 머물지 않고 통일지향적, 민족주의적, 그리고 공존지향적인 언어의 유희를 구사함으로써 그들의 당면 대화 거부 태도와 대남적화전략을 위장하고 남한 국민들 속에 「연공,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해 보려는 의도에서 보다 구체화된 연방제통일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셋째, 북한은 특히 비동맹, 중립화노선을 강조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대외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유엔과 비동맹외교무대에서 그들이 한반도 통일문제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힘쓰고 우리를 국제사회에서 고립화하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대화문제에서 그들의 태도가 매우 합리적이고 타협적이며 공존

지향적이라는 인상을 과시함으로써 특히 미국과 일본등 친한국가들의 여론을 오도하여 그들과의 유대관계를 약화시켜 중국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하려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북한이 금번 당대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비동맹주의와 평화, 그리고 경제발전문제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고 또 과거의 이념투쟁적 색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 부식에 주력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모략선전을 한층 격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 된다.

4. 결 론

북한측은 지금 온 겨레가 염원하는 통일문제를 김일성가문의 현대판 세자책봉놀음에 이용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평화와 민족을 앞세우고 그들의 폭력적 본성과 민족분열책동을 위장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분단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대화를 마련하고 쌍방이 제기하는 어떠한 문제든지 서로 제한없이 대화석상에서 거론하고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을 해결할 의도가 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지금부터라도 지양하고 우리와의 대화석상에 나와서 떳떳이 거론해야 한다.

이와같은 당연한 사리를 외면하고 그들이 대화의 재개를 계속 거부하면서 대화의 테두리밖에서 일방적인 선전만 되풀이 한다면 세상의 그 누구도 그것을 평화통일방안이라고 인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이번 당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발언에 일말의 진실성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북한당국은 그들이 단절시킨 남북직통전화를 다시 연결하고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데 호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남북조절위원회를 재개하여 이를 통한 남북간의 제반문제를 토의해결할 수도 있고,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여 남북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놓고 성실하게 협의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제6부 자 료 편

1. 북한의 「남북연방제」 주장의 연혁

1960년 8월 14일 「8·15」 15주년 경축대회에서 김일성은 경축연설을 통해 최초로 「남북연방제」를 제의하였다.

당시는 「4·19」 이후 한국사회 내부가 다분히 혼란을 겪고 있던 때이며 무분별한 통일논의가 난무하던 시기로 이러한 시기에 소위 「남북연방제」 제의가 나왔다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5·16」 이후 한국내의 정치 및 사회정세가 안정된 시기에 와서는 연방제공세가 일단 뜸하게 되었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서 강대국간의 긴장완화 「무드」와 제3세계권 국가의 수적증가 등 국제조류의 변화에 편승하여 연방제공세가 다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현재까지의 10년간은 「연방제」안이 가장 자주 되풀이된 시기였다.

「남북연방제」는 국제정세와 한국내부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바 최근까지 북한이 제의한 「남북연방제」 주장 중 주요한 것을 일자순서로 요약정리해 본다.

1960. 8. 14 「8·15」 15주년 김일성 연설

북한과 한국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경제 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

1960. 11. 19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최용건보고.

김일성의 제의를 구체화, 「최고민족회의」기능에 대외적인 활동기능을 추가.

1962. 10. 23 최고인민회의 김일성 보고.

연방제하에서 상호간의 내정불간섭 및 타방에 대한 일방의 의사강요 금지 등을 부연.

1971. 4. 12 최고인민회의 허담보고.

「남북연방제」 협의를 위해 각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남북조선정치협상회의」를 열 것을 제의.

1972. 4. 27 김일성 일본 「NHK」 및 조일신문 기자들과의 회견.

『연방제는 타국과의 평화공존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한 나라 안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

1972. 9. 17 김일성 일본 매일신문기자 회견.

「최고민족위원회」대신 「최고민족회의」라는 표현을 사용, 종래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정』하자는 데에 정치·군사적 차원을 추가.

1972. 11. 16 평양방송 보도.
그들의 「남북연방제」가 「국가연합」과도 다르며 미국·「캐나다」등 서방의 「연방」과도 다르다고 지적.
1973. 7. 23 김일성, 「체코」 공산당 정부대표단 환영연설.
「고려연방공화국」이란 국호를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단일국호하에 「유엔」가입 주장, 「대민족회의」를 「연방제」의 선행조치로 주장.
1973. 9. 8 「9·9절」 경축연에서의 김일성연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연방제를 실시함으로써 「고려연방공화국」 창설 주장.
1975. 5. 31 김일성 「AFP」 통신 회견.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호로 통일국가로 출현하며 국내적으로는 쌍방의 체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이 「합작」하자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합작」과 「연방제」를 연결.
1975. 10. 6 김일성 讀賣신문회견.
「유엔」 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한내의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면 「남북연방제」를 통해 완전한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
1975. 12. 6 평양방송보도.
「최고민족회의」는 주권기구가 아니며 남북의 「합작과 교류」를 협조하고 보장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부연설명.
1977. 6. 20 김일성, 「르몽드」지 주필회견.
「남북연방제」는 독일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 연방제와는 다르며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에서 평화적 자주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1980. 10. 10 6차 당대회에서의 김일성 보고.
연방국호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개칭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색채를 가미.

2. 남북대화 주요일지

1980. 6. 19 판문점지역내 남북한 총리회담장 건물 준공.

- 6. 23 북한측, 현준극수석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제9차 남북실무대표접촉에 불참한다고 한국측에 통고(09:30 직통전화).
- 6. 24 제9차 남북실무대표접촉(10:00 자유의 집)
 - 한국측, 2개항의 의제수정안 및 총리회담 첫 회담일시, 첫 회담장소 등에 대한 새로운 제안 제의
 - 북한측에 의제안에 관련한 4개항의 대북 질문 제출.
 - 북한측, 한국내부문제를 거론, 의제토의 거부.
- 7. 4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대변인, 「7·4남북공동성명발표」 8주년에 즈음하여 성명발표.
- 8. 12 한적총재, 「8·12남북적십자회담제의」 9주년에 즈음하여 성명발표.
- 8. 20 제10차 남북실무대표접촉(10:00 「판문각」)
 - 북한측, 한국 내부문제를 거론하며 제10차 실무접촉 연기를 주장, 접촉 유산 기도
 - 한국측, 연기주장의 부당성을 반박, 의제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종용, 차기 접촉을 9월 26일 「자유의 집」에서 갖기로 합의
- 9. 4 북한측, 9월 4일 오후5시부터 휴전선 11개 지역에서 대형확성기를 통한 대남 비방방송 개시
- 9. 5 남북조절위 서울측 대변인, 북한의 휴전선 대남 확성기방송 재개에 대해 성명 발표, 대남 비방방송의 즉시 중지와 생산적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
- 9. 8 북한, 동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제2 남진호」 선체 및 선원 19명 공해상에서 납치
- 9. 12 한적총재,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적위원장에게 서한 전달
 - 제8차 적십자 본회담을 10. 28~10. 31간 서울에서 개최할 것.
 - 북한측이 납치, 억류하고 있는 어부들의 송환을 위해 협력해 줄 것.
 - 남북어부 가족대표들의 북적에 보내는 호소문 동봉
- 9. 16 한적총재, 적십자국제위원회 및 적십자연맹 총재에게 서한 발송, 남북 어부의 송환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
- 9. 24 북한측 실무대표단, 성명을 통해 9월 26일 예정이던 제11차 실무대표 접촉에 불참

하겠다고 발표하르로서 실무대표 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방송보도 19:00)

9. 25 북한측, 남북직통전화 운용 중단
9. 26 한국측 실무대표단, 북한측의 실무접촉 중단에 따른 성명발표, 총리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6개항의 새로운 방안 제시, 1980. 10. 7 제11차 실무대표접촉 개최 제의
10. 7 서울측 실무대표단, 성명을 통해 북한측이 아측의 9월 26일자 제의 거부로 제11차 실무대표 접촉 유산 발표
10. 15 남북조절위 서울측 성명발표
 - 북한의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주장의 허구성 폭로
 -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촉구
10. 27 남덕우 국무총리, 한적 창립 75주년 기념 치사에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에 북적의 성의있는 태도 촉구
11. 4 북측 무장간첩 3명, 전남 완도군 횡간도 침투중 사살됨.
11. 5 북측, 억류중인 제6, 7해왕호선원을 송환하겠다고 방송(중앙·평양 방송보도 12:00)
11. 12 북측에 억류중이던 「제6, 7해왕호」 선체 및 선원 23명 귀환(사망선원 유해 1구 미 인도)
11. 13 한적총재, 해왕호선원 송환에 즈음한 담화문 발표
 - 이제나마 선원을 송환한 것은 다행한 일임.
 - 북한측이 가한 충격으로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유감스러우며 사망선원의 유해를 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해 북적이 지정하는 날짜에 판문점에서 유해의 인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북한측에 납북된 남진호선원 19명도 조속히 송환할 것을 재촉구
 - 제8차 남북적십자본회담 재개를 제의한 9. 12자 한적총재 서한에 긍정적 호응있기를 촉구

남북대화 제25호

(1980. 11 ~ 1981. 3)

< 목 차 >

제1부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출발	3
1.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3
2. 「1·12제외」의 목적과 동기	7
3. 「1·12제외」의 의의	10
제2부 「1·12제외」에 대한 국내외 반응	12
1. 국 내 반 응	12
2. 해 외 반 응	29
3. 한·미 정상, 「1·12제외」실현에 공동보조	31
4. 유엔 사무총장, 「1·12제외」실현에 협력 약속	32
제3부 「1·12제외」에 대한 북한 반응	33
1. 「조국평화통일 위원회」성명	33
2. 북한의 「1·12제외」거부 저의	34
3. 북한의 「1·12제외」거부에 대한 국내 반응	36

제1부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출발

1.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분단된 조국의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남북대화는 북한측이 남북대화를 자기들의 대남적화전략수행의 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들어냄으로써 중단되고 말았다. 남북조절위원회 및 남북적십자회담이 중단상태에 빠져버린 상황하에서도 대한민국측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은 국토분단과 6·25전쟁으로 조성되어 온 상호간의 불신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대화의 재개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측의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노력에 대하여 북한측은 그들의 대남적화라는 기본전략에 집착, 비현실적인 선전적 제의로 일관하므로써 평화적 조국통일의 길을 외면하여 왔다.

최근 개최되었던 남북한 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한실무대표 접촉도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로 인하여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완전한 단절상태의 계속은 남북간에 존재하는 불신의 심도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쌍방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상태를 타개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었다.

전두환대통령은 남북간에 존재하는 불신의 해소와 일촉즉발의 위기상태를 타개하고 평화통일의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제의하고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한다』고 선언했다.

1월 12일 오전 10시 청와대 집무실에서 TV 및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발표된 「81년도 국정예 관한 대통령연설」에서 전대통령은 『민족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며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방문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한다』고 밝히고 『그가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 일체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가 원하는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대통령은 『본인도 같은 조건으로 그가 북한방문을 초청할 때는 언제라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남북한문제는 앞으로 실천가능한 분야의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합의해 나간다면 통일이 달성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에 전두환대통령의 「81년도 국정연설」 중 남북한관계부분 원문을 인용한다.

금년은 우리가 일본식민지 통치로부터 광복을 찾은지 36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오늘까지 전개된 남북분단의 36년 사는 우리의 민족사에 있어 또 하나의 비극

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족간의 전쟁, 민족이질화의 심화, 국제사회에서의 상쟁, 대화의 중단 등 그간 우리가 입은 민족적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민족, 한 언어, 한 문화의 조국이 하루 속히 단일의 자주·민족·민주국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온 민족의 지상과제입니다.

가까이 지난 10여년을 돌이켜 보면 1972년의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이래 남북간에 개선된 것은 없고 쌍방간에 성명전과 일방적 제안만을 되풀이 하면서 서로 말싸움으로 일관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실천의지의 바탕없이 물거품과 같은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 단 한가지의 합의라도 행동으로 입증하겠다는 쌍방의 결연한 의지인 것입니다.

7·4공동성명에 담긴 여러가지 약속을 위반하면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무력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무장간첩을 계속 남파하고 있으며 이른바 「통혁당방송」과 전휴전선에 걸친 대남방송을 통해 비방을 격화시키고 있는 동시에 해외 반한단체를 사주하여 정부 전복활동을 되풀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태세와 국력의 신장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일반의 투철한 국가보위 결의 앞에서 그들의 한반도 적화기도는 부질없는 도로에 그쳤습니다.

지난 36년간 각기 상이한 사상과 이념과 제도하에 분단되어 살아 온 배달민족이 다시 뭉쳐 통일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분단된 상태로 살아 가느냐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당국에 대하여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남북한간에는 여러가지 형태로 또한 여러가지 수준에서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눈 바 있지만 상호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 채 많은 시간과 물자와 정력만을 헛되이 소모하였으며 남북총리회담의 절차 마련을 위한 작년의 실무접촉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남북한간의 대화는 현재 끊어진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아는 바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에 이르는 길은 미사여구의 일방적 제안을 남발하거나 또는 지켜지지 않을 서면 약속을 내놓는데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늘 지난 날의 일들을 굳이 시비함이 없이 남북한간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며 또한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 방문할 것을 엄연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그가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 일절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 데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쌍방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할 목적으로 역사적인 방문을 교환한 후에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하여 끈기있게 노력한다면 남북간의 여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 실천 가능한 분야의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씩 합의해 나간다면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이 달성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전두환대통령의 「1·12제의」 발표에 이어 이범석 국토통일원장관은 1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실현시키기 위해 남북한 쌍방이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1월 14일 발표한 대북성명을 통해 이범석장관은 『역사적인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가질 것을 북한당국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 접촉에는 각기 쌍방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서명한 신임장을 휴대하는 3명의 대표와 약간명의 수행인원이 참석토록 하며 접촉장소는 판문점도 좋고 서울과 평양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하고 『접촉일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범석장관은 성명에서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제의를 북한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라고 촉구한 후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역사적인 상호방문을 실현, 서로간의 이견을 줄이기 위해 쌍방이 끈기있게 노력한다면 남북간의 여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북한당국이 우리측의 이번 제의를 조속히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범석 국토통일원장관의 성명전문은 다음과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12일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1981년도의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하여 남북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고 동족상잔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며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당국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가질것을 북한당국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접촉에는 각기 쌍방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서명한 신임장을 휴대하는 3명의 대표와 약간명의 수행인원이 참석하며 접촉장소는 판문점도 좋고 서울과 평양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접촉일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역사적인 상호방문을 실현하고 서로간의 이견을 줄이기 위하여 쌍방이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남북간의 여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북한당국이 우리측의 제의를 조속히 수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 「1·12제외」의 목적과 동기

<남북간 신뢰조성의 결정적 계기마련>

전두환대통령의 이번 제외는 남과 북의 최고책임자가 아무런 부담이나 조건없이 서로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여 분단 36년간 서로 단절되어 온 상대방의 실상을 직접 보고 그 실정을 파악하여 상호이해의 바탕 위에서 신뢰조성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조국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1970년 3월에 있었던 「브란트」 서독수상의 동독방문과, 같은 해 5월에 있었던 「슈토프」 동독수상의 서독방문의 교환이 결국 1972년 12월 21일 서독 기본조약 체결에 의한 양독관계 정상화의 바탕이 되었고 또 1977년 11월의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과 같은 해 12월의 「베긴」 「이스라엘」 수상의 「이집트」 방문교환은 마침내 1978년 9월 「캠프·데이비드」 회담과 1979년 3월의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아무리 어렵고 해묵은 분쟁이라 하더라도 분쟁당사국의 최고당국자가 서로 방문을 교환함으로써 쌍방간의 신뢰를 조성하고 분쟁해결의 극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통례이다.

<동족간의 비극적 전쟁재발 방지 계기마련>

오늘날 외부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 단절된 북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김일성은 36년간 계속된 장기집권과 극단적인 개인 우상화, 그리고 족벌체제에 의한 인의 장막등으로 인하여 외부세계에 대하여 그릇된 정보와 오도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실정에 대한 김일성의 인식도 또한 예외가 아니며 그 때문에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꿈꾸며 간첩을 계속 남파하고 있고 북한주민의 고통을 강요하는 군비증강을 강행하여 동족간에 일촉즉발의 긴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측이 전대통령의 이번 제외를 수락하여 김일성의 서울방문이 실현되면 김일성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실정에 대해 얼마나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의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며 간첩의 남파나 비방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거나 무력남침으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김일성은 그의 무력과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기도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깨달아 동족간의 전쟁을 일으켜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는 망상을 포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대화의 재개를 통해 평화통일의 역사적 계기마련>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이 실현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리라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만약 상호방문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이는 새로운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북한측이 이번 전대통령의 제의를 수락한다면 쌍방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절차마련을 위한 남북간의 접촉은 어떤 형태로든지 마련될 것이며 이로써 남북대화는 자동적으로 재개될 것이다.

분단상태에 있는 국가가 분단상태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은 무력에 의해 일거에 상대방을 타도하고 흡수해버리는 방법이나 또는 분단당사자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통일의 장애요소를 평화적으로 제거해감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방법이 존재할 것이다. 민족사적 측면에서 한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인도적 측면에서 분단의 고통을 해소시키며 나아가 고도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데 통일의 목적을 두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명분론적으로나 현실론적으로 합리성과 실효성을 지닌 통일의 방법은 오직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 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일시에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자 하는 일시해결론과 단계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점진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당위적인 것이며 그 염원은 매우 강력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 있어서 당위에 있어서나 희구만으로 통일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족은 36년이란 세월을 남북으로 분단된 채 절대적인 대치상태에서 서로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상호불신과 이질화가 남북간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분단 쌍방간에 이념과 체제가 다르고 불신과 긴장이 존재하는 한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민족적 대사업을 그르칠 수 있으며 평화적인 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통일을 가장 평화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은 점진적인 통합과정을 통해 완전한 통일에 이르는 방식 즉 점진론적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적대적 분단상태의 지속과 극도의 이질적 사회체제로 인하여 상호간에 불신과 긴장이 상존하고 있으며 남북대화마저 중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전쟁을 예방하며 남북대화를 재개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대통령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을 실현함으로써 남북간 신뢰조성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여 동족간의 비극적 전쟁의 재발을 방지할 계기를 마련하고 남북간 대화 재개의 역

사적 계기를 마련코자 한 것은 바로 분단의 현실적 상황에 바탕을 둔 합리적이고도 실효성있는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1·12제의」의 의의

전대통령의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는 우선 대한민국이 과거를 정리하고 80년대의 새시대, 새역사 건설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남북한관계에 있어서는 구곡을 탈피하고 평화통일노력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지난 70년대에 시도되었던 여러가지의 남북대화는 아무런 실천의지도 없이 도상의 합의만을 추구하는 선 합의, 후 불이행의 불성실한 자세때문에 아무런 대화의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화과정에서 생산된 몇가지 합의사항도 실천의지가 없는 원칙합의에 불과하여 그중 어느 것도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조금도 개선되지 못했고 오히려 쌍방간에 상호 책임전가를 위한 성명전과 일방적인 선전적 제안의 남발만을 초래해 상호불신만 증가시켜 왔다.

전대통령의 「1·12제의」는 이러한 과거의 남북관계를 솔직 검허하게 반성, 비판하고 과감하게 구곡을 탈피하여 평화통일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전대통령은 앞으로의 평화통일노력은 과거처럼 미사여구의 선전적 제안을 일방적으로 남발하거나 지켜지지 않을 서면약속이나 원칙합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평화통일의 첫걸음으로 행동과 실천을 통한 상호 신뢰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상호신뢰의 조성이 선행되지 않는 남북관계의 개선노력은 한낱 연목구어이며 신뢰의 바탕없이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화중지병에 불과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10여년간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은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대통령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들의 상호교환방문 그 자체의 실현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와 같은 상호신뢰없는 남북회담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 보다는 회담이라는 형식을 앞세우기 이전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평화적 통일달성을 위해 더욱 유익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확신에서 전대통령은 회담 개최문제에는 직접 명시적으로 언급함이 없이 김일성에게 대한민국사회의 과감한 개방을 표명하고 또 북한측이 전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하여 북한사회를 개방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의 방문이 실현되면 방문 그 자체가 이미 상호 신뢰회복의 바탕이 될 것이며 상대방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신뢰는 조성되어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행동과 실천에 의해 상호신뢰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선전적 구호의 남발이나 형식적 대화를 계속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이 행동과 실천에 의한 상호신뢰의 조성과 이를 바탕으로 분단조국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코자 하는 시도는 분단 36년 사상 초유의 일로서 전대통령 자신의 평화통일 의지를 표명한 용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단 36년을 통하여 남북한간에는 수 많은 제의가 오고 갔지만 국가 최고통치권자가 쌍방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공식으로 선언한 예는 없었다. 이번 전대통령의 제

의는 36년간의 민족분단의 비극을 시급히 해소시키기 위해 행동을 통해 평화통일 달성의 관건인 상호신뢰조성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민족지도자로서의 용기를 보여준 분단사상 초유의 일대용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대통령은 이번 제의에서 북한 김일성의 서울방문을 초청하면서 만약 북한이 전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한다면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반드시 김일성이 먼저 서울을 방문할 것을 고집하지 않고 북한측이 희망하면 전대통령이 먼저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유연하고도 여유있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또한 전대통령은 김일성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서울과 다른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가 원하는 어떤 장소라도 방문하도록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대한민국사회를 완전하게 공개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북한측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전대통령의 과감한 요구는 그 동안 이루어 놓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굳건히 다져진 우리의 국력이 북한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표명하는 것이며 북한과의 국력경쟁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우리 국력을 바탕으로 한 대북자신감의 과시라 하겠다.

「1·12제의」가 갖는 또 하나의 큰 의의는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자주·민족·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못박으므로써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확연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1·12제의」에서 전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동안 한 민족 한 언어 한 문화를 가진 단일 국가로 살아왔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실현되어야 할 통일조국은 『단일의 자주·민족·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조국의 통일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공산독재체제로의 통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였다.

오늘날 북한에는 8·15해방이후 36년간 한사람에 의한 장기집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800만 북한주민들은 우리의 전통적 민족문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질적인 체제 아래에서 노예상태와 같은 박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초래된 사회적 이질화가 조국통일노정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민족적 소명이지만 이러한 상태로의 통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제2부 「1·12제외」에 대한 국내외 반응

1. 국 내 반 응

1월 12일 상오 10시 전대통령의 「남북한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를 라디오와 TV를 통해 듣고 본 온 국민들은 전대통령의 획기적이고 자신에 찬 제외에 대해 감탄하면서 남북한간의 상호 신뢰조성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용단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나타내었다. 특히 가족과 고향을 북한에 두고 온 실향민들은 김일성은 이 제외를 받아들여 민족사의 대도 앞에 나서야 한다고 김일성의 호응을 촉구하고 북한의 무성의로 남북간의 대화통로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현상황에서 전대통령의 이번 제외가 남북간의 빙벽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제외가 실현되어 실향민의 한을 풀게되기를 기원했다.

도하의 각 신문들은 「남북해빙에 새장」, 「민족지도자의 정치결단」, 「만남 그 자체가 큰 의미」, 「자신에 찬 결단」 등의 표제하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측의 무조건 수락을 촉구했다.

다음은 전대통령의 「1·12제외」를 평가한 국내 주요일간지의 사설이다.

전두환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제외

경향신문(1981. 1. 12)

전두환대통령의 김일성초청등 남북한정상의 상호방문제외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남북한관계의 새시대 전개를 예고해 주는 것이며 동시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새역사 전개의 시발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두환대통령이 해방 36년을 맞는 81년의 역사적 시점에서 그와 같은 획기적인 제외를 했다는 것은 전대통령의 역사의지와 민족사적 소명감이 어떤 것인지를 시사해 주고도 남는다. 다시 말해서 전대통령의 새시대 새역사창조에의 의지는 단순히 국내정치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이고 전국토적인 차원의 것이라는 뜻이다.

새역사창조의 새차원

사실 금세기에 들어서서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일제와 분단 36년은 다같이 우리에게 엄청난 민족적 비극을 가중시켜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난날의 역사적 부채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오늘의 상황을 우리 세대가 기어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당위이기도 하다. 20세기가 종식되기 전에 우리의 지상명제인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전대통령의 역사의지는 바로 민족사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 부과된 민족사적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분단 36년의 역사를 생각할 때 민족사를 비극적으로 몰고 가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상황적 귀결이 어디인지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할 줄 안다.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 민족사의 전통과 정통을 올바르게 살려 이어가기 위해서는 6·25전쟁을 일으킨 전쟁범죄자를 처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어 마지않는다.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민족사적 비극을 생각할 때 그와 같은 역사적 정리 작업은 불가결의 당위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민족사관을 좀먹는 계급사관으로 우리의 역사를 철저히 왜곡시켰으며 심지어는 민족간의 적대화의 이질화마저 촉진시켜온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게다가 김일성은 그 자신의 절대 우상화와 세습적인 왕조를 구축함으로써 현대사의 완전 이단을 걸으면서 남북한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이런 역사에의 반동과 민족에의 반영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역사적 과멸을 받으리라고 믿는 바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속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은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쟁을 다시는 원치 않는다는 민족의 비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남북한의 대치 현실속에서 평화정착의 길을 모색했으며 대화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촉구했던 것이기도 하다.

반동과 반역에의 대응

때때로 역사적 현실은 역사적 당위를 더욱 강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사적 당위를 전제로 역사적 현실을 직시한다면 거기에는 범상치 않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남북한문제에 대응하고 우리의 지상명제인 통일을 겨냥함에 있어 우리는 역사적 슬기의 민족적 지혜가 무엇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그동안의 남북한간에 있었던 여러가지 모양의 접촉과 대화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의 핵심을 감안할 때 전두환대통령의 제의는 민족적 양심과 역사적 슬기가 가르치는대로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한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남북한정상회담이 가장 커다란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카드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기야 전두환대통령이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 집단의 괴수에게 「주석」이란 호칭을 쓰면서 상호방문을 제의한데 대해선 적지 않아 의아스럽게 여기는 국민들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같은 호칭은 바로 전대통령의 통치권에서 우리나라의 것이지 어떤 법률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현상의 인식과 그 역사적 과제를 풀어가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도는 호칭문제에 구태여 구애받기보다 실질적인 문제에의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한정상회담의 제의에 즈음하여 우리는 몇가지 점에서 북한측의 그동안의 전략을 간파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첫째로 북한측은 항상 남북한의 접촉과 대화를 그들의 통일전선전략

으로 이용했으며, 대남적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왔다는 사실이다. 그와 같은 점은 7·4남북 공동성명이후의 움직임이나 남북적십자회담의 경과에서도 이미 충분히 드러난 바 있다. 심지어는 지난해에 있었던 남북한총리회담제의와 그 경과에서도 북한측의 속셈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난 바 있었던 것이다.

분단과 적대관계의 귀결

둘째는 북한측이 최근 이른바 「고려민주연방제」를 들고 나와 그것이 마치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인양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선전선동전술은 두말할나위도 없이 한국을 고립화시키려는 음모에서 나온 통일선전전술의 일환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측은 「고려민주연방제」 주장에서 남북쌍방이 사상과 체제를 용인하는 바탕위에서 통일정부를 조직하여 연방공화국을 수립하자고 하면서 그 선행조건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것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운 선행조건은 ①한국정부의 타도 ②휴전협정을 미·북한간의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인데 이 두가지가 모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만약 북한이 진실로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과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려 든다면 우선 남북한간에 가능한 교류를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더군다나 전대통령이 제의한 남북한정상 상호방문에는 기꺼이 호응해야 마땅하리라고 확신해 마지 않는다. 만약 남북한정상회담을 북한측이 전면 거부한다면 어떤 조건을 붙여서 그것을 전술적으로 이용하려고 획책한다면 그것은 대내외적으로 북한측의 간계를 폭로하는 꼴이 되고야 말것이다.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이른바 분단국간의 문제라든지 적대관계의 해소과정에 있어서 제기된 동서독정상회담의 사례라든지, 이집트·이스라엘정상의 상호방문은 우리의 한반도현상타개에 있어서도 타산지석이 되리라고 우리는 본다. 적어도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당사자간의 최고책임자 대화 이상의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정상 접촉은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결정적계기가 되리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북한측이 한반도의 현상과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려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이 자가당착에 빠져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김일성의 반민족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역사의 슬기로써 그들과의 대화로 민족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전두환대통령의 제의를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상방문은 최종최고카드

사실 민족적이고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김일성은 더 이상 존재할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북한내부에서 타도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리는 확신해

마지 않는다. 김일성이 김정일을 세습후계자로 삼은 것은 그만큼 체제의 문제와 불안정을 말해주는 증거이며 이미 망조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김일성의 타도나 북한체제의 변화를 대화의 선행조건으로 삼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엄연한 현실인정의 출발점에서 1차적으로 신뢰의 바탕을 조성하고 동족간 비극적 전쟁재발을 막고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우리의 민족문제와 역사적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휴전협정을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이나 기타의 남북간 협정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대처해야 한다는데도 이의가 없다.

그러나 북한측이 남북연방제의 선행조건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제의 운운한 것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런 것이 아닐 수 없다. 그와 같은 북한측의 주장은 한마디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인 동시에 사대주의적 발상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리라고 확신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민족자주와 주체적 입장이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쳐 놓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자는 것은 김일성 스스로가 지난 72년 1월에 내세운 남북간평화협정주장을 스스로 뒤엎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취지의 우리측의 남북 상호불가침협정제의를 반대하는 것과는 상통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이 한반도문제의 자주적·평화적 해결에 등을 돌리는 것임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나위도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연방제 주장의 기만성을 백일하에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김일성의 기만적이고 허무적인 주장에 대해 전두환 대통령이 남북한정상회담을 제의함으로써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모색하려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하리라고 확신한다. 그것은 전대통령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그의 새역사, 새시대창조의 의지가 민족사적 맥락에서 더욱 고양되고 있음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온민족의 이름으로 전두환대통령의 제의를 환영·지지하면서 김일성의 즉각수락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김일성 서울초청

-조건없이 수락하여 평화통일의 기초로-

동아일보(1981. 1. 13)

전두환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 김일성의 서울방문을 초청하여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대통령의 김일성초청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처음으로 공표된 대북한노선을 천명한 것이요 앞으로 전개될 80년대의 남북한관계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을 시사한 것이라는데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간에는 정월이 되면 남북대화재개를 위한 새로운 제안들이 선을 보이곤 했다. 79년 1월 고박정희대통령의 남북한당국간의 무조건대화 제의와 80년 1월 북한 정무원총리 이종옥의 남북총리회담 제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제안은 세상이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측의 고의적인 회담악용 또는 일방적인 회담중단으로 모두 햇빛을 보지 못한채 남북분단사중의 한 촛극으로 묻히고 말았다.

그 동안 서울측의 대화제외와 통일에의 의지가 평양측의 일방적인 대화악용 및 기피작전으로 묻혀버릴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번 전대통령의 김일성초청제외를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으로 교차한다. 우선 김일성이 7·4남북공동성명이래 줄곧 그랬듯이 또 무슨 이유를 내걸어 서울초청에 혼선을 일게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그러나 전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남북한관계사상 가장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서 우선 의미가 있으며 남북한관계가 김일성의 서울방문을 제안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전개되어 왔음을 우리는 다행한 일로 평가하고자 한다.

돌이켜 보건대 남북한관계는 남북적십자회담과 7·4공동성명으로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으나 상호 각료급의 접촉이상을 넘지 못했다. 다만 1년전에 북한측이 총리회담을 제안해옴으로써 서울측이 기꺼이 회담에 응하였으나 이 또한 평양측의 일방적인 회담중지로 유산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대통령이 남북한의 수뇌회담을 제의하고 나섰다는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한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과감한 움직임이다.

물론 우리민족과 함께 2차세계대전후 분단된 동서독의 경우 이미 11년전에 양독의 최고지도자들이 만난 일이 있다. 1980년 3월 동독의 「르푸르트」에서 「브란트」 서독수상과 「슈토프」 동독수상의 회담이 있었고 이 회담을 계기로 양독은 3개월후 또 한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쳐 2년반만에 통일의 그날까지 동서독의 평화공존원칙을 보장한 역사적인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뒤에는 「유엔」에도 나란히 가입했고 장기무역협정, 자유통행협정등을 조인하여 「게르만」 민족의 합리성을 전세계에 과시했다.

동서독의 정상회담을 상기하면 전대통령의 김일성초청은 「게르만」에 10년 뒤진 셈이지만 「게르만」과는 달리 한민족은 김일성의 6·25남침을 당해야 했고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적화책동에 시달려야 했기에 남북한 최고지도자 회담제외의 지각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다. 전대통령의 제안대로 김일성이 서울을 방문하기가 어렵다면 전대통령이라도 평양에 찾아가 한맺힌 분단의 매듭을 풀 수 있도록 서로 흥금을 털어 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5천만 우리겨레는 북한 김일성집단의 변치않는 대남적화책략과 그로 인한 대화중단속에서도 통일에의 길이 조금씩이나마 가까와지고 있음을 차제에 느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36년전 타의에 의한 분단이 강요된 뒤 5년만에 김일성의 남침을 당해야 했던 당시를 회고하면 남북한관계가 그 동안 얼마나 진전되어 왔는가를 실감할 수 있다. 뭐니 뭐니 해도 남북한관계는 7·4공동성명에 남북한이 서명할 수 있었고 이산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린바 있으며 이제는 양지역의 최고지도자 회담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아직 구체적인 북한측의 반응을 짐작키 어려우며 그들의 속성으로 보아 반드시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으나 양측의 수뇌회담을 열어서라도 그리고 지난날의 일들을 굳이 시비할

것 없이 미래의 한민족 통일과 평화적인 번영을 위해 노력하자는 민족적 의지가 다시 한번 뜨겁게 표시되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크게 값진 일이다. 79년의 남북고위당국의 무조건 대화재개 제안이 다음해인 80년에는 남북총리회담의 준비회의로 구체화되었으며 그것이 유산되기는 하였으면서도 새해에 들어와서는 남북최고지도자회담 제안으로 진일보하였다는데서 동족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이 거래의 의지가 날이 갈수록 굳건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열망하고 있는 것은 이 민족뿐만이 아니다. 미일을 비롯한 우리 우방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일부 주변 공산국가들까지도 긴장을 바라지 않는 빛이 뚜렷하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조성은 주변관련국들의 불편한 관계를 유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한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5천만겨레가 바라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변국가들까지도 그러한 입장이라고 할 때 문제는 오직 적화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김일성과 그의 추종자들이다. 김일성은 서울방문을 초청받음으로써 이 거래의 염원은 물론이요 주변국가들까지 바라는 한반도의 안정기를 마련에 응하느냐 아니면 적화망상에 계속 방황하느냐 선택해야 한다. 1·12제의를 조건없이 수락할 것을 우리는 촉구하는 바이다.

평화통일 위한 획기적 제의

-김일성은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을 거부할 이유 없다-

서울신문(1981. 1. 13)

이땅에 생을 타고 난 사람이면 그가 지금 남쪽에 살고 있든 북쪽에 살고 있든간에 이 민족과 국토가 언젠가는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한결같은 염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장구한 세월을 단일민족으로서 같은 문화와 전통, 그리고 하나의 언어속에서 살아 왔으며 흩어져서는 민족의 중흥도 영광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6·25의 비극을 경험한 민족으로서 그와 같은 동족상잔을 이 땅에서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하며 민족의 분열과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과 소모를 끝없이 계속하는 것이 이 민족의 앞날을 한없이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지난 10년간의 노력에 대해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보여 온 위선적이며 민족분열적인 태도가 아무리 가증스럽고 짜증스럽더라도 우리는 결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의 집념과 꿈을 포기할 수가 없다. 아니, 그들이 비협조적이고 호전적인 책동으로 전쟁도발의 기회를 조성하려고 들거나 남북 관계개선을 방해하려고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욱 평화통일을 위한 결의를 굳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을 튼튼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건없이 만나자

이런 의미에서 전두환대통령이 12일 새해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밝힌바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서울과 평양을 서로 방문토록 하자고 한 제의는 우리 국민의 평화통일에의 굳은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그 동안 북쪽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남북

대화를 다시 살려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대통령은 김일성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이나 조건 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김이 원하는 곳이라면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나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전대통령은 또한 북한측이 초청한다면 언제라도 북한을 찾아갈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국도가 분단된 후 일찌기 없었던 남북 최고책임자간의 상호방문을 통해서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개의 당사자가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과업에 접근하기 위하여 대화를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서로의 선입견과 적의를 넘어서서 허심탄회한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전대통령이 아무런 부담이나 조건이 없는 상호방문을 이룩하자고 한 것은 그러한 취지에서이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측이 지금까지의 교섭 과정에서 늘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느니 우리의 일부 국내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느니 하고 조건을 달던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대화의 분위기로 말하자면 북한천지를 유례없는 폐쇄사회로 만들어 놓은 그들이야말로 도저히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화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측의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보아 남북대화가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쌍방 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상호방문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는 상호간의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하고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며 지금까지 막혀있는 대화의 문을 다시 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후에 서로간의 의견을 좁히기 위해 끈기있게 노력한다면 남북간의 긴장은 서서히 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서로 해결하기 용이한 분야부터 실적을 쌓아 올리면서 평화통일로의 길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동족 상잔의 비극 막아야

우리는 여기서 과거 동서독이 수상간의 상호방문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양독기본조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70년 3월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동독을 방문하고 같은 해 5월 동독의 「슈토프」 수상이 서독을 방문한 후, 동서독은 72년 12월 마침내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쌍방 관계를 정상화하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우리는 독일문제가 두개의 독일로 낙착된 것과는 달리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한국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동서독이 수상의 상호방문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중동의 오랜 난제였던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분쟁도 양국수녀간의 교환방문을 계기로 접근이 이루어져 평화협정 체결을 보게 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의 서울방문이 실현된다면 이는 한국에 대한 그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은 북한 땅을 병영과 같은 폐쇄사회로 만들면서 자기 스스로를 외부사회의 정보로부터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이 공산사회에서 조차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그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교류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하물며 한국에 대한 그의 인식에 있어서라. 그는 분명히 한국국민들의 반공의식과 물질적인 생활수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가 간첩을 끊임없이 남파시키고 대남선동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은 이곳에서 용이하게 동조세력을 얻어 「남조선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김이 남한을 방문하여 자기 눈으로 직접 이곳 실정을 확인한다면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이 한낱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전쟁재발이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이 한국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날 전쟁재발의 위험을 극복하고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마련되는 것이다.

위장평화의 탈을 벗어라

우리가 일본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난지 벌써 36년이 지났다. 이 기간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치욕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엄청난 피를 흘리며 싸워야 했고 민족의 동질성은 두개의 이질로 분해되어 가고 있으며 천만의 가족이 헤어져서 사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국제사회에서는 뼈아픈 수모를 당해야 했다. 이러한 불행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70년대초에 대화를 시작했었다.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자고 한 것은 당장에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선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어 남북문제를 순서있게 풀어나가면서 언젠가는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뜻에서였다.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74년에 발표된 3대원칙에 이론정연하게 명시돼 있다. 첫째 남북한이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둘째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와 협력을 이루면서 신뢰를 회복하며 끝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아래 남북자유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남북대화를 위한 우리 노력은 줄곧 이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어떠한가. 민족회의를 구성하자느니, 「고려민주연방국」을 창설하자느니 하면서 그럴듯한 미사여구만을 일방적으로 남발해 왔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회의란 이른바 「민족대통일전선」을 겨누는 것이니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당면한 혁명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해를 같이 하는 세력과 위장제휴하자는 것이 아닌가. 또한 「고려연방」이란 우리와 같은 단일민족에게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단계에서는 이는 한낱 공론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측의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우리는 성실성과 정당성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들이 진정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먼저 그 위장의 탈을 벗어야 할 것이다.

뒤틀린 평화통일 자세

북한측의 그와 같은 위장평화공세에 대해 전대통령이 제시한 1·12제의는 매우 성실하고 현실적이며 또한 자신에 찬 이니셔티브이다. 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이며 역사적인 계기를 이 제의는 마련할 것이다. 이 제의는 온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남북문제에 임하는 우리의 뒤틀린 자세로 평가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1·12제의를 통해 우리가 국력면에 있어서 북한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음을 과시하였다. 전대통령은 이 제의에서 김일성에게 한국의 서울과 그밖의 도시 및 농촌을 개방할 용의

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김에 대해서도 북한의 모든 지역을 우리의 관찰을 위해 개방할 용의가 없느냐고 간접적으로 묻고 있으니 이는 자신에 찬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제의에 대해 북한측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는 당장 예측할 수 없으나 우리는 1·12제의를 관찰하기 위해서 평화통일의 결의를 거듭 굳히는 한편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전대통령의 시정방향

중앙일보(1981.1.13)

남북한당국의 최고지도자가 번갈아 상호 방문하자는 전두환대통령의 「1·12제의」는 국토 분단 사상 최초의 제의라는 점에서 또는 그 대담성에 있어서 또는 현 남북관계의 경색을 뚫을 핵심을 찔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대화가 전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쌍방간에 성명전과 일방적 제안만을 되풀이 하면서 말싸움으로 일관해 시간과 물자와 정력만을 헛되이 소모해 왔기 때문에 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장래에 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암울감과 비관에 빠져 있는게 사실이다.

더욱이 우리측의 생산적이고도 합리적인 제의에 대해 북측이 엉뚱한 고집과 비상식적 억지로만 대응하면서 저들의 유·불리에 따라 혹은 대화하고 혹은 대화를 끊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당했기 때문에 대화에 관한 북측에 더 이상 기대할게 없다는 심리가 우리 사회에 짙게 깔려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또 최근에는 작년 10월의 북한노동당 6차 대회에서 저들이 이른바 「고려민주연방제」라는 양두구육식의 통일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그들과의 대화의 길은 더욱더 무망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민족적 비원은 북한의 자세가 완미하다 하여 약화되거나 포기될 수 없음은 자명하고 그들이 그럴수록 우리로서는 더 끈기있는 자세와 지혜로 대화의 길을 여는 능동적 노력을 다할 당위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거듭된 자의적인 대화중단으로 거의 무망하게 보였던 남북대화에 새 차원의 가능성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대통령의 「1·12제의」는 획기적이다.

이 제의로 우리 국민은 물론 북한주민까지도 한가닥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을 생각하면 그 의의는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이가 있는 이상 북측도 무슨 말로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거부한다 하더라도 궁색한 핑계의 제시에서 그들의 거짓 평화의 진면목만 또 한번 드러날 것이다.

또 무엇보다 문제해결을 남북당국의 정상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 획기적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접촉 「레벨」이 하위로 갈수록 문제해결은 어려워지고 말은 많아지고 감정은 악화되었다. 더욱이 전체주의적 폐쇄적 북한체제에서는 실무자일수록 책임회피 위주로 접촉에 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대화의 성공률이라할까, 이견의 접근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대화방식은 대국적인 입장에서 재량이 가능한 상위 「레벨」의 대화이며 그런 점에서 정상간의 대화보다 더 직충적이고도 핵심적인 대화란 있을 수 없다.

최고지도자가 이같은 제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국정과약에 대한 자신감과 통일된 국론의 뒷받침에 대한 자신감과 개인적 역량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라야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1·12제의」는 전대통령의 자신감과 대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국제정치에서도 정상외교는 가장 중요한 외교방식이 되고 있다. 남북에 걸린 문제의 심각성이나 성격을 생각하면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서로 왕래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유례없는 공산봉건체제로 북한을 외부와 단절된 폐쇄사회로 유지하고 있는 김일성으로서 서로 오가며 피차 개방하자는 이 제의에 선뜻 응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그것은 자신과 일문의 권력욕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전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남북한이 통일에 이르는 길은 미사여구의 일방적 제안을 남발하거나 지켜지지 않을 서면 약속을 내놓는데 있지 않고 무엇보다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 이 민족적 신뢰는 상호 접촉과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의 축적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며 접촉을 끊은 채 말로만 하는 모든 제안은 기만적이며 위장적인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북측이 평화통일에 진의가 있다면 대화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나아가 가장 효율적인 대화방식인 정상의 왕래를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거부할 경우 자가당착의 모순만 노정할 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1·12제의」 외에도 전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몇 가지 중요한 대목에 언급했다. 정치일정의 촉진과 공명선거에의 각오, 경제안정의 회복 및 성장궤도에의 재진입, 사회정의확립의 결의 등을 표명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새삼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우리로서는 이런 국내 제문제와 이번의 획기적인 남북제의와의 떼어 수 없는 관련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내의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착실한 정상화와 발전은 「1·12제의」의 실현을 위한 추진력이 된다.

새 헌법에 의한 공명정대한 선거와 그에 따른 새 행정부·새 국회의 원만한 출범 및 민주헌정의 정착이 있어야 대북 대화를 뒷받침할 국론 통일을 기대할 수 있고 경제발전이 있어야 대북 우위도 강화되는 것이다.

이같은 정치력·경제력 또는 온 국민이 우리 사회에 대해 조금의 회의도 없이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는데서 기약되는 국력의 팽창축적이 있어야 북도 적화통일의 미몽에서 깨어나 현실적으로 긴장완화의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대통령이 대통령선거를 2월중에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한 달쯤 앞당겨 실시할 것이며 『타락·부정선거는 제5공화국 자체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결정적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명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시기의 정치적 요청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제의 가장 요긴한 개념으로 제시된 「물가안정」과 「민간주도」역시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며, 특히 난국타개를 위해 「노력과 희생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역설은 중·저소득 국민의 깊은 공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시정연설에서 보인 전대통령의 문제인식을 평가하고 국정구상에 기대를 걸면서 획기적인 「1·12제의」가 우리 국력에 의해 실현되기를 대망해 마지 않는다.

또 「1·12제의」로 불붙은 민족의 통일에의 열망이 거대한 동력이 되어 김일성도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기를 바란다.

전대통령의 국정방향

- 정치일정 단축과 김일성 초청의 괄목할 의의 -

조선일보(1981. 1. 12)

12일 오전 전두환대통령은 1981년도의 국정방침을 밝히는 연설을 통해 앞으로 실시할 일련의 정책을 제시했다. 여기서 전대통령은 당면한 정치일정, 새해의 경제정책, 외교의 방향, 남북한 문제, 사회복지 정책, 교육문화 문제 등 광범한 분야에 중점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견해를 천명했다.

이것으로써 국민들은 새해의 국정이 어떤 각도에서 펼쳐질 것인가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당면한 정치일정과 남북한 문제를 우선 생각하기로 하고 그밖의 분야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새 헌법에 따라 제5공화국 정부가 구성 출범할 시점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에 이르는 정치일정에 관해 전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는 오는 2월중에 앞당겨서 실시 완료한다는 점을 못박아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거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비상계엄을 전면 해제한다는 것도

명백히 했다. 또한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도 한두달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아울러 피력했다. 이러한 구상에 의하면 제5공화국 정부가 정식으로 시작될 날은 앞으로 길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간취할 수 있는 것이다.

제5공화국 정부의 출범은 그야말로 새 시대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제5공화국 정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구성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양대 선거를 모체로 하여 탄생하게 되므로 다가오는 두 선거의 양상이 과연 어떤가는 우리의 장래에 대해 극히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전대통령은 공명선거, 선거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이것을 기어이 이룩한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전대통령이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타락과 부정부정 등 구습이 다시 소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새로운 방침을 밝힌 점이다. 즉 친정부적 정치단체일수록 공명선거에 있어서 새 시대의 모범을 보이도록 배려를 해 나갈 작정임을 천명하고 있다. 지난날의 역대 정부치고 공명선거와 자유선거를 말하지 않은 예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선거때가 되면 관권개입이다 투개표부정이다 압력이다 하는 많은 잡음을 일으켰던 것을 회고할 때 전대통령의 이번 결의는 각별한 뜻을 갖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누구나 민주정치의 이상과 당위성을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은 바로 선거에 있다. 여기서 거듭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깨끗한 선거, 공명선거는 대통령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며, 관계공무원, 정당, 사회단체, 후보자, 일반 정치인, 그리고 결국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엄격한 준법정신, 단호한 도덕적 규범에 따라 행동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면서 공명선거 하나를 치르지 못한다면 그 이상의 민족적 수치가 없음을 재인식하고 모든 국민은 떳떳한 자세로 새 시대의 막을 열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전대통령이 새로운 통일방향과 대담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 민족, 한 언어, 한 문화의 조국이 하루 속히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민족의 지상과제라고 규정하면서 전대통령은 통일된 조국의 상으로서 자주·민족·민주국가를 제시했다.

이때의 자주·민족·민주가 북한의 협소하고 당파적인 이데올로기로 해석하는 차원을 훨씬 넘고 있는 것은 물을 필요조차 없다. 과거에는 추상적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말했고 김일성은 이것을 공산주의의 전술에 종속시키면서 대남평화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전대통령은 남북통일에 이르는 길로서는 민족적 신뢰를 회복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사여구의 일방적 제안의 남발이나 지켜지지 않는 서면약속 같은 것은 그만두고,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며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통일의 길을 여는데 있어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남북한을 상호 방문할 것을 제의했다. 그리고 이런 제의와 함께 김일성을 서울로 초청한 것이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일이며 큰 결단이다.

김일성을 초청함에 있어 전대통령은 어떤 부담과 조건도 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서

울에 머무는 동안 모든 신변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가 원하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전대통령 자신도 김일성이 같은 조건으로 초청만하면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상호 초청의 진의가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돌파구를 찾자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쪽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감한 제의이므로 그 의의는 결코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김일성이 이 제안을 수락하고 안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자유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도 빈번히 이야기하는 평화통일이 허위가 아니라면 그가 서울에 안와야 할 이유는 없고 전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상호 방문으로 남북한이 손해를 볼 아무것도 없다. 그가 이 제안을 거부코자 한다면 구실이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구실이 남북의 평화통일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행한다는 것을 이해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평화통일을 아예 안하겠다면 몰라도 하겠다고 한다면 싫든 좋든 남북간의 대화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만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대화와 합의없는 평화통일이란 백년을 가도 실현되지 않는다.

평화선전공세, 내부교란, 상대방의 국제적 고립화, 무장간첩의 침투 등의 방법으로는 통일은 되지 않는다. 한편 전쟁에 의한 통일 그것은 이 고성능 무기의 시대에 있는 남북의 국제관계로 보아 민족이 모두 자멸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북한도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전대통령의 제의에 응당 긍정적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새 차원의 1·12 국정연설

- 전대통령 경륜에 북한측 호응해야 -

한국일보(1981. 1. 13)

금년은 새 헌법절차에 따라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인하면서 제5공화국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해인 동시에 중첩된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는 전정에 새 시대의 신국면 개척을 다져나갈 중요한 시점이다. 때마침 전두환 대통령은 12일 상오 1981년도 국정의 기본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 및 구상의 대강을 국민 앞에 밝히는 가운데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실시하였다.

총체적으로 그 연설의 기조는 미래상을 갖춘 안정과 신뢰와 화합의 다짐으로 풀이된다. 종전과는 달리 과거의 실적에 관한 전시효과적인 언급보다도 내일에 관하여 더 많이 솔직하게 대화하려는 전향적 실직성이 부각되어 있음을 본다. 이 경우에 국정의 발전적 맥락 속에 동참의식을 선양할 당위성이 설득력 있게 표현되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쌍방 당국의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을 제의한 대목이 획기적이다. 우리 조국의 명실상부한 평화통일을 금세기 중에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비추어 상호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1·12제의」의 진취성을 헤아리게 되는데 비록 약간의 우여곡절을 수반한다 해도 언젠가는 기어이 실현되어야 할 지속적 과제로서 추진되어 마땅하리라고 본다.

2대 선거의 공명성이 새 공화국의 도덕 상징

전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우선 정치일정에 관하여 국내정세의 안정회복이 이루어진 만큼 대통령 선거를 2월중에 앞당겨 완료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도 새 헌법이 예견한 6월까지를 기다릴 필요없이 한 두달 앞당겨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제5공화국 정치질서의 정통성 근거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입각하여 조속히 확인하는 과정의 완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고 이는 국정안정을 진일보 확인하는 믿음직한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또 비상계엄은 전두환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전까지 전면 해제할 방침이 천명되었다. 종전의 「체제개혁」 때와 비교하여 몇몇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선거의 공명성 여부가 「제5공화국 자체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좌우하리라고 판단하는데서 특히 「친정부적 자세의 정치단체일수록 공명선거에 있어 새 시대의 모범을 보이도록 배려」할 것을 약속한 것이 올바른 문제의식의 표명이라고 전폭적으로 동감한다.

공명선거의 요체는 첫째로, 관권개입의 배제와 둘째로, 금력난무의 퇴치로 가름된다. 과거의 여당권 입후보자들의 일부 행태에 발로된 바와 같은 권력 기생적 선거작전은 절대로 되풀이 될 바 아니며 또 일부 구정치인들에게 말쑥되던 일어탁수격인 타락 풍조는 결코 용납될 바 아니다. 앞으로 극소수 말단공직자들에 의한 「과잉충성」이 여외의 문제야기로 대국을 그르치는 일 없도록 엄계하는 별도조치가 제때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입법작업이 진행중인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도 공명정대한 동시에 다당제의 지향에 어울리도록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최고책임자의 상호 방문 제의 역사적이다

국내외 동포들과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게한 전대통령의 통일문제관은 대담하고 진취적인 「1·12제의」로 우선 신국면타개의 경륜을 평가하게 했다. 전대통령은 우리 겨레가 「자주·민족·민주국가」로 통일되느냐 아니면 분단상태에 정체하느냐 하는 관건을 「민족적 신뢰회복」여부로 본 것이다. 이로부터 북한측에 대해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 방문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였는데 이는 지난날의 이러저러한 사연에 구애되지 않는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의로서 특기할 바이다. 김일성의 서울 방문을 초청하는 동시에 전대통령 자신의 북한방문 용의를 밝힌 것이다.

무릇 최고책임자 수준의 상호 방문 내지 정상회담의 진행은 동·서독간의 관계정상화와 이집트·이스라엘간의 평화적 접근 노력에서 보듯이 근본적인 상호 신뢰의 확립, 해묵은 현안들의 일괄타결을 가능케 하는 급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동족상잔의 방지와 남북대화의 무조건 재개를 한결같이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 그리고 평화애호 국제사회의 팔목기대에 비추어 북한측의 주저없는 호응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진부한 「환경조건론」이라든지 타의있고 비현실적인 「연방제방안」 등을 운위하는 대신 평양측이 민족적 양심으로 획기적인 정상급 상호 방문에 동의한다면 이는 실로 36년 숙제를 일거에 풀 수 있는 새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대체 상호 신뢰의 회복을 선행시키지 않고 그 무슨 교류나 하루 아침의 평화통일이 가능하겠는가 말이다.

우리의 남북통일은 오직 민족화합의 구심작용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분열상극·대화외면 등 원심작용으로는 절대로 달성되지 못할 것임을 북한측이 너무 잘 알게 될 것을 지켜보며 또한 거듭 강조해 마지않는다.

자신·화합을 기조로 신경지 개척의지 뚜렷

전대통령의 경제적 난국에 대한 현실진단은 불가역제선을 새로 제시않은 것처럼 솔직하였으며 또 그 처방은 정직과 자신감을 아울러 감축케 한다.

「제2의 도약」을 위한 정도로서 강인한 의지력과 정부·기업·근로자들의 단합노력 사회안정의 확보 물가안정 민간주도의 경제체제 희생을 분담하는 일체감의 행동적 증명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서 금년 가을부터의 경기회복과 수출신장 및 고용확대를 전망하였다.

원래 경제의 「기적」이란 노력과 창의력 발휘의 별칭일 따름이다. 앉아서 남을 탓하는 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있을 수 없다. 동시에 일부 관료진의 경제시책 발상에 보는 조석변 인상과 과잉통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이 경제외적 요인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신뢰의 정립과 내일에 관한 설계폭의 보장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국제정세의 분석과 외교·안보정책에 관해서는 자주외교와 자주국방의 내실을 갖추면서 미·일 등 맹방 및 인방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서 유럽제국·중동제국과의 다변적 우호협력, 비동맹 내지 비적성 공산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다짐하였다. 이 경우에 여행자유화 조치를 전망케 한 것이다. 민간교류를 선행시키는 외교의 신경지 개척 그리고 복수의 정당·사회단체들을 활용하는 분공외교전개가 현실적 일정에 올라 있음을 관측케 한다.

사회복지는 민주주의의 토착화, 사회정의의 구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 중의 하나이다. 이번에 전대통령은 복지정책의 당면과제를 소상하게 설명했으며 또 「노사공존공영체제의 확립」이 산업발전과 국민화합의 기초라고 옳이 지적하였다.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정화 운동의 지속에 그치지 않고 근대적 법치주의와 전통적 윤리가 상호 보완하는 사회의 실현이라는 새 시대의 역사적 요청을 천명하였다. 대중요법만을 맴돌지 않는 거시적인 문맥을 헤아리게 된다.

교육정책에서는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등 3대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다. 문화정책에 관해서는 민족문화의 주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이 강조되었다. 주체성이 강한 민주적이며 진취적인 한국인상의 실감나는 정립없이는 민족중흥을 말할 수 없다고 보아 전대통령의 포부에 동의하는 바이다.

끝으로 전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구시대의 갈등, 상쟁 등 폐습과의 결별, 따라서 국민총화참여를 통한 창의적 정열의 진작을 강조하였다. 새 시대의 주인의식이 자유와 책임을 아울러 헤아리는데

서 영광된 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동참의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앞에는 시련과 더불어 희망의 이유가 발견된다. 국민화합의 연장선에 큰 테두리의 민족화합을 내다보는 시점에서 단결과 안정을 다짐한다.

「1·12」 제의의 수락을 거듭 촉구한다

경향신문(1981. 1. 16)

남북평화통일 여건 조성의 역사적 계기를 마련한 전두환 대통령의 「1·12제」를 북한측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우리는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북한은 이 제의에 대해 현재까지 일체의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선전기관들은 상투적인 대남비방선전만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기만적인 모략·중상 방송으로 「1·12」 제의의 의의와 역사성을 애써 상쇄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로 보아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 제의가 그들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리라는 의구심이 절로 든다.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난 1979년 1·19 남북한당국회의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 방식처럼 이를 거부하기 위한 전술로 역제의를 해오거나 전혀 실현 불가능한 부대조건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도 여겨진다.

그들의 경직된 자세와 내부체제로 보아 북한측이 「1·12」 제의를 설령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대남강경주의 모험정책을 수정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내부조건의 형성을 수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시간을 끈다고 하더라도 인내와 끈기로 평화통일 노력을 계속하고 북한이 거부할 수 없도록 설득력있게 이 제의의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야할 줄 믿는다.

동서독의 평화공존 과정이나 심지어 중동의 평화협상 전개와 모색이 얼마나 힘들고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가를 생각할 때 남북한 관계의 전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더욱 중첩되리라는 것은 상상되고도 남음이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북한당국이 민족의 동질성을 부정하고 역사를 계급과 계급의 투쟁 과정으로만 파악하여 동족을 적대시함으로써 폭력과 혁명적 방법에 의한 남북통일을 추구하는 기본 목표를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공산화혁명 전략의 확대 강화 때문에 1970년대 이후 우리가 꾸준히 제의한 평화통일 방안은 모조리 거부되었고, 심지어 대화를 하는 체 하면서도 그들은 남침용 땅굴을 파는 등 온갖 군사 모험주의 책동을 노골화함으로써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됐던 것이다. 북한측은 또 말로는 평화와 통일 문제를 같은 민족끼리 협의하자고 떠벌리면서도 실은 미국과의 단독 협상을 제의하는가 하면 민족내부 문제를 비동맹국 회의에 들고 나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기만과 술수를 써왔던게 저간의 작태였다.

요컨대 김일성이 말하기 좋아하는 「자주」란 남한에서의 미군철수를 전제로 하며, 「평화」의 개념은 우리만의 일방적인 감군을 주장하는 구실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이란 대민족회의 또는 연방제의 허구성을 은폐하기 위한 전술적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남북통일엔 무력통일 방식이 첩경이라고 판단하고 이른바 하노이식의 통일전선 전술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남북연방제 주장만 해도 그 기만성은 이미 드러난 바 있지만 북한당국이 그러한 사술과 호전주의에 의해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불씨가 맹거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야 할 것 같다.

남북한이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통일 여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술보다도 상호 신뢰의 회복과 이해의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전대통령의 「1·12」 제의는 남북이 무조건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일대 영단이라고 평가되는 것이며 그 민족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북한당국의 반민족적 처사와 민족기만 행위로 보아 무조건 대화재개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닐 줄 안다. 다만 남북이 서로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민족의 장래와 1천만 이산동포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걱정한다면 상호 방문을 못할 까닭이 없으며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북한이 만약 「1·12」 제의를 거부하거나 이에 성의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내외적으로 그들의 위장평화와 기만적인 대남책동을 새삼 폭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깥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교포를 분열케 하려는 그들의 연방제안이 더 이상 전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또 북한측이 미국과의 대화협상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따위는 그들이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자주성」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일련의 전술획책은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아울러 「연공합작」기반을 확대함으로써 통일전선을 형성하려는 흉계의 소산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태세나 국력은 결코 북한측이 오판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 만일 김일성이 「1·12」 제의를 받아들여 서울과 농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면 대한민국이 북쪽의 대남전략의 제물이 결코 되기 어렵다는 것과 무장침투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본다. 이 엄연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통일이 무력으로써가 아니라 남북이 긴장완화와 대화재개, 그리고 상호 신뢰와 공존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확신해 마지 않는다.

우리는 민족화합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1·12」 제의와 남북정상 상호 방문을 실현시키기 위해 김일성의 수락을 거듭 촉구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실무 접촉에 즉각적인 회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해 둔다. 남북간에 전쟁의 재발을 막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1·12」 제의를 마다할 까닭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 해 외 반 응

전대통령의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 방문」 제의가 발표되자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우방은 물론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획기적이고도 건설적인 조치라는 논평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미국정부는 1월 12일 국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과의 회담을 제의한 것은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북한이 이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했다. 「존·트래트너」 미 국무성 대변인은 전대통령의 「1·12제의」에 대한 논평을 통해 『우리는 이 제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국가적인 통일을 향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제안으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김일성은 이 역사적 초청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전두환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제안』이라고 논평하고 『이 제의가 바로 실현되리라는 생각되지 않지만 극히 대담한 제안이며 전대통령의 자신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영·일·서독 등 주요 우방국가들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남미 등 전세계의 매스컴들은 『한반도 분단사상 최초의 용단』 『전례없는 새로운 제의』 『대담하고 획기적인 제의』 등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지는 1월 12일 전대통령의 김일성 초청 제의를 미국 신문 중 가장 먼저 보도하고 전대통령이 한반도 분단이래 최초의 남북한 정상회담을 위해 기꺼이 평양을 방문할 결의를 보였다고 논평했다. 동 지는 또한 전대통령 취임이래 남북접촉을 재개하려는 최초의 시도라고 보도하고 전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김일성이 쉽게 응해올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산경신문은 1월 13일 조간에 『자신넘친 전대통령의 연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대통령의 획기적인 제안은 제5공화국 발족을 목전에 두고 자신만만한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논평하고 「1·12제의」를 크게 환영했다.

런던의 「더 타임즈」를 비롯한 영국의 주요 「매스컴」들도 1월 13일 전 대통령의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 방문」 제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더 타임즈」지는 『통일회담을 위해 북한지도자를 서울에 초청』이라는 제하에 전대통령의 제의 내용을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보도했으며 「파이낸셜 타임즈」지도 『한국 교환 방문 제의』라는 제목으로 전대통령의 사진을 곁들여 보도했다. 「더 타임즈」지는 한국 대통령이 김일성을 직접 초청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의 관측통들은 전대통령의 금번 제의를 남북간의 접촉을 재개시키기 위한 대담한 시도로 보고 있다고 논평했다. 한편 「가디언」지도 『전 대통령 남북회담을 제의』라는 제하에 평화통일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김일성을 초청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유엔」주재 각국 외교관들도 전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김일성에게 이와 같은 전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1월 30일 현재 세계 각국의 「매스컴」 및 정부의 「1·12제의」 지지 논평 또는 보도 총수는 73개 국가에서 299회에 달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밝힌 공식, 비공식적인 지지 반응은 92회에 이르고 있다.

분단 36년을 통하여 이번 「1·12제의」와 같이 범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한 경우는 없었으며 이러한 광범위한 지지 반응은 곧 평화통일 노력으로서의 「1·12제의」의 의의를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지지 반응은 주요 우방국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초유의 광범위한 지지 반응을 획득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여론은 2월 9일 인도에서 개막된 비동맹외상회의에서 북한 집단의 입장을 약화시켰고 급기야는 북한 스스로 한반도 문제 상정을 철회하게끔 만들었다. 북한 집단은 많은 비동맹국가들이 한국문제의 당사자간 해결, 특히 전두환 대통령의 「1·12제의」에 표명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와 같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3. 한·미 정상, 「1·12제의」 실현에 공동보조

1981년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은 2월 2일 백악관에서 「레이건」 미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중하고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 국제정세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한 양국정상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평화유지의 긴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레이건」 미국대통령은 전대통령에게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하여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장하였으며 전대통령의 획기적인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 방문」 제의에 대하여 찬의를 표명하였다.

다음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 중 관계부분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전대통령에게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하여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장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전대통령의 획기적인 1981년 1월 12일자 남북한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 제의에 대하여 찬의를 표명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여하한 대북한협상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반드시 완전히 참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동맹국들이 한국에 대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증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데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4. 유엔 사무총장, 「1·12제의」 실현에 협력 약속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방문 중 「뉴욕」에서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을 방문,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정세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1·12제의」에 대한 「발트하임」 총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 받았다.

전대통령은 『김일성을 무조건 서울에 초청한 것은 남북 최고책임자의 상호 방문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대화 전환점을 찾고 남북한간의 신뢰조성을 위한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상호 방문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한 「발트하임」 총장의 중재역할을 요청했다.

전대통령은 김일성이 36년간이란 긴 세월을 독재적으로 집권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할 것이므로 그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내부사정을 직접 본다면 김일성의 오만에 의한 전쟁발발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내가 먼저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발트하임」 사무총장은 북한의 「1·12제의」 거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나의 직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각하의 제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발트하임」 총장은 남북대화 중재를 위해 지난 1979년 서울과 평양을 교대로 방문한 바 있으며, 남북한문제에 대한 분석 및 실상 파악 등에서 누구보다도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인물인 만큼 남북한문제에 대한 그의 발언은 국제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1·12제의」에 대한 그의 지지는 곧 국제적인 지지의 획득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발트하임」 사무총장은 전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 회담의 내용 및 전대통령의 「1·12제의」를 2월 4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델리」 비동맹 외상회의 참석차 출타한 「발트하임」 총장을 대리하여 「페레즈 쿠엘라」 유엔 특별정치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 유엔 대표부 차석 전재홍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그러나 북한은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전재홍은 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페레즈 쿠엘라」 유엔 사무차장으로부터 「1·12제의」를 본국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그것을 평양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전재홍은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지난 1월 21일자 김일의 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고 말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의 미국방문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 「팀 스피리트」 작전 등을 맹렬히 비난하는 등 종래의 작태를 재연했다.

제3부 「1·12제의」에 대한 북한 반응

1.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성명

북한집단은 남북한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며 남북대화를 재개하므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려던 우리의 현실적이고도 실천적인 「1·12제의」를 아직까지도 외면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 방문」 실현을 제의한지 일주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집단은 1981년 1월 19일 소위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위원장 김일의 성명을 통해 전대통령의 제의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1월 19일 낮 12시부터 15분간에 걸쳐 북한의 평양방송 및 조선 중앙방송을 통해 발표된 성명에서 북한집단은 엉뚱하게도 전대통령의 「1·12제의」는 『평화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 출발부터 호지부지 시간이나 끌면서 두 개의 조선을 조작하려는 분열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김대중 석방, 최근 해체된 정당·단체들의 부활, 반공정책 포기, 「6·23선언」 철회, 주한미군 철수 등 상투적인 내정간섭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북한집단은 『분열을 추구하지 않으며 반공을 추구하지 않는 조선사람과는 마주앉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그들이 행동과 실천에 의해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대남적화전략에 의거한반도를 적화시켜 보겠다는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정권의 부주석이기도 한 김일은 이 성명에서 우리의 국내 문제에 대해 악랄한 왜곡비방을 상투적으로 늘어놓으면서 시종 「무뢰한」, 「백정」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야비한 언사를 구사함으로써 북한집단의 야만성을 내외에 드러내었다.

북한집단의 이러한 야만성은 전두환대통령이 비록 법률적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집단의 최고당국자를 그들이 사용하는 정식호칭으로 부른 태도와 견주어 보면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북한의 소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미 그 정체가 잘 알려진 소위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의 수하조직으로 북한의 모든 단체와 마찬가지로 명칭만 있을 뿐 독자적인 강령도 정관도 없는 허수아비이며 북한집단이 그들의 대남적화야망을 은폐하기 위해 필요시 그 이름만 이용하는 「단체」이다.

2. 북한의 「1·12제외」 거부 저의

북한집단이 납득할 수 없는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한국의 국내문제를 거론하며 「1·12제외」를 거부하고 있는 처사는 한마디로 말해 행동과 실천을 통해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전대통령의 제의를 거부할 정당한 논거를 찾을 수 없는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북한집단이 추구해 온 대남적화전전략의 기반이 붕괴될 입장에 처한 그들의 초조감의 발로라 할 것이다.

북한집단은 거부의 이유로서 「1·12제외」가 『분열주의적이며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책동』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고려민주연방」에 의한 통일론을 다시 들고나왔다.

그러나 북한집단이 주장하는 거부이유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1·12제외」는 남북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고 또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실천방도로서 쌍방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교환할 것을 제의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상태를 고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는 맞지 않는 것이다.

반면 북한측이 대안으로 내세운 소위 「고려민주연방」안은 그야말로 분단을 고정화시키고 두 개의 한국을 영구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북한집단은 소위 「고려민주연방」안에다 한국측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들을 제시함으로써 「연방제」안은 내용여하에 관계없이 그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북한측이 「연방제」실현의 전제로 제시해 놓은 조건들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타도, 반공정책 및 반공활동 금지, 미·북한간의 직접협상에 의한 「평화조약」체결과 이에 의한 주한미군의 철수 등이다. 통일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합의사항의 실천을 보장해야 할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어떻게 평화통일 방안으로 성립될 수 있겠는가.

당초부터 성립될 수도 없는 일방적 선전방안을 내놓고 상대방에게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는 북한집단의 태도야말로 민족화해를 거부하는 분열주의적이며 사실상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분명히 평화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집단의 태도는 북한집단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들이 아직도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적화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북한집단의 통일전략의 기조는 소위 「남조선혁명」이다. 「남조선혁명」이란 한국 정부를 타도하고 친공정부를 남한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집단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내부를 혼란시키고 반정부투쟁을 확대 발전시켜 한국의 반공정부를 약화시키는데 그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민주연방」안도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조작해낸 것이다.

남북간의 대화나 접촉도 대남적화통일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기본태도이다.

즉 남북대화 또는 접촉을 계속하는 것이 한국내부의 혼란 조성이나 한국정부의 약화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대화나 접촉도 거부해 버리는 처사가 그것이다. 1979년 10·26 이후 우리 사회가 일시 최고지도자를 잃고 과도기의 공백기를 맞게 되자 북한측은 불순한 동지에서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 응하였다가 한국내부가 안정을 되찾자 일방적으로 접촉을 중단해 버린 예가 북한집단의 대화에 임하는 기본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북한집단이 이번 전대통령의 제의를 아무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본태도에 의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강력한 영도력에 의하여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그들의 어떠한 책동도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북한집단은 전세계의 여론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고 있는 「1·12제의」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집단은 「1·12제의」를 받아드리지 않으므로써 그들이 대화를 재개하고 북한사회를 개방할 자신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북한 김일성집단은 북한지역을 외부사회와 철저히 격리시켜 놓고 전주민을 우민화하므로써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다. 오늘날 세인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에 의한 후계체제도 이러한 폐쇄사회와 전주민들의 우민화 정책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남북한이 상호교류를 통해 쌍방의 사회가 개방된다면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집단이 조작해 놓은 체제가 어떠한 사회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김일성집단의 기만성이 백일하에 판명될 경우 북한 김일성집단의 지배기반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집단이 「1·12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일성 집단에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보다는 자기일가의 권력유지가 더욱 급선무라는 것이 이번을 계기로 드러난 셈이다.

3. 북한의 「1·12제외」 거부에 대한 국내 반응

남과 북의 당국최고책임자가 교대로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므로서 행동을 통해 상호 신뢰를 조성하고 평화적 통일을 향한 주춧돌을 놓아보자는 전대통령의 제의를 북한측이 김일의 성명을 통해 거부하자 한국의 모든 언론기관들은 사실을 통해 북한측의 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해 올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정의당을 비롯한 각 정당 및 재향군인회 등 사회단체들도 성명을 발표, 「1·12제외」의 수락을 촉구하고 북한측의 대남적화 야욕을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의 김일이 우리측에 대하여 김대중 등 정치범을 석방할 것과 반공정책을 포기할 것 등을 요구한데 대하여 그 부당성을 반박하고 북한측이 우리에게 대해 그러한 조건의 수락을 요구한다면 『북한도 그들의 교화소 안에 갇혀 있는 수많은 구금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북한도 반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해야만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북한측의 「1·12제외」 거부를 논평한 국내 주요신문의 사설이다.

김일성의 초청 거부

-개인의 오판과 과욕에 희생되는 민족의 뜻-

동아일보(1981.1.21)

전두환대통령의 김일성초청은 1주일만에 북한측에 의해 냉혹하게 거부되고 말았다. 원래 김일성의 붉은 속셈을 모를리 없는 우리로서 북한측이 선뜻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리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내외통신의 보도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이쪽의 제안을 그토록 비열하고 냉혹하게 외면할 수 있는가에 다시 한번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지난 12일 전대통령이 김일성에게 제안한 것은 서로 조건없이 만나 지난날의 일들을 굳이 시비할 것 없이 남북한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계기로 삼자는 내용이었다. 이 제안에 대해 김일성은 직접 회답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밑의 「부주석」 자리에 있는 김일을 시켜 비열한 선전문구와 입에 담지 못할 저질의 표현들로 등을 돌려버렸다.

이른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김일의 거부 내용중에는 반공정책을 포기하고 6·23선언을 철회하며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등 종래의 역지가 되풀이되어 있다. 그리고 「분열과 반공을 추구하지 않는」 친공분자들 하고는 대화할 수 있다는 대목도 빼놓지 않았다.

평양측의 이같은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 물론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들의 속셈은 일관돼 왔다. 8·15해방직후의 남북협상으로부터 남북조절위, 대민족회의, 고려연방제, 남북총리회담 등을 통해 수없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남북한 양체제가 공존하는 가운데서의 통일이 아니라 월맹이 월남을 통일한 식의 그러한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김일성은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한쪽으로는 남한에 적화혁명역량 조성이라는 전술아래 무장간첩을 계속 침투시키고 고정간첩을 박아두려 기도해 왔다. 지난 19일 국가안전기획부가 전모를 발표한 고정간첩 3개망 15명 검거에서

도 그같은 북한의 흥계는 목도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월남식 적화는 실제로 남한의 철저한 반공태세로 봉쇄되어 있음을 김일성집단은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 작년 「10·26사태」 이후 남한에 권력의 공백기가 빚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반공만은 게을리해서 안되겠다」는데 일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심지어 「사북사태」, 「광주사태」에서도 대공경각심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전대통령의 초청을 거부하는 등 남북접촉을 기피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남적화책동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하나는 한국내정에 대한 오판이요, 다른 하나는 김일성 일인우상화의 붕괴를 두려워 한 나머지 남한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6·25남침 당시에도 오판을 저지르고 말았다. 1948년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1950년에는 「애치슨」 미국무장관이 한국을 미국의 서태평양방어권 밖에 두자 그러한 일련의 미국측 움직임을 남한 포기 오판하고 남침을 자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김의 오판과는 달리 남한을 분단국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공산주의체제보다 잘 살수 있는 시험대로 삼고 있었으며 결과는 미군의 즉각적인 투입이었다. 3년이란 장기전을 치르면서 처절한 동족상잔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북한은 도리어 상당한 지역을 잃고 말았다. 김일성의 오판으로 이 겨레가 치러야 했던 비극은 한민족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에도 김일성은 여전히 남한의 정세를 오판하고 있다. 고정간첩을 박아두고 무장첩자를 남파하며 한국정부와는 대화를 하지 않고 친공운동이나 선동하면 공산적화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김일성에 대한 적개심만을 드높일 뿐이다.

김일성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통해 32년간이나 독재를 유지하는데 성공한듯 하지만 6·25남침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책과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의 죄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데 민족적인 비극이다. 김의 적화망상으로 남북한간에는 긴장이 계속됨으로써 벽찬 군비경쟁과 외교경쟁을 벌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김일성이야말로 민족의 암이다.

김일성도 방대한 정보망을 거느리고 있을 것이 분명한진대 남한의 적화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쯤은 능히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남북대화거부와 대내외적 적화책동으로 어떤 기반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대화와 접촉 특히 총리회담이나 남북최고책임자 접촉을 기피한다는 것은 북한사회의 개방을 두려워한데 연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남북한의 접촉을 통해 남한의 자유물결이 북녘땅으로 흘러들어갈 때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것이 남한사회에 비해 얼마나 초라하며 김일성의 우상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가 탄로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대화와 접촉은 김일성의 오판과 일인우상화 연명에 희생되고 있다. 한 개인의

권력충족과 오관으로 민족의 뜻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의 개인욕망으로 민족의 통일의지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 진리 앞에는 오관과 허구가 무력함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어떠한 형태이든 남북대화의 재개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북한의 「1·12」 제의 거부

-고정간첩단사건 등 일련의 대남파괴공작 적극화를 경계한다-

경향신문(1981.1.20)

전두환대통령의 역사적인 「1·12」 제의를 북한이 거부했다는 것은 그들의 속셈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부를 계기로 북한은 대남선동선전을 더욱 가열화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도전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대선거에 즈음해서 그들의 파괴음모가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줄 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의 대규모 고정간첩망이 적발된 것을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의 「1·12」 제의 거부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첫째는 북한의 대남파괴공작과 선동선전책동에 대한 대응에 배전의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제5공화국출범에 대한 그들의 파괴공작을 효과적으로 봉쇄 또는 분쇄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없겠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제5공화국출범의 정당성을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직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고정간첩과 동조자들의 파괴공작엔 철저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비록 「1·12」 제의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그들이 대화의 광장에 나오도록 계속 유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을 몰아오지 않고 평화적 남북통일을 희원하는 민족적 명제에의 해답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줄 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이른바 「고려민주연방제」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비추어 그들이 쉽사리 「1·12」 제의에 호응해 오리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의 북한 거부는 다시 한번 그들의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술책을 백일하에 폭로한 셈이다. 남북의 최고책임자가 상호 방문하고 신뢰심을 회복하자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결국 「남북연방제」 자체를 한낱 헛 구호로 내세웠다는 속셈을 반증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역사적 측면에서나 민족적 입장에서 조국통일의 지상명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두환대통령의 「1·12」 제의를 수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새 역사전개를 위한 전두환대통령의 「1·12」 제의는 아무런 선행조

건도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민족양심과 역사의지에서 우리나라 온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1·12」 제의를 거부한데는 그들의 내부 사정이 복잡미묘한데도 기인했을 것으로 보아진다.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가 흔들리는 현실에서 남북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겐 모험적인 일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내부약점이 크면 클수록 그들은 대화전략을 경화시키고 대남도발에 북한주민의 관심을 집중케 하려 들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될 것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점은 비단 이번의 제의 거부에서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일관된 그들의 대남전략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적발된 북한 고정간첩망은 여러 가지의 문제상황을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고정간첩단의 특징은 북한이 남한출신 월북자들을 특수교육시킨 후 연고지에 침투시켜 혈연 및 지연을 이용, 친목계 등을 위장하여 지하당을 구축하거나 공무원의 합법신분을 얻어 국제기밀을 탐지하면서 소위 「결정적 시기」에 무력봉기를 획책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 가운데는 현직교사와 구청직원이 포함된 가족간첩단이 있는가 하면 제일 조총련계 실업인, 어부 등 구성원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각 소제무기를 은닉, 요인암살, 민심교란, 군기밀 수집 등의 임무를 띠고 있던 점으로 보아 북한의 대남공작수법이 얼마나 음흉하고 집요한가를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이들 일당이 북한로부터 받은 지령 가운데에는 남해일대의 해안경비상황, 경부고속도로 사정 및 군 주요부대 배치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최근의 빈발하는 무장간첩 남파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일성은 「남반부」를 적화통일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3대혁명 역량이 축적되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해 왔다.

첫째, 북한자신의 무력을 크게 증강시켜 군사적 우위를 견지함으로써 소위 「해방전」에 대비할 것. 이는 북한이 인민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면서까지 과중한 군사비를 지출, 70만 병력과 대규모 공격장비를 갖춘 것으로 이미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내부에 북한의 동조분자를 대거 부식, 상대적으로 남한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킬 것. 바로 오늘날 우리의 개방체제의 약점을 틈탄 고첩활동 및 무장간첩의 남파행위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셋째, 대외적으로 한국을 중상·모략하고 북한지지 세력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지위를 올리고 한국의 고립을 꾀하는 것. 이것이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소위 3단계전략인 것이다. 이 3단계전략에 따라 확립된 전술이 ①주력군의 전력증강 ②통일전선 형성 ③반혁명세력의 약화 등이다.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어찌 변하든 적어도 북한의 이 3단계 혁명논리는 앞으로도 김일성과 그 세습정권이 존속하는 한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대남전술만은 그때 그때 다양한 보호색을 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크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북한은 10·26사태이후 우리 내부의 사회상이 혼미해지자 그 틈을 노려 갑작스레 남북대화의 재개를 부쩍 서두르며 「대한민국」이란 국호까지 호칭하면서 「총리회담」까지 들고 나오는 등 호들갑을 피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후 우리가 과도기적 불안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도체제 아래 국정질서를 바로잡자 북한은 태도를 돌변, 그들이 주창했던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스스로 중단시키고 대남비방방송과 무장간첩의 남파 등을 획책했던 것이다.

이렇듯 표리가 부동한 그들의 언행에서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저의가 무엇이었던가를 새삼스럽게 간취하게 된다. 한 마디로 우리의 안보태세가 허술해진 틈에 편승하여 기회를 보아 찢러보려다 허점이 없어지자 다시 무력도발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안보역학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틈만 있으면 적화의 호기로 삼으려는 김일성도당에게 어떤 허점도 드러내지 않도록 국민의 대공사상무장과 안보의식을 공고히 다지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 정신무장과 안보의식이 확고부동한 동안에는 제아무리 호전적인 북한집단이라 해도 선불리 무모한 재침모험을 자행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노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했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단적인 실례가 바로 진두환대통령의 역사적인 「1·12」제의에 대해 소위 「조국평화통일 위원회」위원장 김일의 이름으로 이를 거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는 북한이 평화통일 노력대신에 종래의 무력적화노선을 계속 견지할 뜻을 명백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북한의 이와 같은 태도로 미루어 우리는 올해에 있을 양대선거를 전후해 후방에 대한 침투·교란행위가 격화될 것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둔다.

우리는 이번에 검거된 고첩단 말고도 적지 않은 조의 간첩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암약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깊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렇듯 우리의 안보국면이 심각한 때에 온 국민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 투철한 승공의지로 뭉치는 일이 더 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와 더불어 북한의 「1·12」제의 거부에 대한 우리의 대내외적 대책을 더욱 적극화시킬 것을 촉구해 둔다. 북한의 대내외적인 선동선전과 기만술책에는 우리가 철저히 제안하고 「이니셔티브」를 장악해서 밀고 나가야 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북한 「1·12」제의 거부의 저의

-그들은 제5공화국의 출범을 온갖 수단을 다해 방해하려 들고 있다-

서울신문(1981.1.21)

북한은 전두환대통령의 「1·12」 제의를 거부하고 나섰다. 남북 최고당국자간의 상호방문을 통해 평화적 통일의 대도를 열자는 전대통령의 제의이래 1주일간 계속된 침묵을 깨고 북한은 1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일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을 통해 거부의 뜻을 명백히 한 것이다.

전대통령의 제의는 참으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한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아무런 조건이나 부담없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방문하여 서로 흥금을 털어놓고 진지하게 토의하고 협상하자는 것은 대담하면서도 현실성 큰 접근인 것이다. 동서독이 결국 정상간의 교환 방문으로써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을 가져왔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역시 정상간의 교환 방문으로써 중동평화조약의 기틀을 마련한 예들에 비추어, 전대통령의 제의 역시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1·12」 제의의 성격이 이렇기에 국내외의 관심은 북한의 반응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응해서 남북 최고당국자의 교환방문이 이뤄지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완화되고 평화적 통일에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말했다. 입만 열면 「민족의 통일」을 외쳐대던 북한이 실제에 있어서는 평화적 통일에의 진전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제통일」 운운도 한낱 구두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의 이러한 이중작태에서 반증되는 것이다.

북한이 「1·12」 제의를 거부한 속셈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급의 남북대화를 갖는다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다. 또 화해나 긴장완화의 기운이 한반도에서 생성·발전하는 것은 곧바로 전쟁준비체제 또는 병영국가체제인 북한의 존립기반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1·12」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속셈을 감추려는 듯 엉뚱한 대남왜곡비방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의 국내정세에 대해 터무니없이 악랄한 중상모략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반공정권을 포기하라느니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느니 하면서 우리의 안보체계를 흔들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다.

확실히 북한은 민족의 평화통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직 「남조선의 해방」, 즉 남한의 적화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북한이 「1·12」 제의를 거부하면서 엉뚱하게 대남비방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1차적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준다.

북한의 진의가 그렇기에, 북한은 단기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의 코스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특히 양대선거를 전후해서 대남비방을 강화하여 민심을 교란시키고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고자 할 것이다.

둘째, 무장공비 또는 간첩의 남파를 강화할 것이다. 각종 악성 유언비어를 조작·과급시켜 사회 불안을 조성케 함은 물론이고, 군사적 난동의 교두보 같은 것을 마련하고자 광분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북한은 제5공화국의 순조로운 출범을 저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은 각별한 경계심으로써 대응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북한이 마음을 돌려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다시 요구하고자 한다. 민족의 유혈과 상잔을 예방하고 평화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북한이 정도를 걸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북한의 「1·12」 제의 거부

중앙일보(1981.1.21)

남북한당국의 최고지도자가 상호방문하자는 전두환대통령의 「1·12」 제의를 북한이 1주일만에 거부했다는 보도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지난 30여 년간 보아온 북한 체질과 그들의 대남전술에 익숙해진 우리로서는 「1·12」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으리라고 진작부터 예상했으며 어떤 핑계로 거부할지 그 내용의 일단까지도 짐작했던 터였다.

따라서 1주일만에 나온 그들의 거부 성명에 우리로서는 놀랄 것도 없고 섭섭해 할 필요도 없다.

명백한 것은 이 거부로 인해 북한은 다시 한번 자가당착의 모순을 내외에 드러냈다는 점과 그들의 진면목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새삼 확인시켜 줬다는 점이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언필칭 평화통일이니 자주통일이니 하는 말을 내외에 선전하고 국제적으로는 자기들이 가장 평화를 애호하는 양 선전해 왔다.

그들 말대로 평화·자주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약 70%와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대화를 한다면 대화의 내용에 책임질 수 있는 한국정부와 하는 것이 사실상 당연하고도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최고지도자간에 대화를 트자는 「1·12」 제의는 극대의 효율성과 극적인 화해실마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고도 성의를 다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다른 일체의 대화 역시 여전히 기피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선전해 온 모든 말들이 사실은 기만이요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최근 그들이 목청을 돋우어 떠들어대는 이른바 「고려민주연방제」라는 것도 그들 말대로 그렇게도 좋은 것이라면 우리측과 마주앉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서부터 실현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 현실적인 노력, 다시 말해 대화 자체를 앓는다면 그 좋다는 안 역시 떠들어대는 용도로 만들어낸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밖에 안된다.

결국 북한의 진의는 무력에 의한 공산화 통일에 있고 그 진의는 그들이 대화에 응할 때나 불응할 때나 불변인 것이다. 대화로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무력통일이 용이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대화에 응하고, 대화가 평화정착 쪽으로 가는 듯 싶으면 무슨 핑계든 대고 대화를 끊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전술이었다.

이번 「1·12」 제의를 거부한 것도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자기들이 바라는 한국사회의 분열·혼란의 효과는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한국정부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어 자기들의 무력통일전략과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한 자세로 본다면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군사력경쟁과 외교경쟁이란 양면밖에 없다. 북한이 이제 「1·12」 제의를 거부한 이상 우리로서는 두 경쟁에서 단연코 그들을 압도할 노력을 강화하는게 순서다. 방위력을 증강하고 북한선전의 허구성을 온 국민이 다 잘 알게 하여 정신무장을 튼튼히 해야 한다. 특히 그들의 이번 거부는 외교경쟁에서 우리를 매우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들의 통일방안이나 평화지향적 「제스처」가 실은 선전용의 눈가림에 불과함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대화는 앓겠다면서 평화는 지향한다는 북한의 자가모순을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해 줄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들이 구구하게 늘어놓은 거부이유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 부당성과 허구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의 한편으로 정부는 북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대내외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힘을 쏟아 통일문제의 「이니셔티브」를 견지해 나가길 당부코자 한다.

북한의 「1·12」 제의 거부

조선일보(1981.1.21)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란 단체의 위원장 김일의 이름으로 전두환대통령이 제시한 「1·12」 제의를 거부했다 한다. 거부의 구실로 북한은 특정형사피고인의 석방과 우리측의 반공정책 포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했다하며 이른바 연공적인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

북한 권력층의 일관된 속성으로 보나 「1·12」 제의의 우리측 기선에 비추어 저들이 이를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거부할 것이란 예상은 이미 전혀 못했던 바는 아니다. 그러나 막상 북한이 이를 당치도 앓은 역설을 붙여가며 외면하고 나오니 새삼 격분과 경멸을 금할 수가 없다. 더우기 그 구실이라는 것들이 우리 내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대한민국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로 일관돼 있음을 볼 때, 이런 상대방을 두고 과연 대화를 더이상 추구해야 옳은지 어떨지조차 가늠하기가 어려운 심정이다.

우리측 내부의 특정 형사피고인에 대한 법적 처리여하가 남북대화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정 그렇다면 북한도 그들의 교화소 안에 갇혀 있는 수많은 구금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옳을 것이 아닌가. 대화의 전제로 우리측에게 반공정책을 포기하라고 했다지만 그런 논리라면 북한도 먼저 자기들의 반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해야만 옳은 일이다.

6·23선언을 포기하라 한 것도 자기들의 공존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고, 주한미군 역시 6·25와 계속되는 남침기도가 없었다면 아예 여기와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1·12」 제의 거부논리는 완전한 궤변이요 역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비록 거부는 했으나 「1·12」 제의의 역사적인 의의와 창조적인 의미는 살아 있으며, 그것이 이룩한 전향적인 성과도 다대한 바가 있다.

우선 북한은 이번의 제의를 고비로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과거의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김일성이 보고 직접 서울을 방문해보라고 선언한 것은 저들을 일순간 말문이 막혀버리게 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쪽의 국가원수가 직접 마이크를 통해 저쪽의 최고책임자에게 「오라」고 초청했으니, 그 이상 더 어떻게 평화와 대화를 논할 것인가. 이 기선을 제한 최상급 문호개방에 북한과 김일성은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몰리게 되었다. 위장된 평화공세의 탈을 벗고 적화혁명의 본심을 만천하에 공연화하든지, 아니면 좋은 싫든 평화공존을 향한 노선전환을 시행하든지의 양자택일인 것이다.

북한 본연의 일관된 본심은 물론 전자의 길이다. 그러나 그것을 공연화하여 자인한다는 것은 이쪽이나 세계에 대해 「반 대화」라는 책을 잡히는 정치적 손실이 있다. 그렇다고 후자의 길을 택하기에는 북한은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세습독재 권력의 내부적 강화에도 위협부담을 안겨준다.

결국 일주일간의 긴 고심과 구수회의 끝에 북한은 「자신없는 개방」보다 「파렴치한 수세」를 택한 셈이다. 사상 최악의 공산절대권력 북한으로서는 의당 취할 수 밖에 없는 궁색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 「파렴치한 수세」를 택한 탓으로 북한은 혹시 협소한 세습독재의 아성을 일시적으로 고수했는지는 몰라도 민족과 세계에 대해 최후의 거역의 단언을 해버린 셈이 되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그 거역의 종언이 결박하는 구속력으로부터 북한은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한번의 시도가 끝났다하여 인내를 포기하거나 실망함이 없이 「1·12」 제의가 제기한 남북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헌신적인 통일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내외에 선양해야 하리라 믿는다.

통일염원을 정면유린

-북한의 「1·12」 거부와 민족적 죄악-

한국일보(1981.1.21)

북한은 19일,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에 관한 전두환대통령의 역사적인 「1·12」 제의를 정면거부하고 나섰다.

북한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남북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던 바이다. 역사적인 「7·4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그후 그들의 남북총리회담 실현을 위한 실무 접촉을 비롯하여, 남북조절위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 부위원장회의,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등 모든 형태의 남북대화를 갖가지 구실을 붙여 일방적으로 중단해 왔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화거부에 이어 북한이 이번에 또다시 획기적인 「1·12」 제의마저 거부하고 나선 것은 그들이 대화의 의사가 전무하며 오직 반평화·무력적화통일야욕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실증한 것이다. 이는 또한 그들이 진정한 평화통일방안이라며 내세우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그들의 무력적 야욕을 은폐하고 국내외의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적 선전계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세계에 드러낸 결과가 된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1·12」 제의에 대한 북한측의 거부를 통해 그들의 무력적화야욕을 재확인하고 그들의 기만성을 전세계에 또다시 노출케 한 것으로 자족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의 소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일(당부주석)의 이름으로 발표된 「1·12」 제의 거부성명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6천만 민족전체의 가슴에 또 한번 좌절감을 안겨주는 반민족적 처사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지난 12일 전두환 대통령의 역사적인 「1·12」 제의 이래 3천 8백만 대한민국의 국민은 물론, 북한의 주민들도 한결같이 김일성집단이 「1·12」 제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대화가 재개되고 평화통일로의 활로가 트이기를 가슴죄며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공산집단은 우리 민족의 이러한 기대에 응답해 주기는커녕 터무니없는 비난과 상투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함으로써 민족성원전체의 부푼 가슴에 실망만을 안겨다 주었다.

전두환대통령의 「1·12」 제의는 어느 면에서 보나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제의였다. 통일이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인정하는 한 대화의 재개는 지상 명령이다. 대화의 재개와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상호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리의 초보적 상식인 것이다. 또한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의 실효를 거두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국가 원수의 정상회담 이상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널리 입증되고 있는 터이다.

그간 전두환 대통령의 「1·12」 제의가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호응을 받아 온 것은 바로 그 제의의 논리적·현실적 타당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금번 성명을 통해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이 먼저 △김대중을 석방할 것 △반공정책을 포기하고 6·23선언을 철회할 것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등 다섯 가지 억지주장을 하는 한편 「분열을 추구하지 않고 반공을 추구하지 않는 남조선 사람과는 마주앉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음흉한 낚두리를 늘어놓았다. 한 마디로 말해 대한민국의 전복을 피하는 자와만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소위 「고려민주연방제」 안에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한간에도 연방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으로서 그들의 속셈을 너무나 명백히 나타낸 대목이라 하겠다.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북한은 「고려연방제」안을 진정한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으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제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선전계략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다.

사실 북한은 오는 2월 4일 뉴델리에서 열리는 비동맹회의에 초점을 맞추어 「고려연방제」안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려는 위장평화공세를 획책하고 있다. 지난 「1·12」 제의는 북한의 이러한 기만적 선전계략에 커다란 타격이었으며, 이번 거부성명으로 인해 그들은 국제적으로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1·12」 제의는 남북한중 진정한 평화애호 세력이 누구인가를 만천하에 밝히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한 한 우리 정부가 계속 주도권을 갖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거부를 계기로 2월의 비동맹회의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한 허구성을 폭로하고, 그들이 발붙일 여지가 없도록 외교와 홍보활동에 더욱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북한이 무력적화야욕을 포기하고 대화에 응해오도록 하는 현실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비동맹제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이 더이상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현혹되지 말고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1·12」 제의에 호응해 오도록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해 마지않는다. 그것만이 진정한 평화애호국의 취할 태도일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대화 제26호

(1981. 3 ~ 1981. 7)

< 목 차 >

제1부 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적 합의 기반구축	3
1. 「6. 5」 대북제의	3
2.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발족	10
제2부 「6·5」 대북제외에 대한 국내외 반응	12
1. 국 내 반 응	13
2. 해 외 반 응	22
3. 북한의 「6·5」 대남제의거부의 저의	25
제3부 「아세안」이 공감한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	27
1. 「아세안」 정상들, 한국의 평화통일노력 지지	27
2. 평화통일예의 강렬한 의지	31
제4부 남북관계 소식	33
1. 「남북한 체육교류 및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 제의	33
2. 남북조절위 서울측 성명발표	36

제1부 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적 합의 기반구축

1. 「6·5」대북제의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6월 5일 제1차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개최사를 통하여 북한측에 대해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하였다.

이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1년 1월 12일 새해 국정연설을 통하여 북한측에 대해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을 제의한 「1·12제의」를 발전시켜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조국의 평화통일에 관한 실천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제5공화국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남북의 6천만 겨레의 주체적 노력에 의해서 꼭 이룩되어야 할 과제임을 규정하고, 「1·12제의」와 「6·5제의」를 통하여 민족전체의 자유의사와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통일의 대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6·5제의」는 「1·12제의」의 단순한 부연에 끝나지 않고 김일성에게 회담의 시기와 장소의 선택권을 일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에의 접근을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며, 아울러 분단된 민족의 통일염원이 결코 무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과 만일 전쟁이 재발되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파괴와 폐허만이 남는 민족자멸의 상태를 초래할 뿐이라는 현실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측의 긍정적 호응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1·12제의」가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안이었다면 「6·5제의」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김일성과 직접 회담을 갖고 상호방문 문제를 비롯 그동안 남북한당국이 제의했던 모든 통일방안을 포함하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것을 제의하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희망을 함께 밝혔다.

또한 「6·5제의」에서는 「당국자회담」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의 결정권자인 온 겨레의 시야앞에 「남북한사회」의 전면적인 상호개방을 촉구함으로써, 북한측의 기본노선인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포기하도록 촉구하고 상호 민족적 신뢰를 조성하여 1980년대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6·5제의」는 「1·12제의」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상호교환방문을 제외하고는 「1·12제의」에서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용이한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쌍방이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고 함으로써 의제마저도 완전히 개방한 것은 남북한간의 상호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된 통일논의로부터 탈피하여 긍정적·적극적으로 통일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며 이것은 한때 실천의지가 없는 원칙문제 논란으로 남북관계가 조금도 개선됨이 없이 서로 책임전가를 위한 성명전과 일방적인 선전적 제의의 남발로 일관해온 과거의 남북대화유형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제의인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6·5제의」를 통해서 통일의 주체가 민족전체이며, 통일은 전민족의 영욕과

성쇠가 걸린 중대사임을 분명히 하면서 통일이 특정정당, 특정체제, 특정사상, 그리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국민이 선입관을 버리고 서로 남북한을 방문하여 양쪽의 체제와 실상 등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체득한 뒤에 통일된 조국의 체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6·5제의」 가운데 또한 중요한 점은 북한측이 즉각적인 사회의 완전개방을 할 수 없을 경우, 경제, 문화, 학문, 우편, 체육교류 부터라도 시작해서 차차 완전교류, 완전개방을 이루는 단계적 방법을 제시하여 북한측으로 하여금 선택의 융통성을 갖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과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한국을 대표하는 인사와 이번 제의를 긍정적으로 협의해 주기를 희망하며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임을 밝혀 우리의 통일노력을 폭넓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점들이 다.

이와 같이 「6·5제의」는 한국이 북한측과 조건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다는 성실한 자세의 표현이며 국민들의 통일염원과 자신감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6·5제의」는 새로운 남북접촉의 계기를 열고 통일에 대한 획기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한 만큼 북한측이 이 「6·5제의」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위장평화공세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세계앞에 알몸으로 드러내어 놓음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6·5제의」의 참뜻을 되새겨 민족사앞에 겸허한 자세를 취하기를 당부하고, 하루속히 「6·5제의」에서 밝혀진 우리겨레의 통일의지를 받아들여 대화의 광장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전두환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회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회사

친애하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6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의지와 염원을 받들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수행을 명령받은 본인은 오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발족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기구가 평화통일 노력의 구심점(求心點)이 될 것을 8천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온 겨레의 여망과 기대 속에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지금은 우리 조국이 남북으로 갈린지 만 36년이 되는 해입니다.

8·15광복으로 식민통치의 고통은 끝났으나, 우리는 곧이어 생이별과 상잔(相殘)의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숱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장구한 세월, 통일독립국가로서의 민족사(民族史)를 연면히 이어왔습니다. 특히 북방대륙과 남방해양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외침(外侵)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단일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동질성을 소중하게 보전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전통은 20세기에 접어들어 두 차례의 비극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한반도에 「통일국가」를 건설하고 이를 지켜 왔으나 금세기(今世紀)전반에는 「국가」를 상실했었고 후반에는 「통일」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권상실(國權喪失)과 국토분단의 양대 비극 가운데서 아직도 후자의 비극, 즉 분단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단의 고통기간은 올해로써 국권상실 36년의 고통기간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분단의 고통은 민족전체에 대한 고문(拷問)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같은 고통과 신음에서 온 겨레를 하루속히 헤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남북을 막론하고 오늘을 사는 세대의 민족사적 지상과제(至上課題)입니다.

조국강토의 절반을 뺏히려 가꾸어 오늘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우리는 북쪽의 동포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토를 남북으로 달리는 경부고속도로가 평양·신의주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것은 애타는 우리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같은 우리의 소망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고속도로는 커녕 기왕에 있었던 철길마저 끊겨 그 잔해(殘骸)위에 잡초만이 우거져 있습니다.

더욱이 모처럼만에 뚫렸던 대화의 길마저 단절되어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에게 단장(斷腸)의 비애(悲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남북은 이대로 남남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이던 우리는 둘로 갈라져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핏줄과 우리의 긍지와 우리의 역사는 결코 영구한 분단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분단은 우리 겨레의 의사(意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戰後) 처리과정에서 파생된 민족외부의 의사에 의한 것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책임이 민족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분단으로 고통받고 손해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며 통일로 영광과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통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인 것입니다. 통일의 주체는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민족 전체입니다. 그리고 통일의 이념은 남의 사상이 아닌 바로 우리 혈관속의 민족혼(民族魂)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통일방법을 가지고 긴 세월을 허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족통일의 주체는 바로 민족전체라는 명제(命題)가 명백한 이상, 통일의 길은 자명(自明)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민족전체의 자유의사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력(武力)에 의한 결정은 유혈전쟁(流血戰爭)을 뜻하는 것으로서 민족이 원하는 길도, 민족을 위하는 길도 아닌 민족자멸(民族自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북쪽에는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는 집단이 엄존(嚴存)해 있습니다. 거래가 염원하는 통일이 결코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무력적화통일의 꿈이 포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꿈은 문명인의 이성(理性)에 반하는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도 가망이 없는 헛된 생각입니다.

전쟁은 파괴와 폐허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6·25 민족상잔(民族相殘)에서 몸서리나는 전쟁의 비극을 이미 겪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이같은 전쟁을 겪게되면 휴전 후 30년간 파괴와 폐허를 딛고 일어난 창조와 건설과 발전은 남북한 어디를 막론하고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동족간의 전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방지를 위하여 전쟁도발의 원인이 되는 편견(偏見)과 독선(獨善), 그리고 불신(不信)과 오판(誤判)은 제거되어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무력적화통일론자(武力赤化統一論者)들에게 바로 이같은 민족적 요구를 똑바로 인식하여 전쟁의 망상에서 깨어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편견과 독선과 불신과 오판의 제거는 상대방의 진의(眞意)와 실상(實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부터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본인은 바로 이와 같은 확신에서 지난 1월 12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제의야말로 조국통일의 길을 여는 돌파구라고 나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제의가 있는 후 국내외에서 폭넓게 표명(表明)되고 있는 지지와 성원은 본인의 그와 같은 신념을 더욱

곧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아직도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일성주석에게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로를 방문하도록 초청한 지난 1월 12일자 제의의 수락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북쪽에서 먼저 서울에 와도 좋고 본인이 먼저 평양에 가도 좋으며, 그 선후(先後)의 선택은 북한당국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본인의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의의 취지를 발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새로운 제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만약 북한측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본인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본인을 북한으로 초청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대신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다른 어떤 장소에서든지 직접 만나기란없이 의견을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관문점이나 제3국을 포함하여 만나는 장소의 선택은 북한당국에 일임(一任)합니다.

만일 이같은 최고책임자 회담이 실현된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본인이 제의한 상호방문 문제와 그 동안 남북한당국이 제의했던 통일방안을 포함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기를 본인은 희망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만나는 시기도 북한 당국에 일임합니다. 그러나 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당국과의 대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국을 대표하는 인사(人士)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협의해 주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권위있는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6천만 동포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통일의 주체는 민족전체, 즉 우리들입니다. 통일은 민족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정당·특정체제·특정사상만의 전유물(專有物)일 수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최고책임자 회담은 민족전체의 통일의를 연결하는 계기(契機)이자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온 겨레가 강렬한 통일의를 정립하고 이 의지가 회담장(會談場)을 통해 진정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스러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6천만 동포 여러분들이 통일추진의 주역(主役)이며, 통일조국의 주인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통일을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통일조국의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민족성원(民族成員) 전체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충실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현상과 체제를 관찰·검토하고 분석·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온 겨레에게 주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옛말에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이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겨레의 영욕(榮辱)과 성쇠(盛衰)가 걸린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남북한의 실상을 단 한번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합리한 일입니다. 단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목격하면 할수록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본인은 통일문제의 결정권자인 겨레의 시야(視野) 앞에 남북한당국이 서로 그 사회를 겸허하게 개방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만일 북한측이 사회의 완전개방을 당장에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우선 체육, 문화, 학문, 우편, 경제교류부터라도 시작해서 차차 완전교류·완전개방으로 접근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겨레의 안목(眼目)을 넓혀주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한 사회의 상호개방은 단절됐던 동족간의 상호신뢰와 동포애를 북돋움으로써 겨레를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하고 융화(融和)의 광장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사에 국권상실(國權喪失)과 국토분단의 기나긴 밤을 안겨준 20세기도 이제 2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민족적 일대비극이 이 세기(世紀)를 넘어 또 한 세기(世紀)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는 6천만 겨레의 민족혼(民族魂)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세기의 비극을 20세기가 가기전에 말끔히 청산하고 민족웅비(民族雄飛)의 새 날을 설게하게 될 때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의 위대한 승리로 민족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한민족(韓民族) 전체의 위대한 승리로서 세계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승리의 그날을 앞당겨 성취하는데 있어서 자문위원 여러분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견인(牽引)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81년 6월 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전두환

2.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발족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제5공화국 헌법 제68조에 따라 구성된 헌법기관으로써, 이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6천만 전민족의 한결같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를 총망라해서 통일주도세력으로 집결시킨 초당적, 범국민적인 기구이다.

즉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국민적 통일의지를 바탕으로 전진적인 조국통일의 미래상과 합리적인 통일정책을 창출하는 전위대이며, 앞으로 남북대화의 재개에서부터 민족의 재결합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주도해 갈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구는 초당적, 범국민적 기반위에서 통일의 주도세력을 형성한다는 민족사적 의의를 지니며,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이념 및 우리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의 구현을 위한 범국민적 대변기관이 된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은 전국 각 지역의 대표, 각 정당 및 주요사회단체와 직능단체의 지도급인사, 이북 5도 및 해외동포의 대표등 각계인사로 구성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게 된다.

또한 이 기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의 확인,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평화통일에 필요한 제반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1981. 6. 5)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전두환대통령의 「6·5대북제의」가 제안되었으며 「통일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는 바, 결의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결의문

통일은 6천만 민족 전체의 염원이며,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당위(當爲)이다. 우리 민족이 하나의 국가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오랜 국가를 영위하여 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며 순리(順理)임을 재확인한다. 오늘의 민족분단을 극복하여 통일되고 번영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요 보람이다.

또한 우리는 조국의 통일이 우리 뿐 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공익과 세계사의 진운(進運)에 기여하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족분단 이후 우리가 기울여 온 갖가지 통일노력은 서로간의 불신으로 그동안 이렇다 할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세대에 해당하는 분단의 기간이 흘러가고 새로운 역사의 장(章)을 여는 1980년대의 문턱에 서서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하려 한다.

이제 우리는 통일에 대한 민족의 굳은 의지와 염원의 표현으로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를 발족 시킴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一. 우리의 민족통일은 민족 성원(成員) 개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민주질서와 주

체성의 바탕위에서 민족의 대화합(大和合)과 복지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 一. 우리의 민족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적 방법으로 이룩되어야 하며, 민족의 총의(總意)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 一. 우리의 민족통일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일체의 폭력적 수단은 배제되어야 한다.
- 一. 우리의 민족통일은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호혜(互惠)와 선린(善隣)을 바탕으로 국제적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 一. 우리의 민족통일은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 당국은 전두환대통령각하의 1·12제의와 6월 5일 남북최고책임자간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1981년 6월 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 일동

제2부 「6·5」 대북제의에 대한 국내외 반응

전두환대통령은 1981년 6월 5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발족식전에서 개회사를 통해 북한측에 「1·12제의」의 수락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한편, 『북한측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본인의 초청을 받아 들일 수 없고, 또 본인을 북한으로 초청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대신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가 다른 어떤 장소에서든지 직접 만나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자』고 새로운 제의를 함과 아울러 『판문점이나 제3국을 포함하여 만나는 장소의 선택』은 물론, 『만나는 시기도 북한당국에 일임한다』고 언명했다.

전두환대통령은 또한 『통일문제의 결정권자인 겨레의 시야앞에 남북한당국은 서로 그 사회를 겹쳐하게 개방해야 한다』고 제창하면서 이를 위해 『우선 체육, 문화, 학문, 우편, 경제교류부터라도 시작해서 차차 완전교류, 완전개방으로 접근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두환대통령의 새 제의는

첫째, 지난 36년 동안 분단의 고통속에 평화통일을 회구해 온 민족의 염원을 직시하고,

둘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동족간의 비극적인 전쟁재발을 막아야 하겠으며

셋째,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통일접근방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뚜렷이 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력의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통일노력과 대북자신감을 과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6·5」 대북제의를 환영, 지지하는 국내외 반응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 내 반 응

언제 어디서라도 만나자

—전대통령의 역사적 대북평화제의—

서울신문(1981. 6. 6)

전두환대통령의 6·5 대북제의는 남북대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제의로 기록될 것이다. 장소와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즉 관문점에서든지 제3국에서든지 북한이 원하는 어느 곳에서나 가급적 빠른 시기에 남북한의 최고당국자가 만나 남북한간의 모든 제의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전대통령의 제의는 가위 역사적이라고 할 것이다.

세계의 크고 작은 협상가를 모두 살펴 보아도 이같은 파격적인 제의는 그 전례가 없을 것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여건에 따라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자는 제의란 확실히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하겠다.

돌이켜 보면 북한은 자신의 대남제의에 언제나 선행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재개 또는 진전을 사실상 방해해 왔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다음에야 회담에 응할 수 있다느니, 남북이 「연공」 정책을 채택할 때에야 본질토의에 들어갈 수 있다느니 상투적인 선행조건들을 제시함으로써, 남북대화 그 자체를 그 전초단계에서 맴돌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이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기본적 전략이다. 북한은 남북대화의 진전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만 한반도에서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따라서 남북한간에 긴장이 없는 듯한 「평화의 허상」을 국제적으로 보여 주고, 그를 명분삼아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대화의 외양은 유지하면서 실질적 진전을 막으려는 속셈이 상대방이 수락하기 어려운 선행조건들의 설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북한의 대화행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대통령은 소절에 매이지 않고 『어떠한 제의라도 모두 진지하게 듣고 논의할 용의가 있으니 우선 만나고 보자』는 대범한 제의를 던진 것이다. 이것은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장형정책(빅 브러더 폴리시)의 일환으로서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신감의 표명이기도 한 것이다. 아무런 조건없이 더 나아가 북한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남북한의 최고당국자가 만나서, 민족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는 것만큼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자세가 어디 있겠는가.

전대통령의 6·5제의의 또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남북한 사회의 상호 완전개방」 제의이다. 분단이 30여년을 경과하면서 남북간의 이질성은 심화되어 가고 불신감은 쌓여만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의 해소작업은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이질성의 극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 노력의 첫 단계가 바로 남북한 사회의 상호 완전개방이라고 하겠다.

우선 남북한이 상대방을 서로 방문하고 상대방의 진상과 현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민족의 재결합을 향해 한걸음 두 걸음 착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폐쇄사회인 북한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점을 감안하여 전대통령은 북한이 현단계에서 완전개방 제의에 응할 수 없다면 우선 문화·학문등의 분야에서부터 상호교류에 들어 갈 것을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자는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입장을 전대통령은 보이고 있다.

전대통령은 북한이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채널을 활용해도 좋다고까지 말하였다. 북한에 그만큼 많은 선택지를 준 것이다.

북한은 민족적 양심에 돌아가서 전대통령의 획기적인 6·5제의에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구두선처럼 되뇌는 민족의 평화통일에 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 최고책임자 회담의 시기, 장소 조속결정하라

—1·12제의를 수락을 재촉하면서—

(경향신문 1981. 6. 5)

전두환대통령이 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서 밝힌 대북제의는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민족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불굴의 의지와 결의를 또 한번 천명한 것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즉 남북최고책임자회담의 장소와 시기를 판문점이나 제3국을 포함하여 북한당국의 선택에 일임한다는 점과, 남북한 사회의 상호개방을 제의한 점이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끈다.

전대통령은 제5공화국의 출범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해 역사적인 1·12제의를 한 바 있다. 이 제의는 남북상호간에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여 또 다른 동족상잔의 비극을 예방하고 교착된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었다. 요컨대 통일접근노력은 허구적인 제의와 미사여구의 되풀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번의 남북사회개방제의와 최고책임자회담장소·시기의 북한임의선택제의는 1·12제의를 보다 진전시킨 것으로 통일되고 번영된 민족국가건설을 실천하려는 전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단계 높인 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이같은 제의가 앞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한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발족과 더불어 천명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것이다.

일제의 식민통치기간과 맞먹는 분단 36년은 실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 큰 고통이자 시련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동족상잔이라는 처참한 비극을 겪었고 이로 인해 1천만의 이산가족이 통한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같은 긴 분단의 장막속에 남북간의 이질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당국은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과 문화·역사를 말살하고 유물사관에 맞추어 이를 왜곡·

날조하고 있다. 말로는 자주니 평화니 민족대단결이라고 하면서도 분열과 투쟁을 공공연한 교리로 내세우고 평화와 질서대신 폭력과 혁명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족통일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우리는 1970년대 이후 통일3대 원칙을 고수해 왔다. 첫째, 전쟁의 공포로부터 남북겨레를 해방시키기 위해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원칙이며, 둘째, 남북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자는 원칙, 셋째, 민족성원의 다수 의사에 따라 민주적 방식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원칙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실천 가능한 현실적 제의가 북한당국의 혁명논리와 적화전략에 의해 거부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북대치의 현실속에 평화통일 접근과 민족화해의 집념을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의 주장과 대내외 공세가 아무리 위선적이고 반민족적이라 하더라도 상호 불신과 긴장의 제거로 공존을 위한 노력을 끈기있게 다지고 이어나가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대통령의 또 하나의 제의는 민족적 양심과 민족사의 정통성에 입각한 남북관계발전의 새로운 출발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우리의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제의에 어떤 형식으로든 구체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만약 새로 제의한 남북최고책임자회담장소나 남북사회의 상호개방을 북한측이 궁색한 조건을 달아 역이용하려 한다면 전면 거부하면 그것은 스스로 묘혈을 파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북한당국이 진실로 남북간에 현존하는 사상과 체제를 인정한다면 최고책임자 대좌를 더 이상 지연시킬 이유가 없으며 가능한 교류를 마다할 까닭이 없다.

지금까지 북한당국의 폐쇄적인 자세로 보아 남북교류와 개방정책의 실현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더라도 우선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만날 수가 있다면 이는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전쟁이란 참화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를 바탕으로 인적·경제적 교류가 실시되면 남북간의 긴장은 차츰 풀릴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민족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과 실적을 쌓아 갈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사실 이념과 체질이 다른 두 사회가 갖가지 이질적 요소를 극복하고 공존과 나아가 통일을 달성하려면 우선 불신을 제거하고 오해를 푸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한다.

전대통령이 남북한 사회를 겸허하게 개방하고 실현가능한 체육·문화·학문·우편·경제교류부터 개시하자고 제의한 것은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된다.

북한측이 6천만 겨레의 염원인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민족통합을 진실로 바란다면 우리의 평화제의를 즉각 받아들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북한은 반대할 명분없다.

중앙일보(1981. 6. 6)

전두환대통령은 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서 「1·12제의」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전진적으로 발전시킨 또 하나의 획기적 대북한 제의를 했다. 남북최고책임자회담의 장소와 시기를 북한당국의 선택에 일임하고 남북한 사회의 전면적인 상호방문도 처음으로 제창했다.

특히 남북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고 최고책임자회담의 의제를 완전 개방한 것이 회담을 실현시켜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지금까지의 남북대화를 보면 북한의 대남제의에는 언제나 선행조건이 붙어 사실상 대화의 진전을 방해해 왔다.

더욱이 우리측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제의가 나오면 비상식적인 억지로만 대응하면서 그들의 유·불리에 따라 혹은 대화하고 혹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는 작태를 서슴치 않았다.

남북대화에 임하는 그들의 전략은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듯이 위장해 한반도에는 긴장이 없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줌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진시키고자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북한의 자세가 이처럼 완미하다 해서 약화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남북대화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 평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은 6천만 겨레의 비원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든 김일성과 만나 어떤 문제건 토의하자고 밝힌 전대통령의 「6·5제의」는 지금까지 핵심의 변두리만을 맴돌았던 통일논의를 극복, 가장 효과적이며 생산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 하자는 진지하고 대담한 자세다.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정상외교는 가장 중요한 외교방식이 되고 있다.

사다트대통령의 이스라엘방문과 베긴수상의 이집트답방이 적대적 양국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킨 것을 본다면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직접 만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실무자들의 접촉이란 잦으면 잦을수록 감정대립만 첨예화시켰을 뿐 문제의 본질적 접근에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그동안의 남북대화는 잘 말해 주고 있다.

이제 선택은 단한가지 뿐이다. 『어떤 의제라도 모두 진지하게 듣고 논의할 용의가 있으니 우선 만나고 보자』고 한 전대통령의 제의를 김일성이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이 구두선

처럼 되뇌는 것같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면 최고책임자간의 대화를 마다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6·5제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남북사회의 완전개방제이다.

30여년의 분단으로 남북간의 이질성은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불신감만 쌓여가고 있다. 남북한의 재결합이 늦어질수록 단일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은 점차 약화될 것은 뻔하고 무력충돌의 위험성만 증대될 것이다.

사회개방이란 말하자면 남북교류를 통한 동질화 작업의 전주이며 이 길만이 동족상잔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30여년간 구축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체제를 개방하는데는 상당한 저항요인을 안고 있다. 특히 공산봉건체제로 외부와 단절된 폐쇄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김일성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에 전대통령은 현단계에서의 완전개방이 어려우면 우선 문화·학술분야에서의 상호교류부터 하자고 제의했다. 단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자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이번 제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통일의 주체를 어느 계층이나 위정자도 아닌 6천만 겨레라고 규정한 점이다. 이데올로기적인 적의가 내포된 것도 아니고 대의명분을 내세워 상대방을 곤란케 하자는 것도 아니라 통일을 열망하는 민족의 입장을 대신한 제안인 것이다.

북한당국이 일말의 민족적 양심이 있다면 전대통령의 획기적인 「6·5제의」에 이번야말로 긍정적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제의마저 거부한다면 그들의 위장평화공세의 허구성과 기만성이 여지없이 드러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평화통일로의 접근을

-6·5제의의 수락을 기대하면서-

조선일보(1981.6.6)

1

어제, 즉 6월 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전국 및 해외 8천 9백여명의 자문위원과 내외의 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발족했다.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는 제5공화국 헌법기관으로서 초당적, 범국민적 토대위에 조국 통일의 지도세력을 형성하여 정부의 통일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참여할 막중한 임무를 띤 기구이다. 분단된 국토를 통일하여 분열된 민족을 재통합해야 하는 역사적 목표는 정부나 어느 정당이나 그 어떤 탁월한 개인의 힘만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새 헌법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라는 기관의 설치 규정을 두고 통일을 염원하는 전국

민의 역량을 여기로 집결하기로 했던 것이다. 통일문제는 말하기는 쉬워도 그 안에 복잡한 문제들을 허다하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칫하면 정당과 정당, 단체와 단체, 개인과 개인 사이에 견해가 갈라지기 쉽고, 그 결과로 국론이 분열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새 헌법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하여 각계 각층, 각 개인의 의견을 집약하고 지혜를 모아 평화통일의 최상의 방향과 방법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존재는 큰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책임은 실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릴 때 동회의의 의장인 전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에 관하여 일련의 견해와 포부를 피력했다. 그 중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통일은 무력적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함을 명백하게 천명한 점이다. 그리고 무력에 의한 통일이란 곧 유혈전쟁을 뜻하며 이것은 필경 「민족자멸의 길」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지적했다.

2

이러한 인식 위에서 전대통령은 전쟁방지를 위하여 전쟁도발의 원인이 되는 편견과 독선, 불신과 오관이 제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직접 만날 것을 새로 제의했다. 만나는 장소로서는 판문점이나 제3국을 포함하여 어디든 좋으니 북한당국에 일임한다는 것과, 만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북한당국에 일임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그와 같은 남북한최고책임자의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전대통령이 지난 1월 12일에 제의한 상호방문 문제와 그간에 남북한당국이 제의했던 통일방안을 비롯하여 쌍방이 제기해온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을 희망한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다.

이번의 이러한 제의는 남북한최고책임자는 아무런 부담이나 조건없이 서로를 방문하도록 김일성을 초청한 전대통령의 1·12제의를 대해 북한측이 하등의 긍정적 반응도 표시하지 않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6·5제의로써 1·12제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전대통령은 1·12제이의 수락을 김일성에게 재삼 촉구하면서, 만약 북한측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1·12제이에서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라면 판문점이나 제3국 어느 곳에서든지 만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6·5제이는 1·12제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대통령은 통일의 구체적 방법과 통일조국의 체제를 민족의 각성원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려면 남-북의 현상과 체제를 서로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은 각각 그 사회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측이 당장 사회의 완전개방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우선 체육, 문화, 학문, 우편, 경제교류부터라도 시작하고 점차로 완전교류-완전개방으로 접근해갈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북한당국에 전했다.

3

전대통령의 6·5제이는 요컨대 ①1·12제이 수락 촉구 ②그 단계적 실현의 방법으로서의 김일성과의 판문점(또는 제3국)회담 ③남북한의 완전개방의 전제로서의 부분적 교류제안으로 압축된

다. 1·12제의를 아직도 수락하지 않고 있는 북한당국이 그러면 6·5제의만은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아닌지 누구도 그 결론을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전대통령의 6·5제의를 그들이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응당 수락해야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수락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나지도 않고서는 통일문제를 결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평화통일의 전제가 되는 상호신뢰와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없다. 북한당국이 평화통일의 선전문을 세계에 살포하기에 바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판에 박힌 냉전형 평화공세요, 전쟁을 끝까지 피하고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여 통일문제에 화해의 정신으로 접근한다는 평화정책이 아니다. 상호방문도 안되고, 만나지도 않고, 교류도 못하겠다면 남은 길은 전쟁밖에 없다.

미국 소련 중공의 3대 핵거국이 각각 동맹조약으로 남-북에 개입되어 있고 남-북의 병력이 백만이 넘는 조건에서 이 좁은 땅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결과는 순식간에 남-북의 도시와 공장과 시설들을 잿더미로 만들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온 민족을 공동멸망으로 끌고갈 가능성은 너무나 큰 것이다. 6·25식 남침전쟁으로 남한을 병탄하여 공산독재하에 행여나 통일할 수 있거나 않을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세상을 모르는 치자의 백일몽이다. 이성이 있다면 전쟁을 아예 단념하고 모든 쟁점을 하나하나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다고 아무리 대남유격전을 시도하고 내부혼란을 선동하고 국제적 고립화를 획책해 보아도 그런 것으로는 그 무슨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란 것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다. 그러므로 통일의 가능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단하나 평화통일의 길 뿐이다. 그리고 평화통일의 길은 평화적 방법으로 밖에는 찾을 수가 없다.

공산주의에서도 시대와 조건의 변화에 따라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동맥경화증에 걸린 북한형 교조주의적 방법은 이 나라에서는 영원히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6·5제의를 수락할 북한측은 불안하게 생각하거나 겁낼 이유가 없다. 깊이 고려하여 긍정적 대답이 오기를 남북 모두를 위해 기대코자 한다.

「6·5제 의」 8일

- 「모든 문제 토의」와 민족·민주를 생각한다-

동아일보(1981.6.13)

전두환대통령의 「6·5제 의」가 있는지 8일이 지났다. 남북간 「상호방문」 「상호개방」뿐 아니라 그밖의 어떤 것이든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자는 새로운 대목을 담은 「6·5제 의」는 획기적이며 진취적인 제안으로서 우리는 이에 대한 북한 김일성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김은 아직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만 북한의 관영매스컴들을 통해

「6·5제의」를 헐뜯고 있다 함은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6·5제의」가 나온지 5일만인 지난 10일 북한은 「로동신문」과 방송들을 동원, 「통일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다른 목적을 노리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몰아붙이고 말았다. 그동안 북한이 고 박정희대통령의 남북한당국자간 회담제의를 영똥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라는 선전단체를 내세워 곁돌게 한 바 있으며 남북한총리회담을 그들이 제의해 놓고도 준비회담을 일방적으로 보이콧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김일성과 아무런 조건없이 만나자고 한 「1·12제의」와 그 뒤 5개월만인 지난 6월 5일 전대통령이 김과 마주앉을 것을 거듭 촉구한 「6·5제의」는 북한이 상투적으로 비방만하고 외면키 어려운 대목을 담고 있다는데 김자신도 유의하였을 줄로 짐작한다. 그동안 남북한 당국이 제의했던 통일방안을 포함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자는 대목이 그것이다.

남북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양측이 각각 내놓았던 주장과 제안중 특정한 어떤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과 제안들 속에는 우선 서울측에서 제기했던 남북한 이산가족찾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불가침협정체결, 비정치 분야의 교류, 대북한 식량원조,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 등이 포함됨은 물론 북한측이 그동안 제기한 「모든 문제」 즉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및 각계 각층 인사가 참가하는 정치협상 대민족 회의, 고려민주연방제안 등도 김일성이 원한다면 전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단 논의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한다. 전에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이었음에 틀림없다.

두 개의 이질체가 하나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상대방의 이질성을 파악하고 동화할 수 있는 길을 도량을 갖고 모색해야 한다. 상대방의 이질성에 대한 파악과 이해능력은 서로 만나서 각기 생각하고 있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을 뿐 그밖에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이 서로 그동안 일방적으로 자기쪽의 주장만 되풀이 해왔던 배타적 회담 제의보다 상대방이 내놓는 「모든 문제」를 따져 보자는 「6·5제의」는 협상의 원리에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서 평양측도 이 제의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8일이 지나도록 김일성은 「6·5제의」에 관해 공식으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다만 관영매스컴들을 풀어 이 제의를 비난하며 남한사회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을 따름이다.

북한측이 그동안 헐뜯고 왜곡선전해온 남한의 「반민족」 「반민주」 문제만 해도 그렇다. 평양의 선전기관들은 남한이 민족주의를 결여하고 있다고 매도하며 북한만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양 왜곡하고 있다. 우리의 자본주의 개방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불가피한 상대적 해외의존성이라든지 개발도상국이라는 특수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자급자족을 강조해 표방하는 북한 경제체제보다 우리의 경제가 대외의존적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경제는 정도의 차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외의존적이 아닐 수 없고 또 그런 대외 상호의존이 바로 민족주의의 결여로 바로 통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개발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다보면 외국적인 것에 많이 빠져 들어갈 수도 있으나 그 댓가로 한국의 경제가 놀랄만하게 급성장한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도리어 자급자족을 외치다 얼마되지 않는 부채마저 갚지 못해 국제적으로 민족을 망신시키는 것이 진실한 민족주의라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소련제 탱크를 몰고 6.25남침을 자행하여 동족의 가슴에 마구 총질을 해댄 것이 민족주의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남한의 민주주의에 관한 왜곡비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관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추려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국민이 민주발전을 열망하며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런 범국민적인 민주주의식은 도리어 우리의 자랑이다.

이에 반해 북한의 민주주의는 천하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공산국가들중에서도 유례가 없는 독재체제이며 심지어 김일성은 아들 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 선례없는 공산세습체제를 꾸미고 있지 않은가. 김은 남한의 민주문제를 비방하기에 앞서 자신의 부끄러움부터 알아야 한다.

어쨌든 김이 남한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해 관심이 그토록 많다고 한다면 그 문제까지도 뒤에서 비방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대통령과의 회담에 나와 떳떳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는 본다. 민족의 앞날을 위해 그리고 양측이 제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서 김일성은 「6·5제의」를 서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을 한반도에서 사는 우리에게겐 통일이란 어떤 개인이나 당파의 아집으로 미루어만 가기에는 민족이 그리고 역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런 과제다.

2. 해 외 반 응

전두환대통령의 「6·5대북제외」에 대하여 세계각국은 그들의 정부기관과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적극적 지지 및 환영의 뜻을 표명해 왔다.

자유세계 각국은 물론 공산권 및 공산권의 영향하에 있는 제3세계제국에서도 「6·5제외」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대체적인 논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전반적으로 「1·12대북제외」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제외로 지지·환영하며,
- 특히 미·일 정부에서는 「6·5대북제외」를 『남북대화를 실현시키려는 의지의 재확인』으로 보며 이로서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증대시키는 반면 북한을 곤란한 입장에 몰아 넣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우방국 언론에서는 「6·5대북제외」가 「1·12제외」보다 더 폭넓은 제외이며 한국이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전두환대통령의 동남아 5개국순방과 관련하여 국제적 지지기반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세계각국의 주요반응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 국무성 성명 (6월 5일자)

『미정부는 남북대화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전두환대통령의 「6·5제외」를 진폭적으로 환영』하며 『금반 제외에 따라 대화가 실현될 경우 남북한이 제외한 모든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는 한편, 일부 관리들은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하였다.

일본의 관계 및 언론계

정부차원의 공식반응은 보이지 않으나 외무성 관리를 비롯한 대한관계 실무자들은 환영과 찬사를 표시하면서 『한국은 「6·5제외」에 대한 북한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우위와 여유를 과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한국이 계속 주도권을 잡고 통일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전대통령의 「6·5제외」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편 요미우리(독매)신문(6월 6일자)에서는 『이번 제외는 ① 회담의 의제를 완전히 자유로 했으며, ② 남북사회의 상호전면개방, ③ 회담장소가 한반도 이외의 제3국이라도 무방하다고 제외한 점에서 지난 「1·12제외」를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권력세습체제를 더욱 확립하기 위해서 내부체제의 정비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제외의 실천은

근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외교소식통들의 중론』이라고 평가하였다.

영국의 BBC방송 (6월 5일자)

『전두환대통령의 금반 제의는 「1·12제의」보다 더 폭넓은 제의이며, 전대통령은 「6·5제의」로 아세안 5개국순방과 관련하여 더욱 지지기반을 넓힐 것이나 북한의 반응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하였다.

스위스의 라·쉬스지 (6월 8일)

『북한의 김일성은 지난 1월의 전두환대통령의 제의를 「정직한 협상」이기 때문에 거부했다. 6월 5일 서울이 내놓은 새로운 제안도 또다시 같은 운명에 놓일 전망이다. 김일성이 지금까지 거부해온 것은 과연 무엇인가? 만약 김일성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고 자신이 그저 시간을 벌려는 것이 아님을 실증하려면 전대통령을 만나는 길 밖에는 없다』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홍콩의 사우드·차이나·모닝 포스트지(6월 11일자)

『지난 「1·12제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의도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이며 회담장소는 김일성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문은 동서독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평화적인 타협을 가져온 바 있다』고 하여 이 「6·5제의」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의 인터내셔널·리포터지(6월 8일자)

『이번 제의는 지난 「1·12제의」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제의는 한마디로 북한이 한반도의 대국적 이익을 위해 적극 호응토록 촉구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논평하고 있다.

이집트의 알·고무리아지(6월 9일자)

『이 제의는 처음 나온 제의도 마지막 제의도 아닐 것이다. 한국이 분단된지도 36년이 지났다. 이번 제의는 금세기의 커다란 비극의 하나인 남북분단에 종지부를 찍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고 최소한 공동의 출발점에 합의하는 일이다. 서울과 평양간을 왕래할 수 있도록 옛 도로를 다시 개통해야 한다』는 논평을 하고 있다.

멕시코의 엘·나쇼날지(6월 18일자)

전두환대통령의 「6·5제의」와 관련된 논설에서 「6·5제의」의 중요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북한 주민은 동 제의를 수락할 것을 희망하나 북한정부와 주민을 대변하는 중심인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북한이 식량부족에도 불구하고 해외각국에서 막대한 경비를 지불하여 신문·잡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남북한의 실상을 오도하고 북한 주민에게 실정을 왜곡한다는 사실』이며 『북한의 김일성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대화를 거부해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6월 20일까지 세계 각 지역의 73개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정부성명, 고위공무원의 견해 및 신문·방송들을 통한 사실보도와 지지논평들이 290여회 표명된바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 ICRC(적십자국제위원회), IPU(국제의원연맹)등 다수의 국제기구의 책임자들이 전두환대통령의 「6·5제의」를 적극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3. 북한의 「6·5」 대남제의거부의 저의

전두환대통령의 획기적인 「6·5 대북제의」에 대하여 북한측은 책임있는 당국의 분명한 태도 표명을 회피하면서 모든 흑색선전 모체들을 동원하여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북한측은 6월 10일 그들의 소위 당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측의 내정을 또다시 격렬히 비방하면서 「6·5제의」는 『통일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다른 목적을 노리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변하고, 오히려 작년 그들의 소위 제6차 당 대회에서 다시 들고 나온 기만적이고 실체도 없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 합리적, 현실적 통일방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다가 북한 김일성은 7월 1일 6·25전쟁 도중 북측에 의하여 강제 불법 납북된 한국의 정치·사회 지도자들로 구성했다는 이른바 「전남한정치인협회」라는 유명단체의 창립 25주년기념 메시지에서 『남조선 정부와의 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여 「6·5제의」는 물론 일절의 대화를 정면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6월 11일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 해상에서 조업 후 귀항하려던 우리 어선과 그 승무원을 불법납치해 감으로써 그들 본래의 비인도적인 호전성을 거듭 노출하여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겨레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망동을 자행하였다.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전두환대통령의 「6·5대북제의」는 한반도문제의 평화적이며 합리적인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함에 있어서 참으로 획기적이며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은 물론,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대화의 길을 트자는 이 파격적인 제의는 세계협상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의이다. 따라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커다란 환영과 공조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이 「6·5제의」가 실현될 경우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적인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와 같은 국제여론을 등지면서까지 우리의 평화제의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북한측이 전두환대통령의 「1·12제의」 및 「6·5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속셈은 자명하다.

첫째로, 김일성-김정일의 세습체제를 확고히 굳히기 위해 현재 대대적인 체제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부적 불안상태에서 정상급 대화를 가진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며

둘째로, 서로의 사회를 전면개방할 경우 지난 30여 년 동안 오직 철저한 폐쇄 속에서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북한전역을 병영화해온 김일성 자신의 존립기반이 일시에 무너져버릴 것이라는 불안감 등에서 우리의 대북 평화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0여 년간 북한당국이 추진해온 대남 전략의 기본노선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이란 이름의 무력적화통일노선이었고 1970년대에 한때 남북대화에 응해 왔던 북한측의 저의는 무력적화혁명을 위한 결정적 시기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전술적 흥계였음이 명백히 드러났

는데도 북한측은 이러한 모든 속셈을 감추기 위하여 「6·5대북제의」에 대해 『불순한 목적』을 운운하면서 대남 비방공세를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이른바 「고려민주연방」안을 대안이라 내세우면서도 우리의 『어떤 의제에도 구애됨이 없이 논의하자』는 「6·5제의」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제안자체가 허구적인 선전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노출시킨 것이다.

확실히 북한측은 남북대화의 재개에 의한 평화통일의 모색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직 무력과 폭력에 의한 대남 적화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내부교란과 폭력혁명 유도를 위한 온갖 책동에만 광분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측이 그같은 시대착오적인 적화망상에서 깨어나 6천만 겨레가 염원하는 평화통일의 대도에 지체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북한측이 지금과 같이 시대착오적인 대남 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국제적 고립과 내부적 갈등의 심화에서 비롯되는 남북간 체제경쟁에서의 낙후성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필경은 북한당국은 스스로의 자멸의 비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3부 「아세안」이 공감한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

1. 「아세안」 정상들, 한국의 평화통일노력 지지

전두환 대통령은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15일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5개국을 공식 순방하였다.

이 순방기간중 전두환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 말레이시아의 후세인은 수상,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 태국의 프렘 수상,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을 방문하여 각각 정상 또는 수뇌회담을 갖고 정치·경제·외교·안보·문화 및 기술협력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협력관계의 심화와 우호증진방안을 협의하였다.

특히 전대통령과 순방 각국의 수뇌들은 정치·안보문제에 관하여 『동북아와 동남아의 평화와 안전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나아가 이것은 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필요불가결 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 있어서 각국 수뇌들은 전대통령의 「1·12」 및 「6·5제의」를 적극 지지 환영한다는 점을 공동성명으로 확인했다.

순방각국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의 통일문제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살피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달성을 위하여 대한민국정부가 경주해 온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전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은 「1·12제의」와 「6·5제의」대로 남북한 최고책임자간의 직접회담을 갖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수하르토대통령은 전대통령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문제가 남북간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직접회담을 지지하였다.』

『전대통령은 유엔, 비동맹회의 및 여타 국제회의에서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대통령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대통령은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한국의 평화통일 달성까지의 잠정조치로서 긴장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유엔헌장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유엔가입의 실현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인니 정상 공동성명>

『전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살피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달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경주해 온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전대통령은 특히 한국문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유일한 현실적인 방도는 「1·12제의」와 「6·5제의」대로 남북한 최고책임자간에 직접회담을 갖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말레이시아 수상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문제가 남북간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전대통령은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한국의 평화통일 달성시까지의 잠정조치로서 긴장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민족화해 및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말레이시아 수상은 유엔헌장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유엔가입의 실현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말련 정상 공동성명>

『전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살피면서 한국의 평화적 통일달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경주해 온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특히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도는 「1·12제의」와 「6·5제의」대로 남북한 최고책임자간에 직접회담을 갖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리」수상은 전 대통령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문제가 남북한간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싱가포르」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직접회담을 지지하였다.』

『전대통령은 유엔·비동맹회의 및 여타 국제회의에서 「싱가포르」정부가 대한민국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영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전 대통령은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한국의 평화통일 달성시까지의 잠정조치로서 긴장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리」수상은 유엔헌장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유엔가입의 조기실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싱가포르 정상 공동성명>

『전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살피면서 한국의 평화적 통일달성을 위해 한국정부가 경주해 온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전대통령은 특히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현실적 방도는 1981년 1월 12일자 및 6월 5일자 제의대로 남북한 최고책임자간에 직접회담을 개최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전대통령은 한국정부의 평화정착노력에 대하여 태국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약받았다. 「프렘」수상은 한국의 통일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태국정부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이러한 직접회담을 지지하였다.』

『전대통령은 그간 태국정부가 유엔 등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여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영도자는 앞으로도 상호관심사에 관한 긴밀한 협의와 노력을 계

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대통령은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한국의 평화통일 달성시까지의 잠정조치로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프렘」수상은 유엔헌장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유엔가입의 실현노력을 지지하였다.』

<한·태 정상 공동성명>

『전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검토하고 한국의 평화적 통일달성을 위해 대한민국정부가 경주해 온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전대통령은 특히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현실적 방도는 1981년 1월 12일자 및 6월 5일자 제의대로 남북한 최고책임자간에 직접회담을 갖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르코스」대통령은 전대통령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자국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직접회담을 지지하였다.』

『양 영도자는 지역 및 국제회의에서의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이 긴장완화 및 국제적 이해증진을 위해 이러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대통령은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한국의 평화통일 달성시까지의 잠정조치로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마르코스」대통령은 유엔헌장의 보편성원칙에 입각한 유엔가입의 실현노력을 지지하였다.』

<한·비 정상 공동성명>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전대통령이 「아세안」 각국의 수뇌들로부터 한국의 평화통일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획득한 것은 한국과 「아세안」 간의 경제협력증진 방안을 마련한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결실이다.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아세안」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한 반면, 「아세안」 회원국들이 모두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며 통일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 것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전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으로 이룩된 중대한 성과가 된다.

특히 「아세안」 5개국이 「1·12」 및 「6·5」 대북 제의 등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직접대화를 지지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확인한 것은 이들이 비동맹국가라는 점에 비추어 남북대화과 통일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입장을 더욱 확실하게 한 것이다. 특히 이들 비동맹국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남북한의 UN동시가임을 지지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성과이다.

또한 전대통령의 아시아적 안보연대론은 5개국 정상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이 지역의 안보와 평화유지를 위한 우리 나라의 역할과 기여도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북한공산집단의 국제

적 고립상과 일인 독재의 폐쇄성이 곧 평화통일의 장애요소임을 지적하고 그들의 민주화와 「1·12」, 「6·5」 제의 속에 담긴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를 전세계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었다.

2. 평화통일에의 강열한 의지

「아세안」 5개 회원국 국가원수들의 초청으로 동 국가들을 순방중이던 전두환 대통령은 각국의 정상들과 만나 상호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한편 현지 「메스콤」을 비롯하여 각계의 인사들과 만나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을 설명하고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유감없이 피력하였다.

전두환대통령은 북한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이며 따라서 김일성은 한국의 국력과 세계정세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김일성의 오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쟁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한의 최고책임자간의 상호방문을 제의하게 된 것이고 「1·12제의」의 배경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달성은 오로지 남북한간에 신뢰를 쌓아올리고 이해를 촉진하는데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하고 남북한 사회의 안전개방과 상호교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6월 26일 자카르타의 영빈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가진 첫 내외기자회견에서 전 대통령은 북한당국은 『우리의 「1·12」 및 「6·5」 제의에 대해 아직까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인내심을 갖고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만일 북한이 오판해서 다시 남침을 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중요한 모든 시설을 완전히 파멸시킬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전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는 기만에 불과하고 논리적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만약 김일성이 나의 제의를 받아들여 나를 만난다면 고려연방제에 대해서도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전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고려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연방제 성립의 기본조건으로 첫째, 이념적 정치체제가 같아야 하고, 둘째, 경제·사회체제가 동일해야 하며, 셋째, 상호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김일성이 말하는 연방제를 이러한 3가지 조건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괴리된 체제, 경제체제 등 모든 면에서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논리적으로 북한의 연방제의 허구성을 설파하였다.

전대통령은 이어서 『북한은 고려연방제의 전제조건으로 현정부가 물러가고 남한에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뒤에 연방을 하자고 내세우고 있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음을 단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의 기만성을 명쾌하게 폭로했다.

전두환대통령은 또한 현시점에서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는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이라고 선언하고 김일성도 언젠가는 궤도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7월 5일 태국의 방콕외신기자클럽이 주최한 오찬 및 기자회견 석상에서 전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항구적인 평화달성을 위해 남북한의 최고책임자가 직접 만날 것을 제의했으나 지난 7월 1일 김일성은 평양에서 열린 한 집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를 외면했다고 말하고 김일성이 말로는 평화통일을 제안하면서도 우리의 제의를 받아 들일 수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일성은 1천8백만 북한주민들을 30년간 계속하여 외부세계로 부터 차단해 놓았습니다. 완전

폐쇄된 사회에서 북한주민들은 외부세계의 오늘의 변천과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일성은 북한에서 거의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철저한 개인숭배체제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나아가서는 그의 아들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로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완전 폐쇄된 사회에서 구축된 이같은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와 사회가 외부세계에 노출되고 개방될 때 나타날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민들은 민주화와 자유화를 요구할 것이고 이러한 요구는 독재체제 유지에 중대한 위협을 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독재체제 붕괴마저 불가피해 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과의 대화거절 그리고 남북한 사회의 개방 및 교류를 거절할 수 밖에 없는 김일성의 고충인 것입니다.』

전대통령은 이어서 그러나 다른 공산국가의 경우 『개인의 우상화를 강요했던 권력자가 물러간 후에야 비로소 어느정도 합리성과 실용주의적 경향이 싹틀 수 있었다』고 스탈린 및 모택동 사후의 소련과 중공의 변화를 실례로 든 후 『길게보아 북한도 결국은 이러한 경향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인의 예상이며 이 시점에서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는 김일성이며 그를 세습해서 권력을 이어받을 김정일이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또 『아세안 5개국은 물론 강대국들도 한반도의 안정을 회구하고 있으며 아마도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는 공산국가들도 내심으로는 한국과의 대화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므로 김일성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김일성도 불가피하게 자신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상황이 도래할 때까지 인내로써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속담에 열 번 짝어 아니 넘어갈 나무없다는 말대로 본인은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을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두드릴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향한 굳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4부 남북관계 소식

1. 「남북한 체육교류 및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 제의

조상호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 올림픽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북한측에 대하여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선수단을 구성 출전할 것과 이를 위하여 남북한의 체육인들이 서울이나 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

이날 오전 11시 KBS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조상호 회장은 『남북의 6천만 온 겨레는 남북간에 끊어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고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길이 하루속히 열리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염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북간에는 대화마저 막혀 있어 문화민족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체육분야에서나마 남북간에 다양한 교류를 실시하여 분단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데 기여하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회장은 이어서 『남북의 체육인들이 각 종목에 걸쳐 친선경기를 위시한 체육교류를 활발히 실시하고 국제경기에 「단일팀」으로 참가하게 되면 민족적 화합의 계기를 조성하는데 매우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가오는 1984년의 제23회 「올림픽」 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과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라도 1982년의 제9회 「아시아」 경기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할 것을 북한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겸 북한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중하게 제의한다』고 말했다. 조상호회장은 또한 『남북한 「단일팀」 구성에 수반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남북의 체육인 대표들이 서울이나 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질 것』을 북한측에 제의했다.

조상호회장의 이번 「남북한 단일선수단구성 및 체육교류」 제의는 전두환대통령의 「1·12」 제의 및 「6·5」 제의에서 강조된 바 있는 남북한간의 신뢰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로 볼 수 있다.

전두환대통령은 「1·12제의」와 「6·5제의」를 통하여 남북간의 신뢰조성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상호신뢰의 조성을 위해 남북쌍방이 각기의 사회를 전면 개방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전대통령은 이같은 남북한 사회의 완전한 개방을 촉구하면서 남북한간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경제, 문화, 체육, 학술, 우편등 비교적 쉬운 분야부터 교류와 협력을 시작해서 점차 완전교류, 전면개방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조상호 대한체육회장의 남북한 체육인회담 제의는 이러한 남북간의 신뢰회복 및 상호개방 노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남북간에 각 종목의 친선경기를 개최하고 체육분야의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며 나아가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여러가지 국제경기에 참가하게 되면 우리민족의 기량을 전세계에 과시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상호간의 민족적 신뢰를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에도 대한민국측은 남북한간의 체육교류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의 실현을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측은 북한측에 대하여 1973년 8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지역 배구지도자강습회에 북한측의 지도자가 참가하도록 초청한 바 있으며 1978년 9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도 북한선수단을 참가하도록 초청하였다. 또한 1979년 3월 12일에는 남북한간 탁구친선경기를 개최할 것과 전반적인 남북체육교류를 위해 남북한관계자간에 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운동경기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북한의 불순한 자세 때문에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북한측은 왕왕 국제경기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자고 제의해 왔으나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상호신뢰를 조성코자하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스포츠를 이용, 한국선수단의 국제경기 참가를 저지시키려는 기도임이 드러남으로 해서 오히려 동족간의 불신만 가중시켜 왔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는 1979년 4월 25일 부터 5월 6일 사이에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막을 불과 2개월 앞둔 동년 2월 20일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제의했다가 끝내는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 참가를 저지시켜 버렸던 사실과 1980년 7월 19일 개막예정이던 제22회 모스크바 올림픽대회를 불과 반년 앞두고 또다시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제의해 왔던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남북간에 대화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현시점에서 순수한 체육분야에서부터 상호교류의 길을 틔으로써 분단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고 나아가 민족적 화합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우리 체육인들의 제의에 대해서 북한측이 반대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문제는 오직 한가지 북한측의 성의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동제의를 발표된지 1개월이 경과하도록 가부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는 7월 27일 다시 성명을 발표, 북한측의 무반응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북한측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했다.

조상호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장은 이 성명을 통해 오는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와 가능하다면 1982년 「아시아」 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하자는 지난 6월 19일자 자신의 제의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한 체육인간의 회담을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조회장은 『6천만 겨레와 해외동포들은 북한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남북한 체육인들은 문호개방과 교류 및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을 실현해서 분단상태하에서나마 민족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측은 언제라도 북한의 체육인대표들과 회담에 응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측이 호응해 올 때까지 성의와 인내를 다해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명은 과거 『북한측이 제35회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불과 2개월 앞두고 1979년 2월 20일 남북한탁구단일팀 구성을 제의했던 사실과 제22회 모스크바 올림픽대회를 불과 7개월 남겨놓은 시점인 1979년 12월 20일 남북한 단일팀 구성문제를 제기했던 지난날의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남북한이 국제경기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려면 남북의 체육인들간에 진지한 토의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리이며 이러한 뜻에서 『북한측이

진정 국제경기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것을 바라다면 남북한 단일팀 구성에 대한 실천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우리의 제의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싶다』고 밝혔다.

2. 남북조절위 서울측 성명발표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9주년을 맞아 7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이 하루속히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의 「1·12제의」와 「6·5제의」를 받아들여 대화와 협력의 광장으로 나올것을 촉구했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동성명에서 남북공동성명은 어느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기되거나 파괴될 수 없는 역사적 합의문서임을 강조하고 북한측이 이를 난폭하게 유린하고 있는 현금의 작태를 중지하고 참다운 민족양심과 양식을 회복하여 지금이라도 대화와 교류 그리고 협력에 성실하게 임해 올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이 발표한 성명문 전문이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성명문

오늘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아홉들을 맞이한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는 남북쌍방이 당초 이 공동성명에 합의할 때 이의 성실한 이행을 엄숙하게 다짐한 바 있고 따라서 이 공동성명은 어느 일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기되거나 파괴될 수 없는 역사적 합의문서임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측에 대해 이의 성실한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자 한다.

남북공동성명은 남북 쌍방이 상호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중상 비방을 중지하고 대소간 무력도발을 그만두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지원하며 쌍방간 다방면적 교류를 실시하고 남북직통전화를 가설·운영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간 민족단결의 분위기를 성숙시켜 분단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기를 합의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남북공동성명은 이같은 일련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주관할 대화기구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합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남북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발족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정상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남북직통전화를 일방적으로 단절시켰을 뿐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남북조절위원회는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하여 이미 없어졌다』는 일방적인 폭언까지 자행함으로써 남북공동성명 그 자체의 사문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1972년 11월 11일 0시를 기해 휴전선 확성기방송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휴전선 전역에서 도발적이고 악랄한 내용의 대남비방 확성기방송을 작년 9월 4일 이래 이 시각까지 18만 여회에 걸쳐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때 마다 쌍방이 그 성실한 이행을 엄숙히 서약한 역사적 합의문서와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북한측의 이같은 행위는 남북간 신뢰의 바탕을 마련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며 나아가서 앞으로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여타의 합의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지적, 북한측의 반성을 거듭 촉구해온 바 있다.

우리는 남북공동성명 발표 아홉월에 즈음하여 북한측이 남북공동성명의 모든 합의사항들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이같은 중대한 결과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참다운 민족양심과 양식을 되찾아 지금이라도 남북공동성명에 의거한 대화와 교류, 그리고 협력에 성실하게 나오도록 촉구한다.

남북간에 이미 이루어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또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느 일방에 의한 일방적인 통고나 방송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상호 대화를 통해서 합의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쌍방이 이같이 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기초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의 정도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측이 이같은 대화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의 「1·12제의」와 「6·5제의」를 받아 들일 것을 촉구하며 휴전선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발적인 대남 확성기 비방방송을 즉각 중지할 것을 북한당국에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남북대화 제27호

(1981. 7 ~ 1981. 11)

< 목 차 >

제1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범국민적 의지	3
1.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대북성명	3
2. 북한측의 「8·6 정당·사회단체 연합성명」	6
3. 각계의 반응	11
제2부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0주년	24
1.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0주년에 즈음한 대한적십자사 총재 성명	24
2. 남북적십자회담 주요일지	35

제1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범국민적 의지

1.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의장 성명

천관우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의장은 1981년 8월 20일 오전 10시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8월 6일 북한측이 소위 「정당·사회단체 연합성명」을 통해서 우리 정부당국을 배제한 가운데 남북의 정당·사회단체대표들과 해외동포대표들로 구성되는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소집하자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부당성과 허구성을 반박하고 북한당국이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이목을 속이려는 술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진정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천관우 의장은 주한미군철수 및 한국정부 타도를 전제로 한 「고려연방」안을 실현하자는 것이나 정부당국을 배제하고 정당·사회단체들 간에 「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북한측의 태도는 『평화적 통일과 이를 위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획책하려는 책략』이라고 그 저의를 폭로하고 『통일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 범국민적으로 단결되어 있어 그 어떤 불순한 술책도 결코 주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당국자는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정부와 국민 모두는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의지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어느 누구를 대화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북한측 주장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관우 의장은 또 『대한민국 국정전반에 책임을 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닌 국가원수와 정부를 배제하고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주장임이 분명하며 문제해결의 실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북한측은 말로는 평화통일을 운위하면서도 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나와 이산가족재회문제, 남북간 체육교류문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쉬운 문제들도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작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관우 의장은 더 나아가 『북한측이 겨레의 평화통일염원에 부응하려는 자세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민족통일중앙협의회는 지난날을 더 이상 탓함이 없이 새시대 새민족사를 여는 새로운 대화를 마련하는데 넓은 아량을 가지고 적극 앞장 설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태도로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천관우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의장의 성명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의장 성명문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남북한 6천만 겨레의 간절한 염원이며 민족사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지나도록 통일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채 민족의 이질화는 날로 심화되고 남북간의 긴장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조국분단의 비극적 사태를 방치해 둘 수 없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의 길을 열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1·12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와 「6·5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는 통일문제의 해결에 돌파구를 열고자 하는 획기적인 결단이며 따라서 국내외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가 상호 방문하여 상대방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며 또한 회담을 갖고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면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제거되고 상호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통일문제의 해결에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1·12」 및 「6·5제의」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남북대화 자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현정부 타도를 전제조건으로 북한측이 제시한 「고려연방」안이나 또는 정부당국을 배제하고 정당·사회단체들 간에 「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소위 「통일혁명당」과 같은 있지도 않은 유령조직들을 참가시켜야 된다고 하는 지난 8월 6일 북한측 제의는 평화통일과 이를 위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획책하려는 책략이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정 전반에 책임을 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닌 국가원수와 정부를 배제하고 남북한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주장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조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분단의 이 현실 속에서 정부당국을 제외한 남북대화란 문제해결의 실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북한사회는 8·15해방 이 후 36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온 1인독재체제도 부족하여 이제 세습통치체제까지 다져가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공산당의 조종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정당·사회단체라는 이름을 빌어 대한민국의 내부문제를 시비하면서 우리 정부를 대화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양두구육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작태는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되어 마땅한 것입니다.

통일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여야가 따로없이 초당적·범국민적으로 단결되고 있어, 그 어떤 불순한 술책도 결코 주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당국자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는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의지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어느 누구를 대화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는 북한측 주장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측이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가지고 대화의 광장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북한측은 말로는 평화통일을 운위하면서 행동은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와, 남북한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가장 쉬운 문제인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조차 외면하고, 모처럼 개설되었던 남북간의 직통전화마저 일방적으로 단절시키고, 또한 우리가 제의한 남북한의 체육교류 및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문제까지도 소위 「통일축진대회」를 개최해야만 논의될 수 있다는 어불성설의 구실을 내세워 옹색한 거부태도를 보이는 그와 같은 작태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통일 중앙협의회는 북한측이 거래의 평화통일염원에 부응하려는 자세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지난날을 더 이상 탓함이 없이 새 시대, 새 민족사를 여는 새로운 대화를 마련하는데 넓은 아량을 가지고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나는 북한당국이 온 거래와 국제사회의 이목을 속이려는 술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진정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1981년 8월 20일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의장 천 관 우

2. 북한측의 「8·6 정당·사회단체 연합성명」

북한측은 1981년 8월 6일 평양에서 이른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67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 회의에서 「조선로동당」을 비롯한 23개의 정당·사회단체의 명의로 「연합성명」을 채택·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북한측은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의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상투적인 대남비방을 되풀이하고 새로이 「민족통일 촉진대회」라는 것을 소집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성명의 문맥과 내용을 분석해 볼 때, 북한측은 이를 계기로 하여 성실한 남북대화를 재개하거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 가려는 어떤 긍정적 자세를 밝힌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으며 오히려 앞으로는 우리의 현정부 당국은 물론 이를 지지하는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인사와의 어떠한 형태의 남북대화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북한측은 이 성명을 통해서 『반공대결을 업으로 하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 는 나라의 통일은 물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긍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대남비방을 되풀이하고 나서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도』로서 『북과 남의 정당·단체 대표들과 해외 동포 대표들로 구성되는 「민족통일 촉진대회」를 소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북한측은 「민족통일 촉진대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부분에서

첫째, 우리의 현정부 당국을 배제하는 조건에서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 및 해외 동포 대표들로 구성되는 「민족통일 촉진대회」를 소집하고,

둘째, 동 대회 개최의 예비조치로서 대회참가를 희망하는 각 당, 각 과, 각 계층 대표들 사이의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광범하게 진행할 것이며,

셋째, 이 대회가 소집되면 「고려연방안」을 비롯하여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국제경기 단일팀 참가문제」도 동 대회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바로 북한 당국이 우리의 현정부는 물론 현정부를 지지하여 제5공화국 헌법질서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반공 인사 및 반공정당·사회단체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의 표시이며, 「민족통일 촉진대회」가 소집될 경우 실제로 대한민국내에 존재하지도 않는 「통일혁명당」이라는 유명단체를 내세워 대한민국의 제정당 대표로 위장할 뿐만 아니라 오직 반정부적이고 친북한적인 국내외 인사들만 참가한 「민족통일 촉진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저의임이 자명해 진다.

따라서 「8·6 연합성명」은 대한민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가 안정되고 최근 우리 정부가 제안한 「1·12 및 6·5 대북제의」와 대한체육회의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 제의」등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까지 그 합리성과 현실성이 인정되어 절대적인 지지기반을 확대함에 당황하여, 우리의 대북제의들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형식으로 제의되기는 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을 외면한 채 그들의 수세적인 입장을 벗어나 보려는 선전책동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 북한측은 그들이 말

하는 「민족통일 촉진대회」의 협상대상에서 「우리 정부 당국의 참여 배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제의한 「당국간 대화」는 물론 최근의 모든 대북제의에 대한 그들의 거부태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동 성명에서 협상절차 및 토의내용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외관상 대화장소, 시기 등에 관해 임의의 선택 가능성의 여지를 보이고 예비적 조치로서 각 당·각 파·각 계층 대표들 사이에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국내외 반한·반정부세력의 관심을 유도하고, 협상·토의의 초점을 「고려연방」안으로 집약시키려는 기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제의한 모든 문제를 이른바 「합작과 교류」차원의 포괄적 논의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토의와 협상에 불응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8·6 연합성명」의 허구성을 속속들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8·6 연합성명」에서 보면 「고려연방」안을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서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방안』이라고 단정하고 대내외적 선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즉 그들은 『……북반부의 모든 정당·단체들과 인민들이 이 방안을 한결같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며,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환영하면서 그에 고무되어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이고 있다』고 허위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는 공산당 조직인 조선로동당 이외의 정당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다른 사회단체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공산당에 의하여 철저히 통제되는 비자발적인 명목적 조직일 뿐이다. 북한측이 그들의 정치과정에서 정당·사회단체들의 정치적 기능이 충분히 인정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사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정당(로동당 이외의 정당이 존재한다 하더라도)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정당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김일성의 통치체제에 봉사하는 혁명적 도구이며, 사회단체들도 역시 국민적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측이 이번 성명에서 정당·사회단체의 명의를 사용한 사실은 그 자체가 그들의 허구적인 선전제안에 「인민적 지지」의 명분을 부여하여 국내외 여론을 오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북한관을 개선해 보려는 저의를 스스로 노정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북한측이 제안했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서 실현성 있는 방안이라기 보다 실체가 없는 허구로서 북한주민을 동원하고 국제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전술전개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이번 제시된 「8·6 연합성명」의 중심이 되는 「민족통일 촉진대회」를 통해서도 실제로 북한 당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연방창립준비위원회」의 구성이며, 해외에 있는 반한국적, 친북한적인 인사들로 이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른바 군중집회식 정치집회인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안들을 퇴색화시키려는 위계적 술책에 불과하다.

북한측의 이같은 계략은 이번 「연합성명」의 문맥 자체에서 스스로 명백하게 드러난다. 동 성명에서 북한측은 우리 정부당국을 맹렬히 비난하고 우리 정부가 제안하여 이미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정부의 평화적 통일의를 확인받은 바 있는 「1·12」 및 「6·5」 대북제의를 『통일의 간판을 들고 통일을 반대하기 위한 한갓 기만술책』이라는 어불성설의 비난을 되풀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의 「아세안」 5개국 순방과정에서 각국의 국가원수와 수뇌들로부터 그 현실적 필요성이 재확인된 「남북한의 UN동시가입안」에 대해서도 『두 개 조선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책동』이라고 비난하는 시대착오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을 추구하게 된 정책기조는 조국의 통일을 단념하고 남북 분단상태를 영구화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1973년 우리 정부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통하여, 한반도의 남북관계 현실을 감안하고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국제조류 가운데서 우리의 평화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반여건의 실질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는 이 「6·23 선언」에서 남북한의 UN동시가입과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동시참여의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국제적 긴장요인의 하나인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과감히 제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평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이 통일되는 날까지 남과 북의 두 체제가 평화적 관계를 정립·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의 현실적·구체적인 통일노력과는 반대로 통일에 장애가 되는 온갖 책동과 민족의 이질화 경향을 부채질하고 심지어는 공산권국가들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족벌적 권력승계체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 UN 및 국제기구 동시 가입안을 대내외적으로 비방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북한측은 이미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고 있는 일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또한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국제기구에 같이 가입하는데는 급급하면서도 UN에 남북한이 동시가입하는 것만을 거론하여 그것은 조국의 분단을 영속화하려는 『두개 조선 조작책동』이라는 모순되고도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번 「8·6 연합성명」에서도 북한측은 우리 정부의 「UN 동시가입안」이 『민족분열책동을 감싸기 위한 위장물에 불과』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비방을 하면서 『우리 민족에게는 무엇보다도 통일이 절박』하고 『세계각지에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연대성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므로 『북과 남 사이에 합작과 교류를 하루 빨리 실현』하여 통일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이 애써 강조하는 「자주적 평화통일」이나 「합작」 「단결」·「교류」 등의 용어들은 국어사전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부여된 채 엉뚱한 의미의 용어로 변질 되었다. 북한측의 고위당국자의 발언과 공식문헌에 따르면, 그들이 말하는 남북간의 「합작」이란 『남과 북의 광범한 균중을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하여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하며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하는 것』이며 또한 『남북간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다 북반부의 사회

주의 역량에 의거하여 풀게 하는 것』이라 한다. 한편 북한측이 사용하는 「단결」이라는 단어의 정치적 의미는 『남조선 당국으로 하여금 「반공」 소동을 그만 두고 「연공」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을 뜻하며 「자주적 평화통일」이란 것도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여 남조선에 참다운 인민정권이 서면 북반부의 사회주의역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이 북한측은 일상용어의 영역에 까지 정치적 의미와 임무로 각색하여 남북한간의 대화와 타협에 있어서의 가능한 최소한도의 통로마저 차단시키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남북대화의 중단책임이나 통일의 장애요인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책임전가를 일삼아 왔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8·6 연합성명」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이 성명에서 내세운 「민족통일 촉진대회」라는 것도 성의있는 남북대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1·12 및 6·5 대북제외」를 거부할 명분을 찾아 남북대화 거부의 책임을 모면하는 한편, 우리 정부와 국민을 유리시켜 반정부적 「통일전선」형성을 기도하고 해외동포 사회의 친북 인물들을 포섭하여 북한측이 추진해 온 「고려연방창립준비위 예비회의」의 조기개최를 위한 기반조성 술책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측은 앞으로 「민족통일 촉진대회」주장을 앞세워 우리 정부가 제의한 어떠한 방안도 당국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한 이를 거부하는 경직된 태도를 고수하면서 북한 내부에서의 주요 행사나 반한적 국제집회 등의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과 『민족통일 촉진대회』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징후는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0주년에 즈음한 대북성명을 통해서 남북한간의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여 이산가족들의 뼈에 사무친 고통을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과 남북직통전화와 판문점연락사무소를 정상운영할 것, 그리고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 본인이 언제 어떠한 장소에서든 북한적십자회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대하여, 북한측은 그들의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이를 『남북적십자회담의 파탄 책임을 북에 전가시키려는 것』이라고 모략·비방하면서 이러한 인도적 문제마저도 『민족통일 촉진대회』를 소집하여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의 일환』으로 협의하자는 데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어 북한측은 이른바 『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라는 유령단체의 명의로 8월 15일에 채택한 『8·15해방 36주년에 즈음하여 남조선의 각당·각과·각계인사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민족통일 촉진대회』의 조기개최를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대하여 주한미군의 철수, 반미투쟁의 강화, 사회의 민주화, 국가보안법의 폐지, 연공정책의 추진, 북의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8월 20일 우리의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대북성명이 발표되자 북한측은 더욱 당황하여 8월 24일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격렬한 모략과 비방선전을 가중시키는 한편 그들의 『8·6 연합성명』발표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입을 빌려 「민족통일 촉진대회」의 소집을 위한 다각적인 접촉과 대화가 진행중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8·20성명」이 지닌 의미와 타당성을 되새시키려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징후들과 앞에서 분석한 저의들로 보아 북한측의 「8·6 연합성명」은 북한당국이 처한 대내외적 곤경을 회피해 보려는 선동적이고 악의에 찬 대남책동이며 북한당국이 아직도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이기도 하다.

3. 각계의 반응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8·20성명」은 조야의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하고도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였다. 8개 정당을 비롯하여 경제, 문화, 교육, 노동, 종교계등 각 단체들은 신문지상 또는 구두성명을 통해 북한측의 우리정부당국을 제외한 정당, 사회단체간의 「민족통일촉진대회」 개최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지적한 「8·20 민통협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북한측에 대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국내 정당·사회단체들의 지지성명은 우리 6천만 민족의 일치된 통일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으며 북한측의 대남적화야욕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웅변으로 증명해 주는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각계의 원로로서 통일정책입안과 추진에 관한 정부자문단체인 국토통일고문회의는 8월 24일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민통협」의 「8·20성명」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전내각수반 허정 의원을 비롯한 각계원로 31명의 고문들이 서명, 발표한 이 특별성명은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대북성명이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국민 전체의 기본적이고 일관된 의사임을 재천명한 것이므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1·12 제의」 및 「6·5 제의」가 민족통일을 위한 최선의 방도임을 지적하고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을 거부하고 「통일촉진대회」라는 허구적인 주장을 거듭하는 북한측의 태도는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친공정권 수립을 위한 공산혁명 여건조성이라는 불순한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발표된 국토통일 고문회의의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우리 국토통일고문은 1981년 8월 20일에 발표된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대북성명이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 전체의 기본적이고 일관된 의사임을 재천명한 것이므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1) 「1·12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 상호방문제의」와 「6·5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제의」는 민족통일을 위한 최상의 방도이다.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은 민족전체의 통일외지를 연결하는 길을 열어 보겠다는 우리정부의 강력한 실천외지가 담긴 획기적인 결단으로서, 조국의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최상의 방안인 것이다.

(2) 북한측의 대화거부 태도는 민족과 역사에 대한 배신행위라 민족의 이름으로 철저히 규탄한다.

북한측은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제의를 무조건 거부하고, 「연공합작」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정부를 배제한 정당·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간의 소위 「통일촉진대회」라는 허구적인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는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에는 뜻이 없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친공정권 수립을 위한 공산혁명 여건조성이라는 불순한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북한측의 이러한 반민족적·반평화적·반민주적 태도를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3) 일당독재하의 북한에서는 공산당 이외에 독자적인 정당·사회단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측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인독재, 억압, 감시, 강제노동, 종교탄압등 인간의 천부적 생존권을 유린하는 온갖 만행을 자행하여 왔고, 이제와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공산세습왕조까지 만들어가고 있는터에 북한땅에 공산당의 조종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정당·사회단체가 있을 것이라고 누가 믿을 것이며, 그러한 북한당국이 도리어 엉뚱하게도 정당·사회단체만의 접촉과 대화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너무도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 대한민국은 조국통일문제에 관하여 초당적 범국민적으로 단결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온 국민이 민주이념을 바탕으로 굳게 단결되어 정부와 국민, 그리고 여야가 모두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의지를 같이하고 있으며, 통일의 문제해결을 실효성 있게 전진시키려는 것이 확고한 우리들의 기본입장임을 다시금 천명한다.

1981년 8월 22일

국토통일고문회의

의 장 : 허 정

고 문 : 강원룡	김용완	김의택	김일환	김정렬
유달영	모윤숙	민복기	박순천	백낙준
선우휘	송지영	신태환	유진오	백두진
윤치영	이병도	이선근	이은상	이응준
이연기	이철승	이 호	이효상	장동순
정일형	최석채	한경직	홍종인	황성수

민주정의당을 비롯한 7개정당 및 국회의 원내교섭단체인 의정동우회는 8월 20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민족통일중앙협의회 「8·20 대북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북한측에 대하여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고 평화와 통일의 광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각 정당이 발표한 성명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주정의당> 평화통일을 회구하는 온 국민과 함께 민통협의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아직도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측의 각성을 촉구한다.

북한측이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열자는 주장은 과거의 「대민족회의」 주장처럼, 구태의연하고 비겁한 술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은 온 국민의 화합과 단결아래 통일의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호응하여 우리의 「1·12 제의」 및 「6·5제의」를 즉각 수락, 평화와 통일의 광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민주한국당> 북한측의 8·6제의가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획책하는 또하나의 술책임을 간파하고 이를 규탄한 민통협의 대북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지금이라도 북한당국은 대남폭력혁명노선과 대한민국정부 전복기도를 포기하고 우리의 「1·12」 및 「6·5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국민당> 민족적 염원을 외면하고 있는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 민통협의 대북성명을 전폭지지한다.

북한측은 통일촉진대회와 같은 허구적인 주장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고 조국분단의 비극적 사태를 방지해 둘 수 없다는 의지에서 우리측이 두 차례에 걸쳐 촉구한 「1·12 제의」 및 「6·5제의」를 하루빨리 수락, 민족의 염원에 순응해야 할 것이다.

<민권당> 통일문제는 남북 어느 쪽도 어떤 특정집단·정권·특정인의 이해에 결부시켜서는 안 되며 민족사적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확신한다.

북한측은 허구에 찬 통일촉진대회나 대남폭력혁명전략을 즉각 포기하고 민통협의 제의를 받아들여 7·4남북공동성명을 충실히 지켜나갈 것을 요구한다.

<민주사회당> 북한측의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인 통일자세를 올바르게 지적한 민통협의 대북성명을 크게 환영하며 그 내용 또한 지지한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평화통일의 실천의지가 있다면 우리 제의를 수락, 대화의 현장으로 나와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제적인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신정당> 민통협의 대북성명은 전국민의 간곡한 평화통일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전두환 대통령의 「1·12」 및 「6·5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범국민적 의지의 재확인이라고 본다.

<안민당> 우리의 최고책임자와 정부를 배제한 남북대화를 하자는 북한측의 주장은 현실성 없는 요구이다.

우리는 민통협의 대북성명을 지지하며 북한측이 현실성 있는 대화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의정동우회> 남북쌍방간의 사회단체나 정당대표자간의 대화제의를 종래의 상투적인 주장에 불

과하다.

우리는 남북최고책임자간의 대화를 통해서만이 통일문제가 가장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총력안보중앙협의회, 대한교육연합회, 한국반공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단체들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통일촉진전국총연맹을 비롯한 6개 통일문제관계 민간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산하 10개 단체, 이북오도민회중앙연합회 및 산하 5개 도민회, 조계종단을 비롯한 22개 불교단체, 천도교중앙총부, 성균관유도회, 원불교중앙총부 등 종교단체들도 지상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8·20 민통협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북한측의 반민족적 반평화적 작태를 규탄하고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이목을 속이려는 술책을 버리고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우리 7백만 한국 근로자는 북한의 세습적 1인독재체제 구축의 제물이 되어 밤낮으로 노예노동에 시달리는 북한근로자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보내면서 북한의 최고책임자가 하루바삐 이성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1·12」, 「6·5」 제의에 무조건 응할 것, 1인독재나 세습왕조같은 구시대의 유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처리할 것, 대한민국의 내부분쟁을 들어 중상모략하는 술책은 우리의 적개심과 단결력을 강화할 뿐임을 깨달을 것, 이산가족 상호방문 및 남북한체육교류제의를 무조건 즉각 수락할 것 등을 북한당국에 촉구했다.

국내외의 언론기관들도 천관우 민족통일중앙협의회회장의 성명이 발표되자 성명내용을 일제히 보도하였고 특히 국내 일간지들은 사실을 통해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북한측의 「연합성명」의 부당성을 명쾌히 지적하고 북한측의 맹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각 일간지들의 사설이다.

북한은 적화망상 버리고 대화의 광장에 나서라

- 경향신문(1981. 8. 21)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천관우회장의 「8·20 대북성명」은 우선 북괴가 적화망상을 버리고 민족적 신뢰회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자세로 임한다면 1·12 및 6·5 대북제의의 기본정신에 입각, 민간각계에서도 남북대화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통일중앙협의회회 기본입장이 천명된 것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의지의 결집, 통합이라는 점에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는 먼저 순수민간단체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조국의 평화통일과 남북대화추진에 앞장서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이는데 대해 이를 높이 평가하고 지지, 환영해 마지 않는다.

통일문제는 전대통령이 6·5제외에서 밝혔듯이 어디까지나 민족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정당이나 단체만의 전유물일 수 없으며 남북한 최고 책임자만의 문제도 아닌 민족적 기반위에서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범국민적 통일 추진 기구로 발족된 평화통일 노력의 민족적 구심체이기도한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막중한 것이며 우리가 이번 천의장의 「8·20 대북성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은 물론이다.

따지고 보면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그 발상부터 상치돼 팽팽히 맞서 온 것이 사실이다. 잘 알려진대로 우리정부의 통일정책 기본 방향은 동족간의 전쟁은 어떤일이 있어도 방지돼야 하고 통일은 민족전체의 자유의사와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편견과 독선, 불신과 오판을 제거하고 신뢰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세대가 넘는 분단역사를 통해 조성되고 굳어진 적의와 이질화를 생각할 때 이러한 통일 접근방법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데 공감하게 된다.

그러나 북괴의 통일전략은 그들의 노동당규약에 명시돼 있듯이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고 1977년 1월 그들이 채택했다는 「구국방안」에 의하면 「통일을 지향하는 북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자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남한에 인민정권을 세우자는 것으로 돼있다.

심지어 요즘와서 북괴는 우리의 국가원수와 정부당국을 배제하고 군중집회 형식의 「통일촉진대회」 소집을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철수와 정부 타도를 전제조건으로 한 「고려연방안」이나 또는 정부당국을 배제하고 정당사회단체들간에 「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하자면서 여기에 소위 「통일혁명당」과 같은 한국에 있지도 않은 유령조직들을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지난 8월 6일자 북한측 제의가 그것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 평화통일과 이를 위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괴가 종래에 획책해 온 통일전선형성 전략에 기초한 반한행사를 주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북괴가 이처럼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의 1·12 및 6·5 대북제외에 대한 내외의 지지도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반면, 북괴의 소위 「고려연방안」은 시간이 갈수록 그 허구성이 명백히 드러나 비동맹국가는 말 할 것도 없고 공산권국가들마저 그 정당성에 회의를 느끼게 되자 이에 초조한 나머지 내외의 이목을 속여 보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문제까지 이 「민족통일 촉진대회」에서 다루자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궁색한 변명을 내세워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북괴가 제아무리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그들 내부주민들을 기만하고 사회개방욕구를 무마하려 할지라도 이미 그 마각은 드러난지 오래인 것이다. 더구나 우리국민의 결속된 반

공의식과 국력을 오판하고 아직도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획책하기 위해 그와 같은 엉뚱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백해무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천의장도 이번 대북성명에서 지적했지만 통일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여야가 따로없이 초당적 범국민적으로 단결하고 있어 북괴의 어떤 술책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당국도 냉철히 깨닫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괴가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가장 절실하고 손쉬운 문제인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이나 모처럼 개설됐던 남북간직통전화의 정상회복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측은 순수민간단체로서 6천만민족의 통일열망을 대변한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대북성명에 긍정적인 호응이 있어야 마땅할 줄 안다. 1·12 및 6·5제의 거부에 이어 또다시 8·20 대북성명에 함축된 우리 민간단체의 대화의지마저 외면한다면 북괴의 모든 대화제의를 하나같이 허구적이며 위장된 평화공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결과밖에 안될 것이다. 거듭 촉구하거니와 북한측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낡은 교조주의적 사고방식과 위장평화술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민족통일의지를 집약한 새로운 차원의 대화모색에 적극 호응있기를 바란다.

민통협의 대북성명

- 김일성은 민족사가 지시하는 명제에 따르라 -

- 동아일보(1981. 8. 21)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천관우의장은 20일 대북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당국이 온 거래와 국제사회의 이목을 속이려는 술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진정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설 것을 촉구」 하였다.

천의장의 민통협은 지난 5월 발족된 민간기구로서 통일에 관한 초당파적인 견해와 의지를 표출키 위한 문자그대로 민족통일협의체이다. 따라서 천의장의 20일자 성명은 초당적이며 전민족적인 견해를 담은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주한미군철수와 현정부 타도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북한의 고려연방안이나 정부당국을 배제하고 정당 사회단체들간에 「통일촉진대회」를 열자는 북한의 주장이 남한적화를 획책하는 책략에 불과하다는 천의장의 지적은 우리국민 모두가 오래전부터 확신해 온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북한 김일성집단이 우리의 「1·12」제의 및 「6·5」제의를 거부하고 엉뚱하게도 정부당국을 배제하고 정당 사회단체들간에 「통일촉진대회」를 열자고 요구하였다는 것은 또 한번 우리 국민의 공분을 촉발하기에 족하다.

김일성은 지난 1973년 8월 28일의 이른바 김영주성명이라는 것을 밝히고 고박정희대통령 체제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잡아떼었다. 그러다가 1979년의 「10·26사태」가 발생하자 남북한총리회담을 제안하고는 몇 차례의 실무급 회담을 하는체 하더니 이 회담마저 일방적으로 중지시키고 돌아섰다. 이제와서는 한국의 정부당국자하고는 만나지 않고 정당 사회단체만을 상대하겠다고 또 트집이다.

번덕을 부리듯 이랬다 저랬다 하는 김일성의 작태는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의 장난기 같기도 하다. 그렇다고 우리는 김의 그 같은 망동을 웃어넘길 수 없다는데 민족적인 비극이 있다. 김일성의 터무니 없는 망동 속에는 남한공산화라는 무서운 독침이 숨겨져 있다는데서 그렇다.

북한은 「7·4 공동성명」을 남한과 함께 발표하고 정부차원의 대화를 여는체하다가 이를 봉쇄해 버리고 말았다. 그 동안 서울측은 총리회담을 비롯, 경제 문화 사회 체육 등 각 분야에 걸친 교류를 평양측에 수없이 요구해 왔다. 10일전만 해도 김용식 대한적십자사총재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추진을 위해 남북적 총재들끼리 만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제안들을 외면해 왔다. 이 모든 제안들에 등을 돌리고 있는 마당에서 나머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길이란 남북한의 최고책임자들이 만나 격의없이 털어놓고 양측이 당면한 문제와 통일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 밖에 없다. 전두환대통령의 「1·12」 및 「6·5」 제안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제의는 세계도처의 언론기관으로부터 분단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지지를 받고 있는데서도 실증되었듯이 최선의 실용적 선택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여기에는 응하지 않고 도리어 정부를 제쳐놓고 정당 사회단체들간에 「통일추진대회」를 개최하자느니 심지어는 남북한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까지도 추진대회를 통해 결정해야한다는 따위의 말을 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거래의 통일염원을 짓밟는 것이요, 세계여론에 귀를 틀어막는 소행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김일성이 택할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진지한 자세로 남북최고책임자회담에 나서는 길 뿐이다. 그것이 반만년 내려온 이 나라의 민족사가 지시하는 명제임을 알아야 한다.

「민통협」의 대북성명

- 중앙일보(1981. 8. 22) -

민족통일중앙협의회회의의 천관우의장은 20일 『북한당국이 온 거래와 국제사회의 이목을 속이려는 술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진정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한성명을 발표했다.

천의장은 이 성명에서 북한측이 정부당국을 배제한 가운데 정당·사회단체들간에 「통일추진대회」를 열자고 주장한 지난 8월 6일자 제의를 『평화통일과 이를 위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획책하려는 책략』이라고 규탄했다.

북한측의 8월 6일자 성명은 체육교류 및 남북한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도 통일추진대회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유령단체인 통혁당까지 이 회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원수와 정부를 제외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것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없다.

이것은 다시말해 그들의 대화기피를 위한 구실이며,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꿈꾸는 그들의 망집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북한사회가 공산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조적인 폐쇄사회이며 김일성일족에 의한 세습독재체제임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이런 북한에 통일문제를 논의할 무슨 정당이 있으며 사회단체가 있다는 말인가. 설혹 그런 단체들이 존재한다 해도 노동당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이 즐겨 쓰는 「대민족회의」 「정치협상회의」나 「통일촉진대회」 등이 토의를 위한 회의라기 보다는 흡사 군중집회화해서 정치선전장이 될 것은 누가 보아도 뻔하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북한측의 군중집회식 「대화」는 남북조절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때부터 대화거부의 구실로 이용한 그들의 상투적 수법이다.

더우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대표를 배제하고 정당·사회단체의 대표가 모인다 해서 어떻게 통일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북한측이 대규모집회를 고집하는 것은 「대화」거부에 대한 책임과 국내외의 지탄을 입시나마 모면하려는 얇은 술책이며, 한국내의 국론분열을 조장시켜 적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보려는 불순한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의 8월 6일자 제의의 이런 자가당착적인 논리적 모순을 보고 국제사회가 조소거리로 삼을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북한당국이 진정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도저히 실현시킬 수 없는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광장에 나서는 수 밖에 없다.

민족통일협의회 8·20성명은 순수 민간차원의 통일의지를 집약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응졸한 태도에 구애됨이 없이 넓은 아량으로 그들을 대하겠다는 포용성을 보이고 있다.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우리세대가 꼭 이룩해야할 민족지상의 과제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그의 체제를 상대방에 강요하려는 방식으로는 이 과제는 실현되지 않는다.

북한당국은 이 엄연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 지금이라도 전두환대통령의 획기적인 「1·12」 제의와 「6·5」 제의에 선듯 응해야만 한다.

대화의 광장에 나서는 길만이 6천만겨레의 통일에의 비원에 보답하는 길이며 민족사가 지시하

는 엄숙한 명제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북은 평화제외에 호응하라

- 「민통협」 성명은 6천만의 외침이다 -

-서울신문(1981. 8. 21) -

평화통일촉진 국민운동을 주도하는 순수민간단체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천관우의장이 20일 발표한 대북성명은 6천만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평화통일의지를 집약적으로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참으로 크다.

무엇보다도 이 성명이 북측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이목을 속이려는 술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고 경고함과 아울러 『그들이 겨레의 평화통일 염원에 부응하려는 자세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지난날을 탓함이 없이 넓은 아량으로 새로운 대화를 마련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힌 것은 우리정부의 「1·12」 및 「6·5」대북제의 기본정신에 따라 실천지향적인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 보려는 대승적 도량의 아낌없는 표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성명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최근 북한은 우리의 「1·12」 및 「6·5」 평화제외가 국내적으로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실을 보자 엉뚱한 모험을 또다시 시도하고 있다. 즉 우리 정부당국을 배제한 「민족통일 촉진대회」라는 것을 열자는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는가 하면 국내 및 재일교포사회 각계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장평화 「편지」 공세를 벌임으로써 남북간의 긴장을 어느때보다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허황된 적화통일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탓으로 해서 국제적으로도 조소의 대상일 따름인 그와 같은 치졸한 「민족자해」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북괴가 지난 6일 이른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제67차 회의라는 것을 열어 소위 「민족통일 촉진대회」란 군중집회를 갖자는 주장을 들고 나왔고, 그후 이 주장을 동조해 줄 것을 호소하는 「편지」 놀음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그 속셈이 너무나 명백하다. 간단히 말해 새로운 평화대안인양 이 「대화」를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대화거부 태도에 대한 국내외로부터의 지탄을 일시나마 모면해 보는 한편 위장평화 전략으로 내놓은 소위 「고려연방안」을 선전하여 우리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획책, 적화혁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보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정전반을 책임지며 조국의 평화통일 성취를 최고의 의무로 하는 우리의 국가원수와 정부를 배제하고 남북한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들의 주장 자체부터 도시 어불성설이거니와 이 주장을 들고나선 「조국전선」이라는 이름의 정체가 그들의 불순한 저의를 더욱 알기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북한내의 정당·사회단체가 총망라되어 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조국전선」은 사실상 북괴노동당의 직접적인 조종하에서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통일전선 공작을 전담하고 있는 허수아비 단체이다. 특히 이 조직은 지난날 6·25남침 19일전인 1950년 6월 7일 그의 이름으로 이른바 「평화

통일호소문」이라는 것을 발표, 「남북계정당·사회단체협의회」를 열자고 제의함으로써 임박한 전쟁도발을 은폐했던 범죄단체인 것이다.

이같은 본질과 내력을 지닌 「조국전선」을 북괴가 또다시 내세워 실현가능성도 없는 집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고, 더구나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의 현정부퇴진 및 용공정책의 채택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용어에 있어서도 그 개념이 애매모호한 「연방안」을 주의제로 토의하자고 강변을 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평화통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력과 폭력에 의한 적화야욕의 달성에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웅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볼때 북한은 도도히 흐르는 대세를 끝내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든 고아가 될 것이며, 또 만일 오판도발을 벌일 경우는 우리 국민의 굳건한 반공통일 의지와 우리 국군의 막강한 전력 앞에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크게 벌어져 가고 있는 남북한 경제력의 격차는 자신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도 교조적이며 폐쇄적인 전쟁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내부적 압력을 기필코 불러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파멸이나, 생존이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북괴는 이번 우리가 보여준 민족적 아량을 받아들임에 있어 더 이상 주저하지 말 것을 거듭 엄중히 촉구해 두는 바이다.

참된 대화와 통일로

- 「민통협」 의장의 대북 성명 -

-조선일보(1981. 8. 21)-

1

1948년에 북한의 평양에서는 「남북계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라는 이름의 쇼가 벌어진 적이 있다. 거기서 김구와 김규식 두 원로는 혹시 어떤 대화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입북을 결정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당도하고 보니 일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양김씨가 기대한 것처럼 「협상」은 남쪽사람과 북쪽사람의 1대 1의 의논이 아니라 완전한 「뒤범벅」이었다. 그리고 「대회」 자체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산당의 사전 각본에 따라 식순과 내용이 진행되었고, 남에서 간 사람들은 그저 그 중의 한 분자로 과묵히 박수나 칠 도리밖에 없는 「대회」였다.

공산당은 결국 이 「대회」와 「협상」을 저들의 통일전선전술의 한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며, 뒤늦게 그 저의를 알아차린 양김씨는 그후 제2차 참가초청은 단호히 거절했다.

북한이 지난 8월 6일 저들의 어용단체를 통해 내놓았다는 이른바 「통일촉진대회」라는 것도, 본질에 있어선 바로 그 해묵은 기만책동을 33년만에 다시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당국과 당국간의 정당한 대화를 기피하는 것도 그때와 다를바가 없고, 이쪽의 민간이 마치 용공적인양 상정하여

그쪽의 각본대로 움직여달라는 것도 그때하고 같다. 심지어는 「통혁당」이란 유명단체까지 이쪽 측의 한 「대표」로 행세하게 해달라니, 이것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한결음 더나간 억지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유치한 장난은 아예 일소에 붙여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한마디 안할 수도 없던 차에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천관우의장이 이쪽의 민간통일운동 세력을 대표하여 대북 성명문을 발표했다.

2

「성명문」의 내용을 일일이 다 인용하여 되풀이 할 필요도 없이, 북한은 이제 여기서 천명된 우리측 민간세력의 핵심적인 입장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첫째로, 우리측 민간 세세력은 대내적인 의견의 다양성과 정책의 차이 여하에 상관없이 북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는 완전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끼리야 이 당도 있고 저 당도 있고, 관도 있고 민도 있지만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점에 있어선 모두가 한결같으니, 북괴는 더 이상 공연한 이간책동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로는, 이 대공공동전선이 일치되게 채택한 남·북평화통일 방안은 「6·15제의」와 「1·12제의」이며, 우리측의 국가원수와 현존 정부를 제외한 채 「통일축진대회」 아닌 「적화축진대회」를 열자는 북괴의 억지는 철저히 규탄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북괴는 우리의 관·민과 5천만 민족, 세계의 양식을 더 이상 우롱하려 하지 말아야겠다. 「평화」통일을 운위하면서 실제로 「적화」를 꿈꾸고, 대화를 하자하면 이쪽의 당국과는 못하겠다 하고, 체육교류와 이산가족제회라도 알선하자 하면 대뜸 「적화축진대회」부터 먼저 열자고 하니, 이 어불성설의 작태엔 분노라기보다는 차라리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경직될대로 경직된 북괴관 세습왕조로서는 물론 자체의 명맥유지상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다급한 사정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자체의 모순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조금이라도 북괴에 사세판단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 아무런 통용력도 갖지 못한 해묵은 적화사술에 그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새 민족사를 여는 새로운 대화에 앞장서겠다」고 한 민통협의장의 성명에 평양당국은 하루속히 순응해야 마땅할 것이다.

북의 자세 전환하라

-민통협천의장의 대북성명을 보고-

-한국일보(1981. 8. 21)-

우리 개방사회의 대화목적은 「화합」에 있으나 오늘의 북한에서 보는 바와 같은 폐쇄사회의 경우는 대화자체가 「투쟁」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형편이다. 근본문제가 이점에서 고찰되는 가운데 평양측의 「8·6제의」와 우리측 민족통일중앙협의회 「8·20성명」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초당적, 범국민적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민족통일중앙협회의 천관우의장은 20일 대북성명을 발표, 북한측의 「8·6제의」에 내포된 불순한 저의와 불합리성을 날날이 지적하면서 그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였다. 나아가서 「북한측이 거래의 평화통일 염원에 부응하려는 자세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지난날을 더 이상 탓함이 없이 새 시대 새 민족사를 여는 새로운 대화를 마련하는데 넓은 아량을 가지고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민족의 기본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측은 지난 8월 6일 이러저러한 23개의 이름을 나열한 소위 「제 정당·사회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우리 정당당국을 배제하면서 남북한의 정당·사회단체 및 해외교포 대표들로 이른바 「민족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하여 그들이 일방적으로 거론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이나 남북간의 인도적 문제 및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문제 등을 「합작」과 「교류」의 일환으로 논의하자고 제의해 왔었다.

이에 대해 천관우의장은 북한당국이 우리측의 「1·12 및 6·5제의」를 모두 거부한 주제에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와 정부를 배제하고 남북한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시도를 가리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옳게 단정했으며, 또 그러한 제의가 국민의 분노와 국제사회의 조소의 대상으로 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적화통일 미몽깨고 새 대화에 호응해야

그리고 평양측이 언필칭 「제 정당 및 사회단체」등 명의를 표방하는 작태에 관하여 오늘날 북한사회가 1인독재체제도 부족하여 세습통치체제까지 다져가는 상황에서 「공산당의 조종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을 폭로·규탄한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에는 통일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측이 불순한 분열술책을 놓하는 대신, 현안해결을 위해 실효성있는 「대화의 광장」에 나오도록 촉구하였다. 온 거래의 평화통일 염원에 부응하도록 평양독재층의 반성을 촉구하는데 붙여 민족의 적극적인 「새로운 대화」마련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입장천명은 북한측의 아전인수격 상황판단과는 전혀 판이한 국민여론의 집약적 대변이라고 평가된다.

사실 북한측이 우리 정부당국을 배제한 가운데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열자고 선전한 것은 그들이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를 실효성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6천만 거래의 한결같은 염원에 대해 전혀 무성의함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군중집회식 「대회」로 통일문제를 다루자고 한 것은 진지한 토의 대신 그들이 노리는 「통일전선」선전의 저의를 드러낼 따름이라고 분석된다. 또 「합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협력의 뜻이 아니라 소위 「남조선혁명」의 조건 조성을 꾀하는 「결탁」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게다가 「촉진대회」에 「통혁당」이라는 남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단체를 참가시키라고 요구한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북한측이 현 시점에서 「8·6제의」같은 것을 내놓은 배경사정은 나름대로 상당히 착잡한 것들이 있으리라고 관측케 한다. 즉 그들은 우리측의 「1·12 및 6·5제의」가 국내외에

걸쳐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대해 당황하면서 대화거부의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시도했음이 짐작된다. 이에 결들여 「밑으로부터의 통일전선」 형성이라든지 우리측의 내부 분열 등을 망상한 것으로 분석되거나와 부질없는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북한측은 마각이 드러난지 오랜 상투적 술책을 걷어 치우고 우선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 회담에 호응해 마땅한 것이다. 더 이상 긴장상태를 격화시키지 말아야 하며, 또 낭비적인 소모전을 거듭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처량한 생활수준을 더욱 형편없이 도탄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일이다.

민족통일이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상명제인 이상, 상호 신뢰회복에 이바지하는 대화재개와 평화정착속의 교류·협력확대는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게 마련이다. 북한측이 하루속히 교조적 미몽에서 깨어나 6천만 동포들의 한결같은 평화통일 염원에 부응하도록 거듭 촉구해 마지않는 바이다.

제2부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0주년

1.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0주년에 즈음한 대한적십자사 총재 성명

금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김용식총재는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0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여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0년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온 인도주의적 입장을 재천명함과 동시에 남북적십자인들이 새로운 다짐으로 이산가족들의 인간적 고통을 해소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총재는 동성명에서 지난날의 남북적십자회담의 경과에 대하여 세삼스럽게 시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떠한 장소에서든 북한적십자회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북한적십자회 측에서 호응만 한다면 오늘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적십자국제회의시에 남북적십자대표 사이에 호의적인 접촉과 대화를 가져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총재는 이 성명에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측이 회담장에 나오도록 인내와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김용식총재의 「8·12」 특별성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0주년(「8·12」)에 즈음한 대한적십자사총재 성명문

오늘은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제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의 제의로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은 한 때 내외의 성원에 힘입어 휴전선을 넘어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는 본회담으로까지 발전함으로써 이산가족들로 하여금 재회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을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희망마저 부풀게 했습니다. 그러나 1973년 8월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대화 중단 선언으로 말미암아 모처럼 열렸던 서울 평양 사이의 통로가 또다시 굳게 닫혀지고 적십자 정신에 입각한 순수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에 대한 기대마저도 물거품처럼 사라진 채 10년의 세월이 경과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 환경은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나라사이에도 서로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와서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공산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포들과 가까운 이웃처럼 자유로운 통신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남북한간에만 아직도 한 강토안에서 부모자식간에 안부편지 한장 주고받지 못하는 실로 가슴아픈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과 상호방문을 북한당국에 제의하고 남북간의 무조건 대화재개와 남북한간의 사회개방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금번 새로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직을 맡게 된 본인은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날의 남북적십자회담 경과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시비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남북적십자인들이 새로운 다짐으로 더 늦기전에 이산가족들의 인간적 고통을 해소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본인은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본인이 언제 어떠한 장소에서든 북한적십자회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쌍방 적십자간의 합의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관문점 회담연락사무소의 운영과 서울·평양의 쌍방 적십자사간의 직통전화 운용등은 응당 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본인의 기대에 북한적십자회측의 긍정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북한적십자회측에서 호응만 한다면 오는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적십자 국제회의시에 남북적십자 대표 사이에 호의적인 접촉과 대화를 가져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측이 회담장에 나오도록 인내와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198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용식

이같은 김총재의 성명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적십자정신에 따라 남북간의 순수한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1천만 이산가족들의 비원을 풀어주고 민족의 통일염원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려고 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성실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북한적십자회측의 조속한 호응을 촉구하였다.

국내 각 신문들은 이러한 국민여론을 집약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대변하였다.

8·12제의 10주년

-민족의 합성과 역사의 법칙에 겸허해야-

-동아일보(1981. 8. 12)-

고 최두선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을 찾아주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자고 북한적십자회측에 제의한지도 12일로 10주년을 맞았다.

「적십자정신에 따라 남북간의 순수한 인도적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남북적대표들이 한자리에 마주앉아 의논하자고 1971년 8월 12일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 제안은 이틀후에 북적측에 의해 수락되었고 판문점에서 곧 예비회담이 열리기 시작, 꼭 1년만인 1972년 8월 29일에는 대한적십자사 회담대표단 일행이 휴전선을 넘어 역사적인 평양방문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10여일 후에는 북적대표단 일행이 서울에 내려왔다.

당시 한적대표단을 평양으로 보내고 북적대표단을 서울에서 맞이하였던 남한동포들의 순박한 마음에는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들이 금방이라도 서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부푼 기대로 꽉 차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두 번째로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북적측은 느닷없이 남북적십자회담을 하려면 먼저 남한에서 반공법과 서적 그리고 반공교육 등을 중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법률적 사회적 장애제거」를 들고 나섰던 것이다.

북적측의 선행조건들은 김일성집단이 남북적회담을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위해 연 것이 아니라 대남적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부닥쳐 1천만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적회담은 제안된지 11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나 단 한사람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1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일 뿐 아니라 6천만 이 겨레의 비극을 상징한다. 우리와 함께 2차 세계대전 말 분단된 동서독의 경우 양측은 헤어진 이산가족끼리 서로 만나고 싶으면 언제나 선물 꾸러미를 한아름씩 안고 상대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 동서독도 이데올로기상으로 자본주의대공산주의로 대결돼 있어 우리와 똑같은 데도 그쪽에서는 이산가족들의 내왕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 한민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벽을 쌓고 대결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 오직 김일성과 그를 떠받들며 특권을 누리는 일부 추종자들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적회담을 대남적화의 수단으로 김일성이 받아들인지 10년이 지났으나 남한은 적화되지 않고 도리어 경제적 급성장을 이루어 그 어느때 보다도 반공정신으로 충만해 있다. 남북적회담을 이용한 김일성의 대남적화전략의 완전한 실패를 말한다. 김의 「6·25」남침이 폭력수단에 의한 적화전략의 실패였다면 남북적회담을 통한 대남적화책략은 위장평화공세에 의한 적화전략의 실패였음에 틀림없다.

김일성의 되풀이되는 그같은 대남적화전략의 실패는 피비린내나는 동족상쟁과 뼈를 깎는 이산가족들의 아픔, 그리고 남북한의 긴장고조만을 남겨 놓았다. 그밖에 더 추가한다면 김일성의 이상화와 김정일 세습제 뿐이다.

그러나 김일성의 이상화나 김정일 세습제는 김일성의 죽음과 함께 동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역사발전의 기본법칙이라고 할 때 마지막 남게 되는 것은 동족상쟁의 상처와 1천만 이산가족의 고통뿐이다. 김은 정권이란 변해도 민족은 변하지 않으며 역사는 정지하지 않고 변전한다는 진리를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않으니 김일성은 민족의 합성과 역사의 법칙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여 생이별한 혈육의 아픔을 씻어주고 민족화합의 공감대를 시험할 남북적십자회담에 응하여야 한다. 이미 한적측에서는 그동안 수 없이 북적측에 회담재개를 촉구해 왔거니와 신임 김용식 대한적십자사총재도 남북적회담을 열자고 제안하였다. 김총재는 남북적회담제안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날의 일을 탓하고 싶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북적총재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남북한 직통전화를 정상화하자고 다그쳤다.

지난날을 탓하지 않을 터이니 오직 내일을 위해 만나자는 김총재의 호소는 한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6천만 이 겨레의 목소리이다. 북적측의 서슴없는 호응을 촉구할 따름이다.

「8·12제의」 10주년

-김 한적총재 성명과 관련하여-

-조선일보(1981. 8. 12)-

1

어제 12일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날로 1971년 8월 12일로부터는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오늘의 시점에서는 아직 분명히 잘라 말할 단계가 안됐다 할지라도 더 좀 세월이 흐른 어느때에 가면, 1971년 8월 12일은 획기적인 대사건의 날로 똑똑히 역사에 기록되게 될 것이다. 대한적십자사가 북에 대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이 제의를 계기로 4반세기가 지나도록 등을 돌려대고 있던 남과 북이 서로 마주앉아 적십자 예비회담을 갖고 이를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는 본회담으로 발전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7·4공동성명을 탄생시키고, 조절위를 발족케 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대화의 막이 열리게 됐던 것이다.

이 「8·12제의」 10주년을 맞아 김용식 신임한적총재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적측에 대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면서 ①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북적십자 총재회담을 열 용의가 있으며 ②남북직통전화와 관문점 연락사무소의 운용을 회복해야 하며, ③11월 마닐라 적십자국제회의에서 남북한 접촉과 대화를 가질 것을 바란다고 제의하고,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 북적측이 회담장에 나오도록 인내와 성의를 다하겠다고 한적총재로서의 기대와 희망을 피력했다.

우리는 1972년 7·4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본격화한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 당시의 감격과 흥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거니와, 이 감격도 1년만인 1973년 8월 북측의 일방적 대화중단 선언으로 무산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8·12제의」 10주년을 맞으면서 1천만 이산가족의 인간적 고통을 같은 아픔으로 되씹지 않을 수 없다.

2

북적측은 성실을 다한 이번 촉구에 대해서도 여전히 외면으로 일관할 것인가. 모든 것을 초월

해서 같은 동포로서 겪고 있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줄여주자고 한 적십자회담이 열리자 북적측은 난데없이 「남조선의 법률적·사회적 조건 환경개선」이 선결조건이며, 이것이 이행돼야 적십자회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적십자회담의 정치화를 획책했다.

이로써 순수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져야 할 적십자회담은 개최와 함께 암초에 부딪치고, 그들은 그나마 1년만에 일방적으로 이를 끊어버리는 폭거를 자행했다. 그 후 한적은 끊어진 회담을 잇고자 무던히 노력해 왔다.

실은 이번 김총재가 용의를 표방한 남북적십자 총재회담 사안만 해도 1978년 「8·12」 7주년기념일에 한적측이 이미 제기한바 있으며, 쌍방 수석대표 면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먼저 60세 이상의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재회라도 실현시키자, 판문점에 이산가족 면회소와 우편물교환소를 마련하자, 명절에 성묘방문단을 교환하자, 이것도 저것도 사정이 있어 어렵다면 이산가족간에 사진이라도 교환해서 답답함의 일부나마 덜어주도록 하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해 왔다.

남한과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이에 벌써부터 국제전화가 개설되고 그밖의 공산권과도 통신 우편물이 오가고, 중공땅에 있던 동포가 조국의 가족품에 안기고, 사할린동포가 고국의 친척에게 선물을 보내오는 오늘임에도 유독 이산가족의 피맺힌 한을 외면한 채 왜 이렇게 북녘땅만이 같은 피붙이, 핏줄앞에 차가운 담을 높이 쌓고 적의에 찬 등을 돌려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8·12제의」 10주년의 한적측 제의와 촉구에 우리는 다시 한번 커다란 기대를 가져본다. 이 호소와 설득은 민족을 적대 아닌 화해로, 조국을 분열 아닌 통일로 가게 하는 절실한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적총재의 폭넓은 제의

-중앙일보(1981. 8. 13)-

국토가 분단된지 올해로 36년, 오늘 남북의 이념·체도의 차이는 우리가 언제 다시 한나라를 이룩할 수 있을지 암담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그렇다고 통일에 대한 희망과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남북의 「민족적 동질성」이 언젠가는 우리의 소망을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다방면에 걸친 남북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남북적회담체의 10주년을 맞는 12일에도 『언제 어디서나 만나 이산가족 재회문제를 논의하자』는 김용식 한적총재의 제의가 있었다.

김총재는 이 제의에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외국과도 문호를 개방하는 국제환경속에서 유독 남북한 사이에는 부모·자식이 안부편지 한장 주고 받지 못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지적했다.

사실 명절때만 되면 서로 가족과 친척을 방문하는 동서독의 긴 자동차행렬을 보면 비록 땅은 갈라졌어도 독일민족은 하나라는 그들의 긍지를 엿볼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결국 분단의 나날이 길어질수록 민족적 동질성의 유지는 어려워질 것이며 그럴수록 남북은 방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대화해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남북적십자대표는 지난 1972년 6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서 상호방문과 상봉, 서신왕래, 그리고 재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이것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혈육의 재회라는 인류적 요구였다는 점에서 절실하고도 수월한 문제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북한측이 의제 토의에 앞서 한국내의 법률적 사회적 환경개선이 앞서야 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와 실행되지 못하고 회담마저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른 것이다.

북적측은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의 적십자회담을 그들의 정치선전무대로 이용하며 적십자사의 권한과 능력밖의 일을 고집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회담을 통해 우리의 체제나 이념을 북쪽에 강요하거나 반대로 북쪽의 그것을 받아들일 의사는 추호도 없다는 전제와 원칙을 천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의 통로를 개설하면서 남쪽 체제의 동요를 기대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오히려 북쪽 폐쇄사회의 혼란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순수한 인도주의적 이산가족문제도 공산혁명의 한 방편으로 삼으려던 북한측의 저의가 벽에 부딪친 것이다.

이 벽을 깨뜨리려면 북한측이 남북적십자회담 본래의 목표로 회귀하는 길 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는 남북간의 상호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북한측도 제일동포를 받아들이고 일본인처까지 이주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의 안부편지 교환을 그리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 걸핏하면 민족분열의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민족의 동질성을 찾자는 우리 제의에 외면할 명분도 없는 것이다.

한적측은 이번 제의에서 회담이 중단된 과거의 경과는 새삼스럽게 시비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북적측은 새로운 각오로 대화에 나올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북괴는 언제까지 인도주의를 외면하려는가

-한적총재의 대북성명과 귀환어부회견을 보고-

-경향신문(1981. 8. 12)-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에 임하는 기본입장은 무엇보다도 남북한간에 상호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민족의 화해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하자는데 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김용식 대한적십자사총재가 8·12제의 10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기분, 새로운 차원에서 이산가족들의 인간적 고통을 해소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언제 어떤 장소에서든 북한적십자회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정부의 인도주의적 기본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김총재는 특히 이 8·12대북성명에서 새로이 그 직을 맡게된 이 마당에 지난날의 남북적십자회담 경과에 대해 새삼스럽게 시비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하고 판문점 회담연락사무소의 운영과 서울·평양의 쌍방적십자간의 직통전화운용의 정상회복을 촉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적십자 국제회의때 남북적십자대표가 호의적인 접촉과 대화를 가져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따지고보면 지금까지 남북적십자회담이 중단된 까닭은 북한측이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가 아닌 공산혁명의 한 방편으로 보아 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인도나 평화운운은 소위 「남조선해방」 「남조선 혁명」이라는 정치술수가 전부였음이 그것을 말해 준다.

북으로 끌려갔던 제2대창호 선원 17명이 귀환회견에서 증언한 내용중에도 이러한 거짓 인도의 탈을 쓴 북한의 음흉한 간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소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사람들이라는 자가 우리 어부들에게 「남한에 내려가거든 혁명사업에 협조하고 전쟁이 나면 무장봉기를 하라」는 지령까지 내렸다니 그들의 평화통일운운이 얼마나 위장된 허위 선전구호인가를 알 수 있다.

또 북괴가 지난날 남북적십자회담에 임한 목표를 따져 볼 때도 처음부터 그들은 이 회담을 자신들의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 회담을 이른바 정치적 합작의 한 형태인 정치협상회의 또는 대민족회의, 연방제의 실현에 두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북한이 적십자회담중에 주장한 내용들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한국안에서 북한요원의 공산주의 활동을 보장하고 주한 미군철수와 모든 반공정책을 포기하라는 등 소위 「법률적 사회적 조건개선론」을 들고 나오기까지 했다.

이런 북한주장이 관철될 수 없음을 알자 그들은 끝내 서울~평양 왕래회담을 기피해 버렸고 그 대화중단 책임이 우리쪽에 있는양 대남모략선전에 광분해 왔던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중단시킨 또 다른 이유는 북한체제의 취약성 때문임은 말할것도 없다. 특히 남과 북의 현격한 국력격차가 드러남으로써 북한체제의 취약성이 백일하에 공개되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세습왕조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은폐 무마하려 혈안이 돼 왔던 것이다.

노부모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비롯해서 판문점에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를 설치하며, 추석을 이용한 성묘방문단 교환, 노부모와 이산가족들간의 사진교환제의 등을 모조리 거부해 온 북한이 또다시 무슨 「민족통일축진대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들의 상투적이고도 교활한 통일전선 전략 작태가 어느정도인지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멀리 중공이나 소련 등 공산국가를 포함한 세계 어디에서고 국내외의 가족친지들이 서신교환은 물론 자유로운 상호방문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도 유독 남북한의 이산가족들만이 생사 조차 알지 못한채 30여년을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측은 이제라도 참다운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아가 이산가족의 비원을 풀어 주려는 6천만 겨레의 간절한 소망에 조건없이 부응해야 마땅할 줄 안다. 그리고 더 이상 무고한 어부들을 남치해다 세뇌공작을 시키는 등의 부질없는 짓을 그만두고 즉각 남북대화의 광장으로 나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둔다.

언제 어디서라도 만나자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0주년 맞이-

-서울신문(1981. 8. 12)-

남북한관계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새 장을 열었던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재회를 위한 남북회담」 제의 10주년을 맞는다. 지난 1971년 8월 12일 한적 최두선총재는 『남북으로 갈라진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남북한적십자회담』을 열자는 획기적 대북제의를 발표했던 것인데, 북적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1954년의 「제네바」 회담 이후 최초의 남북회담이 성립되었던 그 감격은 아직도 우리에게 새롭다.

확실히 한적의 「8·12제의」에 따른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는 한반도의 안정과 전쟁재발방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초부터 강화된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동해안 침투사건 및 미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등으로 대표되는 갖가지 무력도발이 빈번히 일어났으며 이로써 한반도에는 전쟁재발의 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정부는 대화와 협상의 길을 택했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대통령이 『분단의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획기적 내용을 제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꼭 10년전인 1971년 8월 12일 한적의 「남북적십자회담」안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때마침 국제적으로 전개되던 긴장완화(데탕트)의 압력이 북한에도 거세게 밀어닥치자, 전쟁노선의 김일성집단도 그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이로써 역사적인 남북적십자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렸고 이 바람 위에서 1972년 7월 4일 민족사의 커다란 이정표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조절위원회가 열렸던 것이다.

남북협상의 두 통로인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에 대한 민족적 성원은 참으로 컸다. 한 민족의 자체 역량에 의해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고, 그 강요된 이별에 가슴이 멎들어 있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가 이뤄지며 더 나아가 평화가 제도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갈라진 겨레의 재결합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마저 부풀었다.

그러나 평양은 이러한 민족적 기대를 저버리기 시작했다. 남북회담이 긴장의 완화를 가져오게 되면 김일성 집단은 결국 대남전쟁 노선을 포기해야 하며, 그 경우 전쟁준비를 명분삼아 구축해 온 독재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길게 생각할 틈도 없이 남북회담은 필연적으로 북한폐쇄사회에 자유의 바람이 흘러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써 그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당장의 과제가 되었다.

여기서 북한은 남북회담 그 자체의 와해를 추구했다. 한국이 연공정책을 써야하며 국가보안법·반공법을 폐기해야 하고 「민주인사」가 집권해야 회담에 응하겠다는 등 그 저의가 의심스런, 이른바 선행조건들을 내걸었다. 그뿐 아니다. 엄연한 대화의 창구를 외면하면서 군중집회 방식의 「대민족회의」나 「전민족회의」나 따위를 들고 나왔다. 인도적 차원의 적십자회담자체도 거부했다.

북한의 이러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민족문제를 민족자체의 역량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초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점은 전두환대통령의 1981년 1월 12일자 대북제의와 1981년 6월 5일자 대북제의에서 명백하다. 「1·12제의」에서는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를 기탄없이 다루기 위해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서울과 평양을 상호방문하자』고 했으며, 「6·5제의」에서는 그의 실현을 위한 회담의 시기와 장소 및 의제를 『북한측이 임의로 결정해도 좋다』고까지 했다.

역사적인 「8·12제의」 10주년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남북대화가 어떠한 형태로든 하루빨리 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시기와 장소 및 의제에 구애됨이 없이 북한대표와 만나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흥금을 털어 놓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 북한당국이 민족적 양심을 되찾아 우리의 성실한 제의에 응해 줄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북한측에 인도있는가

-남북어부 학대와 8·12열돌에 묻는다-

-한국일보(1981. 8. 12)-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을 반영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동포애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1천만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북한적십자사에 제의한 것은 1971년 8월 12일의 일이므로 오늘로 어언 열돌을 셈하게 된다. 그 적십자회담이 북한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중단된 가운데, 어제 진행된 제2태창호 귀환선원들의 합동기자회견 보도에 접한 우리의 심정은 분노와 더불어 착잡하기 그지없다.

원래 한적이 북적에 대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기본 취지는 우선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

월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이 과정에서 상호접촉과 교류를 넓히고 신뢰회복에 이바지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자는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적십자회담의 「정치협상화」에 골몰했으며 모처럼 1972년 8월에 햇볕 본 본회의를 1973년 8월부터 외면하더니 1978년 3월에 이르러서는 실무접촉마저 중단시키고 말았다. 그들은 인도주의 차원과 동떨어진 저의있고 내정간섭적인 이른바 「법률적·사회적 환경개선」론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환언한다면 북한측은 적십자회담마저 소위 「남조선혁명」에 연결시켜 보고자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으니 중단시킨 것이었다.

하나 인도적 차원의 분리고통 경감과 민족적 소명인 평화통일 접근은 우리 시대의 지상목표이기에 정의와 인내를 다해 굳게 닫힌 북녘 폐쇄사회의 문을 거듭 두드리는 동안 언젠가는 북한측에도 상응한 자가성찰이 형성되리라는 것이 우리의 줄기찬 기대다.

그럼에도 평화적으로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제2태창호의 납치·억류·세뇌의 실정과 이른바 「공작지령」의 내용, 그리고 선원들이 목격한 북한 내부의 전쟁준비상 등은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아직도 비인도적, 반민족적인 무력적화통일 야욕에 집착해 있음을 거듭 통감케 한다. 북한측은 지금껏 우리 어선 33척과 어부 4백50명을 강제 억류중이거니와 이번에 송환된 제2태창호의 억류기간도 무려 8개월에 달했던 터이다. 일본 어선이라면 수일 내에 석방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태창호 선원들의 합동기자회견에 의하면 북한측은 애당초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들이 강요한 소위 「사상학습」이니 「담화사업」, 「개별조사」, 「노래공부」, 「영화관람」, 「학습여행」, 「회견연습」 따위는 어느 것이나 적화세뇌와 억지 개인숭배주입 아닌 것이 없었다. 나아가서 북한은 간첩교육에다가 유사시의 무장봉기등 「공작지령」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또 북한측은 제2의 광주사태같은 것이 발발하면 곧바로 남침개입할 뜻을 공언했다는 것이고, 북한 전역을 살벌한 전쟁분위기에 빠져들게 했다는 소식이다. 주민생활을 보면 어부들을 괴롭힌 이른바 「공작지도원」 조차 겨울내내 단벌옷이었고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중에는 목탄차가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고 한다.

요컨대 북한측은 북한 주민들의 희생위에 남침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으며 우리 측의 어선 납북도 어부들을 간첩·과괴 공작요원으로 만들어 보려는데 주안이 설정되었음을 관측케하는 실정이다. 또 그들은 한국(남한)정세에 관하여 엉뚱한 오관을 고집하는 꼴이다.

하나 우리 개방사회에는 유연하면서도 강인한 생활력이 있으며, 특히 북한에 없는 자유와 번영과 인정 그리고 생활수준의 윤택성이 뚜렷하다. 우리품에 되돌아 온 어부들의 결의가 넘실한 애국심과 생존권 수호를 다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우리 모두는 북한측의 집요한 남침준비와 과괴활동 시도에 대해 방심할 수 없는 입장이며, 이번과 같은 일에 제회할 때마다 유비무환의 다짐을 새로이 한다. 북한측의 비인도적 반민족적

처사는 그들에게 역효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북한측은 정세오관과 무력적화 등 부질없는 미몽에서 깨어나,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적십자회담의 무조건 재개에 호응해야 마땅할 것이다. 도대체 적대국간의 전투환경에서도 쌍방적십자간의 대화는 누구도 거부 못하는 것이 문명인류의 공리가 아닌가 말이다. 겨레의 염원과 시대의 진운을 바로 인식, 남북대화에 빨리 호응하도록 평양측의 대오각성을 촉구해 마지않는 바이다.

2. 남북적십자회담 주요일지

1970. 8. 15 박대통령, 8·15선언 :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고 남북간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 용의 표명과 선의의 경쟁을 제의
1971. 8. 12 한적 최두선 총재, 남북간의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8. 14 북적,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수락, 쌍방 2명의 파견원을 통한 8. 20. 12:00 판문점에서 문서교환제, 한적 수락
8. 15 박대통령, 가족찾기 회담 적극지원 다짐.
8. 20 남북적십자 제1차 파견원 접촉(판문점) : 쌍방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및 수락문서교환
8. 21 한적, 예비회담절차 제의
- 제1차 예비회담 : 9. 28. 11:00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 구성 : 쌍방 각 5명의 대표단
 - 대표단 명단교환 : 9. 24. 12: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의제토의 : 예비회담에서 토의
 - 토의사항 : 본회담 절차
8. 26 남북적십자 제2차 파견원 접촉(판문점) : 한적의 예비회담 절차 제의(8. 21자)전달
8. 27 북적, 한적의 제의에 대한 수정제의
- 제1차 예비회담 : 9. 20. 11:00
 - 대표단 명단교환 : 9. 16. 12:00
8. 30 남북적십자 제3차 파견원 접촉 : 한적, 북적의 수정제안 문서(8. 27)접수
8. 31 한적, 북적의 수정안 수락
- 제1차 예비회담 : 9. 20. 11:00
 - 장소 :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대표 : 각 5명
 - 대표명단 교환 : 9. 16. 12:00
9. 3 남북적십자 제4차 파견원 접촉(판문점) : 한적, 북적의 수정제의(8. 27)에 대한 수락성명문 전달
9. 15 한적,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대표 명단 발표

- 9. 15 북적,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대표 명단 발표
- 9. 16 남북적십자 제5차 파견원 접촉 :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대표단 명단 교환
- 9. 16 대한적십자사, 전방 회담사무소 설치(판문점 남방 11km)
- 9. 20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 : 한적, 예비회담 진행절차 7개항 제의, 북적, 예비회담 절차 무시하고 본회담에 관한 의제 제안

<합의사항>

- 예비회담 장소 :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 상설 「회담연락사무소」 및 직통 왕복전화 설치

- 9. 22 남북적십자, 상설회담연락사무소 설치 및 쌍방 연락사무소를 잇는 남북직통전화 개통
 - 한적 : 자유의 집
 - 북적 : 판문각
- 9. 29 남북적십자 제2차 예비회담 : 예비회담 진행절차 합의, 한적, 본회담 개최장소 서울, 평양으로 제의

<합의사항>

- 예비회담 진행절차에 관한 8개사항
- 예비회담의 의제토의 순서

- 10. 6 남북적십자 제3차예비회담 :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장소 서울, 평양으로 합의, 한적이 제의한 본회담 장소 결정에 따른 「18개항의 추가의제」를 기타 진행절차 사항에 포함, 토의키로 합의
- 10. 13 남북적십자 제4차 예비회담 : 본회담 개최 일시 문제토의
 - 한적 :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예비회담 마지막에 결정할 것을 주장
 - 북적 : 1972. 12. 10 10:00 개최주장
- 10. 20 남북적십자 제5차 예비회담 : 본회담 개최 일시 문제토의
- 10. 27 남북적십자 제6차 예비회담 : 개최 일시문제 토의를 일단 뒤로 미루기로 의견일치, 본회담의제 토의
- 11. 3 남북적십자 제7차 예비회담 : 본회담 의제토의
 - 한적 : 가족찾기 문제의 우선적 해결이 타당함을 설득
 - 북적 : 가족, 친척, 친우 포함주장, 한적, 북적 대표단 및 수행원 오찬초대

- 11. 11 남북적십자 제8차 예비회담 : 본회담 의제토의
 - 한적 : 「가족찾기운동」이 우선적으로 본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설득
 - 북적 : 가족, 친척, 친우의 자유왕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
- 11. 19 남북적십자 제9차 예비회담 : 본회담 의제토의
 - 한적 : 폭넓은 가족범위 시사
 - 북적 : 가족, 친척, 친우들의 자유왕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종전태도 고집
- 11. 24 남북적십자 제10차 예비회담 : 본회담 의제토의
 - 한적 : 가족범위에 북적측이 생각하는 친척의 일부도 포함된다고 시사
 - 북적 : 종래의 3개항 제안을 계속 고집
- 12. 3 남북적십자 제11차 예비회담 : 본회담 의제토의
 - 한적 : 가족, 친척, 포함하는 6개항의 수정안 제의
- 12. 10 남북적십자 제12차 예비회담 : 본회담 의제토의
 - 한적 : 제11차 예비회담서 제의한 수정안 수락을 촉구
 - 북적 : 한적의 수정안에 접근된 내용의 3개항의 수정안을 제시
- 12. 17 남북적십자 제13차 예비회담 : 본회담 의제토의
 - 한적 : 합리적이고 정당한 한적의 수정안 수락을 설득
 - 북적 : 자유왕래 선결을 고집
- 1972. 1. 1 박대통령, 신년사에서 남북적십자회담 적극 지원을 다짐.
 - 1. 10 남북적십자 제14차 예비회담 : 본회담 의제토의
 - 한적 : 남북 이산혈육의 고통 해소사업의 시급성 강조
 - 북적 : 자유로운 왕래 계속 고집
 - 1. 11 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지원을 다짐
 - 1. 19 남북적십자 제15차 예비회담 : 본회담 의제토의
 - 한적 : 본회담의제를 매듭지을 것을 촉구
 - 북적 : 자유왕래 선결을 계속 주장
 - 1. 28 남북적십자 제16차 예비회담 : 본회담 의제토의
 - 한적 : 공동사항을 단일문안으로 작성하자고 제의
 - 북적 : 제17차 예비회담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키로 동의
 - 2. 3 남북적십자 제17차 예비회담 : 본회담 의제토의
 - 한적 : 본회담에 의제에 대한 3개항의 새 수정안 제시

- 목적 : 본회담 의제에 대한 3개항의 새 수정안 제시
 - 2. 10 남북적십자 제18차 예비회담 :본회담 의제토의
 - 한적 : 상호 접근된 의제를 정리하는 실무적인 토의작업의 필요성을 역설
 - 목적 : 「알선」이라는 용어는 제한성이 있다고 주장
 - 2. 17 남북적십자 제19차 예비회담 : 본회담 의제 문안정리를 위한 실무회의의 개최를 합의
 - 2. 21 제1차 본회담 의제문안정리를 위한 실무회의
 - ※ 6월 5일까지 13차 실무회의 진행
 - ※ 본회담의제 문안정리작업완료, 쌍방 고위급인사교환 방문
 - 6. 16 남북적십자 제20차 예비회담, 본회담 의제합의
 - 7. 4 남북공동성명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
 - 7. 10 남북적십자 제21차 예비회담, 본회담 대표단 구성문제 토의
 - 7. 14 남북적십자 제22차 예비회담, 본회담 대표단 구성문제 토의
 - 7. 19 남북적십자 제23차 예비회담, 본회담 대표단 구성문제 합의
 - 남북적십자 제1차 본회담을 1972년 8월 5일에 개최키로 원칙적으로 합의
 - 7. 26 남북적십자 제24차 예비회담,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 토의를 위한 실무회의 구성에 합의, 통신 실무회의 개최에 합의
 - 7. 27 제1차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를 위한 실무회의
 - 8월 9일 제3차 회의까지 진행
 - 장소 :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 8. 11 남북적십자 제25차 예비회담(종결) :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 합의
- <합의사항>
-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 합의확정
- 본회담 일시 :
 - 제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 1972. 8. 30. 10:00 평양에서 개최
 - 제2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 1972. 9. 13. 10:00 서울에서 개최
- 8. 15 박대통령, 8·15경축사에서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태도를 촉구

- 8. 17 한적,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대표단 명단발표
- 8. 18 남북적십자 본회담용 직통전화(서울~평양간) 20회선 가설
- 8. 22 이후락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북적대표단 일행의 신변보장에 관한 성명 발표
- 8. 23 북한 사회안전성, 한적대표단 일행의 신변보장에 관한 성명발표
- 8. 24 남북적십자 쌍방은 신변보장 성명문을 교환(관문점)
- 8. 25 한적, 남북적십자 제1차 본회담 참가자 54명의 명단통보
- 8. 25 남북적십자 중앙기관간 직통전화 개통
- 8. 29~9. 2 남북적십자 제1차 본회담(평양)

<합의사항>

- 의제 5개항의 확인채택
- 7·4공동성명 정신과 적십자 원칙에 기초하여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주고, 통일
일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
- 쌍방 대표 7명,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수행취재기자 20명(한적 : 수석대표
이범석 북적 : 대표단장 김태희)

- 9. 12~16 남북적십자 제2차 본회담(서울)

<합의사항>

- 의제해결에 민주주의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남북공동성명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
- 제3차 회담부터는 의제토의 진행
제3차 회담일자 : 1972. 10. 24(평양)
제4차 회담일자 : 1972. 11. 22(서울)

- 10. 23~26 남북적십자 제3차 본회담(평양),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주
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토의 개시

<합의사항>

- 수행취재기자 5명 증원키로 구두합의

- 11. 22~24 남북적십자 제4차 본회담(서울)

<합의사항>

-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관문점 공동사업소 설치
- 동 기구의 기능과 운영절차 및 구성을 따로 토의 결정
- 그밖의 필요한 기구는 앞으로 토의 결정

1973. 3. 20~3. 23. 남북적십자 제5차 본회담(평양)

<합의사항>

- 남북적십자 제6차 본회담 일자결정(5. 9~10:서울)

5. 8~11 남북적십자 제6차 본회담(서울)

<합의사항>

- 남북적십자 제7차 본회담일자 결정(7. 11)

7. 10~13 남북적십자 제7차 본회담(평양) : 한적, 추석성묘단 교환 방문을 제의, 북적 거부

- ※ 제8차 본회담일자합의 실패, 직통전화를 통해 협의키로 하였으나 북적측의 기피로 본회담 중단

8. 28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영주, 남북대화 일방적 중단 선언

11. 15 한적, 제8차 적십자회담의 연내개최 협의를 위해 쌍방 연락 책임자 회의를 11. 16 관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의

11. 17 북적, 11. 21. 10:00 관문점에서 연락책임자 회의를 갖자고 수정 제의, 한적 수락

11. 21 남북적십자 쌍방 연락책임자 회의(10:00~10:50)에서 한적이 제8차 본회담을 12. 19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며 북적은 다음 연락책임자 회의에는 본회담 대표1명 참석을 제의

11. 28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회의(관문점 10:00~11:30) : 북적, 한적의 12. 19 제8차 본회담 서울개최 제의를 거부

12. 13 한적, 제8차 본회담 개최 수락촉구 서한을 북적측에 발송

12. 21 북적, 이른바 「분위기」 내세워 제8차 본회담 평양 개최 주장(전화통지문)

1974. 2. 25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관문점 중감위 회의실)

- 한적 : ① 2. 15 서해 어선 격침 및 납치사건에 대한 인도적 조치 촉구(피랍 어부명단 요구)
- ② 제2차 본회담을 1974. 4. 9~10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목적 : 한적측 제의 외면

3. 11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목적측 : 한적측의 1974. 4. 9~10 제8차 본회담 서울개최 제의를 거부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문점 본회담 예비회의 개최를 제의
 - ① 쌍방대표단 부단장을 책임자로 구성
 - ② 본회담의정에 대한 예비적 토의 진행

4. 3 제4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한적 : ① 남북적십자 쌍방과 적십자 국제위원회의 3자로 구성되는 억류어부 공동조사단을 북한에 있는 억류 현장에 파견할 것을 제의
 - ② 다음과 같이 판문점 본회담 임시회의 개최를 제의
 - (가) 제8차 본회담 개최문제를 협의, 본회담 의제를 토의
 - (나) 쌍방 대표단의 수석대표가 참가
- 목적 : 한적측 제의 거부

4. 29 제5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한적 : ① 아측의 임시회의안과 북측의 예비회의안의 공통점 모색 제의
 - ② 억류어부와 가족간의 서신교환 알선 제의
- 목적 : 한적측 제의 거부

5. 22 제6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판문점 중감위회의실)

(쌍방 제안의 공통점에 입각한 절충안에 합의)

- 회의명칭 : 실무회의
- 대표구성 : 교체수석대표 및 대표 2명씩
- 장 소 : 판문점
- 의 제 : ① 본회담의제에 대한 예비적 토의
 - ② 본회담 개최문제 토의
- 기 간 : 본회담 개최까지

5. 29 제7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판문점 중감위회의실)

(제6차 실무대표 접촉시 합의한 실무회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 합의)

<합의사항>

- ① 첫회의일시 : 1974. 7. 10. 10:00
- ② 장 소 :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③ 구 성 : 쌍방 교체수석대표 및 대표 2명씩 쌍방 수행원 각기 4명씩
- ④ 회의형식 : 쌍방 연락단장간에 협의 결정

7. 10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 한적 : ① 제8차 본회담을 1974. 8. 30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② 「노부모의 생사확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을 제의
- 북적 : 「서울의 분위기」, 「조건환경론」을 거론하며 한적측 제의 거부

7. 24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 한적 : ① 1974. 8. 30 제8차 본회담 서울개최 촉구
 ② 노부모의 주소, 생사확인, 판문점면회, 방문알선 사업의 우선 실시 촉구
- 북측 : ① 한적측 제의 거부
 ②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채택 주장
 (가) 반공법·국가보안법 등 철폐
 (나) 반공단체 및 반공기관 해체
 (다) 반공정책 중지
 (라)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의 「적십자사업」참가 및 활동보장

8. 15 8·15대통령저격사건 발생

8. 28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 한적 : 8·15저격사건과 관련 다음 3개항 실행 요구
 ① 폭력과 살인을 지령하는 북한의 범죄적 책임자를 처단하도록 할 것.
 ② 북한의 폭력혁명노선을 배격할 것.
 ③ 북적은 북한당국의 폭력노선에 맹종하는 태도를 탈피하고 회담의 정상화에 성의를 다하고 행동으로 표시할 것.
- 북적 : 8·15사건이 인도주의회담과 무관하다고 주장

9. 25 제4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 한적 : 노부모의 주소, 생사확인, 상봉, 방문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종용
- 북적 : 한적측 제의 거부

11. 5 제5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 한적 : 제8차 본회담 서울개최 문제와 노부모문제 우선해결 재촉구
- 북적 : 한적측 제의 계속 거부

11. 29 제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 한적 : 노부모의 생사, 주소확인, 상봉, 방문, 서신교환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 제시
 - ① 60세 이상의 남녀노인을 노부모로 함.
 - ② 노부모의 상봉을 위해 관문점면회소 설치
 - ③ 노부모의 서신교환을 위해 관문점 우편물교환소 설치
 - ④ 노부모의 방문을 위해 신정 및 추석전후 15일간 방문 기간을 설정(사정에 따라 수시방문도 가능)
- 북적 : 한적측 제의 거부
 - ※ 이후 1975. 1. 24~1977. 12. 9의 기간에 제25차 실무회의까지 진행되었음.

1978. 3. 19 북적, 남북적십자 제26차 실무회의(3. 20 개최합의)를 무기연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방송을 통해 한적에 통보

3. 20 남북적십자 제26차 실무회의 북적측 불참으로 유산

3. 20 한적 대변인, 북적측의 제26차 실무회의 불참에 관하여 조속한 회의 재개 촉구 성명

8. 12 한적, 8·12제의 7주년 담화 : 관문점,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쌍방적십자 총재회담개최 제의

1979. 8. 12 한적, 이호총재 성명을 통하여

- 9. 1. 09:00를 기해 남북직통전화 및 관문점 연락사무소 운용재개를 촉구
- 9. 20 제26차 남북적십자실무회의 개최 제의

1980. 8. 12 한적, 남북적십자회담의 무조건 재개와 억류어부의 무조건 송환을 촉구

9. 12 한적, 남북적십자 제8차 본회담 재개(10. 28~10. 31) 제의 서한발송(관문점)

1981. 1. 12 전두환대통령,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교환방문 제의

6. 5 전두환대통령, 남북한 수녀회담 제의

8. 12 한적, 김용식총재, 8·12제의 10주년 성명 발표

- 지난날의 남북적십자회담의 경과에 대해 시비하지 않음.

- 북적 위원장과 언제 어떤 장소에서도 만날 용의
- 쌍방 적십자 직통전화 운용정상화

남북대화 제28호

(1981. 11 ~ 1982. 2)

< 목 차 >

제1부 전두환 대통령,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천명	3
1.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천명	3
2.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내용	6
3.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발표목적 및 주요특징	10
4. 기존 통일방안과의 관계	14
5. 남북한 통일방안의 차이	16
제2부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 대한 국내외 반응	18
1. 국 내 반 응	18
2. 해 외 반 응	35
3. 북 한 반 응	40
4.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의 성명	43
제3부 민족화합, 민주통일을 위한 시범적 실천사업 20개항 제의	45
1. 국토통일원장관의 대북시범실천사업 제의	45
2. 각 계 반 응	48
<부 록> 통일문제에 관한 남북한 주요제의 일지	59

제1부 전두환 대통령,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천명

1.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천명

전두환대통령은 1982년 1월 22일, 제109회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1982년도 국정연설」을 통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그 실현방법, 통일까지의 과정 및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밝힘으로써 분단이후 남북한당국이 제시했던 어떠한 통일방안보다도 체계적, 현실적, 종합적인 통일방안을 천명하였다.

전대통령은 이번에 천명한 통일방안이 「1·12」 및 「6·5」 대북제의를 북한측에서 수락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실현될 경우 그 회담에서 제시하려고 구상했던 통일방안임을 밝히면서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원칙임을 명백히 하였다.

전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전체의 통일의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는 것』이라 밝히고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통일헌법」초안이 마련되면 쌍방은 남북한전역에 걸쳐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일헌법을 확정, 공포하고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대망의 통일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대통령은 통일헌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민족 통일정부와 의회를 구성하여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민족적 화합과 통일분위기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건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하여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도 아울러 제의하였다.

전두환대통령의 국정연설가운데 통일방안을 밝힌 부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펼쳐진 역사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쌍방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 이념, 제도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만을 고집하는 한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같은 전통을 이어 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를 해결하려 할 때라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의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주도되어서도 안되고 무력 또는 폭력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본인이 지난해 1월 12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과직접회담을 제의했던 것도 바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길을 허심탄회하게 찾아 보자는데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의가 실현되도록 지금까지 기울여 온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본인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실현될 경우 제시하려고 구상했던 통일방안을 밝힘으로써 북한당국과 전 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참뜻을 이해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한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전체의 통일 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쌍방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일헌법을 확정 공포하고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대망의 통일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조국의 정치이념과 국호,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 정부형태와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등은 민족통일협의회가 구성되어 쌍방이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토의, 합의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헌법초안은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제시될 것입니다.

북한측이 진정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족통일협의회에서 그들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정정당당하게 내어놓고 우리측의 초안과 비교·검토하는 가운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에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 쌍방간에 이같은 통일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우선 신뢰가 조성되어야 하고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착실하게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남북 쌍방은 그동안의 민족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하루속히 민족적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자애적인 정상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본인은 남북 쌍방이 무엇보다도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고 이 기초위에서 민족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통일을 이룩할 때 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다음의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첫째, 쌍방은 장차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둘째, 쌍방은 쌍방간 분쟁문제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셋째,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일체 간섭하지 아니한다.

넷째,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조치를 협의한다.

다섯째,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역, 교통, 우편, 통신, 체육, 학술, 교육, 문화, 보도, 보건, 기술, 환경보존 등 제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여섯째,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일곱째, 쌍방은 각료급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쌍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락대표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측 관할영역에 주재하는 상대방 연락대표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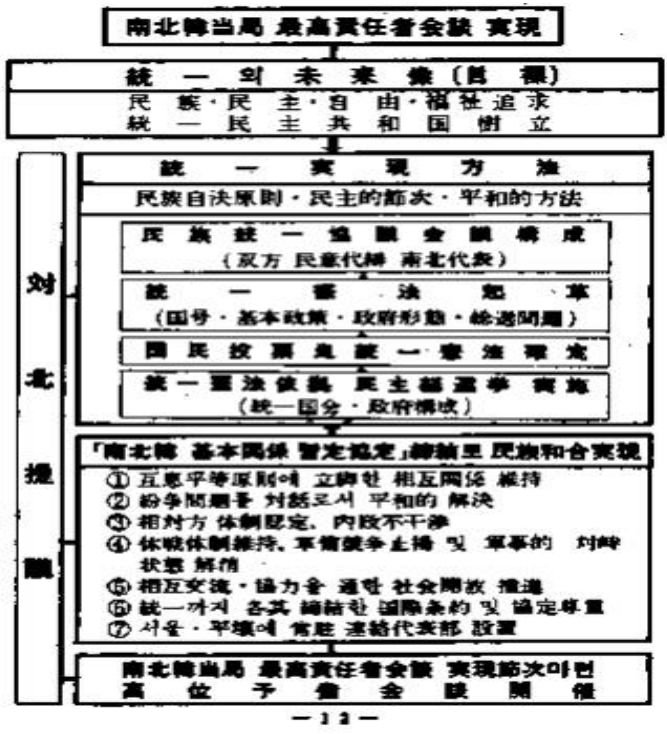
본인은 북한측이 하루속히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에 호응하여 이 자리에서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인은 조속한 시일안에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쌍방의 고위대표단간의 예비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만약 북한측이 이같은 예비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한다면 이 예비회담에 소정의 대표단을 파견할 모든 준비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 두고자 합니다.

2.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내용

가. 통일방안의 내용구도(『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주요내용

이번에 천명된 통일방안은 앞에서 보인 내용구도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요한 몇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로 조국의 평화통일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통일은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이념·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식으로 추진되어서도 안되고,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의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주도되어서도 안되며 무력이나 폭력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된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남북한 6천만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통일의 방법과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확고하고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통일의 방법으로 남북한 쌍방은 먼저 비정상적이고 민족자해적인 남북상호관계를 민족자에 적인 정상적 관계로 전환시켜 민족적 화합의 실현을 도모하고 이 바탕위에서 평화통일의 원칙에

입각한 총선거를 통해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통일조국의 미래상으로는 북한당국이 끈질기게 추구해 오고 있는 적화통일을 배격하고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세째로 이번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달성을 위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고 있다.

「통일헌법」은 남북한 6천만 겨레의 통일 의지를 집대성하여 통일조국의 정치이념, 국호, 내외정책의 기본방향, 정부형태,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민족화합의 대헌장으로 정립되는 것이며, 이로써 통일달성의 명확한 이정표로 삼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통일문제 논의에 있어서 합헌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쌍방은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도 「통일헌법」의 기초과정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수용하여 이를 협의 검토할 수 있다.

네째로 이번 통일방안은 「통일헌법」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의 구성을 제의하고 있다.

「민족통일협의회의」는 쌍방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구성하며 「통일헌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남북공동기구이다. 이 「민족통일협의회의」는 남북한 쌍방이 제안한 헌법초안들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인 하나의 단일안으로 확정한다.

따라서 「민족통일협의회의」는 북한측의 「대민족회의」나 「통일촉진대회」와 같은 대화기구와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른 것이다. 북한측이 말하는 「대민족회의」나 「통일촉진대회」는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및 각계인사와 해외동포대표들의 참여를 요구하면서도 정부당국자의 참가를 배제하고 대한민국측 참석자의 선정을 북한측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수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같은 「대민족회의」나 「통일촉진대회」등은 원천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구적인 평화공세의 한 책략에 불과한 것이다.

다섯째로 이번의 통일방안은 통일까지의 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남북한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국민투표로써 이 「통일헌법」 초안을 확정하고 확정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한 전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하나의 통일민주공화국으로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여섯째로 이번의 통일방안은 「남북한기본관계잠정협정」의 체결을 제의하고 있다.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통일헌법」 제정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쌍방간에 우선 신뢰를 조성하고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저해요인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통일방안은 남북이 우선 쌍방간에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족적 유대강화와 통일저해요인의 극복 및 전쟁방지조치의 강구 등을 통해 민족

적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통일헌법」 제정작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 잠정협정은 통일까지의 실천적 조치로 다음 7개항을 제시하고 있다.

- (1) 쌍방은 장차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 (2) 쌍방은 쌍방간 분쟁문제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 (3)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일체 간섭하지 아니한다.
- (4)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조치를 협의한다.
- (5)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적왕래와 다각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역, 교통, 우편, 통신, 체육, 학술, 교육, 문화, 보도, 보건, 기술, 환경보존 등 제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 (6)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 (7) 쌍방은 각료급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쌍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락대표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측 관할영역에 주재하는 상대방 연락대표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이같은 「남북한기본관계잠정협정」의 체결을 통해 통일이전에라도 남북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취지는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까지 무력과 폭력사용을 배제하며 전쟁재발을 방지하는 가운데

—남북간에 누적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여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고

—긴장격화와 대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군사문제도 협의 해결하며

—다각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분단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시켜 점차 쌍방 사회를 6천만 온 겨레에게 개방하도록 하나하나 실천시켜 나가고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기존 외교관계와 협정을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민족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들, 예를 들면 국제적 경제·문화교류문제 및 UN가입 문제와 교차승인 문제같은 것을 서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는 한편

—상호 상주 연락대표부를 상대측 지역에 설치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 해결해 나감으로써 구체적으로 통일을 위한 민족화합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 이번의 통일방안 제의에서는 이상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거듭 촉구하고 이를 위해 남북한 쌍방의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대표단간의 예비회담을 제의하였다.

이 예비회담은 「1·12 및 6·5제의」에 따른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의 이 제의는 예비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북한측의 선택에 일임하고 있다.

3.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발표목적 및 주요특징

정부가 이번에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천명한 목적은

첫째, 남북한간에 향후 쌍방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이 실현되었을 때 거기서 제시하게 될 종합적 통일방안을 마련함으로써 「1·12 및 6·5대북제의」에 대한 북한측의 수락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북한측은 전대통령의 「1·12 및 6·5대북제의」를 거부 외면하고 있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상호방문과 회담이 실현될 기약이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서 제시하려던 통일방안을 발표한 것은 북한당국자들에게는 물론 국제적으로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의 참뜻을 이해시키는 기회를 부여하여 「1·12 및 6·5대북제의」에 대한 북한당국자들의 부정적 태도를 바로 잡아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내외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천명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그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분단국가의 통일논리에서 가장 타당하고 성실한 제안이며, 지금까지 남북한 쌍방이 제시했던 어떤 통일방안보다도 민족성원 전체의 통일염원을 가장 완벽하게 수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통일정책이 천명됨으로써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기반이 더욱 공고하게 확대될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지지확산으로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의 재개에 호응해 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여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목적으로 내외에 천명된 이번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그 자체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특징들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 통일의 방법과 과정 및 미래상이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통일방안은 무력·폭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 적화통일이 아닌 민주통일을 위한 통일의 방법론과 통일까지의 과정 그리고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선명히 제시하고 있다.

또 이번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방법론으로서,

—남북 쌍방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이념·제도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통일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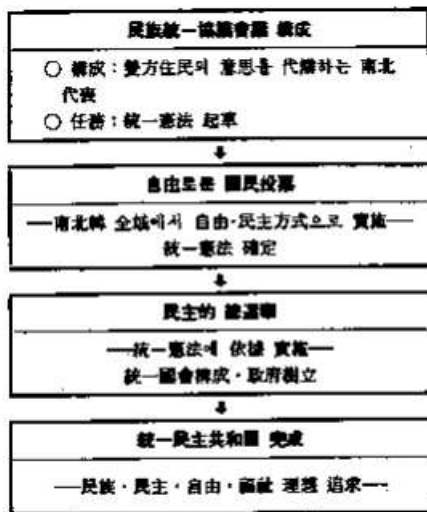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의하여 독점·배타적으로 주도되어서도 안되고

—무력 또는 폭력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되며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다짐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체결에 의한 민족적 화합을 실현하고 이 바탕위에서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통일실현 과정



둘째, 지금까지의 민족자해적인 비정상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자애적인 정상관계를 회복하여 통일을 위한 민족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명백히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분단조국의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남북쌍방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쌍방간에 민족자해적 비정상적 관계를 청산하고 기본관계를 설정하여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간에 민족적 유대를 회복, 강화하며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저해요인을 극복, 해소하는 한편 전쟁재발 방지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민족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을 제의하고 있다.

※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내용(7개항)

- (1) 통일까지 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한 상호관계 유지
- (2) 분쟁문제는 무력과 폭력을 지양하고 대화로서 평화적으로 해결
- (3) 서로 상대방의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인정하고 내정문제 불간섭
- (4) 휴전체제를 유지하고 군비경쟁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문제 협의
- (5)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사회개방 추진
(이산가족재회, 교역, 교통, 우편, 통신, 체육, 학술, 교육, 문화, 보도, 보건, 기술, 환경보존 등)
- (6) 통일까지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쌍무적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고 민족이익에 관한 문제 서로 협의
- (7) 서울과 평양에 각기 상주 연락대표부 설치

이같은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체결은 남북관계의 중착역으로 삼자는 것이 아니며 민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착실하게 해소하여 민족화합을 실현함으로써 남북쌍방간의 「통일헌법」 기초작업과 총선거에 의한 통일달성 과업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세째, 이번의 통일방안은 지금까지의 남북한간 대결논리를 극복하며 북한측의 위장평화통일 선전을 봉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점이다.

이번의 통일방안은 남북쌍방의 입장중 상호 합의가능한 영역을 적극 발굴하고 또 일부 북한측의 주장도 검토, 협의함으로써 쌍방간의 합의도달을 유도하는 한편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측의 부당한 대남선전을 봉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이번의 통일방안은 통일헌법 초안마련을 위한 대화기구로 쌍방의 민의를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대민족회의」, 「통일촉진대회」 등 북한측의 정략적인 비당국주도 대화제의를 수감함으로써 북한측에게 진정한 성의만 있다면 대화기구에 관한 남북한간의 합의도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음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북한측의 『분열주의』·『두개한국』 운운의 모략과 비난의 소지가 없어졌다.

또한 통일조국의 정치이념·국호·대내외정책 기본방향·정부형태와 통일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방법 및 절차 등은 앞으로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의 「통일헌법」 초안작성 과정에서협의, 결정토록 함으로써 통일문제를 위요하고 겉다르고 속다른 허구적 위장선전에 급급하는 북한측의 불순한 기도에 썰기를 박아

—북한측의 이른바 「연방안」도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방안이라면 일방적 선전으로 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앞으로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북한측의 의견으로 제시하라는 것이며

—우리는 「민족통일협의회의」가 구성되면 거기서 우리측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제시

할 것을 약속했으며 북한측에 대해서도 그들의 「통일헌법」 초안을 그같은 기구에서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의 이른바 「전제조건」 들은 앞으로 「통일헌법」 초안마련시 통일조국의 정치이념·국호·대내외 기본정책·정부형태·총선거절차 및 방법 등의 토의과정에서 협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4. 기존 통일방안과의 관계

우리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과거 우리 정부가 제안해 왔던 통일방안들의 근본정신과 기본내용들을 포괄하여 일관성의 토대위에서 집대성된 통일방안이다.

이번의 통일방안은 역시 긴장완화+신뢰회복→통일달성이라는 일관된 점진적 접근방법을 견지하면서

—기존 통일 3원칙의 1, 2항(평화정착과 신뢰회복)을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7개 항목으로

—그리고 동 3항(남북한 토착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총선거)을 민족통일 협의회의구성→헌법기초→국민투표로 헌법확정→민주적 선거원칙에 의한 총선으로 통일국회를 구성하는 절차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방침을 발전시켰다

또한 다음과 같이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체결제의로 종래의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 체결제의(1974. 1. 18)와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1973. 6. 23)의 대북관계부분을 수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우리 나라의 평화통일 방안을 집대성하였다.

< 「상호 불가침 협정」 제의 내용의 수용 >

—불가침협정 제1항(무력 불가침문제)→기본관계 잠정협정 제2항에서 「무력 및 폭력지양」으로 수용

—불가침협정 제2항(내정불간섭문제)→기본관계 잠정협정 제3항에서 「상호 현존제도인정 및 내정불간섭」으로 수용

—불가침협정 제3항(휴전협정 효력 유지문제)→기본관계 잠정협정 제4항에서 「휴전체제 유지」로 수용

< 「6·23 선언」 내용의 수용 >

—6·23선언 제2항(내정불간섭 및 불가침문제)→기본관계 잠정협정 제 2, 3, 4항 「무력·폭력지양, 분쟁문제 평화적 해결, 내정불간섭, 휴전체제 유지」로 수용

—6·23선언 제3항(남북대화 지속문제)→기본관계 잠정협정 제2, 5항 「대화를 통한 해결 및 교류·협력 통한 사회개방 추진」으로 수용

—6·23선언 제4, 5, 6항(「유엔」 동시가입 등 문제)→기본관계 잠정협정 제6항 「각기 체결한 협정 존중 및 민족이익에 관한 상호협의」로 수용

한편 이번의 통일방안은 남북한간의 군사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시현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번 통일방안은 민족자결원칙에 따른 민주적 통일달성이라는 대전제 하에 통일문제 해결에 임하는 자세를 획기적으로 적극화하는 한편,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간 군비경쟁의 지양 및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등도 협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므로 쌍방이 각기 체결한 쌍무적, 다자간 국제협정준중 사항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통일헌법」기초과정에서 대내외 기본정책과 관련하여 토의, 해결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5. 남북한 통일방안의 차이

우리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과 북한측의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안은 몇가지 기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쌍방의 통일방안은 그것들이 추구하고 있는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해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하나의 완성된 통일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북한측의 통일방안은 하나의 단일국가로 통일조국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연방제」의 미명하에 두개의 「지역정부」 존속 운운하는 미완성형 통일을 표방하고 있다.

북한측의 「연방안」은 또한 그나마 연방제 통일 그 자체를 실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를 빙자하여 주한미군철수 및 대한민국 정부타도 등 일련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전제조건」들을 우리측에 강요함으로써 우선 대한민국의 「반공」체제를 「연공」체제로 변질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케하여 공산당 주도하의 「합작」으로 적화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과 북한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구체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1)민족통일협의회(쌍방 민의대표)에서의 통일헌법 초안마련 (2)국민투표에 의한 통일헌법 확정(3) 통일헌법에 의한 총선거실시 (4) 총선거에 의한 통일국회, 통일정부 구성 등 민주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측 통일방안은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등 「연방기구」에 대한민국의 특정인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락할 수 없는 일방적인 「전제조건」들을 제시하여 이를 강요하는 등 일절의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 쌍방의 통일방안은 통일에 접근하는 과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까지의 과정으로 남북이 우선 「기본관계 잠정협정」 체결로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족적 유대의 회복, 통일저해요인의 제거, 전쟁재발방지 등의 제반조치를 연구함으로써 민족화합을 실현하여 민주적, 평화적 통일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실천적으로 조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통일방안은 이른바 「10대 시정방침」을 운위하면서도 이의 실천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연방제」통일이 이루어진 뒤에야 고려될 수 있다고 뜻을 박음으로써 적화통일이 명백해지지 않는 한 남북간에 어떠한 교류와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제시한 「민족통일협의회」와 북한측이 주장하는 「통일추진대회」와의 사

이에도 엄격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제시한 「민족통일협의회」는 북한측이 주장하는 소위 「대민족회의」라든가 「통일촉진대회」와는 엄격하게 다르다. 우리의 「민족통일협의회」는 남북쌍방이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구성하고 그 임무는 「통일헌법」 초안을 기초하는데 한정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회의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쌍방은 각기 자기측의 고유한 정치질서에 의거하여 자기측 대표를 선정할 것이며 상대측의 대표선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통일촉진대회」 개최를 주장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현 정부당국자들과 또 북한측이 지적하는 인사들은 동 대회에 참석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일부 실정법 질서와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제2부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 대한 국내외 반응

1. 국 내 반 응

전두환대통령이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자 국내외 각계각층은 조국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환영하고 북한당국이 이를 수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국회는 1월 22일 제109회 본회의에서 전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 대한 지지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동 결의안에서 국회는 『북한당국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한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과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민족통일협의회」 구성에 적극 호응하라』고 촉구하고 세계각국에 대해 전대통령의 이번 제의가 실현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 대한 국회의 지지결의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국회는,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염원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세계 각국 국민들의 희망에 부응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전두환대통령의 1·12 및 6·5제의에 대한 북한당국의 부정적 태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조국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무력과 폭력수단을 배격,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과 이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온 겨레의 굳은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一. 대한민국국회는 1·12 및 6·5 제의에 이어 1982년 1월 22일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북제의를 통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코저 전두환대통령이 보여준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 一. 대한민국국회는 「민족전체의 통일의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목표아래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는 대북제의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믿고 이를 전폭 지지한다.
- 一. 북한당국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과 통일

헌법제정을 위한 「민족통일협회의회의」 구성에 적극 호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세계 각국 국민들과 의회는 1982년 1월 22일자 전두환대통령의 대북제의가 실현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희망한다.

또한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는 1월 23일 전국 224개 시·군·구별로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전 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는 결의문에서 『전대통령이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과 회담실현이 반목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신뢰와 화합의 남북관계로 전환시키는 첩경임을 재확인하며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 민주공화국이 이땅의 6천만 민족이 희구하는 진정한 통일조국의 미래상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의 결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전두환대통령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가진 새해 국정연설을 통하여 남북한당국 최고 책임자간의 회담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새로이 천명하는데 대하여 이를 전폭적으로 환영·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 우리는 전두환대통령이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과 회담실현이 반목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신뢰와 화합의 남북관계로 전환시키는 첩경임을 재확인한다.

- 우리는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이 이땅의 6천만 민족이 희구하는 진정한 통일조국의 미래상임을 확신한다.

- 우리는 전두환대통령이 제창한 통일헌법에 입각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 구상이 우리 겨레가 염원하고 있는 자유·민주·평화통일에 이르는 가장 합당한 길임을 확신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전두환대통령이 제의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이 남북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를 풀어 나가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치임을 확신하고 이의 조속한 실천을 기대한다.

- 우리는 북한당국이 이제라도 우리의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수락하여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데 호응해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한편 민주정의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1월 22일 전두환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발표되자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북한당국에 대해 이의 수락을 촉구했다.

각 정당이 발표한 성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정의당> 전두환 대통령의 통일제의는 우리의 통일의지를 집대성한 구체적이고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민족통일의 길에 신기원을 연 대영단으로서 온 국민과 함께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지지한다. 북한당국은 민족의 양심으로 돌아가 이 제의를 즉각 수락하여 그동안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민족자해적 비정상관계를 청산, 민족화합의 새역사 창조에 동참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민주한국당> 전두환 대통령이 밝힌 통일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안으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북한당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촉구한다.

통일헌법 기초를 위한 민족통일협회의의 구성제의는 획기적인 것이며 통일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민족의 염원을 집약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통일방안은 민족의 성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로 부터도 적극적인 호응을 받을 줄 믿는다.

<한국국민당> 전대통령의 새로운 통일방안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긴장과 분단의 비극이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우리 6천만 민족의 염원을 반영한 획기적인 제의로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통일방안을 북한측도 흔쾌히 받아들여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로써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통일을 이룩하였다는 장거를 역사에 기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당> 전대통령의 「통일헌법제정제의」는 분단 이래 가장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통일방안으로서 민족이 주체가 되어 통일조국을 이루어 보자는 전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측은 이 제의를 즉각 수락, 민족대화합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내보이라.

<민권당> 전대통령의 「통일헌법제정제의」는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것으로서 북한당국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면 민족적 양심에 따라 이를 즉시 받아들여기 바란다.

<신정당> 새 통일방안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겨 성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환영한다.

<자유민족당> 새 통일방안은 민족자결과 자주원칙에 입각, 통일과정을 앞당기게 하는데 뜻이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담겨진 합리적인 방안제시라고 본다.

대한적십자사 김용식총재는 1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민족자결 원칙에 입각한 자유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지적하고 『북한당국은 분단 37년의 비극을 씻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남북한최고책임자회담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총재는

또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이니 만큼 남북적십자회담도 조속히 호응하라』고 촉구하고 『만약 북한당국이 호응만 한다면 언제든지 회담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경제·사회·예술·문화·종교 등 각계의 민간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환영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북한측에 대하여 정치적 선전책략에 불과한 허구적 제안을 버리고 민족적 양심을 되찾아 우리의 제안에 응해 올 것을 촉구했다.

도하의 각 언론기관들도 사실을 통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들의 사실은 다음과 같다.

통일실현의 원대한 청사진

—전대통령의 통일방안을 북한측은 즉각 수락하라—

경향신문(1982. 1. 22.)

조국통일은 6천만 민족가운데 누구하나 반대할 수 없는 한결같이 절실한 염원이다.

한민족이 모두 납득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실현 가능한 통일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구현하는데 우리는 한시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나의 민족이면서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 세대 이상을 적대감속에 살아 왔다는 것은 세기적인 비극이다. 이러한 민족분단의 비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국토분단이 빚어낸 민족적 고통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감으로써 상호신뢰의 폭을 넓혀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통일접근방법이다.

전두환대통령이 22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천명한 새통일방안은 바로 이러한 당위성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민주공화국」의 당위성

전대통령이 밝힌 남북한 통일방안은 분단 이래 남북한간에 최초로 제시된 「구체적·체계적·종합적」 통일방안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것으로 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다.

새 통일방안은 『통일은 어디까지나 무력 또는 폭력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는 안되며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체결에 의한 민족적 화합을 실현하고 그 바탕 위에서 「통일헌법」을 제정,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전대통령이 밝힌 새통일방안은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하나의 완성된 「통일민주공화국」이라는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선명히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어느때, 어느 누구에 의한 통일방안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라는 인상을 강렬하게 풍기고 있다.

이 방안은 또한 북한측이 이른바 고려연방제의 미명아래 두개의 지역정부 운운의 미완성 통일을 표방해 온 것과는 본질적으로 판이하다.

북한측의 「연방안」은 연방제통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정부 타도등 일방적이고 실현성 없는 「전제조건」을 강요함으로써 우리의 「반공」체제를 「연공」체제로 변질시키고 공산당 주도하의 「합작」으로 적화통일을 기하자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다.

통일실현방법과 통일에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새 통일방안은 민족대화합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족자해적인 비정상관계를 말끔히 청산하고 민족자애적인 정상관계로의 전환에 주안을 둬으로써 대결의 논리를 극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다.

새 통일방안은 특히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키 위해 남북 쌍방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화기구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대민족회의」 또는 「통일촉진대회」 등 북한측의 정략적인 대화제의까지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측이 진정한 대화의사나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대화기구에 관한 남북간의 합의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놓고 있는 셈이다.

다만 북한측의 「최고민족연방회의」나 「연방상설위원회」 등 연방기구에는 대한민국의 특정인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전제조건을 강요하고 있으며 특정계급 주도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도자의 넓은 포용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조국의 정치이념·국호·대내외정책기본방향·정부형태와 통일국회의 구성을 위한 총선거방법 및 절차등을 장차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만들어질 통일헌법 초안 작성과정에서 협의 결정토록 했기 때문에 북한측의 이른바 연방안도 이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제시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북한측이 내놓은 어떤 통일방안도 이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전대통령의 새통일방안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포용력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새 통일방안은 역시 긴장완화·신뢰회복·통일달성이라는 일관된 점진적 통일접근 방법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기존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중 1·2항(평화정착과 신뢰회복)을 남북한 기본관계잠정협정 7개항목으로, 그리고 동 3항(남북한 토착인구 비례원칙에 의한 총선거)을 민족 통일협회의의 구성과 통일국회구성의 절차 및 과정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는 또 남북한 불가침 협정제의(1974. 1. 18)와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1973. 6. 23)의 대북 관계부분을 다함께 수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평화통일방안을 집대성한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 1·12 및 6·5대북제의를 발전적으로 구체화시킨 동시에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해 온 통일방안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새시대 「평화통일 청사진」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확신한다.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려면 남북의 최고책임자가 하루라도 빨리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논해야 한다는 전대통령의 신념은 이미 6·5제의에서 그대로 표현된바 있다. 전대통령은 남북한 사회의 완전개방을 주장했고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정당이나 체제, 사상의 전유물일 수 없다는 소신을 누차 밝혔다.

그와같은 전대통령의 소신은 통일추진의 주역이며 통일조국의 주인은 민족전체성원이지 다른 어느 특정계층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민족자존 위한 대장전

남북쌍방이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고 그 기초위에서 민족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려면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쳐야할 절차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새 통일방안이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을 제의한 이유에 공감하게 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특기할 점은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상호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하게 되면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통일을 위한 민족 통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서독관계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상주대표부의 설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남북한관계에 있어서도 서울과 평양에 각료급 전권대표가 상주하게 되면 폭넓은 교류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데 유익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쌍방간에는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적왕래와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민족의 이익을 증진하는 길은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 이런 상호이익의 증진은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상호합의만 이루어지면 가능한 것이다.

더우기 한민족은 역사와 언어, 문화전통 풍습등 모든 생활요소와 기반이 같은 단일민족으로서의 생활권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은 정치나 사상·이념의 문제에 앞서 인간적·민족적

비극이며 이런 비극은 빨리 종식될수록 민족적 이익으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남북분단이후 지금까지 줄곧 폭력수단에 의한 적화통일을 획책해 온 북한공산주의자들의 통일기본전략에 있다. 6·25남침과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 북한공산집단의 무력도발은 잠시도 끊이지 않았다.

대남폭력혁명과 무력남침에 의한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그동안의 남북대화나 남북한간의 합의사항마저 모조리 거부해 온 북한이 이번 전대통령의 역사적 통일방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 북한측이 가장 현실적인 이번의 통일방안마저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이는 그들의 위장된 평화공세의 기만성과 허구성을 다시한번 드러내 놓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반대할 명분없다.

남북한간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상호신뢰의 회복과 전쟁재발방지이며 대화의 재개인 것이다.

더구나 민족을 자해하는 어떤 폭력수단도 용인할 수 없으며 연방제안의 일방적인 고집만으로는 통일의 길을 앞당길 수 없다. 북한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대미평화협정 운운도 민족자결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허황된 제의로 세계의 이목을 현혹시키는 행위는 국내외여론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우리정부의 새 통일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결정적으로 완화시키고 민족의 통일염원을 향해 일보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남북통일의 지름길은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 회담이 실현되고 여기에서 새 통일방안이 논의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둔다.

북한측은 이제라도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대통령이 제의한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예비회담에 먼저 응해야 할 줄안다.

아울러 우리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을 기필코 구현하려는 전대통령의 강인한 평화의지가 담긴 역사적 새 통일방안을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높이 평가하며 국민모두가 이 통일청사진앞에 단합된 힘을 과시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통일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라 국민적 합의와 이해를 통한 단합의 기초위에서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통일조국의 미래상이 담긴 새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의 구축과 이를 토대로 한 통일의지의 결집확산에 활발한 진전있기를 바란다.

전대통령의 국정연설

—포괄적 구체적 진취적인 통일방안에 호응을—

동아일보(1982. 1. 22)

전두환대통령의 22일 국회에서의 국정연설은 진취적인 내용과 자세를 뚜렷이 하고 있어 반갑다.

대통령이 우선 년두의 국정포부를 다른 곳 아닌 국회연설로 밝히는 관행이 자리잡혔으면 한다. 1968년 이래 국회를 비켜섰던 대통령의 년두 국정구상발표는 행정부와 국회가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일러준다. 이는 대통령의 생각을 수시로 알아보는 기자회견등의 의미를 줄이는 뜻이 아님은 물론이다. 다만 그동안의 기울었던 행정부와 입법부관계를 고쳐가는 좋은 시사로 보고 싶은 것이다. 특히 전대통령 스스로 이번 연설을 통해 『행정부의 독주와 정당의 소외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우리는 주시한다.

전대통령은 이번 국회연설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당면과제로 첫째 마음속 깊이 파고든 부패심리추방 둘째 물가오름세 심리추방 셋째 무질서심리추방 등을 들었다. 세가지 추방은 곧 안정속에 깨끗한 정부와 복지사회를 건설하자는 이상이기도 하지만 실상 「새시대」의 목표로 거듭 강조되어 왔던 일로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고 국민이 그에 아낌없이 동참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의 재강조로 받아 들여진다.

전대통령의 국정연설중 획기적인 부분은 남북한 통일방안이다. 통일은 민족자결, 민주절차, 평화방법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민족통일협의회」구성과 「통일헌법」 채택 그리고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고 북한당국에 제의했다. 분단 이래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이고 진취적인 통일방안으로서 한민족의 관심은 물론 국제적인 이목을 끌기에 족한 과감한 제안들임에 틀림없다.

「1·22」통일방안에 따르면 남북한대표로 구성되는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키 위한 통일헌법이 기초된다. 이 헌법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방식에 의한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며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같은 절차에 의해 통일이 완수되기까지 남북한은 잠정적으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서울과 평양에 각각 상주대표부를 설치한다. 물론 양측은 서로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고 무력 및 폭력사용을 포기하며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국토분단의 비극을 겪었고 그로 인해 동족상잔의 참상을 목도한 사람이라면 「1·22」통일방안을 마다할 수 없다. 더욱이 북한측이 그동안 통일방안으로 내세운 「고려민주연방」이나 「대민족회의」와 같은 것과 비교한다면 「민족통일협의회」와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등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순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연방제라는 것은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기존권력체제의 배제등을 명시함으로써 호혜원칙 위에서의 통일을 결코 모색치 않는다. 오직 남한적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방제는 대뜸 통일정부와 지역자치제 실시를 들고 나오므로써 남북 이질 요소의 해소와 융합과정을 무시한채 북한일방의 체제를 강요하고 있다.

「대민족회의」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당 사회단체간의 회의를 주장하면서도 남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정치권력만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못박음으로써 민족화합아닌 공산화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민족통일협의회의」는 「쌍방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남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권력이 포함되는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접근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밖에 「민족통일협의회의」에는 통일헌법을 기초하고 통일조국의 정치이념 국호 대내외정책방향 정부형태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남북한 쌍방이 협의회의를 통해 각자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수렴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있다.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가 아니라 쌍방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자는 타협적인 접근이다.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도 오늘날 남북한에 실재하는 현실 그대로를 토대로 해답을 찾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이 「유엔」 산하 전문기구에 각각 가입해 있으며 1백여개국 이 넘는 국가들과 각기 수교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 남북한 양측은 그것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의 제도적 연결장치를 찾아야 한다. 여기서 그 방안으로 잠정적인 기본관계협정이 요구되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 동서독이 이미 10년전에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가고 있음을 보아도 원심분리원칙에 따라 통겨져나가는 양극을 연결시켜주는 제도적 장치는 시급하다.

따라서 북한은 전대통령의 이번 「1·22」 제의를 서슴없이 받아들여 민족화합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 더우기 「1·22」 제의 속에는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으로부터 기본관계협정, 군비 경쟁지양협의, 최고책임자회담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포괄적인 내용속에는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 왔던 통일방안과 일부 교차하는 대목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북한은 즉각 「1·22」 제의에 호응, 통일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데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전대통령의 새해 국정 방향

중앙일보 (1982. 1. 22)

전두환 대통령은 22일 하오 국회에 출석, 새해의 국정방향을 밝히는 연설을 했다.

전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정전반에 관한 그의 견해와 경륜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를 『정치 및 사회적 혼란에서 빠져나와 안정을 되찾고 조국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선을 연 한해』였다고 평가하면서 민주복지국가와 통일조국을 이룩하는 일에 국민 모두가 「단합된 힘」을 보여 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전대통령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통일문제에 관한 그의 소견 피력이었다. 전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간의 민족적 화합을 이룩, 민족전체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리적 평화통일 방안

그는 또한 통일헌법의 제정을 위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 통일조국의 정치이념과 국호,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 정부형태 및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절차 등 어떤 문제건 토의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제외와 자료급을 전권대표로 한 상주연락대표부의 설치제외다. 이런 일련의 구체적인 제의를 통해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이 얼마나 성실하며 진지한 것인가를 국내외에 다시금 천명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전대통령의 말을 빌 것도 없이 남북한 어느 쪽이건 일방적인 사상이나 이념제도를 앞세워 자기 원하는 방식의 통일만을 고집하는 한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거부명분 없다.

그런 뜻에서 전대통령이 밝힌 통일방안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민족총의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을 구체화·체계화했다는 데 각별한 뜻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통일방안은 이른바 「고려연방제」 같은 북한의 주장도 거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틔우으로써 우리의 포용성과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1·2 및 6·5 남북제외」에 대한 북한측의 부정적 태도를 바로잡아 남북한 최고책임자 회담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상호 이해의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 노력의 극적 돌파구를 찾자는 우리의 「1·12 및 6·6 제외」는 세계적인 호응을 받았지만 유독 북한만은 「두 개의 조선을 조작하려는 분열책동」이라는 궤변으로 이를 거부했으며 대남 비방과 무력도발을 도리어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비원은 북한측의 자세가 완미하다해서 약화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의 태도가 평화정착에 냉담하면 할수록 적극적이고 끈기 있는 자세로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

보자는 것이 일관된 우리의 입장인 것이다.

「1·22 통일방안」을 천명하면서 전대통령이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한 예비회담을 제의하고 대표단 파견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것은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우리측의 성실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민족적 신뢰회복이 상호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체의 접촉을 단절한 채 입으로만 하는 제안은 한마디로 기만이며 위장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측이 진실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측이 활짝 열어 놓은 대화의 광장에 나와 민족의 명문이 걸린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 후략 -

민족통일 앞당길 새 이정표 북한은 주저말고 호응하라

- 전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담긴 큰 뜻 -

서울신문 (1982. 1. 23)

「자주민족국가의 완성」을 지향하는 제5공화국은 그 출범의 시점부터 한반도의 통일을 강조해 왔다. 조국의 분단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의 재결합을 앞당김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한민족의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새 시대의 강렬한 통일 의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에 「1·12 제의」와 「6·5 제의」를 통해 남북한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구상을 국내외에 발표했던 것이다.

일목요연한 통일과정

전두환대통령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1982년도 국정연설」을 통해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획기적이며 체계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1·12 제의」와 「6·5제의」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전대통령은 통일의 길을 닦는 일에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굳은 의지에서 다시 한번 굳게 닫혀 있는 공산체제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전대통령의 이번 제의의 커다란 의의는 자주와 평화의 원칙 속에서, 통일에 이르는 합리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도정을 설득력있게 제시했다는 데 있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가 일목요연하게 그려져 있다. 그뿐 아니라 「민족·민주·자유·복지」를 그 내실로 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이란 통일미래상이 실감있게 제시되어 있다. 「1·12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통일민주공화국」의 실현도 먼 앞날의 꿈만은 결코 아니라는 기대마저 부풀게 한다.

전대통령은 민족문제 해결의 첫 방편으로 우선 각료급의 남북한 예비회담을 열 것을 제의했다. 이 고위예비회담을 통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자는 것이다.

화합을 위한 잠정협정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서 전대통령은 크게 보아 두 가지를 내놓았다. 하나는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남북한의 기본관계를 규율할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남북한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이 이 잠정협정의 목적이다. 통일의 달성과 더불어, 이 잠정협정이 즉각 폐기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즉 그것은 시한부인 것이다.

이 잠정협정에 포함될 내용으로 전대통령은 여러 가지 제도적 정치를 제의하고 있다. 그 핵심은 평화의 유지이다. 휴전체제의 유지·군비경쟁 지양 및 군사대치 상태의 해소·상호 교류협력 등이 그것이다.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 대표부를 둔다는 구상도 들어 있다.

종합적으로 보아, 이 잠정협정은 남북한관계를 「제도화된 평화관계」로 전환시키자는데 그 1차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은 7·4 남북공동성명이 다짐한 「평화통일의 원칙」에 충실하자는 뜻을 담은 것이다. 통일이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살상이나 숙청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6천만 겨레가 모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민족화합으로서의 통일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대통령이 제의한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통일헌법의 공동기초

전대통령이 내놓은 또 하나의 의제는 통일의 실현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대통령은 그 원칙으로서 민족자결·민주적 절차·평화적 방법의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다.

전대통령은 우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한의 민의를 대변하는 인사들로 「민족통일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이 회의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자는 것이다. 대단히 실질적이면서도 대돌파적 발상이다. 남북한의 대표들이 모여서, 통일헌법을 만들어 보자는 구상은 한국통일 정책의 역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전대통령은 통일헌법의 기초과정에서 통일조국의 국호와 정부형태 및 총선문제를 남북 쌍방의 제안에 따라 협의하자고 하였다. 북한측이 제시한 「연방」안도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방안이라면 일방적인 선전으로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민족통일 협의회」에 나와서 제의하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다. 선거방안에 대해서도 북한 나름의 구상이 있으면 이 회의에 나와서 제시해 보라는 것이다. 모든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민족의 통일에 도움되는 구상이 있으면 솔직히 개진해 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체제만을 북한에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겠다는 협상적인 태도와 일치한다. 통일은 「나」와 「너」가 서로 지혜를 내고 서로 양보해서 「우리」를 만드는 작업이다. 「너」에게 「나」만을 강요하겠다는 것은 통일을 정복이나 합병과 동일시하는 것 이외엔 아무 것도 아니며, 이러한 입장에서는 조그만 문제조차 풀지 못한다. 따라서 남북한이 「협의회」를 통해 「통일헌법」을 함께 써나가자는 제의야말로 통일에의 단성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

겠다.

「합심」만이 성사의 길

통일헌법의 기초가 끝나면 이것을 남북한 전역에서 자유민주 방식으로, 곧 국민투표로써 확정 짓고, 이어 확정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세울 것을 전대통령은 제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써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이 절차는 지극히 순리적인 것이어서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은 통일민주공화국이 지향하는 목표로 민족·민주·자유·복지를 설정함으로써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명백히 제시했다는 점이다. 분단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통일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지만 그 미래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차에, 전대통령의 포괄적 제안 속에 통일조국의 모습이 선명히 나타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6천만 한민족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민족·민주·자유·복지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제 민족통일예의 대도는 명백히 밝혀졌다. 전대통령의 「1·22 제의」는 확실히 자주적 평화통일예의 위대한 이정표인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거니와, 북한의 수락을 기대하고자 한다. 고장난명이란 말처럼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어느 일도 성사되지 않는다. 통일은 남북한이 함께 추구해야 할 민족적 과업인 것이다. 북한은 민족적 양심에 돌아가 이에 호응하기 바란다.

획기적인 민족통일방안

- 전대통령의 1982년도 국정연설에 접하여-

조선일보 (1982. 1. 23)

1

1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회 본 회의에서의 국정연설을 통해 1982년도에 정부가 시행할 일련의 정책적 기초를 천명했다. 여기서 전대통령은 민주정치, 존재양식, 외교 경제 국방 통일 사회 교육 등 국정전반에 걸쳐 간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정부의 새해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온 국민들 앞에 제시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대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며 마땅한 것은 남북한문제, 즉 새롭고도 획기적인 통일방안을 포함한 민족통일정책의 제시가 아닐 수 없다.

1971년 8월에 발족했던 남북적십자회담이 중단상태에 빠진지 이미 오래고 1972년 7월에 엄숙하게 선포되었던 남북공동성명은 이에 입각한 남북조절위원회가 사실상 유산됨으로써 그 행방마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남북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어 한반도에서는 냉전형의 군사적 위기가 조성되어 왔음을 다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이러한 위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대통령은 1981년 1월 12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 방문과 회담을 북쪽에 제의했으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되어 갔고 대화의 통로가 철저히 봉쇄된 채 일촉즉발의 사태를 연상케 하는 음울한 분위기만이 감도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이 답답하고 절박한 현실을 타개함이 없이는 남북 쌍방은 아무 소득도 없는 끝없는 대결태세에서 재력과 정력의 엄청난 소모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때 전대통령이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고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따른 정부의 통일정책을 극히 구체적 방안의 제시와 더불어 제의했다.

2

여기서 전대통령은 남북 동포의 뜻을 대변하는 쌍방의 대표로 먼저 「민족통일 협의회」를 구성하고 통일헌법을 기초케하여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자는 것을 큰 목표로 제안했다. 그리고 통일된 조국은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또한 통일헌법의 기초과정에서는 통일조국의 이념, 국호,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을 토의하자는 것이므로 북한측이 여기서 어떤 제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통일헌법의 초안이 마련되면 남북한에서 민주주의적이고, 자유로운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것을 확정·공포하고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여 숙원의 통일국가를 이룩한다는 안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진정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합리적인 이 방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확신한다.

북한측은 지금까지 남북연방안 등 일련의 통일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안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족통일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통일헌법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남북 쌍방이 서로 불신하고 증오한다면 이 역사적인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까닭이 없다. 그리하여 전대통령은 민족화합의 실현을 강조하고, 통일이 성취될때까지의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했다.

그 내용은 통일될 때까지 남북한 쌍방은 ① 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한 상호 관계의 유지, ② 분쟁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써 평화적으로 해결, ③ 상대방의 체도를 인정, 내정불간섭, ④ 현후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 포기,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⑤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개방, ⑥ 각기 체결한 국제협약과 협정준중, ⑦ 각료급 대표를 임명, 서울~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를 설치 한다는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전대통령은 이상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한 최고책임자의 회담을 갖자고 다시 제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각료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쌍방의 대표단간에 예비회의를 열것을 덧붙여 제의했다.

3

전대통령이 제의한 위와 같은 통일방안은 정부의 지금까지의 통일방안으로서는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그 동안에 남북한을 통틀어 나온 통일방안 중에서 가장 합법적이

요 현실적인 것이라고 단정해도 무방하다. 여기에는 추상적이요 모호한 점이 없으므로 누구나 그 내용을 명석하게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측에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적 평화통일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우리는 전대통령의 이번 제의를 북한측이 자세히 검토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제의된 정부의 통일방안은 크게는 「민족통일 협의회」의 구성안과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의 체결안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전자를 통일의 기본방안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과도적인 남북조정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며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남북분단 37년 동안에 남북한에는 서로 다른 정치제도, 법률체계, 사회·경제체제가 수립되고 공고화되어 있으므로 「잠정협정」으로 쌍방을 조정, 접근, 화합시켜 나가는 현실주의적 조치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제의하던 북한측은 이것을 덮어놓고 헐뜯고, 반대하고, 한자리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북한측이 얻은 것은 무엇이며 남한이 잃어버린 것은 또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으며 앞으로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전쟁으로도 혁명으로도 정치선동공세로도 내부 교란으로도 침투로도 외교적 책략으로도 이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이미 낡았으며, 그것이 가져올 것이라고는 아까운 민족적 에너지의 낭비뿐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하자고 한다면 싫든 좋든 평화적이요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시도 할 수 밖에 없다. 무력통일은 오늘의 고성능 무기시대에는 민족을 절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처자의 망상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면 밍든 굵든 우선 마주 앉아야 한다. 이것도 못하겠다면 그것은 단적으로 평화통일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지난날의 완강하고 고루한 태도를 바꾸어 보다 신축성있게 주어진 현실에 임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이 각박비정한 세계 속에서 우리 민족이 활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통일국가 구현의 대도

- 전대통령 국정연설과 새 대북제의 주안점 -

한국일보 (1982. 1. 23)

새해의 국정방향과 시책대망을 헤아리게 하고 특히 정부수립 이후 가장 종합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22일 국회본회의에서 있는 전두환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각계 국민에게 깊은 감명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또 한가지 획기적인 것은 올해부터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가 국정연설을 한다는 민주적 관례의 정상화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구시대의 비정상적 상황을 회고할 적에 1968년 이후 행정부수반에 의한 국회에서의 국정연설은 대독되거나 혹은 연두기자회견 등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금년들어 15년만에 정상화 방향의 개혁이 이루어진 셈이다. 민의를 수렴하는 국민대

표기구에 대한 존중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동반자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이바지하려는 뜻이 깃들여진 것으로 긍정된다.

총체적으로 이번 국정연설의 기조는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난 1년 동안에 다져진 안정기반위에 강력한 개혁의지를 담은 것이 특징적이다. 동시에 구시대처럼 권위주의나 자화자찬에 흐르지 않고 일부 잘못된 문제점을 솔직히 분석, 성찰한 연장선에 진취적 기상을 부각시켰다. 국민과 더불어 국정을 함께 걱정하고 폭넓은 참여를 일깨우려는 뜻으로 풀이 된다.

이번 국정연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 중의 하나는 앞서 1·12 제의와 6·5 제의를 제시한바 있는 전대통령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실현될 경우 제시하려고 구상했던 통일방안」을 북한당국과 전세계 앞에 천명한 획기적 발표이다.

통일헌법 제정 용단에 북한측 선뜻 호응해야

그 내용은 우리 시대의 으뜸가는 민족사적 과제인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법론과 접근과정 그리고 통일조국의 미래상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구상체계로서 특기할 바이다.

우선 전대통령은 조국통일이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확신에 입각하여, 종전에 북한의 특정집단이 추구해 오던 일방적 고집이라든지 「독립적, 배타적 주도」 내지 「폭력혁명」 등을 노리는 시도를 물리쳤다. 구체적 방법론으로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 협의회의」를 구성하여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을 기초하자는 것이다. 이어 자유로운 국민투표로 통일헌법을 확정, 공포한 다음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자고 하였다.

이는 민족화합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겨레와 국제여론이 한결같이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명료한 방안이다. 북한측의 타의있는 일방적 고자세에 보는 바와 같은 소위 「전제조건」 요구라든지 「연방제」나 「지역자치제」 「상설위원회」 그리고 「통일촉진대회」 등 부질없이 복잡하고 함정이 깔린 비합리적인 표방과는 전혀 판이한 공정한 내용이다.

한편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적 조치」로서 전대통령은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이에 담겨질 바람직한 합의사항으로는 ① 호혜평등 ② 무력·폭력·위협·지양 ③ 내정불간섭 ④ 현존 휴전체제의 유지와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조치 협의 ⑤ 상호간의 교류·협력·개방추진 ⑥ 완전 통일까지의 쌍방 국제협약 및 협정에 대한 존중 ⑦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가 제의된 것이다.

이는 8.15이후 한 세대 이상에 이르는 국민 각계의 진지한 평화통일접근 구상을 집대성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내용이다. 북한측도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느 항목도 민족적 견지에서 마다할 바 아닌 것이다.

나아가서 전대통령은 이상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측이 하루속히 남

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 쌍방의 고위대표단이 자리를 같이하는 상비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제의한 것이다. 책임있는 남북대화의 무조건 재개를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과 평화애호 국제사회의 팔목 기대에 비추어 북한당국의 주저없는 호응이 거듭 촉구되는 바이다. 조국통일은 오직 민족화합의 구심작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은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관하여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 수립을 고무적으로 내다보게 하였다. 우리는 동일한 민족이기에 통일을 염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통일조국이 민족사적 주체의식에 입각해야 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민주·자유·복지는 세계의 진군에 부합되는 동시에 우리 겨레의 누구도 마다하지 못할 역사적 과제임이 명백하다.

-후략-

2. 해 외 반 응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세계의 각국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미·일·영·서독 등 주요 우방국 정부는 물론 인도네시아·우르과이·스리랑카·요르단 등 비동맹제국에서도 전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어느 것보다도 『포괄적 현실적 제안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논평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가능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지의 제3세계권 국가를 포함한 세계의 언론기관들도 전대통령의 제안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고 사실 또는 해설을 통해 이번 제안의 포괄성 현실성을 지적하고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2월 6일 현재 93개국 정부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고 또한 전세계의 382개 신문, 통신, 방송들이 도합 728회에 걸쳐 제안내용 및 사실 해설을 게재하고 있다. 해외 각국의 동아시아문제 전문가들 및 유력인사들도 한결같이 이번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지적하며 환영하고 있으며 세계 각처의 우리 교민들도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표명하면서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 각계의 반응을 지역별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레이건 미국대통령은 2월 1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지난 1월 22일 발표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포괄적이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이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리차드 워커 주한미대사를 통해 전달된 친서에서 레이건 미대통령은 『이 제안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북한의 반응이 호의적이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각하께서는 지난 1월 22일 발표하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대한 새로운 제안을 본인에게 알려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안은 포괄적이며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제안들입니다. 이 제안은 한국민들의 깊은 열망을 나타낸 것이며 한반도 통일은 한국인들 자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작년에 김일성주석을 만나자고 제의했을 때처럼 우리는 이번의 건설적인 제안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의 제안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인은 이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의 반응이 호의적이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정부는 전대통령의 제안이 발표된 직후 공식적으로 이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성의 제임스 메나드 동아시아담당 대변인은 1월 22일 논평을 통해 『전대통령의 이 새로운 제안은 매우 건설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어 『이 제안은 지난해의 남북한최고당국자회의 제의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하고 『미국은 북한당국이 이 제안에 호응해 오게 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공식반응과 함께 미국내의 언론기관도 전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의 사실을 일제히 보도하고 사실 또는 논설을 통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뉴욕타임즈지는 지난 1953년이래 남북지도자들 간에 제의된 통일방안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남북한간의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제의는 미국 등 서방측이 환영하고 있는 한반도주변 사건의 교차승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의로 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종래 쌍방의 제의들이 선전을 염두에 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의 제안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논평하면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1월 23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번의 제안을 『2차대전 이후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한 제안이며 통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1월 26일자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도 『과거의 어떤 제안보다도 구체적이고 포용성 있는 이번 제안은 궁극적인 통일을 향한 명확하면서도 포괄적 절차를 제시한 것』이라고 논평하고 이 방안은 발표와 동시에 전세계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로스엔젤레스등 미국전역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결의문 등을 통해 남북간의 그 어떤 방안보다도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환영하고 북한당국은 이 제안을 즉각 수락하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일본> 일본의 조야도 전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현실적 구체적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환영했다.

사쿠라우찌(櫻内義雄) 일본의상은 1월 22일 외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정부는 이 제안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櫻内외상은 이 성명에서 전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평화통일을 위해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어떤 것보다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한반도의 장래는 기본적으로 남북당사자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측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신속하게 재개되어 평화통일을 향한 건설적인 노력이 착실히 거듭되어 나갈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즈키 일본 수상도 1월 28일 중·참의원에서의 질의답변에서 전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 통일방안」이 『현실적·구체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일본정부는 남북한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朝日新聞, 讀賣新聞 등 주요일간지들은 전대통령의 제안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해설과 사실을 통해 『이같은 제의는 국내정치와 외교면에서의 성공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제의로서 통일에 관한 이념과 구체적 절차를 처음으로 완벽하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朝日新聞은 1월 23일자 사설에서 전대통령의 이번 제의를 하나의 정치적 선전발언으로 돌리거나 묵살해서는 안될 것이며 남북대화의 새로운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남북한 쌍방이 어려운 국제적 경제적 여건하에서 과도한 군비 지출을 강요당하는 절박한 현실을 생각할 때 공존·통일의 공동기반으로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확인하면서 쌍방이 협상의 자리에 앉는 높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이번 제의의 실현을 촉구했다.

재일 한국거류민단은 1월 22일 성명을 통해 전대통령의 제의가 『성실하고도 현실적인 역사적 제의』라고 말하고 『재일동포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주었다』고 환영하였으며 아울러 『북한과 조총련은 전대통령의 제의에 무조건 찬동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일의원연맹 일본측(회장 안정겸)도 성명을 발표하고 『전대통령의 제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결의를 나타낸 것이며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측이 이 제안에 응함으로써 남북통일이 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주> 영국 외무성은 이번의 제의를 대담하고 확고한 것이라고 논평하고 영국은 이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주한 영국대사관을 통해 이같은 지지의사를 한국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독 수상실 및 외무성도 전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훌륭하고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지지논평을 발표하였으며 스위스 정부 및 적십자 국제위원회 등 제네바 주재 국제기구의 고위인사들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지지와 협력을 다짐했다.

불란서의 미테랑 사회당정부도 이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또한 방한중이던 「빌리발트 파르」 오스트리아 외상은 1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 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통해서 통일에 접근해 나가자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오스트리아는 이같은 대화노력을 항상 지지해 왔고 앞으로는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대통령의 제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게도 지지를 권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더 타임즈」, BBC 방송, 서독의 「디 벨트」, 불란서의 「르 몽드」 등 구라파의 유력일간

지들로 전두환 대통령의 제안내용을 보도하고 사실 및 해설, 특집 등을 통해 북한측의 제안을 완전히 포용한 포괄적 민주적 제안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분단상태를 해결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영국의 BBC방송은 1월 22일 런던 타임즈의 리차드 헤리스 논설위원, 런던경제학회(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마이클 라피버 교수 등과의 대담을 2회에 걸쳐 방영한데 이어 1월 27일, 28일 양일간에는 「오늘의 세계」라는 프로에서 도합 6회에 걸쳐 BBC 서울 특파원 제키 레디트, 뉴욕타임즈의 리차드 헬로란 기자, 런던타임즈의 스코트 플러머 기자 등 6명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들과의 전화토의를 방영했다. 이 프로에 참가한 인사들은 전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민족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전대통령의 성실성을 부각시킨 제안』, 『구체적이며 확실한 제안』 『시기적절한 제안』 『전대통령이 민족적 정치가라는 면모를 부각시킨 제안』 등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런던의 「더 타임즈」지도 1월 25일 사설을 통해 전대통령은 과거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김일성에 대한 우위적 입장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주장하고 통일헌법을 기초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논평하고 쌍방이 제안할 헌법초안 내용이 다르더라도 한국의 민족주의가 결국은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대통령은 확신하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 사설은 또 김일성의 교리는 이미 그 불꽃이 꺼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지금 초조한 상태가 아니라면 놀라운 일일 것』이라고 논평했다.

제불한인회, 재서독한인연합회, 재영한인회, 스위스 한국교민회등 구 주제국의 교포단체들도 1월 22일 전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전폭 지지한다고 말하고 북한은 이를 즉각 수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남아·중동>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제국의 유력일간지 및 시사전문지들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안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라고 논평하고 한국측이 『북한의 견해도 존중한다는 포용성』을 보여준데 반하여 북한은 철저히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중공계 신문인 대공보, 문화보 등도 서울발 외신을 그대로 전제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중동제국 정부관리들도 전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바레인 외무성의 고위당국자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논평하고 『바레인 정부는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며 유엔 등 모든 국제무대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 한인회 등 현지교민회와 중동의 10여만 근로자들도 성명을 발표하고 전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전폭지지하고 북한당국에 대해 이를 적극 수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미·아프리카> 멕시코, 브라질, 우르과이, 콜롬비아 등 중남미국가들과 자이레, 어피볼타, 나

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의 일간지 및 방송들은 서울발 통신기사를 인용 전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 통일 방안」 내용을 보도하고 사설을 통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멕시코의 엘 나시오날(El nacional)지는 1월 25일자 사설에서 『세계각국 각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멕시코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폭력과 침략이 아닌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자이레의 Solongo지는 전대통령은 1981년도에도 두차례에 걸쳐 남북 고위당국자간의 교환 방문을 제의한 바 있다고 「1·12」 및 「6·5제의」를 상기시키고 『이와 같은 남북한 접촉만이 긴장완화와 통일의지를 강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논평했다.

3. 북 한 반 응

앞에서 자세히 밝혀진 바와 같이 전두환 대통령이 천명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국내외 각계각층으로부터 절대적인 기대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넓은 지지기반이 확대되어 갈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같은 국제여론과 우리 민족성원 전체의 통일염원을 외면한채 전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오히려 모략과 비방선전을 강화하여 민족적 양심과 소망에 역행하고 있다.

북한측은 1월 23일 그들의 흑색방송매체인 이른바 통혁당방송을 통해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통일의 외피를 쓴 분열론』이라고 비방하는 첫 반응을 보인 이후 같은 논지의 흑색 선전을 되풀이 해 오다가 지난 1월 26일 그들의 중앙방송으로 발표된 이른바 「김일담화」를 통해서 『현실을 외면한 한낱 정치학상의 도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북한의 「부주석」 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김일담화」는

- 김일성이 6차당대회에서 제시한 「고려연방안」이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나 주변정세로 보나 전민족이 함께 택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고
- 이번에 『남조선 집권자』가 내놓은 총선거방안은 『우리나라 현실을 외면한 한낱 정치학상의 도식에 불과한 것』이라하여 거부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 더욱이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문제는 『분열의 현실을 법적으로 고정화하여 2개 국가, 2개 민족으로 살자는 것』이라고 터무니없이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왜곡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어 김일은 동 회담에서

- 진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선 통일의 첫단계 조치로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주화를 실현하여 반공법 폐지, 반공단체해산 등 반공대결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통일의 선결적 근본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등 이른바 「전제조건」을 다시 들고나와 부당한 내정간섭적 작태를 되풀이하면서 우리의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재개노력을 외면해 버렸다.

또한 김일은 동담화에서 『우리는 남조선 집권자들이 이같은 통일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자기의 새 출발을 행동으로 표시한다면 그들과 내일이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문제는 통일의 장애요인을 안고 있는 남조선 집권자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상투적인 책임전가의 술수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통일의 장애요인을 안고 있는 곳은 바로 북한측이다. 북한측이야말로 대내적으로 신격화된 그들의 집권자, 공산권내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반민주적 권력세습책동, 조금도 물러설 수 없는 대남적화통일의 정책목표, 대화거부 등 실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모든 통일장애요인들을 모두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남북대화의 단속과정에서 대화가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북한측에 그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일담화」에서 남북대화의 단절과 통일문제 미해결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국제적 관심과 지지공감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 북한당국자들이 어떻게해서라도 대외 여론을 호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수세적 입장을 모면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절실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김일담화」를 반응형식면에서 분석해 보면 과거와는 달리 「국가부주석」 자격을 앞세워 정권적 차원의 반응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당국의 대남전략의 바탕이 변하지 않고 있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또 「김일담화」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종래 우리 정부의 대북제외에 대한 거부성명들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고려연방안이 유일하게 정당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못박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강요하는 「전제조건」들을 고집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들의 사상·제도·정치들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적화통일노선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음을 확실히 간파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이른바 「김일담화」는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명백히 거부하고 「연방제책략」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북한측의 비타협 자세를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측은 「김일담화」를 통해 공식적인 거부태도를 명백히 나타낸 이후에도 「조국전선」 등 각종 사회단체의 「담화」 및 신문·방송 등 선전매체들을 총동원하여 「김일담화」 때보다 더욱 강경한 어조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왜곡 비방하는 한편 이른바 「고려연방」안의 실천결의를 다짐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일방적 선전·선동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비난실태 >

(1.26~2.1)

구분	사회단체 담화	노동신문 논평	정규방송	통혁당방송	계
회수	4	6	27	15	52

※ 재방송 회수는 제외

최근 북한측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논조 성향을 보면 우리 정부당국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 북한측은 종래의 강렬한 용어에서 조금도 완화됨이 없으며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내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거부해야 할 이론적 사유를 명백하게 밝히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부분적으로 지적하여 각 항목별로 비난하고 특히 우리의 통일방안의 현실적 합리성을 왜곡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북한측은 지난 1월 29일 조총련의 「김일담화」 지지성명 및 일부 공산권국가들의 친북여론을 즉각 보도하여 마치 「김일담화」가 내외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가운데 「고려연방」의 실현을 위한 「통일촉진대회」의 조기소집 결의를 다지는 등 통일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실추된 그들의 입장을 다소라도 개선해 보려는 갖가지 책동을 전개하고 있다.

4.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의 성명

천관우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의장은 1월 28일 대북성명을 통해 전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의를 거부한 북한측의 태도야말로 분단을 고착시켜 민족을 영구히 분열시키려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하고 북한측은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하는데 호응하여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과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 등 주요문제를 토의하는 대화의 광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천관우의장은 동 성명에서 『전대통령이 제의한 통일방안은 우리세대에 기필코 조국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온 겨레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실천적 통일의를 다시한번 천명했을 뿐 아니라 북한측의 방안까지도 대담하게 포용, 남북대화 재개의 문호를 전면적으로 열어 놓은 획기적인 조치로서 내외의 절대적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측은 그들의 연방안을 빙자하여 민족화합을 거부한채 미완성형 통일만을 추구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배제하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관우의장은 이어 『남북간의 대화를 성실히 진행하는 것이 민족의 분열을 기도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화의 문을 봉쇄하는 것이 민족의 분열을 추구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소행인가』라고 묻고 『북한측은 왜 대화에는 응하지 않고 그 뒷전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점을 북한측에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천관우의장은 동 성명에서 국토가 분단된지 37년에 이른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측이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일체 거부함으로써 비롯된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하고 민족통일 중앙협의회는 초당적 범국민적인 통일의를 규합해서 전대통령이 제의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현을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결의를 다짐했다.

천관우의장의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두환 대통령은 금년 1월 22일 국회본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을 통하여 통일조국의 미래상과 평화통일 실현방안을 보다 선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통일방안은 우리 세대 동안에 기필코 조국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온 겨레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실천적 통일의를 다시한번 천명하였을 뿐 아니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측의 방안까지도 대담하게 포함하여 남북대화 재개의 문호를 전면적으로 열어 놓은 획기적인 조치로서 내외의 절대적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의 이 평화통일방안에 대해서 1월 26일 이른바 부주석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측은 이 담화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천명한 우리의 통일방안이 비현실적 방안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의 이른바 「고려연방」안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또 다시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의 반공정책 철폐 등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한편, 이같은 그들의 요구가 충

죽되지 않는 한 남북간에는 일체의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종래의 태도를 재확인하고 있다.

조국의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초당적·범국민적 민간조직인 우리 민족통일 중앙협의회는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에 대하여 새삼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의 대오각성과 자세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번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남북한 거래의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착실히 해소하여 남북간의 비정상적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민족화합을 실현하며 민족전체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명실상부한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할 것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대화기구로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의 구성 및 기능까지 상세히 밝혀 북한측의 주장도 협의하겠다는 아량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또 다시 우리의 통일방안을 왜곡하고 우리측에 부당한 간섭과 요구를 앞세워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실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측은 그들의 「연방안」을 빙자하여 민족화합을 거부한채 미완성형 통일만을 추구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배제하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도 하나의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측은 마땅히 대화의 광장에 나와 우리측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해야 한다.

남북간에 대화를 성실히 진행하는 것이 민족의 분열을 기도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화의 문을 봉쇄하는 것이 민족의 분열을 추구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소행인가, 또한 왜 북한측은 대화에는 응하지 않고 그 뒷전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점을 북한측에 묻고자 한다.

국토가 분단된지 37년에 이른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측이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차단함으로써 비롯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야말로 분단을 고정시켜 우리민족을 영구히 분열시키는 처사임을 북한측은 이제라도 똑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더 이상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왜곡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고집하지 말고 하루속히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시키고 여기에서 통일국가의 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의 구성문제와 남북간에 존재하는 모든 통일저해요인을 과감히 해소하기 위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 등 중요문제를 토의 해결할 것을 북한측에 거듭 촉구한다.

우리 민족통일 중앙협의회는 초당적·범국민적 통일의지를 규합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제의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1982. 1. 28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천 관 우

제3부 민족화합, 민주통일을 위한 시범적 실천사업 20개항 제의

1. 국토통일원장관의 대북시범실천사업 제의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은 2월 1일 국토통일원 삼청회담장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석상에서 대북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에 대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20개항에 걸친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해 갈 것을 제의하였다.

손장관은 동 성명에서 지난 1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한 사실을 강조하고 이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한 각료급 예비회담을 개최하는데 북한당국이 하루속히 동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장관은 동성명에서 민족화합을 실현하여 민주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온 겨레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기초하여 『전두환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천정신에 입각한 민족화합 촉진조치의 일환으로서 북한당국에 대해 우선 당장에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손 통일원장관의 대북시범실천사업 20개항 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있는 새해 국정연설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전체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선언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통일방안에서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여기서 통일헌법을 기초할 것을 제창하면서 이 같은 통일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 작업을 순조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실현까지의 실천조치로서 7개항의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북한당국에 제의하였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은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이를 위한 남북쌍방의 각료급 예비회담을 가질 것을 북한 당국에 제의하였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북한측의 주장까지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북한측이 호응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분단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말로만 통일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한 각료급 예비회담을 개최하는데 북한당국이 하루속히 동의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의 실천정신에 입각하여 우선 당장에라도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들을 실천에 옮길 것을 북한당

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 (1) 남북간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치로서 서울·평양간 도로를 연결, 개통한다.
- (2) 남북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우선 그들간에 우편교류 및 상봉을 실현한다.
- (3)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지역을 관광·휴양지로 설정하여 자유관광 공동지역으로 개방한다.
- (4)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관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역을 자유로이 방문하도록 한다.
- (5) 남북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항과 진남포항을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 (6) 남북간에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략방송 장치와 방송청취 통제장치를 제거하여 쌍방 정규방송을 자유로이 청취하도록 한다.
- (7) 1986년 아시안경기대회 및 1988년 「올림픽」 대회에 북한측 선수단이 관문점을 통과하여 참가하도록 한다.
- (8) 남북을 방문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관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9) 남북 어부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유로운 공동어로 구역을 인정한다.
- (10) 남북간의 관계개선 및 신뢰증진을 위하여 정치인, 경제인, 청년학생, 근로자, 문예인, 체육인 등 각계인사간의 상호 친선방문을 실시한다.
- (11) 남북사회의 실상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쌍방기자들의 상대방지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 (12)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민족사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 (13) 남북간에 각 종목별 체육친선교환경기를 개최하며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 (14) 쌍방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용생산품의 교역을 실시한다.
- (15) 민족경제의 번영을 위하여 남북간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을 실현한다.

- (16) 남북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업체간의 기술자 교류 및 생산품전시회를 교환·개최한다.
- (17) 비무장지대내에 공동경기장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남북간의 친선경기에 이용한다.
- (18) 비무장지대내의 동식물 자연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공동 학술 조사를 실시한다.
- (19)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시설을 완전히 철거한다.
- (20) 남북간에 군비통제 조치를 협의하며 쌍방 군사책임자간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용한다.

1982년 2월 1일
대한민국 국토통일원 장관

2. 각 계 반응

국내외의 각계는 2월 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이 발표한 20개항의 「대북시범실천사업」 제의를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며 『남북한간에 신뢰의 축적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환영하고 『북한측은 거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수락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민주정의당을 비롯하여 민주한국계, 국민당 등 정당들은 2월 1일 발표가 있는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월 22일 전대통령이 천명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범위 안에서 당장 실천가능한 제의』이며, 『남북한간에 얽힌 문제 가운데 실현가능성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려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논평하였다. 그리고 『북한당국이 진지한 검토를 거쳐 민족적 염원에 배타되지 않는 반응을 보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북한측은 『통일문제를 민족문제로 승화시켜 이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여 6천만 민족의 염원에 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지역에 고향과 가족을 남겨 두고 월남한 실향민들은 물론 20개 시범실천사업에 연계된 각분야 종사자들도 한결같이 이 제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일본의 언론들도 20개항의 「대북시범실천사업」 제의가 『전두환 대통령의 제안을 구체화 시킨 연이은 평화제의』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몰리게 되었다』(조일신문)고 논평했다. 일본신문들은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의 제의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는 등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측의 진지한 평화노력이 국제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일 것』(산경신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의 각 보도기관들로 제의내용 보도에 이어 사설을 통해 이 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내 주요일간지들의 사설이다.

사회개방·상호교류·긴장완화 위한 대전제

- 통일원장관의 「시범실천사업」 제의의 함축 -

경향신문 (1982. 2. 1)

남북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고통과 불행중에서 해결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감으로써 상호신뢰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은 남북한 어느 쪽도 반대할 수 없는 엄연한 순서이다.

남북분단의 고질화로 인해 민족의 동질성이 무너지고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엄존해 있는 상태하에서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정당한 통일방안일지라도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는지 모른다.

전두환 대통령이 새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 「남북한 기본 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도 이러한 민족적 동질성회복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이 1일 북한측에 제의한 20개 시범사업들이야말로 당장 실천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의 발판을 넓힘으로써 통일의 고지를 향해 접근해 가려는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전대통령이 밝힌 새 통일방안을 수락하기는 커녕 한낱 위장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당국을 상대로 이처럼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제시했다는 것은 남북간의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자세가 매우 진지하며 적극적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통일주무부처인 국토통일원의 이와 같은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통일실천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시범 사업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통일원장관이 내놓은 시범사업들은 북한측이 성의만 보인다면 모두가 당장에라도 실현 가능한 것들이다.

남북간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서울~평양간 도로의 연결과 개통, 이산 가족들의 우편교류와 상봉, 자유관광 공동지역의 개방, 모국방문사업의 공동주관과 쌍방지역의 자유방문, 인천항과 전남포항의 개방,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일용생산품의 교역 등 어느 하나 상호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밖에도 남북간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을 비롯해서 기술자 교류 및 생산품 전시회, 비무장지대의 공동학술조사, 쌍방 정규방송의 자유청취도 남북한 상호이익과 이해증진을 위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쌍방군사책임자간의 직통전화설치, 운용한다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은 자연 완화될 것이 틀림없다. 특히 정치인, 경제인, 근로자, 문예인, 체육인 등 각계인사가 남북을 상호 방문할 수 있고 쌍방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활동, 각종 국제 경기대회에의 단일팀 참가 등은 남북간의 관계개선과 신뢰증진을 도모하는 지름길이 되고도 남는 일이다.

또 당장 백두산이나 한라산을 서로 오가며 구경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지역을 관광 휴양지로 설정하여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면 잃어버린 동포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통일에 이르는 전 단계로서의 시험적 의미도 크리라 믿는다.

아울러 남북한 공동의 관광휴양지가 설정될 경우 88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들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마음껏 둘러볼 수 있어 국위선양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86년 아시안 경기대회나 88올림픽대회에 북한측 선수단이 관문점을 통과하여 참가할 수 있고 남북한을 방문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관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우리 민족의 자주역량을 내외에 과시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하나의 민족문화를 형성해 온 우리 민족이 국토의 분단을 이유로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조차 공동으로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불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양측의 학자가 왕래하고 대화하는 일은 어려울지라도 우편으로 문헌을 교환한다든지 자료의 제시와 교환, 공동학술토론 내지는 유물·자료·전시와 같은 공동노력은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남북쌍방이 어떻게 하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교류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민족번영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점에서 통일원장관이 통일실천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 인천·진남포항의 상호개방과 남북간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이용을 제의하고 동일 제조업체간의 기술자 교류 및 생산품 전시회를 교환 개최하자고 요구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남북교역으로 가는 출발점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와 같은 교역과 교류가 실현된다면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상호이익은 증대될 것이다. 그것은 남북한 관계의 냉전적 상황탈피를 의미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질서와 안정이라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원장관이 제시한 20개 시범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개방정책에 바탕을 두고 그 하나 하나가 민족공동의 이익을 겨냥한 것이다.

그 어느 것이든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실천에 옮겨진다면 지금까지 남북간에 가로 놓였던 편견과 독선, 불신과 오해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며 민족전체의 통일의지를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키자는 전대통령의 새 통일방안 제의도 손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와 같은 실현가능성 있는 제의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과거와 같은 얼토당토 않은 전제조건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바라고 남북의 평화공존을 원한다면 연방제니 대민족회의니 하는 부당하고도 허구적인 주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선 20개 실천사업을 전개하자는 우리의 제의를 즉각 받아 들여야 할 줄 안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북한측의 대화거부태도에도 불구하고 오직 통일을 앞당기고야 말겠다는 굳은 실천의지와 결의의 표시로 내놓은 새시범사업 제의에 대해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남북의 개방에서 화합을

-설악산과 금강산, 인천과 진남포를 첫발로-

동아일보 (1982. 2. 1)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은 전두환대통령의 「통일헌법」 제정제의를 북한측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

하면서 20개 항목에 달하는 남북한 시범사업들을 1일 제안했다. 분단의 고통을 안고 있는 6천만 겨레는 물론 전세계의 지지를 받기에 족한 내용들이다. 전대통령의 통일헌법제정 제의에 바탕한 기초적 실천방안이기도 하며 통일을 위해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될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20개 항목으로 열거된 시범사업 제안에는 서울~평양간의 도로연결 개통으로부터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지역의 자유관광 개방, 인천과 진남포항개방, 관문점의 통과자유화, 공동어로 구역 설정, 국제경기의 단일팀구성, 천연자원의 공동개발, 비무장지대의 군사시설 철거, 군비통제장치 위한 협의, 인적물적 교류 개방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은 지난 37년간의 남북한 관계를 상기하면 놀라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6.25」남침으로 3년간에 걸친 처절한 동족상쟁을 겪어야 했고 남북한간에 이산가족의 소식조차 알길이 막힌 대결상태를 감안할 때 그렇다. 뿐만 아니라 지난 22일의 전대통령제안을 북한측이 4일만에 거부하고 나선데 이어 또다시 제안된 민족화합의 요청이라는 데서 남한당국의 좌절없는 끈질긴 통일의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 전인류는 남북한 두 지역중 어느 쪽이 민족자결의 길을 찾고 있으며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를 재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다. 지난 10일 동안 서울측은 통일민주공화국 설립을 위해 「민족통일협의회」 구성과 「통일헌법」 제정 그리고 남북기본관계 「잠정협정」을 제안했으며 남북한간의 관광지 개방등 인적 물적 자유교류를 시범사업으로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일성집단은 이제 어떠한 구실로도 우리의 통일제의를 떳떳하게 거부할 수는 없다. 지난번의 경우 그들은 반공정책 포기, 정치범석방, 대한민국정부의 사죄 등을 내걸고 「통일헌법」 제정제의를 거부했으며 『현실을 외면한 도식』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현실적이면서 포괄적인 내용을 놓고 「현실을 외면한 도식」이라고 몰아붙인 북한측의 억지에는 분노마저 솟구치지만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고 항구를 개방하는 등 동족이 잘 살아 보고자 하는 제안들을 또 무슨 억지를 붙여 거부하고 나설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와 같이 분단된 동서독은 서로 연간 9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을 하고 있으며 8백만 명에 달하는 서독 및 서「베를린」주민들이 동독 및 동「베를린」을 방문하고 9백41개의 전화선을 개통하고 있다. 이 같은 교류와 왕래 속에 동서독은 이데올로기를 초월, 「게르만」의 동질성을 회복해 가면서 함께 번영해 가고 있지 않은가. 서독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막강한 산업국가로 발전하였으며 동독 또한 공산권에서는 가장 앞선 공업국ियो, 세계 10위의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동서독의 번영은 「게르만」의 민족적 우수성에 기인한 것이면서도 그에 못지 않게 양독이 화해체제를 갖추고 정치적 안정 속에서 경제발전예 이바지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빼 놓을 수 없다. 우리 한민족도 냉엄한 국제경쟁 속에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오늘날과 같은 대치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화합의 길밖에 없다. 그 길은 인적 물적 교류에서 출발될 수 밖에 없다. 꿈에 그리던 금강산 구경이 실현될 날을 기대하며 북한의 주저 없는 수락을 6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통일, 뜻있는 곳에 길 있다

서울신문 (1982. 2. 2)

전두환대통령의 획기적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대북제의에 이어 우리 정부는 그 통일방안의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실천의지를 내외에 재차 천명했다.

1일의 손재식 국토통일위원장 특별성명에 담긴 「20개 시범사업」에 관한 대북제의가 그것이다.

이 제의는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최고당국자회담을 통해 민족·민주·자유·복지를 이상으로 하는 통일국가를 실현하자는 것이 목표이지만, 최고당국자회담이 성립되기 전에라도 또는 이와 병행하여 가능한 분야부터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의 신뢰를 되찾고 통일문제에 평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이번 제의에서 주목되는 특징은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 등 종래 제의때온 7개항목과 함께 서울~평양간 도로개설, 설악산·금강산자유관광지역 설정, 인천·진남포항 상호개방, 공동어로구역설정,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쌍방군사책임자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새로운 13개항목이 망라되어 있는 점이라 하겠다. 이는 곧 남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측의 진솔한 성의를 폭넓게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들 시범사업이야말로 북한측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합의되어 당장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문제들이라 믿으며, 또 그중 어느 하나라도 성사된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간의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다. 손장관이 대북 성명에서 『분단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말로만 통일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이점에 대한 지적인 것이다.

물론 우리는 현재 북한당국이 직면해 있는 내부적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얼마전 북한측이 전대통령의 통일방안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정치학상의 도식』 운운하면서 엉뚱한 거부반응을 보임과 함께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 한국의 반공정책 철폐 등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그들의 관심이 아직도 대남적화에만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동시에 그 같은 태도고수의 보다 근본적 이유는 우리의 평화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철저한 폐쇄정책과 대남강경노선을 바탕으로 유지해 온 세습독재 체제가 일시에 무너지리라는 우려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오늘의 국제적 추세와 남북한관계의 제 현안을 끝내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통일헌법」의 제정과정에서 북한측의 방안까지도 포용할 것을 밝힌 전대통령의 대담한 통일방안에 대해 지금 국제 사회에서는 환영과 지지여론이 높게 일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산권에서도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비추어 평화통일의 분위기조성을 위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천 가능한 상호 사회개방 교류 및 협력, 군사적 긴장완화 등 이번의 시범사업제의마저 반대한다면 북한당국은 자신의 입장을 더욱 더 궁지에 몰아 넣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제 북한당국에는 다음의 두가지 선택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시범사업 제의에 순순히 응하여 평화의 대도를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겨레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여망을 또다시 거역함으로써 그 호전성으로 인한 국제적 지탄과 반민족성으로 인한 역사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당국이 민족적 양심을 되찾아 대세에 호응함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해 두는 바이다.

실현 가능한 남북교류

중앙일보 (1982. 2. 2)

지난 1월 22일 전두환대통령이 제안한 통일헌법안이 기본적인 통일의 청사진이라고 한다면 통일원이 어제 제안한 남북한간의 20개 시범사업안은 각론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통일헌법안에 대해서 이미 무조건적 거부본능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20개 시범사업안에 대해서도 조건반사적인 반대를 들고 나올 것이 예상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세계의 언론과 뜻있는 사람들이 1.22제의를 건설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통한방안이라고 지지와 찬사를 보내는 것은 통일헌법안으로 대표되는 전대통령의 제의가 통일의 절차나 본질문제에 있어서 우리쪽의 입장만을 북한에 강조하지 않고 북한의 대안에 대해서도 토의와 검토의 문호를 널리 개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협의를 상대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논리에 이만큼 충실한 제의가 과거에는 어느쪽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통일원의 시범사업안 역시 협상과 대화의 상대방으로서의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들의 구상과 대안에 대해서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에 평양당국자들은 주목하기 바란다.

서울~평양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통, 인천과 진남포를 통한 교역, 판문점을 통한 자유왕래, 비무장지대의 평화이용 등 20개 항목 중에서 북한이 선별적으로 수락할 재량을 갖도록 배려한 것은 우리쪽의 민족화합의 의지가 그만큼 진하고 성실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철수, 한국의 반공정책 포기, 한국정부의 「사죄」 따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재 뿌리는 식의 주장으로 1.22제의를 거부하는 북한의 태도와 우리측의 자세는 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통일논의에서 언제나 지적되는 일이지만 지난 37년간의 분단으로 생긴 남북간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인 乖離(괴리)의 극복을 통일이라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 다같은 분단국가이면서도 동서독과는 달리 우리는 3년 동안이나 동족상잔의 끔찍한 전쟁을 치른 결과 남북간의 불신과 적

대감정은 뿌리깊은 채 남아 있다.

특히 김일성의 혁명노선은 북한전역을 일종의 병영으로 만들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남한의 지옥도」를 강제 주입시켜 불신의 강은 깊고 넓어만 갔다.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현실대로 직시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모든 가능한 교류를 제한한 것이다.

20개 시범사업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항목들이 모두 망라되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만약 북한쪽에서 추가 제의나 대안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합당한 이상 환영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통일헌법안과 시범사업안에 대해 북한의 성의있는 반응을 촉구하는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를 보아도 1972년 체결된 기본조약으로 단숨에 교류의 문이 열린게 아니라 오히려 동서분단에서 1972년까지 우편, 전신·전화, 제한된 물자교환, 경계선을 넘나드는 도로의 공개, 인적왕래같은 저변의 교류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1970년의 양독수뇌회담이 성사되고 그것이 2년 뒤 기본조약체결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통일헌법안을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수단, 비현실적 제의라고 강변을 하고 있다. 실현 가능한 교류, 남북한 주민들간의 「가슴과 가슴의 접촉」, 한반도 긴장의 진원지인 비무장지대의 비군사화 같은 조치가 비현실적이라면 북한에서는 「현실적」이라는 말의 개념이 우리와는 반대로 쓰인다는 말인가.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심부재언 시이불견 청이불문:대학)는 말이 생각난다.

6천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보다 혁명노선의 지속으로 「김일성왕조체제」의 온존을 지상명령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제의가 현실적으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사실 남북한사회의 상호개방처럼 그들에게 두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화합과 통일을 지향하는 큰 흐름에 역류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북한 당국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개방·교류에서 통일로

- 통일원장관의 20개 시범사업 제의를 보고 -

조선일보(1982. 2. 2)

<1>

2월 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은 대북성명을 통해 남북통일로 접근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20개

항 시범사업의 실천을 제의했다. 손장관의 이번 제의는 지난 1월 22일 전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측에 제의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을 총괄하여 남북이 같이 실천하자고 북한당국에게 요구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제의는 대한민국정부가 구상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 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호응해 마지 않을 가장 현실적인 통일접근 사업방안이다.

20개항 「시범실천사업」의 내용을 대별한다면 남북한의 사회개방 사업, 상호교류협력사업, 긴장완화를 위한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남북한 사회개방 사업으로서는 ①서울~평양간 도로연결개통, ②설악산이북 금강산이남 자유관광지 설정개방, ③해외동포 조국방문공동주관, ④인천·진남포항 상호개방, ⑤이산가족 우편물 교환 및 상봉실현, ⑥모락방송장치제거 정규방송 자유정취, ⑦북한선수단의 서울 「아시안 올림픽」 판문점 통과 참가, ⑧외국인판문점 통과 및 남북한 자유여행 등을 제의했다.

둘째로 상호교류협력사업에는 ①남북의 자유로운 공동어로 구역설정, ②정치인을 포함한 각계 인사의 상호친선방문실시, ③쌍방기자들의 자유취재활동보장, ④민족사의 남북공동연구추진, ⑤국제경기에 단일팀 구성참가, ⑥쌍방의 일용생산물 교역실시, ⑦남북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⑧남북간의 기술자 교류 상품전시회 교환개최 등이 들어있다. 그리고 세째로 긴장완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①비무장지대 내에서의 공동경기장 마련, 친선경기실시, ②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자연생태계 공동조사, ③비무장지대내의 군사시설 완전철거, ④쌍방군사책임자간에 직통전화 설치 등이 제안되고 있다.

<2>

이상 3부문 20개항으로 되어 있는 「시범실천 사업」내용은 지금까지 남북한을 통틀어 제의되어 온 것 중에서 가장 광범하고 종합적이며 또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들이다. 이 20개항의 내용 중에는 이미 대한민국정부성명 남북조절위원회, 또는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하여 우리측이 제안한 바도 들어있지만 이번에 새로 제의된 것은 전체 항목중 12개항목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믿기에는 이만하면 평화통일을 위한 문호개방, 교류협력, 긴장완화의 시범사업안으로서는 일단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이다. 만일 이것으로도 불충분하다면 남북이 같이 보충해 나가면 될 것이다.

아무리 통일을 말로만 부르짖어도 이에 접근하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면 그것은 빈말에 불과하다. 또한 아무리 구체적 방안을 내세운다 해도 그것이 일방에만 유리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면, 그런 제안이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 손장관이 제의한 20개항 「시범실천사업」내용은 당장 남북한을 위하여 다같이 이익이 되며, 그 존재와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안심할 수 있으며 평화통일을 향한 전제조건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통일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긴장완화도 교류도 상호의 문호개방도 다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긴장완화·교류·개방의 제의를 상대방을 헤이케 하고 내부로 침투하며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아넣는 수단이상으로는 보지 않으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 측에는 그러한 의도가 추호도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 어느 측이 하나의 정치흥계로써 그런 것을 제의했든 이 밝은 세상에 그것에 속을 동포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손장관의 이번 제의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애절한 염원을 반영하여 정부의 책임에서 한 것임은 물론이다. 우리는 대북선전전의 한 방법으로서의 통일 논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어느 측이 그런 것을 시도해도 그 결과는 역효과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 누구처럼 평화통일을 전쟁준비를 숨기기 위한 연막이나 평화공세의 도구로 써먹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지 오래다. 우리의 제의는 성실한 것이며, 이것은 내외정세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서 민족적 활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나온 것임을 단언한다.

<3>

북한측이 이번 손장관의 제의를 수락하건 안하건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다. 그들이 이 제의에 대해서도 비방과 증상에서 거부할 것은 지난 1월 22일의 전대통령 제의에 대한 반응으로 보아 거의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이번 제의를 비방 거부한다고 해도 오늘의 복잡한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이상 20개항 「시범실천사업」의 방식을 그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개방·교류·협력·긴장완화 없이는 평화통일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통일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으레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들고 나오고 남한의 헌정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공산당의 활동을 합법화하라고 명령이나 하듯이 강요해 왔다. 거꾸로 생각해 한국에서 만일 북한이 소련 및 중공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조약을 폐기할 것을 내세우고, 북한의 전체주의적 1인 독재체제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합법화하라고 강요한다고 하면 그들은 쾌히 들으려 할 것인가. 절대로 안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그런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은 통일을 논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남북이 맺은 국제관계, 상이한 정치·사회체제상의 대립, 군사적 긴장은 서로 절연하고 비방하고, 모함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근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접근하고 교류하고 개방하는 여러 전제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의 초보적 상식이다. 그러한 전제조건이 성숙을 「분열의 영구화」 운운으로 비방하고 반대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안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남으로부터의 제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구실만을 찾으려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도 볼 줄 아는 또 하나의 안목을 가지기를 바란다.

말보다 실천부터

-20개 시범사업, 북측은 즉응해야-

한국일보(82.2.2)

우리의 통일접근 노력은 강인한 의지력과 불요불굴의 인내력으로 지탱되어야 하는 지속적 전진을 뜻하기 때문에 흔히 「장정」에 비유된다. 거부 반응에 부딪힌다고 해서 지쳐서는 안되며, 험난한 시련이라고 해서 그 전진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한 당위성에 비추어 1일에 발표된 20개항의 남북간 시범사업에 관한 대북제의는 우선 북한 폐쇄사회의 굳게 닫힌 문을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두드리려는 줄기찬 통일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평가된다.

이날 손재식 통일원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이 지난 1월 22일 국정연설에서 천명한 바 획기적인 새 통일방안을 부연, 구체화하면서 남북이 합의만 한다면 「당장에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시범사업」 구상을 별항보도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① 서울-평양간의 도로를 연결개통하자는 것을 비롯한 남북사회의 상호개방에 관한 것이 8개항이고 ②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같이 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것이 8개항 ③쌍방 군사책임자간의 직통전화 설치같은 긴장완화를 위한 것이 4개항이다.

그 특징은 전대통령의 1·22통일방안제시가 그러했듯이 북한측의 종래 주장까지도 포용하는 개방적이고 집대성된 의욕의 표명이라고 풀이된다. 그 동안 국내외 6천만 동포와 특히 6천만 이산가족이 한결같이 갈망해온 당면한 구체적 요구들을 망라한 가운데 새로운 구상도 12개 항목이 첨가되었음을 본다.

남북사회의 상호개방은 민족적 동질성의 재확인·정립을 위한 필수적 요청이다. 비록 북한측이 아직은 문호개방에 속시원하게 응할 수 없는 착잡한 사정이 있다손치더라도 설악산과 금강산을 자유관광지로 만든다든지, 인천과 진남포항을 통한 물자교역의 실시, 이산가족간의 우편물교환, 해외동포 및 외국인들의 관문점 통과보장 등은 하등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고 「위험부담」 따위도 상정할 바 아니라고 생각된다.

교류·협력의 증진도 자연자원의 공동개발을 포함하여 서로간에 이로울 따름이다. 동족상잔의 방지를 위한 일련의 군사적 장치는 국제사회의 객관적 압득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거래가 한결같이 바라는 남북통일이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이상 그 접근노력은 항시 분단고통의 경감과 상호 신뢰회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또 이번 제의는 국토양단 후 한 세대이상에 걸친 각종 남북교류 및 남북관계 조정에 관한 구상을 집약한 현실적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북한측 반응은 지금껏 낙관만 할 수 없는 불투명요인을 관측케 하기도 한다. 전대통령의 1·22통일방안제시에 대한 평양측 김일 명의의 거부반응이 상기되기 때문이다. 하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북한측은 거래의 염원과 국제여론의 동향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질없는 교조주의와 아전인수격인 희망적 정세판단에 집착하는 대신 진취적 개방자세를 증명해 마땅하리라는 것이다.

평양측은 일괄 수락이 어렵다 하더라도 선별적인 호응이나마 보여야만 「옹고집」이라는 지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 더구나 「전제조건」을 운위하고 우리측 내부체제에 대한 고자세의 간섭을 피하면서 타의있는 대화거부를 합리화해 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통용될 수 없음을 뉘우쳐 알게 되기 바란다.

답답하게 가로막힌 남북간의 장벽은 우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동서독 관계에서조차 가능한 것이 어찌 우리의 남북관계에서 무작정 불가능해야만 하겠는가. 북한측이 민족적 대의에 입각한 트인 마음으로 남북사회의 상호개방에 일보 접근을 보이도록 거듭 촉구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부 록> 통일문제에 관한 남북한 주요제의 일지

1948. 3. 25 북한측, 제26차 북조선 민족전선중앙위제의: 남조선만의 단선단정반대 남북제정당 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 4. 14 평양 개최 제의
1948. 4. 30 북한측, 남북제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공동성명: 외군철수 후 전조선정치회의 소집, 임시정부수립 제의
1948. 6. 12 한국측, 제헌국회결의: 북한지역에서 인구비례로 국회의원선거 실시, 한국국회와 합류
1950. 6. 7 북한측,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확대회의 호소문: 통일최고 입법기관설립(8·5~8·8총선실시) 남북정당 사회단체대표자 협의회 소집
1950. 6. 19 북한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한국국회에 제안: 통일실현을 위해 최고 인민회의와 한국국회를 통합, 단일 입법기관 구성
1950. 6. 25 북한측, 6·25 납침
- 1953 11. 23 한국측, 이승만대통령 성명: 북한만의 단독선거로 한국국회 잔여의석 보충
1954. 4. 27 북한측, 제네바회의 남일외상 제안: 통일정부 형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
1954. 5. 22 한국측, 제네바회의 변영태외무부장관 제안: 유엔 감시하의 자유 총선거
1954. 10. 2 한국측, 제3대국회 통일방안 결의: 유엔감시하 북한지역총선거·대한민국주권 확충
1954. 10. 30 북한측, 최고인민회의 1기 8차회의 호소문: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또는 남북국회 공동회의 소집
1955. 8. 15 북한측, 김일성 8·15해방 10주년연설: 평화보장을 위한 국제회의소집·남북간 무력불행사 협정 체결
1956. 4. 28 북한측, 노동당 3차대회 선언문: 통일정부 총선으로 수립·반미공동투쟁강화
1957. 9. 10 한국측, 국회결의 통일방안: 유엔감시하 북한지역 총선·한국유엔가입
1957. 9. 20 북한측, 최고인민회의 2기 1차회의 김일성 연설: 전외국군대철수·쌍방군대 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남북간통행, 자유왕래, 통신, 문화교류
1960. 4. 21 북한측, 정당사회단체지도자연석회의: 남북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구성

1960. 8. 14 북한측, 8·15해방 15주년 김일성 연설: 남북연방제실시
1960. 8. 27 한국측, 장면총리 시정연설: 유엔감시하 남북총선거
1960. 11. 2 한국측, 5대국회결의 통일방안: 유엔감시하 한국헌법 절차에 따라 인구비례 남북총선거
1961. 6. 24 한국측, 김홍일의무부장관 성명: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만 한반도 통일
1963. 12. 10 북한측, 최고인민회의·조민전·조평통 합동회의 호소문: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쌍방군대 각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
1964. 11. 3 한국측, 박정희대통령 학생의 날 치사: 유엔감시하 남북자유 총선거 이외 방안 배제
1970. 8. 15 한국측, 박대통령 8·15경축사: 남북한 선의의 경쟁촉구·북한의 적화통일 폭력혁명노선 포기선언촉구·인위적 장벽의 단계적 제거 위한 현실적 방안제시 용의·유엔한국문제토의 북한참가 불반대
1971. 4. 12 북한측, 최고인민회의 4기 5차회의보고: 주한미군철수 등 8개항 제의
1971. 8. 12 한국측, 최두선한적총재성명: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제의
1973. 4. 5 북한측, 최고인민회의 5기 2차회의, 김일보고: 남북평화협정체결제의
1973. 6. 23 한국측, 박대통령특별담화: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1973. 6. 23 북한측, 김일성, 「후사크」 환영연설: 김일성의 5대 강령
1973. 8. 28 북한측, 김영주 평양측 조절위원장 성명: 남북조절위 중단 선언
1974. 1. 18 한국측, 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제의
1974. 3. 25 북한측, 최고인민회의 5기 3차회의: 대미평화협정제의
1974. 8. 15 한국측, 박대통령 8·15 경축사: 평화통일 3대원칙 천명
1975. 1. 14 한국측, 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남북상호 불가침협정 체결촉구
1977. 1. 12 한국측, 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식량원조 제공 용의표명

1977. 1. 25 북한측,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편지: 남북정치협상회의 소집 주장
1977. 8. 15 한국측, 박대통령 8·15경축사: 자유총선거, 남북대화로서 상호 신뢰회복
1978. 1. 18 한국측, 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무조건 남북대화 재개요구
1978. 6. 23 한국측, 박대통령특별담화: 남북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경제협력기구 구성제의
1978. 9. 9 북한측, 북한 정권수립 30주년 김일성 보고: 「민족분열정책」을 통일정책으로 반공 정책을 연공정책으로 변경주장
1979. 1. 19, 한국측, 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어떤 시기, 어떤 장소, 어떤 수준에서든지 남북한당국의 직접회담제의
1979. 7. 1 한국측, 한미공동성명: 3당국회의 제의
1980. 1. 18 한국측, 최규하대통령 연두기자회견: 평화정착과 대화를 통한 통일노력 다짐
1980. 10. 10 북한측, 노동당 제6차대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 제의
1981. 1. 12 한국측, 전두환대통령 연두시정연설: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1981. 6. 5 한국측, 전두환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식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제의
1982. 1. 22 한국측, 전두환대통령의 82년도 국정연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제의
1982. 2. 1 한국측,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대북시범실천사업 20개항 제의

남북대화 제29호

(1982. 2 ~ 1982. 10)

< 목 차 >

제1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실현을 위한 남북대화재개 촉구	3
1. 「남북한 고위대표회담」 개최 제의	3
2. 「남북한 고위대표회담」 수락 촉구 성명	11
3.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통일결의문	13
제2부 북한측의 위장된 대화재의	17
1. 「남북한 정치인 연합회의」 소집 주장	17
2. 「남북한 정치인연합회의」 소집 주장의 저의	19
제3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10주년	28
1.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의 대북성명	28
2.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과 북한의 유린 실태	30
3. 남북공동성명 정신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35

제1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실현을 위한 남북대화재개 촉구

1. 「남북한 고위대표회담」 개최 제의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은 지난 2월 25일 대북성명을 발표하고 동성명가운데서 『남북한이 3월 중에 서울이나 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쌍방의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한고위대표회담」을 개최하자고 북한측에 제의했다.

손재식장관은 이 성명에서 『전두환대통령께서 밝힌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은 거래의 전폭적인 환영과 광범한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 호응할 것과 20개항의 시범사업을 우선 당장에라도 실천에 옮길 것을 북한측에 제의한 사실들을 상기시켰다.

또한 손재식장관은 이 성명에서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와 반공정책 포기 등 상투적인 이른바 「전제조건」을 앞세우면서 우리의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거부』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 2월 10일 이른바 「남북정치인 연합회의」의 개최를 주장할 때는 『대화를 운운하면서 상대측의 자격을 시비하고 대화상대측 명단까지 일방적으로 지명, 발표하는 북한측의 행위는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작태』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측이 이같은 그릇된 자세를 하루속히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손재식장관은 이어 『남북 쌍방간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고자 하는 일념에서』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의 개최를 제의한다고 말하면서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에서 협의할 의제 3개항과 이 회담에 참가할 대한민국측 대표 9명의 명단을 아울러 발표하고 북한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북성명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북성명문〉

전두환 대통령께서 밝힌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실천적이고 합리적이며 포괄적인 방안으로서 온 거래의 전폭적인 환영과 광범한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 통일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과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의 체결을 제의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측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지난 2월 1일 우리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북한측의 주장까지도 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 사회개방,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20개항의 시범사업을 우선 당장에라도 실천에 옮길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와 반공정책 포기등 상투적인 이른바 전제조건을 앞세우면서 우리의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거부하고 있다.

더우기 북한측은 2월 10일 이른바 「남북정치인 연합회의」의 개최를 주장하면서 그 회의에 참석할 우리측 인사 50명의 명단을 그들 임의로 지명하여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당국과 정당·사회단체가 대화의 상대로 될 수 없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화를 운운하면서 상대측의 자격을 시비하고 대화상대측 명단까지 일방적으로 지명·발표하는 북한측의 행위는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몰상식하고도 파렴치한 작태(作態)로서 어떠한 꾀변(詭辯)을 농(弄)하더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해괴한 소행이다.

더구나 한 사람의 독재권력이 37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고, 그 권력의 세습적 계승까지 자행하면서 1,800만 북한동포들에 대한 무자비한 집단탄압마저 불사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정치질서를 시비함은 언어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측이 이 같은 그릇된 자세를 하루속히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남북쌍방간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고자 하는 일념에서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첫째: 남북한은 3월중에 서울이나 평양 또는 관문점에서 「남북한 고위 대표회담」을 개최한다.

둘째: 「남북한 고위 대표회담」에서는

- 통일헌법을 마련할 「민족통일협의회」구성과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
- 북한측이 1982년 2월 10일 제의한 회의에 관한 문제
-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사회개방과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반문제 등을 협의한다.

셋째: 「남북한 고위 대표회담」에 참석할 쌍방 대표단은 각기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 9명으로 구성한다.

「남북한 고위 대표회담」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석대표	정무 제2장관	노 태 우
차석대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차장	김 상 구
대 표	국회의원(민주정의당)	이 영 일
대 표	국회의원(민주한국당)	김 문 석
대 표	국회의원(한국국민당)	강 기 필
대 표	국회의원(민주사회당)	백 찬 기
대 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	이 흥 구
대 표	국정자문회의 전문위원	김 태 서

대 표 국토통일원 남북대화 사무국장 송 한 호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제의에 대하여 북한측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이번의 대북제의를 검토해보면 그 내용면에서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회담의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즉, 이번 대북제의는 「남북한 고위 대표회담」이 실현될 경우 동회담에서 토의할 의제로서 다음 3개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① 통일헌법을 마련할 「민족통일협회의의」 구성과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개최하는 문제
- ② 북한측이 1982년 2월 10일 제의한 회의에 관한 문제
- ③ 남북간의 교류·협력 사회개방,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반문제

이같은 의제제시는 대한민국이 제안한 내용외에도 북한측이 주장한 소위 「남북정치인 연합회의」 개최문제까지 검토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처럼 편협되고 경직된 자세가 아니라 남북간의 어떤 문제이든 쌍방간대화를 통해 성실히 해결해 나가려는 대한민국의 넓은 아량을 보인 것이다.

둘째, 광범하게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단을 구성한 점이다.

이번 대북제의는 쌍방 대표단을 각기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 9명으로 구성하도록 제의하고 있으며, 우리측 대표단 구성에서는 정부당국대표, 정당대표,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대표등을 참여시킴으로써 범국민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대표단을 구성함에 있어 과거의 조절위원회(5명)와 적십자본회담(7명)에 비해 인원을 늘림으로써

-당국, 정당 등 각계대표로 비중있는 대표단을 구성, 그 권위를 높이고 -통일대화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실질문제 해결능력을 부여하는 한편

-북한측이 소위 「남북 정치인 연합회의」 구성인원을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부당한 행위와는 달리 우리의 적극적이며 성실한 대화자세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다.

셋째, 북한측의 주장을 능동적으로 포용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측은 이른바 「남북정치인 연합회의」 주장에서 우리측 인사까지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지

명하는가 하면 우리 정부당국은 물론 대한민국의 현존 정당과 단체까지도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억지를 쓰는 등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작태를 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북한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정면으로 배격하지 않고 그같은 몰상식한 궤변을 늘어놓지 않으면 안되는 그들의 기도와 사정도 일단 대화를 통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우리로서는 북한측의 억지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도 일단 대화에서 해명되고 협의하여야 한다는 설득의 자세로 통일문제를 성실하고 진지하게 풀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번의 대북제의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현과 남북간에 합의만 한다면 교류·협력, 사회개방, 긴장완화를 위해 당장에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20개항의 「시범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실천조치이다.

이번에 제의한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실현을 위한 예비 회담을 배제하지 않고 다만 이 회담에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실현을 합의한다면 별도의 예비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며, 이 회담자체가 바로 예비회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의 개최를 제의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조국의 평화통일 대도를 밝힌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내외에 천명한데 이어 2월 1일에는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의 대북성명을 통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천정신에 따라 남북간에 합의만 한다면 당장에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20개 시범실천사업」을 함께 추진해 가자고 북한측에 제의한 바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실천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체계적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20개 시범실천사업」의 제의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대한민국의 입장은 국내외적으로 그 지지기반을 확산시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1월 26일자 이른바 「김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거부한 그들의 태도가 대내외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궁색한 입장에 놓이게 되자 2월 10일 이른바 「조국평화통일 위원회」명의로 성명을 통해 「김일담화」의 부정논리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20개 시범실천사업」제의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을 늘어놓은 다음 소위 「남북 정치인연합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나와 또 다시 통일문제를 정치선전과 대남 모략에만 이용하는 종래의 작태를 버리지 못하고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를 기피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약 우리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외면하고 통일대화 문제를 한낱 선전홍보 차원의 쟁점으로 삼고자 하는 북한측의 소행에 맞선다면 남북간에는 무용한 선전전만 격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어떤 생산적인 합의보다 결국 냉전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답보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며 이 같은 상황전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실천적 통일노력과 부합될 수 없다. 비록 북한측이 그들의 헛된 망상과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나 「20개 시범실천사업」 등에 대한 부당한 구실을 앞세워 대화의 문호를 봉쇄하고 있지만 그같은 소행에 구애됨이 없이 북한측을 대화의 광장으로 유도하여 남북한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2월 25일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의 대북성명을 통해 「남북한고위대표회담」 개최를 제의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이번 제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로는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남북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척시켜 나감으로써 통일을 달성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민족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 물량 등 총체적인 국력면에서도 북한측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므로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주도적 입장에 서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북제의는 비록 북한측이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워 우리와의 대화를 기피하고 또 이른바 「남북정치인연합회의」를 주장하면서 대화거부의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획책하고 있지만 보다 포용적 입장에서 그들의 그릇된 자세를 바로 잡아 통일노력을 지속하자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다.

둘째로 이번 제의는 남북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제반문제는 그럴싸한 방안이나 주장을 남발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쌍방이 직접 대화의 광장에 나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를 모색하며,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번 제의를 통해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주장도 대화의 광장에서 함께 토의할 수 있게 하여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려는 실천지향의 입장에서 아랑과 포용으로 북한측을 대화의 광장에 유도함으로써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세째로 이번 대북제의는 북한측의 내정간섭적이고 부당한 정치선전 책동의 무실함을 깨우쳐 주려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측은 대화거부의 구실로써 상투적인 「전제조건」을 제기해온데 이어 이번에는 대화상대자를 그들 마음대로 지명하는 동서고급에 유례없는 몰상식한 소행까지 자행함으로써 종래보다 더욱 경직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는 남북간의 정상적인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통일대화 문제를 대한민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에 이용하며, 또한 내외선전전을 격화시킴으로써 그들의 대화거부 태도

에 대한 국내외의 지탄을 호도하려는 책략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번 대북제의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배격해 버리지 않고 검토의 대상으로 포용함으로써 그들의 부당한 내정간섭 및 선전전의 격화책략을 사전에 봉쇄하고 통일외교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여 북한측으로 하여금 부당한 대남책동의 무실함을 스스로 깨달아 정상적인 대화에 호응해 오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같이 금번의 「남북한고위대표회담」 제의는 그동안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에 대한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려는 실천지향적 입장에서 아량과 포용으로 북한측을 대화의 자리에 유도함으로써 남북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었다.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의 「남북한고위대표회담」이 제의됨에 따라 국내외 언론 및 각계각층에서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고 북한측이 이를 즉각 수락하여 남북대화의 자리에 나오도록 촉구하였다.

민정·민한·국민당 등 국내 각 정당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각 정당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이를 환영하고 북한측의 즉각 수락을 촉구했다.

민정당 대변인: 『이번 정부의 대북제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터야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끈질긴 노력의 강렬한 표현이다. 북한측이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그들의 대남해외선전 책동과 무력남침의 속셈을 오히려 국제사회에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민한당 대변인: 『남북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의 표현이다. 북한측은 유명단체인 통혁당대표니 뭐니하는 터무니없는 사람까지 지명한 이른바 「남북 정치인 연합회의」의 허구에서 벗어나 우리의 적절한 제의를 받아주기를 촉구한다.』

국민당 대변인: 『북한당국은 즉각 조건없이 이 제의를 수락해 평화통일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한편 국내신문들은 『「남북한 고위대표회담」 제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번 제의를 내놓게 된 근본의도는 북한측의 좀체로 풀리지 않는 대화거부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 노력을 주도하는 장형적 입장에서 아량과 포용으로 그들을 대화의 광장으로 유도, 대화재개의 돌파구를 기어이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설들을 게재했다.

대화의 길 외면말라

(2. 26 서울신문)

평화통일의 대도를 밝힌 전두환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후속노력은 인내와 성의를 다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이 지난번 북한에 대해 「통일시범사업 20개항」을 제의한데 이어 이번에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의 개최를 제의한 사실이 그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일환임은 물론이다.

손장관은 25일 대북성명문을 통해 오는 3월중에 서울이나 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을 열자고 북한측에 정식 제의하면서 이 회담에서는 ①통일헌법을 마련할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과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개최하는 문제 ②북한측의 지난 10일 제의한 「회의」에 관한 문제 ③남북한간의 교류·협력·사회개방과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반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에 참석할 쌍방대표단은 각기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9명으로 하자고 제의하면서 노태우 정부 제2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의 명단도 아울러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이번 제의를 내놓게 된 근본의도는 북한측의 좀체로 풀리지 않는 대화거부자세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노력을 주도하는 장형적 입장에서 아량과 포용으로 그들을 대화의 광장으로 유도, 대화재개의 돌파구를 기어이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그동안 북한측이 우리측 평화제의에 대해 시종일관 보여 온 불성실한 태도와 대조해 보면 스스로 확인해 진다.

북한측은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통일시범사업」 제의에 대한 국내외의 지지여론이 압도적으로 확산돼가고 있고 또 상투적인 「전제조건」을 내세워 이 제의를 거부한 그들의 태도가 국제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궁색한 입장에 몰리게 되자 지난 10일 소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명의로 성명을 통해 「남북정치인 연합회의」의 개최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그런데 참으로 해괴한 것은 이 성명에서 우리 정부당국과 현존 정당·사회단체를 부정한 채 우리측 대표라는 50명을 반한인사 일색으로 그들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사실이다.

이는 손장관도 성명에서 지적했듯이 동서고금의 어느 정치협상사에도 유례가 없는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작태로서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역제의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그 속셈을 굳이 파헤친다면 우리의 민주통일방안을 퇴색시키고 국내외의 여론을 오도해 보자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임이 틀림없다 하겠으나 그들이 이런 방법으로 개방된 국제사회의 정론을 기만하려는 것은 실로 한심한 오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번 제의는 그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소위 「남북정치인 연합회의」란 것도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에서의 검토대상으로 포용하겠다는 대담한 아량을 보이고 있다. 또 우리측 대표단에는 정부당국자·여야 정당대표·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대표 등 각계인사를 고루 참여시켜 범국민적 의사가 반영되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북한측에 대해서도 그들이 임의로 대표단을 선정토록 순수협상의 정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북한측에 주어진 선택이란 성의있는 호응이 있을 뿐이다. 만일 이에도 불응한다면

분단영구화의 책임자는 북한자신이라는 역사의 심판을 끝내 면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이에 다시 한번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일본의 신문들에서도 2월 25일 손재식 장관의 대북성명을 외신면 머리기사로 크게 보도하고 『전두환 대통령의 평화통일헌법 제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진전시킨 것이며 한국은 남북한 교섭의 당사자가 정부당국자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분석하면서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이번 제의의 현실적 타당성을 높이 평가했다.

2. 「남북한 고위대표회담」 수락 촉구 성명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은 3월 26일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을 3월중에 서울, 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열자는 지난 2월 25일 대북제의에 대해 북한측이 공식적인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조속히 이를 수락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손재식 장관은 이 성명에서 『북한측이 진정 평화적 통일을 바라고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제의한 「남북한고위대표회담」에 동의하고 회담장에 나와 그들의 주장을 밝히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하며 빈말로만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의한 「20개 시범실천사업」을 받아들여 이를 추진함으로써 남북간의 관계개선과 민족적 화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재식 장관은 또 『남북간의 제반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는 반드시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북한측이 부당한 구실을 앞세워 대화를 기피하는 불성실한 자세를 시정하고 하루속히 대화의 광장에 뚜벅뚜벅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손재식 장관의 「남북한고위대표회담」 수락을 촉구한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토통일원장관 성명문

우리는 지난 2월 25일 성명을 통해 북한측에 대하여 3월중에 서울이나 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남북한고위대표회담」을 개최하고 이 회담에서

첫째, 통일헌법을 마련할 「민족통일협의회」 구성과 남북한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개최하는 문제

둘째, 북한측이 1982년 2월 10일 제의한 회의에 관한 문제

셋째,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 사회개방과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반문제 등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남북한고위대표회담」에 참석할 쌍방 대표단을 남북이 각기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 9명씩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우리측 대표단의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측이 동의만 한다면 즉시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았다.

우리는 「남북한고위대표회담」에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천명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와 함께 북한측이 주장하는 문제도 토의하겠다는 포용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남북한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의 길을 어떻게 해서든 열어 보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측은 우리가 제의한 「남북한고위대표회담」에 대해서 3월이 불과 며

칠밖에 남지않은 오늘 이 시각까지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우리가 제의한 20개시범실천사업에 대해 그들이 과거에 제기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 모순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측이 진정 평화통일을 바라고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제의한 「남북한고위대표회담」에 동의하고 회담장에 나와 그들의 주장을 밝히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하며 빈말로만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의한 20개시범실천사업을 받아들여 이를 추진함으로써 남북간의 관계개선과 민족적 화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제반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는 반드시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북한측이 부당한 구실을 앞세워 대화를 기피하는 불성실한 자세를 시정하고 하루속히 대화의 광장에 뿔뿔이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남북한고위대표회담」이 북한측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3월중에 열리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지연된다 하더라도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측이 이같은 우리의 입장에 호응하여 빠른 시일안에 「남북한고위대표회담」이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수락 촉구는 동회담을 마련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북한측에 다시한번 확인시키고 당초 우리의 제의대로 3월중에 회담이 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에 구애되지 않고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을 것임을 밝힘으로써 북한측으로 하여금 대화거부의 태도를 청산하고 하루속히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3.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통일결의문

6월 5일로써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발족된지 1주년이 되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의장인 전두환대통령은 이날 동회의 창설 1주년 기념식전에 보낸 치사를 통해 자문위원들이 『그 동안 국내외에서 통일대업 완수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심심한 치하』를 보내면서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헌법기관으로 구성한 것은 6천만 동포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국정의 제일의적 목표로 삼고 이를 하루빨리 실현 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전두환 대통령은 동치사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자문회의를 발족시킨 국민적 의지에 부응하여 「1·12 및 6·5제의」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여 통일실현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나 『북한공산집단은 우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의에 대해 여전히 귀를 막은채 적화통일의 꿈을 키워가고 있음』을 개탄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분단의 고통을 덜기 위한 많은 제안들 중 그 어느 하나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민족분열적이고 대결주의적인 자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에 결코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아울러 전두환 대통령은 분단 37년의 긴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빠질지도 모르는 망각현상 즉 분단의 현실에 대한 망각, 고통받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망각, 통일의 사명에 대한 망각현상들을 경계하여 『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통일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고와 행동과 목표를 조국통일에 일치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창설 1주년 기념식전에 보낸 전두환대통령의 치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여러분!

조국통일의 구심체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오늘 그 뜻깊은 창설 1주년을 맞이한데 즈음하여 본인은 먼저 여러분들이 그동안 국내외에서 통일대업완수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데 대해 심심한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동안에 자문회의가 전국적인 조직을 가다듬고 온 겨레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전진을 한결음씩 착실하게 펴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온 국민과 더불어 경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헌법기관으로 구성한 것은 6천만 동포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조국의 평화통일을 국정의 제일의적 목표로 삼고 이를 하루빨리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문위원 여러분은 지역과 직업, 그리고 정당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숭고

한 이념으로 뭉친 민족사개척의 선봉인 것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자문회의를 발족시킨 국민적의지에 부응하여 우리는 그동안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기울여 왔습니다.

1981년 본인의 국정연설 및 자문회의 개최사를 통하여 남북한당국 최고 책임자의 상호방문과 회담을 제의한데 이어 금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통일실현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공산집단은 우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의에 대해 여전히 귀를 막은 채 적화통일의 꿈을 키워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단의 고통을 덜기 위한 많은 제안들 중 그 어느 하나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민족분열적이고 대결주의적인 자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결코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분열과 아집, 그리고 증오의 논리가 오래동안 많은 사람들을 기만할 수는 없으며 민족과 인류의 역사는 화합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북한공산집단도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언제까지나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향한 여건이 날로 성숙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날이 그들에게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날을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방관자의 편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자의 편입니다.

조국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타인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아득한 내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통일의 주역, 민족사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37년간이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국토분단이라는 비정상적 상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첫째로, 분단의 현실에 대한 망각이고 둘째로, 고통받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망각이며 셋째로는, 통일의 사명에 대한 망각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빠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망각 현상을 경계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통일은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겨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통일이 장기간 늦춰지면 민족의 이질화는 더욱 깊어져 통일실현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지고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해도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고와 행동과 목표를 조국통일에 일치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각에 투철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한다면 반드시 빛나는 결실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광된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배전의 정진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전두환

한편 이날 기념식전에서 자문위원 일동은 전두환대통령이 치사를 통해 다짐한 통일의지에 부응하여 북한측으로 하여금 우리의 평화통일 제의들을 수락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평화통일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발족 1주년에 즈음한 결의문

우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지난해 6월 5일 온 국민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초당적·범국민적·거국적 통일정책자문기구로 발족하였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이날의 역사적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발족식전에서 남북대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나아가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금년 1월 22일 포괄적인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천명하여 갈라진 나라와 겨레가 평화통일에 이르는 합리적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이 제의에서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 의를 구성,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을 기초하고, 이를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 공포하여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대망의 통일국가를 완성할 것을 제창하였다.

또한 이 제의는 민족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자애적인 정상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과도적 실천조치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즉 (1) 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한 상호관계 유지 (2) 분쟁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3) 상대방 체제인정 및 내정불간섭 (4) 휴전체제 유지, 군비경쟁 지양 및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5) 상호교류협력을 통한 사회개방 촉진 (6) 통일까지 각기 체결한 국제조약 및 협정준수 (7) 서울·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같은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외면한 채 일관해서 남북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발족 1주년에 즈음하여 우리의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온 국민의 여망을 한데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천명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 우리 민족이 열망하는 조국통일을 자주적·민주적·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합당한 방도임을 재확인한다.
1. 우리는 북한측이 부당한 구실을 앞세워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분열주의적 자세를 시정하고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개최하는데 호응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실현시키는 문제를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북한측이 우리 정부의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의를 조속히 받아들여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시킴으로써 분단으로 인한 겨레의 고통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민족적 화합을 촉진할 것을 호소한다.
1. 우리는 국민적 단합으로 국력을 신장시키고 온 민족의 통일염원을 결집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우리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982. 6. 5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일동

제2부 북한측의 위장된 대화제의

1. 「남북한 정치인 연합회의」 소집 주장

북한측은 1982년 2월 10일 그들 정권의 어용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아래와 같은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제의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20개 시범실천사업」의 추진 제의에 대해 「분열론」이라는 어불성설의 비난을 되풀이 하고 이 제의들을 거부하는 한편 이른바 「남북한 정치인연합회의」를 소집하자고 주장했다.

『……최근(남조선 집권자들이) 때늦게 들고 나온 총선거안이란 정치학 교재에서 옮겨놓은 한갓 공리공담이며 남북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이란 2개국가를 만들자는 영구분열방안이다. 이것을 구체화한 20개항목의 시범사업이란 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 대부분은 이미 우리가 남북의 합작과 교류를 위하여 역사적으로 제기하여온 방안들 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통일문제 해결에서…… 초미의 문제로 나서는 것은 북과 남 사이에 협상문제를 바로 풀어 나가는 것이며…… 지난 기간의 남북대화가 보여준 심각한 역사적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남조선 현 집권자는…… 협상의 마당에 앉은 자리가 없으며……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 역시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신성한 통일협상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남조선의 현정치 정세하에서 우리가 최소한 택할 수 있는 통일협상의 길은 민족적 양심을 지닌 북과 남·해외의 이름있는 정치인들을 망라하는 연합회의를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협상기구로서 북과 남·해외 정치인 연합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한다.

연합회의에는 과거 여하에 관계없이 통일구국의 뜻을 둔 개별적 정치인들이 참가하되 그 규모는 해외인사들을 포함하여 북과 남에서 각각 50명씩 도합 100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 연합회의는 북과 남 사이의 쌍무회담이 아니라 거주지역과 소속에 관계없이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다목적 원탁회담으로 될 것이다.

이 연합회의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포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통일방안들이 기탄없이 다 토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통일방안과 결부하여 북과 남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도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남조선 집권자들은 정치인들의 회의 참가를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수감 중에 있는 정치인들을 석방하고 모든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그들이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북한측은 동성명 말미에 연합회의 참가성원을 남북 각각 50명씩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그 명단을 발표하였음]

이같은 북한측의 「남북한 정치인연합회의」 제의는 우리의 통일 방안을 「분열책략」으로 일축

하고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는 가운데 그들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남·북·해외교포 정치인 100명으로 구성되는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연방안을 비롯한 통일문제 전반을 협의하자』는 것으로써 종전과는 다른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협상대상의 문제에 있어, 이번 제의는 정권차원이 아니라 사회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성명 형식을 취하면서 우리의 「정부 당국자」는 물론 이에 더하여 전례없이 대한민국내 모든 현재 정당·단체마저 일괄하여 『통일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당국간 대화 배제하 정치협상』 실현이라는 종래 그들의 일관된 대화입장을 더욱 경직시켜 현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당·단체와도 접촉할 수 없다는 극단적 대화거부 자세를 노정시켰다.

둘째, 이번 제의의 골자인 「남북한 정치인연합회의」의 구도면에서도 특징적이다.

-회의체의 구성을 종래의 정치협상회의의 대상과 같은 정당, 사회단체, 교포 등을 망라시키면서도 회의규모를 남북한 각각 50명, 도합 100명의 『개별적 정치인』이 참가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정치선전의 토론장화할 것을 노리고 있는 점.

-회의형식을 「다무적 원탁회담」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는 남북한 참가자들이 귀속감 즉 피아간의 구별의식없이 개별적 의사에 따라 행동 결의토록 유도하고자 한 점.

-회의 의제를 『연방안을 포함한 모든 통일방안 토의 및 합작 교류문제 협의』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및 「20개 시범실천사업」제의 내용들을 흡수, 수용하여 통일문제 논의에서 그들의 실추된 지위를 회복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점들이 그 특징인 것이다.

셋째, 이번 제의가운데서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회의참가자의 인적 성분을 보면, 북측 참가자의 경우 표면상으로는 정당·사회단체들을 포괄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당 서열 3위인 김일을 비롯한 현 북한정권의 권력중추인물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이른바 「남측 참가자」로 지명된 대상의 인적성분을 보면, 북한측은 남측 참가대상자들의 현직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전직책으로 호칭하여 우리 정부 당국은 물론 현정당·사회단체를 일체 부정함으로써 정부당국과의 대화 거부 입장을 더욱 명백히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내에서의 정치규제자, 구속자 등 현정부로부터 소외된 구정치인 및 과격불순자들을 대부분 지명하고 심지어 유명단체인 「통혁당」을 대표한다는 "이정상"과 같은 유명인물을 지명함으로써 남한내 「흑색조직」의 실체를 부각시키려 기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 인사 총 14명중 최홍희, 최덕신을 비롯하여 김재화, 배동호 등 13명의 반한 친북인물을 지명함으로써 이들을 『남조선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들로 부각시켜 동 연합회의에서 수적인 우세를 확보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또한 「남측 참가자」가운데 현정치인 4명을 전직책을 사용, 지명함으로써 그들이 대외적으로 남북대화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해외여론을 오도키 위한 치밀한 책략도 함께 노정시켰다.

2. 「남북한 정치인연합회의」 소집 주장의 저의

북한측의 이른바 「남북한 정치인연합회의」 제의는 국내외적으로 지지 기반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우리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및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의에 대하여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제의에 대한 정면 응수를 회피한채 그들의 대화 기피자세를 감추고 대외적으로 마치 그들이 대화 지향적인 것처럼 위장 선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현실성, 합리성을 퇴색시켜 보려는 궁여지책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측은 이번 제의에서도 상투적인 「조건·환경」 시비와 관련하여 「남조선 정치정세」를 운운하면서 부당한 내정간섭적 모략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남북대화의 결렬 책임 전가와 대화기피자세의 호도에 급급하고 있다.

북한측은 이번 제의에서 그들 마음대로 남한측 대표라하여 50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동은 동서고급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몰상식한 작태이며 더우기 상당수의 구속자와 친북 교포를 포함하여 남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명단체인 「통혁당」 인물까지 대표로 지명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당국은 물론 모든 정당·사회단체까지도 전면 부정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그들의 「남북한 정치인연합회의」 소집주장이 대화를 하자는 제안이 아니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제안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통일문제를 논하는 「남북한 정치인연합회의」는 개별적 정치인들간의 쌍무적 회담이 아닌 다무적 원탁회담으로 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남북한 정치인연합회의」 소집 제의가 진정한 남북대화를 하려는 것이 아닌 종래에 그들이 주장해온 「남북정치협상회의」나 「대민족회의」 또는 「민족통일 촉진대회」 등과 똑같은 것에 그 명칭만 바꾼 위장제안이요, 기만 제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측의 위장성과 기만성은 그들이 주장하는 쟁점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더욱 명백해진다.

(1) 「조건·환경」(「민주화」)문제

북한측은 『민족이 통일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왔다.

1970년대 초에 진행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석상에서 북한측은 적십자회담 사업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조건·환경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후 『통일문제해결을 위해서 「남조선 사회가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북한측이 내세우는 통일대화의 「전제조건」의 하나로서 거론되어 왔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조건·환경」(「민주화」)문제는 구체적으로

- ① 대한민국에서 반공법을 비롯한 모든 반공법규가 철폐되고
- ② 북한을 반대하며 반공을 일삼는 모든 단체와 기구가 철폐되어야 하며
- ③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활동이 중지되며
- ④ 구속된 모든 「민주인사」가 석방되고
- ⑤ 「통혁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단체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내에서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조건·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북한측의 주장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문제 해결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측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환경개선」 또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의 선결요구는 어디까지나 『선 남조선혁명·후 적화통일』이라는 도식적인 대남혁명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북한측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권이 물러나고 공산주의자와 협력하는 「민주주의 정권」 즉, 「연공정권」이 수립되어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될 때에 비로소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합에 의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이 성과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출판사 간행, 「근로자」,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는 조국통일을 위한 절박한 요구』 1978. 12., 53면)

사실 북한측이 내세우는 언필칭 「민주화」는 「공산화」를, 그리고 「민주인사」는 「공산주의자」 내지 「용공인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측이 운운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즉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임은 자명하다.

[※ 북한측은 민주주의를 「부르쵸아 민주주의」와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로 구분하고 있다. 즉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부르쵸아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청산한 기초위에서 발생한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로서 소수착취계급에는 독재를 실시하며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최고형태의 민주주의이다. 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의 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민주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서방측의 일반적인 개념인 자유·평등을 그 기본정신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이다.] (북한사회과학출판사 간행, 「정치사전」, 1973. 12., 1, 177면)

따라서 북한측의 「조건·환경」(「민주화」)에 대한 시비는 겉으로는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남폭력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시키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 또는 변경시켜 공산주의정권 내지 용공정권을 세울 때까지는 현 대한민국 정부와는 결코 통일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북한측의 태도를 단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증거이다.

진정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말한다면 북한측은 이를 운위할 자격조차 없다. 북한측은 김일성의 「1인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상·신앙의 자유는 고사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고 더우기 조직적인 인권말살 정책으로 주민들을 통제함으로써 북한사회를 사실상 집단병영화하고 있으며 「1인독재체제」유지에 방해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른바 「위해분자」라는 낙인을 찍어 10만여명의 주민을 「특별독재대상 구역」이라는 강제수용소에 수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산국가에서 마저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부자지간의 「권력세습」까지 획책함으로써 37년간의 「1인독재체제」를 대를 이어 연장하려 하고 있다.

(2) 「교류·협력」(「합작」)문제

북한측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 사이에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 합작·교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방면적 합작·교류는 끊어졌던 민족적 유대를 다시 잇고 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또한 국토양단의 장벽을 허물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역설해 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북대화 석상(남북조절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상호 사회 완전개방」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을 제의하자 「반공정책 포기」등의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합작」과 「군사적 합작」이 다른 분야의 합작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내세우다가 끝내는 「군사문제 우선해결」을 주장하면서 「남북한 교류·협력」실시 그 자체를 외면·거부하였다.

그후 북한측은 「남북한 교류·협력」실시를 계속 거부하여 오던 중 최근 대한민국의 「20개 시범실천사업」제의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 대부분은 이미 우리가 「남북합작·교류」를 위해 과거에 제기해온 방안들 중의 일부에 불과하며, 분열을 지속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비난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쌍방간에 대화와 「교류·협력」의 길을 트고 이를 통해서 상호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족적 유대를 회복·강화함으로써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민족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우기 남북한은 상호 「남북공동성명」발표를 통해 민족적 연계와 민족적 신뢰회복을 위해 「교류·협력」을 실시하기로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 (「남북공동성명」 제3항, 1972년 7월 4일)했으며 또한 「남북한교류·협력」실시를 전담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분과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1972년 11월 4일)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날 「남북한 교류·협력」실시는 민족화합을 통한 민족통일 실현이 민족사적 절대 요청이라는 측면과 또한 온 민족 앞에서 행한 약속과 쌍방의 공식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남북한이 추진해야 할 당면한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상과 같은 기본입장에 따라 「남북한 교류·협력」실시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

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왔으나 북한측의 거부로 인하여 그 어느 것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측은 1970년대에 진행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에서 「남북한 교류·협력」 문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토의단계에 접어들자 「반공정책 포기」 등의 강탈적인 「전제조건」을 내세워 동회 회의의 진전에 난관을 조성하는 한편, 소위 「군사문제 우선해결」을 내세워 「남북한 교류·협력」 실시 그 자체를 외면·거부하고 말았다.

또한 북한측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궁극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연방제」방안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소위 「10대 시정방침」을 통해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겠다고 못박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는 사실상 적화통일 이전에는 어떠한 「교류·협력」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다방면적 합작·교류」가 통일의 전제조건이다』라는 그들의 주장과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북한간에 쉽게 합의가 가능하며 즉각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의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해 온 방안들 중의 일부』라고 강변하면서도 이것을 『분열을 지속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비난·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제의·주장마저 스스로 비난·거부하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또 다시 드러내 놓으면서 이른바 「남북한 정치인 연합회의」소집을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 실시 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남북한의 교류·협력, 사회개방,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문제와 북한의 「남북한 정치인 연합회의」소집문제도 협의하기 위해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동회담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소위 「남북한 정치인 연합회의」소집을 통한 「남북한 합작·교류」문제 협의 운운이 단지 그들의 「남북한 교류·협력」거부에 따른 내외의 비난여론을 무마·호도하기 위한 선전에 불과하며 결코 「남북한 교류·협력」을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케 하고 있다.

(3) 「분열주의」문제

북한측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동성명의 합의사항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가 발족되어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던중 1973년 3월 제3차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부터 남북간의 입장이 정면으로 대립되기 시작하자 대한민국측 방안을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한 주장」으로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3년 6월 23일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하자, 이를 「분열정책」이라고 일괄적으로 매도하면서 「통일된 하나의 조선이 아니라 분열된 두 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반민족적 행위이며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을 골자로 하는 이 범죄적 문건은 그들이 은밀히 추구해 오던 두 개 조선노선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완전히 정책화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후 북한측은 기회있을 때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한편으로 평화통일의 간판을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면서 분열의 영구

화를 피하고 있으며 군사력증강에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대한민국을 비난하였다.

북한측은 대한민국의 1982년 1월 22일자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중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제외에 대해서 이를 「남북분단의 현실을 법적으로 고정화하여 영원히 두 개 국가, 두 개 민족으로 갈라져 살자는 6·23분열선언의 재판이며 연장」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1982년 2월 1일자 대한민국 국토통일원장관의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외에 대해서도 「몇가지만을 시범적으로 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남북의 대문을 활짝 열고 통일을 촉진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지속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길을 외면하고 민족성원 상호간에 불신을 심고 화합을 가로막는 북한측의 행위야말로 분열주의적 행위인 것이다. 지난 37년간의 분단의 역사는 이같은 분단의 책임이 북한측에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1947년 11월 4일 제3차 유엔총회는 「한반도 전역에서 토착인구비례원칙에 입각한 총선거 실시」와 이의 공정한 감시를 위한 「유엔한국감시위원단」구성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분단이후 우리 민족에게 최초로 평화통일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

[※ 제3차 유엔총회는 1947년 9월 17일 한국의 독립문제를 의제로 채택, 정치위원회의 토의에 회부했으며 11월 14일에는 ①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한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를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하여 토착인구비례원칙에 입각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로 하여금 독립된 통일정부를 수립케 하며, ② 정부수립후 모든 외군을 철수시키며, ③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유엔한국감시위원단」을 구성한다는 결의안을 채택(총회결의 112-II)하였으나 북한은 이같은 유엔총회의 결의에 반대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통일의 기회를 저버림으로써 국토의 분단과 거래의 분열이라는 민족적 고통과 불행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원초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명백히 밝혀주는 증거의 하나이다.

또한 북한측의 「6·25」남침으로 인한 3년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쟁은 민족상호간에 서로 적대시하고 불신하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적어도 「6·25」가 있기 전에는 비록 국토는 분단되어 있었지만 우리 민족이 서로가 적대시하고 불신하는 분열의 상처는 그렇게 깊지 않았었다. 과연 누가 분열주의자란 말인가?

뿐만 아니라 그후 북한측이 자행하고 있는 각종 무력도발과 만행은 남북한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민족성원간에 오해와 불신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지난 37년간 북한측은 외부세계와 완전히 격리차단된 폐쇄사회를 구축해 놓고 전주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유일사상체계」에 의한 철저한 공산주의 인간개조작업을 진행시켜 오고 있다.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이같은 인간개조작업의 결과로 같은 민족으로 구성된 남북의 두 사회간에는 적대적 대립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엄청난 사회적 이질화가 진행되고 한민족으로서의 역사적, 문화적인 동질성이 그 뿌리부터 위협을 받는 실로 가공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 역시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1982년 1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할 것을 제의하고 쌍방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한 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의 초안을 마련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은 「민족통일협의회」가 구성되면 대한민국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제시할 것임을 밝히고 북한측도 그들이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민족통일협의회」에 내어놓아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데 동의하라고 촉구하였다.

만일 북한측이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제의에 동의하여 「통일헌법」이 제정된다면 대망의 통일 국가는 순조롭게 실현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른바 「전제조건」을 다시 들고나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거부함으로써 통일문제 해결의 길을 또다시 가로막고 나섰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태도야말로 남북분단을 영구화시키려는 분열주의적인 자세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측이 「분열주의」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이나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의 등은 어디까지나 조국통일의 근간이 되는 평화와 화합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기간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물론 남북한간에 쌓인 불신을 감안할 때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가들에게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간에 전쟁을 방지하며 실질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진전시키는 등의 대내외적인 평화와 화합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것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진지하고 성실한 제안이지 결코 북한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열주의」는 아닌 것이다.

북한측은 대한민국의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의에 대해서 이를 그들이 「이미 제기한 방안중의 극히 일부」라고 하면서도 「분열을 지속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른다면 북한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제기한 것으로 되며 이와 같은 주장이야말로 자가당착적인 모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북한측은 그들이 제의한 「남북한 정치인연합회의」 소집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그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격하지 않고 의제의 하나로 토의하기 위해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자 이를 또다시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나 제안이 모두 대화를 기피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4) 「대화결렬책임」 문제

북한측은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방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오직 통일의 일념에서 1970년대초와 1979년 그리고 1980년초에 북과 남 사이에 대화를 여러차례 진행시켰으나 그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 오지 못한채 결렬되고 말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가 「어떤 절차나 기술적 문제에서의 의견 차이 때문이 아니라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대화마당에 나와서까지 집요하게 분열노선을 추구하고 대화의 진전을 가로막아 온 남한측의 그릇된 배신행위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측은 대한민국이 「통일을 위한 우리측의 합리적인 제의를 지지하는 내외여론의 압력

에 못이겨 대화의 마당에 나와 앉기는 했지만 통일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분열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대화를 이용」 하였으며 「대화를 진행하는 막 뒤에서 반공대결정책을 고창하고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혈뜯는 기만선전과 중상모략에 열을 올리고 전쟁대결을 고취함으로써 긴장상태를 조성, 대화의 진전을 방해하면서 결렬시켰다」 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측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달리 그간 남북한간에 진행되었던 여러 갈래의 남북대화의 중단과 결렬의 책임은 바로 북한측에 있다. 즉 북한측은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단계에서 강탈적인 「전제조건」 들을 구실로 하여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모조리 결렬시키는데만 급급하였기 때문이었다.

북한측은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가 진행중이던 1973년 8월 28일 돌연 「김영주 성명」 을 통해 이들 두갈래의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그후 그들은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대한민국의 끈기있고 성실한 노력에 의해 개최되었던 남북적십자실무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마저 그들의 상투적인 「전제조건」 들의 관철을 고집하여 오던중 일방적인 무기연기를 통고함으로써 결렬시키고 말았다.

더욱이 북한측은 1979년에 진행된 변칙대화에서는 「남북공동성명」 제6항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에 의해 발족된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속의의의 상실을 선언하면서 그 존재를 일체 부정함으로써 남북한 당국간의 공식적 합의문서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또한 「10·26사태」 이후 우리의 정치·사회적 혼란기에 개최된 바 있는 남북한 총리간 대화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서도 북한측은 우리의 정치·사회적 안정이 회복되자 1980년 9월 24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방송을 통해 이틀후에 열리게 되어 있는 제11차 남북실무대표 접촉을 중단한다고 선언함으로써 6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염원을 또다시 저버렸다.

이와 같이 북한측이 남북대화를 모조리 일방적으로 결렬, 파탄시켰던 것은 그들이 남북대화를 단지 통일전선 및 정치심리전의 도구로, 즉 공산화혁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삼고서 남북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공대세 약화와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주한미군철수 여론을 조장시켜 공산화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고 기도한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

※ 북한측의 대화결렬 사례

구분	내용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1973. 8. 28 남북조절위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영주 성명」 으로 중단
남북적십자 본회담	"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	1975. 5. 29 남북조절위 평양측 부위원장전화통지문으로 5. 30.개최예정인 제11차 부위원장회의 무기연기 통고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1978. 3. 19 북한적십자회 전화통지문(방송)을 통해 3.20 개최예정인 제26차 실무회의 무기연기 통고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1980. 9. 24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단 성명을 통해 9.26.개최예정인 제11차 실무 접촉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고

(5) 「대화자격」 문제

북한측은 남북대화를 제의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표선정과 관련하여 그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준과 자격을 제시하면서 이의 관철을 대한민국측에 강요하고 있다. 북한측의 이러한 대화상대방에 대한 「대화자격」 시비의 내용은 분단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

즉, 북한측은 분단직후 「전조선 정치회의」,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 협의회」 등을 제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익 보수정당 지도자와 반공인사의 대화참여를 배제시켜왔다. 그리고 1970년대에 개최된 남북한당국 차원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가 그들의 「대남적화전략」 추진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공산주의적 계급관에 입각한 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이 참가하는 군중집회식의 대화인 「남북정치협상회의」, 「전민족대회」, 「민족통일촉진대회」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천명이후 북한측은 대한민국의 당국자는 물론 정당·사회단체 인사들마저 「대화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남북한 정치인연합회의」 소집의 제의를 통해 그들이 대한민국의 대표라고 일방적으로 지명한 인사들과의 대화만을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대화의 성립 그 자체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 북한측은 남북대화를 제의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선정 기준까지 그들이 일방적으로 선정·제시함으로써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표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자유민주·반공인사를 배제시켜 대화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획책하여 왔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측의 「대화자격」 시비사례

「대화자격」 유형	대 화 기 구	비 고
특정정당 및 사회단체의 인사배제	전조선정치회의 (1948. 4. 30)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 (1956. 6. 7)	○ 대한민국 단독 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정당 및 인사 참가 ○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와 주요 좌익 보수정당 인사 참여 배제 ※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의 인사 및 이승만, 이범석, 김성주, 신성모 등 민족진영 인사 배제
정당·사회단체의 인사참가	남북정치인협상회의 (1971. 4. 12) 대민족회의 (1976. 6. 23)	○ 남북정당·사회단체 개별적 인사 참가 ※ 공산주의적 계급분류에 의한 정당·사회단체의 인사참가 주장(근로자, 농민, 소자산계급)
당국 배제	민족통일촉진대회 (1981. 8. 6)	○ 남북의 정당·단체대표와 해외동포 참가 ※ 군중집회 방식 회의로서 특정인사·특정정당 배제
당국 및 현존 정당·사회단체 인사배제	남북정치인 연합회의(1982. 2. 10)	○ 북측이 일방적으로 남측대표 50명을 선정 발표 ※ 반한 친북교포, 범범구속자, 유명단체인사 포함

오늘날 남북한간에는 각기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독자적인 정치실체가 존재해 있음을 볼 때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간의 제반 현안문제 해결은 쌍방 합의사항을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는 당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 실효성이 보장된다.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간에 각각 독자적인 정치실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적 기초위에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남북대화추진을 위해 남북한당국간 대화를 제의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남북대화의 통로를 당국간 대화로 국한시키지 않고 정당·사회단체 인사까지 포함한 회담(남북한 고위대표회담)

또는 회의체(민족통일협의회)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격이 없다」고 역지를 부리면서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대화자격 시비는 그들이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남북한 총리간대화를 위한 남북실무대표 접촉」등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수락하였던 종전의 태도와 모순되는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의 「남북한 최고 당국자회담」 제의와 관련, 그들도 「남북한 당국 최고위급 접촉」을 제기한 바가 있다고 강변하던 태도(1981년 2월 8일 노동신문 논설)와는 더욱 상충되고 있다.

북한측은 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이 참가하는 「대민족회의」, 「민족통일촉진대회」등을 주장하면서도 대한민국측의 대표단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그들이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조작한 유령단체이며 대한민국 내에 실존하지도 않는 소위 「통혁당」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북한은 소위 「남북한 정치인연합회의」 소집을 주장하면서 현 대한민국 당국은 물론 현존 정당·사회단체 인사까지 배제하고 상대방의 대표단 명단을 그들이 일방적으로 선정 발표하는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작태를 보였다.

이와 같이 북한측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화자격」을 시비하면서 남북한 당국대화는 물론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정당·사회단체의 대화자격 문제까지 시비하면서 일방적으로 지명한 「범법구속자」, 「친북교포」, 「유령단체인물」(「통혁당」 대표)들을 대한민국측 대표로 참가시키는 소위 「다목적 원탁회의」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화성립 이전에 대한민국의 반공체제를 교란시키려는 저의를 단적으로 입증하여 주는 것이다.

제3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10주년

1.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의 대북성명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는 82년 7월 3일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0주년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은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소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민족적 이성을 되찾아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 하루속히 대화의 광장에 나와 우리민족의 장래문제와 현안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해결하는데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민관식 위원장 대리는 이 성명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해야 한다는 민족적 염원에 입각해서 오랫동안의 단절과 대립에서 비롯된 남북간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있었다』고 말하고 『조국 평화통일의 대경대도는 남북한이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무조건 대화를 재개하고 서로 마주앉아 민족의 장래문제와 남북의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데 있음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민위원장 대리는 이어서 7·4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적 신뢰회복을 위해 경주해온 우리의 노력을 상기시킨 후 이와같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를 정치선전과 대남모략에만 이용하면서 대화의 광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개탄하고 북한측은 대한민국정부가 80년대의 새로운 평화통일 노력을 다짐하면서 대화의 광장을 마련키 위해 제안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하루속히 수락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민관식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의 성명문 전문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0주년에 즈음한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 대북성명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0주년을 맞이한다. 10년전 남북쌍방은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공동성명을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회구하는 남북의 온 겨레에게 커다란 기대를 안겨준 바 있다.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해야 한다는 민족적 염원에 입각해서 오랫동안의 단절과 대립에서 비롯된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이같은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대화에서 이루어진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실천하여 이땅에 평화의 기틀을 확보하고, 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1973년 8월 28일 쌍방 합의에 따라 구성, 운영되어오던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7·4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한 남북간의 모든 합의 사항들을 유린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대하여 7·4 남북공동성명정신에 입각하여 쌍방이 엄숙히 서약한 남북간의 모든 합의사항을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과 남북조절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을 회복할 것을 계속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오히려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재마저 부정함으로써 7·4 남북공동성명을 사실상 백지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대경대도가 남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무조건 대화를 재개하고 서로 마주앉아 민족의 장래문제와 남북의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데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아래 1980년대의 새로운 평화통일 노력을 다짐하면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방안을 내놓고 북한측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하여 왔다.

우리는 지난해 1월 12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상호방문을 제의하였고 6월 5일에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금년 1월 22일에는 거래의 통일위원을 결집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천명하였고 이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천정신에 따라 우선 20개항의 시범사업을 당장에라도 실천에 옮길 것과 북한측의 입장도 포함한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이같은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통일문제를 정치선전과 대남 모략에만 계속 이용하면서 대화의 광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0주년에 즈음하여 북한측이 더 이상 민족의 소망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민족적 이성을 되찾아 우선 남북간 직통전화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 우리 민족의 장래문제와 현안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 해결하는데 호응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과 북한의 유린 실태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은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며 평화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한다는 원칙에 쌍방이 합의함으로써 조국의 통일을 위한 노력에 하나의 진로를 제시한 것이었다.

서울측에서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이후락이, 평양측에서는 「로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를 대리하여 「제2부수상」 박성철이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발표로 이 성명에서 남북쌍방은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조국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7개항에 관하여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직통전화선을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요컨대 남북쌍방은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자주적·평화적·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의 통일을 이룩할 것과 통일달성시까지 쌍방은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방면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자는데 합의하고 이러한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쌍방은 남북직통전화를 설치할 것과 이미 진행중인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지원하며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남북간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기구로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은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 하였던 것이다.

남북공동성명과 함께 남북쌍방은 고위급 인사들의 남북한 교환방문에 즈음하여 가설 운영중이던 서울~평양간 직통전화를 공식화하기로 하고 「남북직통전화가설 및 운용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별도 합의, 7월 4일 남북공동성명과 동시에 공포했다.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남북간에 제기되는 문제 및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문제를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라고 설치목적을 밝히고 설치장소, 운용시간, 시험통화 등 운용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합의서의 수정 또는 보충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과 쌍방의 합의에 의해 폐기하기 전에는 이 합의서는 계속 유효하다는 것 등을 명문화해 놓고 있다.

남북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남북간에는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발족에 관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2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가 판문점, 평양,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그 결과 쌍방은 11월 4일 제2차 회의에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11월 30일 남북조절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발족시켰다.

이 합의서에 의하면 남북조절위원회는 『7·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남북사이의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며 각 분야에서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 경제, 문화적 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 문제, 긴장완화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문제,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며 민족적 긍지를 선양하는 문제 등을 협의 결정하여 그 실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규정되어 있다. 쌍방에서 각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간사위원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수는 필요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회담 휴회기간중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 결정토록하기 위해 조절위원회 안에 간사회의를 두며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 등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합의서에 기초하여 남북조절위원회 본회담이 1972년 11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회의를 필두로 서울 평양에서 번갈아 열리게 되었다. 이 회담에서 서울측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실무기능을 조속히 완비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 간사회의운영세칙 등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공동사무국을 설치할 것 등을 제의함과 아울러 남북조절위원회가 추진할 구체적인 사

업은 남북분단의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와 이념의 차이로 인한 마찰이 비교적 적은 분야부터 시작하여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해와 신뢰의 증진을 바탕으로 정치·군사분야의 문제로 옮겨갈 것을 제의하고 남북조절위원회 5개분과 위원회중 경제·사회·문화분과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고 학술·문화분야의 교류, 체육교류와 국제경기 단일선수단 구성, 고고학 등 민족역사 공동개발, 통신·관광·언론인 교류 등을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평양측은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먼저 해소하지 않고는 신의있는 대화도 할 수 없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쌍방간 무력증강 및 군비경쟁 중지, 군대 및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 및 군사물자 반입금지,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요구하는 등 군사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나오는가 하면 남북조절위원회와는 별도로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왔다.

평양측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는 시각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김영주 평양측 공동위원장을 대리하여 평양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박성철은 뒤이은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에 담겨진 통일원칙은 『김일성 수령이 내놓은 제안에 남조선측이 찬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상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군을 견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변하는 등 성명내용을 왜곡해석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고 이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또한 평양측은 공동위원장회의에서도 통일원칙을 들어 대한민국측에 대해 반공정책 포기 및 공산주의 허용, 자유민주주의 체제 옹호중지, 유엔의 한반도 통일문제 개입금지, 주한미군의 철수, 국군의 군대증강 및 군사훈련 중지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나왔다.

평양측의 일방적인 공동성명 왜곡해석과 부당한 요구에 부딪쳐 난항을 거듭하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는 서울에서 열렸던 제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평양에서 열릴 제4차 회의를 앞둔 1973년 8월 28일 북한측은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영주의 성명을 통해 같은 해 6월 23일 한국이 발표하였던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2개의 조선을 조작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조선당국과는 대화를 계속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진행중이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및 남북적십자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버렸다. 또한 이때부터 북한측은 남북직통전화를 통한 협의마저 기피하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는 1976년 8월 18일 관문점 도끼만행 사건 발발 직후인 8월 30일 남북어선의 송환을 요구하는 한국측의 전화통지문 접수를 거부함으로써 남북직통전화 23회선을 모두 단절시키고 말았다.

이후 북한측은 한국측의 거듭되는 대화재개 요구와 직통전화 정상운용 추구를 모조리 거부하였으며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제안들을 외면하는 동시에 휴전선 대남확성기 방송재개를 비롯한 대남비방행위를 격화하고 남침땅굴 및 대남간첩남파, 휴전선에서의 대남도발 등을 자행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조국통일을 달성할 것을 약속하고 이행을 『은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유린하여 왔다.

특히 북한측은 1979년 3월 7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대표와 북한의 「조국통일 민주주의선선」 대표들이 접촉한 자리에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공동성명의 제반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해 설치된 대화기구를 부인하여 버렸다. 남북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합의하여 서명한 명문합의서에 의해 설치되었던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하고 남북직통전화를 단절시켜버린 북한측의 처사는 바로 남북공동성명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조국의 통일문제에 임하는 그들의 불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앞으로의 남북관계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북한은 온 민족 앞에 그들의 성실성을 입증할만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자기들이 임의로 남북공동성명을 왜곡하여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데 광분하고 있다. 이에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측은 조국평화통일 3원칙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의 철수와 반공정책 폐지 등을 강요하는 구실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 중 자주적 통일원칙에 대해 『털어놓고 말하면 자주적 통일이란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정치적으로 변질된 의미를 부여(북한사회과학출판사,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1975. 10. 203면)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또한 북한은 평화적 통일원칙에 대해서는 그들의 대남무력도발과 군사력증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함이 없이 한국의 군비증강 중지만을 요구하는 일방적 주장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평화통일원칙에 대해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은 정의의 혁명전쟁을 수행할데 대한 혁명적 방침이 관통되어 있으며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사회제도의 평화공존론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위의 책 210면)고 주장하고 있어 그들이 전쟁수단에 의한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정착마저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민족적 대단결원칙을 내세워 한국에서의 반공정책 철폐와 공산당 및 용공인사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라는 이른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태도중 특기할 만한 것은 그들이 공동성명 제1항의 조국통일원칙을 제외한 여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합의사항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공동성명을 『남북이 지켜야 할 통일강령』이며 『남북쌍방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왜곡된 통일 3원칙만 거론, 선전도구로 이용할 뿐 나머지 쌍방간의 긴장완화 및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회복을 위한 제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행중이던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직통전화선을 단절시켰으며 대남비방을 강화하고 간첩을 남파시키는 등 긴장을 격화시킴은 물론 교류와 협력을 위한 한국측의 거듭되는 제안들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재조차도 부인하는 등 남북공동성명 자체를 무실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측이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목표는 분명히 들어났다고 할 것이다. 즉 북한은 당초부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군의 약화를 통해 한국의 안보역량을 약화시키고 대남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무력남침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또한 한국의 반공태세를 와해시키고 일부 불만세력과의 제휴로 한국정부를 약화시키고 사회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공산화혁명의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공동성명을 이용코자 하였던 것이다.

북한이 말로는 『남북한 쌍방이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통일강령이며 행동준칙』이라고 선전하

면서 실제로는 남북공동성명을 유린 파괴하는 행위야 말로 북한의 주장들이 얼마나 자가당착적이며 모순적인가를 잘나타내 주고 있는 본보기라 할 것이다.

3. 남북공동성명 정신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전두환대통령이 천명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남북공동성명」정신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기존 통일방안들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체계화시킨 포괄적인 통일정책이다. 따라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남북한간에 통일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도 함께 포용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공동성명에서는

첫째로, 남북한 쌍방이 분단조국의 재통일은 반드시 자주적 노력과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남북한 쌍방은 4반세기 이상의 장시간을 완전한 단절 속에 살면서 더구나 「6·25 동란」이라는 치참한 동족상잔의 전화까지 겪은 쌍방 사회간에 극단적인 이질화가 진행되어 있다는 객관적 현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쌍방 사회간의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는 일단 덮어두고 오랜 단절속에 유실된 민족적 동질성의 복원을 통한 민족적 단결을 먼저 도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둘째로, 쌍방은 이러한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쌍방간에 모든 형태의 전쟁(일체의 무력행사)을 부정하고 『남북간의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이를 위하여 남북공동성명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의사항의 실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① 상호 중상·비방을 중지하고 대소간 일체의 무력도발을 그만두며, 불의의 군사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② 다방면적 제반교류를 추진하며, ③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고 ④ 서울·평양간의 상설 직통전화를 가설·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셋째로, 쌍방은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작업이 남북한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이상의 합의사항 이행을 주관할 대화기구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서울·평양간을 이어놓을 남북간 직통전화를 가설·운용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이 명백히 설명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정치적 대화와 통일실현의 진로에 관하여 쌍방간에 이룩된 합의는 쌍방간에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를 정착시키고 구체적인 교류와 협력관계를 발전·증진시켜 나가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남북한의 합의는 1970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개해 왔던 통일실현 노력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었으며,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도 실질적으로는 바로 그러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논리적 당위성과 타당성이 대내외적으로 광범하게 지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당초 남북한 쌍방이 합의하여 『은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하였던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송두리채 유린하면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하여 부당한 중상·비방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위장평화공세와 무

력적화통일 노선만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런 현실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측의 부당한 작태들에 대해 하나 하나 시비를 제기하지 않고 당초 우리 정부가 추구해 왔던 평화통일 정책의 기본정신을 토대로 하여 북한측의 주장까지도 검토의 대상으로 포용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경대도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했다.

따라서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과 합의사항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가운데 포괄적으로 수용, 반영되었다.

남북한 쌍방은 공동성명의 문면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갖고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킨다는 기본 정신에 합의했다.

이같은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전두환대통령이 이미 제의한 「1·12」 및 「6·5」 제의를 통해 강조되었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실천행동의 지표로 포용, 발전시켰다.

또한 남북공동성명 제1항에서 합의된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에 의한 조국통일의 원칙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통일원칙 가운데 포괄, 반영되어 있다.

『통일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같은 전통을 이어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를 해결하려 할 때라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의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주도되어서도 안되고 무력 또는 폭력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거래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는 이러한 통일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일까지의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민족적, 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대경대도를 선명하게 밝혔다. 즉 남북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남북 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통일헌법의 초안을 기초한 다음, 이 통일헌법 초안을 남북한 전역에 걸쳐 실시되는 국민투표를 통해 통일헌법으로 확정하며, 확정된 통일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통일이 실현된다면 그 과정 자체에서 바로 민족적, 민주적, 평화적 통일원칙이 구현되는 것이며 특히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통일조국의 정치이념과 국호,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 정부형태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등을 쌍방 대표들이 토의·합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남북공동성명 제1항에서 합의한 조국통일 원칙

을 완전히 수렴,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남북공동성명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도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의 합의사항과 「20개 시범실천사업」을 통해서 민족화합을 이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수용 반영하였다. 즉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긴장완화, 신뢰조성, 중상비방중지, 무장도발중지, 군사적 충돌사건 방지 등과 남북사이의 다방면적 제반교류 실시, 적십자 인도주의사업의 추진, 남북간 직통전화의 상설 운용등 여러 사항은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의 7개항이 합의되고 「20개 시범실천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더욱 완벽하게 실천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남북공동성명의 제6항에서는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통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남북대화 과정에서 북한측의 태도 변화로 말미암아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실화되고 있는 1980년대의 현실을 주목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는 남북한 간에 가장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과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므로써 남북공동성명의 당국간 대화 실현의 취지를 수용, 반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기존 통일방안의 기초를 견지하면서 북한측의 주장까지도 검토의 대상으로 포용한 조국통일의 대경대도인 것이다.

남북대화 제30호

(1982. 10 ~ 1982. 12)

< 목 차 >

제1부 민족화합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개방	3
1. 「북한 및 공산권 거주 동포의 모국 자유내왕 보장」 천명	3
2. 「북한 및 공산권 거주 동포의 모국 자유내왕 보장」에 대한 각계의 반응	7
제2부 「아프리카」에도 뿌리내린 민족화합 민주통일의 의지	17
1. 전두환대통령의 「아프리카」순방의 의의	17
2. 「아프리카」정상들, 대한민국의 통일노력 지지	19
제3부 남북적십자회담제의 11주년	22
1. 대한적십자사총재의 남북적십자회담제의 11주년에 즈음한 성명	22
2. 「이산가족의 날」제정 시행	24

제1부 민족화합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개방

1. 「북한 및 공산권 거주 동포의 모국 자유내왕 보장」 천명

전두환대통령은 1982년 8월 15일 제3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족화합을 앞당겨 실현하려는 전향적 조치로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 거주 동포의 모국 자유내왕 보장』을 천명하였다.

전두환대통령은 동 경축사에서 「8·15 광복」을 통해 다시 찾은 『민족자주의 정신이 우리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통일문제도 우리 손으로 성취하는 모습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를 맞이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하여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시켜 대화와 접촉의 문이 과감하게 개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북한측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어 남북 쌍방이 통일대화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에 중지부를 찍고 사회개방을 통해 민족화합을 도모하는 실천적 노력도 함께 기울여져야 한다』는 확신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사회부터 먼저 개방할 것』을 선언했다.

전두환대통령은 이를 위하여 『우리의 형제 동포들은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내왕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비록 사상과 제도 그리고 거주지역을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민족이라면 누구나 조국강토를 자유로이 내왕할 수 있게 될 때 동포애를 되살려 민족화합을 성큼 앞당길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민족통일을 이룩하는 원동력으로 발전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두환대통령의 경축사 가운데서 통일문제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작년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 방문 및 회담과 남북한 사회의 상호 개방을 제의한데 이어 금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한 것은 세계사의 진운(進運)에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민족의 상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15 광복은 우리에게 자주의 얼을 되찾게 해 준 날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민족자주의 정신이 우리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 하거나 무익한 대결을 더 이상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정신에 대한 중대한 위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민족자결의 공고(鞏固)한 원칙 위에서 민족최대의 숙원인 통일문제도 우리 손으로 성취하는 모습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를 맞이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쌍방이 한 자리에 마주 앉아 거래의 장래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평화적으로 풀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이 서로 문을 닫고 접촉을 꺼려한다면 민족화합과 통일은 그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거래의 지향(指向)에 따라 접촉과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실현시켜 대화와 접촉의 문이 과감하게 개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우리측의 제의에 북한측이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남북 쌍방이 통일을 위한 대화를 진지하게 진행하는 역사적 과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에 중지부를 찍고 사회개방을 통해 민족화합을 도모하는 실천적 노력도 함께 기울여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인은 오늘 이 기회를 통하여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사회부터 먼저 개방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형제 동포들은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내왕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인은 비록 사상과 제도 그리고 거주지역을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민족이라면 누구나 조국강토를 자유로이 내왕할 수 있게 될 때 동포애를 되살려 민족화합을 성큼 앞당길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민족통일을 이룩하는 원동력으로 발전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와 같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모국 자유내왕 보장 조치를 천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남북한관계를 타개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민족화합의 길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한관계는 북한측의 6.25 남침과 그 이후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가중됨으로써 남북분단의 벽은 더욱 두터워만 가고 있다. 이런 현실 하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길을 열어나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같은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의 문호를 개방하여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과정에

서 민족적 화합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도에 따라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천명하였으며 통일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시기나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촉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에 대하여 쌍방 사회의 완전 개방을 누차 제의했으며 남북간에 성의만 있다면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20개 항의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할 것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키려는 일념으로 북한측에 제의했던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 방문 및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제의(1. 12 및 6. 5 제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물론 「20개 시범 실천사업 제의」등을 모조리 거부한 채 최근에는 공해상에서 어로중인 우리 어선을 납치하는가 하면 악랄한 대남모략 선전을 계속 강화하는 등 남북한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북한측의 부당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 국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사회부터 먼저 개방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내왕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은 조국의 평화통일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는 우리 국민과 정부의 확연한 평화통일 결의의 표현이다.

따라서 제3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선언한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거주 동포의 모국자유 내왕 보장」조치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특기할만한 의의를 갖고 있다.

첫째로 북한측이 우리의 거듭된 남북사회 상호개방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를 실천해 옮김으로써 민족 성원이면 누구나 다 자유롭게 조국사회를 직접 볼 수 있게 하고 조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민족화합의 실현계기를 마련하며 이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사상과 제도, 거주지역의 상이를 불문하고 전민족 성원 누구나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내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일의 주체인 민족 성원 전체로 하여금 남북 쌍방의 체제를 공평하게 비교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정신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이다.

셋째로 특히 이번 조치는 북한측의 호응여하에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 사회를 먼저 개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쌍방의 합의없이도 우리측이 독자적으로 실천가능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김으로써 민족화합과 평화통일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과감하고 전진적인 노력의 발로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소련 및 중공을 비롯한 공산권 지역 거주 동포들의 모국 방문과 서신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주선해 왔던 종래의 인도주의적 배려를 보다 발전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정책차원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동서독이 매년 8백만에 달하는 인적내왕(서독에서 동독으로 약 650만, 동독에서 서독으로 약 150만)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민족적 공

영을 도모하고 있는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적 교류에 의한 사회개방은 민족화합을 실현하는
첩경임이 역사의 교훈으로 실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북한 및 공산권 거주 동포의 모국 자유내왕 보장」에 대한 각계의 반응

우리 정부가 「북한 및 공산권 거주 동포의 모국 자유내왕 보장」 조치를 천명하자 국내의 주요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언론기관들에서는 『민족화합의 개방의지를 선언』하여 『통일기반의 좌표를 제시』한 『과감한 전향적 결단』이라고 이를 환영하고 『소련 및 중공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하게 되면 북한에도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정당, 민한당, 국민당 등 국내 각 정당들은 대변인들의 성명을 통해서 이번 조치를 전폭적으로 환영, 지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며 따라서 『해외 각국 정부는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국내 각 신문들은 특별해설기사와 더불어 사실들을 게재하여 이번 조치의 타당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아울러 이 조치의 실효성있는 성과를 고양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내 각 신문들에 게재된 관련 사실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산권 동포의 모국방문

- 「8·15」 선언의 조속실현을 기대한다-

경향신문(1982. 8. 17)

전두환 대통령이 광복절 37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 동포들에게 우리 사회를 개방하고 자유왕래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것은 민족화합과 민주통일을 촉진하려는 간절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대통령은 『비록 사상과 제도, 거주지역을 달리하고 있다하더라도 같은 민족이라면 누구나 조국강토를 자유로이 내왕할 수 있게 될 때 동포애를 되살려 민족화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민족통일을 이룩하는 원동력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민족최대의 숙원인 평화통일에 대한 강한 집념을 나타냈다.

전대통령은 지난해에도 「1·12제의」와 「6·5제의」 등 자주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했고 금년 1월 22일에는 역사적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뒤이어 금년 2월 1일에는 통일원장관이 「20개 시범 실천사업」을 제의하는 가운데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판문점을 통과, 자유로이 남북쌍방지역을 방문토록 하자』고 북한측에 촉구하기도 했다.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을 제의한 취지도 이러한 민족화합의지의 실천적 구현인 동시에 국토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인도주의 정신의 발현이었던 것이다.

75년 추석을 기해 시작한 조총련 재일동포의 모국방문 사업 역시 이러한 개방의지와 민족화합운동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37년이란 오랜 분단상태로 인해 두꺼워진 남·북간의 장벽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리적인 장벽은 말할 것도 없고 사상과 이념·체제·가치관의 장벽이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는 것은 민족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동포들에게 우리 사회를 개방하고 자유왕래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국토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 버림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보려는 결연한 의지의 소산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의지가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산권국가의 적극적인 호응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알려지기로는 공산권거주 동포들은 북한동포를 제외하고도 2백 50여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중 2백여만 명은 중공에, 나머지 50여만 명은 소련에 흩어져 살고 있으나 이들이 조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으려면 1차적으로 중공이나 소련당국의 인도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일제의 압박을 피해 고국을 등진 동포들과 그 후예들이 조국해방 이후 37년이 지나도록 고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족의 고통이자 비극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들의 인간적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국제인도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인 동·서독의 경우는 비록 체제와 사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매년 8백만 명이 나 되는 사람이 자유롭게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북한당국은 동·서독의 현실을 남의 일로만 지나쳐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나라마다 자국의 권익을 위한 실리추구경쟁에 여념이 없는 오늘의 국제상황하에서 남북대치와 긴장의 첨예화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은 민족적인 불행이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민족화합의 바탕 위에서라면 우리도 일본을 압도하는 자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우리는 특히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한 자랑스런 민족임을 자부하고 있다.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인류의 대잔치에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이 모두 참여하고 성원함으로써 민족적 자부과 긍지를 드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산권동포들에게 자유로운 모국방문을 보장하겠다는 전대통령의 8·15천명이 이러한 민족적 긍지를 세계에 과시하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과 같은 국제개방시대에 인적 교류를 부당하게 억제하는 것처럼 비인도적인 처사는 없을 것이다. 하물며 동족끼리 왕래할 수 없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공산권 동포들의 자유로운 모국방문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산권국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당국의 다각적인 외교노력도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공산권동포에 문호개방

- 인도주의발현에 공산주의의 호응을 촉구함 -

동아일보(1982. 8. 17)

전두환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사회부터 먼저 개방할 것을 선언』하면서 『우리의 형제 동포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내왕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정부는 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라고 다짐했다.

공산권거주 동포에 대한 문호개방은 민족애에 바탕한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의 발현으로 평가해 마지않는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월남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5백만 월남가족들이 북한에 갇혀있는 혈육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리워하고 있는가를 목격해왔다. 헤어진 가족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가 일쑤며 북녘 하늘의 허공을 바라보고 망향제를 지내야 하는 슬픈 이산가족의 심경은 헤아리기 어렵다.

생이별한 혈육을 재회하고 싶은 이산가족의 염원은 며칠 전 8월 12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이산가족들의 응어리진 혈육상봉의 한을 생각할 때 공산권거주 동포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동족으로서 이별의 아픔을 덜어주자는 인도적 배려가 아닐 수 없다.

서울측은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수 없이 북한측에 제의해 왔으나 아직도 북한의 김일성 집단에 의해 무자비하게 외면당해 왔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2일 남북적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에게 보내는 KBS방송은 중공과 소련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상대로 헤어진 가족들의 소식전달에 전력해 왔다. KBS방송을 청취한 중공거주 동포로부터 수없는 편지들이 계속 KBS로 답지하고 있다. 모국에 두고 있는 친척들의 안부를 묻는 애처로운 사연들이다. 이미 여러 명의 중공거주 교포들이 40~50여년만에 그리던 고국의 품에 안겼고 무사히 다녀가기도 했으며 일본의 조총련계 동포들이 수없이 한국의 혈육을 만나보고 돌아갔다.

실상 한국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공산권교포에게 문호를 개방한지 오래다. 또한 전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문호개방을 공식으로 국내외에 선언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내왕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전대통령의 문호개방선언은 2천만 북한동포는 물론이요, 중공에 거주하는 2백 20만 동포와 소련에서 살고 있는 40만교포 그리고 일본의 조총련계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한국을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북한 김일성 집단과 중공 및 소련 당국의 조치뿐이다. 북한은 물론이려니와 중공과 소련도 혈육의 정을 찾아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는 교포들에게는 서슴없이 허락해 주어야 한다.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권들에서는 인도적인 국면에서의 해외여행을 허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년에 8백만에 달하는 동서독 주민들의 왕래를 비롯, 동구 공산국들의 수많은 주민

들이 친족과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서방으로 여행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공산권거주 동포에 문호를 개방기로 천명한 이상 간접적이거나 외교경로를 통해 해당 정부에 교포들의 한국방문을 허락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하며 각종 국제기구들을 통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해야 한다. 인도적인 사업은 이데올로기나 국경을 초월한 인간애의 발현이므로 언젠가는 실현될 날이 오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정부와 해당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을 거듭 촉구해 두는 바이다.

공산권동포의 모국왕래

중앙일보 (1982. 8. 16)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거주 동포의 모국자유왕래를 보장하겠다』고 한 전두환 대통령의 「8·15선언」은 평화적인 국토통일을 이룩하고 말겠다는 우리측의 자세가 얼마나 진지하며 성실한 것인가를 새삼 나타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전대통령은 광복절 제37주년 경축사를 통해 『대화를 하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이 서로 문을 닫고 접촉을 꺼린다면 민족화합과 통일은 그만큼 늦어진다』고 지적하면서 공산권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자유로운 모국방문을 보장한다고 선언했다.

사실 사회개방을 통해 민족적 화합을 도모하겠다는 노력은 「1·12 및 6·5대북 제의」 이래 꾸준히 추구되어온 새 정부의 일관된 정책지표의 하나였다.

『공산권거주 동포의 모국자유왕래 보장』은 이제 7년을 헤아리는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모국방문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우리사회, 우리체제의 우월성과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북한동포 말고도 공산권에는 약 2백 50만 명의 우리 동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약 2백만 명은 중공의 요녕성에 「조선인자치구」를 형성해서 우리 민족고유의 풍습을 지니며 살고 있으며, 소련에도 약 50만 명의 동포가 중앙아시아의 타슈켄트지방과 사할린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들의 소식은 최근 소련과 중공의 문호가 조금씩 개방되면서 우리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조국의 귀중함은 조국을 떠나보아야 안다는 말이 있지만, 나라를 잃고 낯선 타국으로 떠난 유민들이 해방된지 37년이 되도록 고향의 땅을 밟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한이 어떤 것인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전대통령의 공산권교포 모국자유왕래 보장 천명은 민족의 구성원 모두에게 남북쌍방의 체제를 공평하게 비교할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정치적인 뜻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보장은 무엇보다 해외동포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땅을 마음대로 다녀갈 수 있고 헤어진 가족들과의 상봉을 성취시켜 준다는 인도주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을 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정부는 공산권거주 동포들의 서신교환 및 모국방문이 이루어지도록 주선해왔고 실제로 중공거주동포 가운데는 고향에 돌아와 1개월 남짓 머물고 간 경우가 있었다.

일단 분단된 국토가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은 예사 일일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펴나가야 함은 우리 세대가 당면한 역사적 소명인 것이다. 그런 뜻에서 『공산권동포의 모국자유왕래 보장천명』은 평화통일을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을 놓은 셈이 된다.

같은 분단국인 독일의 경우 매년 8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유롭게 동서독을 왕래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왕래가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시켜 주고 화합을 촉진하는 첩경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교과서왜곡」에서 보듯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움직임에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일 수록 한결 절실한 것이 하나가 된 민족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이번 8·15선언에 담긴 우리측의 제의마저 북한측이 거부하거나 중상한다면 그것은 민족적 염원인 통일을 외면하고 있다는 산 역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선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통일문제에 전향적으로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국력신장은 역사의 명제

서울신문(1982. 8. 17)

전두환 대통령의 제37회 광복절 경축사는 북한을 포함한 전공산권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자유로이 모국을 내왕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사회부터 개방하겠다는 획기적인 새 대북 제의를 천명함과 아울러 8·15이전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이민족지배의 고통과 모멸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화합 단결하여 오직 국력신장을 향한 역사적 장정을 이 시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함으로써 내외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전대통령의 이번 8·15대북 제의는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 남북한사회의 상호 완전개방을 제창한 지난해의 「6·5제의」와 금년 초의 「1·22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기본정신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감한 전진적 조치이다. 또한 전대통령이 제창한 국력신장 장정운동은 최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서 드러난 일본의 대한편견자세를 긴 안목에서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극일」운동의 이정표제시라는 점에서 내외적으로 주목을 끄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우선 8·15대북 제의의 뜻을 되새기며 그의 관철을 거듭 다짐하고자 한다. 오랜 분단 속에서 계속 심화되고 있는 남북간의 이질성과 불신감을 극복하려면 그 첫 단계로서 남북한 사회의 상호 개방이 불가피하게 요청되고 있다. 통일의 주체인 민족성원 전체에게 서로 상대방을 방문, 양쪽의 체제를 공평하게 비교한 후 그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평화통일에 이르기 위한 너무나도 마땅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아직 이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들은 1970년대의 대화 경험으로 미루어 남북한사회를 서로 완전 개방할 경우 철저한 폐쇄정책에 의해 지탱해 온 자신의 독재권력 유지기반이 일시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측은 바로 이 점을 감안하여 이번 우리 사회부터 먼저 개방하겠다는 적극적인 새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우리측 제의는 일찌기 세계의 어느 협상사에서든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방적 양보와 포용의 획기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기에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환영, 지지하는 반응이 높고 있다. 따라서 북한측이 만일 이를 또다시 거부하고 나선다면 그들은 통일문제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해결을 원칙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내외의 결정적인 지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산권동포에 모국개방

-전대통령의 광복절 선언을 보고-

조선일보(1982. 8. 17)

1

전두환 대통령은 제37회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실로 중대한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은 다름 아닌 우리사회를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먼저 개방한다는 역사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우리의 형제들은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내왕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정부는 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언명했다. 전대통령이 이러한 선언으로써 기대하는 것은 조국강토를 자유로이 내왕함으로써 동포애를 되살리고 민족화합을 성큼 앞당길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8·15선언」으로 불러 마땅한 이번 선언은 「1·12제의」와 「6·5제의」를 보다 앞으로 전진시킨 것으로서 민족통일의 대업을 예견하면서 발표한 경륜임은 물을 필요조차 없다. 극히 불행한 일이지만 북한당국은 남으로부터의 계속되는 일련의 평화제안에 대하여 비방과 욕설로써 대하여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모처럼의 이산가족찾기 운동과 남북조절위원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후, 10년 동안에 북한당국이 해온 일은 남북간의 긴장상태의 격화와 전쟁분위기의 고조뿐이었다.

서울~평양간에 가설되었던 직통전화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채, 무조건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우선 만나고 보자해도 완강히 거부하고, 경제-문화-스포츠교류를 통하여 쌍방간의 관계를 개선 하자고 해도 그들은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남북간에다 절벽을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제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투른 대남 평화선전공세를 시도 해 왔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허위적인가는 그들이 제안이랍시고 내세운 남북정치협상회의 의 대한민국측 대표까지 그들 자신이 임명한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2

북한측의 상식이하의 장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측은 계속 평화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천명해 왔다. 그의 집대성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북한측은 이것도 거부했다. 이 통일방안에는 북한측이 자신의 제안을 제기할 장치마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에 눈을 딱 감고 아무 호소력도 없는 유치한 선전전으로 진실을 가리우려고 절망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로 답답하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평화통일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통일의 전제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기를 피하면서 우선 평화를 정착시킬 수밖에 없다. 북한의 통일구호도 이름은 「평화적」이요, 「자주적」통일이지만 그 안에는 무력에 의한 대남공산화의 책략이 기초로 되어 있다. 그들이 기만적으로 내세우는 「평화」와 「자주」의 의미가 글자는 같되 우리의 그것과는 판이한 뜻을 가지고 있음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6·25남침당시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고성능무기가 발달해 있는 지금 온 국토는 순식간의 불바다로 화할 것이요, 민족은 주의를 찾기에 앞서 절멸의 위기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남북의 거래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하고 평화적 통일로 접근시키기 위하여서는 이른바 혁명전쟁의 불장난을 포기하고, 비록 이데올로기는 다르다고 해도 남북동포가 적대감을 해소시키면서 화합을 모색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것이 남북간에 남은 유일한 이성적인 길이다.

이번의 8·15선언은 그런 길을 명시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다. 북한동포의 자유로운 남한방문은 물론 세계공산당나라에 산재해 있는 모든 동포에게 모국을 방문케 함으로써 우리는 최대의 광범위한 민족적 화합을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북한외에도 지금 2백만의 우리 동포는 중국의 동북지방과 각 도시, 심지어는 몽고에까지 흩어져 있다. 그리고 소련의 사할린 타슈켄트 하바로프스크 등지에도 약40여만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극히 소수이지만 쿠바에도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다.

3

이들 중 중국대륙과 사할린, 하바로프스크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대개가 남한내에 부모형제 자매 그 밖의 인척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대전 전후 근 40년 동안 길이 막혀 상봉의 기회를 놓쳐왔다. 천만다행으로 이 지역과는 서신이 가능하여 혈육을 찾고 생사안부를 물을 수가 있다. 우리는 라디오가 전하는 애절하고 기막힌 이산의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눈물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러한 민족적 비통을 북한당국은 반혁명적 감상주의로 멸시하고 있을 것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시대와 나라와 사상을 초월한 인간본성의 막을 수 없는 발로로 본다.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동포들의 모국방문은 7년전 조총련계 제일교포의 모국방문을 추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성묘하고 혈육을 만난 뒤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 성과는 민족적 견지에서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나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중국본토에 사는 동포 중에서도 거의 예외적인 일이지만 한국내 고향을 찾아왔다가 귀국한 일이 있다. 그런데 공산권내 동포들의 모국방문은 한국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국의 관대한 조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소련이나 중공당국이 자국의 공민이건 아니건을 막론하고 한인계 주민들의 모국방문을 위해 최대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한다. 한국은 중·소 양국과 국교가 없이 직접 교섭할 수도 없고 이 나라들이 여행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사정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국내 소수민족이 모국을 찾아가 혈육을 찾아보고 싶어 할 때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현대문명국가의 정책기준에서는 옹당한 배려며, 보편적 인도주의원칙에 부합되는 일이다. 이들의 모국방문으로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면 필경은 중·소에도 유리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한국인들은 확신하고 있다.

위대한 조국의 길

-봉정 4만리와 공산권동포 모국왕래-

한국일보(1982. 8. 17)

뜻이 있는 곳엔 반드시 길이 있다. 뜻은 합쳐져야 마치 도도한 대하처럼 무한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민족의 자존을 굳게 지키고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현양하는 길은 오로지 국력신장의 각성과 의지에 달려있다.

오늘에 강해야 과거의 역사도 빛을 발한다. 실속있는 자주·자강의 결의가 넘칠 때, 누구도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며 또 수모를 받을 까닭이 없다.

나라끼리의 평화롭고 대등한 공존관계는 국민의 단합과 국력의 우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는 우리 역사의 교훈은 뼈저리게 생생하다. 과거에 대한 반성은 미래를 내다보는 자각의 단서다.

광복절 37돌을 보내면서 분단의 현실을 거듭 직시하고 밖에서 밀려오는 도전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해방과 독립의 광복은 지금 국력의 비약과 국제지위 향상이라는 「제2의 광복」을 향해 세차게 밀고 나가야 하겠다. 우리는 그 기점에 서있다.

위대한 조국의 길을 개척해가야 한다는 인식이 새로워진다. 전두환 대통령은 광복절경축사를 통해 「숨쉬는 인간의 최소한의 상징인 이름과 말마저 빼앗겼던」이민족 지배하의 일제식민지 기간을 돌이켜 보며 국력신장의 강한 포부와 「급무」를 강조했다.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방문 등정도 한국의 지위를 높이고 과시하는 선린·자존의 장도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세계를 향해 가슴을 활짝 펴고 전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년간 국민이 안정과 도약

을 위해 땀 흘린 결과」라는 전대통령의 출국성명은 이러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일제가 남긴 식민지시대 유산의 고통은 아직 크다. 그들의 강점이 없었다면, 조국분단의 비통한 현실은 있을 수 없었다는 역사인식은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제 「항일」의 차원을 넘어선 「극일」의 이정표를 세웠다. 그것은 배타가 아닌 상호 존중하는 공존의 원칙이다.

돌이켜보면 「한말국치」는 무력의 탓이었다. 국권을 강탈당한 민족은 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중국, 소련 등에 흩어진 해외동포들은 이민이 아닌 유민이었다. 바로 식민지시대의 유산이다.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안전한 조국방문의 자유왕래」를 전대통령은 선언했다. 개방사회의 위력을 터놓은 당당한 문호개방이다. 분단, 이산, 실향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대화합의 제안」으로 그 의미는 깊다.

우리는 해방과 동시 조국을 찾았으나 공산권동포들은 분단으로 인해 다시 고향을 잃었다. 개방체제가 지향하는 인도주의의 문은 그들에게 활짝 열렸다. 자유와 안전의 보장으로 왕래에 꺼릴 것이 없다. 이국생활의 신산이 가족·친척의 상봉으로 한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직한 조국이 그들 뒤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모국방문과 가족재회로 광복의 감격을 다시 찾아야 한다. 재일동포 모국방문단의 성과를 우리는 똑똑히 지켜 보았다.

같은 분단국이면서도 동·서독은 한해 8백만명이 분단선을 넘어 왕래한다. 사상과 제도의 대립은 있으나 민족의 일체감은 두터워진다.

공산권동포 모국방문 제의는 평화적인 민주통일의 의지가 담겼음을 북한당국은 알아야 한다. 분단의 장벽을 높여 대화를 계속 외면한다면 통일은 그만큼 멀어진다. 분단상태의 계속은 민족과 역사의 단죄를 받을 뿐이다.

통일의 길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끌어갈 수 밖에 없다. 어떤 외세나 국제 정세의 개입도 바랄 수 없고 용인할 수도 없다.

우선 남북한 당국자가 서로 마주앉아야 한다. 우리는 대화의 길을 언제나 개방하고 있다.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한 문호도 열어놓았다. 북한이 언제까지 민족의 비원을 묵살하고 계속 침묵으로 버텨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역사의 대세는 세습공산왕조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분단의 고착은 끝내 헐어버릴 것이다. 우리의 진향적인 「통일성의」에 북한은 하루라도 빨리 긍정적인 호응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통일의 큰 뜻을 달성하기 위해 국력의 내실과 민주·개방사회의 우위성을 한층 공고히 다져가야 할 것이다. 광복절 특사 또한 「화합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시련의 파고는 비록 높지만 이를 이겨낼 우리 저력은 강하다. 민족 자존은 먼저 자기신뢰, 실력 배양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둔다. 겨레의 뜻이 모이면 강력한 조국의 길은 꼭 열릴 것이다.

광복절을 보내고 우리 나라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캐나다를 방문한다는 사실에서 인류의 밝은 장래를 공동으로 개척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위대한 조국의 내일을 환히 바라보게 한다.

제2부 「아프리카」에도 뿌리내린 민족화합 민주통일의 의지

1. 전두환대통령의 「아프리카」순방의 의의

전두환대통령은 1982년 8월16일부터 9월1일까지 우리 나라의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를 순방하였다.

전두환대통령은 이 순방기간 동안 아프리카 4개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한·아프리카 이해의 바탕을 넓히고 동반협력의 미래를 논의하였으며, 또 캐나다에서는 수뇌회담을 통해 혈맹으로 다져진 전통우방정상간의 우의를 다지면서 다가올 태평양시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전두환대통령의 이번 순방, 특히 아프리카 4개국 방문은 방문국과 한국의 쌍무적인 협력의 확대라는 실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연대성을 확인하는 정신적 측면에서 더욱 그 의의가 내외에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두환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 대해 북한측은 물론 인근의 일본 뿐만 아니라 구미 각국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인 한편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은 각별한 관심을 표시하였다.

이번 전두환대통령의 「아프리카」와 「캐나다」순방의 의의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선 남북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점에 있다.

현재 「사하라」사막 이남 혹은 「아프리카」45개국은 국제연합 회원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97개 비동맹국가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냉전시대가 서서히 물러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이들 「아프리카」제국들의 발언권은 엄청나게 커졌으며 막강한 압력단체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의 남북한의 외교적 대결상황은 수적인 면에서 북한측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측의 수교국은 40개국(상주공관 30개)인 반면, 대한민국은 28개(상주공관 14개)이며, 단독수교국은 북한측이 15개국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4개국에 불과한 실정으로 「아프리카」지역은 우리 외교가 유일하게 열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북한측은 이 지역에서의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주로 저개발국가를 겨냥하여 갖가지 허위선전 공세로 대한민국을 왜곡, 비방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 외교적 책동을 자행하여 왔다.

이번 「아프리카」순방은 이같은 왜곡된 대한인식을 시정하고 대한민국도 「아프리카」국가들과 같이 쓰라린 피압박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제3세계 국가의 일원으로서 공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이 지역에서 점차 북한측의 수적 우위는 약화될 것이며 따라서 북한측도 종래의 부당했던 외교경쟁을 지양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대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 역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밖에도 이번 「아프리카」순방은 세계로 웅비하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파트너」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아프리카」는 이제 변혁기의 열병을 딛고 일어서서 경제개발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두환대통령의 「아프리카」순방은 그동안 다져진 우리의 국력을 바탕으로 80년대의 통일기반 조성과 경제의 제2도약을 위한 또하나의 포석을 굳힌 중요한 성과를 이룩했다.

2. 「아프리카」 정상들, 대한민국의 통일노력 지지

전두환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캐나다」 순방에 있어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우리의 평화 통일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한 점이다.

6천만 우리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여건 가운데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지 획득은 전두환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듯이 『1980년대 통일성취』를 위해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엄숙한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된 이번 전두환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북한측이 유일하게 한국을 압도하고 있는 외교적 취약지역에 대한 정상외교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주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두환대통령은 이번 5개국 순방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은 대화를 통해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기울여 온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순방국 정상들의 절대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특히 우리 정부의 「6.23 선언」에 따른 남북한 유엔가입 정책과 「1.12 및 6.5제의」에서 밝힌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및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등 구체적 문제들에 관해 이들 국가의 국가원수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 이를 공동성명 가운데 명문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비동맹권에 대한 평화통일 외교의 커다란 수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이 한 때 북한측의 왜곡, 비방선전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던 과거를 감안하면 전두환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의 통일정책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론 이들 국가들이 『신념에 찬 한국지지세력』으로 변모되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더우기 이들 국가가 비동맹회의나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흑 「아프리카」 45개국의 중추적 성원이며 큰 영향을 과시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번 순방성과의 의의는 더욱 크다하겠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의장인 「모이」 「케냐」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이니시아티브」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대화정책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또 「나이지리아」의 「샤가리」 대통령과 「가봉」 공화국의 「봉고」 대통령도 『한국민의 의사에 따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노력을 적극 지지 환영하고 「유엔」과 비동맹회의에서 한국의 정당한 입장을 계속 성원하고 지지할 것』을 공동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순방 각국의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명문화한 한국의 통일노력에 대한 지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케냐 공동성명>

『전대통령은 한반도정세를 검토하는 가운데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전대통령은 궁극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을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직접회담을 개최하는데 있음을 특히 강조하였다. 「모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정부의 노력과 주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케냐」 정부는 대

한민국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대화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임을 전대통령에게 약속하였다.』

〈한·나이지리아 공동성명〉

『전두환대통령은 한반도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특히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샤가리」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전대통령이 주장한바 있는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전대통령은 유엔비동맹회의 등 국제회의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한 「나이지리아」정부의 이해와 지지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대통령은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대통령은 한국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잠정조치로서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민족화합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적 분위기를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샤가리」대통령은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라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실현코자 하는 여사한 노력을 지지하였다.』

〈한·가봉 공동성명〉

『전두환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하여 한국정부가 기울인 제반 노력을 가봉대통령에게 설명하였다. 특히 전대통령은 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은 남북한 최고당국자간의 직접대화를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전대통령은 또한 한국의 평화통일시까지 잠정조치로서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이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민족화합을 촉진하는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대화 주창자인 가봉공화국 대통령은 전대통령에게 가봉정부는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통일을 실현키 위한 모든 주도적 노력을 계속 성원하고 지지할 것이며 국제연합, 비동맹운동 및 여타 국제회의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가봉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특히 가봉이 한국민의 의사에 따라 남북한의 유엔가입에 관한 한국 국민의 노력을 적극지지, 환영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대통령은 가봉정부가 유엔과 비동맹회의 및 여타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정당한 입장에 관하여 이해와 지지를 표명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한·세네갈 공동성명〉

『세네갈 대통령은 관계당사자간의 진정하고 영속적인 화합에 기초하여 한국의 통일에 의한 한국문제의 평화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을 지지하는 세네갈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세네갈 대통령은 전두환대통령각하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이러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전개한 제반평화적 노력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같이 순방국 정상들이 통일문제에 관한 한국입장의 지지를 공동성명으로 명문화한 것은 대 「아프리카」 특히 비동맹외교에 있어서 커다란 거점과 교두보를 확보한 중대한 성과이다. 이는 지난해 「아시안」 5개국 순방으로 넓혀진 평화통일외교의 영역을 「아프리카」로 확대시킨 우리 외교의 획기적인 업적이 된다.

더우기 전두환대통령이 순방국 정상들에게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그 합리성에 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켜 통일의 기반을 해외에서도 굳게 조성한 점은 매우 획기적인 성과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은 친북한 성향이 비교적 높아서 북한측의 통일방안에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뒤늦게나마 북한측의 「고려연방안」이 지니고 있는 기만성을 깨닫고,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지지함으로써 그만큼 민족통일을 위한 국제적 여건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환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아직도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외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정부 퇴진, 주한미군 철수, 반공관계법 폐지 등 대한민국의 안보태세 붕괴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조류를 직시하고 민족의 양심에로 돌아와 우리의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통일방안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제3부 남북적십자회담제의 11주년

1. 대한적십자사총재의 남북적십자회담제의 11주년에 즈음한 성명

유창순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982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 회담」 제의 11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명을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남북적십자사의 쌍방 대표가 다시 마주앉아 새로운 마음으로 1천만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협의 해결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의 무조건 재개』를 북한적십자회측에 거듭 촉구했다.

유창순 총재는 이어 『쌍방 적십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미 서울과 평양에 가설되어 있는 직통전화의 재개통은 물론 판문점 회담 연락사무소의 기능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북한적십자회의 긍정적이고도 진지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창순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한적이 11년전 이날 1천만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인도적 견지에서 제창한 남북적십자회담은 국토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시작된 남북간의 대화였고 아울러 단절의 굳은 벽을 뚫는 남북직통전화마저 가설됨으로써 이산가족들에게는 헤어진 혈육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기대를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의 온 겨레에게는 조국통일에 대한 부푼 희망을 갖게 하였다고 회고하면서 『북한측은 1973년 8월 28일, 일방적으로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온 민족의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도 좌절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창순 총재는 동성명에서 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노부모사업」 「가족사진 교환」 「성묘방문단 교환」 「판문점 면회소 및 우편물 교환소 설치」 등을 잇달아 제의하여 북한측에 대해 회담재개를 부단히 촉구하여 왔으나 『이같은 대한적십자사의 모든 노력은 북한측의 거부로 인하여 그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의 무조건 재개를 촉구했다.

이어 유창순 총재는 지난 7월 13일 동해상에서 어로중 납북된 제5마산호 선원은 물론 1954년 이래 북한측에 의하여 강제 납북억류되고 있는 406명의 우리 어부들을 조속히 송환하는데 있어서 북한적십자회측이 적극 협조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유창순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적십자회담제의 11주년에 즈음한 한적총재성명문

오늘은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971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1년전 오늘 남북으로 흩어져 사는 1천만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인도적 견지에서 남북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창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던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이같은 제의에 따라 남북간에는 국토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대화가 시작되었고 아울러 단절의 굳은 벽을 뚫는 남북직통전화마저 가설됨으로써 남북이산가족들에게 헤어진 혈육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기대를 안겨주었으며 남북의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부푼 희망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1973년 8월 28일, 일방적으로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온 민족의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도 좌절시키고 말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같은 북한측의 대화중단에도 불구하고 1천만 이산가족과 온 겨레의 열망에 부응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을 무조건 재개할 것을 북한적십자회측에 대하여 부단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이산가족 중에서도 노부모의 주소와 생사를 확인하는 이른바 「노부모사업」을 제의한데 이어 「가족사진 교환」 「성묘방문단 교환」, 「관문점 면회소 및 우편물 교환소 설치」 등을 잇달아 제의했을 뿐만 아니라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쌍방 수석대표 간의 면담과 쌍방 적십자사 총재회담」도 여러 차례 제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한적십자사의 모든 노력은 북한측의 거부로 인하여 그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이 지금까지 꾸준히 주장해온 이상과 같은 문제들은 북한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제부터라도 남북적십자사의 쌍방 대표가 다시 마주앉아 새로운 마음으로 1천만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협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의 무조건 재개를 북한적십자회측에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쌍방 적십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미 서울과 평양에 가설되어 있는 직통전화의 재개통은 물론 관문점 회담연락사무소의 기능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북한적십자회의 긍정적인고도 진지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인은 지난 7월 13일 동해상에서 어로작업중 북한측의 무장함정에 의해 납북된 우리측 어선 제5마산호 선원 35명이 납북된지 만 한달이 지나도록 송환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북한적십자회측이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측 선원 전원이 비통에 잠겨있는 그들의 가족품으로 하루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북한적십자회측은 제5마산호 선원들 뿐만 아니라 1954년 이래 북한측이 불법적으로 납치하여 오늘 이 시각까지 강제로 북한지역에 억류시키고 있는 406명의 우리측 어부들도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1982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총재 유 창 순

2. 「이산가족의 날」 제정 시행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5백만 이산가족들은 남북분단의 장벽이 찢리는 날을 염원하면서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했다.

1982년 8월 12일 이북5도민중앙연합회(대표 김연규)는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1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통일회관에서 이산가족의 날 제정선포식을 갖고 올해부터 8월 12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식과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북 5도 실항민들이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한 취지는 이날 발표된 취지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창하고 곧이어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던 당시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가슴 설레던 기대와는 달리 북한측에 의하여 모처럼 열렸던 남북대화의 통로가 다시 폐쇄되고 남북적십자회담마저 중단돼버린 현실상황하에서 1천만 이산가족들은 『정부와 적십자사의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산가족 당사자들 스스로가 잃어버린 고향과 가족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직적 운동을 새로이 전개』 하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오랜 분단의 세월속에 잊혀져가는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의 상처를 온 세계에 환기시켜서 이산가족들의 절박한 처지를 온 국민들과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남북간의 인위적 장벽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데에 일익을 담당하고 그 선봉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려는』 것이었다.

이날 이산가족들은 동식전에서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적십자국제위원회총재·「유엔」사무총장·「유엔」인권소위원회위원장·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에 보내는 남북이산가족 호소문」을 낭독하고 남북한 1천만 이산가족의 애절한 소망을 되새기면서 민족통일과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발표·채택된 취지문,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국제기구에 보내는 남북이산가족 호소문, 결의문 등의 전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 지 문

오늘 8월 12일은 11년전에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창하고 북한측에 대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날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8월 12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앞으로 매년 이날을 우리들의 날로 기념하려는 우리들의 뜻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창하고 곧이어 남북적십자간에 판문점에서 그리고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던 당시 우리들 이산가족 당사자들은 북에 두고온 가족들을 곧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부푸른 기대로 가슴 설레이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북한공산당에게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이 갑자기 생겨날리 없으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들 이산가족들은 잘 알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북 고향에 남겨두고 헤어진 가족들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했기에 어쩔 수 없이 한가닥 희망을 걸고 가슴 설레이는 기대로 부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모처럼 열렸던 서울·평양간의 대화통로를 다시 폐쇄시키고 남북적십자회담을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산가족 당사자들에게 슬픔과 좌절감을 가중시켜 주는 결과가 되었으며 나아가 비인도적인 북한공산당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더욱 증대시키게 되었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 중단 이후에도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촉구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측이 당장 회담을 재개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면 우선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사업만이라도 실현시켜보라고 북한측에 꾸준히 제의해 왔지만 북한측이 끝내 모든 것을 거부함으로써 아직껏 아무런 실현을 보지 못한채 우리 이산가족들의 가슴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마저 외면하는 북한측의 파렴치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탓하고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고통과 좌절을 희망과 용기로, 그리고 북한공산집단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를 민족화합과 민주통일을 향한 분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아량과 슬기가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산가족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린 고향과 가족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직적 운동을 새로이 전개하기로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오랜 분단의 세월속에 잊혀져 가는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의 상처를 온 세계에 환기시켜서 우리들의 절박한 처지를 온 국민들과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남북간의 인위적 장벽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고 그 선봉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 사이에도 서로의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머지 않은 장래에 이같은 시대의 흐름과 우리의 민족적 호소에 순응하여 굳게 닫힌 북한사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전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내외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은 국민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1982년 8월 12일

남북이산가족대표(이북5도민중앙연합회 대표의장)

김 연 규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친애하는 북한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 500만 월남 이북5도민은 11년전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적십자회측에 대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뜻깊은 8월 12일을 맞아 이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산가족의 날」을 계기로 1천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내외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우리들 이산가족들이 하루속히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해방을 찾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500만 월남 이북 5도민들은 잔인무도한 북한공산당의 횡포를 피하여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부모와 처자 또는 형제들과 기약없이 헤어져 자유를 찾아 월남한 것이 결국 오늘날 북한동포 여러분과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가게 된 비극의 원인이 되고 말았으며 그후 우리들은 30여년이 지나도록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조차 모르는채 살아가는 기막힌 정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회측에 대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남북이산가족들의 이같은 비극적 정황을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해소시켜 주려는 숭고한 적십자정신의 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북한 간에는 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북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단이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주소와 소식을 알아내어 알려주고, 이산가족간의 서신교환은 물론 상봉과 방문, 그리고 재결합까지도 주선해 주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공산집단은 이같은 남북적십자간의 인도주의 사업마저 대남적화공작의 일환으로 이용하려고 획책하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1973년 8월 28일 일방적으로 대화중단을 선언하고 모처럼 놓여진 남북대화의 가교를 끊어버림으로써 서울·평양간의 대화통로를 다시 굳게 봉쇄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후 대한적십자사는 남북한간의 정치현실에 상관없이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함을 수없이 되풀이 하여 북한적십자회측에 촉구해 왔습니다만 북한측으로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북으로 흩어져 산 고통의 세월이 짧게는 32년, 길게는 37년이 되고 보니 그동안 나이들어 노인이 되어버린 이산가족중에는 북쪽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한맺힌 그리움을 가슴에 안은채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 이산가족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같은 비극적인 정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는 인도주의적 일념에서 북한측에 대해 우선 남북이산가족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의 상봉실현 문제와 이산가족들 간에 가족사진 교환만이라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자고 제의했습니다만 북한측으로부터 모조리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명절이나 설 명절에 남북이산가족들이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한적십자사의 호소마저도 북한측은 외면함으로써 우리를 더욱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인도적인 북한공산집단을 지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500만 월남 이산가족은 잃어버린 고향과 가족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온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동시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를 갈라놓은 남북의 인위적 장벽을 평화적으로 헐어내는 일에 앞서 나가기로 뜻을 모아 오늘 그 첫 기념행사를 갖는 것입니다.

북한동포 여러분!

오늘날의 국제환경과 시대의 흐름이 사회개방을 지향하고 우리 이산가족들의 굳센 의지와 즐기 찬 노력이 있는 이상 굳게 닫힌 북한사회의 문은 열리게 되며 우리들의 재회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남북간의 접촉과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6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전두환 대통령께서 금년 1월 22일에 천명하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따라 우리 세대에 반드시 통일이 이룩되도록 우리 다함께 화합된 애국정신으로 굳게 뭉쳐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을 다합시다. 여러분과 재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통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우리들 앞에 활짝 전개될 것을 기원하고 북한동포 여러분께서 공산지옥에서의 고역을 인내와 용기로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빌면서 남한에 있는 500만 이산가족의 이름으로 이 글을 보냅니다.

1982년 8월 12일

국제기구에 보내는 남북이산가족 호소문

적십자 국제위원회 총재
유엔 사무총장
유엔 인권 소위원회 위원장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국토와 민족이 분단되고 1950년 북한 공산집단의 6.25 무력남침과 3년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우리 남북 이산가족들은 서로의 소식은 고사하고 생사조차 모르는 채 혈육을 그리는 단장의 고통 속에서 재회의 날을 고대하며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이같은 남북이산가족들의 끊어진 혈맥을 이어주기 위하여 남북 적십자회담을 가질 것을 북한적십자회측에 대하여 제의했습니다.

이같은 대한적십자사의 제의를 계기로 남북간에는 분단 4반세기만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전 이날 우리 이산가족들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부풀었던 기대는 필설로 더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들의 기대는 북한측이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며 개최되던 남북적십자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북한측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인도적 남북적십자회담을 중단시킨 이후에도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거듭 촉구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측이 당장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 우선 판문점에 우편물 교환소를 설치하여 이산가족들 간에 편지를 왕래할 수 있게 하자고 제의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명절을 기하여 이산가족들의 성묘방문단을 교환하여 노부모와 그 자식들간의 상봉을 주선하고 헤어진 가족간에 사진이라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끝내 이러한 모든 제의들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남북한 관계는 모든 국가들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선린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국제 조류와는 달리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 간에 안부편지 한 장 주고 받지 못하는 실로 가슴아픈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적십자국제위원회 총재님! 유엔사무총장님! 유엔인권 소위원회 위원장님!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님!

우리는 대한적십자사가 1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정부도 남북간의 인도적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측의 경직된 태도로 보아 이같은 노력들이 가까운 장래에 성과를 거두어 우리 1천만 이산가족들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우리들의 아픔을 온 국민들과 세계여론에 호소하는 동시에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이산가족 재회사업을 전개해 나가려고 오늘 그 발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같은 취지에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1년전 대한적십자사가 역사적인 남북적십자 회담을 북한적십자회 측에 제의했던 바로 오늘 8월 12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그 첫 기념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1천만 남북 이산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이 귀하의 권능과 권위에 힘입어 다소라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에서 귀하에게 우리의 처지를 간절히 호소하는 이 글을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는 귀하께서 남북한의 이산가족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산가족들의 인도적 재회가 실현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며 특히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귀하의 적절한 중재를 바라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982년 8월 12일

결 의 문

조국 분단과 북한 공산집단의 6.25남침으로 인한 1천만 이산 가족의 발생은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으며 이산가족들이 혈육을 찾는 단장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이 순간도 듣고 있다.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이산가족이 재결합하여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는 문제는 민족사의 소명인 동시에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이다. 우리는 조국통일과 이산가족 재회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우리 세대에 기필코 해결해야 한다.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민족화합에 기초하여 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된 조국은 우리 온 겨레의 행복이 보장되는 민족·민주·자유·복지 국가이어야 한다. 남북의 이산가족을 비롯한 온 겨레의 굳센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앞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남북한 1천만 이산가족의 애절한 소망을 되새기면서 민족통일과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결의를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一. 우리는 「민족통일협회의」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이를 토대로 자유총선거를 통해 통일국가를 달성하자는 우리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며 북한 당국은 이에 적극 호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一.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순수한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입장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민족의 화합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길임을 확신한다.
- 一. 우리는 1천만 이산가족의 쓰라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 적십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며 북한측은 우리의 이같은 민족적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남북적십자회담에 즉각 응해 올 것을 요구한다.
- 一. 우리는 오늘 「이산가족의 날」 제정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상과 같은 우리의 숭고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각적인 이산가족 재회 운동을 추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982년 8월 12일

한편 이날 동식전에 초청받아 참석한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1주년을 맞아, 이북5도민회 중앙연합회가 남북이산가족 재회사업과 통일의지를 새롭게 다져나가기 위하여 8월 12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그 첫번째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충심으로 경하』한다고 말하고 우리들의 꾸준한 통일노력으로 이산가족들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평화통일이 이룩되는 그날까지 『이북5도민 여러분들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온 겨레와 함께 노력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복지국가와 통일조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자』고 격려하였다.

이날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의 격려사전문은 다음과 같다.

격 려 사

이북5도민 대표와 내빈여러분!

본인은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1주년을 맞는 오늘 이북5도민회 중앙연합회가 남북이산가족 재회사업과 통일의지를 새롭게 다져 나가기 위하여 8월 12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그 첫 번째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충심으로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은 이산가족 당사자인 여러분 스스로가 남북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뜻을 결의하는 이 모임에서 격려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조국이 분단된지 37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은 말로 더 형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북5도민 여러분들이야 말로 조국분단의 비극을 그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체험하고 있는 산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일찍부터 우리 겨레가 겪고 있는 오랜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1천만 이산가족들이 인도적 재회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추진한 것을 비롯하여 남북간에 모든 형태의 대화와 접촉의 문을 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북한측의 대화거부 태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각까지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북한측의 민족분열 책동과 적대행위가 날로 고조되고 있어 분단의 장벽은 더욱 두터워 가는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공산집단은 외부 세계의 빈축 속에서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족벌통치와 부자세열 왕조의 구축을 강행하기 위해 북한 사회를 더욱 통제 폐쇄시키고 주민들을 전근대적으로 억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역행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북한 내부사정의 변화는 남북관계를 더욱 경직시키고 나아가 모험적인 대남책동까지도 추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이북5도민 여러분!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남북의 이산가족이 하루속히 재결합하는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6천만 동포의 절실한 염원인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지난해에 밝히신 바 있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 방문과 최고책임자회담 제의는 남북간에 대화와 접촉의 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려는 결단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 국정연설에서 천명하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민족화합의 바탕에서 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절차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을 통일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이는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펼치기 위한 우리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금년 2월 1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천정신에 입각하여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고, 남북한간에 다같이 이익을 줄 수 있으며 당장 객이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20개 시범실천사업」을 북한측에 제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남북한 이산가족의 고통을 시급히 덜어주기 위한 우편교류와 가족상봉을 실현시키는

인도적인 문제들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 나아가 민족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망라되고 있으며 북한측의 주장까지도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같은 우리의 진지하고도 꾸준한 노력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갈구하는 6천만 동포의 염원을 외면한채 남북대결과 분열책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북한측은 분단으로 인한 동포들의 불행을 인도적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경감시키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남북한적십자회담마저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대화재개에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북한공산집단의 비인도적 태도는 실로 우리의 통탄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비탄과 좌절속에서 그냥 세월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통일의를 굳게 다져나가는 동시에 자주적 평화통일 역량을 꾸준히 신장시킴으로써 북한공산집단이 그들의 시대착오적 혁명노선의 허황된 꿈에서 하루빨리 깨어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간혹 평화통일은 어려운 것이며 먼 훗날에나 가능한 것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통일이 의외로 빠르게 성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야 할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방관하는 것은 통일의 주인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스스로 찾지 않으면 통일의 길은 절대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긍정적인 사고와 판단에서만 목표를 성취시킬 수 있는 행동과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남북 이산가족 여러분이 평화통일에 대한 확신과 이산가족 재회의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의 문제를 성취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지면서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하겠으며 여러분들이 보여준 용기와 슬기에 대하여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친애하는 이산가족 여러분!

오늘의 이 행사가 이산가족들만의 통일 의지와 신념을 정립하고 추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뜻을 국민 저변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범국민적 차원의 평화통일 촉진 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 되어 민족통일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본인은 기대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우리들의 노력 하나 하나는 결코 헛되지 않고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추진력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통일조국을 향해 전진하게 되는 것이며 이리하여 평화통일의 길은 앞당겨 지고 역사의 정당한 귀결은 우리에게 안겨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북 5도민 여러분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온 겨레와 함께 힘써 노력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복지국가인 통일조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십시오.

끝으로 이산가족 여러분의 끊임없는 정진과 건투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 8월 12일
국토통일위원장 손 재 식

이와 같이 남북 적십자회담 제의 11주년에 즈음하여 이북 5도민회 중앙연합회가 8월 12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정부 및 적십자사의 노력과 병행하여 이산가족들 스스로도 재회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통일과업 달성에 선봉적 역할을 다짐한 데 대하여 국내의 각계각층과 언론에서는 이들 이산가족들의 애절한 호소를 우리 민족의 고통과 비극의 표현으로 공감하고 북한당국의 각성과 「무조건」 대화 재개를 촉구하였다.

특히 국내의 주요 일간지들은 다음과 같은 사설을 게재하여 「이산가족의 날」 제정 취지를 높이 평가하고 북한 적십자회의 즉각적인 대화 호응을 촉구했다.

「이산가족의 날」

동아일보(1982. 8. 12)

이북 5도민회 중앙연합회는 12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매년 이날을 기해 각종 행사를 갖기로 했다.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기로 한 것은 남북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창한 대한적십자사의 취지를 다짐하면서 한 맺힌 이산가족찾기 운동의 추진을 위한 데 있다.

이산가족들은 남북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의한 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함으로써 이산가족찾기 운동은 지체될 수 없다는 결의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북한의 공산화정을 탈출하는데 성공한 5백만 월남동포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사랑하는 부모와 처

자 그리고 친족들을 잃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북한에 두고온 가족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눈물과 한숨으로 지낸 30년이기도 하다. 이 한을 풀고자 하는 염원이 「이산가족의 날」 제정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북 5도민회가 취지문에서 밝혔듯이 「이산가족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린 고향과 가족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직적 운동」을 펼치기 위한 데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날」은 북한에 혈육과 고향을 두고 있는 월남 동포들만의 날이 아니다. 이 날은 온 겨레가 이산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재회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날이다. 이산가족의 고통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요, 우리 민족 전체의 책임이라는 데서 그렇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산가족의 날」은 민족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자 하는 남북 6천만 겨레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날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이 경건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산가족의 날」은 남북으로 흩어진 혈육의 재회를 기원하는 날이면서도 망향의 날이요, 민족 재결합을 희망하는 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우리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남북한적십자 회담에 북한측이 즉각 호응 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 동안 대한적십자측은 당장 이산가족의 상봉 실현이 어렵다면 노부모의 주소와 생사를 확인하는 길이라도 터야하고 가족사진 교환, 성묘방문단 교환, 판문점 면회소 설치, 우편물 교환소 설치 등을 북적측에 거듭 촉구해 왔다. 신임 유창순 대한적십자 총재도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북적회담을 무조건 재개하자고 12일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측은 이산가족들의 혈육을 찾는 단장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남북적 회담에 즉각 호응해야 한다. 가족의 재회를 갈망하는 이산가족의 고통은 남한에 거주하는 5백만 월남 동포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북한에서 불평도 털어놓지 못한 채 애태우고 있는 재북 5백만 이산가족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겨레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천만 동포들이 김일성과 그의 몇몇 추종자들의 잔인성으로 인해 30여년씩이나 생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생사를 확인하고 가족사진을 교환하며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김일성의 집권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한 세대를 두고 맺혀져 있는 통한을 풀어 준다는 것밖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1천만 이산가족들의 눈물어린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6·25남침을 자행한 전범자에게서 인류의 편린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산가족의 재회가 천륜의 이치라는 데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산가족의 날」에 서린 통한과 상봉의 의지는 「이산가족 재회」의 날로 승화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산가족의 날」

중앙일보 (1982. 8. 12)

대한적십자사가 1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적십자 회담을 제의한지 벌써 11주년이 됐다. 한적측의 이같은 제의로 남북간에는 국토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대화가 시작됐고 모든 국민들은 이것이 조국통일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부푼 기대를 모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73년 북한측의 일방적인 대화중단 선언으로 적십자회담은 물론 남북조절위의 기능도 정지됐으며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던 남북적십자 실무회담도 1977년을 마지막으로 무기연기된 채 오늘을 맞았다.

돌이켜 보면 흩어진 가족끼리 안부편지 한장 교환하는 일조차 성사시키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국토통일의 위업을 이룩할 수 있을지 민족적 자괴가 앞선다.

일이 이처럼 비틀린 것은 북한측의 완고한 대화거부태도 때문인 것은 두말할 나위없다. 흩어진 가족끼리 안부편지를 교환하는 일은 이념이나 체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미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되었다는 그들이 남쪽에 가족이 살고 있음이 확인됐다해서 사회적 동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더구나 개방사회인 남쪽은 말할 것도 없다.

중공, 소련에 사는 우리 교포가 우리 방송을 듣고 편지를 보낸다고 그들 사회에 위해를 끼친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도 없다. 분단된 독일 민족이 명절때면 서로 가족과 친척을 방문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 체제가 흔들린다는 얘기도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제의하는 것은 순수한 인도적인 견지에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뜻이다. 아울러 비록 이념과 체제는 달라도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을 일깨워 주자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간에 이같은 제도를 마련, 운영하는데서 오는 상호 신뢰감과 민족적 자긍심을 북돋자는 뜻이다.

한적측도 『북한측이 인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산가족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적측은 이같은 기본인식아래 남북적십자회담의 무조건 재개, 남북직통 전화의 재개통,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기능회복, 그리고 남북선원의 송환 등을 요구했다.

당연한 요구이며, 북한측의 성의만 있다면 금방 실현될 수 있는 문제다.

더구나 이북 5도민 중앙연합회는 대북 제의 11주년을 맞는 오늘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정부나 대한적십자사의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고향과 가족을 찾는 일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북한측이 호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채널을 마련한 것이며 북한은 이 절실한 민족적 호소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최근 북한은 일체의 대화제의를 거부하며 통일방안으로 그들의 고려연방제만을 고집하고 있다.

일방 그들은 무력을 강화하는데 광분, 최근 한 해외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정규 병력도 67만 8천 명을 넘고 끊임없이 무력도발의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 1인당 병원부담 비율은 25명당 1명꼴로 한국의 63대 1보다 훨씬 큰 것이다. 이스라엘의 23대 1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화를 거부하고 무력을 강화하는 그들의 속셈은 뻔하나 그것은 착각임이 분명하다. 민족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미접에서 깨어나 하루빨리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재삼 권고한다.

「이산가족의 날」

- 「8·12제의」 11돐과 민족적 과제 -

조선일보(1982. 8. 13)

1

8월 12일인 어제가 「이산가족의 날」로 정해졌다. 이북 5도민이 스스로 정한 것이다. 이날 이북 5도민은 기념행사를 갖고 「이산가족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린 고향과 가족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직적 운동을 새로이 전개, 남북간의 인위적 장벽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데 선봉적 역할을 하겠다」고 결의를 다짐하고, 적십자 국제위원회, 유엔사무총장 등 국제기구에 협조요청 호소문을, 그리고 북한 동포에게 메시지를 띄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내외여론을 환기했다.

이로써 민족사에 또 하나의 고유명사가 등장하게 됐다. 두말할 것도 없이 8월 12일은 11년 전인 1971년, 당시 대한적십자사 최총재가 북한적십자회에 대해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한 날이다. 북적이 이에 응해 예비회담 1년에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는 7차례의 본회담이 열렸으나, 1973년 8월 25일 김영주의 남북대화 중단 성명으로 회담은 좌초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국분단으로 비롯된 남북 이산가족이 회담에 걸었던 기대는 절실했다. 그러나 북한측의 정치적 책략으로 회담은 파국에 직면하고, 혈육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의 한은 쌓여 오기만 했다. 이 사무친 한이 언젠가는 이룩될 재회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이산가족 스스로 「이산가족의 날」을 정하게 하고 다짐을 하고 나서게 한 것이다.

2

8·12제의 11돐인 「이산가족의 날」에 한적 유창순 신임총재는 성명을 통하여 북적이 적십자회담의 무조건 재개에 호응할 것과 남북직통전화의 재개통 및 판문점 회담 연락사무소의 기능회

북에 조속히 긍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총재는 7월 13일 동해 상에서 북한측 무장함정에 납북된 제5 마산호 선원 35명과, 아직도 억류된 채로 있는 미송환어부 4백 6명의 송환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북적의 적극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작년 「8·12」 10돌을 맞아서는 한적 총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적십자 총재회담을 열자고 북에 촉구한 바도 있다. 1978년 「8·12」 7주년에 한적은 같은 촉구를 하였고, 그 밖에 쌍방 수석대표 면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시범 사업으로 먼저 60세이상의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재회라도 실현시키자, 판문점에 이산가족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를 마련하자, 명절에 성묘방문단을 교환하자, 이것도 저것도 사정이 있어 어렵다면 이산가족간에 사진만이라도 교환해서 답답함의 일부나마 덜어 주도록 하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북적측은 성의는 커녕 일언반구의 반응조차도 보이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한과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이에 벌써 부터 국제전화가 개설되고, 그 밖의 공산권과도 통신, 우편물이 오가고, 중공땅에 있던 동포가 조국의 가족품에 안기고, 사할린 동포가 고국의 친척에게 선물을 보내오는 오늘임에도, 유독 같은 땅의 이산가족의 피맺힌 한만이 이렇게 외면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는 실로 세기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달리 모델을 찾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비인도성과 냉혈성을 북적은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이산가족들의 한맺힌 외침과 함께 북적의 미망을 다시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간절한 이산가족 재회

-북은 적십자회담에 무조건 나오라-

한국일보(1982. 8. 13)

대한적십자사의 유창순 총재는 12일 남북적십자회담제의 11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의 무조건 재개를 또 한번 촉구하였다. 이 성명은 남북적십자사의 대표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마주앉아 1천만 이산가족문제를 협의하여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재촉하는 한편 쌍방 적십자간의 합의에 따라 서울과 평양간에 가설된 직통전화를 재개통시킴은 물론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기능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북적에 다짐하였다. 유총재는 또 한달전에 북한으로 불법 납치된 제5 마산호의 선원들을 위시하여 1954년 이래 북한지역에 억류되어 있는 4백 6명의 우리측 어부들도 조속송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북한적십자회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은 우리의 이산가족 문제가 「민족적 비극」인 동시에 「금세기 인류의 상징적 비극」으로 판단된다는 전제하에 비록 남북간장벽이 허물어지지 않은 상태하에서라 할지라도 남북으로 갈라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 소재를 파악하며 생존하는 가족끼리 재회할 수 있게 하는 인도적사업이 남북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적측의 주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산가족문제는 천륜이 단절된 문제라는데서 비극중에서도 큰 비극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이런 비극이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간 프랑스 외상은 『한반도의 단절은 아예 동서독에 비교할 수도 없는 절대적이고 위협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거니와 사실 우리처럼 분단지역간에 접촉도, 교류도, 왕래도, 통신도 없는 데는 드물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분단 지역간에 민족적 일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각성과 사그라지지 않는 동포애, 그리고 보편적인 인도정신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면 헤어진 혈육에 관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앞서 해결을 볼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동안의 남북적십자회담도 쌍방의 정치적, 사회 체제적, 이념적 차이 등을 우선 제쳐놓고 민족적, 인도적 그리고 적십자 정신에 서서 우리의 「비극」 하나를 털자고 추진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적십자회담이 난항을 거듭할 때, 어려운 상황하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노부모와 자녀간의 주소·생사의 확인통보와 상면, 그리고 성묘방문단의 교환, 가족사진 주고받기, 판문점 면회소, 우편물 교환소 설치 사업등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정치적인 「조건·환경」이 남쪽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엉뚱한 고집을 부리면서 남북간에 가장 기초적이고 실현 용이한 이런 제의들을 하나같이 거부하고 말았다.

이산가족의 재회문제는 1976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도법회의에서 「가족의 욕구」가 아니라 「가족의 권리」라고 결의하였다. 이산가족은 나뉜 혈육끼리 만날 권리가 있고, 그 혈육을 끼고 있는 나라나 지역은 만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실은 이런 국제적인 결의가 그대로 실행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 민족적·인도적 양식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며 과거 북한은 우리의 어떤 인도적 제의에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1980년 8월 12일 한적측은 「순수한 적십자인도주의의 정신으로 이산가족들의 단장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조건 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의하였고 1981년에도 『지난날의 경과에 대해서는 시비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용의가 있으므로』 쌍방 적십자대표의 회담을 갖자고 요청하였다. 올해 다시 한적총재는 무조건 회담재개를 제의한 것이다.

남북간의 단절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동안이라도 남북간에 민족적인 슬기로움을 발양하여 민족내부의 인도적 고통을 경감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월 22일 「민족화합」의 대의에 입각한 통일제의를 내어 놓았었다. 우리는 남북민족이 분단의 쓰라림을 딛고서서 하루속히 화합의 길로 나설 것을 북측에 촉구하고 있다. 때마침 이북 5도민 중앙연합회에서는 올부터 8월 12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제정하여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운동을 다시 벌임과 동시에 민족화합을 기약하도록 노력한다고 결의하고 나섰다. 「이산가족의 날」은 북한이 적십자회담에 되돌아오기를 다짐하는 날이며 온 민족이 하나의 비극에서 탈출하자고 회구하는 날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민족의 간절한 소망에 귀를 기울임과 동시에 남북적십자회담의 「무조건 재개」에 대한 우리의 거듭된 제의에 호응하고 나설 것을 또 한번 촉구한다.

이산가족 재회운동은 민족통합의 길

- 「이산가족의 날」 제정과 우리의 기대-

경향신문(1982. 8. 12)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단일민족으로의 역사·언어·문화전통이나 풍습 등 모든 생활기반이 하나의 동질성위에 형성돼 왔음에도 국토분단으로 이질화되고 가족끼리 헤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가슴아픈 일이다.

대한적십자사가 일찌기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 문제만이라도 순수한 인도적 입장에서 해결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을 해소해 보자는데 그 뜻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로부터 11년이 경과한 오늘 아직도 이산가족의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더구나 우리측 성의와 노력으로 열렸던 몇 차례의 남북적십자 회담마저도 북한측의 엉뚱한 정치·군사적 책략 때문에 1973년 7월의 7차 본회담 이후 계속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어 행여나 헤어진 혈육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에 부풀었던 이산가족들의 희망을 무산시켜버렸다.

심지어 그들은 노부모의 주소와 생사를 확인하자는 사업까지도 외면했고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한 가족사진, 성묘단의 교환 방문, 판문점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 설치, 남북직통전화 개통 제의를 모조리 거부해 왔다. 그런가하면 그들은 공해상에서 우리 어부들을 불법납치 했고,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도발, 온갖 대남비방과 중상모략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치도 않은 고려연방안, 대미평화협정 제의도 따지고 보면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임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고도 북한측이 인도주의를 말하고 평화통일을 운위한다면 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자세습 왕조의 구축을 위해 북한 사회를 통제, 폐쇄시켜야 하고 북한 주민들의 불평 불만을 호도, 은폐하려는 가증스런 수작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천륜마저 짓밟아 버린다는 것은 비정하기 이를 데 없다.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국제조류와는 달리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사이에 안부편지 조차 주고받지 못한다는 것은 커다란 민족적 수치라 할 밖에 없다.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12일 북한측에 남북적십자회담의 무조건 재개를 다시 촉구한 것은 이러한 민족적 수치에서 볼 때도 당연한 요구임에 틀림이 없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인도주의를 존중한다면 이산가족의 비원을 풀어주려는 6천만 겨레의 간절한 소망에 조건없이 호응해야 마땅할 줄 안다.

아울러 우리는 이북 5도민 중앙연합회가 주관이 되어 첫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숭고한 이산가족 재회운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이북 5도민들이야말로 조국분단의 비극을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체험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산가족 당사자들에 의해 제정된 이산가족의 날이라는 점에서 이산가족 재회 운동이 갖는 의미는 각별한 것이다. 이산가족들의 통일외지와 신념의 다짐이 기도한 이 운동이 널리 확산됨으로써 범국민적 차원의 평화통일 촉진운동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런 뜻에서 이산가족의 날 행사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헤어져 살아야 하는 해외 동포들과의 재회까지도 앞당길 수 있는 민족 재결합 운동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확신한다.

근세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이산가족이 대량으로 발생한 것은 일제의 한반도 강점, 그리고 인위적인 국토분단과 북한 공산군의 6. 25남침 때문이었다. 중공과 소련 등 공산치하에서 갖은 고초를 겪고 있는 동포들은 일제침략이 낳은 비극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을 헤어진 가족들과 재회케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가시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민족적 자부과 긍지, 그 자주역량의 과시라는 거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의 날」이 갖는 선언적 의미와 아울러 이날의 참뜻이 북한 동포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고 멀리 사할린과 북만주에서 고국을 그리는 이산가족들에게도 혈육상봉의 기쁨을 안겨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는 취지에 북한당국의 긍정적 호응 있기를 거듭 촉구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표시하는 길은 남북적십자회담의 무조건 재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북적은 「인도」를 외면 말라

서울신문(1982. 8.13)

대한적십자사 유창순 총재는 어제 남북적십자회담제의 11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 1천만 남북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무조건 재개를 북한적십자회에 거듭 촉구했다.

유총재는 또 이 성명에서 지난 7월 13일 동해상에서 어로작업중 납북된 우리어선 제5 마산호 선원 35명을 비롯해 지난 1954년이래 북한측이 불법적으로 납치, 현재까지 계속 억류하고 있는 우리 어부 4백 6명 선원이 조속히 송환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북적측에 요청했다.

한편 이북 5도민 중앙연합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창한 이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올해 첫 행사를 가짐으로써 잃은 가족을 찾는 일에 적극 나서서 조직적 운동을 전개하기로 다짐하기도 했다. 이산가족들의 한맺힌 인간적 고통을 스스로 풀어보려는 이비장한 다짐과, 남북분단의 비극을 상징하는 이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자 우리 적십자사가 재차 촉구한 바에 대해 북측측은 인도적 견지에서 마땅히 성의 있는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11년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찾기 운동 제의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이 실현되고 이어 이듬해 7월 4일 민족사의 또 하나 커다란 이정표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열리기에 이르자 이 두갈래의 대화통로에 대한 민족적 성원과 기대는 참으로 컸다.

솔직이 말해 당시 우리가 가졌던 한결같은 희망과 기대는 이로써 한민족의 자체 역량에 의해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고, 강요된 이별의 고통 속에 살아온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가 이뤄지며, 더 나아가 평화가 제도화되어 궁극적인 통일조국의 실현도 밝게 내다볼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1973년 8월 28일 일방적인 남북대화의 중단 선언으로 이러한 민족적 소망을 하루아침에 저버리고 말았다. 그들이 당초 남북대화에 응해 온 것은 때마침 밀어닥친 국제적 긴장완화(데탕트)의 압력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대화를 통해 새로운 대남적화공작을 시도해 보려는 생각에서였으나 막상 대화의 문이 열리자 그것은 독재체제의 유지기반인 북한폐쇄 사회에 자유의 바람이 흘러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당황한 그들은 남북회담 자체의 와해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후 그들은 한국의 반공정책 철폐, 주한미군의 철수 등 강탈적 논리의 이른바 선행조건을 내걸어 대화의 재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민족문제를 민족자체의 역량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으며 또 국제사회는 이를 전폭 지지하고 있다.

지난 연초에 전두환 대통령이 제시한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해 지금 1백여개국 지지태도를 표명하고 있고 이중에는 남북한과 동시 수교 관계를 맺고 있는 비동맹 국가도 40여개국이나 들어있는 사실이 그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측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자신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이 통일방안에 대해 지체없이 긍정적으로 호응해와야 할 것이다.

특히 연간 8백여만명의 인적교류가 실시되고 있는 동서독 관계에서도 보듯 이산가족의 재회는 체제유지와 전혀 무관한 인도적 문제임을 북측측은 허심탄회하게 직시, 우리측 제의를 즉각 받아들일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해 마지 않는다.